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3호 2011. 9

차례

특집 1 냉전기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황동연 | 냉전시기 미국의 지역연구와 아시아 인식 15
정문상 | ‘中共’과 ‘中國’ 사이에서 - 1950~1970년대 대중매체상의
중국 관계 논설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중국 인식 57
정진아 | 한일협정 후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 91
임성모 |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 『세카이』의 북송·한일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125
오병수 | 냉전시기 ‘자유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한국 인식(1949~1960) 155

특집 2 동북아 초기문명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반성

- 김종일 | 한국 초기 및 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비교사적 검토
- 한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207
김범철 |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251
이성주 | 巨視的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303
이한상 | 허리띠 분배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 349

논문

- 강인욱 |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385
김기홍 | 발해의 종족적 연원 437

Contents

Special Issue 1 A Critical Examination of Mutual Perceptions among Korea, Japan, and China during the Cold War Era

Hwang, Dongyeon | American Area Studies and the American Perception of Asia during the Cold War 15

Chung, Moonsang | Between 'Communist China' and 'China' – The Transition of Korean Perception of China during the Cold War Era 57

Chung, Jina |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Japan after The Korea-Japan Treaty 91

Yim, Sungmo | The Japanese radical intellectuals' perception on Korea in the Cold War Era 125

Oh, Byungsoo | The Freechina's Designing on Regional Order of East Asia and Perspective on Korea in Cold War 155

Special Issue 2 A Critical Review of Early Northeast Asian Civilization Studies and Future Theoretical Approaches

Kim, Jongil | A comparative review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arly and the Ancient state – Focusing on Korean and European Cases 207

Kim, Bumcheol | Comparing the Chiefly Societies of Northeast Asia 251

Lee, Sungjoo | The socio-cultural change of Northeastern Asia in the interregional perspective 303

Lee, Hansang | A study on the exchange of ancient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reference to the distribution of belt 349

Articles

Kang, Inuk | Reexamination of bronze Age in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Coarse plain pottery cultural area in North-eastern Asia 385

Kim, Kiheung | The Tribal Origin of the Balhae People 437

특집 1

냉전기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문

본 기획은 냉전기 한중일 3국 지식인의 상호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검토를 통해 3국 간 역사분쟁으로 상징된 상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중장기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역사분쟁 해소방안으로 상호 인식에 주목한 것은, 상호 인식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응태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기제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역사분쟁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 또는 증폭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역사분쟁에 대한 대응태도와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다.

본 기획은 한중일 3국의 상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점에 특히 주목했다. 첫째, 상호 인식 체계는, 전통시기, 근대시기, 냉전시기 등 시기별로 양상을 달리하지만 역사적 경험과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누층적으로 형성된 복합체라는 점이다. 예컨대 근대기 상호 인식의 형성에 전통기의 중화주의가 변용되어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은 대표적인 냉전담론인 근대화론과 결합되어 냉전기 동아시아인의 상호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동아시아인의 상호 인식은 이전 시기의 상호 인식의 특징적 양상이 변형되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요소와 경험이 가미되고 결합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근대 이후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체계는 국가주의적 경향성을 강화하면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중화를 전용하거나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전통시기에도 그렇지만, 약육강식을 근대세계의 원리로서 이해한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체제경쟁을 국가 단위로 설정한 냉전적 사고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근대세계에 적응하고 그 극복의 방편으로서 제

시된 국민국가 체제가, 냉전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냉전기 한중일 3국의 상호 인식에는 냉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전통기 이래의 역사상 상호 인식의 특징적 양상까지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기획이 냉전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 기획에서 냉전기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3국인의 상호 인식이 냉전기의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비록 오늘날 탈냉전이 운위되고 있지만 그것은 유럽의 상황일 뿐이다.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는 1970년대 이후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냉전구도의 지속은 유럽 상황과는 다른 동아시아의 특수성이며, 이러한 특수성은 미래지향적 동아시아를 사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기획은 5편의 논문을 통해 냉전기 3국 지식인의 상호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먼저 황동연은 미국의 냉전기 동아시아 지역연구와 아시아 인식의 계보를 추적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본 기획에서 미국의 사례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동아시아 냉전구도의 한 축인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은 물론 문화적 영향력은 지대했기 때문이었다. 황동연의 논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미국에서의 (동)아시아 지역연구는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기획, 진행된 미소냉전의 산물이며, 국가권력과 결합됨으로써 성행했다. 미국 학계의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지역연구로 중국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로 그리고 '정통, 후진, 비이성 지역'으로 규정되는 등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미국 특유의 '이중의 국가정체성'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인식했던 것은 유럽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근대화론 등의 인식 틀에 입각한 것이었다. 냉전과 함께 형성되고 체계화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성과와 인식은 미국의 '문화적 공세'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유통되었고, 이러한 지식과 인식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제되었다.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주변 인식, 즉 중국 인식과 일본 인식은 정문상과 정진아가 각기 검토했다. 정문상은, 동아시아 냉전질서가 형성된 1950년대부터 ‘미중 화해’로 그 질서가 결정적으로 변동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문가들을 통해 표출되고 형성된 중국 인식을 추적하여 유형화했다. 이 추적을 위해 『사상계』, 『신동아』, 『세대』, 『정경연구』 등 당시 대표적인 월간 잡지에 실린 중국 관계 논설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냉전적 중국 인식의 원형인 이른바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형성되어 중국 인식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1960년대 중반 중국에서 문혁 발생 후 이러한 부정적인 ‘중공 인식’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중공 인식과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령, 이제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중국 연구를 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문제 제기부터 ‘중공’을 ‘중국’으로 호칭해야 한다거나 ‘공산중국’을 ‘근대화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문혁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사상개혁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 탈냉전적 중국 관심과 연구 그리고 시각들은 한층 활발해졌다. 이는 ‘미중 화해’에 따른 동아시아 냉전구도의 변동과 동반된 현상으로 파악되는데,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 대표적 사례로 필자는 이른바 ‘이상화된 중국 인식’에 주목했다. ‘인간혁명’으로서의 문혁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중국을 ‘중공’ 즉 ‘경계와 적대, 그리고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상반된 또 다른 유형의 중국 인식, 즉 한국 사회 개혁의 모델이자 제3의 인류문명의 창조를 실험하는 ‘중국’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냉전기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대한 분석은 정진아가 진행했다. 정진아는 오늘날 한국인이 가진 일본 인식의 독특한 패턴은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반감, 일본의 경제·문화에 대한 호감, 현대 일본의 정치·군사에 대한 무지’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본 인식의 패턴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특히 당시 미국의 일본 담론에 영향을 받아 재구축된 것으로 이해했다. 말하자면 냉전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정진아가 주목한, 한국인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일본론이란 라이샤워의 일본론이었다. 라이샤워의 일본론을 수용하기 이전 한국인의 일본 인식은 뚜렷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연대의 대상으로 일본을 인식하거나 식민지 지배의 경험에서 연원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로서 일본을 인식하는 등 상반된 일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한일협정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라이샤워의 일본론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는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국제협력과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즉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란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시각은 한국인들에게 폭넓게 수용되었다. 라이샤워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쏠려 있던 한국인의 일본 인식을 경제적 근대화 문제로 이동시켰고 한국인들이 수용한 일본 근대화론은 한국인 특유의 일본론, 이른바 ‘경제동물론’을 정착시키는 지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비록 지식인 일각에서 일본이 경제적 실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목표를 세우고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강국군림론’을 제기했지만, ‘경제동물론’에 압도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동물론’은 일본의 존재와 역할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철저히 종속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급증하는 영향력과 행보를 시야에 넣지 못했다. 이는 결국 일본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감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낮은 일본의 정치·군사에 대한 관심과 무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임성모는 일본 지식인의 한국 인식을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진보파’의 한국과 북한 인식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냉전체제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진보적’ 시사 월간지 『세카이』의 재일조선인 ‘복숭’과 한일회담에 대한 보도 기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필자가 해당 시기 ‘진보파’ 지식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을 통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일본 지식인 전체의 한국 인식의 문제점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필자에 따르면 1950년 중반은 전후 탈식민화의 과제가 일본 사회에서 망각되고 은폐되는 ‘원형’에 해당하는데, 당시 진보파 지식인들이 보여준 한국 인식은 그러한 ‘원형’ 형성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제국의 기억을 은폐하고 미일안보체제 아래 일본의 번영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상적 경향과 내적으로 호응한 혐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해 그는 먼저 『세카이』의 재일조선인 ‘복송’ 문제 기사에 주목했다. 당시 『세카이』는 ‘민족의 대이동’,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운동’, ‘일본과 북한의 우호의 가교’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복송 시행에 일본 정부가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남북한 이원론에 입각하여 피력된 것이었고 게다가 복송은 재일조선인의 일본 추방사업이었다는 인식을 결여한 문제점을 지녔다. 다음으로 필자는 한 일회담에 대한 『세카이』의 논조에 주목했다. 한일회담에 대해 『세카이』는 대미 자립외교, 신식민주의적 자본 진출 비판, 분단 고착화 저지,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 등을 내걸고 반대했지만, 한국의 반대 이유였던 식민지 지배의 책임 문제를 포함하여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오병수는 중국 지식인의 한국 인식을 분석했다. 특히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한국 인식을 추적했는데, ‘자유주의 지식인’에 주목함으로써 전후 자유주의 지식인은 물론이려니와 타이완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주변 인식까지 분석 대상에 끌어들었다. 한국 학계에서 타이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오병수의 작업은 兩岸의 지식인들의 주변 인식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자유주의 지식인의 대표적인 잡지 『自由中國』의 논설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주변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것은 미국의 반공 이념과 냉전 정책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통해서만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한국 인식은 그들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타이완으로 이전하게 된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애초 일본과 함께 주도하는 태평양공약체제 형식의 지역질서를 구상했지만 실현을 보지 못하고 한중일 군사동맹 또는 한중월 3각동맹으로 축소하여 구상했다. 그러나 이 구상 또한 한중일 간의 이념문제, 민족주의의 문제 등으로 실현

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한중일 각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안보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적 방위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약화되기도 했다. 타이완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지역질서 구상에 기초하여 한국을 부단히 호명했으며, 그 과정에서 애초 자신들이 주도하는 지역질서의 주변 국가로 인식하다가 이후에는 반공적 맹방국가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장제스 체제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주목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타이완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이 구상한 지역질서에 따라 호명되는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나 상황을 투영시켜 보는 대상이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지식은 체계적이지 않은 파편화된 것이었다.

이상의 5편의 논문만으로 한중일 3국의 상호 인식을 온전히 드러냈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인의 한국 인식이 자유주의 지식인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일본 인식은 다루어지지도 못했으며, 일본인의 중국 인식도 본 기획에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남겨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기획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중일 3국의 갈등과 대립의 해소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냉전기 한중일 3국 지식인들의 자아 인식과 타자 인식에 미친 미국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성과와 내용 그리고 그에 동반된 인식론이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자유진영’의 지식인들의 자아 및 타자 인식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까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문화적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기한 예컨대 자본주의 맹아론 등과 같은 논리도 따지고 보면 유럽중심주의와 근대화론의 자기복제에 불과했다는 황동연의 지적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 지식인의 상호 인식상의 냉전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심주의 유산 뿐만 아니라 냉전의 산물인 근대화론 등과 같은 인식론은 물론이고 권력과 헤게모니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지역연구가 제기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냉전기를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

회적으로는 비록 반공 냉전적 사유가 압도했지만, 냉전질서의 변동, 그리고 개인의 세계관과 사회의식에 따라 개인의 냉전체험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각 지역 지식인들의 냉전체험을 다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으로 구성된 지식인 개인의 냉전체험에 대한 분석에서 탈냉전을 지향한 지적 자원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 지식인들이 추구한 냉전질서와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와 그로부터 형성된 자타 인식의 구조와 특징을 발굴해 내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확장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 ‘진보파’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국의 체제 비판적 지식인의 주변 인식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제국의 기억이 은폐되고 미일안보체제 아래 자국의 번영과 안정만이 추구되는 사상적 경향과 내적으로 호응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셔널리즘에로의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판적 지식인의 주변 인식이 동아시아의 냉전질서의 구조적 정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체제 비판적 지식인의 주변 인식이 냉전질서의 변동에 가지는 의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기획에서 제시된 관점과 분석 내용이, 한중일 3국이 대립과 갈등구도를 넘어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상호 인식을 형성해갈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정 문 상

냉전시기 미국의 지역연구와 아시아 인식

황동연 | 미국 소카대학(Soka University of America) 동아시아학 부교수

I. 문제의 제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area studies)란 용어는, 1945년 이후 냉전이 진행되면서 미국 학계에서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즉 지역연구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세력의 대결구도에서 발생한 냉전과 직접적이고도 깊은 관련을 갖고 미국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자 동시에 미국 학자들이 냉전시기에 창안한 하나의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사이의 냉전 대결 구도 속에서 당시 미국의 학자들은 세계를 기본적으로 세 개로 구분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의 제1세계(the First World),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하의 제2세계(the Second World), 그리고 非자본주의의 길을 걸던 저개발(underdeveloped) 국가들의 제3세계(the Third World)가 그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세 개의 세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만의 필요성에 따

※ 투고일: 2011년 7월 7일, 심사일: 2011년 8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라 세계를 더욱 세분하여 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 여러 지역(area)으로 나누었다. 물론 그런 구분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미소 간의 ‘국제 경쟁관계(international rivalry)’였다. 즉 이들 각 세부 지역에 대한 지식생산과 축적이 미국의 냉전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기관(예컨대 CIA)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 내 학술(지원)재단은 이들 지역에 대한 학문연구를 재정적으로 직간접 지원하였다. 미국 내 대학과 연구소들은 이런 재정적 뒷받침을 근간으로 지역연구를 학문적·행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지역연구를 진행, 발전시켰다. 특히 지역연구에서 지역에 대한 지식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한 것은 미국 학계의 사회과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었다.¹⁾ 다만 그들이 ‘지역전문가(area specialist)’로 불리곤 했지만 그들이 생산한 지역에 관한 지식이란 것이 대부분 한 민족이나 국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에, 그들은 실상 ‘중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와 같은 일국전문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기원과 발전 과정을 거쳐 등장한 미국의 지역연구는 그 이론적 전제를 미국과 서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근대사회 즉, 구미식 근대성의 성취에서 찾았다. 미국의 지역전문가들은 자연히 구미식 근대사회의 성취를 세계 인류 진보의 보편적 과정이자 귀착지로 보았다. 그들은 봉건(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근대)사회로 발전해 온 서유럽의 과거경험에 근거한 역사와 진보의 궤적을 인류의 보편적 발전모델로 보았던 것이다. 자연히 그들은 공산주의를 이런 보편적 인류발전과 진보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면서, 공산주의가 왜 중국(혹은 아시아)과 같은 특정 ‘전통적’이고 ‘낙후된’ 국가(혹은 지역)에서 환영받고 또 성공적

1) Carl E. Pletsch, 1981, “The Three Worlds, or the Division of Social Scientific Labor, Circa 1950~1975,”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3-4. 일본의 지역연구가 비학제적(nondisciplinary) 접근을 시도하는 등 미국 지역연구와 다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ies)’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공통점일 것이다. Suehiro Akira, 1997, “Bodies of Knowledge: How Thinktanks Have Affected Japan’s Postwar Research on Asia,” *Social Science Japan*, p. 20

으로 이식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가 다른 지역과 국가로 침투, 이식,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왜 특정 지역(혹은 국가)은 근대성의 상징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선택했거나 선택하려 하는가? 등과 같은 냉전적 인식에 기초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학술연구를 통해 답하는 것이 바로 미국 지역연구의 기본 임무였다. 따라서 미국 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각 지역(사실은 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지식을 생산, 축적하였고, 그렇게 생산, 축적된 지식은 공산주의 봉쇄를 위한 미국의 세계정책과 외교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미국 연방정부는 그들에게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연구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과 저개발국가에 대한(공산화 방지를 위한) 경제발전 원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미국 연방정부와 여러 학술재단의 체계적인 여러 지원 하에서 시작, 발전한 것이 미국의 지역연구였던 것이다. 결국 미국 지역연구의 성립 배경에는 ‘학문적 관심보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의 ‘(공산주의) 적성국가’에 대한 연구 추구가 존재했던 셈인데, 이런 미국 지역연구의 성격은 필수적으로 ‘권력과 지식의 연계(nexus)’를 만들었다.²⁾

2)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國分良成, 1990, 「アメリカの中國研究」, 野村浩一 外編, 『現代中國研究案内』, 岩波書店, 57~58쪽; Bruce Cumings, 1997a, “Boundary Displacement: Area Stud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 Scholars* 29-1, pp. 6~29 참조. Cumings의 글은 “Asia, Asian Studies,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A Symposium”이란 제목 하에 발행된 *Bulletin of Concerned Asia Scholars*의 특집호(객원편집인 Mark Selden)에 실려 있다. 이 특집호의 문제의식의 이해를 위해서는 Mark Selden, 1992, “National Security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Bulletin of Concerned Asia Scholars* 24-2를 볼 것. 미국 내 비판적 학자들의 미국 지역연구에 대한 비판은 이 특집호에 실린 다른 글들도 참조할 것. 미국 지역연구를 국내학계에 소개한 글로는 황동연, 1999, 「21세기 전야 미국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운명: 전지구화와 그에 따른 지역연구의 방향에 대한 미국학계의 비판적 논의」, 『동아시아역사연구』 6집, 187~219쪽과 김경일, 1996,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5권 3호, 223~268쪽을 참조할 것.

저명한 미국의 중국 전문가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정책상 필요로 한 ‘지식체(a body of knowledge)’와 ‘학자군(a corps of teachers)’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재단과 대학이 정부의 각종 지원 하에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지역연구였던 것이다.³⁾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의 지역연구는 일찍이 학문과 학자의 기본 임무가 과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국가정책의好不好는 누가 결정하는가? 학문과 권력의 관계는 종속적인가? 학문과 학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여러 쟁점적 문제를 학자들 사이에 제기하면서 그동안 진행, 발전해 왔다.

본고는 이 같은 기원과 발전 과정을 거친 미국의 지역연구가 냉전시기에 생산한 아시아에 관한 지식과 그 지식이 생성한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살펴본다. 특히 미국 지역연구가 아시아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면서 이용한 인식론적 방법론인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을 중심으로 미국의 냉전시기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 생산과 인식 형성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지역연구가 생산하여 남긴 아시아에 관한 ‘냉전지식’의 유산이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인식 나아가 동아시아인들의 자아인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지역연구가 냉전시기에 생산한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이 미국의 아시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이해와 인식, 상호연구 및 자아인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지역연구가 생산해 낸 동아시아 지역전문가 학자群, 미국의 아시아 관련 지식과 인식, 미국의 지역연구 담당 연구소, 재단 등의 관계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본고는 미국의 중국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일본 인식이나 한국 인식 혹은 그 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래에서 필자가 지적하듯이 미국의 중

3) John King Fairbank, 1982, *Chinabound: A Fifty-Year Memoir*, Harper & Row, p. 355

국 인식은 미국의 초기 아시아 인식을 형성시킨 중요한 전형이었고,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까지도 그 전형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중국 인식이 미국의 아시아 인식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은, 이전의 극동(Far East)에 대한 지식이라는 기존의 오리엔탈리스트적 인식 틀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냉전정책이란 큰 틀 속에서 미국 정부와 여러 재단의 재정적·정책적 지원, 여러 대학 연구소의 학문적 지원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은 1950년대 후반에 1억 달러, 1960년대 초중반에는 총 5억 달러를 미국내외 대학에 증여하였다. 이 중 지역연구에는 2억 5천에서 7천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었다고 한다.⁴⁾ 1945년 이후 미국이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에서 많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미국 지역연구의 일부로서 시작된 동아시아학은 냉전의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봉쇄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제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도 기본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와 여러 재단은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자국에 관한 연구 혹은 지역연구에 대해서도 여러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1945년 이래 미국 학계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갖게 된 학문적 권위를 더 한층 이용하여 일본, 한국, 타이완 학계의 자국에 대한 지식,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의 생산 모든 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인식, 미국의 아시아 인식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⁵⁾

당시 미소 양국 중심의 냉전 속에서 새롭게 냉전의 한 축을 점차 담당하게

4) 김경일, 1996, 앞의 글, 244쪽

5) 예컨대 T. Christopher Jespersen, 1996, *American Images of China, 1931~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를 볼 것.

된 사회주의 중국의 학계도 마오쩌둥[毛澤東]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 학문연구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지역연구가 당시 생산, 보급하던 중국에 관한 '냉전지식'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에 근거한 중국 지식'을 생산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중국의 자아인식이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성립과 함께 계급투쟁, 反帝·反封建 인식에 기초를 둔 중국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작되고 변화되었다는 점은 공산 중국의 자아인식도 냉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 한국 학계의 (근대)중국에 대한 인식의 계보가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⁶⁾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일본의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국 인식이 새롭게 변했던 점⁷⁾ 등은 1945년 이후 동아시아 삼국의 자아인식뿐만 아니라 상호인식의 형성도 결국 냉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아인식 형성이나 지역연구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인식의 기원과 형성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냉전의 산물이었던 미국의 지역연구,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지역연구는 학문적·재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면 모두에서 다양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⁸⁾

이상의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미국의 아시아(혹은 동아시아) 인식의 계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역사

6) 김태승, 2000, 「중국근대사 인식의 계보와 유산-탈근대적 중국사 인식의 전망을 위한 문제제기」,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역사비평사, 67~87쪽

7) Oguma Eiji, 2007, "The Postwar Intellectuals' View of 'Asia,'" In Sven Saaler and J. Victor Koschmann (eds.),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Colonialism, Regionalism and Borders*, Routledge, pp. 200~212

8) 이런 사정을 일본 학계의 예를 통해 살펴본 연구가 Takeshi Matsuda, 2007, *Soft Power and Its Perils: U.S. Cultural Policy in Early Postwar Japan and Permanent Dependency*, Woodrow Wilson Center Press이다. 한국 학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 시도의 예로는 허은, 2003,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 15호, 227~259쪽을 볼 것.

적 유산으로서 미국 지역연구가 생산, 보급한 동아시아 인식과 지식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1950년대 이후 미국 지역연구의 여러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동아시아학을 이끌던 미국의 대표적 지역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동아시아 연구의 내용, 연구방법론, 문제의식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다만 그들의 연구가 미국 내 여러 재단 및 연구소와 함께 생산해낸 학문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었을 동아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인식의 형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면상 이에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다음 기회를 통해 시도할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지적하는 것은 미국 지역연구의 기본적 분석틀이 유럽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근대화론과 깊이 맞물려서 진행되었고, 그런 연구를 주체적으로 이끈 것이 여러 지역연구 연구소와 재단들, 그리고 주요 저명한 중국 혹은 일본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지역연구가 냉전의 개시와 더불어 생산, 보급하기 시작한 아시아에 관한 지식은, 오리엔탈리즘의 아시아 인식의 유산을 이어받은 후 미국 연방정부와 학술기관들의 여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문영역으로 발전한 지역연구 속에서 '과학적' 논리와 논증 등을 거친 학자들의 학술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것은,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지적하겠지만, 미국의 지역연구가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의 유산으로 시작되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배경에 미국만이 갖는 독특한 국가정체성과 그 국가정체성에 대한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이미 18세기부터 태평양 건너 아시아를 미국의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적 지역으로 보았고, 이에 19세기 초중반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국경으로 접하게 되자 마침내 대서양 열강이자 동시에 태평양 열강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평양 열강이라는 미국의 정체성 형성의 결정판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승리였다. 바로 이런 사정과 미국의 '이중적 국가정체성'이 미국의 냉전시기 아시아 인식 형성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지역연구,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학은 오리엔탈리즘의 학문적 전통과 유산뿐

만 아니라 미국의 '이중적 국가정체성'을 배경으로 하면서 냉전이란 현실적·정책적 필요성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여러 제도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아시아에 관한 인식을 점차 체계적인 지식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아인식과 상호 간의 인식도 바로 그런 미국의 지역연구가 생산한 아시아에 관한 지식과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형성, 생산, 보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 글이 취하는 논증의 방식과 이 글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본고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사례연구를 통해 냉전시기 미국의 지역연구가 창안한 아시아 인식의 구체적 궤적이나 그런 인식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만들어 낸 아시아에 관한 지식 형성의 구체적 과정을 추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고는 기존의 여러 연구업적, 특히 미국 학계의 지역연구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연구를 단순히 오리엔탈리즘의 유산으로서가 아닌 미국의 상업 팽창주의의 역사 속에서 파악하면서 미국의 냉전시기 아시아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히 미국의 아시아 인식 형성이나 전체상과 관련된 개개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한 세밀한 논증이나 연구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미국의 아시아 인식 형성 역사의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냉전과 함께 시작된 미국 지역연구가 만든 아시아 인식과 지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글의 성격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인식의 전체상이나 역사를, 지역연구가 만든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다루는 일개 논문에서는 다루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본고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냉전시기 미국의 아시아 인식이 오리엔탈리즘뿐만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에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미국의 '이중적 국가정체성'과도 연결되어, 냉전 개시와 함께 미국의 특별한 정책적 필요성 하에서 창안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을 통시적으로 지적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미국의 냉전시기 아시아 인식을 형성한 다른 주요 배경인 군사적·문화적·인종주의적·종교적 요인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냉전 이후 미국

의 아시아 인식 형성, 지역연구의 동향 등과 관련된 제반 중요한 문제도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⁹⁾

II. 미국의 아시아 인식: 역사적 기원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최초 이미지와 인식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시사하듯이 기본적으로 유럽 오리엔탈리즘의 전통과 유산 속에서 만들어졌다.¹⁰⁾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유럽의 타자(the Other)’로 창안한 아시아는, 자연히 미국의 ‘타자’로도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는 근대적이고 산업화된 미국과 대비되는 모든 특징들 즉, 전통적·비이성적·낙후된·비근대적·비과학적·농경사회 등의 용어를 통해서 애초부터 미국인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인식의 기원에는 ‘동양’과 ‘서양’, ‘선’과 ‘악’, ‘전통’과 ‘근대’ 등과 같은 이분법적 인식체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던 유럽의 ‘동양’ 혹은 아시아 인식의 기원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인들이 ‘신비하고 이색적(exotic)’ 중국식 문양, 건축양식 등에 매

9) 다만, 냉전 이후 미국 지역연구 방향에 대한 미국 학자들의 여러 새로운 논의에 대한 구체적 소개는 황동연, 1999, 앞의 글과 김경일, 1996, 앞의 글을 볼 것. 냉전시기 미국의 지역연구가 만든 미국의 아시아 인식에 비판적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던 학자들이 냉전기간 미국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만든 아시안 인식은 지역연구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들 학자들(Concerned Asia Scholars)의 문헌 당시 중국에 관한 인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The 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 ed., 1972, *China! Inside the People's Republic*, Bantam Book을 볼 것. 이들과 같은 연배는 아니지만, 지역연구가 시작될 때 이미 비판적 입장에서 미국의 중국 인식과 인도 인식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Harold R. Isaacs, 1958, *Scratches on Our Minds: American Images of China and India*, J. Day Co.를 볼 것.

10) Edward Said, 1978, *Orientalism*, Vintage

료되어 17세기에 ‘중국 열풍(Chinoiserie)’에 휩싸였던 적도 있지만, 이내 오리엔탈리스트의 ‘동양 인식’ 속에서 아시아를 유럽인들에게 상업적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역으로도 보고 있었다.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경우에서 보듯이, 많은 유럽인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지닌 채 아시아로 향하면서 경제적 이익이란 관점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최초 창안하고 있었다. 1776년 독립 이래 미국의 초기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바로 이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창안된 유럽의 아시아 인식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최초 형성해 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유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미국만의 독특한 아시아 인식이 창안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사학자 마이클 헌트(Michael H. Hunt)가 지적하듯이, 여러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있었다.

헌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유럽국가들과는 예외적으로 다른 ‘위대한 국가’라는 인식이 초기 미국의 지도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자유(liberty)’ 개념에 대한 미국인들의 집착과 독특한 인식은, 미국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받았다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것이다. 둘째, 수직적 인종주의에 기초한 미국인들의 세계인식은, 세계의 다른 민족이나 ‘인종(race)’을 대하는 그들의 기본적 자세를 형성시켰다. 독립 초기, 미국의 정책입안자나 지식인들은 ‘인종’이란 개념을 미국의 대외관계에서 상대국가와 민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핵심적 단서의 하나로까지 보았던 것이다. 이런 인종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들은 동아시아인들을 인종적으로 열등한 ‘동양인(Orientals)’, ‘몽골인종’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진행한 영토적 팽창이나 미국적 가치와 문화를 동아시아인들에게 강요하는 문화적 팽창도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셋째, 18세기 프랑스혁명, 18~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남미의 독립전쟁과 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이들 미국 초기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희적이라고 믿어지던 미국식 혁명(미국의 독립전쟁)을 혁명의 모범으로 보았고, 나아가 그런 그들의 인식을 미국인들은 공유하게 되었

다. 그런 혁명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게 '자유'의 전도사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혁명의 과정에 대한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도 부여했다. 이런 인식의 형성과 공유는 자연히 '폭력'과 '급진주의'를 미국식 '자유'의 확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매우 주관적 인식의 형성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근본적 '사회혁명'이나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그 어떤 혁명적 움직임도 미국인들은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초기 유럽에서 이민을 온 백인 중심의 미국인들이 만들어 간 자아인식이자 동시에 타자인식의 근간이 되어 가고 있었다. 헌트에 따르면, 이 같은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미국인들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은 특히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왔다.¹¹⁾

미국의 아시아 인식과 관련해서, 헌트가 지적하는 이데올로기적 면들 외에도 미국의 아시아 인식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을, 필자는 미국의 '이중적 국가정체성(dual national identities)'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지리적으로 보면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다. 이런 지리적 요인은, 앞서 언급한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란 관점과 융합되면서 미국이 특별한 국가정체성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팽창이 시작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은 대서양 열강(an Atlantic Power)이자 동시에 태평양 열강이라는 이중적 국가정체성을 창안해 갔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설명을 통해 표현한다면, 미국의 국제관계 연구에는 유럽과의 관계를 다루는 '대서양 영역(Atlanticist dimension)'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다루는 '태평양 영역(Pacific dimensio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커밍스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바로 이 같은 두 가지 영역을 모두 고려하려는 '이중적 자세'를 필요로 한다. 그가 지적하듯이, 특히 '태평양 영역'은 지난 20세기의 후반세기 동안 '대서양 영역'만큼, 그리고

11) Michael H. Hunt, 1987, *I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미국의 대외관계 형성에서 작용해 왔고, 세계열강으로서 미국은 자아인식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위치에 그에 따른 의미를 부여해 왔던 것이다.¹²⁾

그런데 미국이 ‘이중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처한 특별한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지리적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자아인식도 있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인식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the American lake)’로 동아시아는 미국의 ‘새로운 프런티어’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¹³⁾ 그리고 그에 따라 19세기 중반 이래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국경으로 갖는 대서양 열강이자 태평양 열강으로 확실히 대두하고 있었다. 1846년 오리건(Oregon)과 현 워싱턴(Washington) 주를 영국과 분배해서 소유한 이후 미국의 미국 대륙 내 영토적 팽창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애리조나(Arizona) 주를 1848년 획득하면서 절정에 이르고, 이내 미국의 국경이 태평양 연안에 본격적으로 다다르게 되었다. 미국의 영토적 팽창은 이후 더욱 태평양으로 향했다. 19세기 말, 미국은 하와이를 1898년 강제 병합하고, 같은 해 스페인과의 전쟁(미서전쟁, 1897~1898)에서의 승리를 통해 태평양의 요충지인 괌(Guam)을 획득하고 나아가 필리핀을 식민지화(1898)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윌리엄 매켄지(William McKenzie) 당시 미국 대통령은 국무장관 헤이(John Hay)를 통해 1900년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open door)을 세계열강에 요구했다. 미국에게 태평양과 동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이었다. 이런 배경과 역사 전개 속에서 20세기에 들자 미국은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등장하던 세계열강의 일원이 되었다. 특히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서의 전쟁에 참가하면서 점차 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대두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대서

12) Bruce Cumings, 2009, *Dimens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Yale University Press, p. iv

13) Michael H. Hunt, 1987, 앞의 책, chapter 5

양과 태평양을 지배하는 열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태평양 열강으로의 등장은 태평양의 반대편에서 또 다른 태평양 열강으로 떠오르던 일본과 갈등을 일으켰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의 물리적 대결은 점차 불가피해 보였다. 결국 태평양전쟁(1941~1945)을 통해 일본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미국은, 이제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고, 동아시아를 마침내 미국의 새로운 프런티어로 만들었다.¹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초기 지도자들이 태평양과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즉 아시아 인식)을 만들어 갔다는 점이다. 사실 초기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조지 메이슨(George Mason) 등은, 미국이 유럽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태평양(혹은 넓은 의미로 아시아)과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일찍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미국의 초기 지도자들은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는 사명감과 같은 것을 갖기도 했다.¹⁵⁾ 이들 초기 정치지도자들이 아시아와 태평양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만들었던 배경에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식민지를 갖 벗어난 신생국가 미국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그들의 깊은 우려가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로서가 아니라 한 독립국가로 새롭게 탄생한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와의 무역을 진흥시킴으로써만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그런 발전에 대한 희망적 기대감에 근거한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는) 자아인식의 공감대가 미국의 초기 지도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영국의 독점지배체제 하에서 당시 유럽 시장이 미국 상품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 이외의 시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초기 미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아시아에 대한 국가 정책이 채택되고 또 지

14) Jerry Israel, 2001, “Scratches on Our Mind Revisited: Chinese Influences on the Shaping of American Images,” *Chinese Studies in History* 34-3, p. 8

15) Akira Iriye, 1967, *Across the Pacific: An Inner Histor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Harvest Brace Jovanovich, p. 17

속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¹⁶⁾ 가장 현저한 예는, 미국인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중국 시장(China market)’에 대한 신화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19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등장한 것은 바로 그런 저간의 사정과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미국인들은 중국의 많은 인구를 고려하여 중국을 ‘세계 최대의 시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상업 이윤을 가져다줄 특별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⁷⁾

주지하듯이 이 같은 ‘중국 신화’는 사실 18세기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의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무역업자, 금융계 인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의 보스턴(Boston)에서 미국의 상품을 싣고 1784년부터 1785년까지 2년여의 항해를 거친 후 중국의 광저우[廣州]에 미국 선박으로서 최초로 도착한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Empress of China)’호는 바로 중국 시장, 넓게 보면 아시아 시장이 미국의 독립 초기 미국 경제발전과 미래의 성장에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배의 항해 자체가 미국의 상업발전 역사에서 미국이 태평양(구체적으로는 중국)에 얼마나 큰 상업적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시사해 주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¹⁸⁾ 최근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수입원이라는 사실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최초의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는 이렇듯 미국의 상업적 관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업적 관심의 근저에는 미국이 유럽이 존재하는 대서양

16) W. Leon and M. Consuelo, 1995, “Foundations of the American Image of the Pacific,” Arif Dirlik and Rob Wilson ed., *Asia/Pacific as a Cultural P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pp. 17~29

17) Thomas J. McCormick, 1970, *China Market: America's Quest for Informal Empire, 1893~1901*, Quadrangle Books, 2nd edition; Charles Campbell, Jr., 1951, *Special Business Interests and the Open Door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pp. 10~24

18) Clarence L. Ver Steeg, 1977, “Financing and Outfitting the First United States Ship to China,” *Pacific Historical Review* 22-1, pp. 1~12

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있는 태평양과도 필수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라는 '이중적 국가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업적 관심과 '이중적 국가정체성'이란 배경 속에서 미국의 세계지배를 상징하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란 구호가 등장했던 것이다. 20세기 말 이후~2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태평양 세기(the Pacific Century)'란 구호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자, 많은 학자는 이제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평양 세기'란 구호는 미국이 애초부터 태평양과 아시아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나, 그 함축된 의미로 보아도 사실 '미국의 세기'가 변용된 같은 내용의 다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필자가 지적했듯이, 지리적 배경 외에도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인식과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18세기 이래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상업적 이득 획득이란 사고를 중심으로 창안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인식과 이미지의 근저에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상업적 관심과 이익에 전혀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 온 여러 상업적·군사적·문화적·정치적 모든 방면에서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에 근본적 변화를 아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갖는 여러 이해관계나 미국의 영향력은 1945년 이후 다양해지면서 현재까지 계속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서부로의 팽창, 1898년 미서전쟁 후 하와이 병합과 필리핀 식민지화라는 일련의 과정은 태평양의 중요성과 아시아 시장의 절대적 필요성을 경제발전이란 관점에서 인식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였다. 물론 종교적인 관심, 즉 아시아를 선교의 대상으로 본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의 아시아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인의 영혼을 기독교를 통해 구제하기보다는 아시아인들의 '신체(즉 사회와 삶의 '낙후성')'를 먼저 구제해야 된다고 느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 방향을 단순한 선교(즉 기독교로의 개종)에서 학교와 병원의 설립 등으로 바꾸어 설정했다. 이런 전환은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를 비문명적·전통적 그리

고 낙후된 사회로 묘사하게 더욱 만들고, 나아가 아시아를 근대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미국의 대아시아 인식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 같은 전환은 동아시아들도 미국인들을 제국주의적 행위를 일삼던 유럽인들과 구별하면서 미국을 조금 다른 종류의 국가로 보게 하는 등 아시아인들이 긍정적인 대미인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¹⁹⁾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인도주의적 국가로서의 미국이라는 이중적 대미인식을 동아시아인이 갖게 됨으로써, 19세기 중반 이래 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은, 그들이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대문명의 삶을 추구할 경우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적절한 모델국가로 등장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민주와 자유가 미국의 상징이 되면서 당시 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은 완벽한 이상적 국가로 인식되기도 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종류의 국가라는 인식을 아시아인들에게 심어 주었고 나아가 미국은 (유럽 문명과과는 대비되는) 새로운 ‘문명’을 대표하는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근대 일본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시아인들이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²⁰⁾ 많은 중국인의 경우도 1919년 五四運動 이후 미국을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다. ‘五四反帝애국운동의 산물’인 『헤이차오[黑潮]』 잡지에 실린 한 글에는 “오직 미국만이 세계 강국의 자격을 갖고, 서양문명의 영수이고, 공화선진과 민치의 기제[津梁]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만이 평화를 말하는 데 가장 진중한 국가이기에, [중국인] 진지하게 親美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저자는 미국이 태평양 상에 만드는 (여러 군사적) 설비들조차도 모두가 “인류의 미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²¹⁾

19) Jonathan Spence, 1980, *To Change China: Western Advisers in China, 1620~1960*, Penguin Book, pp. 34~56

20) Peter Duus, 1997, *The Japanese Discovery of America: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Bedford/St. Martin's, pp. 185~204

21) 中共中央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著作編譯局研究室 編, 1978, 『五四時期期刊

동아시아인들의 이런 호의적인 대미 인식과는 달리, 당시 미국인들은 인종 차별주의를 포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주의적(culturalist) 인식에 기반한 대아시아 인식도 변화시킨 적이 없었다. 사실 미국의 냉전 봉쇄외교 개념을 만들고 이끈 학자이자 외교관인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일찍이 식민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제국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쇠퇴해버린 동양 문명의 썩은 고기들”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개명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런 대일 인식을 공유하던 미국의 지식인과 저널리스트들은 일본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몽골계적(un-mongolian) (특징을 갖는) 민족’이라고까지 보기도 했던 것이다. 나아가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라는 미국 작가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일본 민족이 앵글로·색슨(Anglo-Saxon) 민족과 함께 아리안(Arian) 족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면서 일본의 성공적 근대화의 배경에는 ‘백인의 피(white blood)’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²⁾ 20세기 초 미국의 일본 인식은 이렇듯 일본의 성공적 근대화와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인종주의적 편견 속에서 일본을 백인종의 일부로 보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런 호의적인 평가도 일본의 중국 침략과 태평양에서의 양국의 팽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던 1930년대부터는 점차 라이벌 의식과 경쟁의식으로 발전하고, 드디어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상호 ‘적’으로 인식되고 만다. 예컨대, 미국은 태평양전쟁 기간 내내 일본인을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에 존재했었다고 가상되곤 하는 존재인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묘사하면서 왕왕 모멸적인 원숭이로 그리고는 했다. 이는 당시 미국에 계는 똑같은 전쟁의 적이지만 독일인이나 히틀러를 ‘인간’으로 묘사하던 당시

介紹』第3集 上册, 三聯書店, 368쪽

22) Joseph M. Henning, 2000, “Breaking Company: Meiji Japan and East Asia,” *Education About Asia* 5-3, p. 42를 볼 것. 그리피스의 이런 인종주의적 일본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일본에서의 장기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 집필한 일본 역사 개설서인 *The Mikado's Empire*가 1876년 최초 출판된 이후 12판을 거치면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본에 관한 내용으로 출판된 단일 저서로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책이었다”라는 역사학자 피터 두스의 평가 때문이다. Peter Duus, 1997a, 앞의 책, p. 200. 그리피스의 책의 일부 발췌 내용은 pp. 201~204를 볼 것.

미국 언론의 태도와는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당시 미국의 아시아 인식이 인종차별주의에 바탕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²³⁾ 이런 사정은 낙후되고 미개하다고 그려지던 중국인을 태평양전쟁 개시와 함께 미국의 우방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바꾸어 그리던 당시 미국의 언론의 입장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이런 미국의 아시아 인식의 역설적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쟁기간 중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군 교육용으로 제작된 〈당신의 적을 알아라(Know Your Enemy)〉, 〈왜 우리는 싸우는가(Why We Fight)〉라는 선전용 다큐멘터리 필름 속에 나타난 미국의 중국 인식과 일본 인식이다.

요약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1945년 이전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유럽의 아시아 인식을 모방, 승계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시아를 유럽의 '타자'로 보던 유럽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이었다. 둘째,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태평양 열강이자 대서양 열강으로 대두하던 미국의 '이중적 국가 정체성'이 만든 산물이었다. '이중적 국가 정체성' 때문에 미국의 발전에서 아시아와 태평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아시아는 미국 국가발전과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지역이란 인식이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셋째,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유럽 열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대한 상업적 관심 속에서 최초로 형성되었고 그런 관심은 지속되었다. 그 후 종교적 관심이 더해지면서, 이런 모든 배경을 종합한 미국의 인종차별적·문화주의적·오리엔탈리스트적 아시아 인식이 형성되었다.

23) John W. Dower,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Pantheon Books

III. 냉전, 지역연구, ‘적’과 ‘우방’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항복으로 태평양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이내 시작된 냉전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²⁴⁾ 무엇보다 중국이 국공 간의 내전을 거치면서 중국공산당의 승리가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에서는 38도선 이북에 친 소련 공산정권이 성립(1948)되었고,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 외에 그동안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탈식민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 혹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통해 서구 식민주의에 대항하면서 독립과 민족해방을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반미 혹은 반서구적 태도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비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그들의 반식민, 독립, 민족해방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의 진출과 확장이 눈에 띄게 현저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제일 먼저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의 변화에서 나왔고, 그에 따라 미국의 일본 인식도 다시 역설적으로 바뀌었다. 1945년 태평양전쟁 승리 이후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은 이제 막 형성되던 미국의 냉전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일본을 냉전정책의 ‘워크숍(workshop)’으로 간주하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적’으로부터 ‘우방’이자 ‘동맹국’으로 급히 전환시켜 갔던 것이다.²⁵⁾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도 그 같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점령 직후, 일본의 ‘민주화(democratization)’와 ‘비군사무장화(demili-

24) Bruce Cumings, 1997a, 앞의 글; 황동연, 1999, 앞의 글

25) John W. Dower, 1971,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In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eds.),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Pantheon Book, pp. 146~206

tarization)’를 추구하던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그 ‘방향을 되돌려서(reverse the course)’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의 진출) 제거’와 ‘(자유 세력 보유를 통한) 일본의 재무장’ 허용으로 전환되었다.²⁶⁾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빠른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는 지름길이라고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보았다. 동시에 그 같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방향전환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학술재단들[특히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은 공산주의 세력의 아시아에서의 확장을 봉쇄한다는 대 전제 속에서 일본에 존재하던 반공 성향의 일본 학자들에게 연구비 명목 등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은 정치적·경제적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일본 지식인들을 향하여 반공정책에 기초한 ‘문화적 공세(cultural offensive)’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마르크시즘’, 즉 공산주의의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⁷⁾ 이런 사정은 전후 일본에서 생산된 공산중국 등에 관한 지식과 인식의 일부가 반공이란 대전제 속에서 미국 정부나 미국 재단의 후원과 지원 하에서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의 ‘문화적 공세’는 한국에서도 진행되었다. 주한 미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s, Korea/USIS Korea)은 미국 정부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수행을 위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를 소개하며 즉, 문화를 매개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임무를’ 진행했던 것이다. 다만 문제는 실제 한미 간에 어떤 문화적 관계를 무엇을 통해 구축하려 했느냐는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미국공보원이 ‘문화적 공세’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집단은 ‘여론형성자, 군인, 농민’이었는데, 특히 여론형성자 중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관료, 언론계 인사들, 전문지식인 등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 내 여론과 입장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학자들인 대학

26) John W. Dower, 1971, 위의 글

27) Takeshi Matsuda, 2007, 앞의 책

교수도 ‘전문지식인’에 포함되어 미국 정부의 ‘교육교환계획(Education Exchange Program)’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오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미국 체류경험을 국내에 전파하게 함으로써 미국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식에 일조를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미공보원 도서관의 장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인 대학생, 고등학생, 교수, 교사, 언론인 등에게도 도서대출 등을 통해 이들 사이에 반공적 경향을 형성하려 했다. 예컨대 주한 미국공보원은 공산주의 비판 서적을 1951년부터 1961년까지 310권을 번역 발행하여 한국 내에서 반공의식 심화를 기도했다. 결국 주한 미공보원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문화적 공세’의 주된 주제는 “반공정신, 미국의 대한정책의 타당성, 미국 문명의 성취(민주주의 제도, 과학기술의 고도화, 경제적 발전상)에 대한 선전” 등이었다.²⁸⁾ 물론 이런 ‘문화적 공세’의 배경에는 낙후되고 민주주의가 결핍한 한국 사회를 근대문명으로 이끈다는 미국의 ‘문명화의 임무(civilizing mission)’ 의식도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일본 인식이 냉전을 기점으로 다시 전환되던 양상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중국 인식은 ‘우방’에서 ‘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중국이 1949년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공산화되면서 태평양전쟁 시작 이후 미국인들이 유지해 온 ‘동맹국’ 중국이란 미국의 대중인식이 이제 ‘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후 미국의 중국 인식은 매우 주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국 전문가의 한 사람이었던 에드먼드 클럽(O. Edmund Clubb)은 1950년 4월 중국인들은 러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들과 같이 사고하지 않”으며 “외국인 혐오증에서 생긴 광기(madness)”를 통해 행동한다고 인종차별적 인식에 근거해 중국인들을 묘사하였다. 당시 소련이 ‘동양’에 존재하는 위협이고, 러시아 문화가 ‘동양’ 문화와 닮은 점이 많다고 미국에서 회자되던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동양적’이고 ‘비정상적인’ 인간이었다는 인식을 미국의 중국 지역전문가가 적극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지역연구의 어두운 면의 하나를

28) 허은, 2003, 앞의 글

지적한다.²⁹⁾ 그리고 이런 인식은 1978년 미중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공산당 지배 하의 중국을 ‘전체주의(totalitarian)’ 국가라고 광범위하게 인식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중국인들을 공산주의를 통해 강제로 세뇌시키는 국가라고 보았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같은 전체주의의 기원을 중국의 ‘동양적 전체체제(Eastern despotism)’라는 중국, 나아가 아시아의 전통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칼 비트포겔(Karl Wittfogel)의 저서 『동양적 전체체제(Oriental Despotism)』는 바로 이런 인식과 판단의 정당성을 제공해 주던 주요 학문적 업적이었다.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그런 체제 하에서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중국의 인민들을 가정하면서 만들어진 냉전시기 미국의 중국 인식은 지역전문가들의 학술서와 할리우드가 만드는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설이 아닌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미국인들의 냉전시기 중국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 재형성, 확산되어 갔다.³⁰⁾ 그러나 냉전의 외중에 이루어진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은, 그동안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중국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던 학술적·논리적 설명들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미중관계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고, 미국의 중국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29) John W. Dower, 1986, 앞의 책, p. 109에서 재인용.

30) Karl Wittfogel, 1957,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ersity Press.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냉전시기에 제작된 〈The Manchurian Candidate〉와 〈Fu Manchu〉를 들 수 있다.

Ⅳ. 지역연구의 이론과 냉전시기 미국의 아시아 인식

미국 지역연구의 가장 기본적 분석틀은 근대화론이었다. 근대화론이란, 인류의 보편적 발전의 방향을 구미국가들의 역사 경험에 근거한 근대세계(modern world)의 형성으로 보고, 근대세계를 형성하는 조건인 근대성(modernity)의 성취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류 진보의 종착역으로 보는 인식론이다. 냉전시기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1950년대 들면서 그런 내용을 갖는 근대화론을 이론적 무기로 쓰면서 아시아를 근대화한 미국의 '타자'로 그리기 시작한 미국 지역연구의 산물이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유럽의 아시아 인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이지만, 1945년 이후 미국 지역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점차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서 체계적으로 지식화, 학문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적 미국의 '타자'로 등장한 아시아는 근대성의 정반대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전통', '후진성', '전체주의', '권위주의', '비이성성(irrationality)'이란 용어 등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를 인식하고 묘사하였다. 특히 그런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195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본격화된 사회주의 세력의 대두와 그에 따른 아시아의 탈식민지화, 탈서구화를 통한 민족해방의 움직임에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연구는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반자본주의 움직임, 탈식민지화, 탈서구화의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탈식민지화 이후 아시아의 재편, 세계의 재편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지역연구의 이런 근대화론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학자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 중의 하나가 '동아시아 자본주의론' 혹은 '자본주의 맹아론'이었다. 후일 1990년대 중국이 전 지구적 경제에 편입하면서 경제 강국으로 대두하자 좀 더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이런 주장은, 사실 냉전시기에는 서구경험 중심의 근대성이나 근대화(즉 서구식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자

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내에서 대안적 자본주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맹아론’이나 ‘동아시아 자본주의론’은 결국 유럽 중심주의와 구미의 근대화론을 동아시아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승인, 계승한 셈이 되는 것이다. 즉 서구 및 탈식민이란 배경 속에서 등장한 ‘자본주의의 맹아론’이 결국 구미의 세계 지배를 이론적으로 지탱하던 근대화론 자체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보완 혹은 재확인해 주는 역할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동아시아식 자본주의’(즉 유교 자본주의)나 ‘중국식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 자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근대화론의 재탕인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자체의 버팀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³¹⁾

지역연구의 이론적 틀인 근대화론을 지탱하던 두 지주인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그리고 근대화론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문가들이 생산한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적 인식, 유럽 중심적 인식을 확산 및 유통시킨 주요 담당자는 미국 대학의 연구소들이었다. 미국의 지역연구를 이끈 연구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국제학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러시아연구소(Russian Research Center),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러시아연구소(Russian Research Center),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Center for East Asian Research),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소재의 여러 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히 미국의 중국 연구와 일본 연구를 이끌었던 주요 학자들은 역사학자인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에드윈 라이샤워(Edwin Reischaur)가 있고, 정치학자로서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 있던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Scalapino)가 있었다. 이들 학자들이 진행한 중국 연구는 주로 중국 혁명, 사회주의 중국, 특히 1960년대에

31) Arif Dirlik, 1997, "Critical Reflections on 'Chinese Capitalism' as Paradigm," *Identities* 3-3, p. 322

는 문헌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지역연구 초기 이들의 연구는 미국이 어떻게, 왜 중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상실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 냉전정책의 위크숍으로 시작된 미국의 일본 연구는 일본에서 근대화, 즉 자본주의적 성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일본의 특수성에서 찾고, 그 특수성이 1930~1940년대에 왜 정상적 발전 궤도를 이탈하게 되었는지를 구명하는 등, 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근대성을 성취한 일본만이 지닌 일본 문화의 유일한 측면들을 구명하고 강조하기 위한 연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연구의 한 분야로서 미국의 중국학(China Studies)을 개척한 대표적 학자로 알려져 있는 존 페어뱅크는 냉전시기 미국의 중국 인식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에 동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18년을 재직(1955~1973)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최고의 ‘학술기업가(academic entrepreneur)’였다. 특히 그가 이끈 냉전시기 미국의 중국 연구는 학술발전이란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이 그야말로 ‘세계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그런 페어뱅크의 중국 인식은 어떠한가? 한 예를 들면, 그는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경제에 대한 중국과 서구 상인 간의 관념의 차이에서 찾았다. 즉 그 역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인류 진보의 보편적 발전과 진보의 과정으로 보고, 서구가 경험했던 자본주의적 발전의 배경이 된 여러 전제가 중국에서는 결핍했다고 보면서 바로 그런 사정을 중국에서 자본주의(즉 근대성)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 보았다.³²⁾ 근대화론에 근거한 그의 이 같은 인류 진보에 대한 인식은 역사를 성장할 수 있는 생명체이 있는 유기체로 보던 그의 역사인식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 인간의 ‘유년기(childhood)’를 관찰하면 이후 그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 역사에 대한 연구도 (1950~1970년대 당시) 자료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

32) 郝延平, 1987, 「學人簡介: John King Fairbank」, 『近代中國史研究通訊』第4期, 64~69쪽

도 그런 생명체 성장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었다.³³⁾ 이런 그의 지적이 암시하는 것은 1950~1970년대 공산중국을 인간으로 보면 아직 '성장(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유년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국 역사는 근대 즉, '성인기(adulthood)'로 진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근대주의적 역사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페어뱅크에게 공산중국은, 성인인 미국과 대비되면서, 교육이 끝나지 않고 기율도 아직 잡히지 않은 유년기의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다.

중국을 유년기의 어린아이이면서 동시에 서구의 '타자'로 보던 그의 중국 역사 해석은 그가 중국에서 과학이 발전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에 따르면,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엄밀한 논리체계가 결핍했었고, 중국의 문자구조도 과학발전을 이끌기에는 '장애'가 있었다. 나아가 그는 중국의 교육방식도 암기위주였고 문화적으로 보면 인간의 손과 뇌의 기능을 분리하여 중국인들이 인간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왕조 정부가 경제조직이나 생산에 많은 제재를 가했던 점, 인구가 많아서 발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던 점, 관리의 권력이 과대했던 점은 결국 중국에서 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³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의 설명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바로 서구에서만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데 있다. 즉 그의 이런 설명은 바로 중국은 서구의 '타자'였다는 오리엔탈리스트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페어뱅크의 중국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중국 근대사를 전통에서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했다. 말하자면, 근대화론을 중국 근대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중국 근대화의 과정을 서구의 '충격(impact)'에 대한 중국의 '반응(response)'이었다고 파악하

33) John K. Fairbank, 1988, "The Chinese Behemoth,"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p. 42

34) 郝延平, 1987, 앞의 글

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이미 많은 서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³⁵⁾ 한편 페어뱅크는 중국의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의 전통사회였고 다음으로 영향을 준 것은 제국주의였다고 파악했다. 이런 역사적 해석을 통해 그는, 일본이 서구의 ‘충격’에 대한 ‘반응’이 빨랐기에 일본이 열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서구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서 결국 일본과는 다르게 강국(즉 근대국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근대화가 늦어진 이유를 결국 그는 중국의 ‘역사적 타성(historical inertia)’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근대주의적 시각을 통해 그는 미국의 중국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중국 연구를 진전시켰던 것이고, 그에 따라 냉전시기 (그가 의도했던 안했던) 미국의 대중정책, 미국의 부정적, 왜곡된 중국 인식의 생산을 주도했던 것이다.³⁶⁾

이상과 같은 페어뱅크의 중국 근대사 이해의 기본적 방법론과 인식론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조차도, 아리프 딜릭이 지적하듯이, ‘개념적 함정(conceptual trap)’에 빠져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 맹아론’이 그 한 예이지만, 이 외에도 미국의 중국 인식의 기본적 개념들을 중국 학자들도 역설적으로 그대로 그들의 역사인식과 방법에 적용하고는 했다. 이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구 자본주의의 (계급대립이나, 부의 편재 등 같은) 나쁜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과정이 사회주의의 달성을 위한 전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등 목적론적(teleological) 인식론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마치 자본주의의 ‘씨’를 땅(중국)에 뿌리면서 그 씨가 자라서 ‘꽃(자본주의)’이 피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이다.³⁷⁾ 이런 인식론적 태도는 인류 역사발전의 궤도에 대한적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무시하

35) Paul A. Cohen,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Columbia University Press, Chapter 1

36) Paul A. Cohen, 1984, 위의 책, pp. 70~74

37) Arif Dirlik, 1982, “Chinese Historians and the Marxist Concept of Capitalism,” *Modern China* 8-1, p. 108

면서,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인류 진보와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이자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근대화론 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론은 자본주의가 세계를 정복하기 이전, 여러 지역에서 존재했던 여러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체제의 동력을 재발견 혹은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중국 학자들 스스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³⁸⁾ 다시 한번 아리프 딜릭의 주장을 빌리면, 아시아인 스스로도 19세기 말 이래 ‘근대화 과정’에서 구미 오리엔탈리스트의 ‘아시아(혹은 동양) 만들기’에 내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래서 그 결과 아시아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아인식 역시 유럽과 미국의 아시아 인식에 따라 그동안 크게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자아 오리엔탈리즘화(self-Orientalization)’를 통해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자아인식인 아시아 인식을 형성했다는 것이다.³⁹⁾ 어찌 보면 중국인들의 자아인식은 자아 오리엔탈리즘의 결과였던 것이다.

냉전시기 미국의 지역연구를 통해 생산된 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기원에 관한 지식도 철저히 냉전적 인식과 근대화론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냉전은 오리엔탈리스트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적용하게 하면서 미국의 아시아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생산하게 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닌 채 생산된 미국의 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는, 어찌 보면 자연스런 결과이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을 아시아 국가 내부에서 자생한 반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해방 운동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연구는 아시아의 민족해방과 공산화를 코민테른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전개된 전 세계 공산화 전략 즉, 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세계정복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스칼라피노는 일본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일본공산주의 운동의 1단계가 외부세력, 즉 소련과 코민테른의 영향 하에

38) Ravi Arvind Palat, 1996, “Fragmented Visions: Excavating the Future of Area Studies in a Post-American World,” *Review* 19-3, p. 288

39) Arif Dirlik, 1996, “Chinese History and the Question of Orientalism,” *History and Theory* 35, pp. 96~118

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한다.⁴⁰⁾ 나아가 스칼라피노는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서구가 자유, 평등, 대표제, 그리고 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개념을 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심어 주었다라고 지적한다.⁴¹⁾ 이런 그의 지적은 첫째, 민주주의 개념을 서구의 의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규정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서구만이 지니는 독점적 개념과 가치로 본 결과이다. 둘째, 이는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이나 지역적 차별성을 무시한 채 아시아에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단선적 이해이자 오리엔탈리스트적 인식의 산물이었다.

이런 시각과 인식은 중국이나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같은 몇몇 학자들의 연구를 제외하고,⁴²⁾ 냉전시기 이루어진 미국의 중국 공산주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산화가 소련의 세계 공산주의 전략 하에서 진행되고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1960년대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한국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스칼라피노, 이정식(Chong-sik Lee), 서대숙(Dae-sook Suh) 교수의 연구에서도 이런 시각은 그대로 대부분 투영되었다.⁴³⁾ 특히 한국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이정식의 연구가 스칼라피노 교수의 권유에 따라 스칼라피노의 동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최초 시작되었다는 이정식의 언급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방

40) Robert A. Scalapino, 1967, *The Japanese Communist Movement, 1920~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1) Robert A. Scalapino, 1967, "Communism in Asia: Toward a Comparative Analysis," In Robert A. Scalapino (ed.), 1967,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Prentice-Hall, INC., p. 1

42) Benjamin I. Schwartz, 1951,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Harper & Row

43) Dae-Sook Suh, 1967,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e-Sook Suh ed., 1970,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ong-sik Lee, 1978,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Hoover Institute Press; Chong-sik Lee ed., 1977, *Materials on Korean Communism, 1945~1947*,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Robert A. Scalapino, 1967, 앞의 책

향이 이미 대부분 스칼라피노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⁴⁴⁾ 왜냐하면, 이정식의 한국 공산주의 연구는 스칼라피노의 주장을 대부분 따르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조금 단순화하여 스탈린주의가 연장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⁴⁵⁾ 서대숙의 경우도 1945년 이후 소련 군의 진주와 함께 등장한 북한의 공산당 지도부를 1945년 이전부터 존재한 한인 공산주의 혁명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간단히 치부해버림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소련에 의해 이식된 정치세력이자 정부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⁶⁾ 결국 냉전시기 이루어진 미국 지역연구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도 냉전지식을 통해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런 연구 태도는 아시아를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적, 낙후된, 저개발된 지역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주주의가 결핍했던 사회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그 결과는, 미국의 근대(과정)를 개발의 전형적 모델로 제시하고, 나아가 미국적 가치와 정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감으로써 작용하도록 하게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미국 지역연구는 역설적으로 아시아에서 반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냉전기간 박정희, 장제스[蔣介石] 등과 같은 아시아의 독재자들을 지원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일본의 경제발전과 함께 미국 내에서 제기된 ‘일본 위협론’이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등장한 ‘중국 위협론’은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비약을 미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와 미국 경제발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던 미국의 논리이자 인식이었다. 이런 미국의 인식은 1945년 이후 1980년대까지 일본을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을 지지하는 ‘우방’으로 보면서도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라이벌이자 잠재적 ‘적’으로 보던 미국의 일본 인식의 반영이었다. 마찬가지로 전 지

44) 「이정식교수 인터뷰」, 2007, 『신동아』 통권 576호, 478~483쪽

45) Chong-sik Lee, 1967, “Stalinism in the East: Communism in North Korea,” In Robert A. Scalapino (ed.), 1967, 앞의 책, pp. 120~150

46) Dae-Suk Suh, 1967, 앞의 책, pp. xi~xii

구적 경제체제 하에서 중국을 주요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경제열강으로 대두하는 것을 미국의 이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이중적 중국 인식이 드러난 것이 바로 ‘중국 위협론’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대두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대응과 인식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인식의 뿌리에 경제적 이익이란 관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그 배후에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이중적 국가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이중적 국가정체성’에는 미국의 상업적 이득, 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의 미래를 태평양 건너 아시아에서 찾아야 한다는 꽤 오래된 믿음이자 인식의 토대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지역연구가 만든 아시아에 관한 지식과 인식은 기존에 존재해 오던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더욱 고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문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연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과학적·학문적으로 입증하고 지식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이미지가 이제는 역사와 사회과학이란 이름 하에 근대화론과 같은 여러 이론을 통해 지역연구 하에서 지역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학제적으로 연구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즉 지식)로 만들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지적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미국의 아시아 인식이 지역연구 속에서 지식화, 체계화된 구체적 과정에 대한 세밀한 사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필자가 지적했듯이, 첫째, 아시아가 지역연구 속에서 미국의 ‘타자’로 간주되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연구가 만들어 낸 아시아에 관한 지식과 인식이 이미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에 의해 오래전부터 그 원형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둘째, 미국의 ‘이중적 국가정체성’은 그런 인식과 지식의 형성을 재확인시키면서 미국만의 인식과 지식을 만드는 배경이었다는 점, 셋째, 냉전시기 미국의 지역연구는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지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중요하고도 체계적인 학술 과정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V. 맺음말을 대신하여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럽 오리엔탈리즘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아시아는 미국의 '타자'로서 최초 등장했고, 미국의 '타자'로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이후 인종주의적 편견과 문화주의적 이해가 더하여졌다. 이런 배경에 더하여, 19세기 미국의 서부로의 대륙팽창은 점차 태평양과 그 건너 존재하는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존재, 즉 아시아는 미국의 경제발전, 상업적 이윤 추구의 가장 근본적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인시켰다. 물론 아시아가 종교적으로는 신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이교도들의 지역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인식도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미국 지도자들의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미국이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경계에 둔 태평양 열강이기도 하다는 미국의 '이중적 국가 정체성'이 있었다.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와 함께 세계열강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일본 인식은 자주 변하였다. 미국은 일본인들을 근거도 없이 유럽인들과 비슷한 '백색인종'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내 일본과 갈등을 겪다가 1941년 전쟁에 돌입하자 일본인들을 곧바로 '적'이자 비인간적 존재인 '동물(원숭이)'로 그리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20세기 전반기 내내 펄벅(Pearl Buck)의 소설 『대지(The Good Earth)』에서 묘사되었듯이 가난에 찌든 농민들의 나라로 대부분 그려지고 있었다. 다만 일본과의 태평양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은 중국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찬란한 문명의 나라로 전환하여 인식하기도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에는 중국, 나아가 아시아를 공산주의의 압제에 허덕이는 사회, 공산주의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는 사회, 전체주의적 사회, 진보가 없는 전통적, 낙후된 사회 등으로 그리는 등, 미국의 중국 인식, 아시아 인식은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이

해관계에 따라 자주 변해 왔다.

이런 배경을 갖고 냉전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지역연구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인식과 이해를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화 과정을 거쳐 '사실' 즉, 지식으로 만들어 갔다. 이런 과정을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queville)의 용어를 빌려서 필자가 표현하자면,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오래된 '일반적 생각(general ideas)'이 냉전시기에 발생한 미국의 특별한 '이해'와 맞물리면서 미국 지역연구의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단순화된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 개념(general notion)'으로 만들어지고 학술적으로 '소비상품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⁴⁷⁾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지주였던 공산주의 봉쇄정책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지역연구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고, 미국 연방정부와 재단은 학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던 아시아 인식을 확인, 재확인하면서 지식으로 창안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인식이 지식으로 체계화된 이론적 배후에는 근대화론이 있었다. 결국 냉전시기 미국의 아시아 인식 속에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서 상업적 팽창과 경제적 이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에 대한 관심, 오리엔탈리즘의 전통과 유산,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입장, 미국이 대서양 열강이자 태평양 열강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국가정체성' 등이 함께 영커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평양 나아가 아시아를 상업적 이득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대아시아 인식은 앞으로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인식은 냉전시기에 미국 정부와 재단의 독점적 지원 체제 하에 있으면서 지식으로 체계화되었기에, 그동안 미국 지역연구의 연구방향이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아오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아시아 인식 형성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이나 결과가 미국 정부나 재단에 의해서만 크게 좌

47) 인용 부분은 토크빌 자신이 직접 쓴 용어이고 표현은 Carl E. Pletsch, 1981, 앞의 글에서 시사받았다.

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한국의 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 타이완의 장징궈국제학술교류기금회(The Chiang Ching-kuo Foundation) 등은 수많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타 국가에서 자국에 관한 (호의적) 연구를 증진시키려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여러 정부 지원 학술재단이 구미 대학에서 유교 연구를 진흥하려고 적극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재단의 표면적 목적은 문화교류나 학술교류지만, 사실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자국에 대한 인식,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인식을 ‘공정적’ 혹은 ‘호의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이런 지적을 좀더 확대해서 이해한다면, 냉전 이후 미국의 일본 연구가 증진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단들이 학술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일본 인식을 호의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기대 속에서) 늘렸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식 (발전) 모델’이나 “일본에서 배우자”라는 경제발전형태나 구호를 지원할 가치가 있는 학술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일본 연구를 그동안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한 미국 내 학술적 연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코 미국 내 학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 관심이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⁴⁸⁾

물론 미국 지역연구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에 대한 근대주의적 인식 혹은 유럽 중심적 인식을 탈피하면서 아시아의 역사를 전 지구사 속에서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⁴⁹⁾ 이런

48) Ian Reader, 1998, “Studies of Japan, Area Studies, and the Challenge of Social Theory,” *Monumenta Nipponica* 53-2, pp. 238~239

49) 대표적인 예로는 Andre Gunder Frank,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enneth Pomeranz, 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bert B. Marks, 2002, *The Origins of the Modern World: A Global and Ecological Narrativ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등을 들 수 있다. *Modern China*나 *Bulletin of Concerned Asia Scholars* 잡지가 1970년대 출현한 것이나 Paul A. Cohen, 1984, 앞의 책이 1980년대 초에 출판된 것 등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아시아 인식(넓게는 미국

노력들이 냉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 지역연구의 동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적 타자인식, 식민주의적 구조를 지탱하는 인식론, 근대화론을 통한 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접근을 모두 거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역기반의 지식의 생산과 그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인식에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⁵⁰⁾ 지역연구를 통한 지역기반의 지식 생산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지역연구가 그동안 민족이나 국가를 단위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런 지역연구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대부분 지역단위의 연구나 진정한 지역전문가라기보다는 국가단위의 연구와 '일국 전문가'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전문가들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실상 '일국 전문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제야말로 진정한 지역전문가가 필요할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지역기반의 지식 생산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새롭게 생산되는 지역기반의 지식은 이런 일국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관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그동안 존재했던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새롭게 바꾸거나 나아가 새롭게 개념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연구)에 대한 미국 학계의 자기비판의 시작이었다. 물론 이런 비판이 미국의 아시아 인식과 연구방법론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공론화한 점은 있지만, 그런 비판 자체가 미국 지역연구가 만들어 낸 학문과 권력의 의존관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특히 1990~1991년의 걸프전쟁과 2003년의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는 교육과 권력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늘 학술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출판된 예가 Noam Chomsky, Immanuel Wallerstein eds. et al., 1997, *The Cold War and the University*, The New Press이다.

- 50) 주 47)에서 든 프랑크, 포메란츠, 마크스의 연구들이 여전히 근대성이란 문제의식 속에서 아시아라는 거대 지역(region)의 역사를 메타역사(meta-history)의 틀 속에 다루려 했다면, Roxann Praznaik, 2010, "Siena on the Silk Roads: Ambrogio Lorenzetti and the Mongol Global Century, 1250~1350,"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21, No. 2, pp. 177~217은 넓은 의미의 지역(region)보다는 좁은 의미의 '지역(place 혹은 local)' 간의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역사 전개를 더 중시하면서 전 지구사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두 가지 다른 역사접근은 (대안적 근대성을 포함한) '근대성'을 전 지구사 이해의 전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나눠어진 서로 다른 역사인식의 결과이다.

이미 이런 노력들은 1970년대 이래 많은 학자에 의해 제기 또는 시도되고 있고, 나아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지역연구가 냉전시기와는 다르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¹⁾ 다만 아리프 딜릭이 지적하듯이 지역전문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역(혹은 일국)에 관한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권력에 봉사하기 위해 이용할 것이 아니라 권력과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적 도전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기반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새롭고도 전 지구화된 형태의 비판적 이해와 결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²⁾ 인식이란 결국 ‘창안’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지역연구는 이제 냉전지식에 기반한 아시아 인식의 창안에서 벗어나 아시아에 대한 ‘좋은’ 인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흑백논리에 따른 ‘옳은’ 혹은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예컨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와 공존을 증진시키는 그런 ‘좋은’ 지식과 인식 말이다. 새로운 미국 지역연구가 만드는 아시아에 관한 ‘좋은’ 지식과 인식의 형성을 통해 미국과 동부아시아 국가 간의 이해와 소통도 점차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 51) Chris Burgess, 2004, “The Asian Studies ‘Crisis’: Putting Cultural Studies into Asian Studies and Asia into Cultur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1-1, pp. 121~136; Martin M. Lewis and Karen Wigen, 1999, “A Maritime Response to the Crisis in Area Studies,” *Geographical Review* 89-2, pp. 161~168; Masao Moyoshi and Harry Harootunian, eds., 2002, *Learning Places: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52) Arif Dirlik, 1997, “No Longer far Away: The Reconfiguration of Global relations and ITs Challenges to Asian Studies,” In Leo Douw (ed.), *Unsettled Frontiers and Transnational Linkages: New Tasks for the Historian of Modern Asia*, VU University Press, pp. 19~32

참고문헌

- 김경일, 1996,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제5권 3호
- 김태승, 2000, 「중국근대사 인식의 계보와 유산 - 탈근대적 중국사 인식의 전망을 위한 문제 제기」,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역사비평사
- 허은, 2003,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 제15호
- 황동연, 1999, 「21세기 전야 미국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운명: 전지구화와 그에 따른 지역연구의 방향에 대한 미국학계의 비판적 논의」, 『동아시아역사연구』 제6집
- 「이정식 교수 인터뷰」, 『신동아』 576호, 2007
- 沈松橋, 1987, 「Joseph R. Levenson」, 『近代中國史研究通訊』 第4期
- 中共中央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著作編譯局研究室 編, 1978, 『五四時期期刊介紹』 第3集 上册, 三聯書店
- 郝延平, 1987, 「Jonh King Fairbank」, 『近代中國史研究通訊』 第4期
- 國分良成, 1990, 「アメリカの中國研究」, 野村浩一 外 編, 『現代中國研究案内』, 岩波書店
- Akira, Iriye, 1967, *Across the Pacific: An Inner Histor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Harvest Brace Jovanovich
- Akira, Suehiro, 1997, “Bodies of Knowledge: How Thinktanks Have Affected Japan’s Postwar Research on Asia,” *Social Science Japan*, February
- Burgess, Chris, 2004, “The Asian Studies ‘Crisis’: Putting Cultural Studies into Asian Studies and Asia into Cultur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1, No. 1
- Chomsky, Noam and Wallerstein, Immanuel et al. eds., 1997, *The Cold War and the University*, The New Press
- Cohen, Paul A.,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Columbia University Press
- Cumings, Bruce, 1997a, “Boundary Displacement: Area Stud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 Vol. 29, No. 1
- Cumings, Bruce, 1997b, "Postscript: Response to My Friends and Critics," *Bulletin of Concerned Asia Scholars*, Vol. 29, No. 2
- Cumings, Bruce, 2009, *Dimens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Yale University Press
- Dirlik, Arif, 1982, "Chinese Historians and the Marxist Concept of Capitalism," *Modern China*, Vol. 8, No. 1
- Dirlik, Arif, 1996, "Chinese History and the Question of Orientalism," *History and Theory* 35
- Dirlik, Arif, 1997, "Critical Reflections on 'Chinese Capitalism' as Paradigm," *Identities*, Vol. 3, No. 3
- Dirlik, Arif, 1997, "No Longer Far Away: The Reconstruction of Global Relations and Its Challenges to Asian Studies," In Leo Douw (ed.), *Unsettled Frontiers and Transnational Linkages: New Tasks for the Historians of Modern Asia*, VU University Press
- Dower, John W., 1969,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In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eds.),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Pantheon Books
- Dower, John W.,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Pantheon Books
- Duus, Peter, 1997, *The Japanese Discovery of America: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Bedford/St. Martin's
- Eiji, Oguma, 2007, "The Postwar Intellectuals' View of 'Asia'," In Sven Saaler and J. Victor Koschmann (eds.),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Colonialism, Regionalism and Borders*, Routledge
- Fairbank, John K., 1982, *Chinabound: A Fifty-Year Memoir*, Harper Colophon Book
- Fairbank, John K., 1988, "The Chinese Behemoth,"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 Friedman, Edward and Selden, Mark, eds., 1969,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Pantheon Books
- Henning, Joseph M., 2000, "Breaking Company: Meiji Japan and East Asia,"

- Education About Asia*, Vol. 5, No. 3
- Hunt, Michael H., 1987, *I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 Israel, Jerry, 2001, "Scratches on Our Mind Revisited: Chinese Influences on the Shaping of American Images," *Chinese Studies in History*, Vol. 34, No. 3
- Jespersen, T. Christopher, 1996, *American Images of China, 1931~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Chong-sik, 1969, "Stalinism in the East: Communism in North Korea"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Prentice-Hall, INC
- Lee, Chong-sik, 1978,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Hoover Institute Press
- Lee, Chong-sik, ed., 1977, *Materials on Korean Communism, 1945~1947*,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Leon, W. and Consuelo, M., 1995, "Foundations of the American Image of the Pacific," In Arif Dirlik and Rob Wilson (ed.), *Asia/Pacific as a Cultural P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 Lewis, Martin W. and Wigen, Karen, 1999, "A Maritime Response to the Crisis in Area Studies," *Geographical Review*, Vol. 89, Issue 2
- Matsuda, Takeshi, 2007, *Soft Power and Its Peril: US Cultural Policy in Early Postwar Japan and Permanent Dependency*,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Cormick, Thomas J., 1970, *China Market: America's Quest for Informal Empire, 1893~1901*, 2nd ed., Quadrangle Books
- Moyoshi, Masao and Harootunian, Harry, eds., 2002, *Learning Places: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alat, Ravi Arvind, 1996, "Fragmented Visions: Excavating the Future of Area Studies in a Post-American World," *Review*, Vol. 19, No. 3
- Pletcher, Carl E., 1981, "The Three Worlds, or the Division of Social Scientific Labor, Circa 1950~1975,"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3, No. 4
- Reader, Ian, 1998, "Studies of Japan, Area Studies, and the Challenge of Social

- Theory," *Monumenta Nipponica*, Vol. 53, No. 2
- Reischauer, Edwin O., 1986,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Harper & Row Publishers
- Said, Edward, 1978, *Orientalism*, Vintage
- Scalapino, Robert A., 1969, "Communism in Asia: Toward a Comparative Analysis,"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Prentice-Hall, INC
- Scalapino, Robert A., ed., 1969,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Prentice-Hall, INC
- Schwartz, Benjamin I., 1951,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Harper & Row
- Selden, Mark, 1992, "National Security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Bulletin of Concerned Asia Scholars*, Vol. 24, No. 2
- Spence, Jonathan, 1969, *To Change China: Western Advisers in China, 1620~1960*, Penguin Books
- Steeg, Clarence L. Ver, 1977, "Financing and Outfitting the First United States Ship to China,"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22, No. 1
- Suh, Dae-Sook, 1967,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h, Dae-Sook, ed., 1970,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e 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 ed., 1972, *China! Inside the People's Republic*, Bantam Book
- Wittfogel, Karl, 1957,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American Area Studies and the American Perception of Asia
during the Cold War

Hwang, Dongye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American perception of Asia has been fundamentally a product of both Orientalism, in which Asia is seen as “the Other” of Europe, and American commercial interest in Asia. America has formulated its image and perception of Asia due mainly to its commercial interest in Asia, which the founding fathers of America as early as the late 18th century widely shared with one another as a key for the newly-born country. In the nineteenth century, as America reached the Pacific and made it its western border, many American leaders believed that the future of the country would be determined by its successful expansion toward Asia across the Pacific, and since then, America has developed its ‘dual national identities’ as both a Pacific and Atlantic Power, which in turn explains why America has increasingly maintained its deep interest in Asia and the Pacific.

American Area Studies, which began with the Cold War with the financial suppor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for its Cold War policies and various academic foundations, elevated American images and perceptions of Asia to the status of sort of ‘facts’ about Asia through its scientific,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while inheriting and materializing the previous American perceptions of Asia. The theoretical

backbone of American Area Studies was the modernization theory that sees Asia as traditional, backward, and vulnerable to communism. In short, the American perception of Asia, produced by the Area Studies during the Cold War, was a product of the combination of Orientalism, racism, and culturalism, as well as American commercial, political, religious interests that have stemmed from the American 'dual national identities' as both a Pacific and Atlantic Power.

keywords

American Area Studies, American Perception of Asia, the Cold War, Dual National Identities, Orientalism, Modernization Theory

‘中共’과 ‘中國’ 사이에서

- 1950~1970년대 대중매체상의 중국 관계 논설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중국 인식 -

정문상 ■ 경원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조교수

I. 머리말

한국인의 체계적인 중국 인식의 형성은 냉전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시기와 해방 직후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대부분 동시대적 또는 시사적 차원에 머물렀지만,¹⁾ 한국전쟁 이후 각 대학이 복구되고 각종 연구기관과 학회가 조직되면서 그 관심과 연구가 본격화된 사정과 관련이 깊다. 중국사학계에 한정해 보더라도,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근대적 동양사학의 定礎期”였다면 1960년대는 그 “成長期”였고 1970년대는 발전기였다는 평가도 있듯이,²⁾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인식은 냉전이라는 시대와 밀접히 연관되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질서

※ 투고일: 2011년 7월 7일, 심사일: 2011년 8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1) 閔斗基, 1986, 「韓國에서 中國現代史研究」, 『近きに在りて』 10, 2~3쪽

2) 윤남한, 1975, 「동양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68, 108쪽

가 동아시아에서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북한은 물론이러니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양한 차원에 걸친 대결, 대립구도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반공’과 ‘반미’로 상징된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동반한 냉전질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등과 같은 동아시아 신생국의 건설 과정은 물론 일본의 전후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라는 제국에 의존하여 이른바 ‘냉전형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했던 한국³⁾은 사회적으로 냉전 반공 이념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 반공 이념은 한국인의 자기정체성은 물론 주변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중국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반공 냉전 이념이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냉전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을 균질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동아시아의 냉전질서는 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개개인의 냉전 경험 또한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냉전질서는 1950년대에 형성된 후, 시기를 두고 동요되고 균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동반되어 또는 개개인의 역사관이 나 현실인식에 따라 한국인은 제각기 냉전을 경험했다. 따라서 냉전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거기에 투영되고 반영된 냉전의 양상을 다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냉전구도의 변화상을 시야에 넣고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그리고 인식의 양상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한국 지식인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는 한편, 냉전기 한국의 중국 학자의 중국 근현대사 이해와 그 시각을 분석한 바 있다.⁴⁾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필자는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중국

3) 이종원, 1999,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좌표와 전망」,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일』, 건국대학교출판부

4) 정문상, 2007,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중국 문화대혁명 이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13; 정문상, 2009, 「김준엽의 근현대 중국론과 동아시아 냉전」, 『역사비평』 87; 정문상, 2010, 「한국의 냉전문화의 형성과 문화대혁명」, 『중국근현대사연구』 48

에 대한 관심과 시각 그리고 중국 인식의 일단을 규명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분석 대상을 넓혀 1950~1960년대에 창간 또는 복간된 대표적인 월간 종합잡지에 실린 중국 관계 논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지식인의 시기별 중국 인식의 추이와 그 내용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집중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월간 종합잡지는 『사상계』, 『신동아』, 『세대』, 『정경연구』 등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상계』는 ‘반공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의 근대화’의 실현을 추구한,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에 걸쳐 한국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월간지였다.⁵⁾ 그리고 1963년 6월 창간된 『세대』와 1964년 9월 복간된 『신동아』는 1960년대의 종합지 시장을 주도한 대표적인 월간지였으며,⁶⁾ 1965년 1월에 창간된 『정경연구』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및 국제관계를 다룬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평론지였다. 이들 잡지에는 당시 각 신문사의 외신부 기자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역사, 경제 등 각 분야 중국 전문가의 논설이 상당량 실려 있으며, 논설의 내용은 같은 시기 일간지의 간단한 기사에 비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이들 잡지에 실린 중국 관계 논설은 냉전기에 본격화된 한국 지식인의 중국 관심과 인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데 유용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이다. 냉전기 자체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해체된 시점까지 다루어야 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시야를 둘 경우 소련 해체 뒤에도 여전히 냉전구도가 지속되

5) 김진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사, 제2장 참고. 1950년대~1960년대 초반 『사상계』의 지식인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그 사회운동 관계망에 대해서는 이경란, 2010, 「1950-60년대 초반의 잡지와 지식인-사회운동 관계망」, 『1950-60년대 동아시아 지식·지식장의 재구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사업단 제11차 사회인문학 포럼 참고.

6) 김민환, 1997,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520쪽. 『신동아』와 『세대』는 『사상계』, 『월간중앙』 등과 함께 1960년대에 각축을 벌였던 대표적인 월간잡지였으며, 특히 『세대』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독자층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김민환, 1997, 위의 책, 515쪽

고 있다는 동아시아적 특수성⁷⁾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1970년대까지로 분석 시기를 한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질서가 1970년대에 들어 질적으로 변동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첫째,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기본축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인데, 이 구도가 질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미중 화해’이며, ‘미중 화해’는 당시 지식인들이 ‘탈냉전의 시작이자, 새로운 화해의 시대의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큼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변화에서 갖는 의미는 컸다. 둘째, 냉전질서의 변동과 관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데탕트’ 움직임이다.⁸⁾ 냉전질서가 질적으로 변동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또는 정부 간 데탕트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 각 사회의 내부로부터의 냉전질서에 대한 비판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는 유형을 달리한, 냉전에 대한 비판적 지적 활동을 반영한 중국 인식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본문에서 보듯이 1970년대에 들어서였다.

II.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

『사상계』에 한국인의 중국 관계 논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5년을 지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체험담이나 논설의 번역문이 주종을 이루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류소당의 「중공권내의 지식인」, 마크 데니안의 「중공의 종교정책」, 에네스트 A. 그로스의 「중공승인반대의 논거」, CHANG

7)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는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역음, 최덕수 옮김, 2008, 『끝나지 않은 20세기』, 역사비평사 참고.

8) ‘사회적 데탕트’, ‘아래로부터의 데탕트’ 개념과 그에 관련한 연구 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해서는 菅 英輝, 2010, 「變容する秩序と冷戦の終焉」, 『冷戦史の再検討』,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7~19쪽 참고.

KUO-SIN의 「소위 중공의 지적 자유」 등이었다.⁹⁾ 이들 논설에 비쳐진 중국은 ‘불법, 테러, 강권적 전체주의, 배외주의’ 정권으로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고립, 봉쇄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1955년을 경계로 『사상계』에 한국인 논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데에는 臺灣大學에서 4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고려대학교에 복직한 역사학자 김준엽과 관련이 깊다. 그는 1955년에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1959년 10월부터 1961년 1월까지 3대 편집주관을 맡았다. 이 시기는 ‘4·19혁명’을 전후한 때로 『사상계』의 전성기에 해당했다. 편집위원이었던 김준엽은 「중공국민정부는 이렇게 하여 몰락하였다」(상)·(하), 「중공국가체제의 성립」 그리고 「중공의 인민지배기구」(상)·(하) 등을 차례로 발표했고, 1958년에는 思想界社에서 단행본 『중공공산당사』를 간행했다.

김준엽은 『중공공산당사』 서문에서 “怪物” 중공공산당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할 만큼 성장한” 이유와 배경을 해명하는 것이 자신의 저술 동기라고 밝혔다.¹⁰⁾ 중공공산당을 “괴물”에 비유하고 “인류 평화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한 데서 그리고 자신의 저서가 “(한국인의) 對共鬪爭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바란 데서, 당시 그는 반공 논리에 입각해 중국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그에게 중공공산당은 민족주의적이거나 민주주의적 성향을 띤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아니었다. 소련의 “노예”로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실현을 추구했던 “기만적인” 정치세력이었다. 따라서 중국 공산주의 혁명에서 민족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 성격에 주목하여 ‘쏘공이나 韓共’과 다른 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는 ‘환상’이며 ‘어리석은 일’일 뿐이었다.¹¹⁾

9) 류소당, 김광주 번역, 1953, 6, 「중공권내의 지식인」, 『사상계』 1-3; 마아크 데니안, 민석홍 번역, 1953, 8, 「중공의 종교정책」, 『사상계』 1-5; 어어네스트 A. 그로스, 1954, 6, 「중공승인반대의 논거」, 『사상계』 2-4; CHANG KUO-SIN, 1955, 9, 「소위 중공의 지적 자유」, 『사상계』 3-9

10) 김준엽, 1958, 『중공공산당사』 서문, 思想界社 참고.

11) 김준엽, 1958, 3, 「중공혁명노선의 변천」, 『아세아연구』 1-1, 82쪽

그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은 ‘표면상으로는 각당 각파의 연합정부 형식을 갖추고 그것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군·정·당의 3위 1체로 된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¹²⁾ 즉 공산당 독재사회이며 毛澤東의 개인독재사회에 불과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정력적으로 추진한 공업화를 바탕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은, 인민대중의 희생, 물질적 궁핍 그리고 인간적 자유의 전면적 억압을 대가로 한 것이었으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군사적 원조는 민족해방투쟁을 명분삼은 혁명전술의 수출로 이해되었다. 특히 그는 중공의 국력강화의 바탕에는 ‘대국적 소비니즘’과 ‘팽창주의’의 야심이 현저하여 ‘신형 대중화제국’ 건설의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진단했다.¹³⁾ 그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공산세력의 등장이며 이는 “자유진영에 대한 일대 경종”¹⁴⁾이었다.

그가 반공논리에 입각하여 중국을 인식한 것은 그의 중국 체험과 관련이 깊다.¹⁵⁾ 식민지 말기 慶應大學 유학 중 학병으로 입대해야 했던 그는 중국 전선 배치 후 곧장 탈출을 감행했다. 이른바 ‘일제 학병 탈출 1호’였던 그는 국민군 유격대의 일원으로 항일전쟁에 참여했으며 이후 臨川, 重慶, 西安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해방 직전에는 광복군 제2지대에 속해 미 전략사무국(O.S.S.)의 특수훈련을 받으며 이범석 장군의 부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 공산주의(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공적 성향까지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체험은 그의 중국공산당사와 근현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투영되었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그의 중국 이해는 1950년대 『사상계』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경향의 반영물이기도 했다. 문화적 민족주의란 ‘서양을 따라가야 할 모델로 설정하고 근대적 지식 엘리트

12) 김준엽, 1957. 12, 「중공의 인민지배체제」(하), 『사상계』 5-15, 70쪽

13) 김준엽, 1967,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문제」, 『중공권의 장래-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범문사, 9~11쪽

14) 김준엽, 1957. 9, 「중공국가체제의 성립」, 『사상계』 5-9, 305쪽

15) 정문상, 2009, 앞의 글, 248~249쪽

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 계몽이라는 수단을 통해 민족의 문화, 사회, 경제적 자강을 달성하려는 이념'으로 이해된다.¹⁶⁾ 한말 애국계몽운동과 1920년대 안창호 등의 문화적 민족주의자 등을 사상적 계보로 한 이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은 미국적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의 모델로 설정하고 교육과 계몽을 통해 '민족의 근대화'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반공주의적 성향에다가 문화적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었던 그에게 중국공산당 또는 그 독재정권은 '경계와 적대 그리고 투쟁의 대상'이었다. 그의 중국 인식은 그가 편집위원과 편집주간으로 재직했던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사상계』의 중국 관계에 관련한 각종 논설에도 투영되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사상계』에 게재된 중국 관계 논설은 번역문과 비교적 짧은 시사성 글이 주종을 이루었다. 가령, 칼 A. 위트포겔의 「중공의 강제노동」, C. M. 장의 「중공의 현실」, W. 라데진스키의 「중공의 농촌과 농민」 등 번역문과 홍승면의 「중공의 對자유진영 외교정책」 등의 논설이 있었으며, 그 밖에 대부분 「움직이는 세계」라는 題下의 시사 단편류 글들이었다.

위트포겔은 '중공'은 각종 국책사업에 형사범을 강제 노역시키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¹⁷⁾ W. 라데진스키는 '중공' 초기 토지개혁으로 일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증대시켰으나 급속하고 과도한 집단화 정책 때문에 생산량은 저하되고 마침내는 정체되었다고 비판하고 '중공'은 결국 농민들로부터 충성심을 획득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 전망했다.¹⁸⁾ 홍승면은 중공의 자유진영에 대한 외교정책의 기초는 對중공 군사포위망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화하려는, 즉 反美노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동맹국 간을 이간질하거나 '遠交近攻'이라는 전통적 외교술을 활용하여 아시아·아프리카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중공은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련에 비해 "더 전투적이고 공격적이

16) 김건우, 앞의 책, 61쪽

17) 칼 A. 위트포겔, 이시호 역, 1956. 11, 「중공의 강제노동」, 『사상계』 4-11, 226쪽

18) W. 라데진스키, 이시호 역, 1958. 3, 「중공의 농촌과 농민」, 『사상계』 6-3, 180~191쪽

며 비타협적”이라고 강조했다.¹⁹⁾

위트포겔이 강제노동 문제, 라데진스키가 농업 집단화 문제 그리고 홍승면이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C. M. 장은 좀 더 폭넓은 문제를 다루었다. 중국 공산주의와 전통의 상관성, 毛澤東 사상의 독창성,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관련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평화공존’ 외교노선의 본질 등이 그것이었다.²⁰⁾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체주의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 특히 유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유교를 비롯한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毛澤東 사상의 독창성으로 일컬어진 농민동원전략은 전통적인 집권방식이며 농민혁명사상은 레닌의 발명품에 불과하며, 신민주주의론 또한 1920~1930년대 코민테른 문헌의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毛澤東의 독창성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적지 않은 서양의 관측자들이 ‘중공’을 소련과 대등한 동료국가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소련의 지도를 받는 ‘위성국’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내건 ‘중립주의’ 또는 ‘평화공존’ 주장은 공산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자유세계, 특히 미국은 ‘중공’과 교역관계를 정상화하거나 그들의 유엔 가입을 허가하는 등 타협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전 아시아 정복을 지향하는 중공의 진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상계』의 논설들로 ‘중공’은, 농민을 동원하여 권력을 쟁취한 ‘전체주의 국가’,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소련의 위성국’, 중국의 문화적 전통과는 하등의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 파괴까지 서슴지 않는 ‘반문명적 국가’, 농업 집단화를 통해 농민의 생산의욕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까지 실시하는 ‘독재국가’, 평화공존과 중립주의를 내세워 反美를 통해 세계 공산주의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팽창주의 국가’ 등으로 규정되고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반공 냉전 이념에 입각한 중

19) 洪承勉, 1961. 9, 「중공의 對자유진영 외교정책」, 『사상계』 9-9, 119~124쪽

20) C. M. 장, 이시호 역, 1957. 3, 「중공의 현실」, 『사상계』 5-3

국관은 「움직이는 세계」라는 난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각종 노동과 정부정책에 동원되어 혹사당하고 있는 중학생’,²¹⁾ ‘곡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소총, 고무총, 돌팔매 등으로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있는 참새’,²²⁾ ‘마치 개미떼처럼 말없이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는 6억 인구’,²³⁾ ‘강제적인 인민공사회로 완전히 파괴된 가정생활’²⁴⁾ 등의 내용은 ‘중공’을 “괴상망측”하고 “狂症”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 형상화시키기에 충분했다.

Ⅲ. ‘중공’과 ‘중국’의 사이에서

『사상계』을 통해 표출되고 형성된 이른바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은 1960년대에 들어서도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위협세력이자 경계의 대상으로서 ‘중공’을 보는 시선이 강화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지식인 일각에서는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 거리를 두거나 그것에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는 다른 유형의 중국에 대한 시선도 출될 가능성을 보였던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중소논쟁과 미국발 ‘신중국관’, 그리고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을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가운데서 표출되었다.

중소논쟁은, 1956년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이른바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과 ‘평화공존론’을 주장하면서 ‘미국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

21) 편집자, 1956, 10, 「움직이는 세계: 혹사에 신음하는 중공학생들」, 『사상계』 4-10

22) 편집자, 1956, 11, 「움직이는 세계: 중공사회의 狂症」, 『사상계』 4-11

23) 편집자, 1958, 3, 「움직이는 세계: 點描東西」, 『사상계』 6-3

24) 편집자, 1958, 12, 「시사단편(공산세계단신): 중공의 농촌 콤포넌트」, 『사상계』 6-12

련과 중국은 대미정책과 세계 공산주의 혁명운동, 나아가서는 국경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갈등했다. 양국 사이의 논쟁과 갈등은 소련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기술적 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한층 격화되었다.

중소논쟁은 냉전체제의 변용과 종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이해된다.²⁵⁾ 냉전의 한 축인 공산권 내의 대립과 다극화를 가져온 중요 요인이었다는 것인데, 즉 중소논쟁은 내셔널리즘이 냉전 이데올로기와 긴장하며 점차 냉전 이데올로기를 압도해 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 미중화해의 가능성까지 예시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중소논쟁을 바라보며 한국 지식인들은 미중화해의 가능성까지는 전망하진 못했지만, 냉전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가령, 중소논쟁을 계기로 이제는 국제관계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거나,²⁶⁾ 전후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 속에 파묻혀 살아왔음을 반성해야 하며 이제 새로운 ‘드라이한 리얼리즘’에 입각한 정치풍토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었다.²⁷⁾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중공’이 아닌 ‘중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²⁸⁾ 냉전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중공’이라는 호칭 대신, 국제관계의 한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 중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간 한국 사회를 압도해 왔던 ‘반공 냉전적 중공 인식’을 문제 삼고 이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는 중소논쟁이 중소 대결 혹은 분열로 나아갈 것이라고까지는 전망하지 못했다. 비록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25) 管 英輝 編, 2010, 앞의 책, 21쪽.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한 1956년을 중소관계에서 분수령으로 이해한 관점에 대해서는 Qiang Zhai, 2010, 「深まる中ノ對立と世界秩序」, 管 英輝 編, 앞의 책 참고.

26) 金大洙, 1964, 10, 「중소논쟁과 統韓의 전망」, 『세대』 2-10

27) 편집자, 1965, 9, 「좌담회: 전후20년의 세계」, 『정경연구』 1-9, 195쪽

28) 편집자, 1965, 9, 위의 글, 151쪽

‘동일한 공산체제를 가진 양국 사이의 근소한 이념논쟁에 불과한 것’으로 언젠가는 타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⁹⁾ 이는, 대체로 당시 지식인들에게 중소 양국은 동일한 공산체제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중소논쟁이 중소관계에서 갖는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3월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에서 양국이 군사충돌을 하면서부터였다.

게다가 중소논쟁이 공산권 내의 대립과 다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소련과 이념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공’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나서기도 했다. 소련의 원조 중단 이후 ‘중공’은 급속한 경제건설로 자립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데, 이러한 자립화와 독자노선은 더욱 더 ‘위험’하다는 이해였다.³⁰⁾ 즉 경제적 자립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내적 결속력을 강화할 요량으로 다양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독자노선까지 추구함으로써 안으로는 毛澤東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밖으로는 중공 세력 권역을 극대화하는, 즉 강대한 ‘대중화 제국’을 건설하려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팽창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또 다른 중심으로 부상하고 더욱이 ‘대량살육의 무서운 핵이빨을 가진 진짜 공룡’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공’이기 때문에 더욱 “증오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렇듯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한국 사회를 압도했던 것은, 한국인의 독자적인 경험, 예컨대 예의 김준엽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적인 중국 체험이나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체험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소련과 함께 냉전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의 대중정책 또는 인식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은 중공 정권을 “비합법적 과도적 존재”이자 “침략적 팽창주의적이며 소련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 공산주의의 일부”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중공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외교적·정치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기타 수단을

29) 李基鐸, 1973, 2, 「중소분쟁과 남북한 관계」, 『신동아』 102, 121쪽

30) 김명배, 1966, 3, 「모택동의 세계혁명노선」, 『신동아』 19

동원하여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는 파멸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³¹⁾ 이러한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중소논쟁과 대립을 계기로 소련보다 중공이 더 호전적이라는 판단 아래 더욱 강화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 내부에서 기존의 대중정책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중정책은 1966년 3월 8일부터 30일에 걸쳐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서 논의된 대중정책과 인식은 곧장 한국 지식인 사회에 소개되었다.³²⁾ 사실 청문회에서 신중국관만이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도 참여하여 “계속적인 봉쇄와 고립화 정책의 추진”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세는 기존 정부의 대중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대중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한 중국 전문가는 도크 바네트(콜럼비아대학), 존 K. 페어뱅크(하버드대학), 한스 J. 모겐소(시카고대학), 로버트 A. 스칼라피노(캘리포니아대학) 등 교수였다. 학자마다 강조점 또는 강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중공의 호전적인 언동은 실제 침략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욕구불만에 따른 것이다. 둘째, 중공은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 군사적으로 ‘중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대약진’에 따르는 후퇴로부터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현재 팽창주의적이지만 행동은 신중하며 통설과는 달리 그 수뇌부는 핵전쟁의 위협을 숙지하고 있고 미국의 핵공격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넷째, 중공은 혁명을 수출할 수 없으며, 林彪조차 월

31) 김영준, 1971. 6, 「죽의 장막을 깨뜨린 탁구공의 파장-미중공접근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대』 9-6, 136쪽

32) 서동구, 1965. 9, 「전후 후기의 최대 '이슈' 미·중공 관계-A, 토인비의 협상론을 중심으로」, 『세대』 3-9; 편집자, 1966. 5, 「특집: 도전하는 붉은 대륙-미국의 대중공정책논쟁」, 『신동아』 21 등 참고. 본문에서 다룬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의 내용은 후자의 논설에 따랐다.

남 민족해방전선을 지지할지 주저하고 있으며 월맹에 장기투쟁을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중공의 외교정책의 기초는 ‘毛澤東 主席’ 생존 기간 중 큰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권력 상층부에 제3세대가 진입하면 유연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미국은 중공이 거부해 온 유엔 가입, 외교승인, 금수완화, 접촉확대 등을 권고하는 “고립 없는 봉쇄”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청문회 참가자들은, 기존 미국의 중공 정책은 중공 지도부의 의지를 정확히 읽지도 못한 채 중공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데 입각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외교정책은 毛澤東 사후 유연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기존의 ‘감정에 치우친’ 중공 인식에서 벗어나 ‘이성적·현실적’으로 중공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공을 대륙의 실제적인 지배정권으로 인정하는 ‘두 개의 중국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타협과 협조, 그리고 교류를 진행하는 ‘고립 없는 봉쇄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도미노이론’에 기반한 기존의 ‘봉쇄정책’을 비판하고 온건하며 타협적이고 현실적인 대중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대중정책과 중국관은 “미국인 일반의 중공관을 ‘敵視’로부터 ‘正視’로 돌려놓게 된 계기”였다고 평가³³⁾될 정도로 기존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도 컸지만,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압도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 미친 충격은 컸다. 그 충격의 강도는 대중정책과 신중국관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중공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 호전성과 침략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나라들(특히 미국-인용자)의 시각’은 “결국 어리석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중공을 규탄하고 견제함에 추호의 弛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³⁴⁾

그럼에도 지식인 일각에서는 기존의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을 재고할 필

33) 편집자, 1966. 5, 「특집: 도전하는 붉은 대륙-미국의 대중공정정책논쟁」, 『신동아』 21, 138쪽

34) 양홍모, 1966. 5, 「현대 중공의 내막-대외정책과 군사면을 중심으로」, 『세대』 4-5, 278쪽

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네트 교수가 제안한 ‘두 개의 중국론’이 미국의 공식적인 대중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강조한 논설에서 그와 같은 입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논자는 기존의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한국 독자적인 입장에서 “(두 개의 중국론의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³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 한국 사회의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논설이 등장하여 주목된다. 중국 역사학자 민두기가 ‘공산중국’을 ‘일종의 근대화’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³⁶⁾ 그는 ‘공산중국’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정치학적 또는 정치사적 관찰에 치우쳐 있는 현실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공산화 과정을 이해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5·4운동 이후 중국 사회에서 이른바 ‘자유주의적 관심’이 대두되었지만 이를 적극 발전시켜야 할 중국국민당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결국 ‘사회주의적 관심’을 계승한 중국공산당의 공산화에 길을 내주었다고 보았다. 게다가 중국 국민당은 농민문제,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국가적 독립과 공업화를 지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토지개혁과 신혼인법 등을 통해 “농민의 자기표현욕구와 에너지를” 계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공산화는 국민당의 적극성과 실천성의 결여에 따른 결과였으며, 중국 근대화의 과제는 중국공산당에게 넘겨졌다는 주장이었다.

민두기의 이와 같은 시각은 기존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에 따르면, 중국의 공산화는 ‘소련의 음모, 일

35) 조정자, 1966. 6, 「두개의 중국론 - 역사적 배경과 문제의 초점」, 『정경연구』 2-6, 141쪽

36) 민두기, 1966. 7, 「특집 중공연구의 신전개: 亞 植民地와 近代化 - 共産中國에의 노선소요를 중심으로」, 『세대』 4-7

본의 중국 침략, 그리고 미국의 대중정책’의 산물일 뿐 결코 민족주의적이지도 그리고 민주주의적이지도 않았다. 공산화는 근대화 달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오히려 공산화는 근대화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민두기는 ‘중국의 공산화는 근대화의 또 다른 길’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은 ‘(중국적) 근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민두기 식의 발상이 제기될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첫째, 앞선 논의의 연장선상에 보면, 이는 냉전질서의 변동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기존 냉전질서는 변동되기 시작했다.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 중소논쟁이 전개됨으로써 공산권 내의 대립과 다극화가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긴장, 대립해 가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문제가 지식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사고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 중반 미국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중국 정책과 중국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 기존의 ‘봉쇄정책’에서 벗어난 온건하고 타협적이며 현실적인 대중정책이 모색되고 있었다.

둘째, 좀 더 직접적으로는 민두기로 대변된 지식인들의 냉전 경험과 관련해서도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 근대화론에 대한 그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근대화론은 미소 냉전 대립의 확산에 직면하여 미국에서 만들어낸, ‘계급혁명 없이도 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발전논리였다.³⁷⁾ 근대화론은 미국의 對韓 문화정책, 즉 ‘냉전문화정치’³⁸⁾에 따라 미공보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립재단의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을 통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으며, 이후 근대화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한국 근대화의 방향 설정과 방법 등을 둘러싸고 지식인 사회의 주요 논쟁거리

37) 박영재, 1994. 6,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인문학」, 『인문과학』 제71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8쪽

38) ‘냉전문화정치(Cold War Cultural Politics)’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일준, 2003,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 만들기」,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1~22쪽 참고.

로 부상했다. 근대화를 ‘정치적·사회적 민주체제의 수립과 경제적 공업화의 달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한 점에서는 대동소이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 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을 만들어낸 지식인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은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근대화 과정을 ‘서구화’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후진적인 전통 중국 사회’가 공업화를 달성하고 서구적 가치를 수용해 가는 과정이 중국의 근대화였으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그러한 근대화로부터 이탈하고 말았다고 파악한 것이었다.

반면 민두기는 근대화를 ‘전통’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전통’에서 근대국가 수립의 논리와 그것을 추진해갈 주체를 찾고자 했다. 청대의 ‘封建論’과 ‘紳士層’에 주목한 그의 중국 근대사 연구는 그의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에게 중국의 근대화란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전통의 근대적 변모과정이었다.³⁹⁾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에 대한 그의 강조는, 중국의 근대화를 근대역사의 내적 발전에 따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의 주체적인 활동상을 보고자 했던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⁴⁰⁾ 따라서 ‘공산화’는 중국인들의 근 100여 년에 걸친 지난한 근대화 추구의 결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 인식의 양상을 살피는 데 문혁 또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문혁은 기존의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을 한층 강화시킨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다른 유형의 중국 인식을 출현시킨 또 다른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월간지에서는 애초 문혁을 사상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보도했지만,⁴¹⁾ 彭眞이 北京市長에

39) 鄭文祥, 2004, 6, 「閔斗基教授(1932~2000)의中國近現代史研究とその歴史像」, 『近きに在いて』 第44・45合併號

40) 鄭在書, 1999, 「實證의 彼岸과 中國學의 未來: 閔斗基 教授와의 特別對談」, 『東아시아研究 - 글쓰기에서 談論까지』, 살림, 271~272쪽

41) 문혁은 지식인을 毛澤東 사상에 귀일시키려는 지식인 개조운동이라고 본 논설이

서 해임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혁의 본질은 권력투쟁에 있다고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彭眞의 해임은 毛澤東 후계 문제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시작이며,⁴²⁾ 사상문화운동의 본질은 권력투쟁에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인 1인 독재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숙청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논설들이 등장한 것이었다.⁴³⁾ 문혁을 다룬 대부분의 논설들은 이러한 권력투쟁론에 입각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논설이 공통적으로 권력투쟁을 ‘비정상적’·‘비현실적’·‘비합리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毛澤東·林彪獨裁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혁은 ‘어느 전제적 지배자나 독재정권도 감히 하지 못한 완전히 인간의 常軌에서 벗어난 당돌하고 엉뚱한’ 시도라는 주장이었는데, ‘常軌를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란 바로 홍위병운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⁴⁴⁾ 15~16세부터 20세를 전후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홍위병은 ‘어린 이리떼처럼’ 길거리를 몰려다니며 ‘청초 말 광선적인 의화단사건을 방불케 하는’ 맹목적 배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는 물론 전통 문화까지 모조리 말살하는 횡포한 난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毛澤東과 林彪가 자신의 반대파의 기반을 일거에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광적이리만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홍위병운동을 적극 동원하고 있다는 관찰과 분석이었다.

권력투쟁에 홍위병이 동원됨으로써 국내적으로 각종 유혈투쟁이 격화되고 정국은 혼란에 빠져 내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국제적으로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도 ‘미치광이 국가’로 비난되기

대표적이었다. 오종식, 1966. 6, 「중국, 중국인, 중국풍토 - 중공의 문화인 숙청을 중심으로」, 『정경연구』 2-6, 106쪽; 이윤중, 1966. 6, 「중공의 지식인 개조정책 - 모택동사상과 지식인의 의식구조」, 『정경연구』 2-6, 161쪽 등 참고.

42) 편집자, 1966. 7, 「세계의 테라스: 심각한 중공의 ‘정풍」, 『세대』 4-7

43) 양홍모, 1966. 7, 「중공연구의 신전개: 정풍운동의 배경과 성격」, 『세대』 4-7, 292쪽

44) 팽원순, 1966. 10, 「중공 홍위병 광풍의 배후 - 모택동 · 임표독재체제를 위한 쿠데타」, 『신동아』 26; 길현익, 1967. 2, 「중공내분과 홍위병운동의 성격 - 표면화한 反毛 · 親毛의 권력투쟁」, 『신동아』 30 등 참고.

에 이르렀다고 이해되었다.⁴⁵⁾ 내란으로 치달으면서 외교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까지 놓인 '중공'은 위협의 대상이기도 했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중공은 홍위병의 맹목적 배외운동을 제지하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성에 따라 통제되지 않은 홍위병의 저돌적인 외교적 모험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더욱이 문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중공은 가히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⁴⁶⁾ 중공의 석유공업의 발전상을 분석한 논자의 경우에도 군사적인 면에서 석유공업이 가지는 의미와 잠재력에 “예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⁴⁷⁾

이상과 같은 문혁 관련 논설들은 ‘비정상적·비합리적 권력투쟁’을 일삼는 중공, ‘혼란되고 파국으로 치달는’ 중공, 그리고 ‘저돌적이고 호전적이며 위협적인’ 중공이라는 이미지를 형성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중공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중공 인식을 재생산시키면서 기존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문혁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비정상적인 권력투쟁’으로만 비쳐지지 않았다. 비록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조선일보』는 일시적이긴 하나 문혁을 ‘비정상적인 권력투쟁’이 아니라, ‘연안 정풍운동에 기원을 둔, 사회주의 건설 단계로 넘어가려는 사상적 개혁운동’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⁴⁸⁾ 모든 일간지들에서 문혁을 권력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비정상성을 홍위병운동과 함께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당시의 언론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⁴⁹⁾ 『조선일보』가 취했던 태도는 이례적이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문혁

45) 편집자, 1967. 9, 「세계의 조류: 격동하는 중공의 문화혁명」, 『정경연구』 3-9, 108쪽; 박무승, 1967. 11, 「중공 문화대혁명과 毛사상」, 『정경연구』 3-11, 208쪽 등 참고.

46) 편집자, 1967. 2, 「세계의 테라스: 중공의 제5차 핵실험」, 『세대』 5-2; 편집자, 1967. 8, 「세계의 테라스: 중공 최초의 수폭실험」, 『세대』 5-8 등

47) 안경준, 1969. 5, 「중공의 잠재력-석유공업의 발전상을 중심으로」, 『세대』 7-5, 141쪽

48) 정문상, 2007, 앞의 글, 53~54쪽

49) 정문상, 2010, 앞의 글, 112~118쪽

에 대한 시선은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정치부기자와 외신부장으로 재직했던 리영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도 보았듯이 그는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중공’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문제 삼을 만큼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에 비판적이었다. 리영희는 장을 바꾸어 후술하듯이 1970년대에 들어 자신의 문혁관, 즉 ‘인간혁명으로서의 문혁관’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면서 문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류 시선과는 다른 유형의 시선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IV. 미중 화해와 ‘이상적 중국 인식’

1960년대 말·1970년대 국제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논자들은, 1970년대의 국제질서는 기존의 ‘미소 양극체제’에서 ‘다원적 국제질서’, ‘다극체제’, ‘다극적 균형체제’, ‘미·일·중공 삼각체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동을 가져온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화해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월남전쟁에서의 실패에 따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위의 급격한 감소와 국내 반전론의 확산,⁵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부상 등으로 기존 대중 봉쇄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중국은 문혁 종결 후 周恩來의 온건한 대외정책이 부활되는 가운데 미소 양국과의 양면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의 화해가 추구되고 있었던 국내외적 사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었다.⁵¹⁾ 중국의 부상과 미중 화해로 기존 동아시아 질서는 큰 변화를 맞게 되어 기존 냉전체제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에 중국과 일본이 가세된, ‘미·일·중공 삼각체제’ 또는 ‘다극체제’

50) 편집자, 1971, 8, 「특집 오늘의 동아시아: 토론, 동아시아정치 재편성과 전망」, 『정경연구』 7-8, 106쪽

51) 이러한 분석은 고승균, 1971, 4, 「미·중공 관계 호전의 안팎-세계정치의 중점 주변」, 『정경연구』 7-4 참고.

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논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에 대해, ‘전후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에 진입했으며……(이는) 냉전구조가 아닌 긴장완화 구조이며 상호견제에 의한 세력균형의 구조가 형성되었다’⁵²⁾고 평가하거나, ‘미소 양극화와 이념적 분립에 근거한 냉전시대는 종언을 고했으며 이제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등⁵³⁾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바야흐로 화해와 긴장완화 그리고 세력균형에 의한 새로운 시대, 즉 전후 냉전체제의 종결과 ‘탈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판단이었다.

1970년대의 ‘탈냉전’ 시대의 도래를 촉발시킨 미중 화해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예견된 사안은 아니었던 듯하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중 화해에 지식인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익을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대했던 국가와 화해를 추구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냉정한’ 강대국의 모습에 적잖이 당혹했다. “세계정치 속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⁵⁴⁾거나, “열강정치의 비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⁵⁵⁾라는 언급에서 당시 지식인들이 느꼈을 당혹감을 짐작할 수 있다. 적대국 ‘중공’과 화해하고 탈냉전 시대를 열어가는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친화적 인식에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에서 ‘중공은 평화주의자라거나 비팽창주의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인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나,⁵⁶⁾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중국 붐’과 일본의 친중공적 접근을 “놀라운 일”이라며 이들은 “진흙구렁을 가까이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에게 준다며⁵⁷⁾ 불편한 속내를 표출하기도 했

52) 홍승면, 1972. 5, 「상해공동성명과 새 세계질서」, 『신동아』 93, 57쪽

53) 노명준, 1975. 1, 「동북아 세력균형과 포드방한-70년대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평화」, 『세대』 13-1, 148쪽

54) 최중기, 1971. 12, 「세계정치와 세계기구」, 『신동아』 88

55) 홍승면, 1972. 5, 앞의 글, 65쪽

56) 편집자, 1972. 4, 「좌담회: 닉슨의 중공방문 이후」, 『신동아』 92, 77·79쪽

57) 조좌호, 1972. 4, 「중국의 민족과 문화」, 『신동아』 92, 87쪽

던 것이다.

그럼에도 미중 화해와 그에 동반한 탈냉전적 국제환경의 조성은 과거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중국 관심과 인식을 본격적으로 표출 시키기에 충분했다. 먼저 1960년대부터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 거리를 유지해온 지식인의 논설이 지속되었다. 가령 민두기의 경우 중국 공산주의 운동은 중국의 전통을 파괴하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역설했으며,⁵⁸⁾ 합동통신사 외신부장이었던 리영희는, ‘중공’을 대신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중국을 국제관계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중국의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일컫는 고립주의는 미국의 대중공공 ‘포위, 고립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 중국 스스로 고립주의를 자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고립정책에 대해 중국은 낙관주의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⁵⁹⁾

1960년대부터 활동한 지식인 이외에도, 1970년대에 들어 새로운 시각과 내용의 중국 관계 논설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공’을 근대화의 한 유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과 분석이 제시되었다. 가령, 중공을 근대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꽤 중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되는가 하면,⁶⁰⁾ ‘중공 성장기를 기존 정치적 편견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으로 그 내면적 발전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통한 근대

58) 편집자, 1971, 12, 「좌담: 모택동과 중국의 전통」, 『신동아』 88에서 민두기는, ‘중공’은 전통을 부정, 파괴 그리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본 양호민에 대해, ‘중공’의 제반 현상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적 사고양식의 테두리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중공’과 전통의 깊은 관계를 강조했다. 민두기의 이러한 입장은 피터 J. 오피츠와의 대담에서 또다시 강조되었다. 피터 J. 오피츠와 민두기의 대담에 대해서는 편집자, 1973, 4, 「대담: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전개」, 『신동아』 104 참고.

59) 리영희, 1971, 1, 「특집 중공정치의 인식문제: 세계문제로서의 중공의 국제관계를 논함」, 『정경연구』 7-1 참고.

60) 편집자, 1976, 12, 「대담: 특집 천하대란 속의 중공, 중공연구의 허실」, 『신동아』 148, 126쪽

화의 실현에 있었으며 중국공산당의 권력 장악은 근대화 과제 실현의 한 유형이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던 것이다.⁶¹⁾

둘째, 臺灣 호칭에 대한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에서는 臺灣을 ‘自由中國’으로 호칭하면서 ‘중공’과 대비시켰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自由中國 臺灣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중공’을 중국 대륙의 실제적 지배자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臺灣을 더 이상 자유중국이라 부를 수는 없었다. ‘이제 자유중국이라는 국호 대신 臺灣 또는 臺灣의인 국가 또는 중국의 자치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예견한 논설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⁶²⁾ ‘중공’을 대신한 ‘중국’이라는 호칭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수용되면서 臺灣을 더 이상 자유중국으로 부를 수 없는 현실이 도래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셋째,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압도된 상황에서는 다루어지거나 발표되지 않았던 다양한 중국 관계 논설이 등장했다. 예컨대 증소논쟁은 ‘단순한 지도자 또는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증소 간 판이한 사회제도, 가치체제, 맑스 혁명의 의미, 공산주의 자체의 의미에 대한 완전히 판이한 이해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⁶³⁾ ‘毛澤東과 林彪 등 문혁지도자들의 대외정책은 결코 호전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는 분석,⁶⁴⁾ ‘문혁은 사상혁명을 증시한 毛澤東이 인류가 일찍이 보지 못한 일대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⁶⁵⁾ ‘중공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만주로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다’는 지적⁶⁶⁾ 등이 그것이었다.

61) 이성근, 1971. 1, 「특집 중공정치의 인식문제: 중국공산당의 생성과 생성과정의 사적배경」, 『정경연구』 7-1 참고.

62) 편집자, 1974. 2, 「中國問題 六十問 六十答」, 『신동아』 114, 235쪽

63) 스텐리 스펙터, 1976. 1, 「증소분쟁과 아시아의 세력 균형」, 『신동아』 137

64) 김영희, 1970. 4, 「미·중공 대사회담136차의 비밀」, 『세대』 8-4

65) 리영희, 1973. 7,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세대』 11-7

66) 신승권, 1976. 2, 「증소분쟁과 외교적 딜레마」, 『세대』 14-2

게다가 毛澤東은 ‘중공의 분열과 끊임없는 정치항쟁, 그리고 혼란이라는 유산을 남긴 지도자’였지만 ‘농민혁명을 이끈 혁명가이자 20세기 위대한 도덕가, 반골정신의 소유자, 효율적이고 결백한 정부를 창출하고 중국을 세계대국으로 도약시킨 자’이기도 했다는 논설이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⁶⁷⁾ ‘반공 냉전적 중공 인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상과 같은 논설들이 1970년을 넘어서면서 월간지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달라진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냉전체제의 이완에 동반되어 한국인의 새로운 중국 인식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이상과 같은 논설 가운데서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 대조적인 유형의 중국 인식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은 리영희의 문혁론이 아닐까 싶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이미 1960년대 문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주류적인 문혁 이해와 인식과는 다른 문혁론의 일단을 『조선일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문혁에 대한 논설을 쓰면서 자신의 문혁론을 제시했으며, 그에 따라 그 나름의 중국 인식을 생산해 내었다.

문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류적 시선과는 달리 그는 문혁을 ‘인간혁명’의 시도로 높게 평가했다. “毛澤東이 맑스, 레닌, 스탈린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적 혁명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사상)혁명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인간의 관념을 혁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⁶⁸⁾라고 한 그의 지적에서, 그가 문혁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 할 수 있다. 문혁의 핵심을 ‘인간혁명’으로 보았던 것인데, 그것은 ‘철저한 평등, 우애, 동지애, 자기희생, 전체에의 봉사, 극단적인 절약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도덕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시도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를 자본주의 인간형은 물론 소련의 사회주의 인간형과도 다른 제3의

67) 마크 게인, 1976, 12, 「모택동의 영광과 비극」, 『세대』 14-12

68) 리영희, 2006, 「모택동의 교육사상(1976)」, 『리영희저작집2: 우상과 이성』, 한길사, 152쪽. 이하 문혁에 대한 리영희의 논지는 이 글에 따랐다.

인간형 창출을 지향한 대실험이라고까지 높게 평가했다.

인간혁명으로 간주된 그의 문혁론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권력투쟁’을 일삼으며 ‘파국으로 치닫는 호전적이며 위협적인 중공’이라는 이미지는 없다. ‘반문명적이며 팽창주의적인 중공’이라는 이미지가 자리를 차지할 여지는 더더욱 없다. 오히려 인류의 제3의 대안이라거나 또는 한국 사회의 개혁의 모델이라는 이미지가 선명히 부각되었다. 사실 그가 이해하고 그려낸 이러한 문혁상은 문혁의 전체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비록 자본주의와 소련 사회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사회를 모색한다는 명분이 내걸렸지만, 문혁 진행 과정에서 그 이상과 목표는 굴절되고 변질되었으며 급기야는 파국으로 치달고만 현실을 그의 문혁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문혁상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리 만치 이상화”⁶⁹⁾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의 중국 인식은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압도했던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는 상반된 유형, 즉 ‘이상화된 중국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중국 인식은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미국이 주도한 냉전체제 아래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한 체제지향적인 지식인의 사회의식과 중국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상적 중국 인식’은 체제 비판적 지식인의 사회의식과 중국 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점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주지하듯이 리영희는 1970~1980년대 냉전과 반공 이념, 그리고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비판적 활동을 왕성히 전개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사상의 은사’ 혹은 ‘의식화의 원흉’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을 만큼 그의 활동력은 왕성했다. 그의 활동력이 왕성했던 만큼 그가 겪어야 했던 고충도 만만치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중국, 또는 문혁에 주목했던 것은 한국 사회를 압도했던 냉전과 반공 이념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 주도한 경제개발 우선주의, 즉 근대화가 초래한 도덕과 윤리의 타락,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의 출

69) 리영희·김동춘 대담, 1995, 「리영희-냉전이데올로기의 우상에 맞선 필봉」, 『역사비평』 29, 197쪽

현 등을 비판하고 되돌아보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실천적인 지적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그의 ‘이상적 중국 인식’은 냉전체제는 물론 권위주의 정부의 근대화 추진으로 초래된 사회 문화적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 즉 탈냉전적 지적 활동의 소산이었다는 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이 글은 냉전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추이를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창간 또는 복간된 유력한 월간지 『사상계』, 『신동아』, 『세대』, 『정경연구』 등에 게재된 중국 관계 논설의 내용을 검토했다. 국제정치,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국 전문 연구자와 각 신문의사의 외신부 기자들은 이들 월간지에 다양한 내용의 중국 관계 논설들을 쏟아냄으로써 관련 지식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사회에 유통, 확산시켰다. 따라서 이들 월간지의 중국 관계 논설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분석은 냉전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추이를 해명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인의 냉전기 중국 인식의 원형, 즉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형성된 데에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 미국이 주도한 냉전체제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抗美援朝’를 명분으로 한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전은 한국인에게 적성국 이전에 ‘침략자’, ‘팽창주의자’로 중국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경험했던, 특히 미소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중국 인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은 ‘죽의 장막’에 가려진 ‘적성국’이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가 있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중공”이라는 호칭이 통용되었다. “중공”이라는 호칭은 ‘반공 냉전형 중공 인

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지 않을 수 없다.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걸쳐 한국 지식인 사회의 중요 공론장으로 기능했던 『사상계』의 중국 관계 논설에 잘 드러나 있다. 각종 번역문과 논설들을 통해 『사상계』는 '중공'을 '전체주의, 소련의 위성국, 반전통적 반문명, 1인 독재, 호전적 팽창주의' 등 공산국가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인식은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은 문혁이 발생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혁이 발생하자 한국의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에서는 '비정상적 권력투쟁'으로 문혁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특히 홍위병운동을 '비이성적·반문명적·폭력적·호전적 난동'으로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분석함으로써 중공에 대한 기존의 부정성을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이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이었다 하더라도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 이에 대한 거리두기와 비판적 접근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중소논쟁이 전개되고 미국발 신중국관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면서, 일부 지식인 사이에는 국제관계를 보는 데 '이데올로기의 속박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거나 중국 연구는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중공'을 대신하여 '중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공산중국'의 수립은 '근대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문혁에 대한 반응에서도 나타났다. 문혁을 '사상 개혁운동'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는 미중 화해에 따른 동아시아 냉전구도의 변동과 동반되어 이른바 '탈냉전적 중국 관심과 연구'들이 한층 더 활발해져 갔다. 중국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근대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었으며, 臺灣을 더 이상 자유중국으로 호칭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소분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기도 했고 毛澤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반공 냉전형 중공 인식’과는 유형을 달리한 중국 인식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그것은 문혁을 ‘인간혁명’으로 보면서 형성된 이른바 ‘이상화된 중국 인식’이었다. ‘이상화된 중국 인식’에서는 중국은 ‘경계와 적대, 그리고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개혁의 모델이자 제3의 인류문명을 창조해 가는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문혁은 물론 중국을 이상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복잡다단한 문혁의 실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중국의 실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상화된 중국 인식’이 냉전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의 중국 인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냉전과 반공이념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추구된 경제개발우선주의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실천적 지식인의 중국 인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다.

탈냉전적 동아시아관계-특히 한중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각국의 냉전경험(또는 냉전문화)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때, 각국에서 전개된 바 있는 냉전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그로부터 형성된 자타인식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은 심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에서 분석되었듯이 동아시아 냉전 구도의 변동과 동반되어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표출된, 즉 ‘이상적 중국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수위의 ‘탈냉전적 중국 관심과 문제의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탈냉전적 한중관계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적 자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사상계』 중국 관련 논설

- C. M. 장, 이시호 역, 1957. 3, 「중공의 현실」, 『사상계』 5-3
 CHANG KUO-SIN, 1955. 9, 「소위 중공의 지적 자유」, 『사상계』 3-9
 W. 라데진스키, 이시호 역, 1958. 3, 「중공의 농촌과 농민」, 『사상계』 6-3
 김준엽, 1957. 9, 「중공국가체제의 성립」, 『사상계』 5-9
 김준엽, 1957. 12, 「중공의 인민지배체제」(하), 『사상계』 5-12
 류소당, 김광주 번역, 1953. 6, 「중공권내의 지식인」, 『사상계』 1-3
 마야크 데니안, 민석홍 번역, 1953. 8, 「중공의 종교정책」, 『사상계』 1-5
 어어네스트 A. 그로스, 1954. 6, 「중공승인반대의 논거」, 『사상계』 2-4
 칼 A. 윌트포겔, 이시호 역, 1956. 11, 「중공의 강제노동」, 『사상계』 4-11
 편집자, 1956. 10, 「움직이는 세계: 흑사에 신임하는 중공학생들」, 『사상계』 4-10
 편집자, 1956. 11, 「움직이는 세계: 중공사회의狂症」, 『사상계』 4-11
 편집자, 1958. 3, 「움직이는 세계: 點描東西」, 『사상계』 6-3
 편집자, 1958. 12, 「시사단편(공산세계단신): 중공의 농촌 콤플렉스」, 『사상계』 6-12
 洪承勉, 1961. 9, 「중공의 對자유진영 외교정책」, 『사상계』 9-9

2. 『신동아』 중국 관계 논설

- 길현익, 1967. 2, 「중공내분과 홍위병운동의 성격-표면화한 反毛·親毛의 권력투쟁」,
 『신동아』 30
 김영배, 1966. 3, 「모택동의 세계혁명노선」, 『신동아』 19
 스텐리 스펙터, 1976. 1, 「중소분쟁과 아시아의 세력 균형」, 『신동아』 137
 李基鐸, 1973. 2, 「중소분쟁과 남북한 관계」, 『신동아』 102
 조좌호, 1972. 4, 「중국의 민족과 문화」, 『신동아』 92
 최중기, 1971. 12, 「세계정치와 세계기구」, 『신동아』 88
 팽원순, 1966. 10, 「중공 홍위병 광풍의 배후-모택동·임표독재체제를 위한 쿠데타」,
 『신동아』 26
 편집자, 1966. 5, 「특집: 도전하는 붉은 대륙-미국의 대중공정책논쟁」, 『신동아』 21
 편집자, 1971. 12, 「좌담: 모택동과 중국의 전통」, 『신동아』 88
 편집자, 1972. 4, 「좌담회: 닉슨의 중공방문 이후」, 『신동아』 92

- 편집자, 1973. 4, 「대담: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전개」, 『신동아』 104
- 편집자, 1974. 2, 「中國問題 六十問 六十答」, 『신동아』 114
- 편집자, 1976. 12, 「대담: 특집 천하대란 속의 중공. 중공연구의 허실」, 『신동아』 148
- 홍승면, 1972. 5, 「상해공동성명과 새 세계질서」, 『신동아』 93

3. 『세대』 중국 관계 논설

- 金大洙, 1964. 10, 「중소논쟁과 統韓의 전망」, 『세대』 2-10
- 김영준, 1971. 6, 「죽의 장막을 깨뜨린 탁구공의 파장」, 『세대』 9-6
- 김영희, 1970. 4, 「미·중공 대사회담136차의 비밀」, 『세대』 8-4
- 노명준, 1975. 1, 「동북아 세력균형과 포드방한-70년대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평화」, 『세대』 13-1
- 리영희, 1973. 7,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세대』 11-7
- 마크 계인, 1976. 12, 「모택동의 영광과 비극」, 『세대』 14-12
- 민두기, 1966. 7, 「특집 중공연구의 신전개: 亞 植民地와 近代化」, 『세대』 4-7
- 서동구, 1965. 9, 「전후 후기의 최대 '이슈' 미·중공 관계」, 『세대』 3-9
- 신승권, 1976. 2, 「중소분쟁과 외교적 딜레마」, 『세대』 14-2
- 안경준, 1969. 5, 「중공의 잠재력-석유공업의 발전상을 중심으로」, 『세대』 7-5
- 양홍모, 1966. 5, 「현대 중공의 내막-대외정책과 군사면을 중심으로」, 『세대』 4-5
- 양홍모, 1966. 7, 「중공연구의 신전개: 정풍운동의 배경과 성격」, 『세대』 4-7
- 편집자, 1966. 7, 「세계의 테라스: 심각한 중공의 '정풍」, 『세대』 4-7
- 편집자, 1967. 2, 「세계의 테라스: 중공의 제5차 핵실험」, 『세대』 5-2
- 편집자, 1967. 8, 「세계의 테라스: 중공 최초의 수폭실험」, 『세대』 5-8

4. 『정경연구』 중국 관계 논설

- 고승균, 1971. 4, 「미·중공 관계 호전의 안팎-세계정치의 중점 주변」, 『정경연구』 7-4
- 리영희, 1971. 1, 「특집 중공정치의 인식문제: 세계문제로서의 중공의 국제관계를 논함」, 『정경연구』 7-1
- 박무승, 1967. 11, 「중공 문화대혁명과 毛사상」, 『정경연구』 3-11
- 오종식, 1966. 6, 「중국, 중국인, 중국풍토-중공의 문화인 숙청을 중심으로」, 『정경연구』 2-6

- 魏道明, 1966. 7, 「아세아의 세력균형과 중공」, 『정경연구』 2-7
- 이성근, 1971. 1, 「특집 중공정치의 인식문제: 중국공산당의 생성과 생성과정의 사적배경」, 『정경연구』 7-1
- 이윤중, 1966. 6, 「중공의 지식인 개조정책-모택동사상과 지식인의 의식구조」, 『정경연구』 2-6
- 조정자, 1966. 6, 「두개의 중국론-역사적 배경과 문제의 초점」, 『정경연구』 2-6
- 편집자, 1965. 9, 「좌담회: 전후20년의 세계」, 『정경연구』 1-9
- 편집자, 1966. 6, 「세계의 조류: 對中共緩和政策은 백해무익하다」, 『정경연구』 2-6
- 편집자, 1967. 9, 「세계의 조류: 격동하는 중공의 문화혁명」, 『정경연구』 3-9
- 편집자, 1971. 8, 「특집 오늘의 동아시아: 토론, 동아시아정치의 재편성과 전망」, 『정경연구』 7-8

5. 단행본

- 管英輝, 2010, 『冷戰史の再檢討』, 法政大學出版局
-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사
- 김민환, 1997,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 김준엽, 1958, 『중국공산당사』, 思想界社
- 이시카와 쇼지 · 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 2008, 『끝나지 않은 20세기』, 역사비평사

6. 논문

- 김준엽, 1967,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문제」, 『중공권의 장래-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범문사
- 민두기, 1986, 「韓國에서 中國現代史研究」, 『近きに在りて』 10
- 박영재, 1994. 6,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인문학」, 『인문과학』 제71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윤남한, 1975, 「동양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68
- 이경란, 2010, 「1950-60년대 초반의 잡지와 지식인-사회운동 관계망」, 『1950-60년대 동아시아 지식·지식장의 재구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사업단 제11차 사회인문학 포럼
- 이종원, 1999,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좌표와 전망」,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일』, 건국대학교출판부

鄭文祥, 2004, 6, 「閔斗基教授(1932-2000)の中國近現代史研究とその歴史像」, 『近きに在りて』 44·45

정문상, 2007,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중국 문화대혁명 이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13집

정문상, 2009, 「김준엽의 근현대 중국론과 동아시아 냉전」, 『역사비평』 87

정문상, 2010, 「한국의 냉전문화의 형성과 문화대혁명」, 『중국근현대사연구』 48

정일준, 2003,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 만들기」,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鄭在書, 1999, 「實證의 彼岸과 中國學의 未來: 閔斗基 教授와의 特別對談」, 『東아시아研究—글쓰기에서 談論까지』, 살림

[ABSTRACT]

Between ‘Communist China’ and ‘China’ – The Transition of Korean Perception of China during the Cold War Era

Chung, Moonsang

This article reviewed the articles on China published in major general magazines between 1950s and 1970s such as 『*Sasanggye*』, 『*Shindonga*』, 『*Sedae*』, and 『*Junggyung Yeongoo*』. Based on the review, this article tried to track Korean’s perception on China during the Cold War. The original form of perception on China during the Cold War, which is ‘anti-communist perception on China’ was formed because of Korean War and the Cold War system led by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re was an official nam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ommunist China” was widely used in Korean society. This name is an example that most clearly symbolizes the ‘anti-communist perception on China’.

The ‘anti-communist perception on China’ is well presented in Sasanggye’s China related articles. ‘The communist China’ here was considered as communist country such as ‘totalitarianism, Soviet Union’s satellite nation, anti-traditional semi-civilization, one person dictatorship, and hostile expansionism’. This perception became the mainstream discourse in Korean’s perception of China during the Cold War.

However, some intellectuals kept their distance towards the ‘anti-communist perception on China’ and suggested critical viewpoint. Under the expansion of arguments between Sino-Soviet disputes and

introduction of new viewpoint of China from the United States, some intellectuals insisted that ‘one needs to escape from the restriction of ideology’ in consider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ne needs to have independent viewpoint in studying China escaping from ideological bias’. Furthermore, some suggested that we should use the name ‘China’ instead of ‘communist China’, or we should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t China’ as a part of modernization. This phase also appeared in the reaction toward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at is, under the overwhelmingly negative perception on China, some suggested that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the human revolution’.

In 1970s, so-called ‘the post-Cold War interests and researches on China’ expanded more actively along with the East Asian Cold War phenomenon based on the U.S-Sino reconciliation. Along with this atmosphere, one new perception on China was suggested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anti-communist perception on China’. It is so-called ‘idealized Chinese perception’ which was formed based on a view that consider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the human revolution’. Under the idealized Chinese perception, China is not a target for ‘guarding, hostility, or fighting’ but a revolution model for Korean society and a country that creates the third human civilization. I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idealized perception on China is perception from practical intellectuals which criticized not only the Cold War and the ideology of anti-communism but also economy development priority pursued by authoritative government. A powerful plan to seek for post-Cold War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Korea-China relationship, is to review each country’s Cold War experience (or Cold War culture) critically and analyze each country’s critical causes for

Cold War and generated perception's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It would be meaningful to share this information each other.

keywords

Cold War, Anti-Communist Perception on China, Idealized Perception on China, New Viewpoint of China from the United States, Chinese Cultural Revolution, Reconciliation between U.S.-Sino, 『*Sasanggye*』, 『*Shindonga*』, 『*Sedae*』, 『*Junggyung Yeongoo*』

한일협정 후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

정진아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냉전 시기에 형성된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동안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한일관계의 역사에 주목해 왔다.¹⁾ 연구자들은 특히 한일회담을 현대 한일관계의 기틀이 놓인 기점으로 판단하고, 한일회담 연구에 주력하였다.²⁾ 최근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으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 투고일: 2011년 7월 7일, 심사일: 2011년 9월 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 1) 李庭植, 1985, 『韓國과 日本 - 政治的 關係의 照明』, 敎保文庫;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 1996,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지명관, 2004, 『한일관계사 연구 - 강점에서 공존까지』, 소화
- 2) 李在五, 1983, 『한·일관계사의 인식 I -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민족문제연구소, 199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진희, 2003, 『한·일협정 체결과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 - 한·미·일 3국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0; 정일준, 2005, 「한국 지식인의 대일인식과 한일회담」, 『韓國史研究』 131

(총 103권)를 발간³⁾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회담에 대한 연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사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은,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내외적인 배경과 일본인들의 한국 인식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한일관계의 파트너인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8~9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학생이 50%에 육박했지만,⁵⁾ 일본의 집권정당 및 현재 일본 총리의 이름을 묻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각각 9%와 6.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특히 일본인의 성실한 국민성과 경제와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응답자 다수가 청산되지 못한 한일관계의 과거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⁶⁾

그럼에도 위의 설문조사는 대학생들이 일본을 인식하는 한 패턴을 보여주

3)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1~103, 선인

4) 필자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2010년 8월 30일부터 2010년 9월 3일까지 5일간 건국대학교 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대학생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

5)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대답이 47.4%로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한 38%보다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 호감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근면한 국민성 때문’이라는 대답이 28.2%로 가장 높았고, ‘문화선진국’, ‘자동차, 가전제품 등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3.8%와 22.6%를 차지했다. 호감을 갖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7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6) “한국과 일본의 과거 문제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3%의 학생들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매우 그렇다 50.0%, 그렇다 40.3%)고 응답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배가 낙후된 조선에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학생의 30%가 매우 동의한다, 39.1%가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즉, 69.3%의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지배가 조선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제시기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연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경제사학과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학생들은 식민지배=경제성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고 있다.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반감, 일본의 경제·문화에 대한 호감, 현대 일본의 정치·군사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인들의 일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이것이 한국인이 일본을 인식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동아시아에서 북·중·소 북방삼각에 대응하는 한·미·일 남방삼각의 냉전 지역구도가 정착된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일본 인식론이 재구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의 적’이었던 일본이 ‘오늘의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전환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일본 인식이 재구축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일협정까지의 국내의 상황을 간략히 개관하고, 다음으로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이 재구축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⁷⁾의 일본관이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과 그의 일본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향신문 부설 韓國政經研究所에서 1965년 1월 1일부터 발행한 『政經研究』의 일본 관련 논설을 분석함으로써 한일협정 이후 한국 지식인들이 일본을 인식하는 방식과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가 주목한 자료는 라이샤워의 저작들과 『정경연구』이다. 라이샤워의 일본 연구는 6·25전쟁 이후 혈맹관계를 형성한 미국 학계의 권위, 해방 후 20년간의 한일관계 단절로 인한 일본에 대한 정보 부족, 한일협정 후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정경연구』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해인

7) 라이샤워(1910.10.15~1990.9.1)는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외교관이다. 일본 도쿄에서 출생하여 17세까지 일본에서 성장하였으며 1932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소르본 대학(1933~1935)과 도쿄 대학(1935~1936)·교토 대학(1937~1938)에서 수학하였고, 1939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9~1942년 하버드 대학 전임강사를 거쳐 육군부(1942~1943)와 군사정보부(1943~194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국무부 동아시아국에서 근무하였고, 1961~1966년에는 일본 대사로 활약하였다. 1946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일본사를 강의했으며, 일본 전문가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65년 1월 1일 창간되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잡지로서,⁸⁾ 『思想界』, 『世代』, 『新東亞』와 더불어 당시 지성계를 대표하는 잡지였다.⁹⁾ 『정경연구』는 “다각적으로 변화해가는 국제정세에 발맞출 수 있는 적응성과, 또 우리 내부의 제 모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의 동원을 통한 문제의 제기, 올바른 문제의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제문제와 국내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자가 될 것을 자임하였으므로¹⁰⁾ 다른 잡지들에 비해 국제문제에 대한 특집과 기사가 많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라이샤워의 저작과 더불어 1965년부터 다양한 필진을 두고 국제정치 및 정치·경제 문제 분석에 집중하였던 『정경문화』를 통해 한일협정 후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이 재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위로부터 강요된 반공연대론과 한일협정

36년간의 피식민지 경험은 해방 후 한국인들의 반일의식이 하나의 ‘민족정서’로 수렴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패배였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에서 농지개혁, 재벌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물적 기반을 해체하는 한편, 민주화를 통해 일본이 군국주의적 색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1945년,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압제자가 아니라 전범으로 등장한 일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비로소 동등한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객관화된 대상이 된 것이다.

8) 『政經研究』는 1979년 5월부터 『政經文化』, 1986년 11월부터는 『월간 경향』으로 개제하였지만, 통권 호수를 계승하여 동일한 잡지임을 표방하였다.

9) 김민환, 1997,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참조.

10) 稚峰, 1965. 1, 「創刊辭」, 『政經研究』 창간호, 2~3쪽

한국인들이 원했던 한일관계의 미래는 국내적으로는 친일파를 비롯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일본이 철저한 민주주의 개혁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만 해도 한국인들은 정세를 낙관하였다. 그러나 1947년경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냉전은 이러한 낙관에 암운을 드리웠다. 결국, 중국 내전에서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미국은 일본을 부활시켜 공산주의 방벽을 쌓을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식인들은 중국의 공산화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일본의 재무장, 경제부흥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는 일본이 다시 침략자로서 아시아 무대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北胡냐? 南倭냐? 이것이 우리의 숙명”¹¹⁾이라는 한 지식인의 탄식은 일본이 냉전을 매개로 재등장함으로써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대등한 관계라는 방향이 아니라 냉전을 매개로 굴절되리라는 것을 예측한 발언이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부활에 강력히 반발했지만¹²⁾ 결국 1949년의 중국 공산화와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정책은 일본 고립화 정책에서 일본 중심의 지역통합정책으로 선회하였다.¹³⁾ 이승만 정권은 식민 책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표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¹⁴⁾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자본주의 반공동맹을 강화한다는 지역통합전략을 실현하고자 했다.¹⁵⁾ 결국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이 되었고, 자본주의

-
- 11) “금일 불안한 국제정국, 특히 극동의 정세가 3차전의 분화구를 보는 듯한 이때이다. 일본의 거취는 더욱 미묘한 관계에 서게 되는 듯한 이 사태를 미루어보아 우리 전도의 암담함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北胡냐? 南倭냐? 이것은 우리 국토의 위치가 우리 민족에게 제시하는 숙명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瞬視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洪鍾仁, 1947. 12, 「戰後 日本의 動向」, 『新天地』 2-10, 13쪽
- 12) 李鍾模, 1948. 7·8, 「日帝再武裝과 우리 民族의 覺悟」, 『三千里』 4-7·8 참조.
- 13) 柳光烈, 1952. 8·9, 「對日講和條約 發效와 極東政局」, 『自由世界』 1-5, 29쪽
- 14) 편집부, 1954. 2. 10, 「미국의 대일정책에 경고! 일본의 침략근성 잠재를 직시하라」, 『週報』 92, 공보처, 26쪽
- 15) 伊藤正直, 1996, 「ドッジ・ライン前後の『經濟計劃』と後期占領政策」, 『經濟學論集』 62, 東京大學, 1996; 서정익, 2005, 『세계경제사』, 혜안, 357쪽

동맹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해방 후 한국인들이 자신과 타자를 규정하는 잣대는 反日 대 親日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일본 중심의 지역통합전략으로 선회하면서 한국인들에게는 反蘇反共이라는 잣대가 강요되었다. 6·25전쟁 전에는 민족의식이 반공 의식보다 강해서 반소반공의 논리가 한국인들의 심상 깊이 자리할 수 없었지만, 민족상잔의 비극을 거친 후 한국인들은 반소반공을 위해서라면 일본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냉전적 논리를 수용하였다.¹⁶⁾

한국인들이 일본과의 연대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침략을 경계하였다.¹⁷⁾ 특히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익숙한 일본 경제와 직결될 경우 종속적인 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지역통합전략이 실현되더라도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성이 유지되기를 원했으며, 침략자였던 일본과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다시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침략 의사가 없다는 일본의 확약 등 먼저 양자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할 있도록 사전 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승만은 침략의 위험은 공산주의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했다.¹⁸⁾ 이승만 정권의 대일 강경자세¹⁹⁾로 인해 한국인들은 정부가 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고, 대등한 입장에서 한일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6) 李健赫, 1951. 12, 「韓國과 日本」, 『新天地』 7-1, 82쪽

17) 鄭基元, 1956. 8, 「韓日會談과 그 基本議題에 대한 考察-특히 被害民族의 立場에서」, 『國會報』 7, 25~26쪽

18) 편집부, 1954. 2. 10, 앞의 글, 26쪽

19)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과 친일파 재등용 정책으로 인해 이승만(정권)의 강경한 반일 태도를 대국민 선전용 행보로 이해하기도 한다. 독립운동 경험을 가진 이승만은 친미적이지만 반일적인 정서를 가진 인물이었다. 비록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한일협정 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고, 평화선을 고수하는 등 박정희 정권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후 국교 재개를 위한 일본과의 협상을 서둘렀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경제적 연대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간주하고, 한일회담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였다. 집권 초기부터 일본 측 수석 대표 스기 미치스케[杉道助]의 방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의 정상회담, 이케다 수상과 러스크(Dean Rusk) 미 국무장관의 회담과 일본 외상의 한국 방문 등 한·일 국교 수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박정희는 메이지유신을 경과하면서 주목할 만한 강점을 가진 국가로 일본을 인식하였고,²⁰⁾ 박정희와 박충훈, 김정렴 등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핵심 경제관료들은 일본을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다.²¹⁾ 또한 박정희 정권은 미·일 안보동맹 하에서 일본이 성장하고 있다고 할 때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일본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편입되는 것이 경제개발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악이라고 보았다.²²⁾ 따라서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과의 협조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였다.

지식인들은 북방삼각(북·중·소)과의 대치상태에 있는 남방삼각(한·미·일)의 관계 강화 요구로 인해 조만간 한일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과 일본의 요구가 큰 것이므로 한국 측이 서둘러 배상문제 등을 양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²³⁾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을 서둘렀고, 미국은 일본에게는 액수의 양보를, 한국에게는 ‘대일청구권’이라는 용어의 포기를 촉구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등 회담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20) 朴正熙, 1963, 『國家와 革命과 나』, 向文社(박정희, 2005,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에 재수록, 이 책 576~579쪽 참조)

21) 2009년 11월 9일 김정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인터뷰.

22) 박태균, 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76, 127~128쪽

23) 趙淳昇, 1961, 12, 「韓日問題의 再檢討를 要望한다」, 『思想界』 9-12

하였다.²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일 간의 밀실외교를 통해 한일회담이 추진되자, 국민들은 한일협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언론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국민의 대표로서 한일협정을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도 크게 고조되었다. 주장하는 내용에는 편차가 있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는 “일본이 다시 온다”라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²⁵⁾ 잡지마다 일본 특집이 마련되었다.²⁶⁾

한편, 회담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사과와 배상 없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결국 일본의 채침략과 종속적 한일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일협정 체결에 맹렬히 반대했다. 학생과 지식인들은 한일협정을 굴욕외교, 매국외교, 민족반역적 행위, 민족정기의 훼손, 일본 전쟁상인들과의 흥정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한국적 민족주의’의 실종을 통렬히 비판했다.²⁷⁾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식민통치기간 중 체결된 제 조약의 폐지, 대한민국 정부 인정, 2억 달러의 정부차관과 3억 달러의 상업차관, 3억 달러의 원조를 포함한 8억 4,500만 달러의 차관 제공이 골자였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일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이

24) 이원덕, 1996, 앞의 책; 이재봉, 2010,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논총』 54, 129~130쪽 참조. 한일협정 체결은 지역통합전략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경제협력을 통한 반공진영의 강화였다. 따라서 한일협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립구도가 첨예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박진희, 2003, 앞의 글; 한모니까, 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50 참조.

25) 2010년 11월 22일 김용섭 교수 인터뷰.

26) 한일협정 체결 직전 『靑脈』은 이러한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특집 제목으로 뽑았다. 『靑脈』 1965년 5월호, 「특집: 일본은 다시 온다」 참조.

27) 李在五, 1983, 『한·일관계사의 인식 I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최기영, 1995, 「한일협정 반대선언문집」, 『근현대사강좌』 6; 정일준, 2005, 앞의 글 참조.

침략과 수탈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한국에 정당한 배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한 채, 정당한 ‘배상’이 아닌 ‘후의’로써 청구권자금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일병합조약 무효화는 물론이고, 일본의 사과와 대일재산청구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해결, 평화선 등 한국인들이 요구했던 일반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은 채 회담이 종결되었다. 결국 한일협정은 한국인들의 정당한 민족적 요구가 좌절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이 확산되는 전기가 되었다.²⁸⁾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한일협정 체결과정은 민족의식의 전도와 혼란, 경제제일주의라는 가치의식을 강요하면서 한국인들의 심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Ⅲ. 라이샤워의 일본 연구와 ‘일본 근대화론’ 확산

한일협정 체결 전후는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청맥』은 1965년 5월 “일본은 다시 온다”는 제목으로 한일국교의 경제적 배경과 일본 재벌의 특징, 일본인의 대외의식과 한국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²⁹⁾ 『사상계』는 1965년 6월 “한일회담의 파멸적 타결”이라는 제목으로 평화선과 반성 없는 배상 문제를 다루고,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침략정책과 침략근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³⁰⁾ 10월에는 “전후 20년의 일본”을 통해 일본의 정치

28) 서중석, 1995,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30 참조.

29) 裴翰慶, 「日本の財閥」; 李甲燮, 「韓日國交의 經濟的 背景」; 李庭植, 「日本人의 對外意識」; 宋建鎬, 「日本人이 보는 韓國人」 참조.

30) 韓培浩, 「對等關係 속의 侵略根性」; 咸乘春, 「사라질 수 없는 平和線」; 崔錫采,

풍토와 대외정책,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사회상을 수록하였다.³¹⁾ 『정경문화』는 1965년 6월 “일본을 분석한다”는 제목 아래 일본의 정당정치, 경제상황, 대외정책 등을 고찰하였다.³²⁾

이 논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일본에 대한 접근방식이 비판 일변도에서 현황 분석으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이는 한일협정 체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1945년 이후의 일본 상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재침략에 맞서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족자본과 민족주의, 민족운동, 민족문화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³⁴⁾

하지만 한국에는 현대 일본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 인프라가 부족하였다. 일제시기 지식인들은 일본 지성계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상황에 정통했지만, 1945년 이후 국교가 단절되면서 일본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정보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961년 일본어과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본 문제를 독자적으

「未解決の章」; 李烈模, 「反省없는 賠償」; 김영록, 「日本の隣國窮乏化政策」 참조.

31) 金哲, 「日本の政黨과 政治風土」; 李昊宰, 「日本の國際政治와 對外政策」; 洪性囿, 「轉換期에 들어선 日本經濟」; 田駿, 「日本社會의 傳統과 變遷」 참조.

32) 金明會, 「極東에 있어서의 日本의 地位」; 金成燾, 「오늘의 日本 政黨」; 洪承勉, 「日本の 對中共政策」; 崔昌彦, 「日本の 再軍備問題」; 金宗炫, 「戰後 日本經濟의 發展과 展望」; 金大煥, 「일본의 社會構造分析」; 金東晟, 「戰後 日本의 教育」; A. W. 버크스, 「日本の 知識人과 社會觀」 참조.

33) 『思想界』 1965년 10월호, 『政經文化』 1965년 6월호 참조.

34) 이러한 경향성은 『靑脈』과 『思想界』 특집에 잘 드러난다. 『靑脈』 편집진은 1965년 11월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특집을 마련하여 宋建鎬의 「한국민족주의의 배경」, 具範謨의 「한국의 민족주의와 엘리트」, 李鎮永의 「민족운동의 담당자」, 林芳鉉의 「한국민족주의의 전망」을 수록하였고, 1966년 7월 「민족문화론」에서는 尹南漢의 「문화우열과 그 상관성」, 閔斗基의 「민족문화의 전개과정」, 李東克의 「민족문화의 담당계층」을 실었다. 한편, 『思想界』는 1965년 8월 특집 “항일투쟁 반세기”에 盧啓鉉의 「乙巳國恥와 乙巳國賊」, 金齡德의 「三·一運動 以後의 抗日」, 文相照의 「韓國教會의 受難史」, 편집실의 「歷史에 나타난 日人」을 수록하였다.

로 다루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전무한 상황이었다.³⁵⁾ 일본은 경제부흥을 통해 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었지만, 현대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극히 부족했다.³⁶⁾

이때 현대 일본을 알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바로 라이샤워의 저작들이었다. 번역자들은 한일관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에도 해방 이후 연구자들이 “현대 일본을 외면”했고,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일정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일본에 대한 무식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학계마저 “일본 연구를 등한히” 함으로써 편견 없이 현대 일본을 이해하는 것이 초미의 급선무가 되었다고 설파하였다.³⁷⁾ 또한 냉정하고 충실한 연구서가 절실한 상황에서 라이샤워의 저작이 일본에 대한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현대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대국적인 관찰”과 “현대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⁸⁾

제일 먼저 소개된 책이 *Japan: Past and Present*³⁹⁾였다. 한국에서 『日本

35) 1970년대 초에는 국토통일원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영남대학교와 우석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일본 연구기관이 발족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일본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3년 건국대·계명대·상명여대·성신여대·한남대 사범대학에 일어교육과가 신설되었고, 1977년에는 동아대와 한남대 문과대학에 일어일본과가 개설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고려대, 경희대, 단국대, 덕성여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인천대, 인하대, 계명대, 울산대에 일어일본과가 신설되었지만, 이들 학과는 모두 학과명처럼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에 교육의 중심을 두었다.

36)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통해 1945년부터 1964년까지 한국어로 된 일본 관련 도서를 검색해 보면 93건이 검색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학 44건, 사회과학 24건, 역사 12건, 문학 6건, 총류 2건, 철학 2건, 자연과학 2건, 기술과학 1건으로 어학이 47.3%를 점하고 있다. 현대 일본의 정치경제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과학, 역사, 총류 38건 중 경제 분야를 제외한 도서는 11건으로, 이 도서들은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 침략을 비판하고, 패전 후 일본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7) 鄭秉學, 1967, 『日本史』, 探求堂, 譯者後記

38)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著·全海宗·閔斗基 譯, 1964, 『東洋文化史(上)』, 乙酉出版社, 3쪽, 譯者 序文; 鄭秉學, 1967, 앞의 책, 譯者後記; 에드윈 O. 라이샤워 著, 康鳳植 譯, 1968, 『(美國人 이 본) 日本』, 徽文出版社, 譯序

39) Edwin O. Reischauer, 1946, *Japan: Past and Present*, New York: Knopf, 한

帝國興亡史』⁴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책은 1959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매년 증쇄를 거듭하였고, 한일협정 이후에는 다수의 출판사들이 『일본사』, 『일본』 등의 이름으로 경쟁적으로 출판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⁴¹⁾

라이샤위는 이 책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높이 평가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수십 년 내에 서양과 같은 근대화를 이룩한 힘이 메이지유신에서 나왔다고 평가하였다. 즉, 메이지정부가 근대화라는 목적 아래 국민들을 통합하고 근대화 개혁을 달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⁴²⁾ 이것이 중국·한국과 일본의 미래가 달라진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통일된 중앙집권국가로서 근대화 개혁을 달성한 일본과 달리 “정치력이 쇠퇴하고 군사력이 미약한 중국과 한국은 외국의 침략을 받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⁴³⁾

하지만 일본에는 곧 군국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라이샤위는 이를 “국수주의와 군국주의의 반동”으로 표현하였다. 군국주의의 시대는 일시적인 반동, 비정상적인 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국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단연코’ 강화론자들을 지지하여 항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미국의 개혁을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에서 군국주의는 완전히 사

국에 번역된 책은 1954년 도쿄 찰스 터틀(Charles E. Tuttle) 출판사에서 발행한 증보판을 저본으로 하였다. 에드윈 O. 라이샤위 著·康鳳植 譯, 1959, 『日本帝國興亡史』, 陽文社, 解説 참조.

- 40) 이 책의 전체 목차는 1. 지리적 배경 2. 고대 일본 민족 3. 중국 문명의 도래 4. 토착 문화의 성장 5. 봉건 사회의 전개 6. 봉건 제도의 변천 7. 통일정부의 재수립 8. 봉건 체제 이면의 변화 9. 근대 국가 일본의 탄생 10. 자유주의의 추세 11. 국수주의와 군국주의의 반동 12. 전쟁 13. 군정 14. 신생 일본 15. 앞으로의 문제이다. 『일본제국흥망사』는 이 책의 제9장 이하 근현대 부분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 41) 처음 이 책을 발행한 곳은 陽文社였고, 1959년, 1960년, 1961년 매년 증쇄에 들어갔다. 1967년에는 探求堂이 『일본사』라는 제목으로, 1972년에는 瑞文堂이 다시 『일본제국흥망사』라는 제목으로 *Japan: Past and Present* 전권을 완역해서 발행했고, 1968년에는 徽文出版社가, 1973년에는 時事通信社가 『日本』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책을 발행했다. 탐구당과 서문당, 휘문출판사, 시사통신사에서 발행한 책 역시 증쇄를 거듭했다.
- 42) 에드윈 O. 라이샤위 著·康鳳植 譯, 1968, 앞의 책, 127쪽 참조.
- 43) 에드윈 O. 라이샤위 著·康鳳植 譯, 1968, 위의 책, 121쪽

라지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⁴⁴⁾ 천황이 군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화를 주도했다고 서술함으로써 천황의 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그는 일본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은 냉전의 중요한 싸움터로서 “미국의 일본 군정은 민주주의 개혁과 부흥의 한 실험이요,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반드시 10여 억 아시아인들에게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칠”⁴⁵⁾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미국의 일본 연구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것은 냉전의 강화와 반공주의의 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일본 근대화론은 시민혁명의 경험 없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비서양 국가들의 근대화 모델로 삼으려는 미국의 정책적인 의도의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일본 근대화론은 로스토우의 『경제성장단계론』처럼 비공산당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⁴⁶⁾

그러나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53년 라이샤워가 *Japan: Past and Present*를 개정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았다. 국내생산만으로는 인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수출입은 제한적이었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일무역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도 일본 경제의 앞날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⁴⁷⁾ 하지만 1950~1960년대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라이샤워를 고무했고, 그는 일본에 대한 서술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변화는 1964년 개정 3판을 저본으로 한 『일본사』, 『일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⁴⁸⁾

1964년 개정 3판에서 라이샤워는 전후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초점을

44) 에드윈 O. 라이샤워 著 · 康鳳植 譯, 1968, 위의 책, 170쪽

45) 라이샤워 著 · 康鳳植 譯, 1972, 『日本帝國興亡史』, 서문당, 116쪽

46) 최상용, 1994, 「일본연구의 동향과 한국」, 『일본·일본학-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오름, 19~20쪽

47) 라이샤워 著 · 康鳳植 譯, 1972, 앞의 책, 163~165쪽 참조.

48) 『日本帝國興亡史』와 『일본사』, 『일본』은 12장까지는 내용이 동일하나 13장 이후의 서술방식에 변화가 생겼고, 제목도 14장, 15장을 묶어 14장 전후의 일본으로 바뀌었다.

맞추고, 이것이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호혜통상과 경제협력에 매진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전통과 근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설파하고, 제3세계 비서양 국가들의 근대화 모범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성공이 아시아에서의 사상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므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일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⁹⁾ 라이샤워는 전후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본의 근대화가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일본 근대화론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다.

라이샤워의 일본 근대화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이 일본 근대화론의 정수를 볼 수 있는 *Modernization and Japan*이다.⁵⁰⁾ 이 책은 일본에 대한 예찬과 일본 중심의 근대화 논리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으므로 1997년이 되어서야 한국어로 번역되었지만, *Japan: Past and Present*를 통해 라이샤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식인들은 출간 직후부터 이 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⁵¹⁾

라이샤워는 이 책에서 세계가 일본의 근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근대화’라는 개념은 일본사에서 처음으로 중요시된 것입니다. [...] 일본의 ‘근대화’는 서구 여러 나라들보다 급속히 진행된 것이기에 때문에 ‘근대화’의 역사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서구 국가로서 급속히 근대화한 일본의 경험은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9) 에드윈 O.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68, 앞의 책, 203·245~247쪽 참조.

50) E.O. 라이샤워 著, 1965, 『日本近代の新しい見方』, 東京: 講談社.

51) 라이샤워의 *Japan: Past and Present*를 번역했던 강봉식은 책 서문에서 “하아버드 대학 교수 라이샤워 박사가 작년 곧 1965년에 낸 『근대화와 일본(*Modernization and Japan*)』이라는 논설집도 재미있는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이 책을 적극 추천하였다. 에드윈 O.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68, 앞의 책, 譯序

그들처럼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오늘날까지 밟아온 ‘근대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⁵²⁾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이 서양과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화두로 삼아야 하고, 일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기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라이샤워는 냉전 시기 근대화의 과제를 갖고 있는 비서양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나 중국, 북한이 아닌 일본을 ‘교과서’ 삼아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논리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서양과 전혀 다른 문화적 전통 속에 있었던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는 급속한 근대화를 요구하는 저개발국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서구의 경험을 직접 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가장 적절한 근대화의 ‘본보기’였다.⁵³⁾

라이샤워가 일본의 성공요소로 지목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기술이나 제도, 문화의 수용을 거부하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와 그것을 자기화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특히 일본이 서구와 다른 어떤 것을 창출하려고 하기보다 충실히 서구의 발전모델을 따라간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⁵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요인으로서 외부의 압력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진 봉건제도의 유산,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한 강한 관념, 강력하며 진취적인 기업정신, 구체적인 업적을 추구하는 윤리관을 들었다.⁵⁵⁾ 하지만 이는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었다. 후발 자본주의국가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제국주의적 침략이었기 때문이다.⁵⁶⁾

52) 라이샤워 지음·이광섭 옮김, 1997, 『일본 근대화론』, 小花, 7쪽, 머리말

53) 라이샤워 지음·이광섭 옮김, 1997, 위의 책, 107쪽

54) 라이샤워 지음·이광섭 옮김, 1997, 위의 책, 24~25쪽

55) 라이샤워 지음·이광섭 옮김, 1997, 위의 책, 36~37쪽

56) 패트릭 스미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 20세기에 일어난 몇 가지 끔찍한 비극 중의 하나가 일본의 책

그다음으로 소개된 책이 라이샤위가 존 페어뱅크, 크레이그와 공동으로 저술한 *East Asia*, 즉 『東洋文化史』였다.⁵⁷⁾ 1939년부터 시작된 하버드 대학의 교양강의 강연록을 기초로 하여 출판된 이 책에서 라이샤위는 일본파트 대부분을 저술하였다. 그 이전의 책들이 일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이 책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비교 속에서 서술됨으로써 독자들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근대화가 갖는 의미와 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동양문화사』(하)권인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에서 두드러진다. 이 책은 전근대/근대로 나누어진 동양문화사 근대편이지만, 동양 근대의 핵심인 일본의 제국주의적 수탈과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루고, 왜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은 근대화에서 성공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책의 내용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양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서는 중국에 비해 탁월했던 일본의 적응성, 대응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메이지 정부의 중상정책 등을 강조하였으며, 그다음 장에서는 별도로 메이지 시대 일본의 발전에 대해 서술하였다. 반면, 중국에 관해서는 근대화에 실패한 중국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방식이었다.

라이샤위는 ‘지위 지향적’이어서 출세주의와 사상적 대립으로 근대화의 목표에 집중하지 못했던 중국과 달리 ‘목표 지향적’이고 각자 직분에 충실하면서 갈등 없이 경제발전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 넣은 19세기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근대화를 위한 준비가 잘된 나라였다고 주장하였

임이며, 일본 국민은 이로 인해 여러 모욕적인 경험을 해야 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이 엄청난 현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패트릭 스미스 지음·노시내 옮김, 2008, 『일본의 재구성』, 마티, 44쪽

57) Edwin O. Reischauer and John K. Fairbank, 1960,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John K. Fairban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1965,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동양문화사』는 지금까지 널리 읽히며 동양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다. 전근대편인 상권은 1964년, 근대편인 하권은 1969년 乙西文化社에서 초판이 발행되었고, 1989년 현재 상권은 18판, 하권은 14판을 찍었다.

다.⁵⁸⁾ 라이샤워는 천황제를 외부의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근대화를 가속화한 요인이자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로 평가하였다.⁵⁹⁾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을 언급할 때는 유일한 비서양국가인 일본이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과거에 사로잡힌 중국과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중국을 퇴역적인 국가로, 일본을 발전적인 국가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East Asia*는 일본 근대화론의 완결편인 셈이었다.⁶⁰⁾

위에 소개한 라이샤워 저작들은 한국 지식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일본관은 한국 지식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라이샤워의 일본관을 지식인들이 수용한 배경은 첫째, 이 책이 미국 최대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생산물이라는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⁶¹⁾ 해방 후 한국 사회는 학문의 체계와 내용 모두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저술이라고 하면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는 우수한 책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번역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지식인들은 이 책의 시각을 학문적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였다.⁶²⁾ 그동안 한국에 수용되었던 일본 관

58)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著·全海宗·閔斗基 譯, 1989, 『東洋文化史』(下), 乙酉文化社, 211~212, 218, 222~223쪽 참조.

59)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著·全海宗·閔斗基 譯, 1989, 위의 책, 360쪽

60) 역자들은 이 점을 역사서문에 명시하여 독자들이 경계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著·全海宗·閔斗基 譯, 1989, 위의 책, 3쪽, 역사서문 참조), 역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책은 라이샤워의 일본 근대화론을 대중적으로, 특히 미래의 지식인인 대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61)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著·全海宗·閔斗基 譯, 1964, 앞의 책, 4쪽, 역사서문; 라이샤워·康鳳植 譯, 1972, 『日本帝國興亡史』, 瑞文堂, 179쪽, 解說.

62) “전쟁 전 일본인이 쓴 일본사나 전쟁 후 외국인인 쓴 대개의 일본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객관을 바로 잡지 못한 폐단이 심한 데 대하여 라이샤워 박사의 이 책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찾아 이를 해명하려는 태도가 우리의 구미를 끈다. 일본을 잘 알고 일본말에 능통한데다가 사학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를 가진 저자는 그 연구 태도에 편견이나 감정을 섞지 않았으니 그 말이 모두 합당하고 믿을만하고 또

런 저서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저술한 책이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경험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저술한 책보다 미국인들이 저술한 책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신뢰하였다. 그러나 라이샤워의 저술들은 결코 객관적인 책이 아니었다. 이는 그의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라이샤워는 학자였지만, 학문과 정치를 분리해 사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1942년 9월 「대일정책에 대한 비망록」을 제출하여 전후 대일정책의 기초를 제안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⁶³⁾ 1949년 10월에는 미국무부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학자, 지식인 집단의 특별하고 명망 있는 지위를 이용하려면, 그들을 표적으로 선전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활동”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에서 학문 활동을 전개했다.⁶⁴⁾ 따라서 그의 저술 곳 곳에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게 “일본을 재구성”하기 위한 장치들이 눈에 띈다.⁶⁵⁾

셋째, 지식인들은 미국의 일본관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맹방 미국이 과거의 적국 일본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현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었다. 6·25전쟁 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반공연대론을 수용하였지만, 한국인들은 반일감정이라는 공감대를 제외하면 뚜렷한 일본관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⁶⁶⁾ 바로 이때 라이샤워가 일본 중심의 지역통합전략, 반공

한 재미있다.” 라이샤워·康鳳植 譯, 1972, 앞의 책, 179쪽, 역자 해설

63) 사카이 나오키, 2000, 「염치없는 내셔널리즘—서양과 아시아라는 이항 대립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당대비평』 13, 231~239쪽 참조.

64) 패트릭 스미스 지음·노시내 옮김, 2008, 앞의 책, 45쪽과 각주 27)에서 재인용.

65) *Japan: Past and Present*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다. “섬나라 일본에다 자연은 문명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한 민족이 앞으로 발전하여 강대국민이 될 수 있는지의 틀을 베풀어주었다. 온화한 기후, 풍성한 강우량, 꽤 기름진 땅,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멀다고 할 수 없는 그 위치—이러한 천연의 호조건이 겹쳐 결국 이 섬나라 사람들은 세계 일류 국민의 대열에 끼일만한 소지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 에드윈 O.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68, 앞의 책, 15쪽 참조.

66) 해방 후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일본사는 1964년 知文閣에서 발행된 全海宗·関斗基 편저의 『日本史』였다. 일본을 알아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저술된 이 책은 라이샤워의 책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1945년까지만 서술되어 현

연대론에 부합하는 명쾌한 일본관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화두로 삼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조기에 근대화를 달성하고 제국주의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왜 중국과 한국은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은 성공했는가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였다.⁶⁷⁾

당시 박정희 정권은 당면목표로서 경제제건을 지상과제로 내세웠고, 박정희와 핵심 경제관료들은 이미 일본을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경제발전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역 역조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드라이브, 경공업·중화학공업·방위산업의 자기완결 구조와 정부 주도의 산업화 추진 등,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경제대국이 되는 방법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다수 참고했다.⁶⁸⁾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의식해 이러한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근대화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토양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책과 더불어 라이샤워의 저작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에 쏠려 있던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을 당시 한국 사회의 현안이자 화두였던 경제근대화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협조, 적극적인 기업정신, 중상정책 등 일본의 경제발전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분리시키는 일본 근대화론은 향후 일본의 경제활동을 정치군사적 행보와 분리시켜 이해하는 ‘경제동물론’의 지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 일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실증에 치우쳐 일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67) 로널드 슬레스키는 “아시아에 대한 라이샤워의 태도는 포괄적이어서 문화 간의 관련성에 주목해서 그것들을 비교하고 종합하려 했다. 그의 생각은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폭넓은 것이었다. 그래서 라이샤워의 글은 일반 독자나 전문가들 모두에게 호소할 수 있는 흥미와 정보를 동시에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로널드 슬레스키, 2010,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최근 50년의 발자취』, 현학사, 110쪽

68) 2009년 11월 9일 김정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인터뷰.

IV. ‘경제동물론’ 대 ‘강국군림론’

한일협정 후, 처음으로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이는李聖根이다.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중국 5·4운동에 관한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국토통일원의 일본지역 담당 연구위원을 역임했던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일본의 상황을 한국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한국 지식인의 일본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1970년 11월 『정경연구』 70호에 <지상 심포지움-현대 일본 그 철저적 분석>, 「일본연구의 접근방법-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 문제와 그 접근방법상의 제 문제」라는 제목으로 펼쳐냈다.

이성근은 한국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일본 연구가 부족한 원인으로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일제시기에는 일본이 저항의 대상이 되었지만 객관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점, 둘째, 해방 직후에는 일본의 패망과 해방정국의 혼란으로 인해 일본 문제가 한국인의 의식으로부터 소외된 점, 셋째, 이승만정권기에는 대일강경책의 영향으로 일본 문제가 객관적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편견에 찬 감정적 대일관이 국민들을 압도한 점, 넷째, 한일협정을 계기로 일본 연구의 필요성이 급증하였으나,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제시기에 습득한 단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일본통을 자임함으로써 객관적인 인식과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었다.

그는 일본 연구가 객관적인 관심과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1965년 이후 월간 종합지에 실린 일본 관련 논설을 검토한 후, 한국 지식인의 일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시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일회담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일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심의 대상은 일본 사회의 구조에 대한 동태적 인식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을 둘러싼 문제였고, 정작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한일협정 이후였다. 또한 1965년 말경이 되면 한일관계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한 ‘인식의 공백’이 의식되지만 현대 일본에 대한 논문은 단편적인 소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에 관한 논설을 썼던 연구자들이 주로 국제정치학, 정치외교학 전공자와 특파원들이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었다. 한일협정을 계기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대 일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1945년 이전 한국인들이 일본 상황을 내정과 다름없이 접했던 것과 달리 1945년 국교가 단절되면서 20년간 현대 일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였다. 현상분석에 치중하는 연구자들과 소수의 특파원들이 전달해 주는 정보만으로 현대 일본의 심층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성근은 청구권 자금의 유입과 베트남전을 경과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유를 현안으로서의 긴박성이 떨어졌고, 한국 사회가 일본과의 교류를 토대로 한 소비문화와 풍요로운 경제사회 건설이라는 환상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갈파하였다. 지식인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1968년부터 “빛더미 위의 고도성장”이라는 문제의식이 대두하면서 지식인들은 한국 경제의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⁶⁹⁾ 한일협정 3년간 발생한 엄청난 무역적자는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렸고, 일본 경제를 모델로 한 정부의 근대화 방식에도 의문을 품게 하였다. “근대화냐 일본화냐”⁷⁰⁾라는 문제 제기에서도 드러나듯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대일예속화가 문제시되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의 문화침투와 식민잔재 청산이 한국 지식계의 실천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성근은 이러한 실천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의 객관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사회 그 자체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는 보이지 않고, 다만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만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객관적인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 일본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69) 金相坤, 1968. 8, 「日本資本의 對韓進出過程」, 『政經研究』 43

70) 池明觀, 1970. 4, 「近代化냐 日本化냐」, 『中央』 3-4

않는 한, 현안에 따라 논점이 이동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마저 피상적인 논쟁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의 우려처럼 1970년 안보문제가 지상과제로 등장하자, 한국 경제의 대일 예측문제는 지식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일본의 재무장 문제만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성근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축적하지 못한 채, 사회 현안에 따라 일본 문제를 다루어온 현실을 비판하면서 향후 일본 사회 연구의 자세와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각국 학계의 연구는 문화적 “보세가공”의 성격을 띠고 있고, 오늘날의 지역연구는 직간접적으로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본 연구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라이샤워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학자들의 일본 연구는 일본 근대화 예찬에 매몰되어 일본 근대화 과정이 빚어낸 일본 사회 내의 구조적 모순과 제국주의의 잔혹한 측면을 외면하였다. 향후 일본 연구는 지난 1세기 동안 일본 사회발전의 전 과정과 일본 사회가 가진 내면적 갈등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의 일본 연구는, 장기간 연구대상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배제된 일본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본 사회에 대한 구조적이고 동태적인 파악이야말로 일본 연구의 기본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과 이해를 토대로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관계와 존재양식이 분석·검토된 후, 오늘날 일본 사회의 동태 중 어떠한 측면이 한국 사회의 현재와 장래에 긍정적이며 어떠한 측면이 부정적인가를 검토하는 객관적인 평가 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성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연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 일본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초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미래에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 학계가 자칫하면 미국이 생산한 일본 근대화론을 재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실제 그의 우려처럼 미국의

일본 근대화론은 한국의 일본 연구 풍토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은 1970년대부터 등장한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 패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국익,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 4차 방위계획에 대한 분석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거친 결과였다. 1950~1960년대 초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이 소련, 중국에 이어 아시아의 삼대 강국으로 등장하고, 일본 내부에서 재무장 문제가 논의되자 한국의 지식인들은 과연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과 일본이 추구하는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홍승면은 일본의 대외정책을 정경분리로 규정하였고,⁷¹⁾ 김만기는 경제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아래 국제통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거기에서 과실만 따먹자는 것이 일본의 사고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⁷²⁾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국가이익」이라는 논설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국가이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성황용도 일본의 국가이익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³⁾ 즉, 일본은 최대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GNP로써 국가적 위신을 과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에는 일정한 한계를 두어 깊이 관여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일본이 유리한 국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정치적·군사적 국익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군국주의로 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아시아 국민들의 반감과 한국,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일본이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성황용은 또한 일본정부가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 국민들의 핵 공포, 평화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여 일본의 국익을 경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정경분리정책이 그가 내세운 증거였다. 그는 일본이 대미의존관계를 이용하여

71) 洪承勉, 1965. 6, 「日本の對中共政策」, 『政經研究』 5

72) 討論, 1971. 8, 「東아시아政治의 再編成과 展望」, 『政經研究』 79, 110쪽, 金楬起 발언 참조.

73) 成滉鏞, 1975. 4,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日本의 國家利益」, 『政經研究』 123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조를 제공하고, 안보는 미국에 맡김으로써 일본의 경제이익을 최대한도로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리영희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정치외교적 발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비확장이야말로 아시아와 극동의 힘의 정치에 일본이 다시 군림하려는 강국 정치의 수단이라고 파악하였다.⁷⁴⁾ 이성근 또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오로지 경제적인 실리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본의 대외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 일본 외교를 위치시킴으로써 일본 외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⁷⁵⁾ 그는 일본의 동북아 정책이 미국의 극동 정책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고 일본이 경제적 실리를 최상의 개념으로 표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국내외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강국으로 군림하기 위해 독자적인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이성근은 일본이 미국의 극동정책을 추수하는 한편으로, 강국 군림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일본이 조속한 경제재건에 성공을 거두고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극동정책에 밀착함으로써 국내 안보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극동정책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일본 나름대로의 대륙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것이 1956년 소련과의 수교 및 1972년 중국과의 수교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북한과의 무역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근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 낸 ‘정경분리정책’이라는 말이 이러한 실상을 호도하기 위한 선전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무국경 상태로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기능을 보장할 만한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극동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

74) 李泳禧, 1970. 8, 「美軍減縮과 美日安保關係의 展望」, 『政經研究』 67

75) 李聖根, 1974. 9, 「日本の 對北傀姿勢와 그 危險構造-8·15事件을 계기로 본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에 대한 總括的 解剖」, 『政經研究』 116

하고 있었다.

1965년경부터 일본의 국익을 철저한 경제적 실리추구로 이해하고, 일본을 경제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제동물(economic animal)'로 표현하는 주장이 다수 필자들의 논지와 기사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⁷⁶⁾ 이는 라이샤워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학자들의 일본관과 동일한 것이었다. 라이샤워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교묘히 활용하여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라이샤워의 일본 '경제동물론'은 일본이 시베리아의 자원과 중국의 시장을 겨냥하여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는 한편,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을 십분 활용하여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무역에서 분리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다.⁷⁷⁾ 이러한 시각은 점차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도 일반화되어 갔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일본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었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으로 일본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일본은 그 대가로 기지 사용과 미군 주둔을 인정하였다. 1960년 신안보조약이 체결되면서 미일 양국은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지역통합전략 속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의 연대 및 강화정책이 취해졌지만, 일본의 정책은 미국의 극동정책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닉슨독트린 이후 아시아에서 냉전이 완화되고, 일본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와 역할이 차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켰다.

성황용은 일본이 미국과의 협조정책, 즉 대미의존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국

76) 편집부, 1970. 4, 「세계의 潮流: 日本의 對中共接近外交」, 『政經研究』 63; 편집부, 1970. 6, 「세계의 潮流: 中共壓力에 屈服한 日本人」, 『政經研究』 65; 편집부, 1971. 4, 「세계의 潮流: 日·中共 季節風-中共勢擴散에 대한 에코노믹·에니멀, 일본의 胃腸카타르」, 『政經研究』 75; 呂井東, 1972. 8, 「다나카 日本의 登場과 아시아·韓半島」, 『政經研究』 91

77) 에드윈 O.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68, 앞의 책; E·O. 라이샤워 著·金基實 譯, 1982, 『日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기문사

가이의 차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해 미국이 방위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리만 추구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일본의 군사정책에 뚜렷한 성격으로 부각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⁷⁸⁾ 그는 미국이 6·25전쟁 이후 강대국 중심주의적 전략개념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했으나, 이는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행사가 아닌 일본 자체의 방위력 증강요구에 불과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본 으로서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비만 갖추면 되었고, 일본이 서방국가의 중요한 지주라는 심리적 안정감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이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⁷⁹⁾ 상황용은 미국이 베트남 문제와 자국 내 경제 문제로 인해 아시아의 방위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제정세가 냉전체제에서 경쟁적 공존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날로 감소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앞으로도 일본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아시아의 방위책임을 미국에 위임하고, 자신은 자체방위에만 전념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었다.⁸⁰⁾ 그는 또한 일본이 북한과 무역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정치관계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강대국으로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갖지 못한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⁸¹⁾ 이는 곧 일본이라는 변수를 철저히 미국의 대한정책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었다.

반면, 리영희는 1970년대의 미일 안보 공동체가 점차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 안보 등 동아시아의 안보 책임을 일본이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미국의 군사적인 책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동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78) 成滉鏞, 1975. 5, 「日本の 外交政策과 軍事戰略」, 『政經研究』 124, 163쪽

79) 成滉鏞, 1975. 5, 위의 글

80) 成滉鏞, 1975. 4, 앞의 글, 55~56, 59쪽 참조.

81) 成滉鏞, 1976. 3, 「日本 對韓半島政策의 現段階性格」, 『政經研究』 134

판단이었다. 그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향후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⁸²⁾ 김홍철도 일본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해온 것을 들어 일본의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일본의 정치적·외교적 발언권이 강화될 것을 경계하였다.⁸³⁾ 이성근은 “만약 국제적인 무법상태가 계속 평화를 위협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려 할 때에는 평화헌법 9조의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보존의 법칙 앞에 길을 터주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한 일로서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제휴하여 유엔의 틀 속에서 힘을 행사하여야 함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발언한 1951년의 맥아더 성명을 인용하여, 미국이 이미 1951년 시점에서 일본 재무장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1971년부터 약 5조 엔 규모의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자위대의 현대식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⁴⁾ 그는 일본이 체계적으로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에 대해 한국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존재를 미국의 극동정책에 철저히 종속된 것으로 볼 것인가, 미국의 극동정책에 규정되면서도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자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인가, 미국과의 역할분담에 있다고 볼 것인가가 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리영희, 이성근, 김홍철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였지만, 홍승면, 김만기, 성황용을 비롯한 한국의 지식인들 다수는 일본을 미국의 극동정책에 철저히 종속된 존재로 파악하고 일본 스스로 일본의 역할을 자위에 한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82) 李泳禧, 1975. 4, 앞의 글, 25쪽

83) 金洪喆, 1972. 11, 「日本の 아시아戰略 再編成 方向」, 『政經研究』 94

84) 李聖根, 1975. 9, 「日本の 平和憲法과 政治現實」, 『政經研究』 128, 140쪽

V. 맺음말

필자는 머리말에서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을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반감, 일본의 경제·문화에 대한 호감, 현대 일본의 정치·군사에 대한 무지로 정리한 바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한일협정 후 미국의 일본 담론에 영향을 받아 재구축된 인식이었다.

1947년 냉전이 대두되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반공 자본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지역통합전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결국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이 되었고, 자본주의 동맹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반소반공을 위해서 일본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냉전 논리를 수용하였다. 한일 간의 국교수립은 예정된 것이었다.

일본의 사과와 보상 없이 한일협정이 타결되자, “일본이 다시 온다”는 위기감이 지식인들 사이에 보편적인 공감대로 확산되었고, 특히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위약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침략에 쉽게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아졌다. 한국인들은 식민지 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 없이 정치적 자주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한일협정 이후 잡지마다 마련된 일본 특집에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경계하는 논설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하지만 한일협정 이후 한일문제에 대한 담론은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한일협정 체결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1945년 이후의 일본 상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을 알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 것은 라이샤워의 저서들이었다. 라이샤워의 저서는 한국 지성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일본관은 한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라이샤워의 저술이 한국인 독자들을 매료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연구자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제시한 독특한 연구시각 때문이었다.

6·25전쟁 후 일본과의 반공연대론을 수용하였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부

응하는 뚜렷한 일본관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제국주의 침략자로서의 일본과 반공연대의 대상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상반되는 일본상은 한국인들의 일본관 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라이샤워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협력과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제3세계 국가들이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라이샤워는 중국,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 비교를 통해 이들 국가의 운명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나뉜 이유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였다. 일본을 경제발전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던 박정희 정권의 정책과 더불어 라이샤워의 일본 근대화론은 제국주의적 침략에 쏠려 있던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을 경제근대화의 문제로 이동시켰고, 지식인들이 수용한 일본 근대화론은 향후 일본 '경제동물론'이 정착되는 지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대외정책으로 표방하고 동아시아를 상대로 경제협력에 주력하며 소련·중국·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하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경제적 실리' 추구로 이해하고, 일본을 '경제동물'로 규정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라이샤워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관이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은 은폐되었고, 경제발전의 성과만이 강조되고 있었다.

일제시기부터 일본이 유포해온 일본인의 근면한 국민성, 서양에 필적할 수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라는 일본 담론과 전시통제경제의 효율성을 경험한 한국의 지식인들은 쉽게 '경제동물론'을 수용하였다. 일본의 경제와 문화침투에 대한 열등감은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경제적 실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목표를 세우고 군비확장을 꺾고 있다는 '강국군립론'을 제기하였지만, '경제동물론'은 한국 지식인들과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이익을 최대한도로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정치군사적 행보를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동물론'은 일본의 존재와 역할을 미국의 극동정책에 철저히 종속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급증하는 영향력

과 행보를 시야에 넣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일본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감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일본의 정치·군사에 대한 무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과 달리 일본은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무기 자급화를 실현하였고, 미국의 방위분담 요구에 따라 주일 미군에 대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였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대소위협을 전제로 한미일동맹이 강조된 후, 1986년에는 방위비를 1%로 제한했던 규정이 철폐되면서 일본의 군비확장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현실 앞에서 한국인들은 현대 일본의 실체와 한국인의 일본 인식 사이의 간극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의 일본 담론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일본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정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國會報』, 『思想界』, 『三千里』, 『新天地』, 『自由世界』, 『政經文化』, 『政經研究』,
『週報』, 『靑脈』

- 김민환, 1997,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 閔斗基, 1976, 『日本の歴史』, 지식산업사
- 민족문제연구소, 199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 박정희, 2005,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 박진희, 2003, 「한·일협정 체결과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 - 한·미·일 3국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0
- 박태균, 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76
- 서정익, 2005, 『세계경제사』, 혜안
- 서중석, 1995,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30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봉, 2010,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논총』 54
- 李在五, 1983, 『한·일관계사의 인식 I -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 李庭植, 1985, 『韓國과 日本 - 政治的 관계의 照明』, 教保文庫
- 全海宗·閔斗基 編著, 1964, 『日本史』, 知文閣
- 鄭秉學, 1967, 『日本史』, 探求堂
- 정일준, 2005, 「한국 지식인의 대일인식과 한일회담」, 『한국사연구』 131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 1996,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 지명관, 2004, 『한일관계사 연구 - 강점에서 공존까지』, 소화
- 최기영, 1995, 「한일협정 반대선언문집」, 『근현대사강좌』 6
- 최상용, 1994, 「일본연구의 동향과 한국」, 『일본·일본학 -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오름
- 한모니카, 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50
- 韓培浩 외, 1978, 『現代 日本의 解剖』, 한길사

韓培浩·李相禹·崔相龍, 1977, 『韓國·美國·日本－韓國安保의 環境과 課題』, 亞細亞政策研究院

사카이 나오키, 2000, 「엄치없는 내셔널리즘－서양과 아시아라는 이항대립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당대비평』 13

伊藤正直, 1996, 「ドッジ・ライン前後の『經濟計劃』と後期占領政策」, 『經濟學論集』 62, 東京大學

로널드 슬레스키, 2010,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최근 50년의 발자취』, 현학사
패트릭 스미스 지음·노시내 옮김, 2008, 『일본의 재구성』, 마티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72, 『日本帝國興亡史』, 서문당

라이샤워 지음·이광섭 옮김, 1997, 『일본 근대화론』, 小花

라이샤워·페어뱅크 著·全海宗·高柄翊 譯, 1964, 『東洋文化史』 上, 乙酉文化社

에드윈 O.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59, 『日本帝國興亡史』, 陽文社

에드윈 O. 라이샤워 著·康鳳植 譯, 1968, 『(美國인이 본) 日本』, 微文出版社

E·O. 라이샤워 著·金基實 譯, 1982, 『日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기문사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著·全海宗·閔斗基 譯, 1989, 『東洋文化史』 下, 乙酉文化社

Fairbank, John K., Reischauer, Edwin O., and Craig, Albert M., 1965,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Reischauer, Edwin O., 1946, *Japan: past and present*, New York: Knopf

Reischauer, Edwin O. and Fairbank, John K., 1960,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ABSTRACT]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Japan after The Korea–
Japan Treaty

Chung, Jina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Japan can be summarized into antipathy against imperial exploitation, favorable impression of Japanese economy and culture, and ignorance of Japanese politics and military. This is less a natural consequence than the result of influence by discourses on Japan in the Cold War Era.

With the conclusion of Korea–Japan Treaty in 1965 without apology or compensation from Japan, the consensus “Japan is coming again” spread widely among Korean intellectuals. In particular, Koreans who had experienced the colonial rule of Japan had strong wariness against imperialistic economic invasion of Japan.

However, the urgent question was how to cope with it if Japan comes again. Thu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Korean people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understand changes in Japan since the 2nd World War along with their wariness of Japan. This desire was largely satisfied by Edwin O. Reischauer's writings.

Reischauer presented the model of Japanese modernization, which was achieved without revolution, as a textbook for Third World countries. Accepting Reischauer's theory of Japanese modernization, Korea began to think separately Japanese imperialistic invasion and its modernization process, which had been like the two sides of a coin.

Reischauer's theory of Japanese modernization moved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Japan, which had concentrated on imperialistic invasion, to the issue of modernization, and this provided an intellectual background for the emergence of the 'economic animal' theory in the future.

As Japan profess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as its external policy and promoted economic cooperation with East Asia, contacting communist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China and North Korea, some researchers understood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as Japanese national interest and branded Japan as 'an economic animal.' Through this, Japanese militaristic expansion was covered up and only the outcomes of economic growth were spotlighted.

'The economic animal theory' regarded Japan as a being thoroughly subordinate to the Far East policy of the U.S. and, by doing so, it overlooked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of Japan as argued by 'the dominant power theory.' Faced with the growth of Japan as a military superpower, Korean people confront the task of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ir perception of Japan and the actuality of contemporary Japan. This will be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nfluence of American discourses on Japan and establishing a subjective viewpoint of Japan.

keywords

Cold War, Perception of Japan, Korea-Japan Treaty, Reischauer,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Economic Animal Theory, Dominant Power Theory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 『세카이』의 북송·한일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

임성모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본고의 과제는 냉전기 일본 지식인의 한국 인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 시기와 주체가 너무 방대한 만큼 분석과 서술에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시기적으로 냉전기 전체가 아니라 일본에서 냉전체제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1950~1960년대를, 주체 면에서는 일본 지식인 일반의 한국 인식이 아니라 ‘진보파’ 지식인의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이 단순히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1950년대 중반이라는 시기는 전후 일본이 아시아와의 전향적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봉쇄되고 동아시아 냉전의 ‘외부’에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패권적 보수정당 자민당의 탄생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55년체제’는 그러한 사태의 표상과도 같았다. 본문에서 서술하듯이, 이 시기는 전후 탈식민화의 과제가 일본 사회에서 망각되고 은폐되는

‘원형’에 해당하며, 그 이후의 역사적 전개는 최근까지도 그 ‘변주’에 불과했다. 또한 이 시기 일본의 진보파는 위의 가능성을 가장 의식적으로 추구했던 지식인 집단이었던 만큼, 이들의 아시아·한국 인식에 깃든 문제점과 한계는 곧 일본 지식인 혹은 사회 전체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 진보파 지식인의 아시아·한국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시사잡지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면면을 검토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사잡지는 당대의 이슈와 의제가 사회적 공론장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또 집단 지성의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이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를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 대중잡지 『킹[キング]』을 소재로 다이쇼[大正]와 쇼와[昭和] 시기의 ‘공공성’을 조명한 연구가 나온 바 있는데, 시사잡지라는 미디어 권력의 형성과 전개 과정이 사회적 공공성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¹⁾ 시사잡지의 정보 집적 능력과 정보 전달의 기동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사잡지는 동시에 지식인 집단 혹은 집단 지성의 자기·타자인식을 읽어내는 데에도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사잡지의 이 두 번째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냉전기 일본 지식인의 한국 인식을 고찰할 때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시사잡지는 무척이나 많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게이슌쥬[文藝春秋]』나 『쥬오코론[中央公論]』부터 진보적인 성향의 『세카이[世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잡지들 가운데서 월간 『세카이』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로 『세카이』는 패전 직후 1946년 1월에 창간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잡지로서, 일본 사회의 대외 인식을 읽어내는 데 일정한 대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잡지는 ‘진보파’ 지식인 집단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이와나미[岩波] 그룹’의 한국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파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 이 잡지는 지금까지도 간행되고 있어서, 사건 당시의 반응은

1) 佐藤卓己, 2002, 『キングの時代』, 岩波書店

물론 그 이후의 반응까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성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세카이』의 이러한 대표성, 당파성, 성찰성에 주목하면서 거기서 다뤄진 수많은 냉전기 논의들 가운데 특히 ‘북송’과 한일회담에 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사안은 냉전의 최고조기인 1950~1960년대에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남북한 인식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일본인 납치 문제와 중첩되면서 북송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인식의 현재성을 고찰하는 데에도 유용한 이슈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윤건차도 지적했듯이, 한국 문제에 대한 『세카이』의 발언은 한일회담 이후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있다.²⁾ 본고는 그 역사적 ‘전사’이자 한국 인식의 ‘원형’을 고찰하는 셈인데, 이 시기 『세카이』의 논조에 대해서는 한상일과 오다카 도모코[尾高朋子]·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의 선행연구가 있다. 한상일은 1946년부터 1989년까지 『세카이』의 한반도 관련 기사를 망라해서 분석하여 그 시기별·주제별 특징을 짚어냈다. 책의 제목에서 바로 드러나듯이 진보적 지식인의 비이성적이고 편향된 인식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한다. 김일성 회견기와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 나타난 편향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고의 대상 시기에 관해서는 ‘어두운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반한친북’의 지향성을 강화했음이 강조된다.³⁾ 한편 오다카·다카사키는 ‘북송’ 연구의 일환으로서 『세카이』의 논조를 『주요코론』과 비교하면서 분석했다. 재일조선인과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 책임의 문제로서 주제적으로 파악한 점,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해 비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기대의 과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⁴⁾ 두 연구는 입장의 차이에

2) 윤건차, 김응교 외 옮김, 2009,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창비, 295~298쪽

3) 한상일, 2008,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 세카이와 한반도』, 기파랑

4) 尾高朋子·高崎宗司, 2005, 「歸國運動に關する『世界』と『中央公論』の論調」, 高崎宗司·朴正鎮 編, 『歸國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 封印された日朝關係史』, 平凡社

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인식이 지닌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전자는 1970년대 이후의 논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후자는 ‘북송’ 연구의 일환으로서 제한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일본의 아시아·한국 인식이 지닌 특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1950년대 일본에서 냉전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아시아 인식을 배경으로 해서, 또 그 일환으로서 한국 인식이 형성·전개되었음이 경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하 본론에서는 일본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냉전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을 개관하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 지식인 사회가 갖게 된 아시아 인식의 문제점을, ‘시장·안보’로서 아시아를 수단화하게 되는 경과에 주목하여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북송’과 한일회담 관련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나타난 한국 인식의 구체상을 조명하기로 한다.

II. 냉전의 정착과 ‘시장·안보로서의 아시아’

시사월간지 『세카이』는 일본 패전 직후인 1946년 1월부터 간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종합잡지이다. 미 점령군의 지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전후의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문화국가’ 건설을 제창하며 창간된 잡지였다. 발행처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의 창업자 겸 잡지 발행인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는 일본의 패전이 ‘도의와 문화’의 노예화에 기인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군벌과 관료의 횡포와 독선에 휘둘린 전시체제의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신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발행인의 입장은 창간사에서 좀 더 자세히 부연되었다. 전후 문부

성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법학자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는 일본의 문화가 ‘지난 10년간’ ‘일부’ 군인, 정치가의 무지와 단견으로 시국이 ‘일탈’하였는데, 그 핵심은 도의와 문화에 봉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도의와 문화를 노예화한 데 있다고 말했다.⁶⁾ 여기서 ‘일부’, ‘일탈’, ‘지난 10년간’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1930년대 이후 소수가 빚어낸 예외적 사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와나미 시게오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진보적 개혁은 도중에 [5개 조] 어서문(御誓文)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메이지유신의 진정성을 추구하여 어서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신일본 건설의 근본원리라고 생각한다”⁷⁾고 말한 바 있다. 일본 근대화 과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쇼와의 일탈’을 ‘메이지로의 회귀’를 통해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후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과 달리 공화주의 혁명의 계기를 배제하고 기존의 천황제적 지배체제가 변형된 ‘상징천황제’를 정당화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이른바 ‘올드 리버럴리스트’라 불리기도 했던 『세카이』 창간 집단은 기본적으로 전후에도 천황제라는 일본 ‘국체(國體)’에 대한 신념을 바꾸지 않았던 셈이다.⁸⁾

여기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 지식인 집단이 공통적으로 유지했던 내셔널리즘 지향성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성이 일본 사회에서 제국의 기억을 소거하고 식민지 지배의 기억을 은폐함으로써 식민주의를 지속시키는 결과로 나아가는 데 동아시아 냉전체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5) 安倍能成, 1957, 『岩波茂雄傳』, 岩波書店, 277쪽. 전기의 필자인 아베 요시시게는 경성제대 총장이었고 패전 후에는 초대 문부성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와나미 와 아베가 패전 직후에 만든 도신카이[同心會]라는 단체가 『세카이』 창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6) 田中耕太郎, 1946, 「發刊の辭」, 『世界』 1월호, 1쪽

7) 安倍能成, 1957, 앞의 책, 277쪽

8) 강상중은 ‘올드 리버럴리스트’의 대표적 인물인 도쿄 대학 총장 난바라 시게루[南原繁]의 전후 천황제 인식을 ‘국체 내셔널리즘’의 맥락에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강상중, 2004, 『내셔널리즘』, 이산, 139~146쪽 참조. 난바라 역시 『세카이』의 주요 논객 중 하나였다.

된다.⁹⁾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 이후에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의 형태로 냉전을 맞이해야 했던 중국·한국·베트남과는 달리,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체결에 따라 점령 상태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제국의 기억을 지우고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이름의 '평화 속의 국민국가화'에 매진할 수 있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일본의 아시아 인식에 큰 맹점이 깃들게 되었던 것이다.

1955년의 보수 합동에 의한 자민당의 탄생은 전후 일본 사회의 구식민지, 아시아 인식의 이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고착화시킨 분기점이었다. 후술하듯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 상징되는 구지배층의 복귀에 따라 일본 사회의 정치사회적 보수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지식인의 (역사) 인식 차원에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쇼와사[昭和史] 논쟁'이었다.

1955년에 초판, 1959년에 개정판이 간행된 일본 현대사 개설서 『쇼와사』의 역사서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쇼와사 논쟁'은 당시 일본 지성계의 보수·혁신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전후 최초의 역사인식 논쟁이었다.¹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쇼와사』는 "일본 국민은 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는가, 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¹¹⁾ 발간과 함께 폭넓은 독자층의 환영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곧 전시하의 전향 경향이 있는 문학평론가를 필두로 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판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이 책의 역사서술이 지배-피지배의 양 극단에 존재하는 지배계급(권력)과 피지배계급(국민)의 대항축을 경제관계와 직결시켜 파악하고, 마치 역사가 정치경제 '구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듯 묘사하기 때문에 '인간' 부재의 기계적이고 공식적 서술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었다.¹²⁾

9) 岩崎稔 外, 2005, 『繼續する植民地主義』, 青弓社 참조.

10) 논쟁의 주요문건은 大門正克 編, 2006, 『昭和史論争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를 참조하라.

11) 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 1955, 『昭和史』, 岩波書店

12) 비판은 전향 비평가 가메이 가쓰이치로[龜井勝一郎]에서 시작되었다. 龜井勝一郎, 1956, 「現代歴史家への疑問」, 『文藝春秋』 3월호; 龜井勝一郎, 1957, 『現代史の課題』, 中央公論社 참조.

『쇼와사』의 저자들이 ‘지배계급’의 전쟁책임을 부각시키는 데에만 치중한 결과, 피지배 민중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그려내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을 저지하지 못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동요하고 침묵하는 국민’이 결국 전시체제에 단순히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가 서술 되어야 했다. ‘지배계급’을 ‘국민’에서 배제시키는 기묘한 논법으로는 ‘동의’의 자기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을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도리어 ‘지배층’의 책임에 대한 추궁의 주체로 만들 뿐이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하면서 일본 국민의 ‘피해의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던 비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진보적 역사학자들 또한 ‘가해자’로서의 일본 국민이라는 측면, 바꿔 말해서 민중의 전쟁책임이라는 문제를 비껴감으로써 ‘국민=일본인=피해자’라는 도식적 이미지를 암묵적으로 동일하게 재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

『쇼와사』의 집필자들로 대변되는 일본의 ‘전후 역사학’은 종래의 파시즘 지배체제를 비판하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세계사의 발전법칙’ 규명을 내세워 전후 일본의 민주화를 지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전후 역사학’은 ‘쇼와사’라는 ‘제국’의 역사를 ‘국민국가’의 역사로 축소시켜 일국사적 틀 속에서의 지배-피지배 관계로만 서술함으로써 ‘아시아의 시선’을 배제하고 말았던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당시의 일본 역사학계는 ‘국민=일본인’의 역사만을 시야에 넣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식민지 지배에 따라 창출된 안팎의 ‘非국민’적 존재들은 은폐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인식 속에서 ‘제국’의 역사를 망각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았다. 요컨대 ‘쇼와사 논쟁’에서 ‘국제관계 속의 쇼와’, 그리고 ‘아시아의 시선’은 논쟁의 양측 모두가 결정적으로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13) 酒井直樹, 2000, 「日本史と國民の責任」, 歴史と方法編集委員會 編, 『帝國と國民國家』, 青木書店. 역사 서술 및 교육과 관련된 쇼와사 논쟁의 함의에 대해서는 임성모, 2011,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쇼와사 논쟁과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참조.

‘쇼와사 논쟁’의 경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지식인 사회가 전반적인 보수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점령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복귀’한 일본은 기시 내각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국가주의적 사회 재편 속에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냉전에 편승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1955년의 반동회의가 상징하듯 동남아에서 유럽 제국주의의 결정적 퇴장과 아시아·아프리카의 상대적 약진 추세 속에서 ‘제3세계’ ‘비동맹운동’의 열기도 고조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전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1950년대 후반은 아직도 선택지의 유동성이 남아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 지식인들은 ‘국민’이라는 일국사적 틀에 안주하여 아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이었고, 이는 주체적 전쟁책임론의 결여로 귀결됨으로써 아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다시금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던 것이다. ‘성찰로서의 아시아’는 뒤켤으로 물러나고 ‘시장·안보로서의 아시아’가 전면화되었다.

이 시기 ‘안보로서의 아시아’ 인식을 체제화한 것은 만주국 관료 출신의 보수경원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이끈 자민당 정권이었다. 기시는 1955년 보수합동을 성사시켜 자민당을 창립하고 1957년부터 1960년까지 1, 2차 내각을 조직하며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는 대미의존, 경무장, 경제 중시로 요약되는 소위 ‘요시다 노선’ 대신에 ‘대미자립’과 군비확충을 표방하며 ‘대국주의’ 노선을 지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대국주의를 지향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동아공영권’의 반복이 될 수는 없었다. 먼저 전 시기와는 달리 ‘친미반공’에 입각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만 일본의 대국화가 가능했으며 그 ‘세력권’도 기존의 동북아 중심에서 동남아 중심으로 이행했기 때문이다.¹⁴⁾

미소 냉전체제의 등장,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 내에서 미국의 압도적 위상이라는 새로운 조건 아래서 전후 일본의 대국화를 추진하려면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대치하는 미국의 힘을 빌려 아시아에서 자기

14) 渡邊治, 2007, 「戦後保守政治の中の安倍政権: 「軍事大國」派の系譜」, 『現代思想』 35-1, 118~119쪽

세력권을 구축해야 했다. 그리고 이때의 세력권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동남아까지 포괄하려 했던 대동아공영권과는 달리 그 중심이 동남아로 옮겨갔다.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화된 상황에서 예전의 식민지·점령지와 같은 동북아에서의 세력권을 부활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기시 정권의 대국주의 노선은 군사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방의 기본방침’의 제정과 소위 ‘1차방’ 추진에 따른 군비 확충이 전형적 사례였다. 기시 내각이 전 내각에서 인계받은 국방회의는 ‘제1차 방위력 정비 3개년 계획’(약칭 1차방)을 결정하여 군비 확충을 본궤도에 올렸다. ‘국방의 기본방침’이 제정됨으로써 미국과의 안보체제를 기조로 대처할 것임도 명시되었다.¹⁵⁾

한편 기시 정권은 대외적으로 개발주의에 입각한 경제외교를 추진하였다. ‘시장으로서의 아시아’를 지향한 이 경제외교의 주요 무대는 바로 동남아시아였다. 기시는 취임 직후 동남아 개발기금 구상을 제시했다. 일본의 이니셔티브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각출해 기금을 조성하고 동남아 제국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반공과 개발의 가치를 내걸고 아시아에 접근함으로써 동남아 제국의 경제심을 완화시키는 한편, 동남아 시장 진출에 미국을 끌어들이므로써 일본의 자본 부족을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동남아 제국의 경제심 때문에 기시의 개발기금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때의 동남아 경제외교는 기시 이후의 동아시아 외교를 규정하는 기본틀로서 정착되기에 이른다.¹⁶⁾

기시는 1957년 5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이, 대만을 순방했다. 아시아 순방의 시점은 기시가 6월 워싱턴에서 일미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안보개

15) 中村隆英·宮崎正康 編, 1995, 『岸信介政權と高度成長』, 日本經濟評論社, 53쪽

16) 예컨대 1960년대 중반에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주도로 창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형성시켰다. 박태균, 2005, 「1960년대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형성과정: ECAFE와 아시아 개발은행을 중심으로」,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참조.

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직전이였다. 미국에 대한 대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종래 미군 주둔 협정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안보조약을 쌍무적인 상호방위조약으로 '개정'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고 있던 기시는 미국과의 교섭에 앞서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미국에게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¹⁷⁾

기시는 자신의 개발주의에 입각한 동남아 외교 전략을 이렇게 표명하였다. “동남아시아는 현재 미소 양 진영의 힘의 공백지대가 되어 있다. 일본이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제외교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또 부흥한 일본 경제의 시장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는 일본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공업력과 기술로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경제기반 확립을 원조하는 동시에 일본의 시장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도 밀접하게 결합하는 방향이 향후 일본 외교의 진로이다.”¹⁸⁾ 즉, ‘반동회의’로 상징되듯 동남아에서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최종적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힘의 공백지대’)에서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미국의 지원 아래 동남아 시장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모색하지는 것이 기시의 동남아 외교 구상이었던 것이다.¹⁹⁾

기시 내각은 이와 같은 안보,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대국주의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정책과 복지국가적 국민통합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경제성장 정책은 하토야마 내각 시기에 책정된 경제자립 5개년 계획을 이어받은 新장기경제계획의 수립과 계통적인 국가 개입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이 국가주도 경제의 주체는 통상산업성(통산성)과 경제기획청이었다. 고도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의 ‘소득배분계획’은 이미 기시 내각 시기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⁰⁾

한편 기시 내각은 국민통합의 강화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국가형 통합도 추진했다. 제2차 내각 시기에 집중된 복지국가 정책은 각종 보험, 연금

17) 岸信介, 1983, 『岸信介回顧録』, 廣濟堂出版, 312쪽

18) 吉本重義, 1957, 『岸信介傳』, 東洋書館, 292쪽

19) 宮城大藏, 2001, 『バンドン會議と日本のアジア復歸』, 草思社 참조.

20) 中村隆英·宮崎正康 編, 1995, 앞의 책, 2~3쪽

입법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우선 신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의 전국화가 제도화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실업보험이 확대되었다. 1959년에는 최저임금법이 성립되는 한편 국민연금법이 성립되어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자영업자, 영세기업 노동자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²¹⁾

그런데 본고의 논지와 관련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성장과 복지의 수혜자인 ‘국민’의 범주에서 재일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 집단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이었다.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듯이, ‘북송 사업’에 의한 실질적인 축출 정책까지도 본격화하고 있었다. 기시 수상이 1957년 9월에 남한 정부의 반대를 무마하고 ‘북송’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제 적십자사와 좀 더 적극적인 교섭을 벌일 것을 일본 적십자사 측에 요청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²²⁾

이처럼 1950년대 후반기의 일본은 아시아와의 관계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망각하는 방향으로 고착되어 갔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제국’의 기억을 은폐함으로써 ‘인권·성찰로서의 아시아’는 사라지고 미일안보체제 아래 일본의 번영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시장·안보로서의 아시아’가 독주하는 사상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세카이』의 보도에 나타난 한국 인식은 기시 정권-안보투쟁-고도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시기에 일본 사회가 드러낸 전후 아시아 인식의 한 단면이었던 것이다.

21) 中村隆英·宮崎正康 編, 1995, 앞의 책, 129쪽

22) 당시에 기시는 임시로 외무성 장관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시의 발언은 일본적십자회장의 서신을 통해서 파악된다. 테사 모리스-스즈키, 한철호 옮김, 2008, 『북한행 엑서더스』, 책과함께, 223쪽

Ⅲ. 북송 관련 보도의 남북한 이원론

『세카이』의 한국 관련 보도는 한국전쟁에 관한 보도가 일단락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없었다가 1958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계기는 이승만라인에 의한 일본인 어부 억류와 밀항자 등에 대한 오무라[大村] 수용소 억류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 정부가 1957년 말 억류자 석방에 합의하게 된 것이었다. 1953년에 ‘구보타[久保田] 망언’으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도 이를 계기로 재개되었다. 이듬해 1월부터 석방된 억류자 가운데 일부가 북한행을 요구하고 이것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세카이』의 관련 보도가 게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송’이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정부가 인도주의의 미명 아래 추진했던 재일조선인 추방 프로젝트를 가리킨다.²³⁾ 이 ‘사업’에 따라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9만 3천여 명의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귀국’했는데, 그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석방된 수용소 억류자 일부의 북한행 요구였던 것이다. 『세카이』가 이 문제에 대해 취한 입장은 소위 ‘인도주의’적 대응이었다. 『세카이』는 북한행 요구자들을 희망대로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적십자 정신’에 부합하며 그것은 ‘인도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송을 지지하였다.²⁴⁾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송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재일조선인 중 희망자를 모두 북한으로 ‘송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이 문제를 1958년

23)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북송(사업)’이라는 표현이 정착되어 있으나, 당시 한국의 매체에서는 ‘송북’이란 용어도 자주 등장했으며 일본과 북한에서는 ‘귀환·귀국(사업·운동)’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에는 각 주체들의 상이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북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24) 筆者未詳, 1958, 「日韓抑留者の相互釋放—日本の潮」, 『世界』 3월호, 128~133쪽; 筆者未詳, 1959, 「朝鮮人歸國問題と人道主義—日本の潮」, 『世界』 5월호, 47~52쪽

9월의 한일회담 본회의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²⁵⁾ 남한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각의는 1959년 2월 북송 문제를 ‘기본적 인권’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 통념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는 외무성 방침을 ‘초당파적’인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6월에는 일본과 북한 적십자사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송 실현 교섭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1959년 12월 14일 니가타[新潟] 항에서 975명의 북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카이』는 북송에 대하여 ‘민족의 대이동’,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 운동’, ‘자유권에서 공산권으로의 집단 대이동’,²⁶⁾ ‘일본과 북한의 우호의 가교’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재일조선인에게 ‘제2의 8·15의 감동’이며 ‘조국 건설과 통일 투쟁’에 참가하려는 ‘숭고한 정신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귀국 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남한의 북송 반대운동에 대해서 국내 정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전술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민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 내의 북송 저지운동도 별 호응이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였다.²⁷⁾

『세카이』는 북송 시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초기와는 달리 남한과의 관계, 미국과

25) 일본 정부의 북송 정책과 한일회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현진, 2008,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재일한국인의 북한 송환」, 『일본공간』 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참조.

26) 냉전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이주한 경험은 재일조선인 북송만이 아니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모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아시아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동남아시아 화교들의 귀국 러시 사례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94,000명의 화교가 귀국하는 등, 1960년대 초까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환한 화교의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한다. Michael R. Godley, 1989, “The Sojourners: Returned Overseas Chines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cific Affairs*, Vol. 62, No. 3. 유럽의 경우,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까지 약 50만 명의 서독 지역 독일인이 동독 지역으로 이주한 바 있다.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2010, 「피난처 동독?: 왜 50만 서독인은 분단시기에 동독으로 갔을까?」, 『역사비평』 91

27) 筆者未詳, 1959, 「在日朝鮮人歸國問題－日本の潮」, 『世界』 8월호, 139~143쪽

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북송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아울러 제일조선인 북송을 계기로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일적인 한국보다 우호적인 북한과의 무역관계 수립이 일본에 더 유익하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²⁸⁾

이처럼 『세카이』는 북송 문제를 ‘인도주의’ 견지에서 적극 찬성하면서 ‘평화운동’과 ‘일조 우호’의 입장에서 지지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어떤 의미에서 『세카이』의 논조는 당시 일본 내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 보이고 있던 한국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두 정권에 대한 비대칭적 인식, 즉 남한 비판과 북한 지지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카이』에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된 북한 방문기였다. 직접 북한을 목격하고 온 이들의 방문기는 그 어떤 간접 정보들보다도 ‘실체적’인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카이』는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가 된 이후인 1954년 12월호에 처음으로 북한 방문기를 게재하였다.²⁹⁾ 노동농민당 주석 구로다 히사오[黒田壽男]가 국회의원 등 7명을 대동하고 8월 14일부터 참석했던 광복 9주년 기념식 참가기를 남긴 것이다. 전전부터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구로다는 패전 후 일본농민조합 창립을 주도했고 1948년에 노동농민당을 결성한 농민운동 출신의 정치가였다.³⁰⁾

구로다의 방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북한 사회의 실상과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평화통일’ 방식에 대한 시찰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의 북한은 “오늘날 세계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초점에 놓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평화운동에 초석이 된다고 보았

28) 藤島宇内, 1959, 「朝鮮人歸國と日本人の盲點」, 『世界』 10월호, 190~195쪽; 筆者未詳, 1960, 「できるか日朝のかけ橋—世界の潮」, 『世界』 2월호, 105~109쪽

29) 黒田壽男, 1954, 「朝鮮平和の旅」, 『世界』 12월호, 198~205쪽

30) 노동농민당은 1957년에 사회당에 합류하였으며 구로다는 사회당 좌파로서 활동하였다.

다. 또한 소련과 중국 등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평화정책에 관심을 갖고 “대중과 지도자의 생각을 직접 접하고 국가의 시설과 실태를 봄”으로써 ‘사회주의 평화정책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의 방문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무엇보다 전쟁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보이고 있는 역동적인 발전상이었다. 그는 잘 정돈된 포장도로와 녹지대, 그리고 막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던 학교, 극장, 호텔과 정부 청사 및 노동자 아파트 등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아울러 평양 주변의 방직공장 등이 활발하게 가동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구로다는 각 산업 부문에서의 초과 달성 수치들도 자세히 열거하였다. 예컨대 중공업 171%, 전력업 227%, 제지업 285% 등 계획을 초과한 생산 수치가 강조되고 있다. 산업 이외에도 전쟁으로 유실된 수송 부문에서 철도 및 자동차 화물 수송량의 증가에도 주목했다. 자신의 관심 분야이기도 한 농촌 경제 측면에서는 농업협동조합 활동에 주목하여 ‘선구적인 농민의 광범위한 자발적 운동’이 성공적인 농업 집단화를 낳았다고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는 북한이 전후의 급속한 경제 부흥에 성공적으로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구로다가 북한 사회의 이러한 발전상을 민중 생활의 측면에서 강조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동자 아파트 시찰 부분에서는 ‘위생적인 수세식 변소’가 설치된 것, 난방 설비로 스팀이 완비된 것 등을 특필하고 있다. 또 아파트 내에 모든 ‘가재도구가 완비’되어 ‘트렁크 하나만 갖고 입주’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최신식 아파트가 ‘거의 무료’로 공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들은 이후의 북송과 관련하여, 재일조선인 사회에 북한에 대한 유토피아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암묵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구로다의 방문 목적이었던 평화운동과 평화정책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북한과 남한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의 문제이다. 그는 이승만의 ‘북진(무력)통일’론과 김일성의 ‘평화통일’론을 대비시키면서 체제 경쟁의 이념적 측면에서 북한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구로다는 북한 주민들이 “평화에 의해 모두 하나같이 이익을 향유하고 전쟁에 의해 모두 피해를 입는 관계”라고 보았다. 그러한 현실적 이해관계가 북한의 ‘평화주의’에 확실한 ‘물질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가들이 이승만처럼 ‘무력’ 남침 정책을 주장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제창하는” 것도 이에 기반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요컨대 구로다는 북한의 ‘평화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남한 자본주의가 침체·파탄의 국면을 맞아 남북 격차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북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서도 평화지향적이고 우호적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반평화적이고 반일적인 남한과의 관계 개선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로다의 북한 방문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그의 방문 시기는 한국전쟁 휴전 후 불과 1년 정도 경과하여 북한 경제가 여전히 인적·물적으로 어려웠던 시점이었다.³¹⁾ 전후 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외형과 ‘목표 초과 달성’ 등의 구호는 경제 실태와는 큰 격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둘째로 이와 관련해서 그가 자기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 특히 계획 대비 실제생산량 통계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어서 신빙성의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체제 경쟁을 이분법적으로(자본주의=침략, 사회주의=평화) 보는 도식에 입각하여 다분히 이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의 공식 방문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입견에 근거한 선별적 북한 인상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로다의 방문 시기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경제 복구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낳고 있었다. 북한은 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 시행 등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전후 복구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1956)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³²⁾

우선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건사업을 필두로 사회주의 경제의

31) 서동만, 2005,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32) 이종석, 2000,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참조.

토대 건설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전쟁 중인 1951년에 도시계획안이 마련된 평양의 경우, 모스크바 건축아카데미 출신의 건축가의 주도에 따라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경관을 갖춰나가게 되었다. 김일성 광장과 승리거리 등이 이때 새로 정비된 대표적 도시공간이었다. 평양 이외에 청진, 함흥, 원산, 남포, 개성 등이 점차 복구되면서 북한의 경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조립식 건축 방법에 의한 유럽식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촌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1960년대를 기다려야 했다. 이처럼 전후 경제 복구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출발하여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³³⁾

특히 괄목할 만한 변화는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였다. 학교와 학생 수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1955년이었는데, 그 이듬해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이어서 1958년에는 중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전체에 수업료 부담이 사라졌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등 15개의 주요 대학이 복구되고 평양건설대학 등이 신설되고 대규모 공업지역에 공장대학들이 세워지기도 하였다.³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간산업의 일부는 여전히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특히 소비물자 생산에서 낙후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소련의 원조도 줄어들기 시작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 정권은 제1차 경제건설 5개년계획(1957~1961)을 입안하는 한편 그 현실화 방안으로서 ‘천리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부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된 천리마운동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1935)과 중국의 대약진운동(1958)처럼 사회주의적 경쟁원리와 대규모 대중동원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 주택의 신속한 조립에서 나온 이른바 ‘평양 속도’라는 ‘속도전’의 구호와 집단화를 추동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

33) 김성보 외, 2004, 『북한 현대사』, 웅진출판사, 148~150쪽

34) 김성보 외, 2004, 위의 책, 151쪽

를 위해'라는 구호 아래 5개년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가 건설되면서 북한 경제는 전후 복구에 일정하게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북송이 개시된 1959년은 이렇게 북한이 천리마운동에 따라 급격한 경제 성장에 나서고 있던 시기였다.

『세카이』는 북송이 개시된 직후의 북한 방문기를 1960년 6월호에 게재하였다.³⁵⁾ 필자는 자민당 소속 의원이자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대표이기도 했던 이와모토 노부유키[岩本信行]였다. 그는 조선적십자 위원회와 북한 귀국 영접 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1960년 3월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이 글은 당시의 기록이었다.

이와모토의 방문 목적은 재일조선인, 특히 일본인 처의 북송 후 생활상을 시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3월 13일 도착하여 4월 4일 떠날 때까지 평양, 함흥, 청진 등지를 방문하면서 김일, 남일 등 북한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도시의 학교, 병원, 탁아소 등과 농촌을 직접 시찰하였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귀국자 주택을 꼼꼼히 시찰하여 북송자들의 생활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모토에 따르면 귀국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환영은 진정한 민족애와 동포애로 넘쳐흘렀다. 도착 직후 귀국자는 2주 정도의 휴식을 취한 뒤에 모두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하게 되고, 학생은 희망하는 학교에 취학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직장에 취업한 귀국자들은 모두 직장 근처에 새로 지은 주택을 제공받았으며 2주 정도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지급받고, 가재도구 등의 생필품과 의복, 구두까지 제공받았다. 귀국자들은 취업이 결정되는 날, 정규 월급 외에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수당까지 지급받는 특전을 누릴 수 있었다. 일본에서 습득한 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거쳐 추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도 없었다. 이와모토가 관심을 집중한 약 430명의 일본인 처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점을 제외하고는 직장과 집 근처 북한인들

35) 岩本信行, 1960, 「北朝鮮の印象－歸國者達をたずねて」, 『世界』 6월호, 127~134쪽

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어 일본에서 우려하는 부적응의 우려는 없다고 평가되었다.

이와모토는 특히 북한 체제의 급격한 근대화에 주목하였다. 그는 북한이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변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경탄했다. 체제 변혁의 결과, 북한 사회의 건설은 예상보다 백 배나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이와모토는 토지를 모두 국유화하여 토지의 구획정리에 아무 장애가 없는 북한 당국이 근대식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는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제일주의’에 따라 유럽식 노동자 주택이 도시 중심부에 속속 들어서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그는 또한 대규모 방직 공장, 비료공장, 제철공장, 기계공장 등이 근대적 설비로 자동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공장이 할당된 생산계획량을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는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고 있다. 농수산업에서도 공동 경작, 수확과 분배에 따라서 자급자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이와모토는 북한의 사회보장과 교육제도를 높이 평가했는데, 이는 이른바 ‘귀국자’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보장은 의료, 간호, 탁아 등 전 분야에 걸쳐 선진국 수준이었다.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입원, 치료, 왕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약품도 무료로 제공되었다.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과 주부의 일손을 돕는 탁아소의 운영이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 초등·중등 교육의 전액 국비 부담, 고등교육 수업료 무료 등을 특필하는 한편, 대학 장학금 지급을 위한 교육기금의 조성, 공장 노동자를 위한 통신교육 제도의 시행 등에 주목하였다.

그는 북한이 아직 전쟁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는 못하였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소비물자가 부족하며 통제·배급경제의 전면화로 서비스가 결핍되었다는 점들을 지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방문기는 북한의 사회보장과 교육제도에서 나타나는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귀국자’들의 대우를 긍정적으로 그려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 귀국자들은 물심양면으로 완벽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귀국자들은 모두가 희망에 따라 취직하

고 주택을 공급받고 어린이 교육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사회보장은 철저히 실시되어 생활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 일본에서 실업 상태에 있던 귀국자들은 정말로 극락정토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와모토는 북한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우호적이며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북일 무역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남한 정권과 달리 합리적이라는 점,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귀국협력운동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라도,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반성하는 책임 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귀국자를 받아들이는 북한 체제의 실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하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차별 대우와 실업 상태’에 처해 있던 조선인들의 귀국 선택은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량 북송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었는데, 주일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로 보낸 전보를 보면, 일본 당국의 책임자가 “귀국 사업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³⁶⁾ 『세카이』의 북송 관련 보도, 특히 두 차례의 북한 방문기가 ‘진보파’ 지식인들의 북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의 국내 여론에 미친 『세카이』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IV. 한일회담 관련 보도와 식민주의의 지속

『세카이』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비대칭적 인식은, 북송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보도와 맞물려 한일회담에 대한 비판적 보도 태도로 이어졌다. 한일회담에 관한 보도는 1970년대 이전까지 『세카이』의 한국 관련 보도 가운데 가장

36) 테사 모리스-스즈키, 한철호 옮김, 2008, 앞의 책, 430쪽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³⁷⁾ 그것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미국의 영향 아래 동아시아 냉전이 고조되고 있던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한일회담이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51년 연합군 총사령부의 중재로 시작된 한일회담은 1965년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5·16 쿠데타로 인한 일시적 중단이 있었으나 한일회담은 1961년 제6차 회담의 재개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이케다 정권 모두 ‘정치 생명을 건’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 물론 거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일 양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1961년 이후의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에서 격심한 반대운동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반대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연결시켜 한일회담이 전전 일본의 침략의 부활, 즉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보는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³⁸⁾ 반면에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미국의 냉전 정책 비판, 일본 자본의 신식민주의적 진출과 남북 분단 고착화를 비판하고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하는 맥락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세카이』 역시 같은 입장에서 한일회담을 보도하고 있었다. 한일회담 반대 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일본 외교의 주체성 문제였다.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아시아 외교에서 미국의 냉전 정책에 쉽게 편승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세카이』는 미국이 한일회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등지의 민족해방운동에 맞설 반공 군사동맹의 수립과 대한 경제원조 삭감분의 일본 전가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즉, 미국은 남한,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를 잇는 안보 벨트를 형성하여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방위비 부담을 유도할 목적으로 남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남한과의 국교 정상화가

37) 한상일, 2008, 앞의 책, 27쪽

38) 이재오, 1984, 『한일관계사의 인식 1-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참조.

북한과의 대결 구도로 귀결되고 그것은 곧 중국과의 적대관계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에 불리한 국제관계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었다.³⁹⁾

그 연장선상에서, 기시 노부스케 등 자민당의 회담 추진파가 남한의 '반공방파제'화와 자본 진출의 실익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졌다. 먼저 남한의 공산주의화가 일본의 공산주의화로 이어진다고 하는 냉전적 도미노 이론을 비판하면서, 일본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의 공산주의화까지 방어하는 위험을 무릅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⁰⁾ 또한 보수 정권과 재계가 남한 시장의 확보,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 남한 경제 자립의 원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제적 국익과 기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자본의 남한 진출은 기본적으로 신식민주의적 자본 진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일 민족주의를 고조시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저해할 것이며, 남한과의 경제적 밀착은 북한과의 단절을 낳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일본의 안보 환경에도 위협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

『세카이』가 한일회담에 반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였다. 즉 남한과의 단독 국교정상화는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되어 '두 개의 조선'을 고정시키고 남북 분단을 영구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며 이는 동아시아 평화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한반도의 중립화에 따른 냉전체제 탈피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동서 냉전에서 찾고, 그 냉전 구도에 편승하지만 않는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이나 베트남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진단까지 내리고 있었다. 이를 위해

39) 坂本義和, 1965, 「日本外交への提言-中國・朝鮮・ヴェトナム問題をめぐって」, 『世界』 4월호, 58~66쪽

40) 加藤周一, 1965, 「過則勿憚改-日韓會談とヴェトナム戦争」, 『世界』 4월호, 45~51쪽

41) 野口雄一郎, 1965, 「對韓進出を競う日本資本-第三次訪韓經濟視察團をめぐって」, 『世界』 6월호, 187~193쪽; 野口雄一郎, 1965, 「日韓經濟協力の虚構」, 『世界』 9월호, 51~61쪽

남북한의 상호불가침 협정, 경제문화 교류, 그리고 ‘고려연방’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계급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⁴²⁾

『세카이』의 이러한 입장은 5·16 쿠데타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에 대한 평가와 당연히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주목할 것은 제3공화국을 ‘식민지형 파시즘’이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즉, 제3공화국은 “외부의 압력과 피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국내 지배의 방법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전쟁에서 나타난 잔학 행위나 군대의 대학 난입이야말로 식민지형 파시즘의 체질적 표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⁴³⁾ 필자인 도쿄대학 교수 사이토 다카시(齋藤孝)가 스페인 내전사 연구의 전문가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사이토는 프랑코 정권과의 類比로서 박정희 정권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카이』의 입장은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주장과도 거의 유사했다. 1965년 총련 중앙상임위원회가 간행한 팸플릿을 보면, 한일회담은 ‘미국 극동 침략정책’의 산물이자 ‘일본 독점자본의 재침략’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므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자립을 위해 애국세력이 단결하여 ‘반미 구국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⁴⁾ 그런 점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세카이』의 주장들은 ‘친한반북’의 구도를 강화하는 문맥에서 읽힐 개연성이 다분하다.⁴⁵⁾

가장 큰 문제는 『세카이』에서 한일회담을 비판한 대부분의 논설들이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사이토 다카시의 ‘식민지형 파시즘’론은 ‘피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논하고 있음에도 한일회담의 쟁점에 포함된 식민지 청산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본

42) 小幡操, 1964, 「日韓會談と朝鮮統一問題」, 『世界』 2월호, 57~58쪽

43) 齋藤孝, 1965, 「分割國家韓國と朴政權の體質」, 『世界』 10월호, 45~52쪽

44) 在日朝鮮人總連合會中央常任委員會, 1965, 『韓日會談を論ず』, 在日朝鮮人總連合會

45) 한상일은 세카이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반미 분위기를 조성했고 북한의 통일 논리를 대변해 주었으며 한국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한상일, 2008, 앞의 책, 83쪽

의 한국사 연구자 하타다 다카시[旗田巍]의 주장은 식민주의 비판의 맥락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마산에서 출생한 ‘식민지 2세’인 하타다는 한일회담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실 의제들과 함께 ‘일본의 조선 통치 선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즉 재산청구권, 문화재 반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독도 귀속문제 등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경시에 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들 의제가 일본인 사이에서 비교적 간단히 소개되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데에 일본인의 일한회담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주장은 남한에서의 반대운동에 대한 일본 지식인의 응답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글은 《동아일보》에 번역되어 실리기도 했다.⁴⁷⁾

하타다는 한일회담 전에 일본 언론의 핫이슈가 되기도 했던 소위 ‘이진우(李珍宇) 사건(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⁴⁸⁾ 구명운동의 과정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반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진우 소년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조선인 차별 의식에 대한 참회의 심경이 그러한 입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이진우 구명운동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본인의 책임에 대해 명시한 바 있었다. 즉 “조선인으로서 자각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일본 사회의 차별적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이런 잘못된 환경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같은 사회에 사는 인간으로서, 과거에 동포라고 불렀던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명했던 것이다.⁴⁹⁾

46) 旗田巍, 1963, 「日韓會談の再認識－日本人の朝鮮觀」, 『世界』 12월호, 49~56쪽

47) 旗田巍, 1964, “韓日會談의 再認識”, 《東亞日報》 1964년 4월 1일자

48) 1958년 도쿄의 고마쓰가와 도립 고등학교 야간반 여학생의 유괴살인 사건이다. 살해자로 지목된 소년 이진우(체포 당시 18세)는 증거 불충분 상황임에도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각계각층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962년 센다이 형무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野崎六助, 1981, 『李珍宇ノオト－死刑にされた在日朝鮮人』, 三一書房 참조.

49) 朴壽南 編, 1979, 『李珍宇全書簡集』, 新人物往來社, 105쪽

하타다가 보기에는 한일회담에 대한 찬반 양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그에 입각한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였다. 그럴 때 비로소 일본은 아시아와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타다와 같은 인식은 『세카이』로 대변되던 진보적 지식인 집단 내에서도 소수파 의견에 머물렀다. 앞서 ‘쇼와사 논쟁’에서 나타났던 무의식적 식민주의의 지속이 이념 논쟁의 저변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기 일본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이 갖고 있던 최대의 맹점이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냉전기 일본 지식인의 한국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진보적’ 시사 월간지 『세카이』에 나타난 한국 인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제3세계론이 대두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를 대상으로 아시아 인식의 일환으로서 한국 인식을 검토하였다. 특히 재일조선인 ‘북송’과 한일회담에 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남북한 이원론에 입각해 북송을 지지하고 한일회담에 반대하였다. 세카이는 북한 방문기 등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북송이 재일조선인 추방사업이라는 인식은 결여하고 있었다. 한편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대미 자립 외교, 신식민주의적 자본 진출 비판, 분단 고착화 저지, 동아시아 평화 유지 등을 내걸고 반대의 논진을 폈지만, 남한의 반대 이유였던 식민지 지배의 책임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표면화된 이래 일본 사회를 강타한 ‘북한 때리기’의 일환으로서 『세카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세카이』의 인권 문제 비판에서 남북한에 대한 비대칭적 입장, 다시 말해서 ‘친북반한적 편향’이 곧 ‘북한 지원’이 된다고 하는 일본 우파의 공격에서 비롯된 이 비판에 대해 『세카이』 편집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면서 논쟁이 진행되었다.⁵⁰⁾ 반박 논지의 골자는 “기사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한 “곡해를 바탕으로 가해지는 지극히 의도적인 캠페인”이라는 것이었고, 비난의 대상인 ‘친북반한’적 편향은 일본 사회의 ‘북한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를 북일 국교 정상화로 잇기 위한 노력임이 강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세카이』 비판이 납치 문제 이후 북송 연구를 둘러싼 최근의 담론 투쟁과 연동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거칠게 압축하자면 일본의 우파 지식인들이 북송의 일차적인 책임주체가 북한이냐 일본이냐 하는 이분법적 구도로 논의를 몰아가며 ‘아사히[朝日] 그룹’과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주장을 ‘일본 책임론’이라고 공격하고 있다.⁵¹⁾ 그러나 테사의 논지는 ‘적십자 인도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북송에 대한 다국적 책임의 한 주체로서 일본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카이』 편집부에서 지적한 “기사의 시대적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1950~1960년대 일본의 한국 인식을 조명하고, 그것을 2000년대의 한국 인식과 중첩시켜 파악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50) 編集部, 2003, 「朝鮮問題に關する本誌の報道について」, 『世界』 2월호, 260~266쪽

51) 菊池嘉晃, 2006, 「北朝鮮歸國事業の瓜痕」, 『中央公論』 11~12월호; 菊池嘉晃, 2007, 「北朝鮮歸國事業は日本の‘策略’だったのか」, 『中央公論』 12월호 등

참고문헌

『世界』 1954~1965

김성보 외, 2004, 『북한 현대사』, 웅진출판사

서동만, 2005,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이재오, 1984, 『한일관계사의 인식 1-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이종석, 2000,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한상일, 2008,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세카이와 한반도』, 기파랑

이현진, 2008,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재일한국인의 북한 송환」, 『일본공간』

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임성모, 2011,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쇼와사 논쟁과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강상중, 임성모 외 옮김, 2004, 『내셔널리즘』, 이산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2010, 「피난처 동독?: 왜 50만 서독인은 분단시기에 동독으로 갔을까?」, 『역사비평』 91

윤건차, 김응교 외 옮김, 2009,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창비

테사 모리스-스즈키, 한철호 옮김, 2008, 『북한행 엑서터스』, 책과함께

高崎宗司·朴正鎮 編, 2005, 『歸國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封印された日朝關係史』, 平凡社

龜井勝一郎, 1957, 『現代史の課題』, 中央公論社

吉本重義, 1957, 『岸信介傳』, 東洋書館

大門正克 編, 2006, 『昭和史論争を問う』, 日本經濟評論社

朴壽南 編, 1979, 『李珍宇全書簡集』, 新人物往來社

安倍能成, 1957, 『岩波茂雄傳』, 岩波書店

岸信介, 1983, 『岸信介回顧錄』, 廣濟堂出版

岩崎稔 外, 2005, 『繼續する植民地主義』, 青弓社

野崎六助, 1981, 『李珍宇ノオト-死刑にされた在日朝鮮人』, 三一書房

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 1955, 『昭和史』, 岩波書店

在日朝鮮人總連合會中央常任委員會, 1965, 『韓日會談を論ず』, 在日朝鮮人總連合會

佐藤卓己, 2002, 『キングの時代』, 岩波書店

- 中村隆英・宮崎正康 編, 1995, 『岸信介政權と高度成長』, 日本經濟評論社
- 菊池嘉晃, 2006, 「北朝鮮歸國事業の瓜痕」, 『中央公論』 11~12월호
- 菊池嘉晃, 2007, 「北朝鮮歸國事業は日本の'策略'だったのか」, 『中央公論』 12월호
- 渡邊治, 2007, 「戦後保守政治の中の安倍政權: 「軍事大國」派の系譜」, 『現代思想』 1월호
- 酒井直樹, 2000, 「日本史と國民的責任」, 歴史と方法編集委員會 編, 『帝國と國民國家』, 青木書店

Godley, Michael R., 1989, "The Sojourners: Returned Overseas Chines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cific Affairs*, Vol. 62, No. 3

[ABSTRACT]The Japanese radical intellectuals' perception on Korea in
the Cold War Era

Yim, Sungmo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Japanese journal *Sekai* and tried to reveal the radical Japanese intellectuals' perception on Korea. Especially focused on the exodus to North Korea from 1959 and Korean-Japanese conference to 1965, I revealed their dualism on Korea, pro North Korea and anti South Korea, and their general lack of historical understanding about the responsibility on the colonial era.

Sekai made an important role on making a positive image on North Korea in Japan, but lacked understanding that exod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Japanese intellectuals lacked a historical perception on the responsibility for Japanese colonialism.

keywords

Sekai, Cold War, Japanese intellectuals, progressives, north-south dualism, exodus to north Korea,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awareness of Korea

냉전시기 '자유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한국 인식(1949~1960)

오병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중국의 부상'이 뚜렷해지면서 중국과의 공생·공존은 더욱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설정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해 보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그에 앞서 근대 이래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 국제관계는 양국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자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한·중 관계 역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지평 속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 특히 근대적 자아 또는 민족주의는 근대적인 세계 인식과 밀

※ 투고일: 2011년 7월 7일, 심사일: 2011년 8월 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1) 냉전시기 국제관계를 한미·한중 등의 양국관계의 틀이 아니라 지역적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논증된 사실이다(李鐘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한중 관계를 이리한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최근 국민정부 외교부 당안자료 등 자료 공개와 냉전사 연구의 진전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裴京漢, 2010, 「中日戰爭時期 蔣介石·國民政府的對韓政策」, 『歷史學報』 208; 劉曉原, 2009, 「東亞冷戰的序幕: 中美戰時

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서 지역은 자기 정체성을 투영하고 실현하는 상상 공간으로서 표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은 중국이 구상하는 자기 정체성과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냉전시기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세계적인 냉전추세와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체제가 여전히 현실적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까닭이다.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냉전체제는 국가단위의 체제경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전에 없이 확장된 시기였다. 이는 한국은 물론, 내전을 겪은 중국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세계 주변부, 반 주변부적 지위를 벗어나 마침내 지역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구상이 냉전의 심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浮上하고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의 일면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하관의 해체와 동아시아 근대 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매체, 지식인, 또는 각종 담론 분석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1940년대 이후 세계질서의 변동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의 대한 정책의 변화를 중화주의의 변용이라는 틀에서 해명하려는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²⁾ 그러나 냉전시기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까닭으로, 전후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 및 한국 인식을 폭넓게 조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고는 우선 당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간행한 대표적 잡지인 『자유중국』(1949~1960)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한국 인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外交中の朝鮮問題」『史學月刊』2009-7

2) 李在鈴, 2006, 「20世紀中葉 韓中關係의 理解」, 『中國近現代史研究』29; 李在鈴, 2007,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中國學報』56

자 한다. 당시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냉전체제에 대응하여 창출한 동아시아 인식과 지역질서 구상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지역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중국』을 냉전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중국』의 창간 배경 및 그 성격을 또 다른 잡지인 『관찰』 등과 비교함으로써 『자유중국』의 냉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유주의 실천 과정에서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른바 民主國際論, 또는 太平洋公約 體制 논의가 아시아 反共聯盟論으로 후퇴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 드러난 한국 인식의 실상을 냉전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상호인식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작업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냉전시기 중국의 한국 인식을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지평 속에서 포착함으로써, 중국의 한국 인식을 근원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륙의 주류 지식인이었던 이들의 냉전 상황에 대한 대응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20세기 중화 민족주의의 새로운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중국』의 입장과 노선을 동아시아 냉전 구조 속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냉전시기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자유중국』 창간의 냉전적 배경

『자유중국』은 1949년 11월 창간되어, 1960년 9월 정간된 반월간 잡지이다. 냉전시기 蔣介石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장기간 민주운동을 대변한, 대만의 자유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잡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창간 주체의 구성과 반 권위주의적 지향성 때문에 5·4 이래 중국 자유주의의 계보를 잇는 잡지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³⁾ 중국 근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수행한 계몽운동의 관점에서 평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자유중국』은 냉전이라는 시대 배경 속에서 창간 간행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오사식의 계몽이 아니라, 냉전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에는 자유주의가 단순한 계몽의 논리가 아니라, 특정 체제나 반공적 권위주의를 대변하는 체제 이념으로 작동되었고, 특히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의 정치 문화와 체제 이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공 자유주의를 표방한 『자유중국』 역시 이 점은 예외가 아니었으니, 창간 과정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유중국』이 첫 호를 낸 것은 국민정부가 臺灣으로 공식 천도한 직후인 1949년 11월이었다. 그렇지만 창간 논의는 이미 1949년 3월 上海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北京을 탈출한 胡適, 雷震 등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중공의 長江 渡河라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자유중국’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유중국 대동맹’을 결성키로 하고, 그 중심 사업의 하나로 『자유중국』을 창간키로 한 것이었다. 『자유중국』은 애초부터 반공 자유세력의 결집과 사상적 반공운동의 산물인 셈이다. ‘자유중국’이라는 이름은 胡適이 명명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망명정부의 명칭인 ‘자유 프랑스’를 본뜬 것으로, 南北朝 시대처럼, 長江과 臺灣을 근거 삼아 장기간 공산정권에 대항하려는 뜻이었다. 그가 쓴 『자유중국』의 종지 역시 이러한 뜻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의 武力이 이르는 곳마다 엄밀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음을 본다. 철의 장막 아래에서는 신문에 뉴스가 없으며, 언론은 자유를 상실하고, 기타 인민의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다. 고대 전제 제왕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저한 愚民政治이며, 국제공산주의의 계획적인 철의 통치이다. ……”

3) 薛化元, 1996, 『《自由中國》與民主憲政』, 臺北: 稻香出版社; 章清, 2004, 『胡適派學人群與現代中國自由主義』, 上海古籍出版社; 許卓恩, 2008, 『《自由中國》與臺灣自由主義思潮』, 水牛出版社.

1. 우리는 전국 국민들에게 자유 민주의 참 가치를 선전하고,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정치 경제를 개혁하여 자유 민주사회를 건립할 수 있도록督促할 것이다.
2. 우리는 정부가 여러 역량으로 공산주의 철의 통치하에서 일체 자유를 압살하는 전체주의 정치가 더 이상 세력 범위를 확장할 수 없도록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淪陷區의 동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4.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 중화민국이 자유중국이 되는 것이다.⁴⁾

반공이라는 이념 투쟁을 공식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敵區에서 전개되는 자유 반공운동을 고무 격려하려는 것이니, 창간 자체가 지극히 냉전상황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자유중국 운동은 성과를 불문하고 국내의 반공세력의 결집을 전제로 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장개석이 주도한 이른바 三黨訓政에 동조하는 세력 범위를 넘지 않았다. 창간 자체도 蔣介石의 동의와 협조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경비는 국민당에서 염출하였다. 사실상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수호 운동을 지향한 셈이었다.

이러한 『自由中國』 창간의 이념적 성격은, 창간 주체들의 정치노선과 행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우선 이들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반공투쟁의 전면에 나선 것은 곧 자유를 인류 문명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로 해석하고 공산주의를 그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⁵⁾ 특히 소련은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의 일종이며, 그 휘하의 중공은 역사의 반동으로서 결코 더불어 양립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이들이 주로 국민당 중심의 항전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였던 것과 관계가

4) 胡適, 1949, 「“自由中國”的宗旨」, 『自由中國』 1-1

5) 社論, 1951. 7. 1, 「我們的立場」, 『自由中國』 5-1; 1952. 11. 16, 「本刊第三年的開始」, 『自由中國』 15-1

깊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주의를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전체주의에 대한 대항 이념이자, 미국식 민주주의의 체제로서 전제하였고, 전후에는 이를 세계화하였다. 『自由中國』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역시 미국식 정치 문화 또는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유선거에 기초한 정당정치, 기업 자유와 시장경제, 조세정책 등을 통한 사회 개량 등이 중요 내용이었다.⁶⁾ 그리고 그것은 훈정체제의 종식과 헌정체제의 이행, 다당제의 도입 등을 포함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또 전망의 측면에서 여타 세력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치협상회의와 같은 전후 정치공간에, 국민당의 일부로서 참여하면서 시중 국민당 체제 개선을 통한 자유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들이 오랫동안 국민당 체제를 중심으로 항전을 수행하였던 까닭에 여타 세력과 달리 당 내외를 막론하고, 정치구상을 실현할 만한 독자적 기반을 갖출 수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식 정당정치를 모델로 새로운 정당형식의 세력화를 모색하였다.⁷⁾ 호적 등이 『獨立時報』를 간행한 것은 그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격화되는 내전 속에서 독자적 입지 확보는 쉽지 않았다.⁸⁾ 1946년 국민당이 주도한 국민대회와 민사당, 청년당을 끌어들이어 조성한 '삼당훈정' 체제 속에서 헌정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 고작이었다. 물론 이러한 노선도 국민당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 그리고 중공에 대한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치공간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1947년 이후, 미소관계가 악화되고,

6) 오병수, 2010, 「냉전시기 胡適과 반공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이념화 과정」, 동양사학학회 추계발표회 발표요지

7) 당시 1946년 7월 귀국한 호적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결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다. 만일 호적이 직접 정당을 창당한다면 대학교수와 학생은 물론 적지 않은 국민당과 민주동맹 내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46. 9. 1, 「組黨傳說中胡適的態度」, 『觀察』 1-1

8) 이들의 입장은 북경지역 교수 16명이 연명으로 발표한 「中國의出路」(『獨立時報』 1)에 잘 나타나 있다. 국민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최소한 2~3개 정당을 통해 인민의 정권 선택권과 정권에 대한 상호 견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공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변동하면서 결국 국민당과 함께 반공·반소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구별되는 행적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특히 냉전체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에 있었다. 이 점은 당시 反內戰의 논리 속에서 미소와 국공에 함께 비판적이었던 민주동맹 등 민주파 지식인 주류와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민맹 등 민주파 지식인들 역시, 정권 개방을 포함한 헌정체제로의 이행을 통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유럽의 사회주의와 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을 시대사조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영미, 또는 소련식 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제삼의 형식의 체제를 모색하였다.⁹⁾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를 결합한 이른바 중간노선을 표방한 것이다. 정치적 안정 속에서 온건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유럽이나, 또는 제 정치세력이 연합하여 정권을 구성하고,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를 채택한 동구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¹⁰⁾ 미국을 절대적인 모델로 추구했던 『자유중국』 창간 세력과 달리 이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당연한 전제였다. 전후 미국이 고도의 생산기술을 갖춘 강대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식 대의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낙후 또는 보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공 간의 내전으로 가시화되는 냉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자유중국』의 주도세력이 절대적인 친미반소를 표방하였던 반면 『관찰』 등 민주파 지식인들은 냉전 자체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미소 대립을 전제로, 일방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조화시키는 독자노선, 즉 중간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전후 국제정치는 각국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적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무기를 포함하여 군비

9) 伍啓元, 1947. 4. 20, 「從世界潮流論中國出路」, 『觀察』 2-7

10) 吳世昌, 1946. 9. 28, 「政治民主與經濟民主」, 『觀察』 1-5; 張東蓀, 1948. 1. 30, 「關於中國出路的看法」, 『觀察』 3-23

문제, 독일 등 전후처리 문제 등 서로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영과 소련 간의 관계는 조만간 개선될 것이며, …… 미소 간의 적대적 관계도 화평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 어느 일방에 편향하거나 …… 다른 일방을 공격하는 것은 미·소가 전쟁을止揚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아무런 실제 의의가 없다. …… 설사 미·소 간의 투쟁이 더욱 加熱된다 해도 우리가 미국을 편들어 소련에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미소 간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서로를 조화시켜, 합작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도의적·도덕적 입장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¹¹⁾

특히 국공분쟁이라는 국내적 상황이 친미 반소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내전을 중지하고, 미소와 兼親함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이 전후 아시아 유일의 강대국이자 세계 오대강국으로서 부상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내포한 것이었다. 중국은 강국에 걸맞게 신속하게 현대 국가 건설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적으로는 미소 간의 충돌을 緩衝하고, 아시아의 식민지국가와 제국주의 국가를 疏通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각 민족의 정당한 발전을 보장하는, 지역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를 위해서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미·소에 의존하고 있던 국·공, 그리고 국민정부를 지원하여 내전을 부추기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것이었다.¹²⁾ 특히 미국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결국 국민정부가 중공에 대한 군사적 제압에 나선데 대해 “중국의 반동파는 미국의 僭蘇 심리를 이용하여 미소 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위해 반소 반공의 선봉이 되려 한다. ……만일 미국이 이들에게 막대한 軍備를 원조한다면, 그것은 그 무기를 모두 바다에 投棄하는 꼴이 될 것이다”

11) 錢端升, 1947. 3. 15, 「世界大勢與中國地位」, 『觀察』 2-3

12) 吳世昌, 1947. 4. 5, 「從美蘇說到國內」, 『觀察』 2-6; 張東蓀, 1947. 4. 5, 「追述我們努力建立聯合政府的用意」, 『觀察』 2-6

라고 비판하였다.¹³⁾ 특히 이들은 전후 미국의 중국 주둔 및 대중정책에 대해 주권문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¹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자체를 비판하였다.¹⁵⁾ 즉 미국이 애초 중국을 반소 기지화하려다 좌절되자 결국 일본에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반공을 구실로 한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론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周鯨生은 “연합국의 근본 임무는 침략세력의 부활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무장을 해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침략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일체 요소를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련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독일과 일본은 늘 군사적 해결을 앞세웠던 경험에 비추어 소련보다 일본의 재무장이 위협적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또 일본을 국제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적절한 배상의 전제 위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인민들에게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⁷⁾ 특히 일본 사회구조의 청산 없이, 군사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온존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후 동아질서에서 일본의 역할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의 냉전 전략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노선에 비해 『자유중국』의 창간을 주도한 胡適, 傅斯

13) 張東蓀, 1947. 3. 30, 「美國對華與中國自處」, 『文匯報』(『觀察』 2-6)

14) 儲安平, 1946. 11. 9, 「我們對於美國的感覺」, 『觀察』 1-11

15) 楊剛, 1946. 9. 1, 「煩惱的美國人的煩惱」, 『觀察』 1-4; 儲安平, 1946. 11. 9, 위의 글 1-11; 夏炎德, 47. 1. 4, 「論中美經濟關係之前途」, 『觀察』 1-19; 費孝通, 1947. 5, 「美國對華政策的一種看法」, 『知識與生活』 4期; 錢克新, 1948. 3. 6, 「評對國際現勢的一種論調」, 『觀察』 4-2

16) 周鯨生, 1948. 2, 「歷史重演麼?」, 『中央週刊』 10-9; 費孝通, 1948. 2. 28, 「關於日本復興會不會威脅中國?」, 『觀察』 4-1

17) 馬寅初, 1947. 9. 6, 「對日貿易開放與損害賠償問題」, 『大學』 6-3, 4(『觀察』 3-2); 純青, 1948. 6. 12, 「論反扶日」, 『觀察』 4-16. 특히 경제학자인 馬寅初는 대일배상의 내용으로서 중국이 지불한 일체의 戰費, 전쟁기간 중국이 입은 생명, 물자의 손실, 일본이 지배지역에서 행한 인적·물적 착취와 약탈에 대한 비용이 모두 추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출방법과 지불방법을 상세히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年 등은 기본적으로 냉전을 절대적 현실로서 승인하였다. 이들은 1942년 전후부터 미국의 전후 구상을 수용하였고, 미국의 절대적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戰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들은 당시 세계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전체주의 진영과 미국 중심의 민주 자유주의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파악하였다.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적인 영역, 제삼의 가능성은 성립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자유'의 원리 속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중간파 지식인들의 논의를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치부할 정도였다.

이들은 미국식 자유주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추구하면서, 전후 세계질서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강력한 집체적 안전체제의 강화를 희망하였다.¹⁸⁾ 특히 국제연합의 강화와 함께, 전후 미국이 유럽에서 추진한 북대서양 조약과 마셜플랜, 유럽경제위원회와 같은 질서 형식이 동아시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이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되, 중국이 미·영·소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축 주도하여야 한다는 루스벨트의 정책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들이 국민당 중심의 현정운동을 지지한 것 역시 미국의 대중정책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역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들은 전후 미국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냉전전략에 적극 호응하였다. 당연히 일본 재무장에 따른 위협론을 견제하였으니, 戰後 미국이 주도하는 4대 강국 중심의 집체 안보체제는 독일·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할 리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 북한, 외몽고, 헝가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의 팽창주의적 침략성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았다.¹⁹⁾ 따라서 이들의 최대의 목표는 반소 반공이며, 그것은 미국 주도의 집체적 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것은 지역의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냉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수용하고 반공 자유주의를 표방한 전제였던 셈이다.

18) 오병수, 2010, 앞의 글

19) 胡適, 1948. 1. 21, 「致周鯨生」, 『胡適來往書信選』 下, 310~314쪽

Ⅲ. 태평양 공약에서 反共聯盟論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좌절

1_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의 기초

1947년 費孝通은 “만일 중국에 黨爭이 없고,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면 중국은 현재 일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自問하면서, 미국의 보호 속에서 미국식 경제와 생활방식이 이식되었을 중국을 想像하였다.²⁰⁾ 물론 이러한 상상은 전후 미국의 대중정책이 실패함으로써, 미국은 중국 대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중국의 국내정치가 미국의 극동정책을 매개로 냉전체제에 연동되며, 그 進路 역시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자각한 것이었다.

기실 전후 중국 지식인들이 다양하게 모색했던 새로운 국가 건설 구상은 모두 이처럼 유동하는 냉전체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히 가시화되는 미소 대립구조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정체성을 투영할 수 있는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이 그 전제였다.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은 세계와 스스로의 관계를 설정하는 매개였던 셈이다. 따라서 그 상상의 범주와 내용은 국내의 정치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였다. 특히 내전 참패 이후 스스로의 정치 군사적 안전을 국제체제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구의 분절적 지정 전략에 대응하면서, 냉전체제 속에서 스스로의 안전과 자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구상된 것이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구상은 몇 가지 계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국제연합 등과 함께 등

20) 費孝通, 1947. 5, 앞의 글

장한 각종 국제 지역 조직이었다. 국제연합 산하 아시아 및 극동경제위원회는 그러한 예 중의 하나였다.²¹⁾ 극동경제위원회는 전후 국제협력 하에 경제 복구를 위한 조직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편의상 유럽·아프리카 위원회와 함께 조직된 것이었다. 1947년 6월 상해에서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11월 필리핀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던 기아와 빈곤문제, 그리고 역내 무역관행, 결제수단, 범죄단속 등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기금 마련 등이 회의 주제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구성 범주였다. 그것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극동의 5개 독립국가가 주도하고, 동남아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해 관련 국가인 미국, 소련,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독립이 예정되어 있던 미얀마, 스리랑카, 홍콩,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제국의 동의 하에 부회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던 베트남과 미군정 치하의 한국, 일본의 가입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괄한 셈이었다.²²⁾

극동회의는 독립국가를 단위로 조직, 운영되었지만,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중국은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자, 아시아의 유일한 대국으로서, 역사, 자원, 문화 등 조건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수 국가 구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사무소도 上海에 두고, 蔣廷黻이 초대 대표를 맡았다. 경제적 범위에 한정된 것이지만, 국제연합이라는 전후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전제로 한 것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러한 극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아시아의 범주는, 『자유중국』이 동아시아 구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었다. 중국 지식인들의 상상하는 동아시아가 공간적으로는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제한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아시아 상은 내전의 심화과정에서 현실정치적 필요성

21) 夏炎德, 1947. 6. 28, 「論亞洲與遠東的經濟重建」, 『觀察』 2-18

22) 方顯廷, 1948. 1. 10, 「遠東經濟委員會與中國」, 『觀察』 3-20

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 안보체제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다양한 지역질서 구상이 그러하였다. 애초에 그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상응하는 태평양 공약체제에 대한 구상에서 시작된 태평양동맹 형식으로 제기되었다. 물론 나토와 유사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 군사동맹의 필요성은 중국 공산화 전후 동아시아 반공국가에서도 널리 논의되고 있었다.²³⁾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중국에서 본격화된 것은 1949년 7월과 8월, 蔣介石이 국민당 총재 신분으로 필리핀과 한국을 방문하여 太平洋同盟 결성을 제창하면서부터였다. 대만 천도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장개석이 이를 제창한 이유는 우선 국민정부가 공산국제의 침략에 저항하고 있다는 국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내전상황 악화에 따른 중국에 대한 비판과 특히 열강의 중공 승인 등에 따른 국제적 지위 하락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반공전선의 중심국가로서 중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내전 지속에 필요한 보다 많은 정치 군사적 원조를 획득하려는 것이 현실적인 바람이었다. 물론 여기에 호응한 한국과 필리핀 역시 같은 처지였다.²⁴⁾ 1949년 7월, 장개석-퀴리노의 공동 성명으로 구체화된 극동국가연맹안은 중국, 필리핀, 한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시아와 호주, 그리고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를 포괄하는 범주였다. 물론 미국의 참여와 지지가 성패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영국과 인도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특히 회담 직후인 1949년 8월, 미국을 방문한 퀴리노는 연맹의 성격을 군사동맹이 아닌 경제 문화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23) 최영호, 1999, 「이승만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결성」, 『국제정치논총』 39-2

24) 1949년 7월 10일과 11일 장개석은 퀴리노와의 공동회담을 통해 극동국가의 자유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전제로, 합작과 호조의 원칙하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극동국가 연맹조직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 태평양 연안 국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참여와 지지를 성패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개석은 8월 7일 한국의 鎭海에서 이승만을 예방하고 3시간 회담 끝에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연맹조직을 구체화하였던 것이다.

원래의 구상을 철회하였다. 대신 이듬해 바기오에서 한국과 자유중국을 배제한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동맹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지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백서』 발간, 중국의 내전 참패, 영국연방의 중공 정부 승인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역시 추진력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 구상은 반공을 통한 체제 안전 확보에 의의를 두고 있었던 만큼, 그 필요성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중소협정 체제의 출현, 한국전쟁의 발발 등과 같은 외적 요인과,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화하면서 논의가 다시 부활하였다. 그렇지만 조직의 구성 범위와 성격은 국제 정치의 현실변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었다.

2_ 태평양공약 체제에서 아시아 인민반공연맹으로

1949년 국민군의 내전 참패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그러나 내전 참패를 반성할 새도 없이, 중공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보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민정부의 개혁을 통해 자유주의 실현을 추구하였던 『자유중국』 노선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자유중국』은 창간 노선에 따라 우선 적극적인 반공선전에 나섰다. 적극적으로 반공 항아의 의미를 선전함으로써, 자유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체제의 국제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연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국민당은 그나마 자유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정치조직이었다. 따라서 내전 패배에 대한 비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²⁵⁾ 특히 자유중국의 안전과反攻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정부와 미국의 유대강화가 관건이었다.²⁶⁾ 그렇지만 미국의 『중국 백서』 발간과 원조 축소 등의 대중국 중립정책, 그리고 영국과 그 연방인 인도, 파키스탄 등의 중공 승인 등으로 자유중국의 전도는 예측

25) 1950. 1. 16, 「師克在和不在衆」, 『自由中國』 2-2; 雷震, 1950. 2. 16, 「以暴易暴乎」, 『自由中國』 2-4

26) 1950. 7. 16, 「社論：中美交誼的過去和將來」, 『自由中國』 3-2; 1951. 11. 6, 「本刊三年的開始」, 『自由中國』 5-10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곧 타개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급파하여 대만의 안전을 보장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공 내전이 소련의 적화야욕에 따른 국제전쟁이었다는 논리가 상황적인 설득력을 얻게 됨으로써, 국민당 정권에 대한 내전 참패의 책임을 상쇄하고, 나아가 국제연합에 대해 한국전에 개입한 것과 같은 논리로 중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²⁷⁾ 이로써 국민정부는 국제적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중국』은 한국전쟁이 소련의 사주와 중국의 공산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 증명되었고, 일본, 대만,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소극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하고, 소련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중국』은 우선 미국의 냉대로 폐기되었던 太平洋反共聯盟論을 다시 제기하였다. 연맹의 틀 속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²⁸⁾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니, 한국전쟁을 사주한 소련의 최종목표가 일본의 공산화에 있다는 점, 또 중국과 함께 일본만이 한국전쟁과 같은 지역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²⁹⁾ 한국은 국제연합에 의해 갖 태어난 독립국가로서 작전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물론 미중일의 합작 구조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중국의 하위에 둬으로써 스스로 지역질서를 주도하려는 발상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미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시한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전쟁이 발발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 신흥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정부 전복을 꾀하는

27) 1950. 10. 16, 「聯合國不要腐蝕了勝利的果實」, 『自由中國』 3-8

28) 1950. 7. 16, 「社論: 霹靂聲中的覺醒」, 『自由中國』 3-2

29) 湯恩伯, 1950. 7. 16, 「遠東消滅赤禍之關鍵」, 『自由中國』 3-2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륙을 장악한 중공으로부터 정신적·물질적 원조와 격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기가 얼마나 높았겠는가? ……북한이 침략을 감행한 것도, 간접적으로는 소련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공산화가 발판이 된 것이다. …… 만일 우리 정부(자유중국)가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과 抗爭하고, 베트남, 버마, 필리핀 등이 조용히 공산당에 대처했다라면 남한이 이렇게 침략을 받기에 이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미국이 중국 국민정부를 구하지 않고 坐視한 결과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극동에서 反共抗俄는 중국과 일본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이후 극동에서 공산당의 창궐을 막고 제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정부의 反攻 大陸 및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한국 공산당의 철퇴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³⁰⁾

문제의 핵심이 중국의 공산화에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국민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였다. ‘자유중국’은 이러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지역질서 수립안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민주국제론’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1950년 8월, 소련의 세계혁명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雷震이 제기한 것이었다. 발의의 논거는 한국전쟁과 대륙의 공산화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은 세계혁명론에 따라 공산 국제와 각국의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조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침투 전략을 구사하거나, 공개적인 반란을 통해 집요하게 민주국가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민주진영 국가들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³¹⁾ 따라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시즘 진영을 제외한 민주진영만으로 새로운 국제조직으로서 民主國際를 창립하고, 그 하부에 지역별로 반공국가를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유엔의 개조와 지역적인 반공체제 구축론을 병합한 세계 전략인 셈이다. 특히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이 근동, 중동, 극동, 동남아 등 각 지역별로 역내 국가가 참가하는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시적인 공산

30) 1950. 7. 16, 「給讀者의報告」, 『自由中國』 3-2

31) 雷震, 1950. 7. 30, 「民主國家應該怎樣面對現局」, 『自由中國』 3-3

화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복안이었다.³²⁾

주목할 것은 동아시아 지역 조직에 대한 구상이었다. 雷震은 애초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4개 국가로서 구성되는 극동지역 방위체제나, 여기에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광의의 '태평양 공약체제'를 구상하였다. 물론 대만을 지리적 중심으로 상상할 수 있는 동아시아 안보체제였던 것이다.

원래 '민주국제'라는 이름은 내전기에 중간파 지식인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력 연대론으로서 제시한 것이었다. 즉 1947년 7월 楊光時 등이 내전의 격화를 계기로 부활한 공산국제(세계혁명임시위원회)와 소련의 적화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전 세계 자유주의 세력 및 그 정당 간의 연계조직으로서 '민주국제'의 조직을 제창한 것이었다.³³⁾ 그러나 뇌진은 내전 참패와 한국전쟁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국민정부 중심의 지역방위론으로 改作한 것이었다. 뇌진이 이를 제기한 의도는 미국 외교의 유럽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가칭 太平洋公約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 방어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지역 집체 안보체제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32) 1950. 8. 16, 「社論: 民主國際才是防共長堤」, 『自由中國』 3-4; 1950. 9. 1, 「社論: 迅速締結太平洋公約」, 『自由中國』 3-5

33) '민주국제'라는 발상은 1947년 중간파 지식인들의 현실 대응 논리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 배경은 당시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이니, 우선 미소관계의 악화는 사실이지만, 양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에 따른 3차대전의 가능성은 매우 적고, 따라서 소련 역시 직접적인 침략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장 정책을 구사할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공산세력과 연계한 내전이 폭발하고 동시에 그것이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없고, 또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반동정권의 강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강력한 자유민주세력의 형성을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국민정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원조하고 또 각국의 민주세력과의 국제적인 연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원조에 기초한 민주세력 강화론인 셈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전전 스페인 내전을 필두로 전후 폴란드, 유고, 이란, 그리스,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내전이 모두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또 한국에서도 국제적 내전이 예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장동손 등은 여기에 적극 호응하였으니,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적 간섭으로 전화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극 수용하였다. 楊光時 等, 1947. 7. 19, 「我們對於大局的看法與對策」, 『觀察』 2-21; 吳世昌, 1947. 7. 26, 「論民主國際」, 『觀察』 2-22; 張東蓀, 1947. 3. 30, 앞의 글

한 이유는 영미의 의견차이, 특히 영국의 유럽방위 우선주의, 미국 내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노선차이 때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국가의 단결을 통해서만 공산세력의 확장을 저지할 수 있으니, 영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동아시아 각국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공수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⁴⁾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그 관건으로 인식하였다.³⁵⁾ 또 뇌진은 이 같은 군사동맹을 기초로 역내의 민주국가 간의 협력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인,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민간 국제조직도 구상하였다. 그의 동아시아 지역 체계에 대한 구상이 꼭 군사동맹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군사적 방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구상에서 주목할 것은 반공을 전제로 한 중·일 合作論이었다. 蔣介石의 “中日親善, 經濟提携, 共同防共”과 일맥상통한 것이지만, 뇌진 역시 일본 재무장과 중일 상호 공존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베트남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공산화 위협에 대해 미국의 단독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域內 自律的인 防衛力量을 키울 필요가 있으니, 중견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상호 공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민정부에 대한 미국의 軍事원조의 확대와 일본의 재무장은 그 전제였다.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기 대일화약과 재무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⁶⁾ 또 국민정부는 한국전쟁에 파병 등 직접적인 개입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군사원조만 있으면, 단순한 대만 수비를 넘어서, 곧바로 대륙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 문제, 동남아 문제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支援을 전제로 한 大陸反攻論인 셈이었다.

이러한 일본 조기 재무장론은 일찍부터 제시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左舜生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을

34) 1950. 9. 1, 「社論: 迅速締結太平洋公約」, 『自由中國』 3-5

35) 1951. 9. 1, 「給讀者의報告」, 『自由中國』 5-5; 黃雪村, 1951. 11. 1, 「美國應如何爭取主動底止侵略」, 『自由中國』 5-9

36) 1951. 5. 1, 「社論: 對日和約與集體安全」, 『自由中國』 4-9

원조하여 가능한 한 早期 反攻을 모색할 것, 한국에 무기를 원조하여 북한에 대한 우세를 유지할 것, 일본을 공개적으로 무장시키고 육해공 진지를 가능한 한 확대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³⁷⁾ 그것은 한국전쟁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공산화를 겨냥한 것이고, 또 한국이 소련의 침략을 받은 것은 곧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인 만큼, 일본의 재무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일 화약이 선행되어야 할 절차였다.³⁸⁾ 이들은 일본에 대한 우호적이고 관대한 요구를 제안하면서 일본의 재무장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쓸데없는 杞憂로 일축하였다. 일본이 진정으로 민주국가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도가 없을 것이며, 전후 사회개혁을 통해 이미 과거 군국주의 전통을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았다.

1. 일본의 무장은 일정한 양적인 한계가 있다. 군수공장도 마찬가지이다. 또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이 소련의 침략을 경계하는 한편 일본의 무장을 동시에 감시할 것이다.
2. 일본은 섬나라로 해군력이 없으면 군사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데, 현재 해군이 몰락해서 단기간에 부흥이 곤란하다.
3. 중국이 역량이 있으면 일본을 감시할 수 있고 최소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다.
4. 일본에게 경제적 출구를 주어 국민생활의 안정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조선, 대만, 동북을 상실한 대가를 중국이 처리할 수 있다.
5. 일본인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일 합작을 통한 민주진용 강화론은 1950년 중·소협정 체제의 출현과 '소련 일변도' 정책에 따른 냉전체제의 심화, 베트남 위기, 한국전쟁의

37) 左舜生, 1950. 7. 1, 「趕快解決對日和約」, 『自由中國』 3-1. 좌순생 역시 전후 일본의 진보운동을 소련 음모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지적하고, 중미일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련을 대적하며, 한국을 통일하고 모택동의 500만 군대를 소멸, 동남아 등의 적화야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8) 毛子水, 1951. 3. 1, 「日本의和約問題和加入聯合國問題」, 『自由中國』 4-5; 羅鴻詔, 1951. 3. 16, 「日本會不會再事侵略?」, 『自由中國』 4-6; 1951. 5. 1, 「社論: 對日和約與集體安全」, 『自由中國』 4-9

미흡한 결말 등 상황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고 제기되었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미일 화약론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미일 화약은 소련의 비판을 무릅쓰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화약과 동시에 태평양 연안에 대한 별도의 방어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였다.³⁹⁾ 따라서 미중일 합작론은 자유주의 체제의 중주국인 영미의 세계전략과 연동하여 중국과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서 지역질서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교전국이자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주도성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서 국민정부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맹주로서 역할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티베트나 동북을 포함한 전 중국과 공산주의의 압박을 받는 반공적 인민의 대표로서 국민정부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숨은 의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인도 등의 방관 또는 방해 때문이었다. 영국과 인도는 지속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고, 미국 역시 국민정부가 아닌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상하였을 뿐이었다. 특히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50여 국과 함께 대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에 대한 어떠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재무장에 대한 뚜렷한 견제장치도 두지 않았다. 和議에 항의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삼각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질서를 완성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 일본의 요구에 따라 교전국이자, 이웃국가인 한국과 자유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대일화약은 무엇보다도 우선 아시아의 장기적 평화와 단결이란 측면과 둘째는 미국이 부담할 수 없는 반공 반침략의 역할을 일본에 부담시킨다는 측면이 있는데”, “교전국인 중국을 배제했고, 아시아의 인접국가를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39) 羅盤, 1950. 7. 16, 「美國何以急需對日和約」, 『自由中國』 3-2

아시아 민주세력의 단결이라는 和約정신을 위배한 것”이었다.⁴⁰⁾ 그렇지만 『자유중국』은, 대만을 배제한 미일화약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일 단독 화약을 맺었다.⁴¹⁾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타결방식으로 진행된 대일 화약에 대한 『자유중국』의 반응이었다. 『자유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화약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대표성이 아닌 대만에 대한 지배권만을 인정하였고, 배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특히 吉田 등 전쟁의 주도세력에 대한 청산도 없었고, 일본의 국민의식도 변화가 없었다.⁴²⁾

그럼에도 『자유중국』이 中日和約을 수용하였다. 미국 주도의 강력한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물론 반공 평화의 논리에 따라 중일화약에 대해 『자유중국』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⁴³⁾ 첫째, 화약의 취지가 反共·反蘇에 있음을 명확히 할 것, 특히 중소우호조약의 당사자로서 한국전쟁의 전범 국가이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전제될 것, 둘째, 전승국으로서 (자유)중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 특히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중공과의 교류는 자제할 것, 셋째, 이를 태평양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삼을 것, 그것은 영미를 중심으로 중·일·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 구성할 것 등이었다.⁴⁴⁾ 반공을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 논리를 수용하지만, 자유중국의 정치적 위상을 분명히 하려 하였던 것이다. 특히 국민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표로서 정당한 위치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본이 중공과 교섭할 것을 경계하였다.⁴⁵⁾

40) 黃正銘, 1951. 8. 16, 「對日和約中國參加問題」, 『自由中國』 5-4; 孫宏偉, 1951. 8. 16, 「論美澳紐三國安全條約」, 『自由中國』 5-4

41) 1952. 2. 1, 「社論: 急轉直下的中日講和」, 『自由中國』 6-3

42) 余蒼白, 1952. 3. 1, 「吉田書簡與吉田哲學」, 『自由中國』 6-5

43) 1952. 2. 1, 「給讀者的報告」, 『自由中國』 6-3; 1952. 3. 1, 「給讀者的報告」, 『自由中國』 6-5

44) 1952. 2. 1, 「社論: 急轉直下的中日講和」, 『自由中國』 6-3; 1952. 2. 16, 「爲中日簽約問題正告日本和我國政府」, 『自由中國』 6-4

45) 1952. 2. 16, 「給讀者的報告」, 『自由中國』 6-4

그렇지만 對日和約은 중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기초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자유중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화약 체결 후 중국의 지역적 주도권도 유지되지 못했다. 대일화약 자체가 전범국에서 독립국으로, 일본의 국제적 지위변동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애초 국민정부의 기대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것이다.⁴⁶⁾ 오히려 이후 일본은 ‘현실외교’, ‘독립노선’을 표방하면서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저울질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진정한 합작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지도 못했다.⁴⁷⁾ 『자유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이 갖는 이러한 희극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일본은 소련의 위협 하에 있다는 것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였다.⁴⁸⁾

중일 화약 후 일본 국민이 교만해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일본은 과거의 실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외교에서 일본은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니, 적극적으로 자유를 쟁취하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다.⁴⁹⁾

일본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화약 이후 일본이 전쟁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아시아 제국들과 ‘불쾌한’ 관계를 양산함으로써 태평양 공약체제 구축의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이었다.⁵⁰⁾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미국이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운용한 데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우월적 지위를 보증하면서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대만의 국제적 역할을 제약하였다.⁵¹⁾

46) 실제 일부 지식인들은 화약을 근거로 일본을 독립국으로 호명하였다. 매우 작위적인 처사로 생각된다. 徐逸樵, 1953. 4. 1, 「今後日本の政局」, 『自由中國』 8-7

47) 1952. 3. 1, 「論中日合作的前途并再告兩國當局」, 『自由中國』 6-5; 徐逸樵, 1952. 8. 1, 「論日本的新善隣政策」, 『自由中國』 7-3

48) 苗劍秋, 1951. 11. 6, 「爲日本前途憂」, 『自由中國』 5-10

49) 1951. 12. 1, 「給讀者的報告」, 『自由中國』 5-11

50) 徐逸樵, 1952. 8. 1, 앞의 글

51) 朱仲耘, 1952. 5. 1, 「脫變中的美國對臺政策」, 『自由中國』 6-9

이에 따라 『자유중국』은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거듭 태평양공약 체제의 실현을 촉구하였다.⁵²⁾ 그나마 미국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안보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핵심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 문제이니, 일본은 결코 유럽에서 서독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일본은 전전 수준의 역량을 회복할 수 없고, 회복한다 해도 모험적인 침략을 강행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중심의 접근방식으로는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중국만이 동아시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 문제의 핵심은 중공의 침략을 저지하고 중국을 해방하는 것이니, 이것만 해결되면 미국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공산세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공은 한국전쟁에서 예봉이 꺾였기 때문에 노골적인 침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아시아 각국과 연계하여 자유세계를 위협할 것이니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공약체제를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태평양 공약체제의 범주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남아와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을 두루 포함하는 범주였다. 당연히 지역이 넓고,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이 결심만 한다면 성립이 안 될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만 나서 준다면, 현재 반공 의지가 강력한 한국, 자유중국,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우선 조직하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은 국력은 회복했지만 명백한 반공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되거나 의미 있는 반응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중국』이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한 대안이 한중일 삼국의 반공동맹이었다.⁵³⁾ 아시아 각국의 조건이 서로 달라서 유럽의 북대서양

52) 1953. 12. 1, 「美國應如何領導自由世界」, 『自由中國』 9-11

53) 1954. 7. 1, 「社論: 建議韓中日同盟」, 『自由中國』 11-1, 이러한 주장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조인과 대만에서 국민대회 개최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정치체제가 정착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특히

조약기구와 같은 단일한 지역 방위체제의 성립이 어렵고, 미국이 영국의 동의 하에 별도의 동남아연맹을 창설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서구의 분절적 지정전략에 따라 동남아연맹과 같은 지역 방위체제에서 배제된 한중일 삼국만이라도 별도의 연맹을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한중일 삼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고, 특히 미국이 동경을 중심으로 극동에 대한 군사작전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반공의식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한국과 자유중국, 그리고 선진적 공업 조건을 갖춘 일본의 동맹이 현재로서는 타당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일 연맹론조차도 실현되기 어려웠다.⁵⁴⁾ 일본 정국이 어수선하고, 한일 간에는 편치 않은 감정이 개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⁵⁾ 특히 신속히 체결되었던 중일회담과 달리 한일회담은 배상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1953년 구보타의 망언으로 좌초하였다. 『자유중국』은 미일화약에 반대하는 일본의 반미 정서와 더불어 한국의 민족감정이 삼국동맹의 난관임을 인식하였다.⁵⁶⁾ 서구의 지정정책 외에도 역내의 각국 간에도 극복하기 힘든 분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자유중국』은 일본 정국을 방치하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자유당과 민주당을 통합하는 보수대연합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한국의 대일 민족감정에 대해서 반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배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중국이 종전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묵은 감정을 버렸듯이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에 방해가 되는 이승만식의 반일적 태도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긴밀해진 한중관계도 한뫼하였다. 한국전쟁을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 보았던 자유중국은 시중 휴전회담 과정에서, 회담 자체를 반대하며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미국에 맞선 이승만을 지지하였다. 게다가 국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대만에서는 한국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하였다. 1953년 11월 이승만의 대만 방문은 이러한 긴밀해진 양국 관계의 상징이었다.

54) 1952. 8. 1, 「論日本の新善隣政策」, 『自由中國』 7-3; 1954. 8. 1, 「社論: 對亞洲人民反共會議的期望」, 『自由中國』 11-3

55) 1955. 1, 「美國應有明朗的對日政策」, 『自由中國』 12-1

56) 1954. 11. 1, 「韓國近來的態度是否利於反共」, 『自由中國』 11-9

이후 한국과 국민정부는 각각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안보적 목적에 따른 지역연맹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자유중국』은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논의하였다. 1954년 9월 미국의 주도로, 마닐라에서 성립한 동남아시아조약기구가 한국, 일본과 함께 대만을 배제한 채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 또 프랑스, 서독이 주도한 유럽식 중립주의⁵⁷⁾를 배경으로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회의의 출현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1955년 4월 18일 자카르타에서 2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와 중공이 주도하는 비동맹회의가 개최되고, 회의에서 주은래가 화평공존을 명분으로 미국, 일본에 대한 화평교섭과 대만 문제 해결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커다란 압박이 아닐 수 없었다.⁵⁸⁾

『자유중국』은 이러한 사정은 결국 전후 미국의 정책적 실패와 동시에 공산주의 세력의 '새로운 침략음모'의 결과로 보았다.⁵⁹⁾ 특히 그것은 '중간지대'를 내세움으로써 아시아 민중을 현혹하고, 반공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책략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아시아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조직, 즉 중공과 경쟁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장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도된 것이 아시아 인민반공연맹론이었다. 국민정부가 한국과 함께 발기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지역연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우회하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반공의 저변을 넓히려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다. 일차회의는 1954년 6월 鎮海에서 한국, 중국, 필리핀, 월남, 태국, 홍콩 등 5개국 8개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공감 속에서⁶⁰⁾ 보다 광범위한 기초를 가진 민간 국제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1954년 10월 臺北에서 열리게 될 2차 회의에서는 5개

57) 1953. 12. 16, 「斥中立主義」, 『自由中國』 9-12

58) 1955. 5. 1, 「亞非會議與中共陰謀」, 『自由中國』 12-9

59) 1955. 5. 1, 위의 글; 1955. 6. 1, 「亞盟會議的流產與亞洲團結反共」, 『自由中國』

60) 張佛泉, 1954. 7. 16, 「亞洲人民反共的最終目的」, 『自由中國』 11-2; 1955. 5. 16, 「亞盟要把握住反共的有效武器」, 『自由中國』 12-10

국 외에 일본, 터키, 인도, 파키스탄, 버마 등이 업저버로 참가하고, 향후 중립 친공적인 다수 국가의 반공단체도 조직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 민간 반공 단체로의 발전이 기대되었다.⁶¹⁾ “각국 간의 호혜의 원칙 하에 아시아 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 공업, 농업 등 각 부분별 협작을 도모할 것, ……그리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국가 간의 비자를 폐기하고 자유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주장” 등의 언설에서 이 회의에 대한 자유중국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⁶²⁾ 역사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공동의 적을 두고 화평 박애의 정신에 입각한 아시아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1년 동안 준비 끝에 1955년 6월 열기로 한 2차 회의가 유산되었기 때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도 국가였던 한국의 배일 민족주의가 문제였다. 한국은 1차 회의에서도 일본의 자유반공단체 대표의 입국을 불허하였지만, 2차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역시 업저버 자격의 일본 참가를 이유로 회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親共國家이며, 한국은 赤色帝國主義와 함께 白色帝國主義도 배격한다는 한국 외무장관과 주중 대사의 해명이 있었지만, 이미 합의되고 양해된 회의를 유산시켰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상당하였다.⁶³⁾

특히 『자유중국』은 한국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아맹은 정부단위의 기구가 아닌 민간조직이며 그 목적은 아시아 인민의 반공역량의 단결에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일본 정부가 친공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반공적인 일본 인민의 참가를 막을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럴수록 일본 인민의 반공역량을 강화시켜, 정부의 媾共을 견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국인의 仇日心理는 동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적색제국주의의 위협 하에서 범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을 잊고 단결 분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일 불화는 양국 인민들의 불행이자 아시아 반공 전

61) 1954. 8. 1, 「對亞洲人民反共會議的期望」, 『自由中國』 11-3

62) 陳啓天, 1955. 5. 16, 「今後反共抗俄的三大方略」, 『自由中國』 12-10

63) 1955. 6. 1, 「亞盟會議的流產與亞洲團結反共」, 『自由中國』 12-11; 夏道平, 1955. 6. 16, 「亞洲反共人事在臺北」, 『自由中國』 12-12

도의 불행으로, 아시아의 반공 역량을 약화시킬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 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包時學은 전후 내전을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반공의식이 강화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반공연맹이 조직될 법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협애한 국가주의, 합작 경험의 결핍, 단독으로 연합을 주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빈곤, 그리고 통일적인 아시아의 형성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⁶⁴⁾ 특히 “아시아 각국은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해 왔고, 공업화·산업화 속도가 더딘 까닭에 유럽과 같이 공업화된 현대화 지역과는 달리 민족 간의 상호 이해는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애국주의가 더욱 심화되었으니, 이러한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한 차이와 오해를 강조함으로써 민족 간 반드시 필요한 신뢰와 합작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아시아는 서양과 접촉 이전 서로 왕래가 적었고, 있다고 해도 종편관계에 따른 것으로 호혜적 교왕은 거의 없었다”는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조건 속에 형성된 민족주의와 종편 관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불행히도 아시아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가 되면서, 오히려 각각 서방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식민지 각국 간의 공동 합작의 기회는 매우 적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반공 반소를 위해서는 미국 등 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또 빈약한 국가에서는 강력한 여론이 있을 수도 없어서 합작이 더욱 곤란”한 현실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자유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이 단순한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었다. 즉 동아시아 각국 간의 합작을 방해는 내적 분절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었고, 그것은 그만큼 새로운 전망에 대한 모색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중공이나 식민 제국 등이 아시아의 독립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동아시아 차원의 수평적 공동체에 대한 구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

64) 包時學, 1955. 7. 16, 「亞洲反共人民的團結問題」, 『自由中國』 13-2

이었다. 그것은 공산국가를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⁶⁵⁾ 공산권의 화평외교에 맞서, 이념적인 반공전략이 아니라 문화적 원조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었다.⁶⁶⁾ 실제로 그것은 미국에서 반공법이 강화되고, 대만에 대한 막대한 문화 원조 자금이 결정되면서, 구체적인 실현계기를 맞았다. 특히 정부 기관이 아닌 자유주의자가 주도하는 문화교육 사업의 확장이 논의되고,⁶⁷⁾ 우수한 자유 민주주의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각국에 내재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넘어 이집트, 중동 등 공산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곳곳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다. 아시아의 지역질서 구성을 억압했던, 내외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반공의 중심 국가로서 대만의 위상도 저절로 제고될 것이었다.

그렇지만 반공 분단국가로서 자유중국의 한계는 여전하였다. 특히 지역적 연맹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계속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韓中越三國 合作論이 그러한 예였다. 삼국 모두 반공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군사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의 처지를 고려하여 군사동맹을 모색하지는 것이었다. 동맹의 내용은 합동참모부 개설, 국가원수 교환방문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⁶⁸⁾ 냉전이 규율하는 전시적 상황에서 당연한 발상이지만, 군사적 동맹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문화적 연대를 통한 반공노선이 보다 현실적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65) 1956. 4. 1, 「建立反共知識的權威」 14-7

66) 1956. 6. 1, 「美援急須擴大文化部分」, 『自由中國』 14-11

67) 1956. 5. 16, 「美援與友誼」, 『自由中國』 14-10

68) 1956. 8. 1, 「加強中韓越三國合作」, 『自由中國』 15-3

IV. 한국 인식: 내적 연쇄와 파편성

『자유중국』은 이상의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 속에서 부단히 한국을 呼名하였다. 그것은 아래의 『자유중국』에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 목록에서 알 수 있다.⁶⁹⁾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40편 이상의 한국 관련 기사는 한국전쟁 발발에

69) 『자유중국』 게재 한국 관련 기사 목록

	號數(연월)	題目	著者	비고
1	3-1(1950, 7. 1)	北韓尙向誰宣戰		時事述評
2	3-2(1950, 7. 16)	南韓戰事必拖延		時事述評
3	3-2(1950, 7. 16)	趕快使用原子彈		時事述評
4	3-2(1950, 7. 16)	遠東消滅赤化之關鍵	湯恩伯	
5	3-2(1950, 7. 16)	從韓國戰爭檢討第三次大戰是否暴發	陳恩成	
6	3-2(1950, 7. 16)	美軍在南韓失利的原因	閔錫麟	
7	3-4(1950, 8. 6)	檢討韓國之戰	許思澄	華府通信
8	3-6(1950, 9. 16)	大戰, 韓戰與臺灣	龍倦飛	
9	3-7(1950, 10. 1)	北韓卅八度		時事述評
10	3-8(1950, 10. 6)	韓國問題解決了之後	黃錫和	
11	3-10(1950, 11. 16)	臺灣的軍隊該出動了!		時事述評
12	4-8(1951, 4. 16)	韓戰餘生記	Robert L. S.	
13	4-9(1951, 5. 1)	韓國戰局縱談		時事述評
14	5-1(1951, 7. 1)	韓戰一年對於世界的影響		社論
15	5-2(1951, 7. 16)	開城談判的裏面觀		社論
16	5-5(1951, 9. 1)	開城談判會破裂麼?		時事述評
17	6-7(1951, 5. 1)	從冷戰談到自由世界的經濟合作	鄒文海	
18	7-1(1952, 7. 1)	金日成會見記	何子修	(香港通信)
19	7-5(1952, 9. 1)	南韓聯軍戰俘營反共愛國同胞的一封信		
20	7-10(1952, 11. 16)	如何打開韓戰僵局	董時進	
21	8-10(1953, 5. 16)	韓國濟州道俘營生活素描	向自由	
22	8-12(1953, 6. 16)	韓國停戰就是實行「解放政策」的第一步麼?		社論
23	9-1(1953, 7. 1)	爲李承晚釋俘婉告美國		社論
24	10-2(1954, 1. 16)	韓境反共義士必期釋放		社論
25	11-1(1954년 7월1일)	建議中韓日同盟		社論
26	11-2(1954, 7. 16)	亞洲人民反共的最終目的	張佛泉	
27	11-3(1954, 8. 1)	亞洲人民反共會議的期望		社論
28	11-9(1954, 11. 1)	韓國近來的態度是否利於反共		社論
29	12-12(1955, 6. 1)	亞盟會議的流產與亞洲團結反共		社論

서, 4·19 시기에 걸쳐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주시하고 해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사내용이 한국전쟁이나 4·19시기에 집중하고 있음은 한국을 호명하는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연하지만, 『자유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에는 역시 자유중국의 처지가 투영되어 있었다. 예컨대 한국전쟁의 발발을 소련의 사주에 따른 국제전쟁으로 규정한 것, 또 미국의 초기 대응의 미숙성을 비판한 점, 영국의 압력 하에 미국이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을 강행하고, 더욱이 휴전 과정에서 최소한의 군대도 보내지 않은 영국, 인도 등 외국이 본국인 한국보다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는 것을 비판한 점, 나아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의 반성을 촉구한 것은 국공내전에 견주어 한국전쟁을 해석한 예라 할 수 있다.⁷⁰⁾ 또 이승만의 삼선개헌과 반공법 제정 파동, 민주당의 결성, 대통령 직선 및 4·19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일관된 분석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재야당 결성을 둘러싸고 장개석과 대치하고 있던 당시 대만의 자유주의 지식인의 입장을 투영한 것이었다. 특히 22권 10호(1960)에 실린 “반공은 암흑통치를 지켜 주는 부호가 아니다”라는 기사는 대표적인 예이다. 기사는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 수행과정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결국 아편과 같은 독재에 중독되어, 반공을 권력통치의 공구로 사용하고, 경찰 통치, 반대여론

30	12-12(1955. 6. 15)	亞洲反共人事在臺北	夏道平	
31	13-7(1955. 10. 1)	南韓新反對黨的誕生		社論
32	14-11(1956. 6. 1)	有感於韓國大選		社論
33	14-11(1956. 6. 1)	韓國選民已奠定了光明的民主前途	蔣勻田	
34	15-3(1956. 8. 1)	加強中韓越三國合作		社論
35	20-2(1959. 1. 16)	韓國的政爭與東方的民主		社論
36	20-3(1959. 2. 1)	從韓國戰爭看我國的民主運動		社論
37	22-7(1960. 4. 1)	韓國的流血選舉與反對派之榜樣		社論
38	22-9(1960. 5. 1)	韓國人民的憤怒警醒了美國政府		社論
39	22-10(1960. 5. 16)	「反共」不是黑暗通治的護符		社論
40	22-10(1960. 5. 16)	評「工商日報」對南韓政治風暴的看法		社論
41	22-11(1960. 6. 1)	韓政演變的光明啓示;人類理性時代的展開		社論

70) 1953. 6. 16, 「韓國停戰就是實行「解放政策」的第一步麼?」, 『自由中國』 8-12

탄압, 부패 때문에 결국 인민에게 배척되었다는 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였다. 그것은 곧 장개석의 독재정치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넘어서 냉전 자체를 상대화시키려는 『자유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⁷¹⁾ 이는 이승만식의 독재를 동방 일반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⁷²⁾ 또 이승만 정부가 결국 선거 부정을 통한 독재를 획책하다가 공산당이 아니라 반공청년, 반공學人, 반공민중들의 유혈시위에 따라서 붕괴되었으며, 그것은 '반공정부'에 대한 반대자는 꼭 공산당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은 『자유중국』이 추구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입장과 그에 대한 억압자인 장개석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강했다. 한국의 사례가 국민당 정권 하의 대만에서는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 정치의 변화는 우리에게 명백한 계시를 준다. 인민들이 오랫동안 일당의 高壓과 '반공'치하에 있다면,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며,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며, 장기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상은 억압되고, 경제는 통제되며, 폭력적인 언설의 장막 속에서 灰色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공의 노예이다. 반공의 노예는 밖으로는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안으로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마취와 노역을 당하는 셈이니, 내외의 압박 속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최대의 불행이다. 그러나 만일 민주정치 하에서의 반공이라면⁷³⁾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중국』이 한국을 호명하는 논리적 맥락이다. 사실 『자유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국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종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에 연동된 것이었다. 냉전과 동아시아가 한국을 호명하는 배경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자유중국』이 애초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한국전쟁을 해석하고, 또

71) 1960. 5. 16, 「「反共」不是黑暗通治的護符」, 『自由中國』 22-10

72) 1959. 1. 16, 「韓國的政爭與東方的民主」, 『自由中國』 20-2

73) 1960. 6. 1, 「韓政演變的光明啓示; 人類理性時代的展開」, 『自由中國』 22-11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던 것과 동시에 시종 태평양 동맹체제와 같은 지역질서 속에서 한국을 설정하고 있는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자유중국』이 구상한 태평양 동맹체제의 핵심은 미중일 합작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지극히 주변화된 존재일 뿐이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견국가인 중국, 일본과 달리 신생독립국으로서 국제연합의 보호가 없으면, 일체의 작전 능력도 없는 약소국가일 뿐이었다. 따라서 한국 관련 기사는 각 정치세력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대상인 일본 관련 기사와는 성격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이러한 주변화된 인식은 『자유중국』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구상 변화에 수반하여 변모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중일 삼국 동맹안이나, 또는 아시아 인민반공연맹의 공동 주관자로서 한국의 역할은 크게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국제적으로 대만의 중국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 일본 중심의 미국 동아시아 정책, 이른바 현실외교와 독립노선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중국·소련 정책 등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게다가 미국이 영국과 함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분리함으로써 자유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질서의 장을 허용치 않은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중국은 극동의 유일한 강대국이 아니라, 고립적 반공국가로서 정체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니, 한중일 동맹, 또는 아시아 반공연맹을 추진한 이유 역시 이러한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자유중국에 같은 분단국가이자 반공국가로서, 미국의 지원 하에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는 공통적인 처지의 盟邦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중국』에 실린 한국 관련 정보의 내용이다. 우선 두드러진 것은 한국 관련 대부분의 기사는 정치·국제정치 등 사건을 중심으로 한 時事述評 또는 社論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거의 분석을 결여한 시사보도, 주장 등이고, 정보는 파편적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독재와 4·19 시기에 한국 정치를 민주정치의 틀 속에서 분석한 경우만이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지식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적 체험의 결핍 문제이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예컨대 중국 지식인들은 20세기 초부터 留日 활동이 활발하였고, 유일 학생 등은 이후 국민국가 건설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이 미·러·일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고 심지어 8년 동안 전면항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대국가인 일본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일본 유학 출신 인사들은 장개석의 측근에서 말단 관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배치되어 있다. 자유중국 초기 식민지 시기 교육을 청산하고 국민정부의 이념에 걸맞는 민족주의 교육의 집행자로 파견한 許壽裳과 교육 관료 역시 대부분 일본 유학 출신이었다.⁷⁴⁾

물론 중국의 일본 관련 정보는 일찍부터 근대 지식 제도 속에 편입되었다. 각 대학은 물론 중등학교에서도 동양사, 일본사가 개설되고 교수되었다. 이 같은 일본과의 지적·정치적 그리고 학술제도 차원의 관계는 전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초였다. 특히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대만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본에 대한 정보가 쉽게 전수될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 臺北帝國大學(1928) 사학과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결합했던 본국사(일본사), 동양사, 남양사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 또 전후에 성립한 대만 사대(1946)에서도 각국사로서 일본사를 교수하였기 때문이었다.⁷⁵⁾ 이러한 식민지배의 경험과 지적 유산은 전후에도 쉽게 청산될 수 없었다. 그리고 전후 일본과 대만의 긴밀한 경제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사정을 더욱 복돋았다.⁷⁶⁾

74) 黃英哲, 2007, 『「去日本化」 「再中國化」: 戰後臺灣社會文化重建』, 麥田出版社, 90쪽

75) 吳密察, 2005, 「植民地大學とその戰後」, 吳密察 等 編著, 『記憶する臺灣: 帝國との相克』, 東京大學出版會. 2000년 기준 대만에서 역사계가 개설된 대학은 14개소이지만, 대부분은 1960년대 이후 개설되었다. 초기에 역사를 개설 교수했던 대학은 臺灣大學 歷史學系(1946), 臺灣師大 史地學系뿐이었다. 彭明輝, 2002, 「臺灣地區的歷史研究機構與歷史系課程(1945~2000)」, 『臺灣史學的中國纏結』, 麥田出版社

76) 林滿紅, 2002, 『晚近史學與兩岸思惟』, 麥田出版社, 191~2쪽; 川島眞, 2009, 『日臺關係史1945~2008』, 東京大學出版會. 전후 대만의 경제관계는 미국, 일본

한편 1949년 이후 대만의 역사학, 사회학은 국민정부와 함께 대륙에서 건너온 중앙연구원 歷史語言研究所가 주도하였다. 주로 傅斯年을 중심으로 역사학, 언어학, 고고학을 종합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1962~1971년까지 40만 달러를 지원한 포드재단의 지원을 비롯 동아학회(1963~1973), 중미과학합작사(1968~1974)등을 통한 대량의 학술자금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국식 지역학,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1970년대 이후 사회사가 크게 유행하였다.⁷⁷⁾

문제는, 이러한 학술 상황에 비추어 한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는 대륙에서부터 한국 관련 사료를 수집 정리하는 가운데, 조선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조선 자체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이후 근대사 연구소에서 張存武 등이 조선왕조실록과 청말 외교당안을 활용하여 조중관계를 연구하였지만 그 역시 종편 관계가 연구 주제였을 뿐이었다.⁷⁸⁾ 근대 이래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중국의 학술 또는 제도의 층차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사실 1950년대 초반 『자유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문제와 맞물려 국민정부의 대만지배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시급하게 생각하였다. 대륙에서부터 대만사를 강의해 온 郭廷以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歷史的臺灣』을 3-1기부터 장기간 연재했던 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⁷⁹⁾ 또 『臺灣之農業』과 같은 글을 장기간 기획하여 연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⁸⁰⁾ 한국사, 한국학에 대한

과의 무역관계로 제한되었다. 특히 외교적인 문제로 일본, 대만 간의 국교가 단절된 시기에도 양국 간의 민간 교류는 유지 발전하였다. 한국과의 관계는 미일관계 정상화 이후의 일이었다.

77) 張朋園, 1997, 『郭廷以, 費正清, 韋慕庭: 臺灣與美國學術交流個案初探』,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杜正勝, 2004, 「新史學之路」, 『新史學之路』, 三民書局

78) 潘光哲, 2004, 「張存武先生訪問紀錄」, 『郭廷以先生門生故舊憶往錄』,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79) 郭廷以, 1950, 「歷史的臺灣」, 『自由中國』 3-1, 2, 3, 4, 5, 6, 7, 8, 9, 10, 11

80)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陳世瓚, 1951. 7. 1, 「臺灣之農業」, 『自由中國』 5-1; 陳克誠, 1951. 7. 1, 「臺灣之水利」, 『위의 책』; 戈福江, 1951. 7. 16, 「臺灣之牧畜」, 『自由中國』 5-2; 陸之琳,

연구를 진행할 여력이 더욱 없었던 셈이다.

대만의 한국 인식에서 또 하나 주목할 요인은 『자유중국』 지식인들의 미국 추수적 태도였다. 미국의 정책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냉전적 상황 탓이었지만, 당시 『자유중국』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전후 미국에서 유행하던 반공 보수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Hiss 간첩안이나, 태평양 학회의 사건을 그대로 연재하고 있는 점이나,⁸¹⁾ 『자유중국』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 Ludwig von Mises⁸²⁾나 하이예크를 비롯해서 Budenz Louis,⁸³⁾ Bruce Winton Knigh, Bertram Wolfe(1896~1977), James Burnham⁸⁴⁾ 등은 *Freeman*, *National Review* 를 통해 활동하고 있던 이른바 '자유를 위한 미국의 투쟁'이라는 미국적 이데올로기, 미국식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인물들이었다. 자유를 평등과 구별하여 이념화하고, 공산주의와 소련 체제를 비판하던 트로츠키주의자, 전향 사회주의자, 심지어 Budenz, Louis처럼 소련 간첩 출신도 있었다.⁸⁵⁾ 그나마 Herbert Feigl(1902~1988)은 조금 다르지만, 그 역시 Ludwig Wittgenstein, Karl Popper와 함께 빈학파의 일원으로서 반공 보수주의자였다. 냉전시기 미국 지식계에서 가장 우익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미국식 우익 이념은 주변국에 대한 이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

1951. 8. 1, 「園藝事業在臺灣」, 『自由中國』 5-3; 朱惠方, 1951. 8. 16, 「臺灣之森林」, 『自由中國』 5-4; 王子定, 1951. 9. 1, 「臺灣實施的林業政策」, 『自由中國』 5-5; 梁鋸榮, 1951. 10. 1, 「臺灣土壤概況與農林利用」, 『自由中國』 5-7; 洪北江, 1951. 10. 16, 「臺灣特產香茅油」, 『自由中國』 5-8; 方豪, 1952. 4. 1, 「臺灣的文獻」, 『自由中國』 6-7; 楊錫福, 1952. 4. 16, 「臺灣的地理」, 『自由中國』 6-8; 衛惠林, 1952. 5. 1, 「臺灣的土著族」, 『自由中國』 6-9; 呂訴上, 1952. 6. 1, 「臺灣的音樂」, 『自由中國』 6-11; 宋祖平, 1952. 6. 16, 「臺灣的建築」, 『自由中國』 6-12

81) R. D. Toledano & V. Lasky, 1950. 7. 1·16, 8. 1·16, 「美奸希斯叛國原委」, 『自由中國』 3-1, 2, 3, 5

82) 密色斯, 資友仁 譯, 1950. 1. 1, 「社會主義與專制」, 『自由中國』 2-1

83) 1952. 4. 6, 「蘇俄在美國的陰謀」, 『自由中國』 6-8

84) 1952. 7. 16, 8. 1, 「太平洋學會如何幫助史達林赤化中國」, 『自由中國』 7-2, 3

85) FBI나 S. J. McCarthy가 주도한 국가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Owen Lattimore에 대한 조사에도 증인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컨대 미국과의 안보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일본의 진보 지식인의 동향은 물론 전후 일본의 정치적 동향을 모두 소련의 사주를 받은 일본 공산당, 사회당의 공작 탓으로 이해한 것은 단적인 예일 것이다.⁸⁶⁾ 보수적인 吉田 내각의 실각과 독립외교를 주장하는 鳩山 내각의 등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일본의 정쟁은 형식적으로는 내부정쟁이지만 세계 냉전의 하나의 전쟁 터일 뿐이다. 정쟁의 핵심에는 소련의 공산국제와 연계된 공산당이 있고 이들이 사회당을 추동하여 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니 특히 사회당의 좌익은 일본 공산당의 지원을 얻어 당선되었으니 거의 일본 공산당의 자원 공구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또한 소수당으로서 사회당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므로 사회당에 좌우되는 것이다.⁸⁷⁾

결국 일본 정국을 아시아 반공전선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이 개입하여 자유당과 민주당을 연합시키는 것'을 문제해결의 열쇠로 보았다. 또 "일본 인민이 미국의 뜻을 모르는 것은 위험하다. 인민은 한편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 사회로부터 다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여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공산권과의 관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냉전적 시각은 결국 모든 사회를 반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진정한 상호 인식과 소통을 위한 시각을 갖기는 어려웠다. 동아시아 냉전 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제기하고⁸⁸⁾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86) 苗劍秋, 1951. 11. 1, 「幼稚の左派爲患日本」, 『自由中國』 5-9. 특히 『中央公論』, 『世界』, 『改造』 등에서 '반미', '반자유세력' 특별호를 내어, 일본의 재무장과 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미일 안보조약에 반대한 것을 모두 유치한,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일본 국민의 반전심리를 이용, 일본 민심을 오도하는 등 마치 소련과 공존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결국 공산당에 이용당하고 국제 민주진영의 단결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87) 1955. 1, 「美國應有明朗的對日政策」, 『自由中國』 12-1

88) 1960. 5. 16, 「評「工商日報」對南韓政治風暴的看法」, 『自由中國』 22-10

인식을 시도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냉전주의가 강요하는 인식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는 자유중국 스스로가 갖고 있던 인식의 파편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냉전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계통의 잡지인 『자유중국』(1949~1960)을 통해 중국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한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냉전시기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분절적 지정정책과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분절적 인식 때문이었다.

『자유중국』은 5·4시기 계몽운동을 계승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대변지로 알려져 왔다. 물론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란 측면에 주목해 온 셈이다. 그러나 『자유중국』은 냉전을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미국의 반공이념과 냉전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미국의 군사적 원조에 의해서만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한국 인식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전후 중국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인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지위에 걸맞게 지역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유중국』이 지역질서를 구상하게 된 것은 내전 참패 이후 '대만보위'라는 절

실한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 애초 그것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 체계를 모델로 한 태평양공약 체제 형식으로 제기되었다. 공산화의 위협에 직면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및 서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제 국가가 가입하는 지역안보 체제 구상이었다. 물론 영미의 군사적 지원을 전제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주도하려는 발상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에서 일찍부터 일본 재무장을 전제로 한 대일 화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이 통합적인 지역기구를 허용하지 않았고, 특히 미국은 동남아와 동아시아를 구별하면서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재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자유중국』의 구상 역시 한중일 군사동맹, 또는 한중월 삼각동맹으로 축소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동맹안 역시 성립하기 어려웠으니, 한중일간의 이념 문제, 민족주의 문제 등에 기초한 역내의 분절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중일이 각각 미국과 개별적인 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적 방위 체계의 필요성은 반감되었다. 그럼에도 『자유중국』은 여전히 지역연맹론을 제기하였다. 1955년 중공, 인도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회의의 출현 등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념을 매개로 한 지역안보 체제를 넘어서 경제와 문화 영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구상은 일차적으로는 자유중국 스스로 정체성을 투영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주변국가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자유중국』은 스스로의 지역질서 구상에 기초하여 부단히 한국을 호명하였다. 애초 스스로가 주도하는 지역질서의 주변국가로서 한국을 인식하였지만 이후에는 반공적 맹방국가로 인식하였다. 또 자유중국은 한국전쟁과 4·19 등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입장을 투영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개석 체제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인식은 대부분 파편화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 제도화 과정의 결여, 미국의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각상의 한계가 개입된 문제였다. 따라서 이념으로서 반공을 넘어서 '인권', '자유'라는 보편성 속에서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열려 있지 않았다. 진정한 상호소통을 위한 시각과 제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과제였던 셈이다.

참고문헌

『觀察』, 『時與文』, 『自由中國』

- 高珽休, 2003, 「테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불승인정책」, 『韓國近現代史研究』 25
- 김지환, 2008, 「중일전쟁기 중국의 전시외교정책 - 대미외교와 대소외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동북아역사재단
- 裴京漢, 2010, 「中日戰爭時期 蔣介石·國民政府的對韓政策」, 『歷史學報』 208
- 白永瑞, 2000, 「1949年の中國: 동시대 한국인의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 오병수, 2010, 「냉전시기 胡適과 반공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이념화 과정」, 동양사학학회 추계발표회
- 이완범, 2005, 「트루먼과 동북아냉전」, 『미국사연구』 21
- 李在鈴, 2006, 「20世紀中葉 韓中關係의 理解」, 『中國近現代史研究』 29
- 李在鈴, 2007,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中國學報』 56
- 최영호, 1999, 「이승만정부의 테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결성」, 『국제정치논총』 39-2
- 杜正勝, 2004, 「新史學之路」, 『新史學之路』, 三民書局
- 林滿紅, 2002, 『晚近史學與兩岸思惟』, 麥田出版社
- 萬麗鵬, 2001, 『滿山不許一溪奔; 胡適雷震往來書信集』,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潘光哲, 2004, 「張存武先生訪問紀錄」, 『郭廷以先生門生故舊憶往錄』,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薛化元, 1996, 『《自由中國》與民主憲政』, 臺北: 稻香出版社
- 王蕾, 2009, 『舊金山講和與中國』, 世界知識出版社
- 劉曉原, 2009, 「東亞冷戰的序幕: 中美戰時外交中的朝鮮問題」, 『史學月刊』 2009-7
- 李東華, 1988, 「一九四九以後中華民國歷史學研究發展」, 『中國論壇』 21-11
- 任育德, 1999, 『雷震與臺灣民主憲政的發展』, 臺北: 政治大學出版社
- 蔣均田, 1976, 『中國近代史轉捩點』, 友聯出版社
- 張朋園 等, 1987, 『郭廷以先生訪問紀錄』,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張朋園, 1997, 『郭廷以, 費正清, 韋慕庭: 臺灣與美國學術交流個案初探』,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章清, 2004, 『胡適派學人群與現代中國自由主義』, 上海古籍出版社
- 鄭梓, 1996, 「戰後臺灣行政體系的接收與重建」, 『臺灣史論文精選(下)』, 玉山社
- 彭明輝, 2002, 「臺灣地區的歷史研究機構與歷史系課程(1945-2000)」, 『臺灣史學的中國纏結』, 麥田出版社
- 許卓恩, 2008, 『《自由中國》與臺灣自由主義思潮』, 水牛出版社
- 黃英哲, 2007, 「『去日本化』『再中國化』: 戰後臺灣社會文化重建」, 麥田出版社
- 西村成雄 編, 2004, 『中國外交と國聯の成立』, 法律文化社
- 若林正丈, 2008, 『臺灣の政治』, 東京大學出版會
- 山崎直也, 2009, 『戰後臺灣教育とナツヨナルアイデンチイテイ』, 東信堂
- 李鐘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 川島眞, 2009, 『日臺關係史1945-2008』, 東京大學出版會
- Cohen, Warren I., 2010,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 Fosdick, Raymond Blaine, 1952, *The Story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New York: Harper
- Karl, Rebecca E., 2002, *Staging the World: Chinese Nationalism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Duke UP

[ABSTRACT]

The Freechina's Designing on Regional Order of East Asia
and Perspective on Korea in Cold War

Oh, Byungsoo

This paper has significance in an attempt to review the idea of the regional order for East Asia and Chinese perspective on Korea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Freechina*, the most famous magazine for representing Chinese liberalist in the Cold War era.

The ending of the World War II and the rising of the Cold War roused the new spatio-temporal recognition among Chinese liberalists. The Chinese liberalist continuously designed a regional order of East Asia suitable for defending himself from threat by communist China and realizing the principles of freedom. That was tentatively named PPTO(Pan-Pacific treaty organization) modeled on NATO. The aim of that idea was for China to take a leadership for th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by military support from America. But that is not realized, and the goal was retreated to establishing a regional organization based on individual groups with the soft power, because of the segmentation policy of the western for the stable order of EA, and the divided recognition on each other in EA.

Hereafter, scope of EA that they contemplate is confined to Korea-China-Japan allied nations. But they learn from the previous experience and redesigned East Asian Community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eanwhile, the change of their idea on regional system

of EA of Freechina was accompanied with the change of their Identity and Perspective on Korea. The image of Korea in *Freechina* is changed from a peripheral nation to an ally nation for anti Communism. But recognition about Korea in Freechina is not systematic style but fragmented one. For better communication, it must be introduced more knowledge on each other into Knowledge system.

keywords

Free China, PPTO(Pan-Pacific treaty organization), East Asia Nation
Allay for anti Communism

특집 2

동북아 초기문명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반성



서문

동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을 포괄하지만 동북아시아라 했을 때는 북쪽으로 중심을 옮겨 놓고 그 지리적 범주를 다시 설정해 보아야 할 일이다. 동북아라는 범주가 단순히 지리적 범위를 뜻하는 것은 아닐 터인즉 무언가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기에 이 용어가 고고학과 역사학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고고학에서는 구석기시대 세형돌날과 몸돌이 확산되어 있었던 지역, 신석기시대에는 채색토기가 아닌 기학적 새긴 문양을 가진 토기가 유행했던 지역, 그리고 청동기시대에는 이른바 비중원적인 북방계 청동기가 분포했던 지역으로 그 문화·지리적 이미지가 포착되어 왔다.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보면 신석기시대까지 채집에 의존도가 높았고 뒤늦게 확산된 농경문화의 발전과 북방계 청동기문화를 토대로 초보적인 복합사회가 형성되지만 중원문명의 주변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그 영향을 받아 초기국가가 등장하는 지역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근대 고고학 및 역사학적 사색이 시작된 이래 동북아지역의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시대에 관한 해석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점의 차이가 연구자 집단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동북아 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단일한 정치 시스템에 포괄되어 있었지만 전후 동북아라는 지리적인 범주에는 중국 동북부, 북한, 남한, 일본이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세기 전반을 횡행했던 정치이념들, 이를테면 제국주의, 식민주의, 국수주의, 파시즘을 통해 왜곡된 고고학·역사학의 관점들이 깊이 반성되고 새로운 해석의 틀이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현재의 민족들과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사시대 및 초기 역사시대 해석의 체계가 서로 간에 심각한 갈등의 국면을 초래하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동북아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시대의

연구에서 국가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의 관점을 문제 삼아 왔다. 하지만 우리의 학문적인 모색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주변국들의 역사해석만을 비판하면서 내부적인 반성에는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동북아 초기문명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반성”이란 이름으로 기획된 공동연구의 성과가 4편의 논문으로 제출되었다. 이 지역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 역사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인데, 각각의 논문은 이 지역에서 초기 복합사회의 등장에서 고대국가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고고학 자료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설명의 틀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촌의 여러 고고학자 집단들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주의,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해석학과 인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탈식민주의 등의 사유 형식을 반성적인 논의의 기초로 받아들여 20세기 후반부터 고고학적 해석의 틀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번 기획된 4편의 논문에서는 그간 동북아지역의 고고학적 해석에 그러한 비판적인 사유가 부족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계 자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의 틀을 모색해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주의적 문화계통론, 물질문화의 분포와 종족의 분포를 동일시했던 규준적인 관점, 自國·自民族 中心主義의 文明發生論 혹은 國家形成論, 고전적인 사회진화론과 신진화주의 사회형식론 등을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사시대 공동체의 형성과 변동의 장기적 과정에 대한 접근, 초기복합사회의 비교론적 해석, 지역 내, 지역 간 상호작용이 가져온 사회변동의 설명, 그리고 국가형성기에 정치체 간의 이념적 관계망과 질서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로 「한국 초기 및 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비교사적 검토」라는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와 신진화론에 기초한 기존의 한국 초기국가 형성론에 대해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이 지체되었고 통일의 문제가 당면과제로 남아 있는 한국 현대사의 현실에서 민

족주의 입장이 당연시되는 점도 있지만 민족주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고고학 자료의 분류와 분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이나 국가의 기원, 그리고 강역을 확정하려는 작업으로만 향하게 되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고학 유적과 유물이 가진 자료적 잠재력을 무시하면서 다양한 사회 내외의 변수를 고려해 주지 못하는 것은 민족국가 형성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우리의 국가형성론은 국가라는 특수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개인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만 파악했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국 고고학의 연구경향은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 그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 수장사회가 출현하는 기원전 7세기 할슈타트 C기부터 켈트 사회는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중부와 서부 유럽 사이의 교역로를 장악하였고 이를 통해 자원뿐만 아니라 노예와 군사도 조달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기원전 2세기에는 대략 12개의 중심지로 권력이 집중되어 초기국가가 형성된다. 유럽의 고고학에서는 우리의 경우처럼 이 과정을 무덤이나 주거지의 규모 차이에 따른 사회계층화를 기술해 내는 식의 분석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정치체 내부 요인뿐만 위세품의 부장을 통한 상징적 권력의 표현과 내부 통합, 그리고 교역과 경쟁, 상호의존 등을 포함한 외부와의 관계 등을 매우 복합적인 과정으로 전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 형성의 문제는 목적지향적 연구가 될 수 없으며, 고고학 자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맥락적 해석으로 나가야 할 문제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두 번째,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의 연구에서는 서로 상이한 자연환경적 배경을 가지는 동북아시아의 네 지역에서 8개 수장사회를 선정하여 각각의 정치사회적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는 5개 영역(dimension) 즉 ① 갈등과 전쟁, ② 장거리교역, ③ 국지적 세계 경제, ④ 공공(토목)사업, ⑤ 위세와 재화 등에서 각 수장사회는 과연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선 각 영역에서 8개 수장사회들이 과연 서로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그러한 相似性·相異性이 각 수장사회 내부구조와 환경적인 차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수장사회들의 相似性·相異性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초기복합사회의 등장에 관한 이론화작업에 기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제 지역에서 수장사회가 독자적으로 발생·발달해 가면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각 수장사회들 간의 차이는 주어진 자연환경적 변이가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설명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일부 사회들의 경우, 일정한 지리적 권역 안에 매우 유사한 자연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사회조직도 유사하였지만, 그럼에도 매우 상이한 변화의 궤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두 수장사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 제 지역의 초기 복합사회는 획일적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 초기 복합사회 형성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환경적 제한요인들에 적응해 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궤적을 형성해 가는 사회적 주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된다.

세 번째, 「巨視的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이라는 논문은 먼저 동북아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에서 한·중·일의 연구자들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이념에 따라 관점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20세기 초부터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범주 안에서 선사시대 지역문화 간의 관계를 검토해 왔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주의에 토대를 둔 계통론이라는 담론으로 풀어가려 했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 고고학계에서는 다양한 지역문화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 민족사의 시간적·공간적인 범주가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고고학 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에 비해 최근 중국 학계에서 다민족 통일국가론이라는 대 전제하에 동북지방의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과정도 지금의 자국영토 안에서 진행된 역사로 포괄하는 정책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기간 동안 동북아지역의 고고학자들은 자국·자민족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제 지역의 사회문화변동을 이해하려 해 왔기에 지금의 갈등과 긴장이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점

에 대한 대안으로 제 사회집단들 사이의 지역 내, 지역 간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남부의 사회문화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전제와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네 번째 연구 성과로 「허리띠 분배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은 위세품 시스템에 관한 인류학적 모델을 기초로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기에 동아시아 제국들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질서를 복원해 보는 작업을 시도했다. 각국 지배자 계층의 고본에서 출토되는 ‘金工威勢品’은 다른 어느 물질에 비해 지배자들과 제 정치체들 사이의 신분적·국제적 질서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고고학 자료라 할 수 있다. 격변의 시대인 4~6세기의 동아시아 일원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위와 성장을 위해 외교적 관계개선 및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 그것은 국가 간에 주고받은 금공위세품의 양식에도 잘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전제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금공위세품 가운데 금속제 장신구를 소재로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존재했을 상호작용의 일단을 파악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귀금속으로 만든 위세품은 이미 商代 유적에서 확인되며 전국시대 후반이 되면 제작이 매우 활발해진다. 이후 중원 왕조는 전국시대에서 한대까지, 비파형 또는 곡봉형 대구를 제작 유포했고 양진시기에는 진식대금구를 제작하여 폭넓게 유통시켰다. 특히 진식대금구가 등장하면서 이는 삼연, 고구려, 백제, 신라, 왜에 이르기까지 널리 파급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방제한 새로운 대금구문화가 생겨나게 된다.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고구려의 장신구문화는 4세기 후반 이래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신라로 전파되었고,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특색 있는 장신구문화를 형성하여 역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가야와 왜로 장신구문화를 전해 주었다. 고구려→신라, 백제→대가야, 대가야→왜의 경우 출토유물의 제작기법을 검토해 보면 장신구 완제품뿐만 아니라 공인파견에 의한 기술전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필자들을 대표하여 이 성 주

한국 초기 및 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비교사적 검토

- 한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일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대사 연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헌사료의 부족이다. 비록 최근에 올진 봉평비나 냉수리비, 그리고 포항 중성리비의 경우처럼 새로운 금석문이 발견되어 신라사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거나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는 각종 목간류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연구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사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사 연구를 위해 고고학자들은 물론 많은 문헌사가들이 고고학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실제 1990년대 이후 구제발굴의 확산과 더불어 고고학 자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 경우에도, 대략 기원후 300년에서 700년대에 해당하는 대이주시기(the Migration Period)¹⁾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한정된 문헌사료와 함께 고고학 자료를 바탕

※ 투고일: 2011년 5월 11일, 심사일: 2011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²⁾

이러한 역사학의 고고학적 물질 자료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고고학계의 문헌자료에 대한 이해는 각자의 분야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헌사료의 텍스트적 성격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이해부족,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관련한 물질자료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때로는 무분별하기 조차한 역사학자들의 물질자료의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³⁾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사료에 보이는 특정한 사건이 바로 토기나 무덤양식을 포함한 물질문화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 특정한 물질문화의 양식상의 변화를 사료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정치체의 영역이나 정체성, 그리고 사회구조나 성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주목하여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소위 역사적 실체의 존재, 즉 초기국가 또는 고대국가를 포함한 정치체의 존재⁴⁾

2) C. Hill, 1999, "Early Historic Britain," In J. Hunter and I. Ralston (eds.), *The Archaeology of Britain*, London: Routledge, pp. 177~193

3) 김종일, 2008, 91~92쪽

4) 초기국가 혹은 고대국가의 개념과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고학에서는 초기국가와 고대국가를 각각 무덤자료 등에서 보이는 계층화의 증거와 성이나 대형 분묘 등의 등장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박순발, 2007 등) 고대사에서는 고고학의 경우처럼 양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와 더불어 초기국가의 형성을 바로 고대국가의 시작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즉 후자의 경우, 고조선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엿볼 수 있듯이 초기국가로 표현되는 초기 정치체의 형성을 최초의(고대) 국가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보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초기국가 또는 고대국가의 형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대신 첫째, 고고학 자료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화나 지도자(혹은 수장층)의 등장만을 근거로 바로 초기국가 혹은 이를 포함한 고대국가의 등장을 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둘째, 초기국가의 형성시기를 소급하려는 시도의 이면에는 이를 통해 고대국가의 성립시기도 동시에 소급해 보려는 시각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대국가의 기원을 포함하는 초기국가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이 초기국가나 고대국가의 엄격한 개념적

를 증명하거나 그러한 초기 정치체의 형성 동인을 설명하기 위해 고고학적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 놓여 있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의 연구를 시도하는 고고학자나 문헌사가들의 기본적인 연구 패러다임은 적어도 민족주의적 시각의 토대 위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고고학 또는 고대사에서 논의된 바를 유럽 선사 시대에서 정치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초기 정치체의 형성과 관련한 유럽의 고고학 자료가 시기를 포함한 자료의 역사적 맥락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초기 정치체의 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진행과정도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 학계에서 초기국가 혹은 고대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너무나 자명한 근거로 받아들이는 고고학적 현상들이 유럽 선사시대, 즉 유럽 초기 철기 및 철기시대의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유럽의 이해방식을 한국 고고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실제로 자료의 역사적 맥락이 유사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만 유사한 고고학적 현상과 자료들이 유사한 또는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고학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 자료에서 보이는 단편적인 현상들을 과연 초기국가 혹은 고대국가의 성립과 관련하여 적절한 고민과 비판 없이 직접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II. 고고학과 민족주의⁵⁾

지난 1990년대 이후 한국 고고학에서 진행된 활발한 연구조사의 성과 덕분에 한반도의 선사 및 역사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문화들의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한국 고고학의 발전은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종래 논의하지 않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학문내적으로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정치한 편년작업 등을 통해 개별적인 고고학적 문화의 내용과 그러한 문화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존의 문화사적 연구에 더하여 그러한 문화의 변동과정과 원인 등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과 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내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외적으로는 고고학이 하나의 지식 또는 담론체계로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고고학이 보다 성숙한 학문으로 성장하고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고고학자들이 학문내적으로 그리고 학문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고고학 연구와 대중화와 관련하여 한국 고고학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된 대중매체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특정한 유적이거나 유물이 발견되거나 발굴조사 되었을 경우, 이를 최대, 최고, 최초의 측면에서 보려는 저널리즘적 시각과 국가 혹은 민족주의적 관점이 서로 연결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원하는(또는 원한다고 믿는) 내

5) 이 장에 소개된 내용 중 일부는 “동아시아의 고고학연구와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52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부 발표회(2009. 5. 30)에서 발표된 필자의 종합 토론문의 내용 가운데 이 글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대폭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혀 둔다.

셔널리즘이나 민족주의의 시각 아래 보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이를 소개하려는 대중매체들의 시도와 함께 기존의 한국 고고학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주제 아래 소위 유물과 유적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국가나 민족의 자존심을 고양하는 데 주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침묵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과거의 영광’ 또는 ‘영광스러운 과거’를 통해 대중들의 인기를 얻거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일부 권력의 의도 역시 작동하고 있었음도 무시할 수 없다.

어쩌면 이는 고고학의 태생적 한계일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유럽에서 근대적 고고학이 맨 처음 등장하는 시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며,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유럽통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 고고학계의 학문적 수준이나 일반 시민들의 성숙한 역사의식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현재에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최대’, ‘최고’, ‘최초’에 기반한 시각이 단순히 저널리즘의 영역을 넘어서 학문내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끼쳐 연구자들의 의식 속에 연구목적의 설정이나 연구방법의 사용을 통해 보다 암묵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문화(또는 그 문화의 특징)의 시공간적 범위를 보다 오래된 것으로 그리고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물론 새로운 연대측정법의 개발과 자료의 축적에 따라 특정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범위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고, 만약 신뢰할 만한 과학적·자료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이를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적절한 논리적 근거와 함께 문화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인에 대한 해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에 과연 그러한 시도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문제가 된다.

실제로 현재 한국 고고학에서 편년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일부를 보면 일단 특정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범위를 일부 단편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단 상향 또는 확대 조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새로운 자료가 나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고고학 연구의 합리적인 순서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러한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그 물질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간 다음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 그러한 물질문화, 그리고 그러한 물질문화를 사용했을 사회의 특징과 변화상에 대해 논의하고 그다음 이를 반영한 시공간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연구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이러한 특정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범위의 조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고고학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관심과 주제, 예를 들어, 교역과 상징의 교환, 기술의 발전과 장인의 사회 경제적 의미, 젠더와 개인적 정체성, 다양한 사회적 경계 및 범주, 일상과 권력의 행사, 유물과 유적에 대한 각종 자연과학적 분석 등등을 오히려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의 물질문화를 해석할 때 특정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그러한 물질문화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해석을 목적론적으로 왜곡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그러한 물질문화의 해석과정에서 명백히 또는 암묵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현재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의 축적된 경험, 즉 일종의 개인적, 혹은 공동체의 ‘해석의 지평’이 반영되거나 작동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과거의 물질문화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서구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근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역사적 근거와 정당성이 뚜렷한 통일국가의 수립 또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밝혀 줄 수 있는 고고학 자료의 수집과 해석, 그리고 소위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작업은 어쩌면 고고학자들이 짊어져야 할 일종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목표가 지금에도 유효할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방식에 대해 학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 또는 반성할 점은 없는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적어도 고고학 또는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 일정 부분 이러한 분야에 기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민족주의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주요 담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일(그리고 그러한 통일의 근거가 되는 민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동아시아 삼국 간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특히 일종의 정치적 합의를 띠고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경우)가 상존하는 경우에 고고학자들의 과거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 민족(또는 보기에 따라 민족주의)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의 연구가 과거처럼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거 물질문화에 대한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작업은 그러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비록 모두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소개, 특히 교육을 통한 소개는 그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나 박물관 전시에서 나타나기 쉬운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에 입각한 과거의 해석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숙제로 남겨 놓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과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박물관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통해 실체화된 과거를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며 그렇게 실체화된 과거는 과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맥락에서 재해석된 과거이며, 같이 전시된 유물들과 함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내는 창조된 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석과 창조의 과정에서 특정한 맥락에 따른 의도적인(또는 비의도적이라 하더라도) 유물의 배치와 전시,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물질적·비물질적 텍스트들을 원래의 맥락으로 환원하여 해석할 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의 경우, 의도된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박물관의 전시는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관람객들이 그러한 전시품의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현재 여러 박물관의 전시가 대체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록 국립박물관의 전시가 한민족의 발전과정을 어느 정도 담아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시도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전시와 교육(예를 들어 민족만이 역사의 해석단위가 되어야 하는지, 민족의 기원과 발전을 위주로 한 전시 외에 다른 형태의 전시가 가능한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고학과 내셔널리즘(또는 민족주의)의 문제는 그것의 오래된 역사적 연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 등장하면서 계속적인 논쟁의 주제가 될 것임은 다른 나라들(특히 유럽의 예)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에게 그들의 학문적 작업을 통해 그리고 한 사회에 속한 시민이자 지식인으로서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젯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또는 못했던) 우리나라 고고학자들도 이제는 보다 성숙한 학문으로서 고고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이제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의 내용(또는 고고학을 하는 행위)이 갖고 있는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언젠가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클라크가 이야기했던 ‘순수함(순진함)의 상실’의 또 다른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III. 한국의 초기국가 형성과 고고학⁶⁾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아마도 고고학 자료의 이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그 강역에 대한 문제, 즉 고조선을 포함한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고조선 문제는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족’의 형성과 ‘민족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문제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문헌사료의 부족 탓에 고고학 자료가 주된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1_ 고고학 자료와 영역

이러한 고조선 연구를 비롯한 초기국가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와 고고학 자료의 이용, 즉 고고학 자료와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기 위해 일단 고고학 자료의 이용과 민족의 기원과 분포, 즉 영역의 문제에 대해 우선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고학은 학문의 시작 단계부터 편년체계의 수립과 문화단위의 설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민족의 기원과 분포, 영역, 그리고 이동경로를 추적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⁷⁾ 특히 구스타프 코지나(Gustav Kossinna)는 주거지 자료가 과거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러한 주거지의 분포와 경계를 바탕으로 게르만을

6) 이 장의 내용 중 일부는 필자의 논문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91~116쪽에 간략히 소개된 바 있다.

7) 근대 고고학의 형성과 민족 또는 민족주의의 관련성은 S. Jone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London: Routledge와 B. Trigger, 1989,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3~186 등에 잘 소개되어 있다.

비롯한 다양한 민족집단의 기원과 분포, 그리고 이동경로를 추정하려고 시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코지나의 연구가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증명하 려고 시도했던 독일의 나치즘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⁸⁾

실제 지금까지도 물질문화와 민족(또는 ethnic group 및 ethnic identity) 과 관련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거나⁹⁾ 아니면 특정한 물질문화의 확산과정을 민 족의 이동이나 이주와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물질문화의 일정한 단위(예를 들어 문화의 단위)가 하나의 민족을 대 표한다는 생각은 유감스럽게도 유럽의 경우, 100여 년에 등장하여 20세기 초 반에 유행하였던 매우 오래된 문화사적 연구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¹⁰⁾ 즉 한 국 고대사 연구에서 신진화론에 입각한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이론의 수용을 제외하면 적어도 1960년대에 등장한 소위 신고고학과 1980년대 이후에 등장 한 후기과정고고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물질문화 자체에 대한 이론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즉 수십 년 전의 연구 패러다임이 여전히 무비판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자 체로 충분히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가 외국의 고고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8) B. Trigger, 1989, 앞의 책, pp. 163~167 참조.

9) 예를 들어 새깃의 연구(J. R. Sackett, 1982, "Approaches to style in lithic archaeolog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59-112)나 비스너의 연구(P. Wiessner,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9: 253-276), 그리고 웹스트의 연구(H. M. Wobst, 1977, "Stylistic behaviou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C. E. Cleland (ed.),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317-342,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Paper 61)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이 주제와 관련된 문화사고고학과 과정 및 후기 과정고고학의 여러 연구들은 존스의 연구(S. Jones, 1997, 앞의 책)에 잘 소개되어 있다.

10) 문화사고고학의 연구방법론은 차일드의 책(V. G. Childe, 1956, *Piecing Together the Past*, London: Routledge)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등장한 지 수십 년이 되어 그 한계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지적된 바 있는 연구 패러다임에 대해 우리 나름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그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은 본명 문제가 있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둘째, 민족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그 강역에 대한 과도한 민족주의적 강조는 역사의 해석단위를 '민족' 만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물질문화의 경우, 다양한 실체적 또는 인식(또는 해석)의 단위로 분절하며 그 경계를 지우는 것이 가능성에도 그러한 다양한 단위와 경계의 설정 가능성이 '민족'이라는 보다 광범한 단위에 의해 생략되거나 무시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즉 한 사회에 존재했을 다양한 공동체의 존재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적절히 개념화 내지 실제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고고학 자료를 결과적으로 매우 단선적이지 단편적이며 목적지향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다는 것이다.

셋째, 고고학 자료를 통한 '민족연구', 특히 그것이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는 경우는 민족의 형성이나 뒤에 살펴볼 초기국가의 형성 문제 외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예를 들어 젠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의 행사 방식 등 과거 사회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남겨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민족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주제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고학 자료를 통한 민족연구, 특히 그것이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는 경우는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고고학 자료의 해석을 일면적이고 단선적인 동시에 목적지향적으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고고학 자료를 통한 민족의 기원과 형성, 강역의 추론이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코지나는 유럽대륙의 선사 및 역사시대의 물질문화

를 일종의 (문화의) 모자이크로 파악하고 각각의 문화적 단위가 개별 민족(또는 인종)을 반영하며 그러한 민족성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생활유적, 즉 주거지유적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¹¹⁾ 이러한 그의 인식은 선사학, 또는 고고학은 아리아 인종과 게르만 민족의 기원과 우수성을 밝히는 작업에 기여했을 경우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극히 민족주의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록 그의 사후에 벌어지는 일기기는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나치즘에 적극 동조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물질문화의 특정한 단위와 민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그러한 민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생활유적, 즉 주거지를 주목한 코지나의 시각은 적어도 방법론상으로는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호주 출신 영국의 고고학자인 고든 차일드 또한 비록 특정한 인종의 인종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물질자료를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여전히 인도·유럽인의 기원, 즉 아리아인의 이동과 전파를 비롯한 유럽 문명의 기원과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¹²⁾ 특히 그는 동일한 고고학적 유물복합체의 지역적·시간적 반복을 ‘문화’로 정의하며 그중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특징적인 지표로 ‘형식화석(type fossils)’을 들고 있다.¹³⁾ 예를 들어 하나의 지질학적 층위의 연대를 그 층위에서 나온 특정한 종의 생물화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고학적 문화 역시 그 문화를 대표하는 ‘형식화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변화는 그 사회 자체에서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주와 전파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논의는 코지나의 견해와 더불어 고고학 자료를 통한 민족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강역의 연구에 기본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단위의

11) B. Trigger, 1989, 앞의 책, pp. 163~167; S. Jones, 1997, 앞의 책, pp. 15~17

12) V. G. Childe,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V. G. Childe, 1954, *What Happened in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V. G. Childe, 1957, *The Dawn of European Civilisation*, 6th ed., London: Routledge 등이 대표적이다.

13) V. G. Childe, 1956, 앞의 책, pp. 30~38

물질문화(즉 문화)는 특정한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민족의 자취는 특정한 형식의 '생활유적' 또는 '형식화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그러한 민족의 형성은 또한 이주와 전파의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의의 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민족적 정체성과 강역 등을 특정한 고고학적 물질문화, 즉 비파형 동검, 미송리형 토기, 지석묘, 팽이형 토기, 점토대토기문화 등과 관련지어 이러한 물질문화가 고조선 문화의 배경이거나 문화 그 자체이며, 따라서 이러한 물질문화의 분포가 바로 고조선의 강역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이다.¹⁴⁾ 물론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바와 같이 사료 등의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 미리 결론의 윤곽을 그려 놓고 이러한 결론과 가장 잘 부합하는 고고학적 사례를 무리해서 끌어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고고학적 문화와 민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고고학에서는 특정한 단위의 고고학 자료와 그 경계가 과연 특정한 인간집단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민족지적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양식(style)에 관한 연구에서 그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고학자 새킷은 양식¹⁵⁾에 대한 연구에서 양식을 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도상학적(iconological) 변이와 ② 같거나 비슷한 목적을 위해 사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거나 사용하는 방식이며 하나의 종족집단(ethnic group)¹⁶⁾에서 전승의

14) 이렇듯 특정한 물질문화의 분포와 고조선의 정치적·문화적·민족적 강역과 각각 관련시키려는 시도는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최근 연구 성과는 한국고대사학회 편, 2007, 앞의 책에 수록된 관련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15) J. R. Sackett, 1982, 앞의 글 참조.

16) ethnic group은 민족, 종족, 인종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종족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민족의 경우, 민족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소크레스틱(isochrestic) 변이로 나누기도 하였고, 웹스트¹⁷⁾는 양식을 정보교환을 위한 도구로 보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양식적 정보의 사용방식은 외부인에 대한 집단의 경계와 정체성의 상징적 소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스너¹⁸⁾는 구별되는 지시대상의 존재와 경계를 가지고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집단들에게 사회적 세계의 구분에 대한 인식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상적 양식과 특징적인 지시대상이나 의미가 없으며 대체로 개인적인 표현에 그치는 단언적 양식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진행된 이러한 양식과 종족집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양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고고학계에서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 물질문화를 통한 종족집단 내지 종족적 정체성(ethnic group 또는 ethnic group identity)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그러한 집단적(또는 개인적) 경계의 표시는 맥락에 따라 의도적으로 명백히 드러내는 경우와 암묵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조차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물질자료의 일부 측면만을 부각시켜 그것을 근거로 특정한 종족(혹은 민족)집단의 (정체성의) 경계를 추론하고 이를 바로 그 집단의 영역으로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이론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종교적·문화적 목적에 따라 상징적 경계를 뚜렷이 나타낼 필요가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물질자료와 종족적(민족

국가(nation-state)의 nation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인종의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형질적 차이가 전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종족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 종족집단이라는 용어 또한 현대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ethnic group의 개념을 포괄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17) H. M. Wobst, 1977, 앞의 글 참조.

18) P. Wiesner, 1983, 앞의 글 참조.

적) 정체성을 바로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이론 틀은 현재까지 없거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그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매우 작위적인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대략적으로 역사적 문헌에 등장하는 종족적(혹은 민족적) 실체에 대해 현재까지 출토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그들이 영위했을 문화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정한 단위의 고고학 문화들의 상호관계나 경계가 민족의 기원이나 형성, 그리고 그 영역의 직접적 표현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_ 초기국가의 형성과 계층화¹⁹⁾

주지하다시피 고고학계, 그리고 일부 역사학계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와 함께 초기국가 형성의 물질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유적, 예를 들면 풍납토성의 축성연대를 올려 보거나, 무덤자료나 주거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국가형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 계층화의 근거를 찾고 이러한 계층화가 좀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초기국가의 형성연대를 좀 더 이른 시기로 끌어 올리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최근 일부 고고학계에서는 마제석검이나 비파형 동검 같은 일부 유물이나 묘역식 지석묘 같은 유적을 근거로 소위 ‘국’의 형성을 논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²⁰⁾ 물론 여기에

19) 이 장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는 필자의 논문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 63의 일부 내용을 새롭게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20) 예를 들어 한국고고학회 편, 2006,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제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와 한국고고학회 편, 2007,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에 수록된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이러한

서 ‘국’이란 그 실체가 국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료에 나오는 ‘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개념 규정 없이 일본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계층화의 증거를 가지고 일정 단계의 정치체, 특히 초기국가의 형성과정을 추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층화의 고고학적 증거를 가급적 이른 시기에서 찾고 이에 따라 계층화를 통해 가능한 국 내지 초기국가의 형성 시기 또한 시기적으로 더 빨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계층화와 초기국가를 포함한 정치체의 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1960년대 이후 주로 미국의 신진학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고(Fried, 1967; Service, 1962·1975; Earle, 1997),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의 고고학 및 문헌사 자료에 대한 적용도 시도된 바 있다(김정배, 1987; 이종욱, 1981; 최몽룡, 1983 등). 이러한 방식의 시각이나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Shanks and Tilley, 1987). 그럼에도 실제로 계층화의 문제가 초기 정치체의 등장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계층화의 증거를 고고학적 현상에서 찾아내려고 시도한 점도 이러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계층화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고고학 자료의 양적·질적 차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계층화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계층화 혹은 계층사회의 등장이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의 사회상 및 고대국가 성립과 관련하여 관심 있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자 이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적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군장사회나 국가성립의 전제조건으로써 계층화의 등장을 주목하여 청동기 및 초기 철기 사회의 연구에서 이러한 계층화의 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계층화 외에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 사회가 갖고 있을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특징은 자칫 연구의 관심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유적·유물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차이(difference)’와 ‘유사(similarity)’에 대한 해석이 계층화라는 단일한 사회적 특징으로 단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층화 외에 당시의 사회조직(social organisation)이나 권력의 행사 방식(혹은 작동 방식)을 알려줄 수 있는 성(sex)이나 연령(age)에 따른 범주화, 사회적 성(gender)의 형성과정, 개인(individual agent)과 공동체(community)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전략들이 유적·유물의 형성, 해석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Shennan, 1975; Gero and Conkey, 1991; Moore and Scott, 1997; Sørensen, 2000).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회적 변수와 전략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다층적 측면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적 계층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동성과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즉 이러한 사회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의 문제와 한국의 청동기 및 철기시대 자료가 그러한 접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 즉 자료상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 당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채택하거나 사용한 다양한 전략과 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김권구, 2005; 김범철, 2011; 김장석, 2008; 김종일, 2004·2009b; 이성주, 2007; 이홍중, 2005 등).

둘째, 계층화 또는 계층사회의 등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로는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써 국가의 성장을 비롯한 정치체의 등장을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인 생산관계를 포함하는 생산양식 안에서 규정되는 계급(class)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마르크시즘적 관점이 여전히 고고학 해석에 깊이 투영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Marx, 1965·1994; Engels, 1985). 원래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 또는 계층사회(stratified society)라는 용어는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계

급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계층적 구분을 의미한다. 사회적 계층화에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상대적인 권력, 부, 또는 특권에 따라 서열화되며 특히 사회적 상하 유동성을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여 계층화는 이러한 개인의 노력의 산물로써 해석한다(Barfield, 2000: 450-1; Borgatta and Montgomery, 2000: 2807-21). 비록 사회적 계층화의 개념이 마르크시즘적 시각과는 다른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내용상에서 마르크시즘의 그것과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계층화'의 관점은 마르크시즘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소위 '갈등(conflict)' 또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정치체의 형성을 파악하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측면 외에 '통합'의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형성과 유지 내지 변화에는 계층화로 대표되는 갈등의 기제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통합'의 기제 또한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통합의 기제 역시 연구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기제에는 뒤르케임 주장한 바와 같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나 사회변화에 필요한 '보편적 합의(consensus universal)'나 일치된 도덕적 신념(Giddens, 1986), 또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은 단순히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아체계 간의 평형(equilibrium)이나 항상성(homeostasis)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모순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옹호하거나 합법화 또는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합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표면적 의도와 관련 없이 일종의 헤게모니의 장악을 통해 그 집단 내에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명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집단 내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 내지 권력관계를 정당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고고학에서 그러한 예를 찾는다면 스칸디나비아반도 등지에서 발견되는 공동무덤(communal burial)인 거석무덤(megalithic tomb)을 이미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던 부족사회(tribal society) 내에서 그러한 계층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집단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묻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해당할 것이다(Shanks and Tilley, 1982). 또한 한국 청동기시대에서도 송국리 유형 무덤군의 경우, 무덤의 분포나 부장품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단순한 계층화나 계서화 대신에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 내에서 평등성이나 조상, 또는 과거의 권위가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김종일,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동기 사회의 특징과 사회변화를 계층화로 대표되는 '갈등' 외에도 이러한 갈등(만약 있었다면)이 어떻게 해당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합법화 내지 정당화되면서 그 집단이 형성·유지되는지, 즉 통합의 측면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해당 사회 내에서 '갈등'과 '통합'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당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계층화가 중요시되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위계층 혹은 지배층(또는 지배자)의 등장과 그들의 성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상위계층이나 지배층에 대응하는 하위계층 또는 피지배층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관심은 자칫 도외시되기 쉬운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하위계층 또는 피지배층의 역할은 지배층의 등장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자 대상으로써 그 자체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배층의 등장과 지배의 합리화는 피지배층의 합의와 동의 아래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바로 이러한 과정이 뒤에서 다시 언급할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기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배층의 등장과 지배계층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다양한 형태의 역관계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역관계가 고고학 유물·유적의 형성과 사용, 그리고 폐기과정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결부되어 파악될 때만이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계층화나 지배자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어 왔

던 유적 외에 종래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자료에 대해 주목하는 것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탁월한 입지나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유적이거나 많은 부장품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주거지나 무덤군, 그리고 특정한 공간적 분포 패턴을 보이지 않는 유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적에 대한 치밀한 해석을 통해 해당 유적을 축조하고 사용하였을 사람들이 지배자 혹은 지배계층의 물질문화를 통한 지위와 권력의 합법화 시도(예를 들어 대규모 무덤이나 주거지의 축조와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의미의 해석 등을 포함하여)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해 가는 방식 등을 추론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배자(또는 지배계층)의 상징체계가 어떻게 물질문화나 경관의 형성을 매개로 피지배계층에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피지배계층이 지배자(또는 지배계층)에 대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한 사회적 경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추론하는 작업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계층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개인’이 고고학 자료의 해석에서 무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고학 해석에서 ‘개인’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Hodder, 1991). 이러한 논의들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은 개인이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사회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바꾸어가는 일종의 에이전시(agency)라는 것이다(Barrett, 1994; Giddens, 1984; Dobres and Robb, 2000).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은 특정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적·유물을 만들고 사용하며 부장하거나 폐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Hodder, 1991: 6-10). 개별 유적·유물들의 생산, 사용, 부장 및 폐기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들이 해석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는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개인’과 관련된 문제는 고고학 해석의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계층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고학 유적·유물에 대한 해석이 계층화의 증거를 찾거나 계층화의 형태

적 특징을 추정하는 동시에 지배계층에 속한 일부 개인만 주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고고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단위를 추상적인 개념적 도구인 계층화 또는 지배계층이 아닌 각 개인의 단위로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세밀화한다고 했을 때, 각 개인의 구체적인 심리상태나 개별 행동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유물의 형성, 사용, 부장, 혹은 폐기과정에서 (에이전시으로써) 개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실천하는지를 해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유적·유물의 형성이나 제작, 사용, 그리고 폐기라는 일련의 과정 뒤에 놓여 있는 다양한 규범이나 구조와 관련하여 그러한 규범이나 구조를 그대로 실천하거나 또는 바꾸어 나가는 개인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유적·유물의 '차이'와 '유사(성)'의 파악과 여기에 개입되었을 개인(들)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계층화 혹은 지배계층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 나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고학적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피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사회의 변화를 정태적으로 형태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 즉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 내는 작업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계층화의 근거로서 자주 인용되는 위세품의 개념 또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물의 형태가 비실용적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제작과 유통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유물에 대해서 위세품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위세품의 부장여부를 계층화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마제석검이나 비파형 동검의 경우, 이들의 부장여부가 바로 계층(화)의 존재를 말해 주는 직접적인 근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마제석검의 경우, 단순히 제작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점 외에 기원전 2000년경(북유럽의 고고학 편년으로 신석기 후기에 해

당) 중부 유럽의 청동단검을 모방하여 세련된 석검을 제작한 덴마크의 경우처럼 비파형 동검을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연히 위세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분묘의 축조와 함께 계층화의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한국 고고학회 편, 2006).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중부 유럽의 경우, 늦어도 무덤에서 전투용 도끼(battle axe)가 출토되는 신석기 중기(대략 기원전 4500년경부터 시작)의 깔때기형 토기(TRB) 문화 및 신석기 후기의 승문토기(corded ware) 문화(대략 기원전 3000년대부터 기원전 2000년대 전반에 걸쳐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나 순동단검(copper dagger)이 출토되는 벨 비커(Bell Beaker) 문화(서유럽과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대략 기원전 2000년대 전반부터 기원전 2000년대 말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기원전 1800년경까지 존속), 그리고 역시 중부 유럽의 신석기시대 중기와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남동 유럽의 순동시대(copper age)는 이미 계층화 사회로 진입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 고고학에서 사회적 위계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로는 대규모 봉분을 가진 무덤과 청동제 장검 및 각종 청동제 무기류가 등장하는 시기인 청동기시대 초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시기인 대략 기원전 1800년 이후로 보고 있다. 물론 유럽 선사시대와 한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계층화와 관련하여 어느 특정 유물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석, 부장품의 양과 질, 그리고 봉분의 규모에서 압도적이고 현격한 차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단순히 특정한 유물의 부장여부로 사회적 계층화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국가 또는 고대국가의 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유물의 분포로 영역을 상정하거나 계층화로 대표되는 고고학 자료에 보이는 어느 한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나 성, 대형 분묘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고고학 자료의 등장을 지표로 삼는 것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켈트 사회의 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초기국가 또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은 이러한 특정한 고고학적 지표의 등장과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단위(혹은 에이전시)들이 공동체 내에서 혹은 지역적 단위에서 어떠한 권력 행사 방식, 혹은 전략을 채택하였는지, 개인과 공동체들은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 형성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유럽 선사시대 정치체의 형성

1980년대까지 서구 고고학계, 특히 영국 고고학계에서 선사시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정치체의 등장을 소위 신고고학적 입장에서 범주화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콜린 렌프류는 거석문화를 기원과 전파론적 입장에서 파악했던 고든 차일드의 입장을 비판하는 대신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바탕으로 유럽의 선사시대 거석기념물이 훨씬 연대가 올라가며, 따라서 유럽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동시에 일종의 경계 또는 영역의 표시로서 집단지향적 군장사회의 형성을 상징하는 물질적 근거로 해석한 바 있다(Renfrew, 1981·1984). 이러한 콜린 렌프류의 입장은 1980년대까지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후기과정고고학의 등장과 함께 신진화론적 입장이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렌프류가 상정했던 거석기념물의 공간적 분포가 실제로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Parker-Pearson, pers. comm.). 이후 유럽 고고학계에서는 더 이상 신진화론적 입장의 사회범주화, 즉 군장(band)-부족(tribe)-군장사회(chiefdom)-국가(state)의 도식적 구분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와 아울러 초기국가의 성립과정과 관련하여 훨씬 이후 시기인 기원전 7세기 이후의 켈트 사회, 그리고 게르만 사회의 형성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제국과의 관

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켈트 사회 등은 이미 그리스가 마르세유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그리고 시칠리아 등에 식민도시를 건설한 이후, 그리스 등과 긴밀한 외교 및 교역관계를 형성한 바 있고, 기원전 4세기에 북부 이탈리아로 일부 켈트족이 남하하여 밀라노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거나 기원전 1세기경 로마에 최종적으로 정복되기 전까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그리고 서유럽 사이의 교역로를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와 함께 정치체를 형성하였다(Cunliff, 1988·1997; Hodge, 1998; Hurst and Owen, 2005; Whitley, 2001 등). 이러한 켈트 사회의 형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초기 및 고대국가 성립과정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의 해석의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켈트 사회의 성장과 정치체의 형성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비교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초기국가 및 고대국가 형성과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_ 켈트족과 군장 사회의 형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석기 중기에 나타나는 거석무덤과 같은 공동체 무덤은 신석기 후기에 들어와 승문토기 문화와 벨 비커 문화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개인무덤에 대체된다(Cunliff, 1994; Champion et. al., 1984; Johns, 2008). 즉, 유럽 신석기 중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앞에서 언급한 깔때기형 토기 문화라고 한다면 후기를 대표하는 문화로는 승문토기 문화와 벨 비커 문화를 들 수 있다. 중부·동부·북부 유럽에 널리 확산되었던 승문토기 문화와 중부·동부·서부·남부 유럽 및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벨 비커 문화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매장, 토기 외에 전투용 도끼(승문토기 문화의 경우 처럼)나 순동 단검(벨 비커 문화) 등의 부장품, 매장 시 두향과 부장품의 차이에 따른 남녀의 구분, 주거유적 수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승문토기 문화와 벨 비커 문화는 이후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우네티세(Unetice) 문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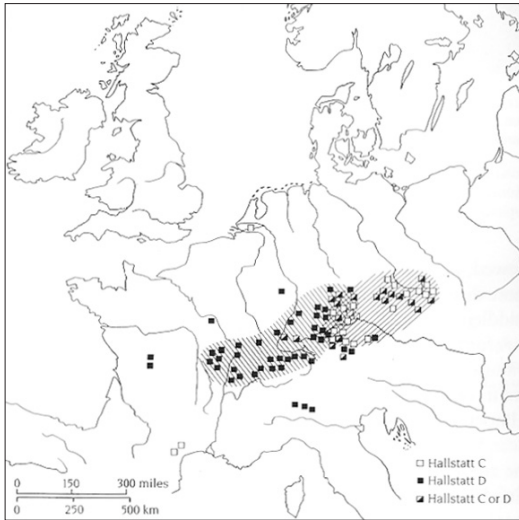
BC	Period	Chronology	Culture	Burial	Index
2300	EBA	Br A	Únètica	매장	Br dagger
1700	MBA	Br B	Tumulus	거대 봉분	Br aword
1400	LBA	Br C	Urnfield	화장 무덤군의 등장	Armoury Wagon
1300		Br D			
1200		Hal A1			
1100		Hal A2			
1000		Hal B1			
900		Hal B2			
800	Hal B3	Halstatt	매장	Ir aword	
700	Hal C				
600	Hal D				
500	EIA	La Tène A	La tène	매장	Ir dagger
400		La Tène B			
300					
200		La Tène C			
100		La Tène C			
0		Roman			

〈그림 1〉 할슈타트 및 라 텐네 시기 문화 편년

에 대체되지만 대체로 이러한 개인지향적 무덤의 축조경향은 계속 지속이 되며 오히려 중기 이후 거대봉분의 무덤, 즉 투물러스(Tumulus)의 등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Cole and Harding, 1979; Coles, 2004; Earle and Kristiansen, 2010; Kristiansen and Larsson, 2004 등). 특히 청동기 중후반 그리고 후기에 들어와 갑옷과 방패, 창 등을 포함한 청동제 무구의 발전과 함께 남성성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다(Coles and Harding, 1979; Trehene, 1995). 이러한 배경에서 기원전 700년을 전후한 시기인 할슈타트 B시기의 마지막 단계와 C시기에 들어가면 소위 켈트의 수장(chieftain)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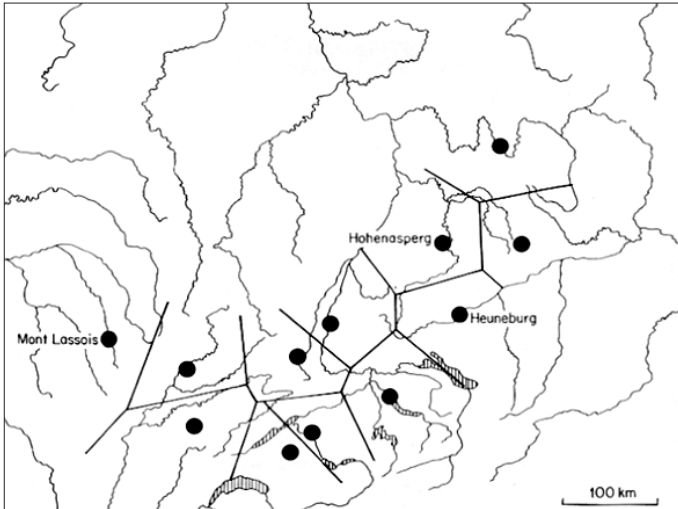
이들은 소위 왕자의 무덤(princely grave)으로 알려진 거대무덤과 성채(hillfort) 유적 등을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와 그림 3 참조).

특히 그리스계 판축기술을 채용하여 축성된 호이네부르크(Heuneburg) 유적(그림 4 참조)과 호호도르프(Hochdorf), 빅스(Vix)나 호미켈레(Homichele)



〈그림 2〉 할슈타트 C와 D 시기 무덤 분포

(출처: Cunliff 편, 1994: 344에서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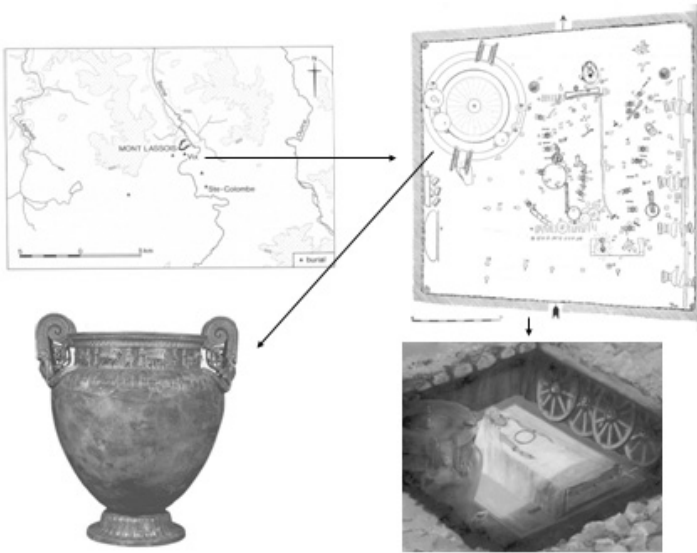


〈그림 3〉 할슈타트 D 시기 성채 및 왕자의 무덤 분포 및 영역

(출처: Champion et al., 1984: 283에서 취함)



〈그림 4〉 Heuneburg 유적 전경
(출처: Cunliff, 1997: 54에서 취함)



〈그림 5〉 Vix 유적과 부장품

(출처: Champion, 1984: 284 및 Cunliff, 1997: 56과 58, 그리고 Cunliff 편, 1994: 348 등에서 취하여 재편집)

무덤 유적(그림 5 참조)에서는 그리스계 청동제 저장용기 등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켈트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Cunliff, 1988 · 1997; Hodge, 1998; Hurst and Owen, 2005; Shepherd, 2005; Whitley, 2001 등).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를 포함한 동지중해 지역과 중부 유럽 및 대서양 연안지역과의 교역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렇게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에트루리아 및 그리스 본토와 직접 교역 또는 마르세유 등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그리스계 위세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일종의 조공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역관계 외에 그리스에 노예와 군사 등을 조달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켈트 사회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대략 12개 정도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중심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성채와 왕자의 무덤, 그리고 소규모의 무덤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이 당시 사회가 왕자의 무덤에 묻힌 수장층과 여타 무덤에 묻힌 하위 수장층, 그리고 일반민으로 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수장층은 위세품의 재분배 등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통합을 꾀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여타 중심지들과 경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2개의 중심지는 상호 경쟁과 상호의존의 모순적 관계, 다시 말해서 소위 동등정치제 상호관계(peer polity interaction)를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Bradley and Chapma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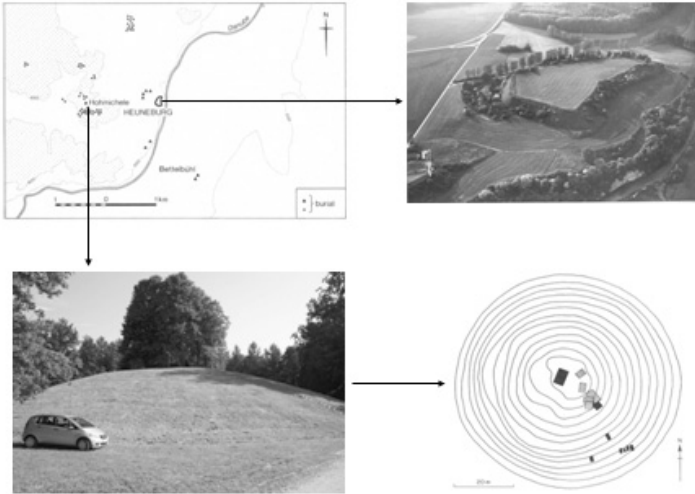
한편 이들 중심지들의 대외교역관계, 즉 그리스와 그리스 식민도시들의 관계가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식민지 건설은 기원전 9세기 이후 7세기에 더욱 활발해진다(Cunliffe, 1988). 실제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아반도는 물론이고 마르세유로 대표되는 동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식민도시들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Cunliffe, 1988; Hodge, 1998). 식민도시의 건설과 이주의 원인으로는 인구증가와 토지부족, 교역기지 구축, 전쟁, 새로운 기회의 모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건설된 식

민도시들마다 각각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Cunliffe, 1997; Hodge, 1998; Whitley, 2001). 이 가운데 마르세유의 경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금속 및 기타 원자재 등을 중부 유럽 및 서유럽의 각지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이자 당시 그리스와 유럽 각지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켈트족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Cunliffe, 1997; Hodge, 1998). 실제로 앞서 언급한 왕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남부 독일의 호호도르프나 프랑스의 빅스 유적에서 출토된 거대한 그리스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트루리아의 그리스계 장인들) 크레이터(Krater, 청동제 저장용기) 등도 원래는 당시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켈트계 수장들이 주문제작을 하여 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리스 혹은 에트루리아에서 교역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장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Biermeier, pers. comm.).

이러한 켈트 사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신진화론적 도식, 즉 무리(band) - 부족(tribe) - 군장(chiefdom) - 국가(state)의 도식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굳이 군장 사회 혹은 국가 사회의 범주에 인위적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굳이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군장 사회, 특히 복합군장 사회나 원시국가에 해당하는 주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Arnold and Gibson, 1995). 즉 수천 명 규모의 인구집단과 위계화, 재분배 시스템, 교역과 교역로의 장악, 중심지와 주변 배후지의 분리, 동등정치체의 등장 등은 렌프류가 지적한 군장 사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nfrew, 1984).

2_ 켈트 사회와 초기국가 형성

군장 사회의 특징을 가진 할슈타트 문화기 켈트 사회는 기원전 5세기에 들어와 남쪽, 즉 북부 이탈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그림 6 참조). 이와 아울러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사회는 마르세유 등을 거치지 않고 다른 식민도시들을 통해 동유럽 지역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은 위기를



〈그림 6〉 Hohmichele 유적과 부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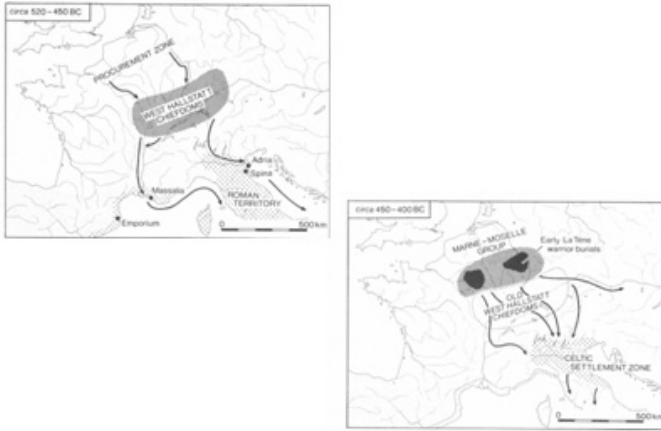
(출처: Cunliff 편, 1994: 346 및 Cunliff, 1997: 56, Champion et al., 1984: 287, 그리고 필자 사진에서 취하여 재편집)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붕괴는 사회 내 최상층에 존재했을 최고 수장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민들의 삶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스위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라 텐네(La tene) 문화의 확산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텐네 문화는 스위스의 라 텐네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을 표지 유적으로 하는 문화로 할슈타트 C와 D기가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한다면 라 텐네 문화는 본격적인 철기 문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켈트 사회는 기원전 50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겪다가 기원전 200년 경, 즉 라텐네 C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Brun, 1995; Cunliff, 1997; Collis, 1984a · 1984b).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질적 변화를 포함한다.

첫째, 소위 오피둠(oppidum) 혹은 오피다(oppida)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목



〈그림 7〉 기원전 5세기 켈트 사회의 변화

(출처: Cunliff 편, 1994: 359에서 취함)

조 성책과 대규모 내부시설을 가진 일종의 성곽도시가 형성된다(그림 7 참조). 이 오피다 혹은 오피둠은 이전의 성책이나 고지성 집락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훨씬 크며(20~40ha 이상, 내부 4km 이상의 직경) 내부에 주거지역 외에 공방지, 교역지역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구획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거주인원도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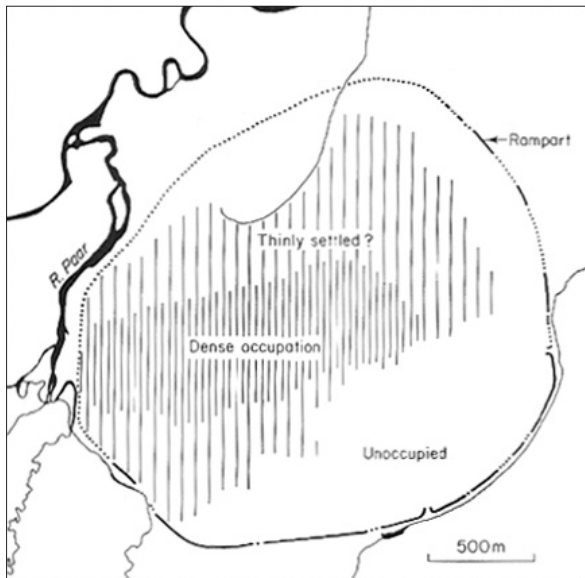
둘째, 이들 유적들에서는 자신들만의 화폐, 즉 동전의 주조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사실 그리스나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적어도 자신들만의 화폐경제, 혹은 화폐경제 권역을 형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외적으로 그리스나 에트루리아와의 교역, 그리고 그것의 중계에 치중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비록 교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자신만의 화폐교역권을 형성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계층화가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에 도 확인되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사회구조는 최상층에 위치한 지도층을 포함한 귀족층, 전사계층, 드루이드(the druids)로 대표되는 사제층, 그리고 일반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층 간의 차이는 좀 더 심화되고 최고 귀족층의 권위와 그것의 표현 또한 더욱 체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Maiden Castle – Oppidum의 사례

(출처: Champion et al., 1984: 311에서 취함)



〈그림 9〉 Manching site(오피둠)의 내부구조

(출처: Champion et al., 1984: 312에서 취함)

넷째, 집약적 농경의 등장과 장거리 무역 또한 더욱 발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집약적 농경의 등장은 당시의 많은 인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생존환경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피다에서 발견되는 여러 증거를 통해 로마와의 상업 및 교역활동이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켈트 사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당시 켈트 사회를 원국가 단계(proto state) 또는 국가 단계(state)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Brun, 1995). 즉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적 계층화와 더불어 성채도시의 발달, 독자적인 화폐경제와 교역의 발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켈트 사회의 사회진화론적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다(Arnold and Gibson, 199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켈트 사회의 정치체 형성과정은 신석기 후기 이래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인의 성장과 그에 따른 공동체 형성의 원칙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 변화에 따른 장기 지속적 변동의 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켈트 사회의 정치체 형성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고고학에서 주로 관심을 가져온 계층화와 영역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무덤이나 주거지 혹은 성채나 성채도시와 같은 다양한 권력의 행사 방식과 통제 방식, 그리고 사회적 복합도의 증가 등과 더불어 교역이나 이주 등을 포함한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Adams, 1978; Anthony, 1997).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몇몇 예를 제외하고 유럽 고고학 자체 내에서는 켈트 사회의 사회 진화론적 단계에 대해서 더 이상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는 달리 신진화론 접근이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켈트 사회의 특징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임의로 설정된 단계에 억지로 맞추는 연구는 굳이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오피다 혹은 오피둠으로 대표되는 켈트 사회의 초기 정치체가 완전한 고대국가의 틀을 갖추고

그리고 그러한 틀이 계속적으로 존속하지 못하고 로마제국의 정복과 간섭에 따라 사라져 갔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 널리 퍼져 있던 켈트의 초기 또는 고대국가 성립 시기를 굳이 무리해서 끌어 올릴 현실적 필요와 동기가 개별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없다는 점 또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럽 고고학 내에서의 이러한 켈트 사회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 추이를 한국의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가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파악되는 고고학적 현상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보다도 초기국가 또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기존의 요리책(cook book), 또는 체크리스트의 몇몇 내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들의 존재여부를 근거로 국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다양한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이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학문외적인 현실적 요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침묵으로 방관하는 대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사태 자체로' 접근해 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V. 맺음말

최근 고고학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청동기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또는 원삼국시대에 다양한 정치체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체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고학자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마르크시즘과 민족주의와 함께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신진화론과 신고고학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민족주의와 신진화론에 입각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 주목하여 고고학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제해 왔던 일종의 연구 패러다임 혹은 명제들이 사실은 매우 의심한 만한 여지가 많으며 동시에 비판적으로 음미되고 결국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고고학이 태생적으로 민족주의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과거’를 통해 일정한 정치적 목적과 함께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학문외적 목적과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또한 고고학 유적·유물의 형식분류와 분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이나 초기 또는 고대국가의 기원, 그리고 강역을 확정하려는 작업은 한편으로 일종의 기초작업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물질문화의 변동의 다양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방법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초기국가 형성의 문제도 계층화나 영역화 또는 특정한 유적·유물의 등장과 의미의 설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재 한국 고고학에서 주 연구경향으로 삼고 있는 주거지나 무덤의 규모 차이에 따라 계층화의 존재여부를 판별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는 고고학 유적·유물이 가진 자료적 잠재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교역 등을 포함한 외부적 변수 그리고 국가라는 특수한 정치체의 형성이라는 사회 변동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개인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단순하게 파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국 고고학의 연구경향은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할슈타트(Halstatt) C기에 해당하는 대략 기원전 7세기 이후 군장 사회(좀 더 엄밀히 말하면 복합 군장 사회 또는 원시국가)가 출현한 이후, 라 테네 문화기인 기원전 2세기대에 이르러 켈트 사회에서 초기 국가단계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켈트 사회는 기원전 7세기 이후 그리스 및 에트투리아와 중부 유럽 및 서유럽

사이의 교역로를 장악하면서 그리스 등으로는 자원뿐만 아니라 노예와 군사를 조달하면서 부를 축적하였고 대규모의 성채와 왕자의 무덤, 그리고 소규모의 무덤을 통해 개별 중심지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위세품의 재분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상호경쟁과 의존의 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형성이 단순히 무덤이나 주거지의 규모 차이에 따른 사회계층화를 포함한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위세품의 부장을 통한 상징적 권력의 표현과 내부 통합, 그리고 교역과 경쟁, 상호의존 등을 포함한 외부와의 관계 등의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초기 혹은 고대국가의 기원과 형성의 문제는 학문외적인 요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목적지향적 연구 시각이나 방법론 대신 고고학 자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내부적 변화와 외부적 요인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맥락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권구, 2005, 『청동기 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김범철, 2011, 『쌀의 고고학-한국청동기 시대 수도작과 정치경제』, 민속원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 김정배, 1987, 『한국의 고대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무문토기 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국사관논총』 104
- 김종일,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 63
-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 김종일, 2009a, 「“동아시아의 고고학연구와 내셔널리즘”에 대한 종합토론문」, 제52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부 발표회
- 김종일, 2009b, 「한국청동기 시대 남성 몸의 형성과 상징구조」,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문화로 보는 한국사 2)』,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 박순발, 2007,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이성주, 2007, 『청동기·철기 사회변동론』, 학연문화사
- 이종욱, 1981,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 이흥중, 2005, 「관창리취락의 경관」,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편, 서경문화사
- 최몽룡, 1983, 「한국고대국가형성에 대한 일고찰- 위만조선의 예」, 『김철준박사회갑기념논총』
- 한국고고학회 편, 2006,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제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한국고고학회 편, 2007,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한국고고학회 편, 2008, 『양식의 고고학』, 제3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한국고대사학회 편, 2007, 『한국고대사연구의 신동향』, 서경문화사
- 트리거 브루스, 성춘택 역, 2010,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사회평론
- Adams, W. Y., 1978, “On Migration and Diffusion as Rival Paradigms,” In Duke,

- P. G., Ebert, J., Langemannand, G., and Buchner, A. P. (eds.), *Diffusion and Migration: Their Roles in Cultural Development*, Calgary: University of Calgary Archaeological Association
- Anthony, D., 1997, "Prehistoric Migration as Social Process," In Chapman, J. and Hamerow, H. (eds.), *Migrations and invasions in archaeological explanation*,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664, Oxford: Archaeopress
- Arnold, B. and Gibson, D. B., 1995, *Celtic Chieftdom and Celtic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field, T. J., 2000, *The Dictionary of Anthropology*, Cambridge, Mass: Blackwell
- Barrett, J., 1993,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 Borgatta, E. F. and Montgomery, R. J. V., 2000, *Encyclopedia of Sociology*(2nd e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 Bradley, R. and Chapman, R., 1986,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long-distance relations in later Neolithic Britain and Ireland," In Renfrew, C. and Cherry, J. (eds.), *Peer Polity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n, P., 1995, "From Chieftdom to State organization In Celtic Europe," In Arnold, B. and Gibson, D. B. (eds.), *Celtic Chieftdom and Celtic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mpion, T., Gamble, C., Shennen, S., and Whittle, A., 1984, *Prehistoric Europe*, London: Academic Press
- Childe, V. G., 1925,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hilde, V. G., 1926,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Bailey Bros. & Swinfen
- Childe, V. G.,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 Childe, V. G., 1954, *What Happened in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 Childe, V. G., 1956, *Piecing Together the Past*, London: Routledge
- Childe, V. G., 1957, *The Dawn of European Civilisation*(6th ed.), London: Routledge

- Coles, J. M., 2000, *European Societies in the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s, J. M. and Harding, A. F., 1979, *The Bronze Age in Europe*, London: Methuen and Co. Ltd
- Collis, J., 1984a, *Oppida: earliest towns north of the Alps*,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 Collis, J., 1984b, *The European Iron Age*, Batsford: B. T. Batsford LTD
- Cunliffe, B., 1988, *Greeks, Romans & Barbarians*, London: B. T. Batsford Ltd
- Cunliff, B. ed., 1994, *The Oxford illustrated Prehistory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nliffe, B., 1997, *The Ancient Cel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bres, M.-A. and Robb, J. E. eds., 2000, *Agency in Archa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arle, T.,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in Pre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arle, T. and Kristiansen, K., 2010, *Organizing Bronze Age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gles, F., 1884(1985),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London: Penguin Classics
- Fried, M., 1967,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an essay in political anthropology*, New York: Random House
- Gero, J. and Conkey, M., 1991, *Engendering Archaeology*, Oxford: Blackwell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London: Polity Press
- Gräslund, B.,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der, I., 1991, *Reading the past*(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ge, A. T., 1998, *Ancient Greek France*, London: Gerald Duckworth
- Hill, C., 1999, "Early Historic Britain," In Hunter, J. and Ralston, I. (eds.), *The Archaeology of Britain*, London: Routledge

- Hurst, H. and Owen, S. eds., 2005,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 Jones, A. ed., 2008, *Prehistoric Europe*, Oxford: Wiley-Blackwell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London: Routledge
- Kristiansen, K. and Larsson, T. B., 2004, *The Rise of Bronze Age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K., 1964,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Marx, K., 1994, *Early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re, J. and Scott, E. eds., 1997, *Invisible People and Processes*,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Owen, S., 2005, "Analogy, Archaeology and Archaic Greek Colonization," In Hurst, H. and Owen, S. (eds.),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 Renfrew, C., 1981, *The Megalithic monuments of Western Europe*, Thames and Hudson
- Renfrew, C., 1984, *Approaches to Social Archaeology*, Cambridge(US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ckett, J. R., 1982, "Approaches to style in lithic archaeolog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59-112
- Service, E., 1962,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ew York: Random House
- Service, E., 1975,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 Inc
- Shanks, M. and Tilley, C., 1982, "Ideology, symbolic power and ritual communication: a reinterpretation of Neolithic mortuary practices," In Hodder, I. (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nks, M. and Tilley, C., 1987, *Social Theory and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 Shennan, S. E., 1975, "The social organisation at Branč," *Antiquity* 49: 279-87
- Shepherd, G., 2005, "The Advance of the Greek: Greece, Great Britain and Archaeological Empires," In Hurst, H. and Owen, S. (eds.),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 Sørensen, M. L. S.,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Trehene, P., 1995, "Warrior's beauty: the masculine body and self-identity in Bronze-Age Europe,"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3
- Trigger, B., 1989,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ley, J., 2001, *The Archaeology of ancient Gree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essner, P.,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9: 253-76
- Wobst, H. M., 1977, "Stylistic behaviou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Cleland, C. E. (ed.),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Paper 61

[ABSTRACT]A comparative review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arly
and the Ancient state

– Focusing on Korean and European Cases –

Kim, Jongil

With the recent explosive increase of archaeological data, the interests in the emerg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polities in the Bronze, Iron and Proto Three Kingdom periods of Korea become also continuously increased between Korean archaeologists. These interests have been influenced by neo-evolutionism and New archaeology, which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1980's, as well as traditional Marxism and Nationalism.

This research examin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herent to the existing researches, in particular, focusing on 'classification'(or hierarchisation) and 'territory', based upon nationalism and neo-evolutionism. As a consequenc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search paradigm(or the premises), which have been implicitly accepted, are actually of doubt and of question and thus, ought to be critically reviewed and eventually overcome. That is to say, any attempts to unveil the origin of a nation or the early or the ancient state, and to mark the territory of a polity through the researches on typology and distribution of specific archaeological artefacts and sites and the emergence of classification as well as the researches based upon nationalism, seems necessary as a basic starting platform for any

further researches in a sense.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overemphasis is laid on these types of research, the various aspects of material culture change could be ignored and it is not easy to justify those approaches in methodological terms.

These limits inherent to Korean archaeology become more evident by a comparative review with that of the Celtic society in Europe. In particular, the Celtic society tends to show that the formation of the early state would be possible by complex and outer factors such as expression of symbolic power with the prestige burial goods and incorporation of the society by it, trade and competition, and mutual interdependence as well as inner factors including social classification caused by inequality and difference in the size of tomb and settlement. Therefore, the origin and formation of the early and the ancient state ought to be approached by contextual and thoughtful interpretations on inner and outer factors with a full consideration of the potentials of archaeological data, rather than teleological research perspectives or methodologies, influenced by non-academic demand.

keywords

the early state, the ancient state, nationalism, territory,
(social) classification, context, the Celtic society.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김범철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일부 중국 학자를 제외하고 중국의 문명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 측의 국수주의적 관점이나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초기문명론을 접한 한국 학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탓인지 중국 探源工程 관련 논의의 이론 및 실제적 허구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초기문명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검토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¹⁾ 그러한 작업의 목표는 고고학적 조사

※ 투고일: 2011년 5월 11일, 심사일: 2011년 9월 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 1) 김병준·김진우·이명화·정하현,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 자료 이용 사례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박양진·오세은·이성구·정대영, 2008,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송호정·이재현·이청규·이해련, 2008,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심재훈·김경호·민후기·최진목, 2008, 『하상주단대 공정: 중국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이청규·김정열·송호정·이재현·이종수, 2009, 『요하유역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다.²⁾ 그런데 우리 측의 비판이나 성과야 어찌 되었건, 고고학 자료에 대한 중국 측의 국수주의적 해석이나 문명발생의 다원론으로 귀결되는 결과론적 해석을 전면적으로 약화시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논의로 세계 여러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비판과 실상 파악이 중요한 화두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외에 보편적이고 탈가치적인 고고학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정치적 목적이 농후한 논의를 넘어 보다 학술적인 분야로 관심을 유도하는 대응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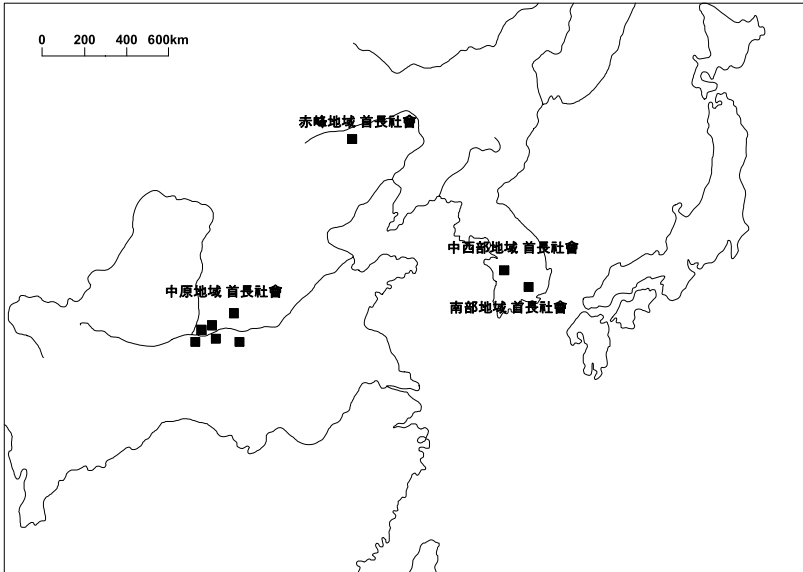
비판을 넘어, 대안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 이 글이 추구하는 바이다. ‘古文化古城古國論³⁾’과 같은 틀에 따라 ‘문명’의 발생, 국가단계 사회의 등장을 도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접근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방법론적 시도와 보다 보편적인 이론 도출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그간 ‘초기복합사회의 발달’이라는 고고학의 일반적 연구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몇 영역(dimensions)별로 개별 궤적들을 비교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이론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그러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영역은 ① 생계경제(의 집약화), ② 공공(토목)사업, ③ 위세와 재화, 수공생산 전문화, 장거리교역, ④ 갈등과 전쟁 등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개별 궤적에 대한 정보는 中華의 핵심지역인 中原지역, ‘중국 문명의 曙光⁴⁾’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紅山文化的 핵심인 赤峯地域, 한국의 中西部와 南部地域에 대한 고고학 연구성과에서 얻어질 것이다(도면 1 참조).

2) 송호정, 2008, 「요하유역 고대문명의 변천과 주민집단」,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4~69쪽

3) 蘇秉琦, 1986, 「遼西古文化古城古國: 兼談當前田野考古工作的重大惑大課題」, 『文物』 1986(8)

4) 蘇秉琦, 1999, 『中國文明起源新探』, 北京: 三聯書店



〈도면 1〉 연구대상 초기복합사회의 위치

이 글이 주목하는 각 지역사회는 복합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략적이거나 酋長社會(chiefdom)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고고학 및 민족지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개별 수장사회들은 구체적인 양태나 다양한 양상을 띠는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⁵⁾ 그러나 ‘無頭平等의 사회와 국가단계 사회의 중간에 속하는(intermediate)’, ‘(단위)공동체 내·외부에서 기능·위계적 차별이 나타나는 사회’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대략 해당 사회의 양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실효성은 가지고 있기도 하다.⁶⁾ 즉, 수장사회란 복합사회의 발달된 형태인 국가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지

5) G. M. Feinman and J. E. Neitzel, 1984, "Too Many Types: An Overview of Sedentary Prestate Societies in the Americas," In M. B. Schiffer (ed.),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pp. 39~102

6) R. D. Drennan, 1992, "What Is the Archaeology of Chiefdoms about?," In L. E. Embree (ed.), *Metaarchaeology: Reflections by Archaeologists and Philosophers*,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53~74

만 무두평등의 맥락에서는 탈피한 사회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범주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사회의 복합도를 인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있다. 첫째는 물질문화의 증거로 그러한 사회상이 인지되는바, 자료의 잔존이나 발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고학적으로 복합사회를 인지한다는 것은 해당사회의 복합화가 이미 진행되어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상의 상태를 거치고 사멸한 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의 문화변천상 혹은 그를 인지하는 해상도 즉, 편년의 정밀도에 따라 복합화에 대한 고고학적 인지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역편년상 세분이 어렵고 고고학 조사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록 그 지역 초기 복합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회로 인지할 수 있으나 실상에 대해 상당히 복합화가 진행된 후의 모습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주목하는 사회들이 국가단계 사회에 이르지 않았다고는 하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동일한 복합도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시차를 둘 수도 있다.

결국, 해당지역에서 ‘국가’ 단계로 돌입하기 이전 복합화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각 지역의 몇 가지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동북아지역 복합사회 발달의 과정(process)과 기제(mechanism)⁷⁾를 추론해 보는 이론화 작업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인 만큼, 사실 시간적 동정이나 미세한 복합도의 차이를 구별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밝힌다.

7) R. D. Drennan, 1996, "One for All and All for One: Accounting for Variability without Losing Sight of Regularities the Development of Complex Society," In J. E. Arnold (ed.), *Emergent Complexity: The Evolution of Intermediate Societies*, Ann Arbor: International Monographs Prehistory, pp. 25~34; K. V. Flannery, 1972, "The Cultural Evolution of Civilization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pp. 399~425

II. 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 영역별 접근

일부 연구자들은 蘇秉琦의 區系類型論⁸⁾이 일원적 中華文明論을 극복함으로써 자문화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것처럼 평가⁹⁾하고 있으나 이 또한 거시적 견지에서 보자면 중국의 국수주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中華文明論이 漢族 중심 혹은 中原 중심의 해석이라면, 구계유형론은 현대국가로서 중국이 점유하는 거대한 영토 중심의 해석인 셈이다.¹⁰⁾ 또한 전통적인 문명론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center)과 변방(periphery)의 관계 설정 및 문화적 용광로(melting pot)에 대한 생각은 구계유형론에서도 그 근저를 이루고 있다. 결국, 구계유형론이 중국 각지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중화관념의 상이한 버전일 뿐이며, 지극히 결과론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의 중국 영토와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독자적 문화의 진화를 인정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발전적인 모습이며,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간에 생산적인 연구의 물꼬를 터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기왕 독립적인 궤적들(trajectories)－蘇秉琦에 따르면 대체로 6개의 문화권역들－을 인정하고, 후속하는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개별 궤적들에서 국가단계 사회의 前身이자 ‘문명의 曙光’인 초기복합사회, 즉 首長社會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문명’이나 ‘국가’라는 것이 끝이 정해진 발전과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선택과 상호작용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의 결과이고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선택과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설

8) 蘇秉琦 外,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9) T. Wang, 1997, “Establishing the Chinese Archaeological School: Su Bingqi and Contemporary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71, pp. 31~39

10) 姜仁旭,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중국 동북지방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韓國考古學報』 56

명하려는 시도가 병행된다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질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종래 중국 고고학계의 전통적인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이나 도식적 해석, 문화사적 접근으로는 그러한 작업에 생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즉, 큰 이론적 도그마에 따라 결론이 정해져버리는 시각으로는 후속연구에서 사례부가 이외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文明探源工程의 근간을 이루는 ‘古文化古城古國論’의 접근은 흡사 1970년대 이후 구미 학계에서 퇴색되어버린 社會形式論的 도식의 증명작업과 매우 유사하다. 다음에서 시도하는 영역별접근(dimensional approach)은 한 세대 전의 환경-기술결정론에 치중한 신진화론적 해석¹¹⁾이나 사회형식론¹²⁾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주체(social actors)의 독립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조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영역별접근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영역별로 고찰하고 나아가서 개별 사회 간 비교를 통해 그러한 변화의 과정(process)과 그에 작용했던 기제(mechanism)를 파악하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계자원 생산의 집약화, 장거리교역, 전쟁, 인구증가 등은 그간 복합사회의 발달을 설명하려 했던 연구들이 주목하는 영역인 동시에 국가 발생의 동인(prime mover)으로도 자주 거명되었던 기제들이다.¹³⁾ 물론 여기서 수행하려

11) W. T. Sanders and D. Webster, 1978, "Unilinealism, Multilinealism, and the Evolution of Complex Societies," In C. L. Redman (ed.), *Social Archaeology, Studies Arche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pp. 249~302

12) M. H. Fried, 1967,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An Essay Political Anthropology*, New York: Random House; E. R. Service, 1962,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ew York: Random House

13) R. D. Drennan, 1991, "Pre-Hispanic Chiefdom Trajectories Mesoamerica, Central America, and Northern South America," In T. K. Earle (ed.),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63~287; R. D. Drennan, 1996, 앞의 글; T. K. Earle,

는 작업이 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 범문화적으로 통용될 복합사회 발달의 동인을 찾는 시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는 그러한 작업으로 비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복합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발생하며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나름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의도이다.

그러한 작업이 독립적인 개별 사회들 간의 비교로 이어지면서 상사·상이성을 정리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이론화가 가능해지게 된다. 영역별접근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도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⁴⁾

III.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의 자연환경과 취락분포유형

동북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를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그 사회들이 입지한 자연환경, 광역적인 취락분포유형 등에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취락분포 자료를 대상으로 취락체계를 복원하는 작업과 순위-규모분석을 이용하여 중앙집중도(centrality)와 통합도(integrity)를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광역적인 취락분포유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광역적 취락분포유형 자료는 서구적인 취락분포 조사를 통해 생성되었거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

1991a, "The Evolution of Chiefdoms," In T. K. Earle (ed.),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5

14) R. D. Drennan, 1991, 앞의 글; T. K. Earle, 1989, "The Evolution of Chiefdoms," *Current Anthropology* 30, pp. 84~88; T. K. Earle, 1991a, 앞의 글

공된 것이다. 중국 中原地域의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지표 및 발굴조사 자료를 집성·분석하여 Liu Li(중국명 劉莉)가 제공한 정보에, 중국 赤峰地域의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에 대한 이해는 Gideon Shelach와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The Chife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Archaeological Research Project) 팀 등에서 생성한 자료를 집성·분석하여 Robert Drennan과 Christian Peterson이 제공한 정보에, 韓國 中西部地域의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에 대한 이해는 필자가 각종의 지표 및 발굴자료를 집성·분석하여 생성된 정보에, 한국 南部地域의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에 대한 이해는 관련 보고서 및 기 발표된 글을 분석하여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¹⁵⁾ 이해의 해상도는 원저자의 정보제시 정도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광역적 취락분포유형 연구가 그러하듯, 대략적인 취락의 위계성 파악이나 중앙집중도·통합도의 파악에는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료 생성 이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경우도 있으나 광역적 취락분포유형 연구가 대부분은 지표조사를 통해 얻어진 유적의 위치와 면적에 기초하는바, 분석에 큰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가 기본적으로 표본인바, 완전히 일부 지역이 조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광역적인 취락분포유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소 낮은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그리기’의 작업이 주를 이루는 취락분포유형 연구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개별 유적의 발굴자료 평가에서 다소 인상주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사회 전반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취락분포유형에서 보이는 개별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보는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여, 후술할 영역별 고찰에서 비교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실, 자연환경이나 내부구조상 특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상이한 궤적을 보이는 사회들이 많은 점은 과연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추가적인 탐구를 유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몇 영역에서 보

15) 구체적인 자료인용은 해당 부분에서 밝히기로 한다.

이는 유사성이 유사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또한 이론화작업의 전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_ 중국 중원지역의 초기복합사회

중국 중원지역에서 사회복합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河南省 서부의 仰韶文化 중기(4000~3500BCE)에서부터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어 광역적인 현상으로 인지가 가능한 것은 龍山文化期(2800~2000BCE) 동안이다. 이 시기 동안 중원지역에서는 초보적인 문자체계가 등장하고, 순동 및 청동 등 금속제가 소형 장신구 제작에 이용되고, 토축성채를 갖춘 취락이 곳곳에 등장하고, 전쟁·갈등이 확산되고, 매장행위에서 사회적 분화의 일단이 인지되고, 위세적 성격을 띠는 儀器의 교역이 활발해지며, 국소적 지역문화집단 간 交涉이 강화되는 등, 고대국가 등장 전조인 사회복합화(social complexity)가 활발하게 진행된다.¹⁶⁾ 최근 후술할 陶寺유적의 발굴성과에 주목하여, 용산문화기에 초기국가의 등장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二里头와 같이 전국적인 문화 중심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려운바,¹⁷⁾ 용산문화기를 사회복합화의 이른 단계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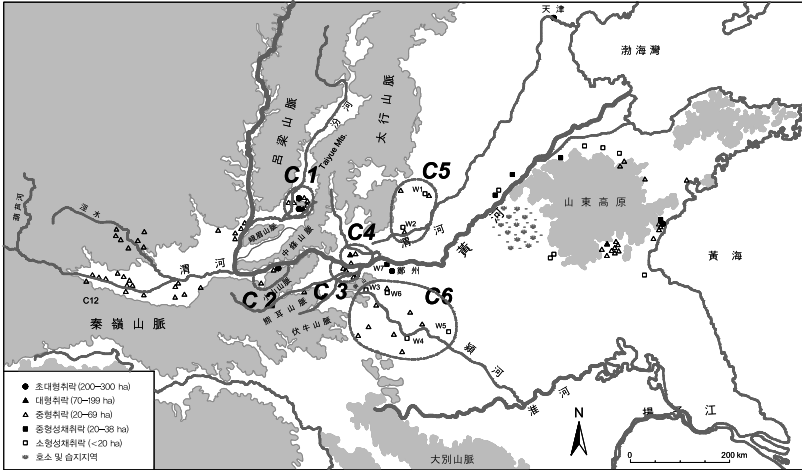
중국 중원지역 초기복합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가 주목하는 자료는 山西省 남부와 하남성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672개 용산문화 후기 취락¹⁸⁾에 관련된 것들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600~2000년경에 해당한다.¹⁹⁾ 이 지

16) L. Liu, 2005, *The Chinese Neolithic: Trajectories to Early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 이성구, 2008, 「중화문명탐원공정 예연구와 제1단계 '취락형태에 반영된 사회구조' 과제에 대한 연구」,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70~240쪽

18) 분석대상은 龍山文化 단일기 취락이거나 龍山文化期가 주류를 이루는 취락만을 포함하고 있다.

19) L. Liu, 1996, "Settlement Patterns, Chiefdom Vari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States North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5, pp. 237~288; L. Liu, 2005,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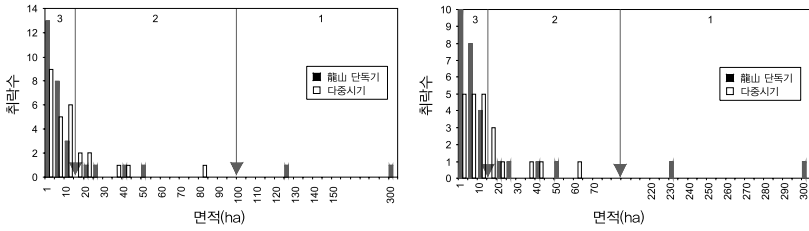


〈도면 2〉 中原지역 군집의 위치²⁰⁾

역의 취락들은 陶寺지역, 三里橋지역, 伊河-洛河유역, 秦河유역, 하남성 북부지역, 하남성 중부지역 등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각각을 하나의 독립적인 政治體(polity)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도면 2 참조).

여섯 개 지역군 중 陶寺지역 군집(C1)은 呂梁山脈, 黃河, 峨眉山脈 등이 둘러싼 臨汾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 지형적으로 폐쇄·한정되어 있다. 분지 내에는 汾河와 回河가 흐르고 있어 담수가 풍부하고, 비옥한 황토가 넓게 분포한다. 이 군집에 대한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의 복원은 용산문화 單獨期에 속하는 58개소의 취락의 분포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지역편년에 따라 58개 취락은 용산문화의 陶寺期(2500~2000BCE)의 전·후기 취락으로 구분되는데, 전기에 속하는 취락이 30개소, 후기에 속하는 것이 28개소이다. 전기에 속하는 30개소 취락은 규모에 따라 대체로 3등급으로 구분된다. 2개가 1등급(대형) 취락이고, 4개가 2등급(중형) 취락, 나머지 23개는 3등급(소형) 취락이다(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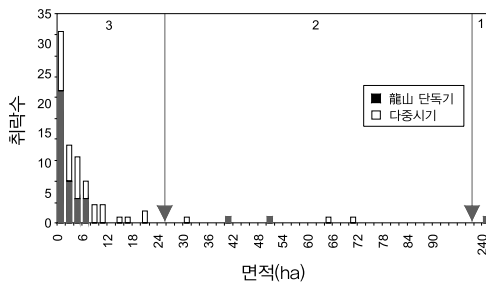
20)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4(249쪽)와 L. Liu, 2005, 앞의 책에 제시된 Fig. 6.8(171쪽)을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각 군집의 명칭 또한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바를 따른다.



〈도면 3〉 陶寺지역 군집의 취락면적분포(左: 전기, 右: 후기)²¹⁾

참조).

三里橋지역 군집(C2)은 하남성 서부의 고지대-해발고도 500~2000m-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은 黄河, 남쪽은 瑤山脈, 서쪽은 秦嶺山脈이 지형적인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외부와의 통로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폐쇄·한정적인 지형 탓에, 中原과 關中平原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函谷關이 고대부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지역 편년상 용산 문화의 三里橋期에 속하는 42개소 취락은 규모에 따라 대체로 3등급으로 구분 가능한데, 1개가 1등급(대형)취락이고, 2개가 2등급(중형)취락, 나머지 39개는 3등급(소형)취락이다(도면 4 참조).



〈도면 4〉 三里橋지역 군집의 취락면적분포²²⁾

21)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5·6(250쪽)과 L. Liu, 2005, 앞의 책에 제시된 Fig. 6.10(173쪽)을 전재하여 수정하였다.

22)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10(253쪽)을 전재하여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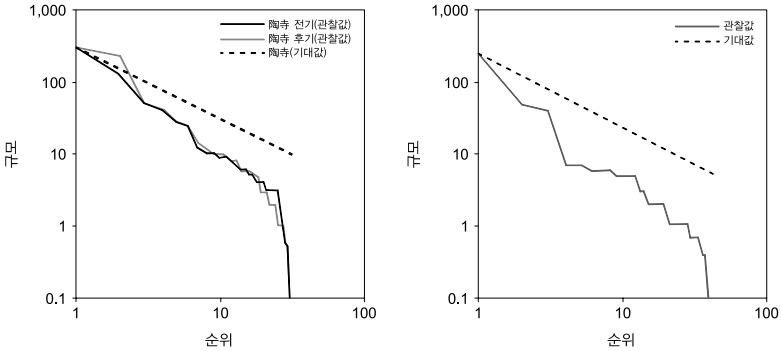
이상의 두 군집은 지형적 배경이 폐쇄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 외에도 취락 분포가 중원지역 여타 군집들에 비해 대형취락을 핵으로 응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히스토그램에서 보듯이 최상위중심지로 지칭되는 대형취락은 면적에서 압도적이다. 만약 규모에 따라 인구밀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최상위중심지로의 인구집중이 매우 확연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취락규모와 분포에 대한 順位-規模(rank-size)분석²³⁾은 그러한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陶寺지역 군집의 전기는 primate유형인 바, 당시 사회가 매우 중앙집중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三里橋지역 군집 또한 primate형을 띠고 있어, 陶寺지역 군집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앙집중화된 사회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陶寺지역 군집의 후기는 언뜻 보기에는 전기와 큰 차이가 없는듯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상위 취락에서 convex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도면 5 참조). 결국 규모가 비슷한 대규모 취락의 공존 및 경쟁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고고학적 발굴양상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전기에는 陶寺유적이 이 지역의 독보적인(최)상위 중심지로서 夯土기법으로 축조된 대규모 토축성채취락²⁴⁾이었지만 후기에는 성채는 유실되고, 규모도 급격히 축소된다. 반면, 塔兒山맥을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方城-南市유적이 이 시기에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데, 최근 南陽市 方城縣 平高台遺蹟의 용산문화기 성채 및 해자 발굴은 그러한 상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⁵⁾

23) 순위-규모분석의 전제와 절차,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필자의 별고(金範哲, 2005b, 「錦江 中·下流域 青銅器時代 中期 聚落分布類型 研究」, 『韓國考古學報』 57집, 99~124쪽)에 상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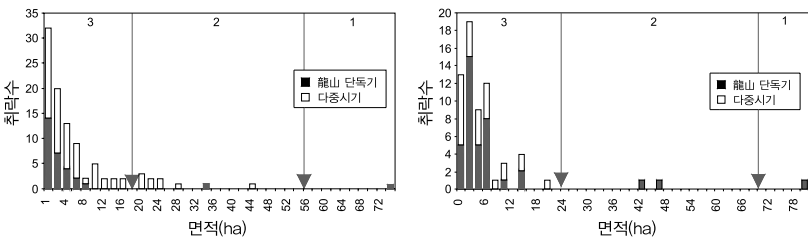
24) 최극성기에는 전체 300ha의 면적 중 280ha가 성채로 둘러싸여진 대규모 취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황하유역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龍山文化期 취락으로 알려져 있다. 高煒·張岱海·高天麟, 2007, 「陶寺遺址的發掘與夏文化的探索」, 『襄汾陶寺遺址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何驚, 2004, 「陶寺文化遺址-走出堯舜禹“傳說時代”的探索」, 『中國文化遺產』 2005(3)

25) L. Liu, 2005, 앞의 책



〈도면 5〉 陶寺지역(좌) 및 三里橋지역(우) 군집의 순위-규모곡선²⁶⁾

伊河-洛河유역 군집(C3)은 伊河와 洛河 하류역의 하안 충적대지 상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서남북이 黃河, 瑤山脈, 熊耳山脈, 崇山脈 등에 의해 느슨하게 포위되어 지형적으로 완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이 군집에 대한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의 복원은 洛陽市, 偃師市, 孟津縣, 新安縣 일원에 산재한 용산문화 王灣期 취락 92개소에 대한 분포분석의 결과에 기초한다.²⁷⁾ 이 취락 중 단지 28개소만이 용산문화 단독기에 속하며, 나머지는 여러 시기에 걸쳐 있다. 이 중 용산문화 단독기에 속하는 28개소 취락은



〈도면 6〉 伊河-洛河유역 군집(좌) 및 秦河유역 군집(우)의 취락면적분포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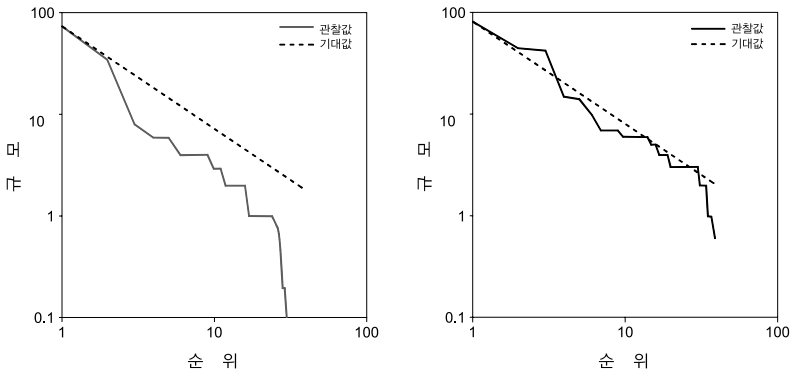
26)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8(252쪽)을 전재하여 수정하였다.

27) L. Liu, 1996, 앞의 글; L. Liu, 2005, 앞의 책

28)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12(225쪽)와 L. Liu, 2005, 앞의 책에 제시된 Fig. 6.13(177쪽)을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규모에 따라 대체로 세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1개가 1등급(대형)취락이고, 1개가 2등급(중형)취락, 나머지는 3등급(소형)취락이다(도면 6 참조). 한편,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을 포함하면 9개의 2등급 취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단계의 취락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도면 6 참조).

秦河유역 군집(C4)이 자리 잡은 지역은 동쪽으로 저평한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어 완전히 폐쇄적인 지형적 배경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쪽으로 산악지형이, 남북으로 黃河와 秦河 등이 자연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군집에 대한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의 복원은 秦河 하류역에 자리 잡은 濟源市, 孟州市, 沁陽縣, 濩縣, 博愛縣 일원에 산재하는 용산문화기 취락 66개소에 대한 분포분석에 기초한다.²⁹⁾ 66개 취락 중 용산문화 단독기에 속하는 38개소는 규모에 따라 대체로 세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1개가 1등급(대형)취락이고, 2개가 2등급(중형)취락, 나머지는 3등급(소형)취락이다(도면 6 참조). 한편,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들은 모두 3등급에 속하는 바, 秦河유역 군집의 광역적 취락체계는 3단계 위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도면 6 참조). 대체로 군집 내 북쪽에 위치한 취락들은 後崗期の



〈도면 7〉 伊河-洛河유역(좌) 및 秦河유역(우) 군집의 순위-규모곡선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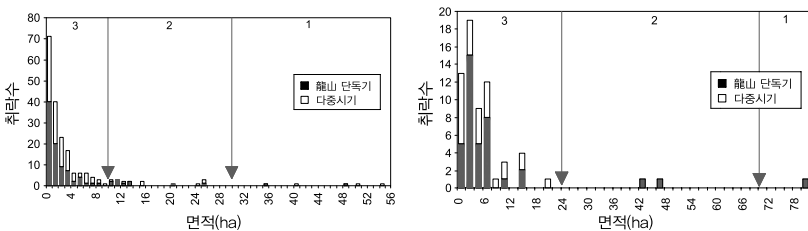
29) L. Liu, 1996, 앞의 글; L. Liu, 2005, 앞의 책

30) L. Liu, 1996, 앞의 글 Fig. 14(256쪽)와 L. Liu, 2005, 앞의 책 Fig. 12(175쪽)를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영향이, 남쪽에 위치한 취락들은 王灣期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伊河-洛河유역 군집이 취락체계에서 보이는 위계성의 확연함이나 중심지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陶寺지역 군집에 비해 다소 덜 복잡화되었다고 평가³¹⁾ 되기도 하지만 역시 전형적인 primate양상을 띠고 있어 중앙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秦河유역 군집은 제법 안정적인 log-normal유형을 띠고 있어, 중앙집중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매우 높은 통합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도면 7 참조).

河南省 北部地域 군집(C5)은 太行山脈 동쪽으로 펼쳐진 충적대지 상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黃河와 渭河 및 그 지류들이 잘 발달해 있어 저평하고 생산력이 높은 토양과 풍부한 수원을 갖춘 지역이다. 이 군집에 대한 광역적 취락체계 복원은 焦作市, 安陽市, 鶴壁市, 濮陽市 일원에 산재하는 용산문화 后港期에 속하는 201개소-용산문화 단독기에 속하는 것이 97개소, 나머지는 여러 시기에 걸쳐 있음-의 취락에 대한 분포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다.³²⁾ 취락의 수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양소문화기와 비교해 보건대, 이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취락들은 규모에 따라 대체로 세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2개가 1등급(대형)취락이고, 9개가 2등급(중형)취락, 나머지 189개는 3등급(소형)취락이다(도면 8 참조).



〈도면 8〉 하남성 북부지역 군집(좌) 및 중부지역 군집(우)의 취락면적분포³³⁾

31) L. Liu, 2005, 앞의 책

32) L. Liu, 2005,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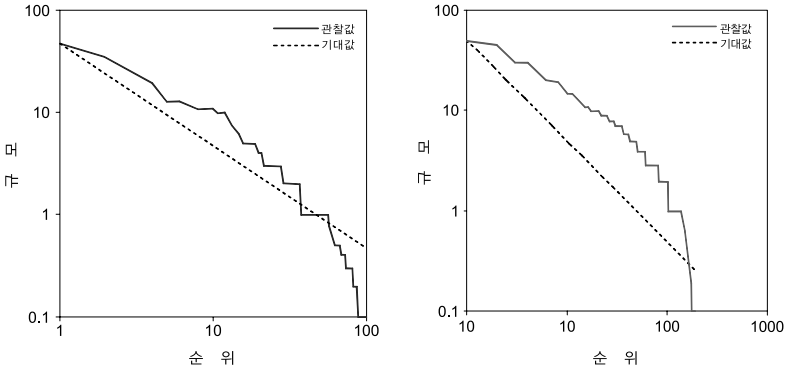
33)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22(262쪽)와 L. Liu, 2005, 앞의 책 Fig. 13(177쪽)을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도면 9에서 보듯이 순위-규모곡선은 확연한 convex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일탈유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내부에 몇 개의 독립(경쟁)적인 정치체가 공존한다는 견해이다. 사실, 하남성 북부지역 군집 내에는 분포상 구분이 가능한 6개의 하위 군집이 자리하고 있다.³⁴⁾ 각 군집의 최상위중심지 간의 거리는 36~64km 정도로 상층적인 범위 이상의 이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군집 중 두 곳-後崗유적과 孟庄유적-에서는 취락을 둘러싼 토축성채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규모면에서는 작은 2등급 취락이지만 토목공사에 투여되었을 사회적 역량이나 출토유구 및 유물로 미루어 각 군집에서 중핵적 위상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河南省 中部地域 군집(C6)은 중국 주요 평야 중 하나인 黃淮平原에 자리 잡고 있으며 潁河 및 그 지류들이 평원을 관통하고 있어 수원도 풍부한 개방적인 자연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이 평원은 黃河와 淮河의 퇴적작용에 따라서 형성되었는데, 심한 곳은 10m 넘게 沈泥의 퇴적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활발한 하상퇴적으로 인해 이 군집은 타 지역에 비해 용산문화기 유적 발견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鄭州市, 開封市, 周口市, 漯河市, 許昌市, 平頂山市, 駐馬店市 일원에서는 산재하는 용산문화 郝家台期 취락 330여 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취락들은 타 지역에서는 중규모 중형에 해당하는 1등급취락이 8개소, 타 지역의 소규모 중형에 해당하는 2등급취락이 9개소, 소형의 3등급취락이 310여 개소 등으로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도면 8 참조). 현재 취락은 주로 구릉에 자리 잡은 것이 대부분인데, 대형 취락은 저지대에 입지하여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순위-규모 분석의 결과, 전체적인 양상은 하남성 북부지역 군집과 마찬가지로 확연한 convex형태를 띠는바, 군집 내 복수의 하위 군집들이 병존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도면 9 참조). 하위군집 중 네 곳에서는 토축성채를 갖춘 취락-王城崗, 郝家台, 平糧台, 西山-이 확인되는데 하남성 북부지역의 양

34) L. Liu, 1996, 앞의 글; L. Liu, 2005, 앞의 책



〈도면 9〉 하남성 북부지역 군집(좌) 및 중부지역(우) 군집의 순위-규모곡선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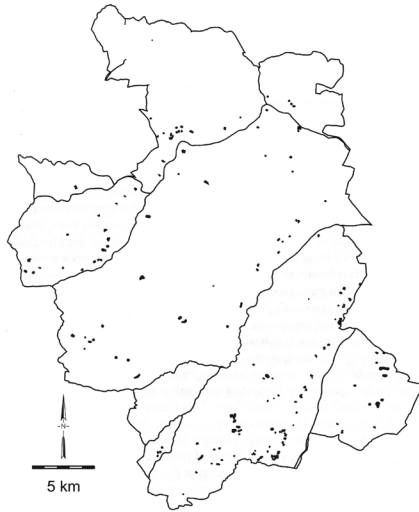
상과 마찬가지로 해당 하위군집의 중심지로 평가할 수 있겠다.

2_ 중국 赤峰地域의 초기복합사회

遼西地域에서 복합적인 사회조직이 등장하는 것은 紅山文化期(4500~3000BCE)이다. 옥기나 정선된 채도의 등장을 통해 전문화된 수공생산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화려한 부장이 소수의 분묘에 집중되는 현상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을 감지할 수 있겠다. 또한 東山嘴나 牛河梁 등에서 확인된 제의 유적을 통해 (대규모) 인력동원·운용체제 및 祭儀를 주도하던 중핵적 취락(단위공동체)이나 상위유력층(elite)의 존재도 추정할 수 있다.³⁶⁾ 遼西지역 홍산문화는 蘇秉琦의 두 가지 이론이 발표된 이후, 더욱 각광

35) L. Liu, 1996, 앞의 글에 제시된 Fig. 21(261쪽)·Fig. 24(263쪽)와 L. Liu, 2005, 앞의 책 Fig. 12(175쪽)를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36)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 考古調查階段性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Early Chiefdom Communities Compared: Settlement Pattern Record for Chifeng, the Alto Magdalena, and the Valley of Oaxaca," R. E. Blanton (ed.), *Settlement, Subsistence, and Social Complexity: Essays Honoring the Legacy of Jeffrey R. Parsons, Ideas, Debates, and Perspectives*, Vol. 1, Los Angeles: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도면 10〉 赤峰지역의 취락분포³⁸⁾

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정치적 복합도에 대한 해석 또한 상향조정되고 있어 현재는 ‘古國’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³⁷⁾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그 단계를 상향조정할 경우 蘇秉琦의 발전단계에서古城의 단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國’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홍산문화기 사회가 국가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며, 복합사회의 이른 단계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하는 시기와는 달리 홍산문화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Angeles, pp. 119~154; G. Shelach, 1999, *Leadership Strategies, Economic Activity,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Social Complexity Northeast China*,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37) “古文化는 원시문화를 말하며, 古城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도시는 아니지만 중심 마을과 주변 마을의 분화를 나타내는 城과 鎮을 가리키며, 古國은 씨족부락보다 더 높은 단위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재현, 2008, 「요서지역의 문명 및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32~191쪽

38)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앞의 글에 제시된 Fig. 6-2(121쪽)를 전재하였다.

것들로서 광역적 취락분포유형에서의 변화와도 동반한다. 취락의 수나 밀도가 興隆洼文化期나 趙寶洵文化期에 비해 급증하게 되는데, 중국 內蒙古自治區의 赤峯市 서부 765km² 지역에서의 조사결과는 그러한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³⁹⁾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직전 시기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⁴⁰⁾

이 지역 지형적 환경은 산악의 가파른 절벽에서부터 이어지는 퇴사로 뒤덮인 고지대와 강변 충적대지로 대별되는데, 홍산문화기 취락은 고지대와 강변 충적대지의 경계면을 따라 주로 분포한다. 고환경 복원연구에 따르면 홍산문화기에는 현재보다 평균기온은 약 0.5~1.5℃ 높고, 평균강수량은 50~100mm 많았던바, 아마도 강변의 충적대지는 소택지들이 발달해 있어, 농경이나 거주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작의 효율성이나 식·용수의 확보를 위해 퇴사로 덮인 고평원지대와 충적대지의 경계면이 집중 점유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홍산문화의 주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赤峯지역에 대한 근(현)대고고학적 연구의 시작은 1900년대 초반 鳥居龍藏, Anderson 등 외국인 학자들까지 소급⁴¹⁾해 볼 수 있지만 취락분포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생성되기 시작하였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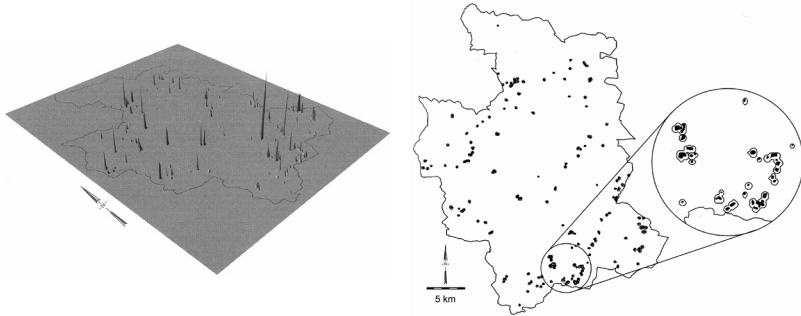
〈도면 10〉에서 보듯이 赤峯지역의 취락들은 넓은 지역에 서로 이격하여 산재하기도 하지만 매우 근접하여 분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취락고고학이 발달했던 몇몇 지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근접하는 개별 취락-근소한 거리지만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유물산포지-을 분리하기보다는 묶어서 하나의 국소적 공동체(local community)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39) 赤峯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앞의 책;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앞의 글

40)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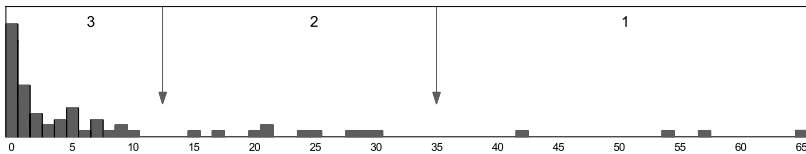
41) 이해련, 2008, 「홍산문화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70~131쪽; G. Shelach, 1999, 앞의 책

42) 赤峯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앞의 책; G. Shelach, 1999, 앞의 책



〈도면 11〉 점유표면분석을 이용한赤峰지역의 단위공동체 파악⁴³⁾

취락고고학이 전제하는 분석단위의 개념⁴⁴⁾에도 적합하다.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몇몇 연구들은 ‘근접한’ 취락을 규정하고 실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법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중 〈도면 11〉에서 보이는 점유표면분석이 현재 가장 유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⁵⁾ 점유표면분석을 통해 얻어진 단위공동체들의 면적분포는 〈도면 12〉에서 보듯이 3단계 정도의 위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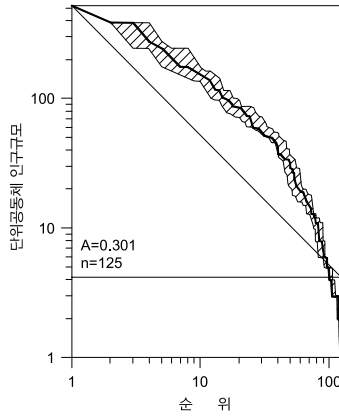
〈도면 12〉赤峰지역 단위공동체의 인구분포⁴⁶⁾

43)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앞의 글에 제시된 Fig. 6-3(122쪽)·Fig. 6-4(123쪽)를 전재하여 편집하였다.

44) J. R. Parsons, 1972, “Archaeological Settlement Patter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 pp. 127~151; B. G. Trigger, 1968, “The Determinants of Settlement Patterns,” In K. C. Chang (ed.), *Settlement Archaeology*, Palo Alto: National Press Books, pp. 53~78

45) 金範哲, 2005b, 앞의 글; C. E. Peterson and R. D. Drennan, 2005, “Communities, Settlements, Sites, and Surveys: Regional-Scale Analysis of Prehistoric Human Interaction,” *American Antiquity* 70, pp.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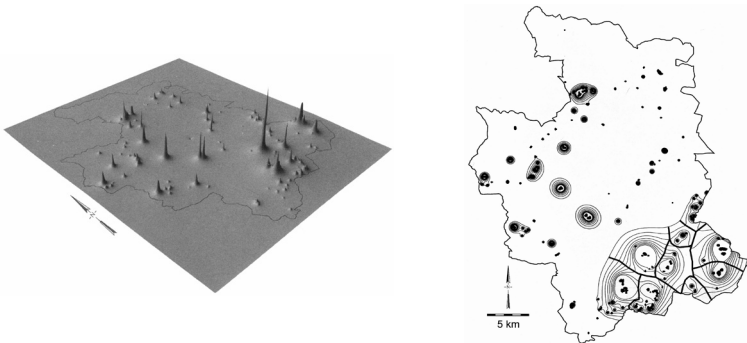
46) C. E. Peterson and R. D. Drennan, 2005, 앞의 글에 제시된 Fig 13(15쪽)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도면 13〉赤峰지역의 순위-규모곡선⁴⁷⁾

〈도면 13〉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convex의 순위-규모곡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분석은 그러한 양상이 동남부에 밀집한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소규모 정치체들의 공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도면 14 참조). 이러한 양상은 하남성 북·중부지역 군집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도면 14〉점유표면분석을 이용한赤峰지역의 소규모 정치체 파악⁴⁸⁾

47)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앞의 글에 제시된 Fig. 6-10(130쪽)을 전재하여 수정하였다.

48) R. D. Drennan and C. E. Peterson, 2005, 앞의 글에 제시된 Fig. 6-5(124쪽)·Fig. 6-6(125쪽)을 전재하여 편집하였다.

3_ 한국 중서부지역의 초기복합사회

한국 중서부지역에서 복합사회의 등장을 예시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청동기시대 前-中期 轉換期이다. 최근의 고고학 연구성과가 그 예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① 취락분포유형에서 관찰되는 지역적 규모의 정치체 (regional polity) 형성⁴⁹⁾과 구성공동체 간 규모·기능적 분화,⁵⁰⁾ ② 분묘에서 보이는 공동체 내·외의階層의 分化⁵¹⁾ 및 首長層의 형성,⁵²⁾ ③ 방어시설(환호, 목책 등)의 확충에서 보이는 취락 간 갈등 혹은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 강화,⁵³⁾ ④ 주거지 분포패턴에서 인지되는 공동체 내 가구 양태의 변화⁵⁴⁾와 가구 간 신분·빈부차 심화,⁵⁵⁾ ⑤ 수공품 생산과 관련된 공동체 내 분업화,⁵⁶⁾ ⑥ 수전을 이용한 미곡생산의 집약화,⁵⁷⁾ ⑦ 저장중심의 취락 등장과 剩餘의 公共化,⁵⁸⁾

49) 金範哲, 2005b, 앞의 글; 송만영, 2007,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한국고고학회 편,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서울: 사회평론, 25~59쪽

50) 金範哲, 2005a, 「錦江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의 形成과 稻集約化: 聚落體系와 土壤分布의 空間的 相關關係에 對한 GIS 分析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편,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울: 서경문화사, 84~119쪽;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51)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45

52) 金吉植, 1998, 「夫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 9

53) 金吉植, 1998, 앞의 글

54) 權五榮, 1997, 「한국고대의 취락과 주거」, 『한국고대사연구』 12;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住居址를 통한 中期의 設定」,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55) 金範哲, 2006a,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對한 家口考古學的 접근」, 『韓國上古史學報』 51

56) 孫峻鎬,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51; 田崎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寬倉里遺蹟 B區域에 對한 검토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편,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울: 서경문화사, 145~2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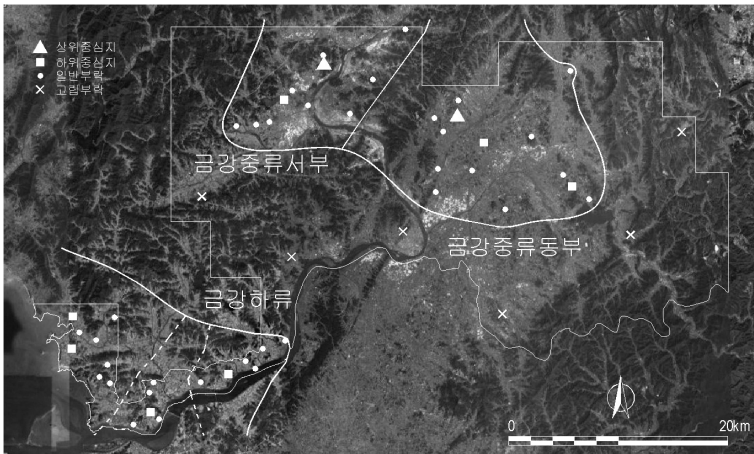
57) 金範哲, 2006b, 「중서부지역 靑銅器時代 水稻 生産의 정치경제-錦江 中·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위계성과 稻作集約化」, 『韓國考古學報』 58; 李弘鍾, 2001, 「우리나라의 초기 수전농경」, 『韓國農工學會誌』 42

58) 金壯錫,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67; 孫

⑧ 거석기념물의 집중적 축조⁵⁹⁾ 등이다.

한국 중서부지역의 초기 복합화양상을 보여줄 자료는 충청남도에 속하는 錦江 중·하류역의 舒川郡, 扶餘郡, 論山市 일원 1208km²의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중기(800~400BCE) 취락과 관련된 것이다. 취락의 분포와 규모를 분석하여 3개의 군집 및 군집 내 2~3단계의 취락위계를 확인하였다.⁶⁰⁾ 이 중 내륙의 3단계 이상의 위계를 보이는 두 군집 - 錦江中流西部群과 錦江中流東部群 - 을 복합화된 사회조직을 가진 독립된 정치체로 상정한다(도면 15 참조).

이 두 군집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 중류의 내륙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관찰의 결과, 지형적으로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금강중류서부군의 경우 사방이 산악지대로 어느 정도 폐쇄·한정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금강중류동부군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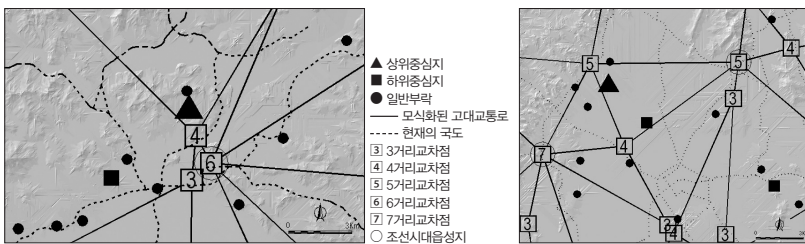
〈도면 15〉 한국 중서부지역 초기복합사회의 취락분포⁶¹⁾

峻鎬, 2004,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 10
 59) 金範哲, 2010a, 「湖西地域 支石墓의 시·공간적 특징」, 『韓國考古學報』 74; 金範哲, 2010b, 「湖西地域 지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68
 60) 金範哲, 2005a, 앞의 글; 金範哲, 2005b, 앞의 글
 61) 金範哲, 2006b, 앞의 글에 제시된 그림 2(46쪽)를 전재하여 수정하였다.

우 남서쪽으로 평야지대가 이어지고 있어, 반개방적인 지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역이 한국 내에서도 100m 이상의 산지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강중류동부군의 지형적 폐쇄·한정양상은 중국 중원지역의 일부 군집에 비해서는 그다지 심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 중서부지역 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연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형적인 차이는 취락의 분포 및 상정가능한 주요 교통로의 분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⁶²⁾ 금강중류서부군집에서는 개별 교통로가 군집 내 모든 취락들의 근처를 지나면서 (최)상위중심지 인근의 결절지에서 모이는 방사상의 도로망체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로망체제는 흔히 帝國型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또한 외부, 특히 京畿道와 충남해안으로 통하는 통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강중류동부군의 교통망은 전 지역을 고루 아우르며 발달해 있고 (최)상위중심지도 주요 결절지 인근에 입지하지만 모든 교통로를 일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곳곳에 더 중요한 결절지들이 분포하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도면 16 참조).

지형적 입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구조면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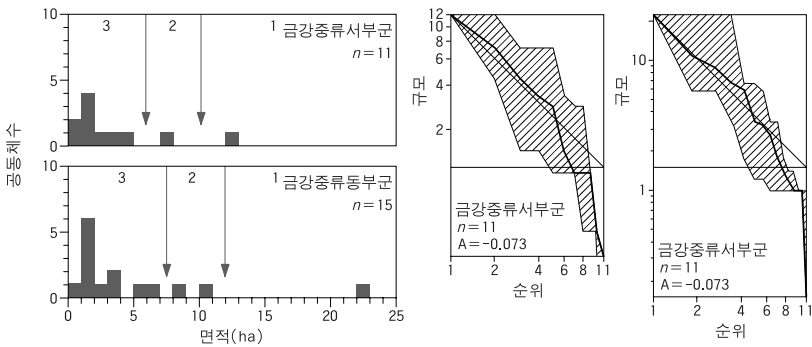


〈도면 16〉 한국 중서부지역 두 수장사회의 취락과 교통로 분포⁶³⁾

62) 金範哲, 2006c, 「忠南地域 松菊里文化의 生計經濟와 政治經濟: 農業集約化 관련 설명모형을 통해 본 水稻作」, 『湖南考古學報』 24

63) 金範哲, 2006c, 앞의 글에 제시된 도 14(87쪽)·도 16(88쪽)을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을 띤다. 취락면적분포⁶⁴⁾와 순위-규모분석의 결과, 두 집단 모두 3단계의 위계를 보이며, 상당히 안정적으로 log-normal 곡선에 근접하고 있어 통합이 꽤 잘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도면 17 참조). 또한 (최)상위중심지의 점유면적률은 31.6%로 거의 동일한데 이는 상위중심지로의 인구집중화 경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양자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⁶⁵⁾



〈도면 17〉 한국 중서부지역 수장사회의 취락면적분포와 순위-규모곡선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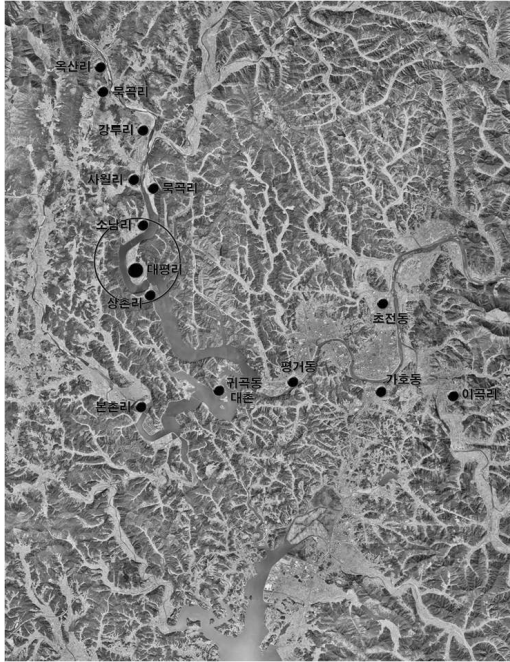
4_ 한국 남부지역의 초기복합사회

한국 남부지역에서 정치경제적 복합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중서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환기이다. 환호와 목책 등 방어·구획시설을 갖춘 대규모 취락이 등장하며, 매장에서 사회적 차별이 인지되고, 마제석검, 옥장신구, 청동기와 같은 위세품 제작과 관련된 수공업전문화의 증거가 보인다.

64) 국소적 단위공동체의 파악과 순위-규모곡선의 생성 등 취락분포유형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앞서 살핀, 중국 赤峰지역 수장사회의 예와 유사하다.

65) 金範哲, 2005b, 앞의 글

66) 金範哲, 2005b, 앞의 글에 제시된 도 8(118쪽)·도 11(119쪽)을 전재하여 수정·편집하였다.



〈도면 18〉 한국 남부지역 南江유역의 취락분포⁶⁷⁾

이러한 양상은 진주 南江유역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⁶⁸⁾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은 산악지대 사이로 난 南江과 지류를 따라 층적 대지나 자연제방에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도면 18 참조). 지형적 측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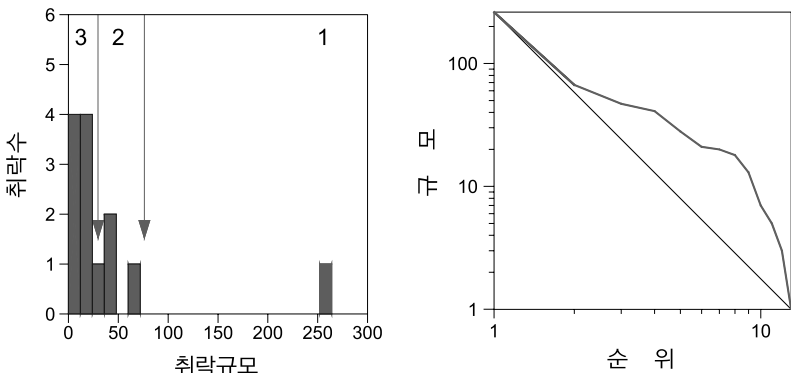
67) 고민정, 2009, 앞의 글에 제시된 도면 11(93쪽)을 전재하였다.

68)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고민정, 2009,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중심취락과 취락 간 관계」,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제2회 워크숍 발표요지, 71~96쪽; 高旻廷·M.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李相吉, 2003, 「南江流域의 先史農耕과 聚落」,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晉州 南江遺蹟과 古代日本』, 서울: 신서원, 279~320쪽; 庄田慎矢, 2005, 「玉 關聯 遺物을 통해 본 晉州 大坪 聚落의 分業體制」, 『嶺南考古學』 36; M. T. Bale and M. J. Ko,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24(2), pp. 159~187

서 보자면, 중국 중원지역의 陶寺지역 군집 및 三里橋지역 군집, 한국 중서부의 금강중류서부군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취락의 입지는 이전 시기와 입지상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개별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과는 대비적으로 이 시기에는 취락 내부, 특히 환호가 설치된 취락의 경우 환호 내부가 집중적으로 점유되어 주거지 중복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확연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위에서 살핀 여러 지역과 달리, 순위-규모곡선을 제시할 근거가 되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擬似指標를 활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대체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복원은 가능하다. <도면 19>는 출토 주거지 수를 유적면적(혹은 인구수) 대신 취락규모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개별 주거지의 내부 공간에 의거하여 추정한 인구규모가 직접적인 자료가 되겠지만 유적별로 개별 주거지의 거주자 수가 극명하게 다르지 않은 이상, 주거지 수 또한 취락의 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도면 19>에서 보듯이, 南江유역의 사회에서는 3단계의 위계가 확인되지만 다소 이례적인 순위-규모곡선을 보인다. 즉 상위의 두 취락은 매우 안정적인 log-normal을 띠지만 그 이하의 취락은 전형적인 convex형을 띠고 있다. 전형적인 primo-convex형도 아니다. 그러나 좌측의 면적분포와 관련지어 생



<도면 19> 南江유역 취락의 면적분포(좌) 및 순위-규모곡선(우)

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개연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1등급 대형취락으로의 인구집중이 확산하지만 2·3등급의 중·소형 취락은 확산한 규모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최상위 취락에의 (과도한) 인구집중이라는 점을 확대해석하자면, 세계 몇몇 지역에서 확인되기도 하는 primo-convex형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앞서 살핀 10개의 초기복합사회-수장사회-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발달과정도 독립적이다. 자연환경이나 취락체계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기도 하며 매우 다르기도 하다. 중국 중원의 陶寺지역과 三里橋지역 수장사회, 한국 중서부의 금강중류서부 수장사회, 남부의 南江유역 수장사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한정된 지형환경에, 伊河-洛河유역과 秦河유역 수장사회, 한국 중서부 금강중류동부 수장사회는 부분적으로 폐쇄 혹은 개방적인 지형환경에, 하남성 북부·중부지역 수장사회와 赤峰지역의 수장사회는 개방적인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이들 모두에서는 3단계의 위계적 취락체계가 확인된다. 광역적 취락분포유형 연구가 경험적으로 증명·정의하는 바와 같이, 수장사회가 3단계 이상의 위계적 사회구조를 갖는다는 점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내부구조상에서는 상사·상이점이 발견된다. 순위-규모분석은 그 양상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primate유형을 반영하는 중국 중원의 陶寺지역(陶寺 前期), 三里橋지역, 伊河-洛河유역 수장사회에서는 최상위 중심지에 과도한 (인구)집중현상이 추정되고, 중국 중원의 秦河유역 수장사회와 한국 중서부의 두 수장사회에서는 안정적인 log-normal유형에 반영된 바와 같이 과도하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정도로 중심지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전반적으로 양호한 통합양상이 추정되며, 하남성 북부·중부 수장사회, 赤峰지역 수장사회는 전형적인 convex유형에 반영된 바와 같이, 상호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하부 정치체가 공존하는 탓에 중앙집중도와 통합도가 매우 낮았던 사회로 추정된다. 대체적으로 폐쇄적인 지형에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확산한 중앙집중도가, 반폐쇄(혹은 개방)적인 지형에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중앙집중도와 높은 통합도가, 개방적인 지형에서는 낮은 중앙집중도가 관찰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중서부의

금강중류서부 및 남부의 南江유역 수장사회는 폐쇄적인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log-normal이나 유사 primo-convex유형을 보여주고 있고, 陶寺 지역 수장사회도 陶寺 後期에는 전기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띤다. 결국, 자연환경과 사회구조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인지되지만 그러한 관계가 일률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IV.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의 영역별 비교

1_ 생계경제(의 집약화)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복합사회의 발달이 집약적인 농경에 기반한 다는 것은 세계 각지의 사례연구들이 증명하는 바이다. 복합사회의 등장 무렵, 인구증가를 인정하고, 생산의 집약화가 어느 정도는 공익-증가한 인구의 부양-에 기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의 증가 혹은 人口壓力이 작물생산의 집약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그와는 다른 이유에서 집약화가 촉발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세하다. 어떤 작물이 집약화의 대상이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떠한 부류의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집약화가 촉발·수행되었으며, 그러한 집약화 주도세력의 참여방식과 역할은 어떠한지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항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취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⁶⁹⁾

仰韶文化期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나 그에 따른 식량생산 증대의 필요성을 염두에 둘 때, 龍山文化期 중국 중원지역에서는 집중적인 경작의 가능성이 있으나 집약화를 증명할 만한 실질적인 정보는 확인하지 않다. 집약화라는 것

69) 金範哲, 2006c, 앞의 글

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의 提高⁷⁰⁾”로 정의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고고학적 인지를 위해서는 유형적으로 남은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논과 같은 유구, 深耕을 위한 쟁기질의 흔적, 施肥의 흔적 등 새로운 기술(체계)의 도입이 확인되어야 한다.⁷¹⁾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전작의 생산성을 제고한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집약화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앞의 몇 가지 예들에 비해서는 획기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생태환경이 집중적으로 경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집약화를 언급하기는 어려운바, 집중적 경작과 집약화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문화기 동안 중원지역은 현재보다 다소 한랭건조한 기후였으며 대체로 조를 중심으로 한 북방식 田地田作이 성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식료자원 범위 또한 한 작물의 재배나 사육중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집약화보다는 확대화가 당시의 우세한 전략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陶寺유적(陶寺지역 군집) 및 王城崗유적(하남성 중부지역 군집)에 대한 고식물학적 분석의 결과는 그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⁷²⁾ 한편 三里橋지역 군집의 인근에 위치한 康家村유적의 발굴은 오히려, 야생종 동물자원이 사육중에 비해 더 높은 비중으로 생계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⁷³⁾ 일반적으로, (집약적) 米穀生産이 주목되는 것은 二里頭文化 단계부터이다.⁷⁴⁾

70) K. D. Morrison, 1994,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 pp. 111~159

71) K. A. Kelertas, 1997, “Agricultural Food Systems and Social Inequality: The Archaeobotany of Late Neolithic and Early Bronze Age Thy, Denmark,”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p. 81~84

72) 오세은, 2008, 「중국문명의 형성과 초기발전단계의 사회경제 연구」,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12~169쪽; 정대영, 2008,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연구동향과 전망: 자연환경과 문명형성과정의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74~111쪽; L. Liu, 2005, 앞의 책

73) L. Liu, 2005, 앞의 책

74) 오세은, 2008, 앞의 글

遼西지역 초기복합사회의 주요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석제 도구상을 종합해 보면, 작물재배가 매우 집약적으로 수행되었던 듯하다. 집중적인 경작의 증거로 꼽히는 것은 중원지역 병행기 취락들에 비해 출토 석기의 양이 많은 점, 경작용 석기의 비중이 높다는 점, 대형 보습의 출토례가 빈번한 점 등이다. 한편, 도축 및 처리와 관련된 도구, 돼지나 사슴 등의 유존체의 출토량이나 비율이 중원지역 병행기 취락을 압도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물재배의 집중화와 함께 가축사육이 급증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⁷⁵⁾

앞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중서부지역에서 사회적 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될 무렵, 이 지역은 水田을 이용한 稻作集約化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⁷⁶⁾ 초보적인 기존 기술체계를 강화하여 생계자원의 일부만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기회주의적인(opportunistic) 방식⁷⁷⁾에 의한 상위유력층의 참여가 추정된다.⁷⁸⁾ 그러나 한국 중서부지역의 두 수장사회는 유사한 환경적 배경과 조직상의 통합도(integrity)에도 불구하고 수도경제의 운용, 즉 잉여로서 수도의 생산관리 방식에서 어느 정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금강중류동부군의 상위중심지는 논토양-논 1·2등급지-이 매우 풍부한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상위유력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水稻 생산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잉여를 수집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면, 금강중류서부군의 상

75) D. S. Guo, 1995, "Hongshan and Related Cultures," In S. M. Nelson (ed.), *The Archaeology of Northeast China: Beyond the Great Wall*, London: Routledge, pp. 21~64

76) 金範哲, 2006b, 앞의 글; 金範哲, 2006c, 앞의 글; 李弘鍾, 2001, 앞의 글

77) C. Stanish, 1994, "The Hydraulic Hypothesis Revisited: Lake Titicaca Basin Raised Fields Theoretical Perspective," *Latin American Antiquity* 5, pp. 312~332

78) 金範哲, 2009, 「선사시대 農業集約化와 機會主義的 上位有力層 전략: 한국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社會經濟的 推移」, 『文明創出과 共同繁榮』, 全北大學校 人文研究員 設立記念 國際學術大會 要旨集, 30~36쪽; B. C. Kim, 2008, "Opportunistic Leadership and Moving People: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Reorganization in the Bronze Age, Central Western Korea,"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73rd Annual Meeting*,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p. 308

위유력층은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수집된 잉여와 교통로 통제력(도면 16 참조)을 바탕으로 여타의 사회경제적 활동-예를 들어, 장거리교역 등-에 적극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한국 남부의 수장사회에서도 본격적인 작물재배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당히 넓은 '밭'유구의 존재는 주거구역 인근에서 작물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인구는 강안 충적대지를 이용한 田作을 통해 얻어진 식료자원을 통해 부양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논을 이용한 미곡생산, 즉 집약적인 稻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밭이 조성된 강안 충적대지는 토양의 성격상 논이 조성되기 어려운 곳⁸⁰⁾이고 필자가 다른 글을 통해 지칭한 바 있는 논토양이 분포하는 배후습지의 일부는 유구가 집중 분포하는 강안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밭이 발견된 대평리유적은 이 지역의 중핵적 취락이었음이 분명하고 중서부지역의 금강중류동부군과 마찬가지로 상위유력층의 직접적인 참여·관리가 추정되지만 중서부지역의 수장사회와는 달리 畵作보다는 田作이 주된 생계자원 수급 혹은 잉여창출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_ 공공(토목)사업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노동력의 투입을 전제하는 공공활동의 결과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규모) 생산기반시설인 경우도 있고, 방어시설인 경우도 있고, 의례와 관련된 기념비적 축조물 등인 경우도 있다. 특정 사회가 어떠한 분야에 집단적 노동력, 즉 사회적 역량을 투자하는가와 주요 투자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주요 투자 분야의 변화는 그 사회의 관심, 특히 사회주도세력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9) 金範哲, 2006a, 앞의 글

80) 李相吉, 2003, 앞의 글

중국 중원지역의 공공사업은 주로 방어시설의 성격을 띠는 토축성채의 축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집단주의적(group-oriented) 경향⁸¹⁾이 농후한 사회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⁸²⁾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陶寺지역 군집의 최상위중심지인 陶寺유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하남성 북·중부지역 군집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일반화되어 있는 듯하다. 이외에 조상송배와 관련된 집단 의례 건조물도 집단적인 공공(토목)사업의 중요한 예가 되겠다.⁸³⁾

중국 赤峰지역의 수장사회에서 집단적인 노동력 투여의 초점은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凡遼西地域의 차원에서 유추해 보자면 신전, 廟(여신묘), 적석총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의례 건축군의 축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朝陽지역 牛河梁, 東山嘴 등 유적의 출토유물들로 보아 의례는 여신송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공공(토목)사업의 성격은 중원유역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적 성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중서부지역에서도 집단의례 건조물 축조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거대한) 지석묘의 축조는 초취락적 공공사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장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공공사업의 방향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과는 어느 정도 이격된 야외에 거석기념물을 축조함으로써 집단의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핵적 취락 내로 그場이 옮겨 오기도 하며, 공공사업의 중심도 의례보다는 각종 農業生産基盤施設(landesque capital)의 조성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⁸⁴⁾ 앞서 약술한 대로,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논을 이용한 집약적인 稻作農耕이 시작

81) C. Renfrew, 1974, "Beyond a Subsistence Economy: The Evolution of Social Organization Prehistoric Europe," In C. B. Moore (ed.), *Reconstructing Complex Societies: An Archaeological Colloquium*, Vol. 20,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Cambridge, Mass: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pp. 69~95

82) L. Liu, 2005, 앞의 책, 135~138쪽

83) L. Liu, 2005, 앞의 책, 135~138쪽

84) 金範哲, 2011, 『쌀의 고고학: 수도작과 청동기시대 정치경제』, 서울: 민속원

(혹은 급속히 확산)된다. 집약적 농경을 통해 생산된 미곡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⁸⁵⁾ 물론 당시의 水稻作이 일시에 대규모 노동력의 동시 투입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정치적 통제력 증대의 財源을 창출하고자 하는 수장층의 일반적인 행태로 보건대, 많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미곡의 생산에 참여했을 것은 매우 개연적이다. 집단 의례의 변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청동기시대 중기로 접어들면서 지식묘의 축조가 감소하고 (대규모) 노동력이 동원된 의례용 축조물이 취락 내부로 들어오면서 의례의 초점도 다소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⁶⁾ 조상숭배보다는 수도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의 勞動宴(work parties)⁸⁷⁾이 우세해졌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의례와 향연을 통해 수도생산을 독려하고 일반생산자 가구의 노고를 위무했을 것이다.⁸⁸⁾ 수장사회는 국가단계 사회에 비해 실질적인 강제력이 미비한바, 수장은 호혜적 행위-빈번한 향연 제공, 선물 공여 등-를 회유와 갈등무마 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많은 민족지 연구나 고고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추론이 더욱 개연적임을 알 수 있다. 목책 등 방어와 관련된 시설의 축조, 대지조성 또한 한국 중서부지역 금강중류동부군에서 확인되는 공공사업의 중요한 증거이다.

한국 남부내륙의 南江유역 수장사회에서 공공사업의 흔적으로 대규모 밭을 포함한 생산시설과 환호시설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환호시설이 집단적 무력 충돌을 전제한 방어가 주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

85) 金範哲, 2006b, 앞의 글

86) 金範哲, 2011, 앞의 책

87) M. Dietler, 2001, "Theorizing the Feast: Rituals and Consumption, Commensal Politics, and Power in African Contexts," In M. Dietler and B. Hayden (ed.), *Feasts: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pp. 65~114

88) 金範哲, 2011, 앞의 책.

기도 한다.⁸⁹⁾ 한편, 조상승배를 전제한 전통적인 집단의례의 기제인 지석묘⁹⁰⁾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다른 묘제에 비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상석의 규모가 작고, 묘역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넓지도 않아 대규모의 집단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⁹¹⁾ 따라서 사회적 역량 투여의 초점은 생산시설의 생성과 유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⁹²⁾ 그러나 중서부 금강중류동부 수장사회와 같은 노동위무적 의례와 향연에 대한 증거는 확실치 않다.

3_ 위세와 재화, 수공생산전문화, 장거리교역

방법론적 측면에서 사회복합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즉 사회 내 각 취락(혹은 국소적 단위공동체) 간 규모와 역할의 차별화와 집단 내 개인(혹은 家口) 간 차별화를 인지하면서 진행된다. 이 중 개별구성원 간 신분적 차이는 주로 분묘자료를 통해 그 일면을 이해한다.⁹³⁾ 결국 분묘는 상위유력층의 위세가 표현되는 중요한 場인 것이다.

위세품(*prestige goods*)의 생산은 집단 내부의 전문화된 장인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흔히, 독립적 對 종속적 장인집단의 구분에서 위세품은 상위유력층의 후원을 받으며 사치품과 의례품을 생산하는 종속적 장인집단(*attached specialists*)—祭政의 분리가 확연하지 않은 수장사회에서 상위유력층이 의례

89) 鄭義道, 2003, 「南江流域의 環濠遺蹟」,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晋州 南江遺蹟과 古代日本』, 서울: 신서원, 87~130쪽

90) 金範哲, 2010b, 앞의 글; 朴淳發, 1998, 「百濟 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91) 남부지역에서 규모가 큰 묘역식 지석묘로 알려진 陝川 苧浦 5·8호에 비해 남강유역의 묘역식 지석묘들은 확연히 소규모이다.

92)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177~181쪽

93) M. B. D. Trubitt, 2000, "Mound Building and Prestige Goods Exchange: Changing Strategies in the Cahokia Chiefdom," *American Antiquity* 65, pp. 669~690

품을 제작하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그 자신(embedded specialists)⁹⁴⁾ -에서 생산되는데, 특정 양식에 대한 일반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위세품의 희소성과 신성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특정 양식은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재생산을 통해서도 위세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원격의 권위를 수입 혹은 모방함으로써 그렇게 되기도 한다.

陶寺지역 수장사회의 최상위중심지인 陶寺유적에서는 확연한 3단계의 매장위계화가 인지되기도 하고, 상위신분의 분묘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유물 부장이 확인된다. 부장품 중에는 원거리 수입에 의존한 악어가죽 북, 용산문화기 신성성과 우월성의 상징인 옥기 ‘琮’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유력층이 장거리교역을 통해 원격의 권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위유력층 분묘의 부장양상이 화려해지는 것은 흔히 ‘개인주의적(individualizing) 경향’⁹⁵⁾의 반영으로 앞서 언급한 집단주의적(group-oriented) 경향과는 대비를 이루는 것이다. 비록 陶寺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용산문화기 중원지역 수장사회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그다지 확연하지는 않다. 陶寺유적의 양상이 예외적임에 주목하면서 집단주의적 전략이 보다 우세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⁹⁶⁾은 일면 타당함이 있다.

한국 중서부지역의 수장사회에서도 그와 유사한 양상이 간취된다. 금강중류동부 수장사회의 상위중심지인 松菊里유적 1호묘와 같이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는 예가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 간 매장양상의 차이가 인정⁹⁷⁾되기도 한다. 사실 비파형동검의 조형은 遼寧地方인 점을 감안하면,

94) K. M. Ames, 1995, “Chiefly Power and Household Production on the Northwest Coast,” In T. D. Price and G. M. Feinma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Fundamental Issues in Archaeology*, New York: Plenum Press, pp. 155~187; E. M. Brumfiel and T. K. Earle, 1987, “Specialization, Exchange, and Complex Societies: An Introduction,” In , E. M. Brumfiel and T. K. Earle (ed.), *Specialization, Exchange, and Complex Societies, New Directions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

95) C. Renfrew, 1974, 앞의 글

96) L. Liu, 2005, 앞의 책

97) 金承玉, 2001, 앞의 글

비록 현지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원격의 권위를 활용한 위세적 성격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출토 銅斧 용범의 예에서 보듯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장인이 생산한 위세품이 활용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축조되었을 지석묘의 부장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면, 중기 분묘들의 부장양상에서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증대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에 나타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청동기시대 후기 분묘에서야 확연해진다는 점⁹⁸⁾이나 松菊里 1호묘가 이례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양상 또한 중원지역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다.

중국 遼西 赤峰지역 사회에서 분묘는 수공전문화나 원격의 권위를 심분 활용한 상위유력층의 개인주의적 전략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위유력층의 분묘로 추정되는 적석총의 축조, 玉猪龍을 비롯한 다양하고 화려한 옥기와 중원지역 양소문화의 영향을 받은 彩陶의 부장 등이 그 증거가 되겠다.⁹⁹⁾

옥제품 제작은 한국 남부의 南江유역에서도 매우 성행한다. 위세적 혹은 의례적 성격을 띠는 옥제품의 생산은 분업에 기초한 전문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⁰⁾

위제품 제작을 전문화하고 통제하면서, 원거리의 위세품을 수입·모방하는 것에 상위유력층이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의례용 건축(조)물에 공공의 역량이 투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념조작을 통한 권력정당화와 사회정치적 통제 강화의 중요한 기제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관점에서 볼 때, 수장사회의 수장(chiefs) 혹은 상위유력층은 理念操作(ideological manipulation)을 통해 권력 혹은 위세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① 기존(권력)정당화 기제의 통제권 장악, ② 새로운 정당화 기제의 창출, ③ 집단 내부의(위세적) 재화의 통제권 장악, ④ 집단 외부의(위세적) 재화의 통제권 장악 등의 전략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98) 김승옥,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한국고고학회 편,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서울: 사회평론, 61~139쪽

99) 송호정, 2008, 앞의 글; 이해련, 2008, 앞의 글

100) 庄田慎矢, 2005, 앞의 글

다.¹⁰¹⁾ 서유럽의 예에서도 보듯이, 수장사회에서 조상숭배에 기초한 집단 의례는 사회복합도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성성을 추구하며, 천신숭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체로 앞의 ①과 ②에 관련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¹⁰²⁾ 조상숭배와 관련된 의례를 통해 사회적 질서, 즉 직계와 방계의 서열 혹은 유력했던 조상의 권리 승계를 재확인함으로써 현재 상위유력층의 권력과 통제를 정당화하게 된다. 중원지역의 수장사회들에서 조상숭배에 관련된 의례용 건축물이 공공사업의 역점적 방향이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복합화의 진척에 따라 좀 더 많은 집단을 포괄하게 되면서 상위유력층은 새로운 정당화의 기제를 창출하는 전략으로서 천신과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성성을 추구하게 된다.¹⁰³⁾ 한편, 위세품 제작을 전문화하고 통제하면서, 원거리의 위세품을 수입·모방하는 전략은 ③과 ④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격의 권위에 의존하다보니 교역의 객체는 원거리의 상위유력층이 되고, 그로 인하여 상위유력층 간 교역망이 형성되기도 한다.

4_ 갈등과 전쟁

갈등과 전쟁이 국가단계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기제(mechanism)였다는

101) Earle, 1991a, 앞의 글

102) R. Chapman, 1981, "The Emergence of Formal Disposal Areas and the "Problem" of Megalithic Tombs Prehistoric Europe," In R. Chapman, I. Kinnes, and K. Randsborg (ed.),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1~81; R. Chapman, 1995, "Ten Years After-Megaliths, Mortuary Practices, and the Territorial Model," In L. A. Beck (ed.), *Regional Approaches to Mortuary Analysis,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s to Archaeology*, New York: Plenum Press, pp. 29~51; C. Renfrew, 1976, "Megaliths, Territories and Populations," In S. J. D. Laet (ed.), *Acculturation and Continuity Atlantic Europe, Mainly during the Neolithic Period and the Bronze Age, Dissertationes Archaeologicae Gandenses*, Vol. 16, Brugge: De Tempel, pp. 198~220

103) T. K. Earle, 1991b, "Property Rights and the Evolution of Chiefdoms," In T. K. Earle (ed.),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1~99

생각¹⁰⁴⁾은 역사가 짧지 않지만 초기복합사회에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학자가 대부분이다. 물론, 사회진화과정에서 단변인적 동인(prime mover)의 설정 자체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선사시대 전쟁 혹은 무력충돌은 집단적이고 전면적이기보다는 의례적일 뿐만 아니라, 국소적이며 중심지 간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대한 지역이 전쟁의 도가니였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지지받지 못하는 바이다.

방어적 성격을 지니는 시설물의 예는 앞서 살핀 여러 사회에서 확인된다. 중국 중원지역 陶寺지역 군집, 하남성 북·중부지역 군집의 토축성채, 한국 중서부지역 금강중류동부군의 목책 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물론, 遼西지역 홍산문화기의 環濠聚落 또한 부분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호의 크기가 다양하고 방어의 대상이 적의를 품은 인간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환호 내외부의 구역화양상(zonal pattern)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어 방어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¹⁰⁵⁾

집단적인 전쟁이 사회변동의 동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방어시설이 확연한 중국 중원지역의 수장사회에서는 다른 사회에 비해 집단 간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엿보인다. 용산문화기 후기에 나타난 陶寺유적의 쇠락과 관련된 갈등이나 하남성 북·중부지역 수장사회 내 집단 간의 갈등은 나머지 사회들에 비해 다소 전면적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⁰⁶⁾ 그렇다고 중심지에 성채를 갖춘 대등한 하부

104) R. L. Carneiro, 1991, "Chiefdom-Level Warfare as Exemplified Fiji and the Cauca Valley," In J. Hass (ed.), *The Anthropology of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0~211; R. L. Carneiro, 1981, "The Chiefdom as Precursor of the State," In G. Jones and R. Kautz (ed.), *The Transition to the Statehood in the New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79; J. Haas, 1982, *The Evolution of the Prehistoric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05) 이재현도 후속하는 夏家店下層文化期 석·토성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견해를 암시하고 있다. 이재현, 2009, 「하가점하층문화기 방어취락의 성격 연구」, 『요하유역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7~69쪽

106) L. Liu, 2005, 앞의 책

정치체들이 경쟁했던 하남성 중부지역 수장사회가 二里頭문화기의 국가단계 사회로 진입하는 점에 주목하여 중원지역 사회변동을 전쟁과 갈등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¹⁰⁷⁾를 전면 인정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방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시설물이 반드시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할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이념조작의 일환으로 축조되기도 한다. 이미 방어적 성격, 한편으로는 격리의 성격을 띠는 시설물이 축조되는 순간 어떤 형태이든 ‘갈등’이 형성되고 이는 사회복합화의 진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중원지역 사회들에서 폭력이 사회의 한 단면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남성 중부지역 수장사회의 중심지 중 하나인 王城崗유적에서 확인된 건물 기저의 매장은 그러한 양상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다. 이 유적을 제외하더라도 성인의 불완전한 개체나 유아를 건물기저의 회곽 등 비 매장구역에 부장품 없이 매장하는 등 정상적인 구성원의 장송과는 구별하는 현상은 용산문화기 중원지역, 특히 하남성 일대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人的 犧牲이 빈번하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희생의 대상이 전쟁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폭력이 곧 전쟁과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빈번한 중심지의 이동 혹은 변화¹⁰⁸⁾가 과연 집단 갈등인지 자연환경, 특히 하천의 유로나 생산성 때문인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비록 방어시설에 상당한 사회적 역량이 투여되었을 것이지만, 한국 중서부 금강중류동부군에서 전면적이고 집단적인 갈등과 무력충돌의 양상은 확인하지 않다.

앞서의 예들과는 달리, 중국 중원의 三里橋지역, 伊河-洛河유역, 秦河유

107) L. Liu, 1996, 앞의 글. 중국의 일부 학자들도 이를 取信하여 적어도 중원지역에서 국가발생의 동인으로 전쟁을 꼽고 있는 듯하다. 이성구, 2008, 앞의 글; 高江濤, 2005, 「新砦遺址與中國古代文明起源問題」, 『中原文物』 2005(4)

108) L. Liu, 2005, 앞의 책

〈표 1〉 10개 수장사회 종합 비교

	수장사회	지형의 폐쇄성	사회구조		생계 경제 집약화	공공토목사업			위세와 재화		갈등과 전쟁
			집중	통합		방어	의례	생산	수공생산 전문화	장거리 교역	
중국	陶寺지역	강	강	약	약?	강	강	약?	강	강	중
	三里橋지역	강	강	약	약?	-	-	약?	약?	약?	약
	伊河-洛河유역	중	강	약	약?	약	강	약?	약?	약?	약
	秦河유역	중	중	강	약?	약	강	약?	약?	약?	약
	河南省 北部지역	약	약	약	약?	강	강	약?	약?	중	중
	河南省 中部지역	약	약	약	약?	강	강	약?	약?	약?	중
	赤峰지역	약	약	약	중?	중?	강	약?	강	강	약
한국	錦江중류동부	중	중	강	강(논)	중	강	강	중	중	중
	錦江중류서부	강	중	강	강(논)	약	약	강	약	중	약
	南江유역	강	강	약	중(밭)	약	약	중	강	약	약

역, 遼西의 赤峰지역, 한국 중서부 금강중류서부 및 한국 남부 남강유역 등지의 수장사회에서는 방어적 성격을 띠는 시설물의 축조가 확연하지 않다.

수장사회 발달의 기제와 과정에 관한 도식화가 이 글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상의 영역별 비교를 종합하면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도 있다. 다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사회를 포괄할 일률적인 경향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은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자연환경, 사회구조, 생계경제의 집약화 진행, 공공(토목)사업의 방향과 강도, 위세품 제작을 위한 수공업이나 장거리교역의 발달정도, 갈등과 전쟁의 양상 등 여러 항목에서 10개 수장사회를 아우를 어떤 규칙성도 찾기 어렵다. 물론, 부분적으로 한두 사회만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다소의 규칙성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중원지역 내에서도 일관적 흐름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古文化’가 되었건, ‘古城’이 되었건, 아니면 ‘古國’이 되었건, 이들 사회를 하나로 포괄할 만한 틀은 의미가 없음이 분명해진 듯하다. 이른바 신진화론자의 ‘사회형식론’도 이와

유사한 비판을 받으며 퇴색해버렸다. 특히, 그러한 작업이 ‘선언’과 같이 정해진 틀에 고고학적 사실을 맞추어가는 궤적¹⁰⁹⁾을 밟는다면,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사회형식론을 포함한 신진화론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른바 사회형식론의 중국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古文化古城古國論’ 등 중국 문명탐원공정의 논리를 극복하고 보다 보편적인 고고학적 논리로 동북아시아의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살핀 다양한 궤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역할했을 사회적 주체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환경적 제한요인들에 적응해 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궤적을 형성해 가는 사회적 주체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동북아시아 초기복합사회의 발달을 더욱 역동적으로 설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앞서 사회형식론적 발전도식에 따라, 문명발생의 궤적을 찾는 중국 문명탐원공정에 기반을 제공하는 논리의 후진성을 피력하면서, 그 극복의 일환으로 중국과 한국의 10개의 수장사회를 네 가지의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비교해 보았다. 부분적으로 한두 사회만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다소의 규칙성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접한 사회 간에도 일관적 흐름을 찾기 어려운 점들은 분명해진 듯하다. 결국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포괄하려는 작업 자체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그러한 다양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연적으로 설명할 방법론적 대안이나 논리의 일단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글의 시도는 단순히, ‘문명’의 수립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해 가면서,

109) 이재현, 2008, 앞의 글

그간의 발달과정은 ‘문명발생’이라는 과정에 묻혀버리는 개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북아시아’라는 거대한 지역 혹은 인구밀집 공간을 복합사회 형성에 대한 설명모형 창출의 장으로 혹은 실험의 장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한다. 사실, 세계 주요 문명지역 중 이러한 작업이 활발히 수행되지 않는 지역은 중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연구가 축적된 중동지역(Mesopotamia)이나 중·남미(Maya 등)의 경우, 문화 간의 교류를 당연한 귀결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즉, 교류 혹은 상호작용 및 그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사성은 필연적인 이유나 사회주체들의 주체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자문화중심주의적 사고나 광대한 영토를 곧 문화단위로 파악하는 경향에서는 볼 수 없는 논리이다. 이른바 변방(peripheries)에도 독립적이고 선택적인 사회적 주체가 있고,¹¹⁰⁾ 이들이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혹은 미래에도 영원히 열린(open-ended) 상태이다. 사회변동에서 사회적 주체의 선별적 선택이 초래한 결과는 인문적/자연적 환경의 상사(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다지 단순하지도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추동된 사회변동의 기제와 과정을 추론하고 이론화하려는 작업은 다양한 연구주체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주요 문명발생지역의 연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화한 것이나 최근의 초기복합사회의 연구가 상위유력층의 전략(strategies)과 지도권(leadership)의 다양성¹¹¹⁾과 그 기반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110) P. S. Goldstein, 2000, “Exotic Goods and Everyday Chiefs: Long-Distance Exchange and Indigenous Sociopolitical Development the South Central Andes,” *Latin American Antiquity* 11, pp. 335~361

111) T. K. Earle, 1991a, 앞의 글; T. K. Earle,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Pre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 姜仁旭,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중국 동북지방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韓國考古學報』 56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고민정, 2009,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중심취락과 취락 간 관계」,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제2회 워크숍 발표요지
- 高旻廷 · M.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靑銅器學報』 2
- 權五榮, 1997, 「한국고대의 취락과 주거」, 『한국고대사연구』 12
- 金吉植, 1998, 「夫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 9
- 金範哲, 2005a, 「錦江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의 形成과 稻集約化: 聚落體系와 土壤分布의 空間的 相關關係에 대한 GIS 分析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편,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울: 서경문화사
- 金範哲, 2005b, 「錦江 中 · 下流域 靑銅器時代 中期 聚落分布類型 研究」, 『韓國考古學報』 57
- 金範哲, 2006a, 「錦江 中 · 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的 접근」, 『韓國上古史學報』 51
- 金範哲, 2006b, 「중서부지역 靑銅器時代 水稻 生産의 정치경제: 錦江 中 · 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位階성과 稻作集約化」, 『韓國考古學報』 58
- 金範哲, 2006c, 「忠南地域 松菊里文化의 生計經濟와 政治經濟: 農業集約化 관련 설 명모형을 통해 본 水稻作」, 『湖南考古學報』 24
- 金範哲, 2009, 「선사시대 農業集約化와 機會主義의 上位有力層 전략: 한국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社會經濟的 推移」, 『文明創出과 共同繁榮』, 全北大學校 人文研究員 設立記念 國際學術大會 要旨集
- 金範哲, 2010a, 「湖西地域 支石墓의 시 · 공간적 특징」, 『韓國考古學報』 74
- 金範哲, 2010b, 「湖西地域 지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68
- 金範哲, 2011, 『쌀의 고고학: 수도작과 청동기시대 정치경제』, 서울: 민속원
- 김병준 · 김진우 · 이명화 · 정하현,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 · 고고자료 이용 사례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45

- 金承玉,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한국고고학회 편,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서울: 사회평론
- 金壯錫,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67
- 朴淳發, 1998, 「百濟 國家의 形成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박양진·오세은·이성구·정대영, 2008,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孫峻鎬,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51
- 孫峻鎬, 2004, 「錦江流域 松菊里文化의 群集 貯藏孔 研究」, 『科技考古研究』 10
- 송만영, 2007,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한국고고학회 편,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서울: 사회평론
- 송호정, 2008, 「요하유역 고대문명의 변천과 주민집단」,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송호정·이재현·이청구·이해련, 2008,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심재훈·김경호·민후기·최진목, 2008, 『하상주단대공정: 중국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 住居址를 통한 中期의 設定」,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대학교 大學院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 오세은, 2008, 「중국문명의 형성과 초기발전단계의 사회경제 연구」,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李相吉, 2003, 「南江流域의 先史農耕과 聚落」,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福州南江遺蹟과 古代日本』, 서울: 신서원
- 이성구, 2008, 「중화문명탐원공정 예연구와 제1단계 '취락형태에 반영된 사회구조' 과제에 대한 연구」,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재현, 2008, 「요서지역의 문명 및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재현, 2009, 「하가점하층문화기 방어취락의 성격 연구」, 『요하유역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청규·김정열·송호정·이재현·이중수, 2009, 『요하유역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해련, 2008, 「홍산문화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중국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李弘鍾, 2001, 「우리나라의 초기 수전농경」, 『韓國農工學會誌』 42
- 庄田慎矢, 2005, 「玉關聯 遺物を 통해 본 晋州 大坪 聚落의 分業體制」, 『嶺南考古學』 36
- 田崎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寬倉里遺蹟 B區域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편,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울: 서경문화사
- 정대영, 2008,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연구동향과 전망: 자연환경과 문명형성과정의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문명탐원 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鄭義道, 2003, 「南江流域의 環濠遺蹟」,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晋州 南江遺蹟과 古代日本』, 서울: 신서원
- 高江濤, 2005, 「新砦遺址與中國古代文明起源問題」, 『中原文物』 2005(4)
- 高煒·張岱海·高天麟, 2007, 「陶寺遺址의 發掘與夏文化的探索」, 『襄汾陶寺遺址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 蘇秉琦, 1986, 「遼西古文化古城古國: 兼談當前田野考古工作的重大惑大課題」, 『文物』 1986(8)
- 蘇秉琦, 1999, 『中國文明起源新探』, 北京: 三聯書店
- 蘇秉琦 外,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 考古調查階段性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 何篤, 2004, 「陶寺文化遺址—走出堯舜禹“傳說時代”的探索」, 『中國文化遺產』 2004(3)
- Ames, K. M., 1995, “Chiefly Power and Household Production on the Northwest

- Coast,” In T. D. Price and G. M. Feinman (ed.),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Fundamental Issues in Archaeology*, New York: Plenum Press
- Bale, M. T. and Ko, M. J.,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24(2)
- Brumfiel, E. M. and Earle, T. K., 1987, “Specialization, Exchange, and Complex Societies: An Introduction,” In Brumfiel, E. M. and Earle, T. K. (ed.), *Specialization, Exchange, and Complex Societies, New Directions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neiro, R. L., 1981, “The Chieftdom as Precursor of the State,” In Jones G. and Kautz, R. (ed.), *The Transition to the Statehood in the New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neiro, R. L., 1991, “Chieftdom–Level Warfare as Exemplified Fiji and the Cauca Valley,” In Hass, J. (ed.), *The Anthropology of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pman, R., 1981, “The Emergence of Formal Disposal Areas and the “Problem” of Megalithic Tombs Prehistoric Europe,” In Chapman, R., Kinnes, I., and Randsborg, K. (ed.),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pman, R., 1995, “Ten Years After–Megaliths, Mortuary Practices, and the Territorial Model,” In Beck, L. A. (ed), *Regional Approaches to Mortuary Analysis,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s to Archaeology*, New York: Plenum Press
- Dietler, M., 2001, “Theorizing the Feast: Rituals and Consumption, Commensal Politics, and Power in African Contexts,” In Dietler M. and Hayden, B. (ed.), *Feasts: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Drennan, R. D., 1991, “Pre–Hispanic Chieftdom Trajectories Mesoamerica, Central America, and Northern South America,” In Earle, T. K., *Chieft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ennan, R. D., 1992, “What Is the Archaeology of Chieftdoms about?,” In Embree, L. E. (ed.), *Metaarchaeology: Reflections by Archaeologists and*

- Philosophers*,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rennan, R. D., 1996, "One for All and All for One: Accounting for Variability without Losing Sight of Regularities the Development of Complex Society," In Arnold, J. E. (ed.), *Emergent Complexity: The Evolution of Intermediate Societies*, Ann Arbor: International Monographs Prehistory
- Drennan, R. D. and Peterson, C. E., 2005, "Early Chiefdom Communities Compared: Settlement Pattern Record for Chifeng, the Alto Magdalena, and the Valley of Oaxaca," In Blanton, R. E. (ed.), *Settlement, Subsistence, and Social Complexity: Essays Honoring the Legacy of Jeffrey R. Parsons, Ideas, Debates, and Perspectives*, Vol. 1, Los Angeles: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Earle, T. K., 1989, "The Evolution of Chiefdoms," *Current Anthropology* 30
- Earle, T. K., 1991a, "The Evolution of Chiefdoms," In Earle, T. K. (ed.),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rle, T. K., 1991b, "Property Rights and the Evolution of Chiefdoms," In Earle, T. K. (ed.),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rle, T. K.,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Pre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inman, G. M. and Neitzel, J. E., 1984, "Too Many Types: An Overview of Sedentary Prestate Societies in the Americas," In Schiffer, M. B. (ed.),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 Flannery, K. V., 1972, "The Cultural Evolution of Civilization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 Fried, M. H., 1967,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An Essay Political Anthropology*, New York: Random House
- Goldstein, P. S., 2000, "Exotic Goods and Everyday Chiefs: Long-Distance Exchange and Indigenous Sociopolitical Development the South Central Andes," *Latin American Antiquity* 11

- Guo, D. S., 1995, "Hongshan and Related Cultures," In Nelson, S. M. (ed.), *The Archaeology of Northeast China: Beyond the Great Wall*, London: Routledge
- Haas, J., 1982, *The Evolution of the Prehistoric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lertas, K. A., 1997, "Agricultural Food Systems and Social Inequality: The Archaeobotany of Late Neolithic and Early Bronze Age Thy, Denmark,"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Kim, B. C., 2008, "Opportunistic Leadership and Moving People: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Reorganization in the Bronze Age, Central Western Korea,"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73rd Annual Meeting*,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Liu, L., 1996, "Settlement Patterns, Chiefdom Vari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States North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5
- Liu, L., 2005, *The Chinese Neolithic: Trajectories to Early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rison, K. D., 1994,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
- Parsons, J. R., 1972, "Archaeological Settlement Patter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
- Peterson, C. E. and Drennan, R. D. 2005, "Communities, Settlements, Sites, and Surveys: Regional-Scale Analysis of Prehistoric Human Interaction," *American Antiquity* 70
- Renfrew, C., 1974, "Beyond a Subsistence Economy: The Evolution of Social Organization Prehistoric Europe," In Moore, C. B. (ed.), *Reconstructing Complex Societies: An Archaeological Colloquium*, Vol. 20,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Cambridge, Mass: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 Renfrew, C., 1976, "Megaliths, Territories and Populations," In Laet, S. J. (ed.), *Acculturation and Continuity Atlantic Europe, Mainly during the Neolithic Period and the Bronze Age, Dissertationes Archaeologicae Gandenses*, Vol. 16, Brugge: De Tempel

- Sanders, W. T. and Webster, D., 1978, "Unilinealism, Multilinealism, and the Evolution of Complex Societies," In Redman, C. L. (ed.), *Social Archaeology, Studies Arche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Service, E. R., 1962,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ew York: Random House
- Shelach, G., 1999, *Leadership Strategies, Economic Activity,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Social Complexity Northeast China*,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Stanish, C., 1994, "The Hydraulic Hypothesis Revisited: Lake Titicaca Basin Raised Fields Theoretical Perspective," *Latin American Antiquity* 5
- Trigger, B. G., 1968, "The Determinants of Settlement Patterns," In Chang, K. C. (ed.), *Settlement Archaeology*, Palo Alto: National Press Books
- Trubitt, M. B. D., 2000, "Mound Building and Prestige Goods Exchange: Changing Strategies in the Cahokia Chiefdom," *American Antiquity* 65
- Wang, T., 1997, "Establishing the Chinese Archaeological School: Su Bingqi and Contemporary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71

[ABSTRACT]

Comparing the Chiefly Societies of Northeast Asia

Kim, Bumcheol

This paper attempts at describing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eight chiefly societies from various regions of Northeast Asia that represent similar and/or different environmental settings. The comparison are performed in five dimensions: local warfare, long-distance exchange, local subsistence, public works, and prestige and finance. The comparisons primarily concern how similar or different the eight trajectories are to each other in the individual dimensions, and how the dimensional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could be related to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These works will provide substantial basis for interpreting how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came into.

Analyzing various lines of evidence reveals that chiefly societies of various regions of Northeast Asia developed independently and represented socioeconomic differences. The differences seem to have been partly attributed to given natural environment where the chiefly societies settled. However some societies represented a significant different trajectories, despite substantial similarity in terms of internal structure and environmental settings, and geographical vicinity. Two chiefly societies from central western Korean Peninsula could be the most salient example.

This suggests that uniform model could not explain the development

of complex societies even in Northeast Asia. Exploring various activities of social actors with different interests could be more promising for understanding on dynamic aspects of the development.

keywords

Northeast Asia, Chiefly Society, Dimensional Approaches, Social Actors.

巨視的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이성주 |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우리는 고고학 자료의 분포를 분석할 때 그 대상을 광역으로 설정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일정 지역 내의 미시적인 양상을 관찰할 수도 있다. 흔히 지역 수준의 연구는 유적이거나 유적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는 광역의 연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분석은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한다. 일찍이 고고학자들은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세기 전반까지도 문화사 전통의 고고학자들은 특징적인 物質文化 組合과 특정 人間集團을 연결시켜 생각했다.¹⁾ 이러한 사정은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초창기 한국의 고고학

※ 투고일: 2011년 5월 11일, 심사일: 2011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1) B. G. Trigger, 1989,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3~171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빗살무늬토기는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넓게 분포하는 기하학적 도안의 첨저발형토기와 관련이 있다거나²⁾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나 삼국시대 유물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이른바 북방계 문화와의 관계있음을 논했던 것은³⁾ 그러한 관점에 기초한 해석이었다. 계통론이라 부르는 이 담론은⁴⁾ 근대고고학의 관점에 토대를 둔 고고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⁵⁾ 民族(文化)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인종주의적 문화관, 유물 형태요소의 집합을 문화와 동일시하는 유물 중심의 연구에 기초한 고고학적 해석이 계통론인 셈이다.⁶⁾

사실 계통론은 현존하는 민족집단의 문화와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시간적으로 계승되는 관계를 이해하려는 담론이었다. 일제강점기의 계통론은 일본 고고학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기원을 해명하고자 펼쳐 왔던 담론이었지만 해방 이후 우리도 고고학 자료를 해석할 때 민족사의 범주를 각별히 의식해 왔다. 선사시대 櫛文土器, 琵琶形銅劍, 支石墓 등과 같이 지금의 국가적 범위를 넘어서 분포했던 유물을 들어 선사시대 민족문화의 범위를 확장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넉지시 제안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거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의 범위를 의식하고 그 내부에 분포하는 다양한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다. 국가주의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광역의 국가영토 내에 분포하는 종족집단과 그 문화의 역사적 관계를 체계화하려는 연구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소비에트의 고고학, 언어학, 체질인류학자들이 種族起源論을 표방하며 그러한 연구

2) 藤田亮策, 1930, 「櫛目土器土器の分布について」, 『靑丘學叢』 2(『1948, 朝鮮考古學研究』, 東京: 高桐書院), 140~168쪽

3) 梅原末治, 1938, 「古代朝鮮に於ける北方文物の痕迹」, 『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東京: 星野書店, 111~137쪽

4) 西川宏, 1970, 「朝鮮考古學における系統論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7-1

5) 李盛周, 2008, 「型式論과 系統論」,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ol. 1, 서울: 주류성, 97~129쪽

6) 李盛周, 1995, 「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 『古文化』 47, 27~70쪽; 李盛周, 2008, 앞의 글, 110~112쪽

를 해왔으며,⁷⁾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多民族統一國家論’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진행시켜온 중국 동북의 고고학 연구도⁸⁾ 그러한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문화해석의 관점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지역, 그중에도 중국 동북지방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지역의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 현재의 민족을 선사시대에 확대된 민족의 범위와 연관시키려는 계통론적인 관점이 한 축을 이룬다면 현재의 국가 영토 안의 문화적 다양성을 하나의 역사·문화적 범주로 수렴시키고자 하는 국가주의적 입장이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고고학은 광역으로 분포하는 물질적인 양상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 왔고 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왔다. 이를테면 전통고고학에서는 일정 문화요소의 분포를 주민의 이주나 문화의 전파로 해석해 왔고, 20세기 중반 이후 과정주의가 등장하면서 고고학자들은 일정 지역집단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목표였기에 원거리 교역 등을 비롯하여 광역에 분포하는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역집단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첫째 중국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 물질문화의 분포와 변동을 설명하는 연구의 관점과 이론적인 전제에 대해 학사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민족문화의 계통이나 민족사의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다루었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한 국가주의의 입무에 따라 현재의 국가적 영토 안에서 진행된 지역문화임을 강조하는 연구 관점의 문제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 위에 광역에 걸친 물질문화의 양상을 地域內, 地域間 相互作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몇 가지 이론적인 전제와 틀에 대해 검토하

7) R. W. Lindstrom, 2001, "Soviet Ethnogenetic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st," In J. E. Terrell (ed.), *Archaeology, Language, and History*, Westport: Bergin & Garvey, pp. 57~78

8) 송호정 외, 2008,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고 장기간, 그리고 광역에 걸친 동북아지역 족장묘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계통론적 연구의 문제

1_ 종족 정체성에 대한 근대 고고학의 관심

민족, 혹은 민족주의와 결부시켜 과거를 이해하려는 관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유럽에서는 그러한 사고의 시작을 르네상스 시대까지 올려 보기도 한다.⁹⁾ 문헌이나 구전의 해석을 토대로 하든 물질적인 증거에 의지하든 종족 혹은 민족 정체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근대 민족주의가 팽배하고 민족 단위 국가성립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던 19세기에 들어와 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근대과학의 분과 중에도 고고학이 민족과 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중요한 과업으로 받아들여 온 것 같다. 민족의 오랜 과거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할 때 문헌기록 이전 시기에는 물질적인 증거, 즉 고고학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의 후원과 원조로서 과학의 한 분과로 자리 잡은 고고학은 그 자신의 자료 즉 물질적인 증거를 민족의 기원이나 정체성과 연관 짓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¹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기의 문화사 고고학자들은 유물의 형식과 그 조

9) N. A. Silberman, 1995, "The Politics and poetics of Archaeological narratives," In P. L. Kohl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9~262

10) B. G. Trigger, 1989, 앞의 글; P. L. Kohl and C. Fawcett, 1995, "The archaeology in the service of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P. L. Kohl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9~262

합 및 그 분포영역을 정의하는 작업을 중요시했다. 이러한 연구관점이 독일 문화사와 민족지학의 전통에서 나온 문화에 대한 관념과 결합되면서 과거 특징적인 물질문화의 분포영역과 종족집단의 거주영역을 동일시하는 연구관점이 성립되고 정당화되었다.¹¹⁾ 특히 구스타프 코시나와 같은 이는 고고학이 물질문화의 분포를 통해 과거 문화의 영역을 획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한 언어를 쓰는 민족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물질문화가 존속하는 한, 그 민족은 거기에 살아왔으며 지금 이름을 가진 민족집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유럽 민족의 연원은 우수한 아리안族 확산에서 기원하며 그들의 활동을 통해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인종주의적인 생각도 가졌다.¹²⁾ 이러한 코시나의 생각이 이후 고든 차일드를 비롯한 20세기 전반의 문화사 고고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고든 차일드의 ‘고고학적 문화(archaeological culture)’에 대한 정의도¹³⁾ 코시나의 국수적 게르만주의를 따르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는 그의 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2_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의 계통론과 그 영향

고고학사의 연구를 통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고고학을 평가하면서 그 해

11) B. G. Trigger, 1989, 앞의 글, pp. 161~167; S. Jone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Routledge, pp. 15~17; S. Lucy, 2005, “Ethnic and cultural identities,” In Diaz-Andreu, M., S. Lucy, S. Bavić and D. N. Edwards (eds.), *The Archaeology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pp. 86~109

12) S. Hides, 1996, “The geneology of material culture and cultural identity,” In Graves-Brown, P. S. Jones, and C. Gamble (eds.), *Cultural Identity and Archaeology: The Construction of European Communities*, London: Routledge, pp. 25~47; S. Jones, 1997, 앞의 글, p. 16

13) Childe, V. G.,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pp. v~vi; V. G. Childe, 1935, “Changing Method and aims in prehistory: the presidential address for 1935,” *Proceedings of Prehistoric Society* 1, pp. 1~15

석이 인종주의적 편견과 文化愚劣論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의견이 있다.¹⁴⁾ 19세기 유럽인의 인종주의 문화관과 역사관은 Morse, Siebold 등 처음 일본에서 근대고고학·인류학적 연구를 시도했던 구미인이 도입했던 것 같다. 이들은 일본의 선사시대 인종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며 그 종적 계통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라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그들 연구에 중심적인 과제였다¹⁵⁾. 일본에서 근대고고학을 개척해온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조사된 유물에 대해 설명하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유물을 소유했던 인종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감을 보게 된다.

초창기의 근대 역사학·고고학·인류학이 함께 몰두하였던 人種論的 관심이 이후 고고학을 문화계통론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¹⁶⁾ 명치시대의 이른바 일본 석기시대 인종논쟁에서 보면 인종적 기원을 찾기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자료 즉 체질자료, 신화·전설, 역사·문헌자료, 고고학 자료로부터 증거를 수집했다.¹⁷⁾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내려진 결론은 일본 민족이 적어도 둘 이상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⁸⁾ 고고학이 인종론적 관심에서 민족의 기원을 탐구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물질문화의 양상들을 비교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기원적인 갈래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의 문화 담당자라는 인간집단을 상징하고 그들 사이의 혈연적인 관계, 이주, 교류 등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어 종족과 그 문화의 기원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내놓은 해석이 바로 계통론이 아닌가 한다.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선사·고대문화의 계통이 몇 가지 서로 다른 갈래의 문화요소가 서로 뒤섞여 있음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 그

14) B. G. Trigger, 1989, 앞의 글, pp. 110~167

15) 工藤雅樹, 1979, 『研究史·日本人種論』, 東京: 吉川弘文館, 149~155쪽; 工藤雅樹, 1987, 「日本人種·民族論」, 『論爭學說 日本の考古學』 I (總論), 東京: 雄山閣

16) 工藤雅樹, 1987, 위의 글

17) 水野佑, 1969, 『日本民族の源流』, 東京: 雄山閣, 15쪽.

18) 松本彦七郎, 1918, 「日本石器時代人類に就て」, 『人類學雜誌』 33-9號; 清野謙次, 1944, 『日本人種論變遷史』, 東京: 小山書店, 51~58쪽

들은 자국 문화의 계통이 古亞細亞 人種的인 先住民文化, 한반도를 거쳐 온 중국문화, 북방아시아로부터 온 스키타이문화(혹은 북방유목민 문화) 등 네 가지의 요소로 갈라진다고 미리 전제해 두었다.¹⁹⁾ 그런데 이후 계통론적인 연구가 이러한 대전제를 반박하거나 새로운 논리전개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후 모든 계통론적인 논설은 전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은 없고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계통론적 고고학의 실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침략에 의한 조사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관학자 그룹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이후 古蹟調査委員會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발굴조사를 포함한 5개년간의 체계적인 유적조사계획을 진행하였다.²⁰⁾ 1926년 東京大學과 京都大學 즉 兩帝國大學의 고고학자들을 중심으로 東亞考古學會가 결성되었고 1929년에는 『東方考古學叢刊』이라는 이름으로 제1책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²¹⁾

제6책의 보고서에 가장 장황한 서술을 볼 수 있지만²²⁾ 제1책부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출토 인골에 대한 계측 보고와 형질에 대한 설명이었다. 특히 제1책 『篋子窩』에서는 출토된 인골이 3개체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를 상세히 계측한 뒤 그 형질적인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篋子窩 인골이 원시적인 제 성질을 보이는 가운데 진보된 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 이는 마치 유물이 원시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중국 고등문명의 선구가 되었다는 사실과 비교된다는 점이 흥미롭다.”²³⁾

19) 濱田耕作, 1939, 『考古學研究』, 東京: 座石寶刊行會, 73~115쪽

20) 梅原末治, 1969, 「日朝併合の期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墳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るゝは一考古學從の回想録」, 『朝鮮學報』 51, 29쪽

21) 東亞考古學, 1929, 『篋子窩』, 東方考古學叢刊 第一冊, 東亞考古學會

22) 三宅宗悅·吉見恒雄·難波光重, 1938, 「赤峰紅山後石槨墓人骨の人類學的研究」, 『赤峰紅山後』, 東方考古學叢刊 第六冊, 東亞考古學會, 89~110쪽

23) 清野謙次·金關丈夫·同平井隆, 1929, 「關東州篋子窩遺跡より發掘せる人骨に就て」, 『篋子窩』, 東方考古學叢刊 第一冊, 東亞考古學會, 18쪽

Ⅲ. 요령 청동기문화의 연구에 나타난 민족사와 종족성

1_ 초창기 북한 학계의 고조선 노예제 국가론

북한의 고고학계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제국주의 시대 고고학의 성과들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들 고고학 실천의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됨을 자각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고고학을 극복하는 일은 고고학이란 학문을 둘러싼 제도적·이론적·방법론적·기술적인 제 측면들을 정비하는 일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²⁴⁾ 물론 제국주의 고고학에 대한 비판의 관점과 북한 고고학의 이론적 실천의 과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당초 북한 학계는 문화 특수주의를 배경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역사관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역사의 합법칙적 과정으로서 한국 선사 및 고대사회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유물론적 발전도식을 한국사에 적용할 때 우리 역사의 발전단계를 끌어올려 노예제 사회의 성립시기를 삼국시대 이전으로 보는 국수주의적 태도를 비치기 시작했다. 1963~1965년에 걸쳐 북한 학계와 중국 학계가 공동으로 발굴한 요동반도 남단의 유적들을 이듬해 북한 고고학계가 단독으로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를 간행하면서²⁵⁾ 사회주의적 인터내셔널리즘을 외면하고 국수주의적인 입장의 민족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사실이 보고서에는 북한 고고학자에게는 고조선사를 재정립하는데 긴요했던 崗上墓와 樓上墓 발굴자료가 실리게 되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원전 1000년기 전반의 비파형동검문화는 계급사회였던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로 이해하였다.²⁶⁾

북한 학계에서는 고조선을 대규모 노예 소유자가 존재했던 사회로 보고,

24) 정백운, 1958, 「해방 후 우리나라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8-4, 7~16쪽

2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26) 사회과학출판사, 1976,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4~20쪽

그 강역을 비파형동검이 분포하는 한반도 서북부와 요령지방에 미친다는 설을 정립해 갔으며 이 공식견해는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²⁷⁾

2. 중국 학계의 족속론

1960년대 초 內蒙古 寧城縣 南山根유적에서 中原系 青銅器와 동반되어 북방계 청동기가 발견되었다.²⁸⁾ 이어 遼寧省 朝陽縣 十二臺螭子유적에서도 독특한 북방청동 유물군이 출토됨으로써 중국 고고학계에서 동북지방의 청동기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北方青銅器’란 명칭부여와 함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가 지나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다.²⁹⁾ 북방청동기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는 그러한 청동유물군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유물복합체들을 분별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 학계의 초기 연구들을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는 청동유물군의 지역 구분과 편년을 하기에 앞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청동기를 선택하여 형식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파형동검을 기준유물로 선정했다는 점이다.³⁰⁾ 물론 요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계 청동유물군의

2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2, 『조선전사』 제2권, 고대편, 33~62쪽; 박진욱, 1987,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비파형 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2~72쪽; 황기덕, 1987, 「료서지방의 비파형단검문화와 그 주민」, 『비파형 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4~150쪽

28)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學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2, 27~40쪽

29) 金瑛洙, 1994, 「曲刃青銅短劍文化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金瑛洙 編, 『古代東北아시아의 民族과 文化』, 서울: 驪江出版社, 760~923쪽; 郭大順, 1993, 「遼河流域北方青銅器的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993-1·2, 34~7쪽

30) 林雲,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2, 39~61쪽; 靳楓毅, 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下), 『考古學報』 1982-4, 1983-1, 87~426, 387~426쪽; 翟德芳, 1988,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1988-3, 277~99쪽;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

분포지역에서 가장 폭넓은 분포를 보이는 유물이 비파형동검이긴 하지만 남북한의 학계와 일본의 학계에서도³¹⁾ 비파형동검을 형식 분류의 기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흥미롭다. 둘째로는 거의 모든 중국 학계의 연구에서도 북방계 청동유물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유물군의 연대를 추정할 다음에는 그 유물군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른바 族屬論에 관심을 보였으며,³²⁾ 문헌에 등장하는 족속명에 어떻게 비정되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중국 학계에서 추구하는 族屬論은 문헌에 등장하는, 때문에 역사상 실재했다는 종족을 확인하려 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고고학의 막연한 계통론과는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인종주의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화적 범주를 종족적 범주에 대응시키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후대의 문헌에 등장하는 종족, 혹은 지금의 민족과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민족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한 청동유물군을 족속에 비정하는 해석을 넘어 형질적인 특성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청동유물군과 함께 수습된 인골의 형질과 유전자를 분석하여 인종학적 분류군에 대입시키기도 한다.³³⁾ 이러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東方考古學叢刊』에 보고된 인골계측의 연구사례와 비교되는 것이어서 인종주의적 족속론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10년여 동안 청동기시대 동북지방의 연구를 보면 여전히 유물복합체의 분군과 정의,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 있으며 족속론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다.

究, 蘇秉琦 編, 『考古學文化論集』 1, 北京: 文物出版社, 99~128쪽

31) 秋山進午, 1968,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様相」(中)·(上)·(下), 『考古學雜誌』 53·54, 234~61, 1~24, 311~37쪽

32) 鳥恩, 1985, 「殷至周初의北方青銅器」, 『考古學報』 1985-2, 135~156쪽; 靳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層問題」, 『考古學報』 1987-2, 177~208쪽; 翟德芳, 1988,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1988-3, 277~99쪽

33) 朱泓, 2002, 「內蒙古長城地帶의古代種族」, 『邊疆考古研究』 1, 北京: 科學出版社, 301~322쪽

3_ 남한 학계 청동유물군 연구

남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기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1960년대 초에 알려진 남산근유적과 십이대영자유적 등과 같이 해방 이후 중국 학계에서 새로 보고된 청동유물은 한국 청동기문화의 기원과 그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하여 간단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내 학계에 보고되었다.³⁴⁾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 고고학계에서 요령지역 청동기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한국 청동기문화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른바 원류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요령지방의 청동유물군을 검토했고, 다시 북유라시아의 청동기문화와 비교하면서³⁵⁾ 한국 청동유물의 시원과 연대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원문명과 일찍 접촉했던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가 한국 청동기문화 개시기의 연대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지역 청동유물군에 집중한 연구가 있다.³⁶⁾

청동유물군의 연대를 검증하기 위해 남산근유적 출토 청동유물을 분석한 연구³⁷⁾와 요령지방으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석곽묘의 형태적 속성을 분석한 사례³⁸⁾ 그리고 요령지방의 청동유물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요령식동검문화의 범주를 정의하고 그 특성과 연대를 비정한 논문이³⁹⁾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전 요령 청동기의 연구는 민족문화의 계통을 서술하는 작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을 추론하

34) 金元龍, 1961, 「十二臺營子の 靑銅短劍墓」, 『歷史學報』 16, 109~121쪽; 金元龍, 1976, 「沈陽鄭家窪子 靑銅器時代墓와 副葬品」, 『東洋學』 6, 1~21쪽

35) 金廷鶴, 1966, 「考古學으로 본 韓國民族」, 『白山學報』 1, 133~149쪽; 金廷鶴, 1972, 「靑銅器時代」,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 145~146쪽

36) 全榮來, 1977, 「韓國靑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查報告』, 4~85쪽; 全榮來, 1978, 「韓國靑銅器文化의 年代上限問題」, 『全北遺蹟調查報告』 8, 3~35쪽

37) 全榮來, 1978, 위의 글, 23~26쪽

38) 李鍾宣, 1969, 「韓國 石棺墓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1, 29~114쪽

39) 李康承, 1979, 「遼寧地方의 靑銅器文化」, 『韓國考古學報』 6, 1~95쪽

고 사회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했던 북한 학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비파형동검유물군을 고조선의 역사복원에 응용했던 연구도 있었으나⁴⁰⁾ 학계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외교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를 실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국내 연구자들 중에도 동북아 고고학 혹은 북방 고고학의 전문 연구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조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요령지역 청동기유물군의 연구에도 큰 진전이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 독점적으로 청동유물의 형식 분류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유물 복합체의 시간·공간적 변이가 기술되어 왔지만 1990년대부터는 국내 연구자의 참여가 많아지고 지금은 독자적인 관점에서 동북지역 전체 유물군의 분류와 유물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시도되고 있다.⁴¹⁾ 나아가 요령지방의 청동유물군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 지역 청동유물군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다.⁴²⁾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광역에 걸친 청동유물군의 분포를 주민의 이주나 전파, 혹은 막연한 계통론적 서술로 마무리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 연구가 등장했다. 이를테면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기간 동안 중원으로부터 遼西와 遼東,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는 광역에 걸친 제 지역의 문화변동은 거시적인 체계의 변동과 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

40) 尹乃鉉, 1985, 「古朝鮮의 社會性格」,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서울: 一潮閣, 1~56쪽

41)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方 세 靑銅短劍文化的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67~93쪽

42) 강인욱, 2005, 「夏家店上層文化的 형성과 尤라시아의 初원문화」, 『서울·경기고고학회춘계학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67~93쪽; 강인욱, 2009,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 『東北亞靑銅器文化 展開와 韓半島』, 제19회 호서고고학회학술대회발표요지, 호서고고학회, 33~80쪽; 오강원, 2007,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와 북방 청동기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 『오르도스의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한국고대학회, 118~151쪽

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연구가 있다.⁴³⁾ 중원문명 중심지가 등장하고 그 1차 주변과 2차 주변의 문화지역이 분포하게 됨으로써 거시적인 체계가 형성되며, 문명의 확장과 체계의 재편을 거쳐 상호작용의 성격과 내용 그 지리적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요지인데, 한반도 지역이 문명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초기 철기시대 이후부터라고 보았다.⁴⁴⁾

비파형동검유물군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청동유물군은 문명 주변의 엘리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상호작용의 교환망을 통해서 입수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⁵⁾ 遼西地方으로부터 北部九州에 이르기 까지, 성격상 유사한 청동유물군이 그 지역 지배엘리트의 분묘에 출현하게 된다. 시간적인 낙차와 지리적인 거리를 넘어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遠距離·長期間에 걸친 지배권력과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수용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이 점을 多紐鏡副葬墓의 출현과 확산과정을 통해 잘 설명하였던 연구가⁴⁶⁾ 있다.

요령지방의 청동유물군의 분석을 토대로 고조선의 위치와 사회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문헌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조선이 어떠한 정치조직체였는가, 그 정치체의 중심지와 규모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은 물론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만 논의가 가능하다. 이 핵심문제를 고고학적으로 해명하려면 이론적인 모형과 그것을 지지하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조선 사회의 진화를 통합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고 소국-소국연맹-소국병합 단계를 거친다는 모델을 제시했던 연구가 있

43) 李盛周, 1996, 「青銅器時代 東아시아 世界體系와 韓半島의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23, 7~78쪽

44)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서울: 學研文化社, 246~250쪽

45) 李盛周, 2007, 앞의 글, 245쪽

46) 李清圭, 1999, 「東北亞地域의 多紐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57~87쪽; 李清圭, 2000, 「國의 形成과 多紐鏡副葬墓」, 『先史와 古代』 14, 27~47쪽

었다.⁴⁷⁾ 그러나 과연 이 설명을 뒷받침해 줄 고고학 자료가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고고학 자료를 통해 고조선이란 정치체의 규모와 조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엄격히 평가해 보는 연구도 제출된 바 있다.⁴⁸⁾ 물론 고조선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가 민족사의 관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민족사적 개념으로 도출된 사회적 실체를 고고학 자료의 형태와 분포를 통해 증명하려는 노력은 학문적인 접근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정한 형식의 청동유물 조합상과 그 분포가 종족의 정체성에 대응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요령지역의 특정 비파형동검유물군의 분포가 고조선 종족의 거주영역을 의미할 것이라는 전제를 일부의 연구에서는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⁴⁹⁾

요령지역의 청동기시대 청동유물군의 연구에 개입했던 북한과 남한 학계의 고조선 연구, 중국 학계의 족속론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요령지역의 청동기시대 연구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개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국 학계든 중국 학계든 일본 학계든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서 학문외적 동기의 지배를 받는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⁰⁾ 최근 중국 학계의 국가주의적 전략에 따른 고고학적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고가 많이 제출되어 있지만⁵¹⁾ 남한 학계가 요령 청동기문화를 민족사와

47) 李鍾旭, 1993,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48) 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7~58쪽

49) 宋鎬畧, 1991, 「遼東地域 青銅劍文化和 美松里型土器에 관한 考察」, 『韓國史論』 24, 3~95쪽; 宋鎬畧, 2003,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연구」, 『韓國上古史學報』 40, 1~26쪽

50) 吳江原, 2009, 「요령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조사 및 청동기문화의 연구성과와 과제」, 안재호 외,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학연문화사, 299쪽

51) 송호정, 2008, 앞의 글, 37쪽; 이재현, 2008, 「요서지역의 문명 및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송호정 외, 2008,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74쪽; 이청규, 2009, 「요하유역 북방계 청동기의 출현」, 이청규 외, 『요하유역 초기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32, 172쪽

연결시키는 고고학적 해석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의 상
실이다.

IV. 종족성에 대한 정치적 개입 – 국가주의의 문제

1_ 소비에트 고고학의 종족기원론에 나타난 국가주의

‘종족기원론’이란 종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와 같은 의미인데, 20세기 초
서구 고고학 전반에 걸쳐 유행하였던 문화사 고고학과는 상당한 공통성을 지니
고 있는 것 같다. 이 종족기원론은 1930년대 중반쯤 소비에트 고고학의 주된
관심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정통교리까지 침범하
면서 등장한 종족기원론의 연구과제가 학계의 주된 관심사로서 그토록 오랜 동
안 유지되어 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 슈니렐만(V. A. Shnirelman)
은 종족기원론의 연구가 학문 그 자체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정
치적 상황에서 촉발되고 지원된 연구임을 지적한 바 있다.⁵²⁾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직후 1920년대 지적 분위기를 이끌었던 미하일 포
크로프스키나 니콜라이 야 마르와 같은 역사과학, 혹은 언어학자들은 러시아
의 역사, 러시아의 민족과 같은 용어 그 자체를 반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만
큼 근대국가체제, 민족주의 이념을 거부했다. 마르의 언어학 이론에 따르면 현
대의 언어나 민족집단 그 자체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여러 인간집단들이 연
관되고 뒤섞여 온 결과로 이해했으며, 인종집단, 혹은 문화집단이라는 것은 역

52) V. A. Shnirelman, 1995, “From internationalism to nationalism: forgotten pages of Soviet archaeology in the 1930s and 1940s,” In P. L. Kohl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0~138

사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검토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⁵³⁾

마르크스주의의 교리를 따라 역사발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인간집단의 구분보다는 계급의 분화를 우선시한 것이다. ‘고고학적 문화’의 개념에 기초한 서구의 고고학을 특수주의, 인종주의 고고학으로 규정하고 배격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으며 국제주의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켈러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속하는 동안 내부적인 갈등 요인들과 또 한편으로 세계 다른 지역을 압제와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대결에 직면하면서 자체적인 통제의 기제가 필요하게 된다.⁵⁴⁾ 연방 안에 수많은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요시프 스탈린은 제16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민족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자리에서 “형태는 민족주의이되 내용은 사회주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체제 내부에서 야기되는 도전으로 연방 내의 제 민족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연방의 제 지역에서 성장한 지식인들이 종족·문화적 특수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당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민족집단들 사이에 이익이 불균등하게 돌아간 점도 종족성에 대한 주장을 부추겼다.⁵⁵⁾ 이러한 내부적 문제보다 사태의 방향을 돌려놓은 계기로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은 외부적인 위협이었다. 밖으로부터 파시스트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면서 러시아 인민들의 단합을 위해 러시아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위대한 슬라브의 민족성과 역사를 부각시켜 나가게 된다.⁵⁶⁾ 특히 1930년대 독일 고고학은 노골적으로 게르만 우월주의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였는데,⁵⁷⁾ 나치의 기

53) V. A. Shnirelman, 1995, 앞의 글, p. 121

54) E. Gellner, 1988, *State and Society in Soviet Thought*, Oxford: Blackwell, p. 179

55) V. A. Shnirelman, 1996, 앞의 글, pp. 218~242

56) V. A. Shnirelman, 1995, 앞의 글, pp. 130~131

57) B. Arnold, 1990,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64, pp. 464~478; I. Wiwjorra, 1996, “German

획 속에는 체질인류학적·언어학적 연구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으며 민족차별주의의 정책도 실행으로 옮겨갔다. 당면한 군사적·이념적 위협 앞에 소비에트 사회도 민족적 자존심과 자의식을 고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현실이 소비에트 연구자들로 하여금 민족기원론의 연구 프로그램을 꺼내들게 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의 소비에트 고고학은⁵⁸⁾ 파시스트의 종족사 구축에 대항하여 유럽의 형성에서 슬라브의 역사와 문화적 기여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⁵⁹⁾

종족기원의 연구로 연방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종족적인 연원에 대한 고고학·인류학·언어학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엄격한 마르크스주의 정설은 물러나고 슬라브인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소수민족의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종족기원의 고고학은 특히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유적과 유물이 늘어나면서 종족의 문화적 변이와 발전과정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심화되어 갔다.⁶⁰⁾ 이러한 고고학의 전개에 체질인류학이 보조를 맞추게 되고 인류학적 종족형식과 언어학적 그룹을 대응시켜 보면서 고고학적·역사학적 근거를 통해 보강하는 연구로 나아가게 된다.⁶¹⁾ 현재 인간집단의 생물학적인 타입과 문화적인 특성을 대비시키면서 현재의 집단으로부터 과거 종족집단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는 연구가 특히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지역에서 많이 행해졌다고 하며⁶²⁾ 이는 소비

Archaeology and its Relation to Nationalism and Racism,” In M. Diaz-Andreu and T. Champion (eds.),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UCL Press, pp. 164~188

58) 부르스 트리거 저·성춘택 역, 2010, 『부르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서울: 사회평론, 325쪽

59) R. W. Lindstrom, 2001, 앞의 글, pp. 66~77

60) 부르스 트리거 저·성춘택 역, 2010, 앞의 글, 323쪽

61) R. W. Lindstrom, 2001, 앞의 글, p. 66

62) M. S. Asimov, 1981, “Ethnic History of Central Asia in the second Millennium B.C.: Soviet Studies,” In M. S. Asimov (ed.), *Ethnic Problems of History of Central Asia in the Early Period(second Millennium B.C.)*, Moscow: Nauka, pp. 44~52. R. W. Lindstrom, 2001, 앞의 글, p. 66에서 재인용.

에트연방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을 행정적으로 구획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⁶³⁾

2. 중국 고고학의 국가주의 해석

1970년대 이전까지 중국 고고학계 학술조사와 제반 활동이 황하 중류지역, 중원문명의 중핵지대로 알려진 지역에 집중되었던 편이었고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중국 문명의 기원론도 단일한 중심지에서 발원하여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 지역마다 중원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기원하거나 병행하는 신석기문화가 확인되고 나름대로 복합사회로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도 축적되었다. 張光直은 『중국 고대의 고고학』 제4판에서 북미 호프웰리안 지역과 남서부지역의 고고학에서 해석의 틀로 자주 사용되었던 ‘상호작용의 권역(interaction sphere)’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 문화 간의 관계와 문명으로의 과정을 설명해 보려 했다.⁶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의 병행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 중국 학계가 내놓은 패러다임은 이른바 蘇秉琦의 ‘區系類型論’이다. 물론 구계유형론은 중원지역과 거의 병행하는 지역문화의 전통을 인정하고 중핵지대의 문명기원론을 넘어서 지역적인 발전을 평가해 보기 위한 연구모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구계유형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선사시대 물질문화의 시간적·공간적인 변이를 區와 系로 나누어 인식하는 문화사 체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해두면 옳을 듯하다. 20세기 전반, 서구 전통 고고학의 문화사 편년법을 받아들여 중국적인 실천방법으로 재현된 것이다.⁶⁵⁾ 중

63) C. Humphrey, 1984, "Some recent Deveolpments in Ethnography in the USSR," *Man* 19, pp. 310~320

64) K-C. Chang,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234~242

65) 姜仁旭,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韓國考古學報』 56, 10~13쪽

원중심의 변화를 극복하고 지역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진행된 고고학적 작업들을 結構하기 위한 작업이다.⁶⁶⁾ 구계유형론은 고고학적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도 고고학적인 해석의 전제도 아니다. 그저 여러 종족의 문화형성과 각 문화들이 서로 관계하고 결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틀인 셈이다. “선사시대 서로 다른 文化區系의 주민집단이 서로 결합되고 관계하면서 中華族이 중심이 되어 전 인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인 것이다.⁶⁷⁾ 지역문화의 존재와 자체발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결국 하나의 중국으로 귀결되는 애국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⁶⁸⁾

나아가 蘇秉琦는 전후 중국 고고학의 성과 위에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고고학의 방향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마르크스주의 토대 위에 선사와 고대의 유일무이한 중국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설명함으로써 자기특색을 가진 고고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⁶⁹⁾

66) 蘇秉琦 外,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158쪽

67) 蘇秉琦, 1993, 「關於重建中國史前史的思考」, 중국사회고고연구소 편, 『中國考古學論叢』,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建所40年記念, 北京: 科學出版社, 10쪽

68) L. Folkenhausen, 1995, “The regionalist paradigm in Chinese archaeology,” In P. L. Kohl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8~217

69) 蘇秉琦, 1987, 「做考古學新時期的開拓者」, 蘇秉琦 編, 『考古學文化論集』 1, 北京: 文物出版社, 298쪽

V. 지역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고고학

1_ 관점의 전환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으로부터 시작된 계통론적인 연구는 지금의 특정 민족, 그리고 그 문화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의 물질자료의 분포와 관련시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해방 이후 남북한 학계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분석했던 이유는 민족사의 복원을 위해서였다. 특히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존재를 靑銅遺物群 副葬墓와 같은 물질자료를 통해 확인하려 했지만 고조선과 관련된 초기국가의 중심지나 그 범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체계에 대해서도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 고고학계에서 내놓은 族屬論도 고고학적 문화에 대한 소박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국가주의의 입장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선사시대로부터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서 확인되는 모든 문화와 종족의 역사가 하나의 中國 國家史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중국 동북지방 고고학 연구에서는 같은 자료를 놓고 연구자 집단에 따라 그 주장하는 바가 크게 엇갈리지만 고고학 자료 해석의 전제는 이상할 정도로 유사하다. 연구자 집단에 따라 民族主義, 혹은 國家主義 입장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을 펴고는 있으나, 특정 유물군의 분포를 고고학적 문화 혹은 유형이라 상정하고 그 분포 영역이 당시 특정 종족의 지리적 분포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전제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신고고학의 등장 이후 고고학의 사고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 문화영역이라 정의되었던 공통된 문화요소가 일정 시기 동안 확산된 지리적 영역에 대해서도 지역적 상호작용의 권역과 같은 개념으로 부르면서 그러한 문화적 공통성에 대해서는 그 안에 분포하는 여러 사회적 실체들의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관점에 서게 되었다. 특정한 유물이나 스타일이 광역에 걸쳐 분포하거나 값어치 있는 물품이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분포를 보이

는 양상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영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민족사나 국가사의 복원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동북아 일대의 선사 문화를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과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_ 相互作用의 圏域, 그리고 地域 間 相互作用

고고학에서는 사회나 지역단위 내부의 변이와 과정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사회집단, 혹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어떤 유물이나 스타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메커니즘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주나 전파의 문제를 거론해 왔지만 점차 교역(trade), 교환(exchange),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공간적인 범위에 따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나 문화적 권역을 상정하고 그 안에 분포하는 사회적 단위들 사이의 관계와 과정을 파악하려는 접근이 있다. 둘째는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고 사회문화적인 양상도 차별화된 두 지역 사이의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대개 균질한 사회단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루어지게 되고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상호작용은 상호 차별화된 정치사회적 실체들 사이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1) 상호작용의 권역

상호작용은 북미 고고학에서 처음으로 활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셉 콜드웰은 상당히 넓은 지리적 범위에 분포하는 여러 사회와 문화들을 포괄하여 '상

호작용의 권역'이라고 이름 붙였다.⁷⁰⁾ 북미 동부에 확산된 광범위한 문화적 공통성을 종전까지 호프웰리안 문명이나 문화라고 불렀지만 콜드웰은 '호프웰리안 상호작용의 권역(Hopewellian interaction sphere)'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그 안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회집단이나 문화들을 전제하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말하자면 특정한 同一文化要素들이 퍼져 있는 문화영역을 정의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안의 구체적인 집단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해 보려고 이러한 개념을 제안한 것인데 흥미롭게도 콜드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상호작용의 권역이란 개념은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될 수 있지만 문화의 변동이 문명으로 나아간 경우는 예외이다."⁷¹⁾

2)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

미국 남서부 고고학에서 통용되는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regional interaction system)라는 개념도 실은 문화권(cultural area)이란 개념을 대체하여 채용되었다.⁷²⁾ 전통적으로 미국 남서부지역의 고고학자들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권역이라는 의미로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미리 전제해 두고 있는 것이다. 과정주의 고고학이 제안한 문화에 대한 체계이론적 관점이 널리 보급되면서 1979년 데이비드 윌콕

70) J. R. Caldwell, 1964, "Interaction Spheres in Prehistory," In J. R. Caldwell and R. L. Hall (eds.), *Hopewellian Studies*, Illinois State Museum Scientific Papers Vol. 12, pp. 135~156

71) J. R. Caldwell, 1964, 앞의 글, p. 136

72) J. E. Neitzel, 2000, "What Is a Regional System? Issues of Scale and Interaction in the Prehistoric Southwest," In M. Hegmon (ed.), *The Archaeology of Regional Interaction: Religion, Warfare, and Exchange across the American Southwest and Beyond*, Boulder: The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p. 25

스는 호호캠 문화권을 ‘호호캠 지역체계(Hohokam regional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부르게 된다.⁷³⁾ 종전까지 문화적 동질성, 혹은 동일요소가 광범한 영역에 분포하는 현상 그 자체만을 중시해 왔지만 월콕스의 제안은 그 이면에 있는 상사성과 상이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체계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시시켰던 것이다. 일정 지역의 문화적 양상과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의 지역단위, 혹은 사회단위들이 분포하는 지역체계를 상정하고 그들 사이의 종교·이념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과 그 과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북미 고고학자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는 일정 지역, 혹은 等質的인 지역집단이 분포하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정의했던 규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일정 지역 안에서 공간적, 혹은 사회적 단위를 발견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문화적 양상과 그 변동을 설명하려 했고,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상호작용의 권역이나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와 같은 것이었다. 유럽 후기 선사시대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 사회문화변동을 지역집단(local group)들과 지역전통(regional tradition)들의 중층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던 연구가 있다.⁷⁴⁾ 이 연구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문화가 전승되어 온 일정 권역을 지역전통이라고 불렀으며 만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보급되면 그 안의 지역집단들을 통해 빠르게 공유된다고 보았다.⁷⁵⁾ 지역의 사회문화체계의 변동을 지역적인 다이내믹이라고 하면서 이를 지역전통과 그 안의 지역집단들이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자 지역

73) D. R. Wilcox, 1979, "Hohokam Regional System," In G. E. Rice, et al. (eds.), *An Archaeological Test of Sites in the Gila Butte-Santan Region*, Anthropological Research Paper No. 18, Tempe: Arizona State University, pp. 77~116

74) K. Kristiansen, 1982, "The Formation of Tribal System in later European Prehistory: Northern Europe, 4000-500 BC," In C. Renfrew, M. J. Rowlands, and B. A. Segraves (eds.), *Theory and Explanation in Archaeology, Southampton Conference*, London: Duckworth, pp. 241~280

75) K. Kristiansen, 1982, 앞의 글, p. 61

체계(regional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크리스찬센은 지역전통 안의 여러 엘리트들이 地域 間에 이루어지는 교환 시스템을 통해 공통되는 위 제품들을 분배하고 소유함으로써 지역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⁶⁾

3) 대등 정치체의 상호작용

유럽의 선사시대의 자료를 통해 처음 제안된 ‘對等 政治體의 相互作用(peer-polity interaction)⁷⁷⁾도 북미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한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와 유사한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이 아닐까 한다. 다만 여기 대등 정치체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단위로서 상호 경계를 맞대고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화적 전통, 특히 종족정체성이라든가 신앙체계 등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실체들을 말한다. 특히 이들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정치·지리적 환경이 이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등 정치체들은 물품과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이따금 전쟁도 벌이게 되며 기술혁신이나 의례 등을 경쟁적으로 모방 수용하기도 하고, 상징체계에 예술이 개발되면 서로 받아들이면서 발전시킨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대등 정치체들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비슷한 사회변동의 궤적을 밟아가게 된다.

사실 렌프류가 ‘대등 정치체’란 개념을 제안한 까닭도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의 규모가 비슷하고 신앙과 이념, 종족정체성과 같은 것을 공유한 정치체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확인했기⁷⁸⁾ 때문이다. 그리스 반도의 정치체들이 그러한 개념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호호감의 사회

76) K. Kristiansen, 1998, *Europe before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73

77) C. Renfrew, 1986, “Introduction: Peer Polity Interaction and Socio-Political Change,” In C. Renfrew and J. Cherry (ed.), *Peer Polity Interaction and Socio-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8

78) C. Renfrew, 1986, 위의 글, pp. 7~8

단위들이나⁷⁹⁾ 한국의 초기국가 이전의 신라·가야 정치체들의⁸⁰⁾ 성장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4) 위세품의 교환

위세품(*prestige goods*)은 사회적으로 값어치가 인정되는 물품이다. 인류학과 고고학에서는 위세품의 사용과 소유, 그리고 교환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리더들이 권력과 위신, 명성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들은 위세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개입하고 소유와 교환을 제한함으로써 위세품을 더욱 값어치 있게 한다. 위세품의 교환에 관한 논의는 구조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이 시작하였다. 원래 구조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은 위세품이 정치 엘리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에코롬은 친족집단의 연장자들과 다른 개인들에게 유통되어 의례의 수행, 특히 통과의례에 사용됨으로써 경쟁적인 친족들 사이의 서열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위세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⁸¹⁾

이론적인 모델로서 위세품 교환체계를 보면 정치지도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교환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친족의 연장자가 아랫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물품이나 식량을 생산하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출생이나 결혼과 같은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베풀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쟁적인 친족들 사이에 어떤 친족 지도자가 권력을 획득하여 정치 엘리트로 나설 때를 상정해

79) R. H. McGuire, 1991, "On the Outside Looking in: The Concept of Periphery in Hohokam Archaeology," In G. Gumerman (ed.), *Exploring the Hohokam*,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 347~379

80) 權鶴洙, 1994, 「加耶諸國의 相互關係와 聯盟構造」, 『韓國考古學報』 31, 137~162 쪽;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 69~209 쪽; 禹炳喆·金玟撤, 2009, 「궐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 정치체의 상호작용」, 『韓國上古史學報』 65, 75~86쪽

81) K. Ekholm, 1978, "External Exchange and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frica Social System," In J. Friedman and M. J. Rowlands (eds.), *The Evolution of Political System*, London: Duckworth, p. 119

볼 수 있다. 이때 막 등장한 정치 엘리트는 위세품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다른 친족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교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그들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으려 하게 될 것이다.

서부 아프리카의 민족지 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프랑스 마르크시스트 인류학자들이 친족 연장자의 권력 획득과 유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했던 위세품 교환모델⁸²⁾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철기시대 중부 유럽의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에 응용되었다.⁸³⁾ 할슈타트 D기의 독일 남서부지역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려 했던 프랑켄슈타인과 롤랜즈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발전은 거시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시간·공간적 단위로 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독일 서남부 철기시대 사회는 구조적인 전제조건으로 주어진 위세품 교환체계 안에서 지역 정치엘리트들이 노예나 자원 등을 교역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위세품을 입수하여 통합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공간적, 경제적 틀은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춘 사회의 주변에 분포하는 지역집단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구조적인 전제가 된다고 보았던 것⁸⁴⁾이다.

한국에서도 秦漢제국의 성립과 그 주변에 놓인 韓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樂浪-斯盧國-辰韓의 巨帥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위세품 교환체계에 대한 논의가⁸⁵⁾ 있었다. 4세기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자기와 같은 물품을 제공받아

82) G. Dupré, and P.-P. Rey, 1973, "Reflection and Pertinence of the Theory of the History of Exchange," *Economy and Society* 2, pp. 131~163; C. Meillassoux, 1981, *Maidens, Meals, and Mon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 J. Friedman and M. J. Rowlands, 1978, "Notes towards an epigenetic model of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In J. Friedman and M. J. Rowlands (eds.), *The Evolution of Political System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 201~276; S. Frankenstein and M. J. Rowlands, 1978, "The Internal Structure and Regional Context of Early Iron Age Society In South-Western Germany," *London University Institute of Archaeology Bulletin* 15, pp. 73~112

84) S. Frankenstein and M. J. Rowlands, 1978, 위의 글, p. 109

85)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서울: 一潮閣, 173~192쪽

주변 지역집단의 수장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의견도⁸⁶⁾ 백제의 초기국가 형성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깊은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주장은 5~6세기 경 신라의 위세품 분배에 대해 “金工品은 한 有力集團-慶州-이 自己와 聯盟 關係를 맺고 있는 他單位集團-東萊·昌寧-에게 聯盟의 標識로 분배한 것” 이라고 했던 정의에서⁸⁷⁾ 찾을 수 있다. 신라의 초보적 중앙집권화는 5세기 초 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금공품 제작의 기술적 차이가 지적되면서 물품 의 직접 분배에 따른 사회적 빚(social debt)에 의해서가 아닌 방식, 이를테면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과 위계의 구조가 유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다.⁸⁸⁾

5) 중심지와 주변

위세품 교환체계의 모델을 유럽 선사시대 사회변동에 적용했던 설명에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공간적인 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철기시대 중부 유럽의 경우 어떤 국지적인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려 할 때 그것을 지역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사회는 중심지와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던 사고의 원류는 월러스틴이 제공한 세계체계론의 관점⁸⁹⁾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월러스틴이 근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세계 체계론을 선사시대의 교역관계의 설명에 처음 적용했던 이는 슈네이더이다. 그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롯한 문명 중심지와 그 주변 사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국적인 사치품들의 교역관계에 주목하고 그 관계망을 ‘선자본주의

86) 權五榮, 1988, 「4世紀 百濟의 地方統制 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3~28쪽

87) 崔鍾圭, 1983, 「中期 古墳 性格에 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7, 23쪽

88) 朴普鉉, 1995,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9) I. Wallerstein, 1974,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 of Capitalist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pre-capitalist) 세계체계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심지에서는 값어치 있는 금속류를 축적하는 한편 완제품을 수출하고, 이에 비해 주변 사회들은 (노예라든가) 금속원료를 내놓는 대신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 선자본주의 세계체계라고 가설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⁹⁰⁾

이후 세계체계론의 관점은 제 지역 고고학 연구의 틀로 확산되어 서남아시아와 그 주변,⁹¹⁾ 미국 남서부,⁹²⁾ 중남미지역⁹³⁾ 등의 자료에 적용되었으며 선자본주의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모델로 응용되었다. 고대 세계와 근대 경제의 차이, 교통과 통신수단의 수준차가 지적되면서도⁹⁴⁾ 세계체계론적인 관점이 고고학 자료의 해석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설명모델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일정 지역에 문명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주변의 사회와는 발달의 수준차가 분명한 역사적 맥락에서 문명과 주변의 地域 間 相互作用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회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문명 중심지도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평가해 보는데 세계체계론은 아주 적절한 설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세계체계론의 관점은 광역에 걸친 지역 간 상호작용의 모델을 축으로 기존의 사회변동의 이론들, 예컨대 체계이론이며, 교역이론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⁹⁵⁾

90) J. Schneider, 1977, “Was There a Pre-Capitalist World-System?” *Peasant Studies* 6, p. 25

91) P. L. Kohl, 1978, “The balance of trade in Southwestern Asia in the Mid-Third Millenium BC,” *Current Anthropology* 19, pp. 463~475

92) S. Upham, 1982, *Politics and Power*, New York: Academic Press

93) R. Blanton and G. Feinman, 1984, “The Mesoamerican World System,” *American Anthropologist* 86, pp. 673~682

94) P. L. Kohl, 1987, “The Ancient Economy, Transferable Technologies and the Bronze Age World-System: a View from the Northeastern Frontier of Ancient Near East,” In M. J. Rowlands, M. Larsen, and K. Kristiansen (eds.), *Centre and Periphery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1

95) E. M. Shortman and P. A. Urban, 1987, “Modelling Interregional Interaction

왈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은 근대 세계경제의 형성을 다룬 것이고 고고학적 적용에서는 상당한 변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계체계라는 용어에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중심지/주변모델(core/periphery model)’로 부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⁹⁶⁾ 물론 고고학에서 중심지/주변의 모델을 적용하면서 왈러스틴의 여러 개념과 관점들을 참고하겠지만 선자본주의 사회의 상호작용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나 식량의 교역과 같은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역시 위세품과 같은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단위를 설정하는데도 근대세계의 사회적 실체들과는 달리 종족집단이나 문화지역과 같은 공간적인 단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⁹⁷⁾

필자도 동북아 제 지역의 사회변동도 중원에 청동기 국가사회가 성립하면서 문명의 중심지와 주변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바 있다. 동북아 일대에서 중심지와 주변의 지역 간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은 時期와 地域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해 갔다. 중원지역에 최초의 문명이 성립한 이후 문명의 영역은 동북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문명과 주변사회의 권역, 그리고 그 경계지대도 동북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전통적으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지역은 문화적·민족적 혹은 민족사적 계통 관계로 파악해 왔지만 필자는 세계체계론적 관점에서 중심지와 주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

in Prehistory,” In M. B. Schiffer (ed.),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11, New York: Academic Press, pp. 1~35

96) R. S. Santley and R. T. Alexander,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Core-Periphery systems, In E. M. Shortman and P. A. Urban (eds.), *Resources, Power,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New York: Plenum, pp. 23~49; R. M. Rosenswig, 2010, *The Beginnings of Mesoamerican Civilization: inter-regional Interaction and the Olme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5

97) R. M. Rosenswig, 2010, 위의 글, pp. 15~18; J. Chapman and P. Dolukhanov, 1993, “Cultural Transformations and Interactions in Eastern Europe: Theory and Terminology,” In J. Chapman and P. Dolukhanov (eds.), *Cultural Transformations and Interactions in Eastern Europe*, Aldershot: Avebury, pp. 14~21

로 陶와 鐵 技術革新과 理念體系의 확산과 수용이 이루어지고 위세품과 노동력 및 철원료의 교환체계가 성립되기에 이른다고 설명한 바 있다.⁹⁸⁾

3_ 족장묘의 전개로 본 상호작용의 체계와 변동

그동안 민족사의 범주를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로, 공간적으로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관점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에 광범하게 나타나는 물질 양상을 地域 內, 그리고 地域 間 相互作用의 과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제 지역에서 集約的 農耕 취락의 등장, 巨石記念物의 축조, 個人化된 靑銅遺物群 副葬墓의 시작, 初期國家의 形成과 같이 중요한 변동의 양상과 시점에 주목해 본다면 왜 그러한 양상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특정한 민족, 혹은 국가 중심의 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제 지역의 상이한 사회, 경제, 이념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변동이 진행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기원전 1000年期 前·中半에 걸쳐 요동과 한반도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양상들 중에 가장 현저하고 특징적이며, 그래서 주목해야 할 양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대규모로 축조되기 시작하는 文化的 景觀 즉 記念物이고, 둘째로는 특징적인 어떤 물질, 즉 琵琶形銅劍과 같은 유물이 사회집단이나 문화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사실이다.⁹⁹⁾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물질양상은 고조선이나 위만조선과 같은 민족사의 실제들과 관련되어 논의된 적이 있다.¹⁰⁰⁾ 사실 기념물의 축조는 물질적인

98) 李盛周, 1996, 앞의 글, 55~65쪽

99) 李盛周, 2007, 앞의 글, 19~22쪽

100) 석광준, 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사회과학원, 서울: 도서출판 중심, 319~354쪽; 박진욱, 1987, 앞의 글, 5~92쪽; 황기덕, 1987, 앞의 글, 93~150쪽;

양상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문화적 경관이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며 청동유물군의 분포는 당시까지는 없었던 인간집단들 사이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그것을 통해 배포되었던 것이다.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집약적인 농경방식과 농촌경관이 발달하면서 대평리 유적이나 송국리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도 등장하고 일정 지역 내의 취락들 사이에 위계나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대규모와 소규모 취락, 값어치 있는 물품이 집중되는 취락과 그렇지 못한 취락이 서열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잘 입증되지는 않았다. 다만 특정 유물의 생산이 이루어진 취락, 방어시설을 가진 취락, 의례가 수행되는 취락 등 취락들 사이의 기능적인 분화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¹⁾ 이 중기에 접어들면서 기념물적인 문화경관이 축조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석묘, 환호, 신전이나 집회소로 보이는 대형건물 등이다. 사회의 변동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조직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표현하는 방법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화의 한 방법이 문화경관의 축조라고 설명되기도 한다.¹⁰²⁾

巨石墓는 거대한 외관의 북방식지석묘, 松菊里 석관묘와 같이 탁월한 입지의 석관묘, 그리고 대규모로 配列된 墓域式支石墓 등을 포함한다. 특히 묘역식지석묘와 같은 경우 수백 년 동안 추가 축조되면서 의례의 중심지가 되고 당시로서는 가장 커다란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¹⁰³⁾ 지석묘의 축조가 영역의 표지로 이해한 바도 있으나 생산력이 높은 토지의 확보경쟁을 위한 이념적인 기제에서 축조되었다는 설명도 있어¹⁰⁴⁾ 족장사회 역동성 속에서 축조된

송호정, 2003, 『韓國 古代史 속의 古朝鮮史』, 서울: 푸른역사, 274~285쪽

101)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1~24쪽; 李亨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147~254쪽

102) T, K, Earle, 2001, "Institutionalization of Chiefdoms: Why Landscapes are Built," In J. Haas (ed.), *From Leaders to Rulers*, New York: Kluwer, p. 107

103) 李盛周, 2007, 앞의 글, 98쪽

104) 金範哲, 2010, 「湖西地方 지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68,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한국의 거석기념물들은 대다수 분묘 유구인데, 서유럽의 거석묘처럼 일정 지역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묘실의 형태로 축조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로 밀집된 지석묘군의 경우, 수십, 수백 미터의 길이와 너비로 연결된 묘역식지석묘는 장기간의 공동체 의례로 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묘역식지석묘 안에는 덕천리1호 지석묘나 김해 구산동 지석묘처럼 거대한 규모의 묘역을 가진 것이나 다단토광으로 묘광의 깊이와 너비가 엄청난 매장시설을 가진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규모의 묘역식지석묘는 무언가 차별화된 권력을 공동체의 의례를 통해 표현한 것이며 공동체 리더의 존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¹⁰⁵⁾ 무문토기 중기에 등장하는 거석묘 중에는 늦은 시기로 갈수록 개인의 권력을 묘역이나 매장시설 혹은 상석의 규모로 과시하는 개인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동북아의 세 지역, 遼西, 遼東, 그리고 韓國南部에서는 농경사회가 진전되면서 공통적으로 巨石墓群과 中層 大墓로 인정될 수 있는 기념물이 축조된다. 그러나 각각의 지역에서는 그 축조 시점에서 커다란 시차를 보인다. 요서지방 신석기 만기에 해당하는 紅山文化期の 積石墓와 個人 大墓에 대한 수륜보정 연대를 참고하면 牛河梁 적석묘에서는 BC 3360~2920, BC 3779~3517년이 그리고 女神廟에서는 수륜보정연대 5580±100 BP가 나왔다.¹⁰⁶⁾ 연대를 비교하면 요서지역이 한국 남부보다 최소 2500년, 요동보다는 2000년 가깝게 이른 셈이다. 이러한 연대차는 각 지역이 집약적 농경 취락의 형성에서 그만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요동지방에서는 個別墓의 규모는 그리 대형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기

5~24쪽.

- 105) 李相吉, 2006,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61~85쪽; 金承玉,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그 변천」, 한국고고학회 편,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서울: 사회평론, 61~139쪽; 윤호필, 2009, 「靑銅器時代 墓域式支石墓에 관한 研究」, 『慶南研究』 1, 1~20쪽
- 106) 徐子峰, 2004, 「牛河梁紅山文化積石塚探析」, 『紅山文化研究』, 2004年紅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66쪽

념물적인 적석묘가 축조된다. 遼東半島의 경우 雙砬子 上層文化 혹은 羊頭窪 文化期에 적석묘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于家 砬頭積石墓와 같이 소형 매장 시설의 묘역을 行列로 연결시켜 형성된 적석묘¹⁰⁷⁾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적석묘의 변천에서 보면 늦은 형식에 속한다.¹⁰⁸⁾ 요동반도에서는 이러한 적석묘들이 個人 大墓로 발전하는 양상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후대 요동지역의 連接墓域으로 형성된 적석총 중에는 거대화된 적석분구 묘로 발전한 것이 있는데 지역집단 내부의 상위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내에서 불거져 나온 개인묘의 존재는 확실하지 않으나 崗上墓나 樓上墓처럼 집단묘로서는 대형화된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은 개별 유구들 중에는 비파형동검유물군이 부장되는 등 차별화의 양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요동의 기념물적인 적석묘가 시작된 시기는 雙砬子3期, 혹은 羊頭窪文化期로 그 시기는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치로 B.C. 1300~1200년 정도에 해당된다.

농경사회의 진전과 함께 기념물적인 거석묘가 동북아 세 지역에서는 2000년 혹은 25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현한다. 물론 이러한 물질적 양상의 유사성은 계통론이나 이주-전파론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민족(문화)의 계보를 따지는 일은 더욱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화적 경관이 출현하는 과정의 지역적 비교는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과제가 된다. 遼西, 遼東, 韓國南部에서는 거석묘가 서로 시차를 두고 출현하며 발전방향이나 전개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250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요서와 한국 남부에서는 거석묘가 大型 祭壇이나 깊은 매장시설을 갖추면서 탁월한 개인묘로 발전하는 양상에 공통성을 보인다. 하지만 양 지역의 개인묘는 연대 차이뿐만 아니라 부장품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족장권력의 성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권력의 본질이 다름에 따라 그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

107) 許明綱·劉俊勇, 1983, 「大連于家砬頭積石墓地」, 『文物』 1983-9, 64~80쪽

108) 宮本一夫, 1995, 「遼寧省大連市金州區王山頭積石塚考古測量調査」, 秋山進午編, 『東北アジアの考古學研究』, 東京: 同朋舎, 64~80쪽

저야 한다고 본다.

한편 紅山文化의 무덤에서는 현실과 상상 속의 동물을 정교하게 형상화한 玉器가 대표적인 부장품이다. 이에 비해 요동과 한국 남부의 족장 개인묘에서는 당시 동북아 제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던 비파형동검과 함께 마제석촉, 마제석검이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다. 홍산문화기의 부장품이 족장권력의 이념적·종교적 기반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다면, 한국 남부의 족장권력은 전사로서의 권위에 기초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 같다. 여기서 고고학적 과제는 물질적 양상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계보나 종족의 범위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無文土器 中期 末의 個人 巨石墓는 후기의 細形銅劍遺物群 副葬墓로 발전한다. 한국 남부지방에서는 무문토기 후기에 개인 족장묘의 부장유물세트로 발달된 靑銅遺物群이 등장하지만 遼東지역에서는 한 세기 정도 일찍 鄭家窪子 6512호묘에서 확인된다. 이에 비해 요서지역에서는 기원전 10~9세기로 편년되는 小黒石溝 大墓에서 다양한 북방계 청동유물군이 중원계 청동의례기와 함께 출토된다. 요서지역에서 한국 전역까지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성질의 청동유물군이 성립한다. 이러한 다양한 청동유물군의 지리적·시기적 분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청동유물의 다양성은 제 지역·시기에 따른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평가해야만 한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민족사의 범주나 계통론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서 遼西에서 한반도에 걸치는 청동유물군의 다양성을 지역·시기에 따라 변별하기보다, 비파형동검문화권과 같은 개념으로 공통성부터 먼저 요약하고자 했다. 비파형동검이 요서에서 한국 남부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틀림없으나 이를 비파형동검문화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청동유물군의 시간·공간적 전개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¹⁰⁹⁾ 이를테면 요서의 초기 비파형동검은 위세품 집중형의 개인묘에서 섞여 나오지만 요동과 한국 남부에

109) 吳江原, 2006, 앞의 글, 516쪽

〈표 1〉 동북아지역 청동유물군의 지역적 전개

BC	단계	요서	요동	한국 남부
10세기	제 I 단계	십이대영자식비파형동검 청동 무기류와 공구류 小黒石溝무덤이 대표 요서 서북부에 분포		
9세기				
8세기	제 II 단계	무기류, 마구류, 청동위세품 포함 다뉴경 포함 요서 전 지역에서 확인		
7세기	제 III 단계	T字形 청동제검병 비파형동모 요령 전 지역으로 확산	요동 북부에 이도하자식 비파형동검 요동 남단에 거석묘와 강상식 비파형동검	송국리유형 거석묘군 형성 비파형동검 유입 무기형석제품 우세
6세기	제 IV 단계	후기북방계청동유물군 남동구식 청동제손잡이 십이대영자형 다뉴경 중세형동모 출현	정가와자식 청동유물군 요중지방 다뉴경, 남동구형 검병 요남지방에 강상형 동부	
5세기				
4세기	제 V-1단계	燕文化의 移植 철기 동반되지 않음	윤가촌유형 燕文化의 移植 제 V-2단계부터 철기유입	괴정동-남성리유형 세형동검유물군
3세기	제 V-2단계			

※ 별색 부분은 청동유물 위세품을 부장한 個人化 族長墓의 단계

서는 거석묘에서 소량의 석제품과 함께 출토된다. 이럴 때 사회적 맥락이 전혀 다른 지역을 포괄하여 특정 유물요소의 분포만을 가지고 종족이나 정치세력의 영역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전혀 무의미한 공간설정이 될 것이다. 요령지역의 청동유물군의 시·공간적 전개를 제 I~V 단계로 파악한 오강원의 해석을 대입시켜 동북아 청동유물군의 전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서 북부지역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유물군 성립으로 중원 청동기문화와 북방 청동기문화 사이에 경계지대가 형성되었다. 요서 북부지역에 사회의 위계화와 함께 개인화된 족장권력이 출현하면서 족장 개인묘에서 확인되는 북방계 청동유물군이 형성되고 하북지역으로는 중원 청동기문화가 확산되었다. 북방 유라시아문화의 東端지역과 중원 청동기문화지역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결과물들은 하가점상층문화기 청동유물군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 요동과 한국 남부의 족장사회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청동유물은 요서지역의 족장사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이며 양 지역 사이의 이념적인 교류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대의 상호작용을 거쳐 북방계 청동유물군을 중심으로 한 족장 개인묘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요동과 한국 남부에도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서지역의 청동유물군이 단편적이든 전반적이든 요동과 한반도 남부까지 확산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첫째, 각 지역 내 족장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과 둘째, 1차 주변인 遼西와 2차·3차 주변인 遼東 및 한반도 남부 사이의 원거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는 연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중원문명의 확장을 통해 서서히 요동이 1차 주변이 되고 그 경계지대가 계속 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燕의 진출과 이후 漢帝國의 군현설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燕의 진출은 중심지역과 1차 주변의 경계 너머로 거점을 설치하고 거점과 토착 수장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¹¹⁰⁾ 그러나 전통적으로 청동유물에 표현되었던 이데올로기는 많이 쇠퇴했고, 燕의 일상물품이 위세품으로 부상되며, 연의 기술혁신이 보급되는데¹¹¹⁾ 이와 같은 전이의 양상은 시공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10) 李盛周, 1996, 앞의 글, 60쪽

111)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存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관계」, 『韓國上古史學報』 71, 5~32쪽

VI. 맺음말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에서 최근 수십 년간 고고학 조사를 통한 정보의 축적은 엄청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과제가 다양화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동북아의 고고학에서도 농경사회의 등장과 계급사회 형성, 그리고 복합사회로의 과정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크며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해석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변동에 대한 논의에서 일정 지역의 사회집단들 사이의, 혹은 광역에 걸친 지역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동북아 일원에서 광역에 걸친 물질문화의 분포양상을 분석할 때, 이 지역 고고학자, 혹은 역사학자의 사고를 엮어매고 있는 듯한 선입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민족의 범주나 국가 영토에 대한 의식이 아닐까 한다.

예컨대 남북한의 연구자들은 지식묘, 비파형동검, 미송리형토기, 세형동검유물군 등의 분포를 검토할 때 고대 한국 민족의 영역, 혹은 고조선의 범위 등을 의식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었다. 중국 학계에서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의 입장에서 과거 지역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지금의 중국 영토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진행된 과정으로 엮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래 동북아 고고학의 연구 현황을 짚어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국경선 안의 역사를 엮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사의 범주 때문에 지역 내, 지역 간 사회문화 변동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우리 학계에서는 기원전 8~6세기의 요령지방의 청동기유물군의 출토 유적과 유물은 고조선과 관련된 '王國', 혹은 '國'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요동과 서북한의 세형동검유물군의 분포를 통해 燕과 군사적으로 대적했던 朝鮮侯가 집권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남한 학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필자는 기원전 1천년기의 동북아 지역 청동유물군이 출토되는 유적과 그 유물을 가지고 고조선이란 국가 수준의 조직체를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만 우리

는 물질문화의 분포영역을 고조선이라는 실체와 대입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 고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간과해 왔거나, 아니면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회피해 왔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청동기시대의 물질양상을 해석해온 민족, 국가 중심주의의 관념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 대안으로서 지역 간 상호작용의 관점과 이를 토대로 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문헌

- 姜仁旭,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韓國考古學報』 56
- 강인욱, 2009, 「기원전 13-9세기 카라속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 『東北亞 青銅器文化 展開와 韓半島』, 제19회 호서고고학회학술대회발표요지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權五榮, 1988, 「4世紀 百濟의 地方統制 方式 一例」, 서울大學校國史學科 編, 『韓國史論』 18
- 權鶴洙, 1994, 「加耶諸國의 相互關係와 聯盟構造」, 『韓國考古學報』 31
- 金範哲, 2010, 「湖西地方 지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68
- 金承玉, 2007, 「본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그 변천」, 한국고고학회 편,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서울: 사회평론
- 金瑛洙 編, 1994, 『古代東北아시아의 民族과 文化』, 서울: 驪江出版社
- 金元龍, 1961, 「十二臺營子の 青銅短劍墓」, 『歷史學報』 16
- 金元龍, 1976, 「沈陽鄭家窪子 青銅器時代墓와 副葬品」, 『東洋學』 6
- 金貞培, 1979, 「韓國青銅器文化의 起源에 관한 小考」, 『古文化』 17
- 金廷鶴, 1966, 「考古學으로 본 韓國民族」, 『白山學報』 1
- 金廷鶴 編, 1972,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
- 朴普鉉, 1995,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양진 외, 2008,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76,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 서영수 외, 2009, 『고조선사 연구 100년』, 서울: 학연문화사
- 석광준, 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사회과학원, 서울: 도서출판 중심
- 宋鎬畧, 1991, 「遼東地域 青銅劍文化와 美松里型土器에 관한 考察」, 『韓國史論』 24
- 송호정, 2003, 『韓國 古代史 속의 古朝鮮史』, 서울: 푸른역사
- 송호정, 2003,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40
- 송호정 외, 2008,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方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 吳江原,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서울: 청계
-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 尹乃鉉, 1985, 「古朝鮮의 社會性格」,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서울: 一潮閣
- 윤호필, 2009, 「青銅器時代 墓域式支石墓에 관한 研究」, 『慶南研究』 1
- 李康承, 1979, 「遼寧地方의 青銅器文化」, 『韓國考古學報』 6
- 李相吉, 2006,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李盛周, 1995, 「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 『古文化』 47
- 李盛周, 1996, 「青銅器時代 東아시아 世界體系와 韓半島의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23
-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서울: 學研文化社
- 李盛周, 2008, 「型式論과 系統論」,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ol. 1, 서울: 주류성
- 李鍾宣, 1969, 「韓國 石棺墓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1
-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서울: 一潮閣
- 李清圭, 1999, 「東北亞地域의 多紐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 李清圭, 2000, 「國의 形成과 多紐鏡副葬墓」, 『先史와 古代』 14
- 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 이청구 외, 2009, 『요하유역 초기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李亨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 全榮來, 1977, 「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查報告』 7
- 全榮來, 1978, 「韓國青銅器文化의 年代上限問題」, 『全北遺蹟調查報告』 8
- 정백운, 1958, 「해방 후 우리나라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8-4
-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7
- 한국고고학회 편, 2007, 『국가 형성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
- 郭大順, 1993, 「遼河流域 北方青銅器의 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993-1·2

- 靳楓毅, 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中)·(下), 『考古學報』 1983-1, 1983-4, 1987-2
- 蘇秉琦 外,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文物』 1981-5
- 蘇秉琦 編, 1987, 『考古學文化論集』 1, 北京: 文物出版社
- 林滄,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2
- 翟德芳, 1988,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1988-3
- 赤峯學院紅山文化國際學術研究中心, 2004, 『紅山文化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 鳥 恩, 1985, 「殷至周初的北方青銅器」, 『考古學報』 1985-2
- 朱 泓, 2002, 「內蒙古長城地帶的古代種族」, 『邊疆考古研究』 1, 北京: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考古研究所 編, 1993, 『中國考古學論叢』, 北京: 科學出版社
- 許明綱·劉俊勇, 1983, 「大連于家砣頭積石墓地」, 『文物』 1983-9
- 工藤雅樹, 1979, 『研究史·日本人種論』, 東京: 吉川弘文館
- 工藤雅樹, 1987, 「日本人種·民族論」, 『論爭學說 日本の考古學』 I(總論), 東京: 雄山閣
- 東亞考古學會, 1929, 『窺子窩』, 東方考古學叢刊 第一冊, 東亞考古學會
- 東亞考古學會, 1938, 『赤峰紅山後』, 東方考古學叢刊 第六冊, 東亞考古學會
-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東京: 高桐書院
- 梅原末治, 1938, 『古代北方系文物的研究』, 東京: 星野書店
- 濱田耕作, 1939, 『考古學研究』, 東京: 座石寶刊行會
- 西川宏, 1970, 「朝鮮考古學における系統論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7-1
- 松本彦七郎, 1918, 「日本石器時代人類に就て」, 『人類學雜誌』 33-9號
- 水野佑, 1969, 『日本民族の源流』, 東京: 雄山閣
- 清野謙次, 1944, 『日本人種論變遷史』, 東京: 小山書店
- 秋山進午, 1968,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様相」(上)·(中)·(下), 『考古學雜誌』 53, 54
- 秋山進午 編, 『東北アジアの考古學研究』, 東京: 同朋舍
- Asimov, M. S., ed., 1981, *Ethnic Problems of History of Central Asia in the Early Period(second Millennium B.C.)*, Moscow: Nauka
- Blanton, R. and Feinman, G., 1984, "The Mesoamerican World System,"

- American Anthropologist* 86
- Caldwell, J. R. and Hall, R. L., eds., 1964, *Hopewellian Studies*, Illinois State Museum Scientific Papers Vol. 12
- Chang, K-C.,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hapman, J. and Dolukhanov, P., eds., 1993, *Cultural Transformations and Interactions in Eastern Europe*, Aldershot: Avebury
- Childe, V. G.,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 Childe, V. G., 1956, *Piecing Together the Pas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iaz-Andreu, M. and Champion, T., eds., 1996, *The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UCL Press
- Dupré, G. and Rey, P.-P., 1973, "Reflection and Pertinence of the Theory of the History of Exchange," *Economy and Society* 2
- Frankenstein, S. and Rowlands, M. J., 1978, "The Internal Structure and Regional Context of Early Iron Age Society In South-Western Germany," *London University Institute of Archaeology Bulletin* 15
- Friedman, J. and Rowlands, M. J., eds., 1977, *The Evolution of Political System*, London: Duckworth
- Gellner, E., 1988, *State and Society in Soviet Thought*, Oxford: Blackwell
- Graves-Brown, P., Jones, S., and Gamble, C., eds., 1996, *Cultural Identity and Archaeology: The Construction of European Communities*, London: Routledge
- Gumerman, G., ed., 1991, *Exploring the Hohokam*,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Haas, J., ed., 2001, *From Leaders to Rulers*, New York: Kluwer
- Hanks, B. K. and Linduff, K. M., eds., 2009, *Social Complexity in Prehistoric Eurasia: Monuments, Metals, and Mo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gmon, M., ed., 2000, *The Archaeology of Regional Interaction: Religion, Warfare, and Exchange across the American Southwest and Beyond*,

- Boulder: The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Humphrey, C., 1984, "Some recent Developments in Ethnography in the USSR," *Man* 19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Routledge
- Kohl, P. L., 1978, "The balance of trade in Southwestern Asia in the Mid-Third Millenium BC," *Current Anthropology* 19
- Kohl, P. L. and Fawcett, C., eds., 1995,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stiansen, K., 1998, *Europe before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illassoux, C., 1981, *Maidens, Meals, and Mon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frew, C. and Cherry, J., eds., 1986, *Peer Polity Interaction and Socio-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frew, C., Rowlands, M. J., and Segraves, B. A., eds., 1982, *Theory and Explanation in Archaeology, Southampton Conference*, London: Duckworth
- Rice, G. E., Wilcox, D., Rafferty, K., and Schoenwetter, J., eds., 1979, *An Archaeological Test of Sites in the Gila Butte-Santan Region*, Anthropological Research Paper No. 18, Tempe: Arizona State University
- Rosenswig, R. M., 2010, *The Beginnings of Mesoamerican Civilization: inter-regional Interaction and the Olme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wlands, M. J., Larsen, M., and Kristiansen, K., eds., 1987, *Centre and Periphery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eider, J., 1977, Was There a Pre-Capitalist World-System? *Peasant Studies* 6
- Shortman, E. M. and Urban, P. A., eds., 1994 *Resources, Power,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New York: Plenum
- Terrell, J. E., ed., 2001, *Archaeology, Language, and History*, Westport: Bergin & Garvey
- Trigger, B. G., 1989,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pham, S., 1982, *Politics and Power*, New York: Academic Press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 of Capitalist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ABSTRACT]The socio-cultural change of
Northeastern Asia in the interregional perspective

Lee, Sungjoo

It seems very important at the current situation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es critically, which attempt to explain the socio-cultural change on the regions ranging from the northeastern China to Korea and Japan, and to seek an alternative research paradigm in the macroscopic perspective. Although the researchers from three countries of contemporary Northeastern Asia, that is to say, Korea, China and Japan, have attempted to interpret the pre- or ancient culture and to explai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society in these regions respectively, it is also true that they tend to show a big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them according to ethnic and political point of view.

The archaeologist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conceived a regional boundary of Northeastern Asia based upon racial culturalism and tried to sort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ultures on such a massive scale of space with phylogenic idea. Korean archaeologists tend to confirm the Northeaster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r with the consideration of a range of national history rather than of their research areas. Recently the Chinese academics argue the investigation theory on civilization under the premise of 'multinational unified state', and attempts to include various historical entities of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nto its own national history, which tend to provoke severe conflicts and tense.

The current archaeological research on the Manchuria is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interpretation with reference to a phylogenic and national history and political perspective with statism conflict each other.

This research aims at discussing about archaeological perspectives and theoretical premises on the explanation of distribution and change of material culture in the Northeastern Asia in the pre- and historical period.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review the research perspective based upon national history and statism. And I do explore the theoretical framework within which regional interaction was investigated on a massive scale in archaeology and seek an alternative for archaeological research in the Northeastern Asia.

keywords

Northeastern Asia, National history, ethnogenesis, multinational unified state, socio-cultural system, material culture, inter-regional interaction,

허리띠 분배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

이한상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삼국시대 무덤에서는 화려한 장신구나 마구류 등의 金工品이 종종 출토된다. 이러한 금공품은 삼국시대 각국의 지배층 묘역에서 한정적으로 출토되며 무덤 주인공의 사회적 위세를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威勢品(prestige goods)¹⁾이라 부를 만하다. 이 때문에 금공품은 지배층의 등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된 정치적 관계의 양상을 추론하는 데 유효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금공품이 부착된 服飾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은 비단 한국 삼국시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금공품 양식이 성립하는 곳은 중

※ 투고일: 2011년 5월 11일, 심사일: 2011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1) 위세품은 특정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한정된 소재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소재의 다수가 희소성, 내구성, 그리고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금은 등의 귀금속, 귀한 옥석, 상아나 보배조개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원재료 자체가 희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세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교한 직물, 의복의 소재 역시 귀한 물품으로 여겨졌다. 콜린 렌프류·폴반, 이희준 역, 2006, 『현대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362~363쪽

국의 中原지역이며, 그 시기는 春秋戰國時代 이후이다. 아마도 중국의 이 같은 금공품 문화가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로까지 파급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 그 시기는 서기 4~6세기로 볼 수 있다. 이 무렵 동북아시아는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중국 대륙의 경우 5호16국의 혼란기를 거쳐 남북조시대가 시작되었고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삼국시대 각국이 쟁패하였으며, 일본열도에서는 혼란기를 거쳐 近畿의 왜가 중핵으로 성장하였다. 그 와중에서 수많은 국가가 성립하여 쟁패하였고 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각국은 자국의 안위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과의 관계개선과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史書의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자료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각지에서 복식자료가 온전하게 출토되는 사례는 극히 적으며, 금속으로 제작한 복식의 부품만 종종 출토된다. 그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자료는 허리띠에 부착하였던 帶鉤·鉸具·鈔板·腰佩·鉞尾 등이다.²⁾ 초기에는 대구와 교구만 출토되다가 차츰 허리띠의 부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각국 혹은 각 정치체의 경역 내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지만 경역을 벗어나 출토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 호혜적인 교역이나 분배, 정치적 상하관계를 반영하는 賜與의 결과물일 것이다.³⁾

이 글에서는 허리띠를 소재로 고대 동북아시아 정치체 사이에 전개된 교류의 양상을 살펴보려 하며,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금속제 허리띠장식이 새롭게 유행하던 춘추전국시대의 사례이다. 중국의 북방지대에 넓게 분포하였던 북방식 청동기문화의 분포권이 중국 戰國문

2) 허리띠의 버클 부분을 설명할 때는 형태적인 특징에 따라 帶鉤와 鉸具로, 허리띠 중간에 부착한 장식물은 鈔板과 腰佩로, 허리띠의 끝장식은 鉞尾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 밖에 금속제 허리띠장식 전체를 부를 때는 帶金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이 글에서 다루는 허리띠 자료 가운데 중국 중원왕조로부터 전해진 물품의 이입 계기는 다양하다. 사여를 통한 것이 가장 많지만 춘추전국시대의 사례나 진-삼연의 사례는 사여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글 전체에서 설명할 때에는 분배(distribu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화의 확산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 고조선의 境域變遷 연구에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동북아시아 각국 지배층이 중국 중원왕조에서 제작된 대금구를 공유했던 사례이다. 진식대금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등장하였고 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진식대금구가 분배된 시점과 배경에 대하여 추론해 보고자 한다.

II. 북방식 鉸具와 중원식 帶鉤의 분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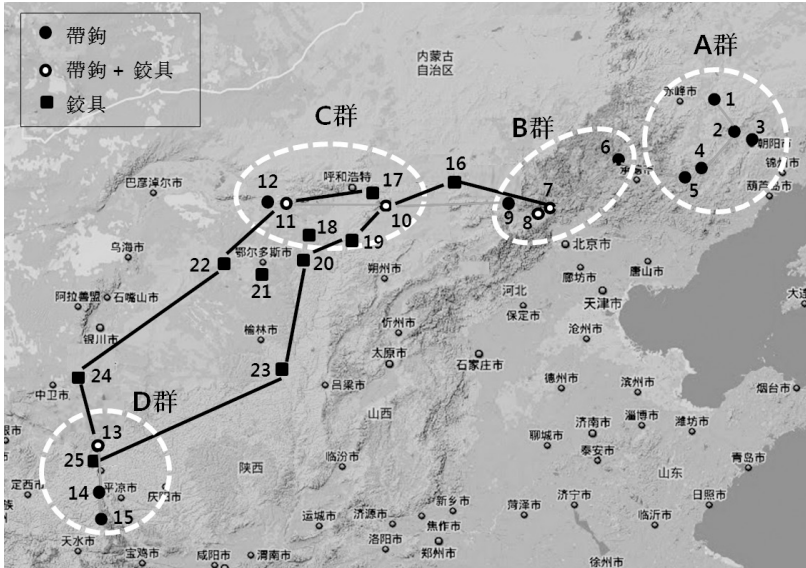
1_ 북방식 鉸具의 분포 패턴

중국의 북방청동기는 중원청동기와 형태적으로 구별되며 다양한 동물문양이 배풀어져 있다. 이 청동기문화의 존재가 학계에 처음 알려졌을 때의 중심 분포권은 내몽고 중남부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청동기를 오르도스청동기라 불려 왔다. 그런데 조사가 진전되면서 이 청동기문화의 분포권이 점차 넓어져 동북쪽으로는 하북성 일대, 서남쪽으로 영하회족자치구와 감숙성 일부지역까지 포괄하게 되었다.⁴⁾

이 청동기문화의 주요 요소 가운데 鉸具⁵⁾가 주목된다. 북방청동기문화의

4) 楊建華, 2004, 『春秋戰國時期中國北方文化帶的形成』, 文物出版社

5) 이 명칭은 아래 논저(宮本一夫, 2000)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帶扣(혹은 環狀帶扣; 豆海鋒·丁利娜, 2009)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帶鉤와 동음이의어인 帶扣 대신에 鳥形鉸具·環狀鉸具를 약칭하여 鉸具라 부르기로 한다.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의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豆海鋒·丁利娜, 2009, 『北方地區東周時期環狀青銅帶扣研究』, 『邊疆考古研究』 6,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



〈도면 1〉 춘추전국시대 鉸具와 帶鉤 분포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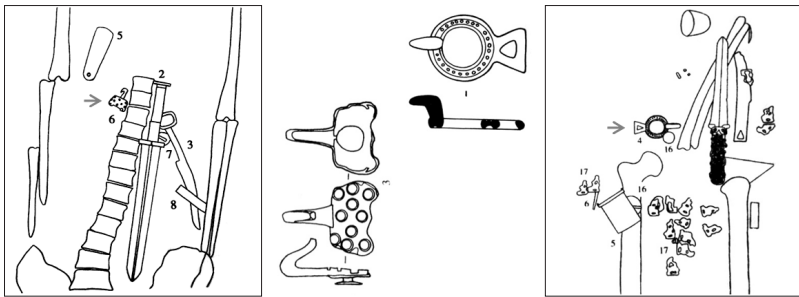
(1. 철장구, 2. 오란보랍격·수천모지, 3. 원대자, 4. 남당구, 5. 오도하자, 6. 이수구문·동영자, 7. 옥황묘, 8. 감자보, 9. 선화전국묘, 10. 모경구, 11. 서원, 12. 포두208, 13. 양랑, 14. 성교향, 15. 마가원, 16. 구리두, 17. 광현요자, 18. 서구반, 19. 옥룡태, 20. 보혜사, 21. 명안목독, 22. 도홍파랍, 23. 장평, 24. 아정촌, 25. 우가장)

교구는 등근 것이 많고 새 모양을 띤 것이 있다. 아울러 동물문을 주요 모티프로 한 화려한 장식품이 공반된다. 교구는 〈도면 1〉에 표기한 것처럼 燕山 일대, 내몽고 중남부와 오르도스고원, 寧夏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근래 중국 학계는 북방청동기문화의 지역색에 주목하여 ‘玉皇廟文化’, ‘毛慶溝文化’, ‘桃紅巴拉文化’, ‘楊郎文化’로 구분하고 있다.⁶⁾ 학자들에 따라 대표유적을 다른 것으로 설정하거나 고고학문화⁷⁾라는 개념에 대신하여 類型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다 세분하기도 한다.⁸⁾

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4, 『中國考古學 兩周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7) 최종규, 2008, 「고고학문화의 실천」, 『고고학탐구』 4, 고고학탐구회
 8) 田廣金·郭素新, 1986, 『鄂爾多斯式青銅器』, 文物出版社; 三宅俊彦, 1999, 『中國

〈도면 1〉의 분포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유적은 옥황묘문화에 속하는 燕慶 玉皇廟,⁹⁾ 懷來 甘子堡¹⁰⁾ 묘지이다. 옥황묘 묘지에서는 모두 400기의 무덤이 발굴되었으며 그 가운데 3기에서 교구가 출토되었다. 옥황묘 묘지의 인골을 분석한 결과 교구 출토 무덤은 모두 남성묘임이 밝혀졌다. 보고자는 춘추 초기에서 중기로 편년하였다.¹¹⁾ 이 묘지에서는 교구보다 대구가 더 많이 출토된다. 〈도면 2〉-우에 제시한 YYM13호묘의 사례처럼 교구는 허리부위에서 여러 점의 장식품과 함께 출토되었다. 감자보 묘지에서는 21기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교구와 대구가 3점씩 출토되었으나 출토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교구는 옥황묘 출토품과 유사한 특징은 갖추었지만, 띠 연결부의 형태는 다소 다르다.¹²⁾

興和 溝里頭유적은 토사 채취 중 발견, 수습 조사된 무덤 1기이며 그곳에서 청동단검, 동제 교구, 동축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교구의 기본형은 둥글다. 조형에 가깝지만 결쇠가 짧고 표면에 4단위의 弧狀 연속무늬¹³⁾가 베풀어



〈도면 2〉 옥황묘 묘지의 대구와 교구의 출토 위치(좌: YYM303호묘, 우: YYM13호묘)

古代北方系青銅器文化研究』, 國學院大學大學院研究叢書 文學研究科6; 烏恩, 2002, 「歐亞大陸草原早期遊牧文化的幾點思考」, 『考古學報』 2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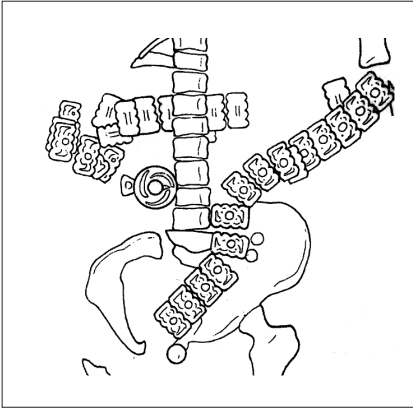
9)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軍都山墓地-玉皇廟』, 文物出版社

10) 賀勇·劉建中, 1993, 「河北懷來甘子堡發現的春秋墓群」, 『文物春秋』 1993-2

11)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앞의 책, 1227~1229쪽

12) 賀勇·劉建中, 1993, 앞의 글, 33쪽의 도13-9

13) 도흥파랍 1호묘 출토 교구 및 원형의 대단금구에 베풀어진 무늬(도5)와 같은 계통이다. 田廣金, 1976, 「桃紅巴拉的匈奴墓」, 『考古學報』 1976-1, 211쪽의 도6-2·6



〈도면 3〉 모경구 묘지의 교구 출토 상태

져 있으며 띠 연결부가 작은 점에서 특색을 볼 수 있다.¹⁴⁾

교구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곳은 내몽고 중남부지역이며 모경구 문화와 도홍파랍문화 분포권에 해당한다. 모경구문화를 대표하는 凉城 毛慶溝 묘지¹⁵⁾에서는 10점의 교구가 출토되었다. 모두 착장된 모습으로 발굴되었으며(도면 3) 동물문·雲紋 飾牌와 조합을 이

룬다. 교구는 후술할 대구에 비하여 이른 시기의 무덤에서 출토되며 전형적인 북방식 청동기와 함께 출토된다. 崞縣窯子¹⁶⁾ 묘지에서는 5점의 교구가 출토되었는데 이 묘지는 모경구의 교구 출토 무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包頭 西園 묘지¹⁷⁾에서는 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다수는 동물 殉牲이 이루어진 장방형의 洞穴墓이다. 4호묘에서는 耳環, 띠 장식품, 골촉 등의 유물과 함께 교구가 출토되었다.¹⁸⁾

도홍파랍문화에 속하는 准格爾旗 西溝畔¹⁹⁾·동 玉隆太(도면 4)²⁰⁾·동 寶亥社,²¹⁾

14) 崔利明, 1994, 「內蒙古興和縣溝里頭匈奴墓」, 『考古』 1994-5, 473쪽, 도2-1

15) 內蒙古文物工作隊, 1986, 「毛慶溝墓地」, 『顎爾多斯式青銅器』, 文物出版社; 宮本一夫, 2000, 앞의 책; 楊建華·洪猛·曹建恩, 2010, 「毛慶溝墓地的兩種墓葬所反映的不同社會結構」, 『邊疆考古研究』 8,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16) 內蒙古文物研究所, 1989, 「凉城崞縣窯子墓地」, 『考古學報』 1989-1

1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處, 1991, 「包頭西園春秋墓地」, 『內蒙古文物考古』 1991-1

18)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處, 1991, 앞의 글,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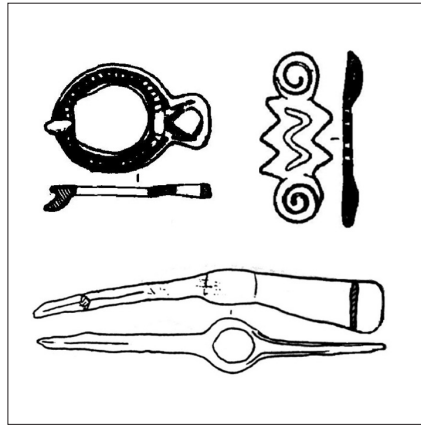
19) 伊克昭盟文物工作站·內蒙古文物工作隊, 1980, 「西溝畔匈奴墓」, 『文物』 1980-7; 田廣金·郭素新, 1980, 「西溝畔匈奴墓反映的諸問題」, 『文物』 1980-7

20) 內蒙古博物館·內蒙古文物工作隊, 1986, 「玉隆太戰國墓」, 『顎爾多斯式青銅器』,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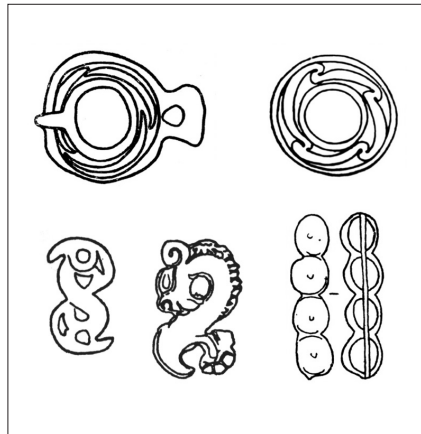
21) 伊克昭盟文物工作站, 1987, 「內蒙古准格爾旗寶亥社發現青銅器」, 『文物』 1987-12

伊金霍洛旗 明安木獨²²⁾·杭錦旗 桃紅巴拉²³⁾ 묘지에서도 1~2점씩의 교구가 출토되었다. 이들 묘지에서 교구는 출토되지 않으며 觸角式 동검·鶴嘴斧·動物紋飾牌 등 전형적인 북방청동기가 출토 유물의 주종을 이루며 중원계 문물은 소량 출토된다. 수습 조사된 자료가 많아 교구의 출토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도홍과 랍 1호묘(도면 5)와 2호묘에서는 피장자의 골반뼈 주변에서 허리띠에 부착하였던 장식품과 함께 교구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 섬서성의 神木 李家畔²⁴⁾·米脂 張坪 묘지²⁵⁾에서도 교구가 출토되었다.

양랑문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하회족자치구와 감숙성 일대의 여러 묘지에서 교구가 출토되었다. 영하지역의 경우 固原 撒門村²⁶⁾·동 于家庄²⁷⁾·동 馬庄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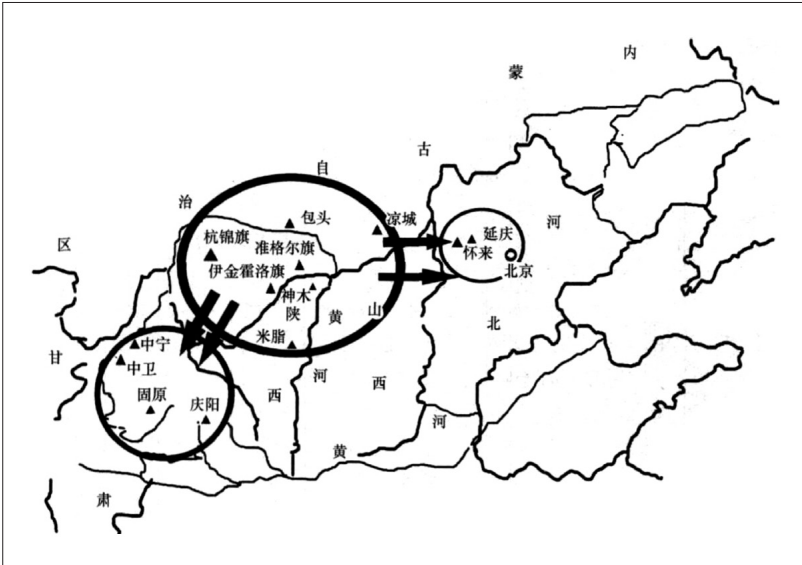


〈도면 4〉 옥릉태묘 출토 교구와 공반유물



〈도면 5〉 도홍파랍 M1호묘 출토 교구와 공반유물

22) 伊克昭盟文物工作站·伊金霍洛旗文物保護管理所, 1992, 「內蒙古伊金霍洛旗匈奴墓」, 『文物』 1992-5
 23) 田廣金, 1976, 앞의 글; 도홍파랍 1호묘의 C14 연대치는 기원전 665~590년이다.
 24) 戴應新·孫嘉祥, 1983, 「陝西神木縣出土匈奴文物」, 『文物』 1983-12
 25) 北京大學考古系商周組·陝西考古所商周研究室, 1989, 「陝西米脂張坪墓地發掘簡報」, 『考古與文物』 1989-1
 26) 羅豐·韓孔樂, 1990, 「寧夏固原近年發現北方系青銅器」, 『考古』 1990-5
 27) 寧夏文物考古研究所, 1995, 「寧夏彭堡于家庄墓地」, 『考古學報』 1995-1



〈도면 6〉 교구의 분포와 전파모식도(두해봉·정리나, 2007 인용)

西吉 陳陽川²⁹⁾·彭陽 米源村³⁰⁾·東 張街村³¹⁾·中寧 倪丁村³²⁾·中衛 狼窩子坑³³⁾에서 출토 예가 있고 감숙지역은 慶陽 鎮原 紅岩村·東 廟渠村³⁴⁾·東城北³⁵⁾에서 출토되었다.

마장묘지에서는 발굴 무덤 52기 가운데 9기의 무덤에서 교구가 출토되었

28) 寧夏文物考古研究所·寧夏固原博物館, 1993, 「寧夏固原楊郎青銅文化墓地」, 『考古學報』1993-1
 29) 寧夏文物考古所·西吉縣文管所, 「西吉縣陳陽川墓地發掘簡報」, 『寧夏考古文集』寧夏人民出版社
 30) 楊寧國·祁悅章, 1999, 「寧夏彭陽縣近年出土的北方系青銅器」, 『考古』1999-12
 31) 寧夏回族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彭陽縣文物站, 2002, 「寧夏彭陽縣張街村春秋戰國墓地」, 『考古』2002-8
 32)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考古隊, 1987, 「寧夏中寧縣青銅短劍墓清理簡報」, 『考古』1987-9
 33) 周興華, 1989, 「寧夏中衛縣狼窩子坑的青銅短劍墓群」, 『考古』1989-11
 34) 劉得禎·許俊臣, 1988, 「甘肅慶陽春秋戰國墓葬的清理」, 『考古』1988-5
 35) 慶陽地區博物館 外, 1988, 「甘肅慶陽城北發現戰國時期葬馬坑」, 『考古』1988-9

고 이 밖에 1점이 채집되었다. 이 묘지는 ‘楊郎文化’를 대표하는 유적이며 양, 말, 소의 殉牲이 확인된다. 土洞墓라 불리는 묘제가 특징적인데 망자의 유해는 토동 내에 頭低足高的 형태로 매장된다. IM1호묘와 IM8호묘에서는 피장자의 허리 부위에서, IM1호묘에서는 피장자의 흉부에서 교구가 출토되었다.³⁶⁾ 이 묘지는 일부 춘추시기까지 소급되기도 하나 전국시기에 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⁷⁾ 마장 IM3호묘 출토 교구는 환의 형태가 상하로 길쭉한 타원형에 가깝고 띠 연결부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 등 전형적인 교구와 다소 다르다. 우가장 NM2호묘 출토품은 도홍파랍 출토 교구와 유사하지만 진원 홍암촌과 묘지촌 출토품은 문양이나 결식의 위치에서 전형적인 교구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³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구는 북방청동기문화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이며 다량의 飾牌와 함께 출토된다. 식패는 청동으로 주조한 것이고 표면에 여러 가지 동물문이 배풀어져 있다. 동물문은 장신구뿐만 아니라 동검과 동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물품에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북방청동기문화 분포권이라 부를 때 모든 지역이 공통의 문화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물문을 標識로 하고 있고 動物殉牲의 풍습이 확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묘제나 토기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는 몇 개의 고고학문화 혹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려는 것은 사서의 기록에 등장하는 족속의 명칭과 고고학 조사의 성과를 접목하려 함이다.

북방식 鈹具는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그 중심은 내몽고 중남부지역이며 연산 남록과 영하 일대까지 확산되어 있다. 도홍파랍문화의 경우 교구만이 출토되지만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증원식의 대구가 출토되는 수량이 늘어

36) 양랑묘지의 매장 주체부는 머리 쪽이 낮고 발치쪽은 높으므로 이 사례를 비착장품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寧夏文物考古研究所·寧夏固原博物館, 1993, 앞의 글, 24쪽의 도12

37) 寧夏文物考古研究所·寧夏固原博物館, 1993, 앞의 글, 49~51쪽

38) 劉得禎·許俊臣, 1988, 417쪽의 도8-7, 418쪽의 도10-7

난다. 그에 비해 비파형동검³⁹⁾이 유행한 十二臺營子文化와 夏家店上層文化 권역에서는 교구가 출토되지 않는다.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교구는 서로 양식적인 특징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출토되는 지역이나 유적에 따라 형태상의 차이가 꽤나 존재한다. 그것은 단검을 비롯한 여타 청동기에서도 살피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교구의 출토 모습이 비교적 상세히 보고된 옥황묘 묘지와 모경구 묘지의 경우, 교구는 피장자의 허리 부위에서 식패와 더불어 출토된다. 즉, 무덤의 주인공은 교구와 식패가 부착된 허리띠를 착용한 채 무덤에 묻힌 것이다. 옥황묘 묘지에서는 남성만이 교구를 소유하고 있고, 마장묘지를 비롯한 여러 무덤군에서 교구의 소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구와 식패가 부착된 허리띠는 단위 사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인물이 한정적으로 소유하던 물품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특색 있는 복식문화를 소유한 種族 혹은 族屬을 어떻게 비정할 수 있을까. 중국의 춘추시대와 평행기가 되면 내몽고 중남부지역과 그 주변지대에 여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東胡, 山戎, 白狄, 林胡, 樓煩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유적과 유물에서 드러나는 고고학문화 혹은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족속과 결합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근래 중국 학계에서는 연산 일대의 옥황묘 문화를 남긴 족속을 산용으로,⁴⁰⁾ 내몽고 중남부지역의 오르도스 청동기문화를 남긴 족속을 백적으로,⁴¹⁾ 영하 일대의 양랑문화를 남긴 족속을 서용으로 보는 견해⁴²⁾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들이 남긴 청동기문화는 수세기간 광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이며 존재하였고 중국 중원뿐만 아니라 그 동북쪽에 위치하였던 비파형동검문화권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39)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40)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앞의 책

41) 田廣金·郭素新, 2004, 『北方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191~195쪽

42) 許成等, 1993, 「東周時期的戎狄青銅文化」, 『考古學報』 1993-1

2_ 중원식 대구 분포권의 확대와 그 계기

중국 중원지역에서 금속제 장신구가 일정한 양식을 띠며 유행하는 것은 商代까지 소급되지만 출토 수량이 보다 많아지고 소유가 확산되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이다. 특히 전국시대에는 帶鉤로 불리는 허리띠 부속품이 한족 왕조의 경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종족 분포지역으로까지 전해진다. 시대적으로는 춘추 만기~전국 초기에 등장하였고 魏晉대에 이르면 쇠락한다.⁴³⁾ 중원에서 기원한 대구는 중원의 북쪽과 서쪽으로도 확산되었는데 遼西, 燕山, 내몽고 중남부, 영하지역에 일정한 帶를 이루며 군집 분포한다.

〈도면 1〉의 A군은 敖漢旗 鐵匠溝⁴⁴⁾ · 동 烏蘭寶拉格⁴⁵⁾ · 동 水泉墓地 南區 · 朝陽 袁臺子⁴⁶⁾ · 喀左 南洞溝⁴⁷⁾ · 동 老爺廟⁴⁸⁾ · 凌源 五道河子 묘지⁴⁹⁾가 해당한다.⁵⁰⁾ 중국 학계의 고고학문화 분류에 따르면 십이대영자문화의 주 분포권이거나 그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유적이다.⁵¹⁾

위의 여러 유적이 소재한 곳은 연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까지 琵琶

43) 王仁湘, 1985, 「帶鉤概論」, 『考古學報』 1985-3

44) 邵國田, 1992, 「敖漢旗鐵匠溝戰國墓地調查簡報」, 『內蒙古考古與文物』 1992-1·2(合刊)

45) 邵國田, 1996, 「敖漢旗烏蘭寶拉格戰國墓地調查」, 『內蒙古文物考古』 1996-1

4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朝陽市博物館, 2010, 『袁臺子 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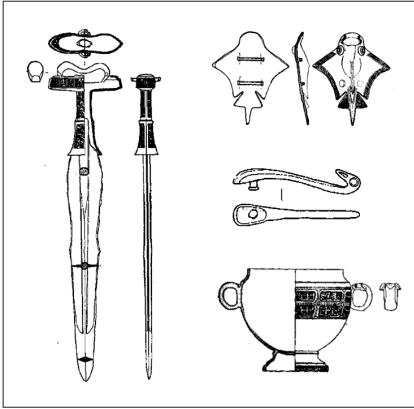
47) 遼寧省博物館 · 朝陽地區博物館, 1977,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 1977-6

48) 劉大志 · 柴貴民, 1993, 「喀左老爺廟鄉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993-2

4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遼寧凌源縣五道河子戰國墓發掘簡報」, 『文物』 1989-2

50) 물론 A군보다 동쪽에서도 전국시대의 대구가 출토된다. 전국시대 요동군 관할의 성지인 邱台遺址, 二龍湖城址, 牧羊城에서도 전국시기의 대구가 출토되었다. 二龍湖城址 출토품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2010년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四平地區博物館 소장품을 실견하였는데 이룡호성지 출토품 가운데 銅製 帶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鐵嶺市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1996-2; 四平地區博物館 ·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88, 「吉林省梨樹縣二龍湖古城址調查簡報」, 『考古』 1988-6; 東亞考古學會, 1931, 『牧羊城 - 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51) 烏恩岳斯圖, 2007, 앞의 책, 224~248쪽



〈도면 7〉 객좌 남동구 석곽묘 출토 유물

形銅劍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⁵²⁾ 대구는 단발적으로 이입되는 양상이다. 객좌 남동구유적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무덤의 묘제는 석관묘이고 비파형동검·가오리모양 동기·석부·무문의 평저토기 등 지역적인 물품과 함께 중원으로부터 반입된 동과·銅簋·수레부속구와 동제 대구가 출토되었다(도면 7).

이에 비하여 전국시기 燕文化가 확산하는 시점, 특히 연5군이 설치되면서⁵³⁾ 대구 반입 및 부장 수량이 급증한다. 근래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조양 원대자 묘지는 전국시대 이후 대구가 연속적으로 이입, 부장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 유적은 大凌河 東岸 大柏山 아래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柳城遺蹟·十二臺營子 銅劍墓⁵⁴⁾에 인접해 있다. 근래 보고된 162기의 무덤 중 38기에서 41점의 대구가 출토되었다. 40점은 동제이고 1점이 철제이다. 보고지는 중심시기를 전국~16국시대로 파악하였다. 〈도면 8〉은 그 가운데 동쪽 구역의 유구 분포도에 대구 출토 무덤을 표기(흑색)한 것이다. 대구의 출토 수량이 많으며 여러 시기에 걸쳐 연속적인 점이 눈에 띈다.

〈도면 1〉의 B군은 연산 일대가 해당한다. 燕慶 玉皇廟⁵⁵⁾·동 龍慶峽⁵⁶⁾·

52) 이 지역 비파형동검문화를 남긴 주민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東胡·山戎으로, 한국 학계에서는 古朝鮮의 배경문화 혹은 濊貊族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송호정, 2008, 「요하유역 고대문명의 변천과 주민집단」,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16~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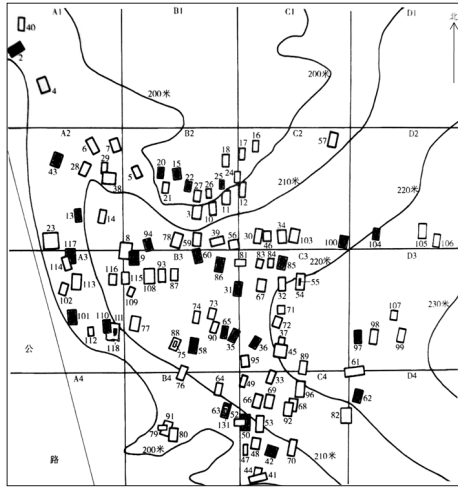
53) 『史記』「匈奴列傳」, “燕有賢將秦開 爲質于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却千餘里 (중략)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 以拒胡.”

54)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55)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軍都山墓地—玉皇廟』, 文物出版社

56) 北京市文物研究所, 1994, 「龍慶峽別墅工程中發現的春秋時期的墓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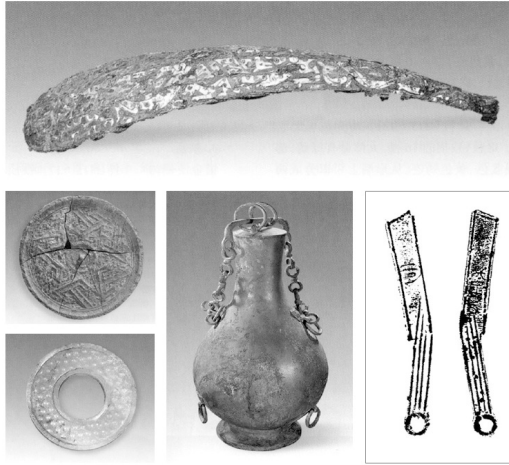
懷來 甘子堡⁵⁷⁾ · 동 北辛堡⁵⁸⁾ · 宣化 小白楊⁵⁹⁾ · 선화전국묘⁶⁰⁾ · 灤平 梨樹溝門⁶¹⁾ · 동 東營子 묘지⁶²⁾에서 대구가 출토되었다. 옥황묘 묘지에서 발굴된 무덤 400기 가운데 30기에서 대구가 출토되었다. 대구는 춘추시기로 편년할 수 있는 고식 자료이며 양·새·말·서수 등 동물형상을 갖춘 것이 다수를 점한다.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 결과 전부 남성의 소유물임이 확인되었다.⁶³⁾ <도면 2>의 좌는 YYM303호묘의 대구 출토 세부도면이다. 대구는 골반 부위에서 위쪽으로 꽤나 올라와 있지만 동검이나 동도의 출토 위치로 보면 패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⁴⁾



<도면 8> 원대자묘지(東區, 부분) 유구배치

장가구시 宣化區 春光鄉에서 발굴된 6기의 전국묘 가운데 M15호묘에서 대구가 출토되었다. 명도전 54매, 葬玉, 토기, 동과, 청동용기, 동경 등의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다(도면 9). 보고자는 출토유물에 기준하여 전국시기 귀족묘

57) 賀勇, 1993, 「河北懷來甘子堡發現的春秋墓群」, 『文物春秋』 1993-2
 58)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6, 「河北懷來北辛堡戰國墓」, 『考古』 1966-5
 59) 張家口市文物事業管理所, 1987, 「河北省宣化小白楊墓地發掘報告」, 『文物』 1987-5
 60) 張家口市宣化區文物保管所, 2010, 「河北張家口宣化戰國墓發掘簡報」, 『文物』 2010-6
 61) 承德地區文物保護管理所·灤平縣文物保護管理所, 1994, 「河北省灤平縣梨樹溝門墓群清理發掘簡報」, 『文物春秋』 1994-2; 灤平縣博物館, 1995, 「河北省灤平縣梨樹溝門山戎墓地群清理簡報」, 『考古與文物』 1995-5
 62) 河北省文物研究所外, 2007, 「東營子墓地發掘簡報」, 『河北省考古文集』 3, 河北省文物研究所
 63)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앞의 책, 1219~1227쪽
 64) 이는 후술할 모경구묘지의 사례와 다르다.



〈도면 9〉 장가구 선화전국묘 M15호묘 대구와 공반유물

로 추정하였다. 장가구시 일대에서 이러한 유형의 무덤과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玉皇廟文化를 燕문화가 대체하는 양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옥황묘문화 가운데 동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난평 이수구묘에서 21점의 대구가 출토되었다.⁶⁵⁾ 이 묘지는 灤河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옥황묘 묘지와 동일 유형의 동검이 반출되었다. 이 묘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附營子鄉 東營子村에서 전국시대 중만기~서한 초기의 무덤 48기가 발굴되었는데 2기의 무덤에서 2점의 동제 대구가 출토되었다.

〈도면 1〉의 C군은 내몽고 중남부지역에 해당한다. 凉城 毛慶溝⁶⁶⁾·包頭 西園⁶⁷⁾·포두208묘지⁶⁸⁾에서 춘추전국시대의 대구가 출토되었다.

모경구묘지에서는 모두 15점의 대구가 출토되었는데 동제품이 12점, 철제품이 3점이다. 대구가 출토된 무덤은 구릉의 裾部 쪽에 분포한다.⁶⁹⁾ 〈도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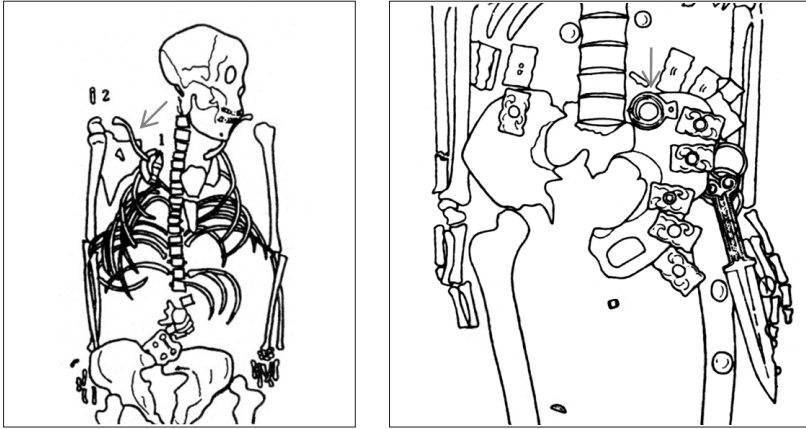
65) 承德地區文物保護管理所·灤平縣文物保護管理所, 1994, 앞의 글, 20~27쪽

66) 內蒙古文物工作隊, 1986, 「毛慶溝墓地」, 『顎爾多斯式青銅器』, 文物出版社; 宮本一夫, 2000, 앞의 책; 楊建華·洪猛·曹建恩, 2010, 앞의 글

6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處, 1991, 앞의 글

68) 包頭市文物管理處, 1997, 「包頭市二〇八墓地」, 『內蒙古文物考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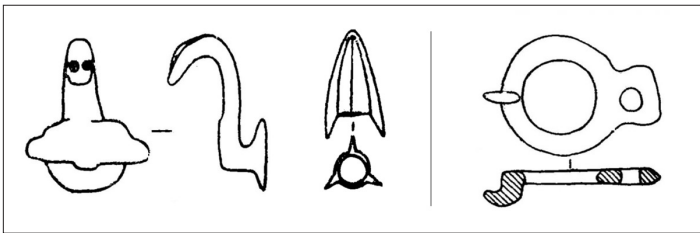
69) 宮本一夫, 2000, 앞의 책, 280쪽



〈도면 10〉 모경주묘지의 대구와 교구 부장위치(좌: M21호묘, 우: M60호묘)

의 좌측은 M21호묘의 대구 출토 세부 도면이다. 대구가 인골의 우측 어깨 부위에서 출토되었다.⁷⁰⁾ 이에 비하여 〈도면 10〉의 우측에 제시한 M60호묘의 세부 도면을 보면 교구는 허리 부위에서 여러 점의 장식품과 함께 출토되었으므로 착장품으로 볼 수 있다.

서원묘지에서는 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5호묘에서는 북방식 청동기와 함께 동축, 耳環, 璜形飾, 대구(〈도면 11〉-좌)가 함께 출토되었다.⁷¹⁾ 특히 대



〈도면 11〉 서원묘지 출토 대구와 교구(좌: M5호묘, 우: M4호묘)

70) 이러한 유물 출토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자의 지적이 있었다. 內蒙古文物工作隊, 1986, 앞의 글, 238쪽

71)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處, 1991, 앞의 글, 24쪽

구와 이환은 옥황묘 묘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포두208묘지에서는 7기의 박장(薄葬) 목곽묘가 발굴되었는데 지표 수습품까지 합쳐 3점의 동제 대금구가 출토되었다. M1호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전국시대의 타날문 단경호이다.

〈도면 1〉의 D군은 중국 청동기문화 가운데 양량문화의 분포범위에 해당한다. 固原 楊郎鄉 馬庄⁷²⁾·隆德縣 城郊鄉과 神林鄉⁷³⁾·彭陽縣 草廟鄉⁷⁴⁾·張家川回族自治縣 馬家塬 묘지⁷⁵⁾ 등의 예를 들 수 있다.⁷⁶⁾

마장묘지에서는 52기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그 가운데 2기에서 동제 대구가 출토되었다. I구역 M5호묘에서는 銅刀와 銅錐가 공반되었을 뿐이지만 II구역 M18호묘에서는 동제 鍬와 鶴嘴斧, 수레부속구, 帶飾 등 많은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묘지에서 대구는 수레부속구와 더불어 단발적으로 이입



〈도면 12〉 마가원묘지 M14호묘 출토 유물(수레, 력, 중, 식패, 이식, 대구)

- 72) 寧夏文物考古研究所·寧夏固原博物館, 1993, 「寧夏固原楊郎青銅文化墓地」, 『考古學報』1993-1
- 73) 王全甲, 1990, 「隆德縣出土的匈奴文物」, 『考古與文物』1990-2
- 74) 楊寧國·祁悅章, 1999, 「寧夏彭陽縣近年出土的北方系青銅器」, 『考古』1999-12
- 75) 早期秦文化聯合考古隊·張家川回族自治縣博物館, 2009, 「張家川馬家塬戰國墓地 2007~2008年發掘簡報」, 『文物』2009-10
- 76) 李海榮, 2003, 『北方地區出土夏商周時期青銅器研究』, 文物出版社; 馬強, 2009, 「寧夏出土北方系青銅器綜合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된 양상이다.⁷⁷⁾

마가원묘지 가운데 M14호묘(도면 12)에서 대구가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장방형豎穴偏洞室墓이다. 각종 장식이 갖춰진 수레·금제 이식·금은제帶飾 등 각종 금은기·銅器·금을 상감한 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점의 대구는 금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진으로 보면 철제 주조품의 표면에 금박을 씌운 것으로 보인다.⁷⁸⁾ 각 1점씩 피장자의 좌우 손 부위에서 출토되었다. 마가원묘지의 연대는 전국 만기로 편년되고 있으며 보고자는 西戎과 秦의 문화 교류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 해석하였다.⁷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시대의 어느 시점이 되면 中原式帶鉤가 북방청동기문화 분포권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 시점에 대하여 기원전 5~4세기경으로 보는 연구자가 많다. 대구가 확산되는 양상을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양성 毛慶溝 묘지가 표지적인 사례이다. 이 묘지에서는 다수의 土坑墓가 발굴되었는데 전형적인 북방청동기와 打捺文短頸壺가 출토되었다. 중원식 대구가 출토된 무덤이 북방청동기가 출토된 무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묘제나 공반 유물에서 큰 차이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중원식 대구 부장의 계기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주민이동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보다는 중원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원에서 이주한 인물이라면 그는 중원의 복식을 착용한 채 매장되었을 것이고, 대구는 당연히 허리부위에서 출토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발굴조사의 결과 <도면 10>의 좌측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가 별도의 공간에서 출토되고 있다. 즉, 모경구 묘지에서 대구를 소유한 인물이 중원의 복식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77) 寧夏文物考古研究所·寧夏固原博物館, 1993, 앞의 글, 49~51쪽

78) 早期秦文化聯合考古隊·張家川回族自治縣博物館, 2009, 앞의 글, 37쪽의 도30

79) 早期秦文化聯合考古隊·張家川回族自治縣博物館, 2009, 앞의 글, 50쪽

둘째는 조양 袁臺子 묘지가 표지적인 사례이다. 이 묘지에서는 전국시대 이후 새롭게 조영된 목곽묘가 다수 발굴되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 분포하던 십이대영자문화의 요소는 완전히 구축되었고 중원식 묘제와 유물 일색이었다. 즉, 이 묘지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모경구의 경우와는 달리 住民移住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燕의 북방진출이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이다.

연의 북방진출 시점에 대해서는 『史記』 「匈奴列傳」의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연나라에는 현명한 장수 진개가 있었다. 동호의 인질이 되었는데 동호가 그를 깊이 신뢰하였다. (연으로) 돌아온 후 기습하여 동호를 깨트리니 동호는 천여 리 밖으로 물러났다. (중략) 연 역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시작하여 양평에 이르렀다.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하여 동호를 막도록 하였다.⁸⁰⁾

이 기록에 보이는 東胡의 驅逐時期는 기원전 4세기 무렵이고 장성 축조시기는 그보다 늦은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⁸¹⁾ 이 시기에 축조한 장성의 서쪽은 造陽(현 獨石口)이고 동쪽은 襄平(현 遼陽)이다. 원대자 묘지가 위치한 朝陽도 당연히 연5군 관할권에 포함되었다.

셋째는 장가천 馬家塬 묘지의 사례이다. 발굴자는 이 묘지의 족속을 서용으로 비정하였다. 양랑문화의 후예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덤의 규모는 기왕에 조사된 양랑문화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고 무덤 속에 묻힌 여러 대의 수레, 그리고 수레에 부착된 각종 장식, 동정과 동력 등 청동용기는 중원의 대형묘 출토품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중원 대형묘에 비하여 청동예기의 부장이 적은 편이고 대신 금제 장식품이 많은 점에서 특색을 볼 수 있다.

80) 『史記』 「匈奴列傳」, “燕有賢將秦開 爲質于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却千餘里 (중략)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 以拒胡.”

81) 林幹, 2006, 『中華地域文化大系·塞北文化』, 內蒙古教育出版社, 363~367쪽

발굴자의 지적처럼 전국 秦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있었지만 진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던 서융의 지배층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러한 무덤은 여러 지역에서 오랜 기간 조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이 통일제국을 수립하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했던 묘지 유형이었을 것이다.

Ⅲ. 진식대금구의 주변국 분배와 그 배경

1_ 진식대금구의 등장 및 전개

진식대금구란 西晉과 東晉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특색 있는 금동제 대금구를 지칭한다. 鈹具와 帶先金具에 용·봉황 등의 문양이 透彫로 표현되어 있다. ‘진식’이라는 표현을 붙였지만 상한은 後漢까지 소급되며 근래 東吳시기의 자료도 2점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진식대금구는 앞 장에서 살펴본 帶鉤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며 兩晉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공존한 주변국의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대구는 단위 고분군 내에서 여러 명의 인물이 소유함에 비하여 진식대금구는 일부 무덤에 한정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

진식대금구에 대한 연구는 중국·일본·한국 학계에서 모두 진행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진식대금구의 출토 예를 발굴조사 약보고서와 도록의 형태로 학계에 공개하거나 큰 흐름을 개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⁸²⁾ 그에 비하여 일본 학계와 한국 학계에서는 자국 출토 고고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일본 학계는 진식대금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열도

82) 夏鼐, 1972, 「晋周處墓出土的金屬帶飾的重新鑑定」, 『考古』 1972-4; 孫機, 2001,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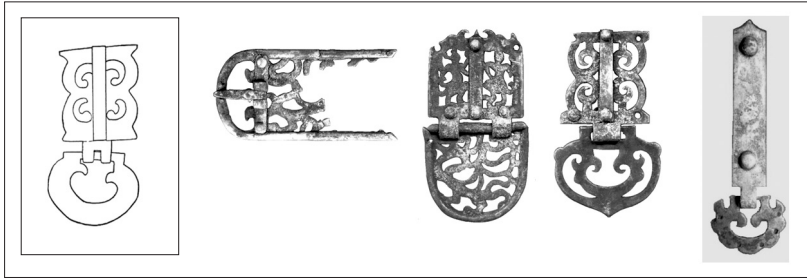
中期古墳 金工文化의 기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⁸³⁾ 이에 비해 한국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진식대금구 출토 자료 전체를 시야에 넣고 제작과 소유관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각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까지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⁸⁴⁾

그간 진식대금구가 출토된 곳은 13개 지역이며 한중일 세 나라에 모두 분포한다. 진식대금구가 출토된 유적을 시대 순으로 적기해 보면 河北省 定縣(현 定州市) 43호묘·江蘇省 남경 上坊墓·同 薛秋墓·동 南京大 北園墓·강소성 宜興 周處墓·북경 琉璃河墓·洛陽 西郊 24호묘·湖北省 武漢 熊家嶺墓·廣東省 廣州 大刀山墓·遼寧省 北票 喇嘛洞 II M101호묘·동 M275호묘·길림성 집안 山城下 152호묘⁸⁵⁾·동 禹山下 3560호묘·서울 風納土城·동 夢村土城·華城 社倉里·奈良縣 新山古墳·兵庫縣 行者塚古墳 등이다. 물론 요령성 朝陽에서 출토된 대금구 가운데도 진식대금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진식대금구의 倣製品일 가능성이 있다.

그간 발굴된 진식대금구 가운데 무덤에 매장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대금구의 기본형은 진의 역사 전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며 세부적인 도안이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진식대금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이미 後漢시기부터 존재한다. <도면

- 83) 千賀久, 1984, 「日本出土帶金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61; 藤井康隆, 2002, 「晋式帶金具の製作動向について」, 『古代-中國六朝期の金工品生産を考える』 111; 藤井康隆, 2003, 「三燕における帶金具の新例をめぐって」, 『立命館大學考古學論叢』 Ⅲ; 町田章, 2006, 「鮮卑の帶金具」, 『東アジア考古學論叢』, 奈良文化財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小池伸彦, 2006, 「遼寧省出土の三燕の帶金具について」, 『東アジア考古學論叢』, 奈良文化財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84) 박순발, 1997,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박순발, 2004, 「한성기 백제 대중교섭 일례-몽촌토성 출토 금동과 대금구추고」, 『호서고고학』 11, 호서고고학회; 권오영, 2004, 「진식대구의 남과 북」, 『가야사국제학술세미나 가야, 왜와 북방』, 김해시
- 85) 集安縣文物保管所,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0, 『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도면 13〉 초현기의 대금구(좌: 정현43호묘, 중: 설추묘, 우: 상방묘)

13)–좌는 174년에 사망한 中山穆王 劉暢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하북 定縣 43호묘⁸⁶⁾ 출토 은제품이다. 띠 고정부에 雙葉紋이 투조되어 있고 아래쪽에 垂下飾이 현수되어 있다.⁸⁷⁾

〈도면 13〉–중은 남경 薛秋墓 출토품⁸⁸⁾이다. 이 무덤에서는 2개의 목관이 발견되었다. 남성(설추)의 관에서는 은제 대금구, 인장, 철제 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여성의 관에서는 금동제 뒤꽂이와 반지, 鐵鏡 등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청동제 曲棒形 대구⁸⁹⁾가 1점 출토되었으나 출토 위치는 불명이다. 대금구는 교구, 과관, 帶先金具를 모두 갖추고 있다. 보고자는 출토된 동전 등의 유물에 근거하여 이 무덤을 東吳 중만기로 편년하였다. 이 대금구의 교구는 파손되어 있지만 원래 용문양이 투조되었던 것 같다.⁹⁰⁾ 과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띠 고정부에는 對向의 인물상이 표현되어 있고 수하식에는 瑞鳥를 타고 있는 인물상이 투조되어 있다.

〈도면 14〉는 297년의 매장연대가 있는 宜興 周處墓⁹¹⁾ 출토품이다. 교구,

86) 定縣博物館, 1973, 「河北定縣43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73-11,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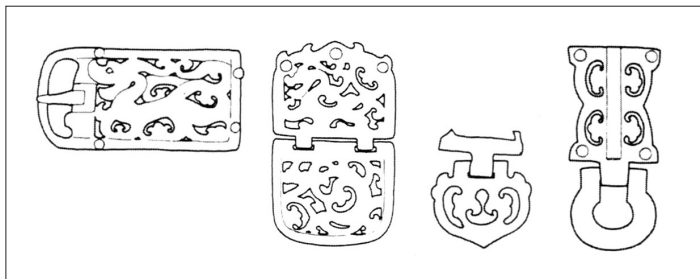
87) 町田章, 2006, 「鮮卑의帶金具」, 『東アジア考古學論叢』, 日本奈良文化財研究所·中國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56쪽

88) 南京市博物館, 2008, 「南京大光路孫吳薛秋墓發掘簡報」, 『文物』 2008-3

89) 先端에 馬頭狀의 動物紋이 표현되어 있다. 晋式帶金具와 曲棒形 帶鉤가 일정 기간 공존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90) 鉸具와 비슷한 문양이 표현되는 帶先金具에는 對向의 龍과 人物像이 透彫되어 있다.

91) 羅宗眞, 1957, 「江蘇宜興晋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57-4



〈도면 14〉 의흥 주처묘 대금구

과판, 대선금구, 鉞尾 등 모든 부품을 갖춘 1식이며 은제품이다. 교구는 좌우로 길쭉하며 왼쪽 테두리는 타원형에 가깝다. 동물무늬가 透彫로 표현되었다. 대단금구에도 유사한 문양이 베풀어져 있다. 표현된 동물은 용문으로 보인다. 과판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이상 3점의 대금구는 각각 후한, 동오, 서진 早期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모두 은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⁹²⁾ 교구에 용문, 과판에는 인물문, 쌍엽문, 삼엽문이 베풀어져 있다. 외형으로 보면 이미 설추묘 단계에 진식대금구의 제작이 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주처묘 단계가 되면 용문이 중심문양으로 자리 잡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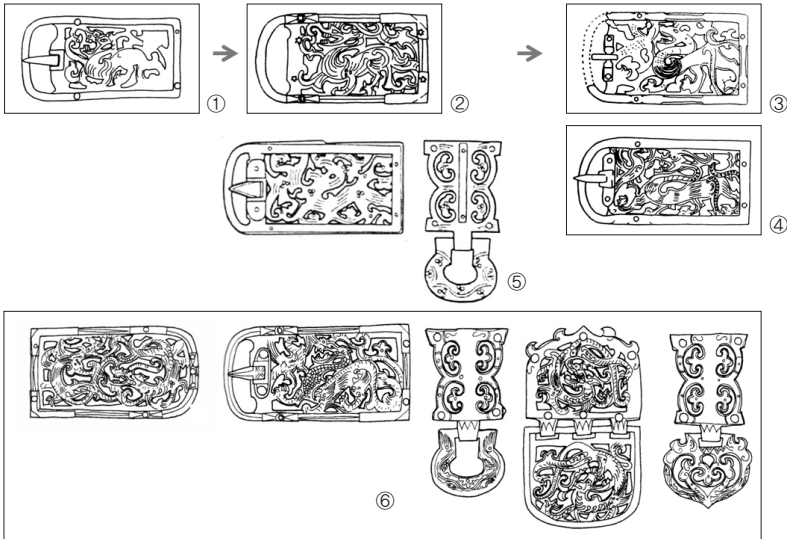
〈도면 15〉는 진식대금구의 흐름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도면을 작성하면서 무덤의 연대를 1차적 기준으로 삼았고 문양구성을 2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교구의 문양을 중심으로 순서 배열하여 보면 용문으로 구성된 유리하진묘(도면 15-①)와 新山古墳 출토품⁹³⁾(도면 15-②)이 고식, 용문과 봉황문이 조합을 이루는 熊家嶺晉墓(도면 15-③)⁹⁴⁾ · 大刀山晉墓(도면 15-④) · 낙양 西郊24호묘(도면 15-⑤)⁹⁵⁾ · 라마동 II 275호묘(도면 15-⑥)⁹⁶⁾가 신식이다. 그 이유는 용봉문

92) 후술할 남경 상방묘 출토 대금구(과판) 역시 은제품이다. 南京市博物館·南京市江寧區博物館, 2008, 「南京江寧上坊孫吳墓發掘簡報」, 『文物』 2008-12, 15쪽

93) 千賀久, 1984, 「日本出土の帶金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6, 吉川弘文館

94) 劉森森, 1994, 「湖北漢陽出土的晉代鑲金銅帶鉤」, 『考古』 1994-10

95)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第二隊, 1957, 「洛陽晉墓的發掘」, 『考古學報』 1957-1



〈도면 15〉 진식대금구의 흐름

(①유리하진묘, ②신상고분, ③웅가령진묘, ④대도산진묘, ⑤낙양24호묘, ⑥라마동 II 275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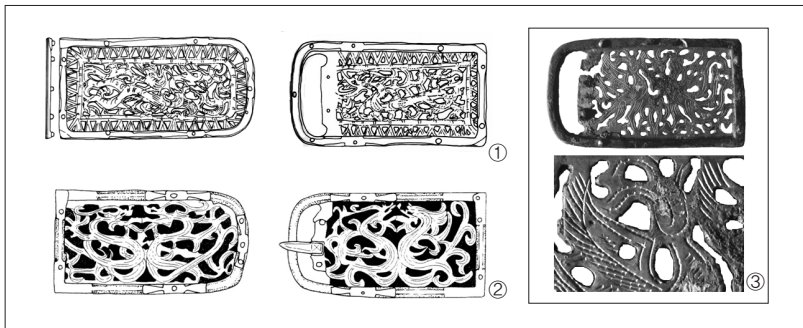
을 갖춘 광주 대도산묘가 324년의 기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덤 출토 교구에는 날개를 활짝 편 채 날아올라 용을 바라보고 있는 봉황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 대도산묘나 무한 웅가령진묘에서는 규형의 과관⁹⁷⁾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과관이 남경대 북원 동진묘⁹⁸⁾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진식대금구는 진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도 전해졌다. 가장 출토예가 많은 곳은 三燕이며 고구려, 백제, 왜로도 파급되었다. 특히 삼연의 경우 진식대금구 완제품도 존재하지만 삼연에서 모방하여 만든 것도 여러 점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68, 70, 71쪽
 97) 근래에는 동오 중만기로 편년되는 남경 상방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진식대금구의 구성 및 변화양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료의 증가가 절실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98) 南京大學歷史學系考古組, 1973, 「南京大學北園東晉墓」, 『文物』1973-4; 박순발, 2004, 앞의 글

완제품이 이입된 예로는 라마동Ⅱ 275호묘 출토품(도면 15-⑥)이 대표적이다. 교구와 과판, 대선금구를 모두 갖추었다. 교구의 중심문양은 용과 봉황문이다. 문양이 정교하고 제작기법이 정교하여 진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마동Ⅱ 101호묘에서 출토된 대금구는 교구와 대선금구로 구성되어 있다. 교구에는 용과 봉황문이 베풀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진식대금구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마무리작업에 다소 거친 면이 있다. 이를 진식대금구의 모방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⁹⁹⁾

전형적인 진식대금구와 비슷하지만 현지제작품으로 보이는 예가 있다. 朝陽 袁臺子墓·十二臺鄉 磚廠 88M1호묘¹⁰⁰⁾·奉車都尉墓¹⁰¹⁾ 출토품이 그것이다. 원대자묘 대금구는 외형이 진식과 유사하지만 내부에는 몸에 굴곡을 많이 준 쌍문문이 표현되어 있다(도면 16-②).¹⁰²⁾ 십이대향전창 88M1호묘 출토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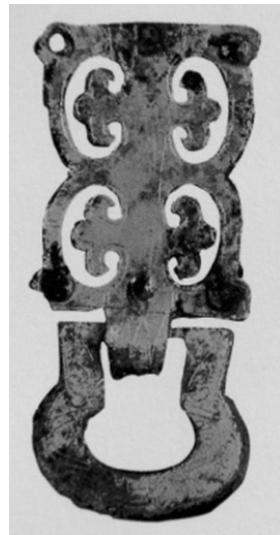
〈도면 16〉 삼연에서 제작된 대금구(①봉거도위묘, ②원대자묘, ③십이대향전창88M1호묘)

- 9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遼寧北票喇嘛洞墓地1998年發掘報告」, 『考古學報』 2004-2, 230쪽; 町田章, 2006, 「鮮卑の帶金具」, 『東アジア考古學論叢』, 日本奈良文化財研究所·中國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58~59쪽; 小池伸彦, 2006, 「遼寧省出土の三燕の帶金具について」, 『東アジア考古學論叢』, 日本奈良文化財研究所·中國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66쪽
- 10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1997, 「朝陽十二台鄉磚廠88M1發掘簡報」, 『文物』 1997-11
- 101) 田立坤, 1994, 「朝陽前燕奉車都尉墓」, 『文物』 1994-11
- 102) 小池伸彦, 2006, 「遼寧省出土の三燕の帶金具について」, 『東アジア考古學論叢』, 日本奈良文化財研究所·中國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65쪽, 도1-3

교구에 人面鳥身의 迦陵頻伽가 표현되어 있다(도면 16-③).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鞍輪에도 유사한 도안의 가릉빈가문이 있어 양자 모두 전연에서 제작한 물품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봉거도위묘 출토품(도면 16-①)의 경우 몸이 매우 가는 용문과 함께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鋸齒紋이 발견된다. 이 무덤의 연대를 359년경으로 보는 견해¹⁰³⁾가 있다. 이와 달리 진식대금구와는 확연히 다른 예도 출토된다. 라마동 II I196호묘(도면 16-④)¹⁰⁴⁾ · 腰而營子村 M9001호묘¹⁰⁵⁾ · 西溝村墓 수집품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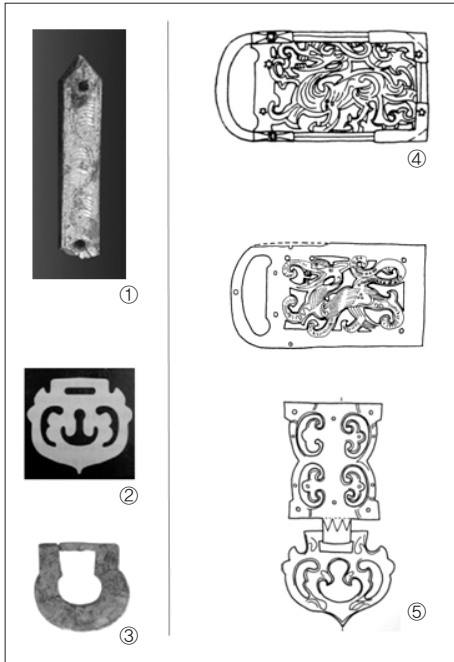
2_ 진식대금구 분배의 배경

진식대금구는 고구려와 백제, 왜의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고구려의 대금구¹⁰⁶⁾는 진과 삼연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山城下 152호묘¹⁰⁷⁾와 159호묘, 禹山下 3560호묘 출토품¹⁰⁸⁾은 진식대금구와 유사도가 매우 높다. 특히 산성하152호묘 출토품(도면 17)과 우산하3560호묘 출토품은 제작의장이 정교한 편이어서 완제품이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산성하159호묘 출토 대선금구는 고구려에서 만들어졌거나 삼연으로부터의 이입품일 가능성도 있다.



〈도면 17〉 산성하152호묘 과판

- 103) 田立坤, 1994, 「朝陽前燕奉車都尉墓」, 『文物』 1994-11
 10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70~71쪽
 10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外, 1997, 「朝陽王子墳山墓群1987,1990年度考古發掘的主要收穫」, 『文物』 1997-11, 15쪽
 106)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장설암, 2001, 「집안시 발굴 고구려 허리띠꾸미개(帶飾) 연구」,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107) 集安縣文物保管所,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0, 『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108) 장설암, 2001, 앞의 글, 872쪽의 그림4



〈도면 18〉 백제와 왜의 대금구

- (① 몽촌토성, ② 풍납토성, ③ 사창리, ④ 신산고분,
⑤ 행자총고분)

백제 유적에서는 모두 3점의 진식대금구가 출토되었다. 첫째, 풍납토성 과판이다(도면 18-②).¹⁰⁹⁾ 삼엽문 투조 과판의 수하식 편이다. 이러한 수하식은 周處墓 출토품뿐만 아니라 양진시기의 대금구 모두에서 확인된다. 둘째, 몽촌토성 출토 과판이다(도면 18-①).¹¹⁰⁾圭形 과판의 핵대 고정부 편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과판은 대도산묘, 웅가령묘, 남경대북원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셋째, 화성 사창리 산 10-1번지 고분에서 수습한 것(도면 18-③)¹¹¹⁾이며 과판은 전형적인 진식대금구처럼 세 종류로

구성되며 동진대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유적에서는 아직 진식대금구가 발굴된 바 없으나 영주¹¹²⁾와 경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예가 있다. 향후의 조사에서 양진시기 물품이 출토될 가능성은 높다.

일본열도에서는 2점의 진식대금구가 출토되었다.¹¹³⁾ 신산고분 대금구는 용문이 베풀어진 교구(도면 18-④)와 대선금구, 과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4세기

109) 김택식, 2001,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영사

110) 박순발, 2004, 앞의 글

111) 권오영·권도희, 2003, 「사창리 산10-1번지 출토 유물의 소개」, 『길성리토성』, 한신대학교박물관

112) 국립경주박물관, 1987, 『국은 이양선 수집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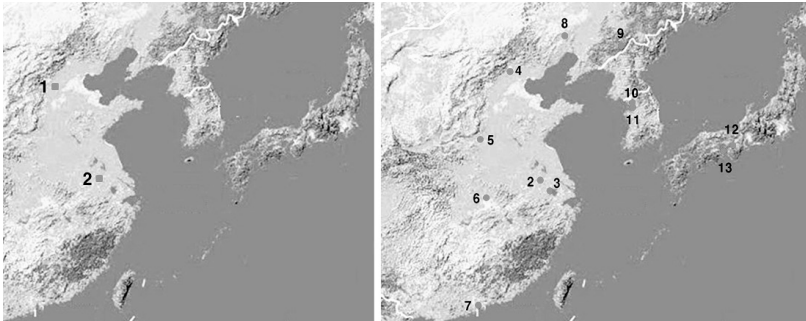
113) 町田章, 1970, 「古代帶金具考」, 『考古學雜誌』 56-1; 加川市教育委員會, 1997, 『行者塚古墳發掘調査概報』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¹⁴⁾ 행자총고분에서는 용문이 베풀어진 교구와 대선금구, 과판(도면 18-⑤)이 출토되었다. 이 역시 제작에서 매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식대금구 분포의 중심지는 진의 경역이지만 주변의 삼연, 고구려, 백제, 왜로도 널리 파급되었다. 그런데 진식대금구는 고분 조사의 사례가 많은 중국에서도 출토 예가 매우 드물며 주변국 자료까지 포괄한다 하더라도 수량이 많지 않다. 이는 戰國~漢의 帶鉤 부장양상과도 크게 달라 주목된다.

〈도면 19〉-좌는 후한과 동오시기의 자료 2점의 분포위치를 표시해 본 것이다. 두 무덤의 주인공은 각각 후한과 동오 황족 혹은 그 후예일 것 같다.¹¹⁵⁾

〈도면 19〉-우는 서진과 동진시기의 대금구 분포양상을 표기해 본 것이다. 〈도면 19〉-좌와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양진시기가 되면서 대금구의 제작이 활발



〈도면 19〉 진식대금구의 분포 변화

(좌: 후한~동오, 우: 양진. 1.정현, 2.남경, 3.의흥, 4.북경, 5.낙양, 6.무한, 7.광주, 8.북표, 9.집안, 10.서울, 11.화성, 12.나라, 13.효고)

114) 藤井康隆, 2002, 「晋式帶金具の製作動向について」, 『古代-中國六朝期の金工品生産を考える』 111

115) 남경 상방 동오묘의 주인공에 대하여 발굴지는 동오 말 孫皓時期的 宗室 王으로 보았으나 묘장의 규모나 부장유물 등을 종합하여 孫亮時期的 權臣 孫峻의 무덤으로 特定하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다. 賀雲翱, 2009, 「南京江寧上坊孫吳大墓墓主試考」, 『東南文化』 2009-1, 南京博物院, 64~66쪽

해진다. 특히 교구에 용문만 표현되는 단계에는 의흥에 분포함에 비하여 교구에 용과 봉황문양이 함께 표현되는 단계가 되면 진식대금구의 분포범위가 武漢·廣州·낙양 등지로 넓어진다. 후자가 동진시기에 유행한 도안임은 대도산묘 출토품으로 보아 분명하지만 상한은 서진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진식대금구는 중국 중원왕조에서도 소유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고급 물품이며 곧 지배층의 지위를 표상하는 물품이었다. 이러한 물품이 중원왕조의 경역 내에서 출토되는 것은 단위 국가 내 관료체제와 관련될 것인데 주변국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현재의 고고학 자료만으로 동아시아 각국 지배층이 진식대금구를 공유하는 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각국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관계의 부산물일 가능성은 고려할 만하다. 진식대금구와 같은 정교한 도안의 공예품, 특히 복식의 구성물품은 중국에서도 고급 관료만이 제한적으로 소유하는 물품이었을 것이므로 주변국으로 전해지는 계기 역시 외교관계 등 공식적인 루트 이외의 경로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을 수용한다면 진식대금구와 그 방제품이 분포하는 중국 북표·조양·집안, 한국 서울·화성, 일본 나라·효고 지역에 위치했거나 또는 그 지역을 지배하던 정치체는 양진 왕조와 외교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이들 정치체 사이에 맺어진 외교관계란 史書의 기록에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朝貢冊封관계이다.¹¹⁶⁾

慕容鮮卑의 경우도 양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慕容廆는 286년 즉위한 후 289년에 이르는 시점에 서진으로부터 鮮卑都督의 호를 받았고 307년에는 鮮卑大單于를 자칭하였으며 세상을 뜰 때까지 양진을 존중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의 아들인慕容皝은 339년에 前燕을 건국하고 동진에 燕王位

116) 노태돈, 1984,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방학지』 4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임기환, 2003, 「남북조기 한중 책봉 조공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한국고대사학회; 박대재,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1

수여를 요구, 341년 실현하였다. 이어 348년 왕위에 오른慕容儁은 352년 황제를 칭하며 책봉체제에서 이탈하였다.¹¹⁷⁾

고구려는 양진뿐만 아니라 전연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국원왕은 355년 전연의 모용준으로부터 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의 작호를 받았다. 이어 광개토왕은 396년 後燕의慕容儁으로부터 平州牧遼東大方二國王으로 책봉받았고¹¹⁸⁾ 장수왕은 413년 동진 安帝로부터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 호를 除授받았다. 이러한 공식적인 관계를 통하여 진식대금구가 고구려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연이나 후연에서도 진식대금구의 倣製品이 제작되었으므로 그러한 물품이 고구려로 전해졌을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제는 특히 양진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晉書에 따르면 백제 근초고왕은 재위 27년째인 372년에 동진에 조공하여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백제가 중국 왕조로부터 받은 첫 책봉호이다. 이후 중국 왕조와 백제 사이에 여러 차례의 조공책봉 사례가 있다.¹¹⁹⁾ 그런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중국 물품 가운데는 372년에 선행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특히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대금구는 4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연대관에 근거하여 4세기 전반 무렵 이미 동진과 백제 사이에 공식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수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¹²⁰⁾

倭의 경우 ‘왜 五王時代’에 연이어 진에 조공은 했으나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劉宋이 건국된 후 왜왕 珍은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의 작호를 요구하였으나 ‘安東將軍倭國王’의 작호를 받았다. 그런데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2점의 진식대금구의 제작연대를

117) 三崎良章, 김영환 역, 2007, 『오호십육국-중국사상의 민족대이동』, 경인문화사, 64~68쪽

118) 여호규, 2006,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 책봉관계 연구」, 『한국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5

119) 유원재, 1995, 「Ⅲ. 백제의 대외관계」, 『한국사 6-삼국의 정치와 사회Ⅱ 백제』, 117~120쪽

120) 박순발, 2004, 앞의 글, 13쪽

유송까지 늦추어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진시기의 어느 시점에 굳이 책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중국의 양진 왕조와 전연·고구려·백제·왜 사이에는 조공책봉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책봉을 하면서 관작을 수여할 때 의복을 사여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 의복은 관복을 의미하며 관복에는 반드시 冠帶가 함께 포함된다. 아마도 진식대금구 역시 이러한 관복의 부속 물품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발굴된 진식대금구의 소유자 모두를 기록에 보이는 관작제수자로 보기는 어렵다. 金春秋와 그 從者(함께 입조한 사절)가 당으로부터 관복 및 관대를 사여받아 오는 사례¹²¹⁾나 고구려왕이 신라왕과 그 종자들에게 의복을 차등 있게 내려주는 사례¹²²⁾ 등을 통해 볼 때 複數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백제 蓋鹵王이 남조에 견사하여 백제 관료의 관작을 요청한 사례로 보아 여러 등급의 물품이 복수로 반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리면서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 글은 복식의 일부인 허리띠를 소재로 고대 동북아시아 정치체 사이의 교류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금속제 허리띠장식품의 樣式이 성립한 시기는 중국의 춘

12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眞德王2年,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三國史記』卷33 雜志 色服,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太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122) 『中原高句麗碑』, “賜寐錦之衣服 (중략) 教諸位 賜上下衣服”

추전국시대와 평행한다. 중원지역에서는 帶鉤가 등장하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의 중국 북방지대에서도 鉸具와 飾牌가 출현하여 크게 유행하였다. 대구와 교구는 기본적으로 제작지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며 상이한 문화권의 복식 구성품이다. 양자는 한동안 별개의 분포권을 이루었으나 전국시대의 어느 시점이 되면 교구 분포권에 대구가 반입되거나, 교구는 사라지고 대구만 부장되는 사례가 등장한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전국시대 燕·趙·秦 등 각국이 북진 혹은 서진하여 기왕에 북방청동기문화를 꽃피웠던 족속을 복속하거나 보다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대구는 이후 漢에 이르기까지 허리띠의 부속품으로 널리 활용된다.

그에 후속하여 새롭게 등장한 금속제 허리띠장식이 바로 晋式帶金具이다. 최근의 발굴 사례로 보면 이 대금구는 대구가 유행하던 후한시기에 이미 등장하였음이 분명하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대구와 공존하다가 대구의 역할을 대체해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西晋이 건국된 후 제작 수량이 많아지고 외형도 정형화한다. 진식대금구는 앞 시기에 유행하였던 대구에 비하여 보다 광역의 분포양상을 보인다. 삼연, 고구려, 백제, 왜 등 동북아시아 각국 지배층의 무덤에서 제한적으로 출토된다. 진식대금구가 이처럼 주변국으로 폭넓게 분배된 배경은 아마도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外交儀禮로 존재하였던 朝貢冊封關係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시기에도 지속되는데 그 전형은 唐式帶金具의 분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진식대금구의 분배는 당식대금구 유행의 前兆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오영, 2004, 「진식대구의 남과 북」, 『가야사국제학술세미나 가야, 왜와 북방』, 김해시 박순발, 1997,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 임기환, 2003, 「남북조기 한중 책봉 조공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한국고대사학회
-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0, 『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 南京市博物館, 2008, 「南京大光路孫吳薛秋墓發掘簡報」, 『文物』 2008-3
- 豆海鋒·丁利娜, 2009, 「北方地區東周時期環狀青銅帶扣研究」, 『邊疆考古研究』 6, 吉林大學 邊疆考古研中心
- 北京市文物研究所, 2007, 『軍都山墓地—玉皇廟』, 文物出版社
- 孫機, 2001,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 楊建華, 2004, 『春秋戰國時期中國北方文化帶的形成』, 文物出版社
-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王仁湘, 1985, 「帶鉤概論」, 『考古學報』 1985-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袁臺子 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 李海榮, 2003, 『北方地區出土夏商周時期青銅器研究』, 文物出版社
- 田廣金·郭素新, 1986, 『鄂爾多斯式青銅器』, 文物出版社
- 町田章, 2006, 「鮮卑의帶金具」, 『東アジア考古學論叢』, 奈良文化財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4, 『中國考古學 兩周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夏鼐, 1972, 「晋周處墓出土的金屬帶飾的重新鑑定」, 『考古』 1972-4

[ABSTRACT]

A study on the exchange of ancient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reference to the distribution of belt

Lee, Han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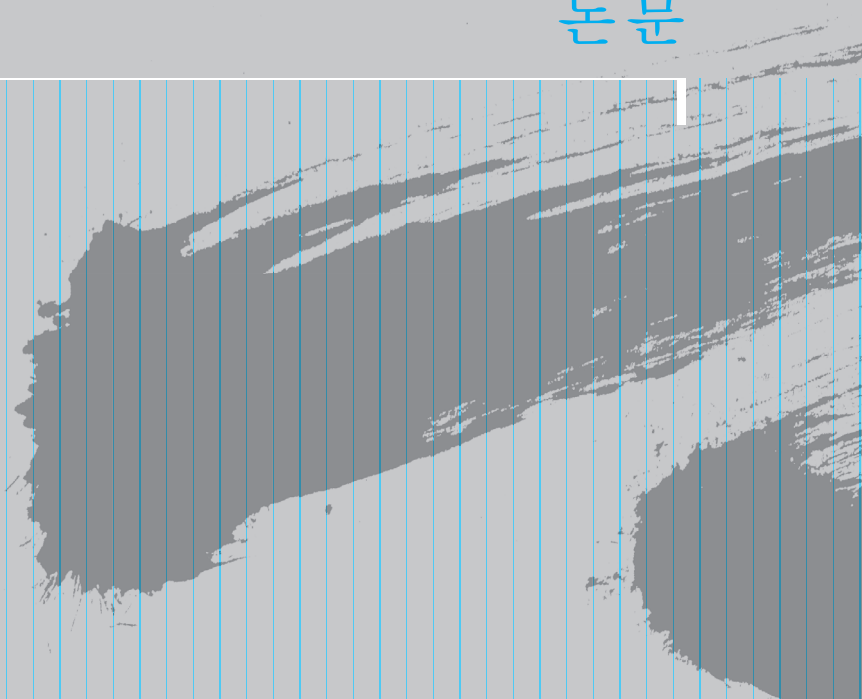
It is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when metal belt decoration was formed in north east Asia. In this period, there appeared various types bronze belt buckle in the central district and northern district in China. The difference of buckle and decoration of belt reflects the difference of cloth. Initially, buckle type in the central district and that in the northern district were developed separately, but in the long run, buckle type in the central district prevailed even in the northern district. Such archeological phenomenon is conjectured to be a result of the subjugation of northern tribes by Yan, Zhao and Qin through their north and west bound progress.

It was followed by the appearance of Qin type belt. Recent excavation confirmed this belt appeared in the later Han dynasty. Since Qin was found, its production increased with typical appearance. This belt was more widely distributed compare to that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It is limitedly found in the tomb of ruling classes in Three Yan, Goguryeo, Baekje and Japan. The background of such dispersion of Qin type belt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tributary and investiture relationship which existed as diplomatic formality.

keywords

northern district,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bronze belt buckle,
Qin type belt, tributary and investiture relationship

논문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강인욱 | 부경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최근 남한에서 청동기시대의 연구가 급증하면서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가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남한 청동기시대가 서북한과 동북한이라는 두 루트로 만주지역에서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 유입되어서 시작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를 좀 더 폭넓은 시야에서 논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실질적인 연구는 매우 적다. 그 이유는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자료는 대부분 해방 후~1960년대에 발굴된 것으로 북한에서 처음 고고학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굴된 것으로, 당시의 발굴 및 보고서의 수준은 지금으로 볼 때는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무산 호곡 발굴 이후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약 40여 년간에 북한에서 비교적 대형의 발굴은 온성 강안리와 회령 남산리(동

※ 투고일: 2011년 3월 30일, 심사일: 2011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북한), 표대(서북한) 정도이며 그 외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발굴자료가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현 단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남한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북한 고고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공통적으로 북한 자료의 빈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토기를 중심으로 교차편년 안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배진성, 2003; 김재운, 2004; 천선행, 2005; 최종모 외, 2006; 강인욱, 2007). 물론 세부적인 지역별 편년의 틀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자료의 빈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적인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 및 대안 제시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북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북한의 청동기시대를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의 형성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시공적인 문화 흐름을 살펴볼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단편적인 자료의 비교에서 머무르고 있는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접근을 좀 더 거시적이며 통시적인 편년체계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II. 무문토기문화권 속의 북한

1_ 북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남한에서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청동기 자체의 연구현황을 소개하는 경우(손준호, 2006; 장호수, 2009; 김미경, 2009)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 및 전기의 설정과 관련하여 그 계통과 기원지를 찾기 위한 것(배진성, 2003; 김재운, 2004; 천선행, 2005; 박순발, 2003; 中村大介, 2009)으로 남한 청동기시대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한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주로 남한과의 교차편년을 위한 출토유물(주로 토기)의 속성의 분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남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방향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개별 유물에 대한 비교에 앞서서 북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남한의 청동기시대 연구에 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안재호(2009)는 남한 청동기 연구를 '취폐식 편년방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남한의 최근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방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즉, 다양한 자료에서 연구자 자의로 특정한 기형이나 속성을 제시하고,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게 나열한 도면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안재호의 지적은 남한의 경우와 같이 지나치게 유물들이 많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형식적인 변천을 상정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반대로 북한의 경우와 같이 유물들이 지나치게 소략하고 그 맥락도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서로 완전히 상이한 남한과 북한의 자료를 별다른 비판 없이 하나의 방법(형식학 및 교차편년)으로 배열하는 것은 자칫하면 북한의 청동기시대를 도식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보면 남한의 경우 한정된 지역(남한)에서 비교적 단순한 유물조합(토기의 문양, 기형, 석기, 주거지)이 출토되는 형국이다.¹⁾ 따라서 새로운 유적이 발굴될 때마다 기존의 편년 안에서 속성의 조합 및 편년을 조정하는 치환체제(feedback)가 구축되었다. 남한과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지역별 청동기시대의 지역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며, 유적의 조사 빈도가 매우 높은 경우 이러한 치환체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간 균등

1) 예컨대 역삼동유형, 가락동유형, 혼암리유형과 같은 경우 주거지, 노지, 석기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유형의 분류기준은 토기의 구연부에 시문된 장식적 속성(단사선문, 공렬문, 구순각목 등)이다. 필자가 아는 한 토기 구연부의 장식적 속성이 하나의 유형을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는 동아시아 다른 지역의 청동기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남한의 청동기시대 유물조합에서 형식적 변이가 매우 적음을 잘 보여주는 예다.

한 편년체계의 수립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같은 방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의 경우 ‘뽕페식 편년방법’(비판에도 불구하고)으로 택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적으며, 새로운 자료로 보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남한의 방법론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즉, 북한과 남한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청동기시대라는 전제를 유지한 채 북한의 자료수준에 맞는 적합한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남한 학계의 기존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연구의 문화사적 편년 및 유형의 설정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다. 북한은 지역적으로나 문화양상로나 중국 동북지방과 남한의 중간에 놓여 있는 일종의 중간자적 역할이 강하다. 남한의 청동기시대에서 공렬, 구순각목, 이중구연 등의 토기 구연부에 시문되는 요소는 유형을 가르는 기준으로 거의 일반화되었으며, 토기에 주거지의 노지와 석검 등의 조합이 결합되면 확고한 유형 또는 문화로 통용된다. 이러한 남한에서 문화 또는 유형의 설정은 극히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인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무문토기라고 하는 기형이 단순하며 문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구연부의 문양요소를 기준으로 유형을 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동북지방의 경우 같은 무문토기라고 해도 다양한 문양과 기형이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한다. 따라서 토기 구연부의 속성(공렬, 이중구연, 돌대문 등) 일부를 중심으로 문화나 유형을 분리하는 남한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본다면 북한은 지역의 구분이나 문화 발전과정에서 남한과 비교했을 때에 시기적인 폭도 크며 유물 조합도 다양한 편인데, 이는 다양한 청동기시대 문화가 존재했던 만주 및 연해주지역과 인접했으며 남한과 달리 수전농경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신석기에서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는 전환기는 요서나 요동지역과 비교한다면 단조로운 패턴이다. 이와 같이 개별 유물의 요소만을 비교하기 이전에 북한지역의 유물의 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북한 청동기시대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검토

가 없었다. 남한 학자들에게 북한 청동기시대의 자료는 크게 남한에 소장되어 있는 실물자료와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로 나뉜다. 실물자료의 경우 최근에는 남한에 소장된 북한 청동기시대의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배진성, 2003·2007; 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실물자료의 경우 일제 때에 조사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자세한 발굴 및 출토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서울대 박물관 소장의 소유자 유적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발굴이 보고서로 나왔지만, 역시 각 유구별 정보는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다. 또한 웅기 송평동의 경우 수백 상자의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지만, 일부 유리건판 자료를 제외하고는 층위나 출토에 대한 자료도 없다. 사실상 지표조사로 채집한 유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물자료에 대한 자세한 실측과 분석만으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에서 출판된 발굴보고 자료 또한 한국과는 다른 맥락에서 보고 및 연구서가 출판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고고학에서 제시되는 도면이나 사진은 극히 일부이다. 하지만 1960~1970년대 북한 고고학의 발굴수준 및 문화해석의 수준을 볼 때 도면들은 자신들의 문화해석과 변천을 감안해서 엄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즉, 대표성을 가진 유물에 대한 소개를 할 뿐, 전체 유물의 자세한 변화는 도면으로 표현해 주지 않으며, 보고서나 논문의 서술로 문화의 변천을 설명한다. 최근 남한에서 북한의 자료를 분석하는 논고들은 기 출판된 도면들을 배열하고 형식학적 변천을 상정하여 편년을 하는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거슬러 올라가면 고토 다다시[後藤直]의 한반도 무문토기편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後藤直, 1971). 즉, 소수의 자료나마 그 안에서 형식학적 변천을 상정하고, 그 형식에 근거하여 시공적인 배열과 교류관계를 상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료가 극히 소략한 1970~1980년대 상황에서는 편년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2) 1980년대, 대체로 조선고고연구의 발간시기인 1986년 이후로 도면은 극히 조약해지며 논문과 연구의 수준도 저하된다. 1960년대에 주로 활동한 김용간, 김용남, 황기덕 등 북한 고고학 1세대가 활동을 멈춘 시기와 맞물린다.

채택될 수 있었고 이후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큰 틀은 유지된 채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청동기시대 토기의 속성들이 형식학적 변천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또 발표된 유물들이 각 문화들의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³⁾ 따라서 출판물로 입수된 북한의 자료가 형식학적 편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인지, 또 북한 학자가 보고한 도면이 자세한 토기형식의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 청동기시대를 남한 청동기문화의 기원지로 선형적으로 규정하고 기원이 되는 유적을 찾는다는 점이다. 남한 청동기문화가 북한지역에서 유입되었음은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 수준에서 북한의 특정한 문화나 유적이 남한 청동기문화의 기원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컨대 남한 청동기문화가 일본 규슈로 유입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자. 남한과 일본 규슈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유적이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어느 지역의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는 풀리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쇼다 신이치[庄田慎矢, 2009]가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주장한 경우도 있지만, 작금 남한 학계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돌대문, 송국리형토기 등 특정한 요소가 한국 어느 유적에서 일본으로 갔다고 볼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 없다. 하물며 현재 남한보다 자료와 연구의 수준이 수십 년 뒤쳐진 북한에서 하나의 유적 내지는 지역을 기원지로 지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나의 점 찾기’는 북한에서 보고된 일부 유물들에 보이는 요소가 남한 청동기시대의 기원으로 상정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단편적으로 보고되는 북한의 토기의 소략한 도면에서 보이는 일부 유물을 남한 청동

3) 형식학적 편년체계의 구축에 앞서서 과연 토기가 민감하게 형식학적인 변천을 민감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점은 비단 북한의 경우만이 아니다. 남한의 예를 들어보자.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에서 출토된 엄청난 양의 무문토기를 형식학적 분석을 통해 배열한다고 해도 전체 문화사적 편년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형식학적 방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기형과 문양이 단순한 무문토기는 분명히 형식학적 변천이 뚜렷한 일본의 야요이토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형식학적 변천과 교차편년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시대의 형성과 관련시켜서 유력한 증거로 보는 점이다. 문제는 단편적인 북한 자료에서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남한 자료 역시 북한과 똑같은 자료수준으로 해석하려는 점이다. 한반도의 여러 유적에서 소수로 보이는 전환기나 요동 지역의 토기에 대해서 자세한 고찰이 그 좋은 예다. 예컨대 돌대문토기의 기원 지에 대한 연구와 요동지방과 서북한 계통 토기의 유입에 대한 연구를 보자. 서북한 지역에서 유입된 횡침선문계(雙砬子 3기문화계통)나 동해안 일대의 파수부형토기 등에서 보이는 외래계 토기를 한반도 무문토기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주, 요동지역과의 원거리 교류를 보여주는 토기의 양은 전체 남한 출토품과 비교할 때 정확한 통계는 내기 어려우나 아마 수천분의 일도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소수의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지역 간의 교류(interaction)’로 보는 것이 맞지 특정한 문화와 기를 대표하는 유물들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소략하다(강인욱, 2007).

네 번째로 북한의 유적과 유물을 비교하는 데 북한 고고학의 형성과 문화 변천의 인식에 대한 학사적 검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⁴⁾ 북한 보고서의 특징, 유물에 대한 인식, 마르크시즘적인 연구 등에 대한 천착이 없는 하에서 기 출판된 도면만을 사용하여 계통론에 의거한 논의는 안 그래도 부족한 자료의 가치를 더욱더 떨어뜨리게 된다. 북한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인 궁산, 범의구석, 회령 오동, 나진 초도는 모두 해방 직후 10여 년 내에 발굴된 것이다. 해방 후에 북한 학계는 『문화유물』이라는 잡지에 소련의 고고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한창균, 1994), 문화유산에 관한 여러 규정 역시 소련의 예를 참고한 것이다. 당시 북한의 고고학을 선도한 도유호는 필자가 아는 한 발굴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초기의 발굴(나진 초도, 궁산, 안악 3호분 등)에 대한 기록을 보아도 소련과 중국에서 고고학 인력을 지원받거나 야외고고학을 직접 배운 증거는 없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독학으

4) 원래 본고에는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학사적 검토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부득이 본 논문에서는 제외시켰다. 학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별고로 미루겠다.

로 야외고고학을 발전시킨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 및 문화 변천에 대한 해석도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문헌사와 갑골문 등의 자료에 근거한 전통적인 문화사적 편년체계가 굳건히 잡혀진 중국과 달리 북한은 보고서의 제작과 유물, 문화의 기술을 완전히 새롭게 이루어내었으며, 그 모든 작업이 해방후 10여 년 내에 기틀이 이루어졌다.⁵⁾ 사회주의권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고고학의 형성과정은 매우 독특하며, 그들이 서술했던 보고서 역시 자신들이 세웠던 고고학에 대한 인식과 체계에서 비롯됨은 자명하다. 이러한 북한 고고학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들의 분석은 결국 한계에 빠지게 될 것이다.

2_ 북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방법론 제시

위에서 현재 북한 청동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연구의 몇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해보았지만, 이 문제는 연구자들 개개인의 한계가 결코 아니다. 남한 고고학을 하는 우리가 처한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되어서 북한을 가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북한과의 데탕트가 조성되어 자료를 실견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를 기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시야를 넓혀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자.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개방되어서 많은 공동조사와 답사가 이어졌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북한 고고학 자료를 실견하고 조사하는 때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북한 고고학의 자료적 특성을 감안한 시공적 편년 틀을 정리해야 한다. 북한 청동기시대는 남한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자료의 수준이 나아질 수 없으며 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마 자료의 접근성으로 본다면 동

5) 1980년대 말 체계적으로 도유호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북한 고고학의 본질을 알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 고고학에 대한 흥미가 급격히 감소하며 자료로서의 북한 자료로만 남아 있게 된 것은 매우 아쉽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 나라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 만주, 연해주에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으로 주변지역의 자료를 통한 연구의 보완이 가능하다. 다행히 최근에 남한과 중국, 연해주에 대한 자료는 증가하며 그 연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으로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자료의 천착’-‘지역 및 분기의 설정’-‘주변지역 자료의 비교’-‘편년체계 및 유형의 수립’-‘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성격규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질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북한 자료가 극히 단편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남한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에 아마 수백분의 일도 안 되는 수준일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고고학 자료가 어떠한 과정과 연구의 원칙을 통해서 얻어지고 보고된 것인지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남한과 가장 인접한 지역임에도 극히 소략하고 제한된 정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자료 자체를 증가시킬 수는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자료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단순하게 보고서에 실린 소략한 도면과 발굴 자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고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보고되는 북한 자료들의 의의를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한 연구자들은 제시된 도면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 남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자료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50여 년 가까이 지난 자료를 현재의 자료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대부분의 북한 자료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자료’라는 생각으로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학사적인 의미파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주변지역의 자료를 참고하여 북한지역 연구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다(강인욱, 2007). 당시의 사례가 된 두만강유역은 표지유적이 아주 많으며 상대적으로 국경지역에 인접한 탓에 주변지역과 많은 비교를 할 여지가 있었다. 특히 연해주의 초기 청동기자료를 비롯해서 和龍 興城과 같은 만주지역에

서 보기 드문 다층위 유적이 북한과 강을 마주한 지역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한편, 서북한의 경우도 요동지방의 다양한 발굴자료가 있으며, 요동반도에서는 大嘴子和 같은 雙砬子 3기를 대표하는 대형 취락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 최근에는 通化 万發撥子(王綿厚, 2001)를 비롯하여 압록강 중상류지역에서도 무문토기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황해도나 강원도 북부와 같은 남한과 인접한 지역은 남한의 자료로 그 편년을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방법론을 종합하면 북한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연장선상에

〈표 1〉 북한과 한국 무문토기의 비교연구를 위한 방법론 시안

제1단계	<u>기본자료의 수집</u> (illustration + texts)	<u>학사적 배경</u> (마크시즘, 반학파, 반일적 풍토 등)
제2단계	<u>무문토기문화권 안의 북한지역 구분 및 편년체계수립</u>	
	a) 무문토기문화권의 설정	
	b) 북한의 권역설정: 두만강유역권	a) 내륙유형 b) 연해유형
	압록강하류유역권	(신암리)
	압록강중상류유형	(공귀리, 심귀리)
	서북한권	팽이형토기문화권
	함남·강원북부권	금야유형
	b) 편년체계: 신석기시대 말기-전환기-전기-중기-후기	
제3단계	<u>접경지역의 신자료를 통한 북한 자료 비교</u>	
	두만강 내륙 - 연변지역과 연해주내륙	
	두만강 연해 - 연해주 해안가	
	압록강중류 - 요령성 통화, 집안, 송화강상류지역	
	압록강상류 - 요중지역, 요동반도지역	
	함남·강원북부 - 강원도 및 한강상류지역	
	서북한 - 한강중하류지역과 비교	
제4단계	<u>시공적 편년자료에 의거한 유형과 분기 설정</u>	
제5단계	<u>주변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북한 청동기시대 문화발전의 특성 규명</u>	

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한 청동기시대에서 중심이 되는 문화 사적 편년 방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과 시공간적으로 차이가 많은 지역과의 일차적인 대응관계만을 고찰하면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청동기를 동아시아 무문토기의 형성이라는 커다란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동아시아 청동기시대의 변화라는 큰 틀을 세우고, 현재의 국경을 차지하고 유물상으로 지역군을 분류하여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하여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 출현하는 청동기시대의 편년과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제기하는 거시적 관점의 북한 청동기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3_ 북한 청동기시대의 지역분류와 획기

1) 한국 고고학과 문화권

필자가 시도하려는 연구의 틀은 거시적인 동북아시아 청동기의 변화과정에서 북한의 청동기시대를 파악하는 것이다.⁶⁾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동기시대 연구의 시공적인 틀을 대입할 수는 없다. 또한 북한 청동기시대 자료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자료를 이용해서 그 자료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화상에 근거한 광역의 연구범위가 필요하다. 선사시대의 문화가 현재의 국경과는 전혀 무관함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남한’, ‘북한’, ‘중국 동북지방’ 등 연구의 편의에 근거하여 지역적인 구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한다. 다소 자의적인 이러한 구분은 소지역의 편년체계를 세분하는 데에는 장점이 되겠지만, 문화의 시공간적

6) 필자는 광의의 문화권 설정을 환동해지역으로 시도한 바 있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문화권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같다(강인욱, 2009b 참조).

인 범위를 단속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을 보는 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 청동기시대를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을 걸쳐서 무문토기, 석검, 잡곡농경 등 유사한 생계체계에 근거하는 커다란 문화권을 묶고 그 안에서 북한의 청동기시대의 편년과 문화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연구의 틀을 위해서는 현재 남한 청동기시대의 ‘문화’보다는 좀 더 느슨한 구조이나 광역인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권은 각 지역 또는 국가의 연구자들이 규정한 고고학적 문화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며(W. A. Ashmore & R. J. Sharer, 2000),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로 생계경제 및 기후환경의 상사성에 기인한 문화적 교류관계가 심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무문토기문화권에 적용시킨다면 마을의 형성, 잡곡농경, 무문토기, 마제석기를 주로 사용하며 청동기의 일부 사용 등을 공통으로 하는 기원전 2~1천년기의 시간적 폭에 만주, 연해주 남부,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하는 공간적 폭이 된다. 물론 문화권의 범위와 기준은 각 연구자들이 속한 학문적 배경과 대상으로 하는 유물·유적의 양적 분석과 시공간적인 경계에 따라 달라진다.⁷⁾ 따라서 문화권의 분포 범위는 학자들의 정의와 문제의식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다.

문화권의 하부단위로는 문화와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는 한국 고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고고학적 문화단위를 말하며, 지역은 대체로 하나의 문화를 포괄하는 지역적인 범주를 말한다.

문화의 하부단계로는 유형을 설정한다. 최근 한국 고고학계에서 유형과 양

7) 러시아에서는 스키토-시베리아유형의 세계, 중국에서는 구계유형론으로 대표되는 각 지역 문화권의 설정이 있다. 스키토-시베리아유형의 경우 흑해연안에서 오르도스, 바이칼 지역에 이르는 수천 km의 초원지대에서 마구, 무기, 동물장식이라는 소위 ‘스키타이의 삼요소’로 대표되는 상이한 유물들이 출토된다. 이러한 문화권의 설정은 초원지대라는 상이한 경제체제에 기반한 각 지역의 문화상에 기인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시도는 大貫靜夫(1998)가 신석기시대를 ‘극동평저토기권’이 있으며, 한반도 동해안에서 연해주, 아무르강 하류를 잇는 환동해선사문화권도 제기된 바 있다(강인욱, 2009a).

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 바(한국고고학회 편, 2008), 여기에서 필자의 정의를 분명히 해보겠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나뉜다(강인욱, 2009a). 첫 번째로는 새로운 물질문화의 요소를 내포하는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시론적인 단계에서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문화는 시공적으로 특정한 집단이 독특한 문화를 영위했을 때에 명명된다. 즉 하나의 유적만으로는 주민집단이 번성했음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형은 새로운 문화적 속성을 지닌 집단이 발견되었을 때에 설정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다. 즉 발굴시에 층위적으로 명백한 선후관계가 증명되고 유구의 흔적이 분명히 확인되었을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문화보다는 작은 단위로 하나의 문화에서 세분할 수 있을 때에도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기존에 알려진 문화와 비교적 친연성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에 특정한 문화의 하위단위로 유형이 설정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개념은 문화의 하위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실제 문화를 인지하는 중간단계일 수 있다. 두 뜻이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면서 귀납적으로 문화와 유형을 설정하기 때문이다(강인욱, 2009a).⁸⁾ 유형의 하위개념으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식(type)과 기(phase)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식은 주로 공간적으로 특정한 유물 또는 유물군이 확인될 때에 붙일 수 있다. 반면 기는 특정한 유물군이나 유물이 시간적으로 변천하여 서로 차이가 있을 때에 붙일 수 있다.

이상 필자가 생각하는 청동기시대 문화의 시공적인 틀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8) 유형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유형이 문화의 하위단계 또는 전단계로서 사용되는 경우(period)와 일정한 속성의 조합이 묶여서 나타나는 유물의 복합체라는 의미로 혼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재호(2009)는 이것을 두 가지 개념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고 유형을 양식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했지만, 실제 새로운 유물 복합체가 확인되고 그를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유형과 양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상에서 혼란을 주는 두 개념을 분리시키자는 안재호(2009)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지만, 고고학에서 '양식'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조몽토기 및 야요이토기에서의 지역 간의 차이를 가능하는 주요 구성단위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특정한 시공간적인 집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양식(style)이라는 용어가 과연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적용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표 2〉 문화권과 문화의 서열

문화권(cultural area)	——	문화(culture)	——	유형	——	식(type)
						(유물조합의 공간적 분포에 근거)
						—— 기(phase)
						(시간적 변화에 근거)

2) 무문토기문화권의 정의와 설정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형성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경(북한, 남한, 중국 동북지방)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청동기시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시공간적인 틀이 필요하다. 대체로 한반도와 만주지역은 기원전 20~15세기를 전후해서 무문토기 또는 협사갈도로 대표된다는 무문의 호형 또는 심발형 기형의 토기문화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물론 지역별로 세부적인 편년과 문화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무문토기의 문화변천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북한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와 만주지역 일대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체로 저화도 소성, 사질계 태토에 모래가 섞인 태토, 수제, 호형과 심발형을 위주로 하는 기형, 무문양 등을 특징으로 하는 토기들이 등장한다. 중국어로는 대체로 ‘夾砂褐陶’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모래가 섞인 갈색 토기라는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무문토기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협사갈도’는 무문토기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무문토기문화권은 동북아시아에서 ‘협사갈도’가 토기의 주류를 이루며 정착과 농경에 근거하여 마을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무문토기문화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살펴보자.

먼저 요령성지역의 경우 초기 청동기시대에는 요령 중부의 高臺山문화가 대체로 경계가 된다. 高臺山문화는 일부 기형은 夏家店下層文化의 영향을 받았으나 장정호와 양이부호를 근간으로 하는 토기상이 위주이다.⁹⁾ 요동반도의 경우 雙砬子 3기문화가 해당이 된다. 송화강유역의 경우 기원전 15세기를 전후로 해서 문화상이 불분명했으나 최근 小拉哈유적이 조사되고(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98) 그 문화상들이 알려지면서 무문토기문화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小拉哈문화 이후 白金寶문화 단계에서는 삼족기와 같은 새로운 기형 등장, 채도와 지그재그문 등이 시문, 승석문의 등장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은 무문토기문화권에서 다소 벗어난 듯하다. 특히 花邊鬲, 승석문이 시문된 회색 니질계의 삼족기 등 중국 북방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형이 유입된 것은 이 당시 북방초원계 문화가 이 지역으로 유입된 결과로 생각된다¹⁰⁾. 동북 쪽으로는 연변과 흑룡강 동남부의 목단강일대 등 동해안지역까지는 고르게 무문토기계통이 일관되게 출토가 된다. 연해주의 경우 '고금속시대'로 통칭되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는 고르게 무문토기¹¹⁾가 출토가 된다. 연해주의 북쪽으로 보면 대체로 한카호를 경계로 유적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아무르강 중·하류인 하바롭스크지역 일대에서는 무문토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때 대체로 한카호 정도를 경계로 할 수 있다. 산동반도와 연결한 요동반도지역의 경우 산동지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雙砬子 2기문화와는 구별되게 잡곡농경에 근거해서 강가의 충적지에 대규모 마을을 이룬 雙砬子 3기문화부터 본격적으로 무문토기문화권으로 편입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9) 물론, 무문토기문화권은 시기에 따라 그 지역적 범위가 변화한다. 예컨대 요서지방 대릉하지역의 위영자문화나 십이대영자문화 역시 무문토기문화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하가점상층문화의 협사갈도와 홍도들도 무문토기로 편입할 가능성도 있다. 조금 더 늦은 시기로 가면 내몽고 水泉유적의 점토대토기 계열도 포함시킬지 애매하다. 필자가 실견한 자료들은 무문토기의 계통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지만, 공반된 유물이나 생계경제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0) 최근 白金寶유적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그 주요한 성과는 한국에도 소개되었다(이중수, 2009).

11) 러시아 학계는 무문토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바, 여기에서는 필자의 유물관찰에 따른 것이다.

연해주 남부지역은 대체로 한카호일대까지는 무문토기가 발견된다.

이상과 같은 무문토기문화권은 시기별로 또 자료의 증가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한반도와 북쪽으로 인접한 만주지역의 청동기시대는 다른 지역(초원, 중원, 극동의 寒帶지역)과는 구별되는 잡곡농경과 무문토기에 기반한 문화권이 존재하며, 그 한가운데에 북한이 위치한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북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무문토기문화권의 지역권 설정

북한의 청동기시대는 사회주의의 특성상 1960년대부터 거점위주의 발굴을 했기 때문에 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사된 지역이 비교적 용이하게 분류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압록강하류지역으로 신암리 및 미송리유적으로 대표된다. 이 지역은 시기별로 압록강 건너편의 중국 丹東地區와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며 청동기시대로 진입한 이후에 미송리형토기로 대표되는 요중~요북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유입되된다. 또한 카라숙식 청동기도 신암리에서 발견되어서 전반적으로 요령지역 청동기시대의 문화변천과 맥을 같이한다.

두 번째 권역으로는 압록강중상류지역으로 심귀리, 공귀리 등으로 대표된다. 이른바 공귀리형토기와 이중구연토기 등이 주류를 이루며 압록강하류역과는 달리 기종이 호형, 심발형, 발형 등으로 단순화되며 순수한 무문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자강도의 내륙지역에서는 별다른 유적이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압록강 북안의 중국 측에서 거의 조사가 된 유적이 없으나, 최근에 五女山城의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어 이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지역으로는 두만강일대이다. 이 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함경북도 두만강유역(무산~나진일대), 한카호를 경계로 연해주의 남부지역,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延吉, 琿春, 龍井, 和龍과 흑룡강 동남부의 牡丹江유역에서는 宋嫩平原, 한반도 북부지역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문화권이 존재했다.

이 지역은 대체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을 말한다(강인욱, 2009). 무산 범의구석, 회령 오동, 서포항 등 1960년대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지역 무문토기는 연변 및 연해주 남부 일대와 같은 맥락이다.

네 번째 지역은 금야-토성리유형으로 대표되는 함경남도~강원도 북부일대이다. 비교적 적은 유적이 조사되었지만 공렬토기와 낮은 두형토기로 대표된다. 그 권역은 함남일대에서 량강도 내륙일대로도 확산된 것 같다. 량강도는 북한 고고학의 불모지에 가깝지만 소규모로 량강도 갑산군 금화리, 신덕리와 사평리에서 일부 청동기시대 유적이 조사되었다. 도면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꼭지형 손잡이가 있는 토기, 구연에 단사선문을 새긴 흑도(검정간그릇), 공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김용준·안영간, 1986). 금야-토성리유형의 남쪽 경계(북한영토 기준)에는 강원도 원산 중평리가 있다(리장섭, 1958). 유정식 석검, 반월형 석도 등이 출토되었으며 토기로는 굽달린 토기 저부, 공렬토기, 희미한 단사선문 등이 출토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중평리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전통이 남아있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생각되며, 함경남도~강원도지역의 전환기 양상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준다.

다섯 번째 권역은 팽이형토기문화로 대표되는 청천강이남~대동강유역이다. 주요 분포지는 대동강유역, 재령강유역, 임진강유역 등이다. 팽이형토기는 지역적으로 뚜렷하며 유물조합에서도 독립성이 강해서 그 권역을 나누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팽이형토기문화는 1980년대 이래로 최근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다(최종모 외, 2006). 그런데 황해남도에서 청동기시대 토기가 반출된 유적은 석교리가 유일하다. 하지만 남한에서 팽이형토기계통이 반출되는 연천 삼거리, 강화 삼거리 등은 순수한 팽이형토기문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성과 황해남도의 남부에는 팽이형토기와 남한의 공렬토기문화권의 접이시대 같은 지역이 존재했을 것으로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청동기시대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찰은 불가능하다.

4) 무문토기문화권의 획기안

필자(2007)는 이미 두만강지역의 편년을 통해서 커다란 문화적 변천을 ‘전환기’-‘전기’-‘후기(전)’-‘후기(후)’로 세분한 바 있다. 두만강유역에서 ‘후기(전)’은 대체로 기원전 7~8세기이기 때문에 남한 청동기시대의 구분에 따르면 ‘중기’라는 명칭도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두만강유역에 대해서 굳이 ‘후기’라고 규정하고 이를 다시 ‘후기(전)(柳庭洞 전기)’과 ‘후기(후)(柳庭洞 후기)’라고 나누는 이유는 연해주의 경우 철기시대(안콥스키문화)가 기원전 8세기대에 이미 시작되어서 두만강유역의 시기구분이 방법이 기타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만강의 분기 명명을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면 전체 무문토기문화권의 분기는 ‘전환기’-‘전기’-‘중기’-‘후기’-‘철기시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¹²⁾

그 특징을 요약하면 ① 무문토기와 즐문토기가 혼재하는 ‘전환기’, 기원전 20~15세기, ② 완전히 무문토기로 재편되며 청동기와 석묘(고인돌과 집단식 석묘를 통칭)가 출현하는 시기(전기), 기원전 15~11세기, ③ 미송리형토기문화, 대련의 적석묘군, 팽이형토기 등 각 지역이 비교적 큰 무문토기문화권으로 통합되는 ‘중기’, 기원전 11~9세기, ④ 각 지역은 비파형동검의 확산, 팽이형토기문화 등 동검과 석검으로 대표되며 유적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 기원전 9~5세기(후기), ⑤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전통이 사라지는 ‘철기시대’, 연국의 팽창에 따른 비파형동검문화권의 와해, 남한은 점토대토기의 등장, 동북한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성립 등으로 정리된다.

12) 철기시대는 전반적인 문화 흐름을 위하여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청동기시대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글에서도 자세한 분석은 생략했다. 물론, 철기시대라고 해도 기본적인 문화 양상은 청동기시대의 연장선상이며 철기의 사용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은 남한의 경우와 유사하다.

Ⅲ. 북한과 주변지역의 청동기시대의 시기별 제 양상

위에서 상정한 무문토기문화권과 지역분류에 근거하여 북한 무문토기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겠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세부적인 교차편년 및 토기의 형식변천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되어가는 청동기시대의 전개과정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¹³⁾ 이에 무문토기가 확산되어가는 전환기, 각 지역이 무문토기에 근거한 청동기시대대로 재편되는 전기, 馬城子-미송리문화의 토기가 확산되어가는 중기,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 등으로 세분하여 새로운 문화의 요소가 유입되어 북한의 청동기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변천을 설명하고 그 변화가 북한에 어떻게 미치는 지를 살펴보겠다.

1_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기의 제 양상

전환기 무문토기의 형성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송화강중류의 小拉哈유적이 주목된다. 小拉哈유적은 신석기 이후 청동기시대인 白金寶문화의 사이에 기원전 2000년기 중반대의 공백을 메워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도면 1). 小拉哈유적은 초기에 심발형토기 중심의 무문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층위적인 서열을 보면 小拉哈문화 이후에 형성된 白金寶유적은 타날문 삼죽기, 기하학문이 시문된 토기 등 강한 초원문화계의 영향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 학자의 편년을 따라서 기원전 2000년기 초중반에 무문토기가 등장한 이후에 白金寶문화로 전환되면서 무문토기문화권에서 이탈함을 뜻한다. 송화강중류에서 무문토기가 사라지는 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기원전 15세기경에 만주와 한반도는

13) 최근에 북한의 세부적인 지역별 편년을 다루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서북한~요동지역(宮本一夫, 1993; 김미경, 2006·2009; 中村大介, 2008)과 동북한~연해주지역에 대한 교차편년이 주를 이룬다(김재운, 2004·2007; 강인옥, 2007).

급격히 무문토기문화권으로 재편된다는 점은 무문토기의 기원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한편 같은 시기 高臺山문화의 유적에서는 층위별로 문화상이 뚜렷한 유적으로 平安堡(도면 3)와 阜新 平頂山유적이 있는데, 平頂山유적의 경우 夏家店上層文化에서 高臺山문화로 바뀌는 양상을 볼 수 있다(도면 2). 따라서 遼北의 서쪽은 夏家店下層文化에서 무문토기로 전환되는 양상이라고 생각된다.¹⁴⁾

북한에서 전환기의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지역은 압록강하류유역과 두만강유역이 있다. 두만강유역의 경우 필자의 견해는 정리된 바(강인욱, 2007) 있어서 간략히 살펴보면 흥성유적에서는 신석기문화층과 청동기시대층이 비교적 분명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하지만 延吉 金谷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에서 대형 무문토기 용이 출토된 바 있어서 역시 전환기의 점진적인 무문토기화를 짐작할 수 있다. 김재운(2009)은 동북한에서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다층유적인 서포항에 대한 재편년을 시도해서 기존의 신석기시대 5기는 전환기이며, 그 이전의 1~4기도 큰 시간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 바 있다. 따라서 따라서 서포항 3·4기는 '서포항 후기유형'으로 볼 수 있고, 5기는 전환기로 생각된다.

서북한지역은 청등말래-石佛山유형으로 대표된다. 기원전 2천년기 전반기 또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주는 신암리 청등말래유적과 같은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은 문자산, 석고산, 石佛山 등 丹東地區와 요동반도 서북단 일대에 분포한다. 청등말래-石佛山유형은 무문토기와 즐문토기계통이 약 1:1 정도의 비율로 발견된다. 청등말래는 침선문계가 많으며 石佛山유적에서는 무문토기계통이 증가하는 양상이다(김종혁, 1991). 즐문토기계는 동체에는 침선문물, 구연에는 돌대문을 돌린 것이 특징이다(도면 5·6).

한편 다소 동쪽과 남쪽으로 내려오면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무문토기가 뚜

14) 고대산문화의 편년에 대해서 최근에 천선행(2010)은 종합적인 편년을 시도한 바 있다.

렷하게 공반하는 양상은 미미해진다. 압록강중상류지역의 경우 전환기의 양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五女山城(李新全 外, 2004·2008) 1기 신석기시대층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무문토기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전환기의 양상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팽이형토기문화의 경우도 전환기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 이는 압록강유역과 차이로 아마도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팽이형토기문화에서 남쪽으로 나아갈수록 이러한 전환기 양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팽이형토기문화의 경우 정가와자 하층 또는 偏堡 유형과 같이 신석기시대 말기에 덧띠토기를 한 호형토기가 남경유역에서 발견된 바 있다(도면 6). 남경유적 31호는 이러한 덧띠토기 신석기시대 토기, 즐문토기 등이 혼재하여 현재까지 팽이형토기문화의 가장 뚜렷한 전환기적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석기시대 말기의 덧띠토기는 대동강유역에서 남경유적 이외에는 출토된 바가 없는바, 대체로 서북한-丹東地區의 영향이 일부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함남지역의 경우 워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단지 강원도 중평리에서는 공렬토기와 단사선점열문으로 소위 '강상리유형'의 문양이 시문된 빗살문토기가 같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같은 시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 2008년에 예맥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평창 후평제유적에서도 빗살문토기와 공렬토기가 같이 출토된 바가 보고된 바 있다(강인욱, 2009c). 약간 지역적으로 달리하지만 경기도 강화 삼거리에서도 빗살문토기와 공반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막연한 추론에 가깝지만 최소한 압록강하류나 두만강유역과 비교해서 지나칠 정도로 전환기적 양상이 없다. 따라서 금야-토성리유형으로 대표되는 함남지역도 한강유역의 전환기적 양상과 맥락을 같이해서 뚜렷한 전환기적 양상이 없이 일부 빗살문토기가 무문토기와 공반하는 식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2_ 전기: 각 지역별 청동기문화의 형성

이 시기는 지역에 따라 무문토기에 기반한 청동기시대문화가 성립되는 시기이다.

요중-요북지역의 高台山문화 및 順山屯유형은 요서지방과 요북지방의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가점상층문화와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기형으로는 壺, 甗, 鼎, 碗, 甗, 甗 등이 있어서 요서지방의 하가점상층문화 및 하가점하층문화와 유사하다. 반면에 표면에 홍의를 입힌 소구장경호와 동체 중앙부에 손잡이를 부착한 兩耳壺는 高台山문화의 특징이다. 수제이며 조성온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태토로 보면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보이는 니질갈도는 보이지 않으며 험사갈도가 주를 이룬다. 묘장으로는 토광묘가 주류를 이룬다. 康平縣, 法庫縣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順山屯유형은 주로 삼족기, 력, 정 등이 있으며, 돌대문¹⁵⁾(附加堆文)이 부착된 것 이외에 별다른 문양은 없다. 묘제는 토광묘이다. 한편 西豐縣, 開原縣, 昌圖縣 등지에 분포하는 涼泉문화¹⁶⁾는 주로 점토대토기의 등 주로 길림성과 접경지역에 분포한다(鐵嶺市博物館, 1991). 김미경(2009)이 최근 논고에서 涼泉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한국에서는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토기만을 涼泉문화로 보아서 청동기시대 후기~초기 철기시대만으로 한정하려 하지만, 중국에서는 요북지역의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전 시기를 의미한다. 특히 나팔형의 긴 굽을 가진 豆形土器나 鼎이나 甗과 같은 삼족기도 존재해서 이 지역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유물조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望花類型은 주로 鐵嶺, 法庫, 康平縣 등의 동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토기로는 주로 壺, 罐, 鉢, 碗 등인데 특히 정 비율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馬城子문화(도면 4)는 太子河상류인 本溪縣을

15) 띠를 부착하고 그 위에 지두문을 누른 문양기법으로 돌대문의 일종이나 한반도 돌대문토기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부가퇴문이라는 중국 용어를 사용한다.

16) 이 글에서는 涼泉문화를 점토대토기를 위주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이 아니라 요북지역 청동기시대를 아우르는 중국 학자의 개념에서 설명한다. 이는 중국 학자의 문화적 구분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涼泉문화로 규정된 유물 중에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의 유물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중심으로 분포한다. 토기는 주로 壺, 罐, 鉢, 碗 등이 많으며, 삼족기는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요동지역 석관묘출토 토기들과 유사한 양상이 보이나, 그들보다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新樂上層이나 老虎沖유형 등 중국 학자들이 많은 유형을 제기한 바 있는데, 학자 간에 상대적으로 문화 또는 유형들이 소지역화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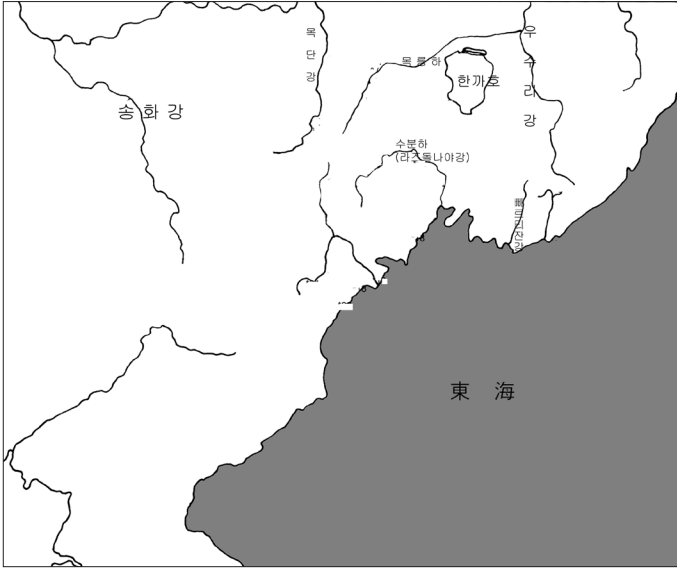
두만강유역은 구연부에 돌대문이 부착된 심발형토기를 표지로 하는 홍성 3~5기층 및 오동유적으로 대표되는 오동유형이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돌대문토기를 위주로 하는 유적은 회령 오동이 대표적이다. 회령 오동 2~4기는 각각 和龍 興城의 3~5기와 대응된다. 따라서 기원전 15~11세기의 돌대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문화단계를 ‘오동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단계에 연해주 지역은 신석기시대의 영향이 많이 남은 마르가리토프카문화가 대표적이다. 김재운 외(2006)가 소개한 레티호프카유적도 이 단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 시기는 특히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의 진입과 함께 돌대문토기가 변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기원전 15~11세기에는 심발형토기+외반구연 호형토기+완이라는 토기조합이지만 심발형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오동 2기는 홍성 3기와 최대경이 구경인 심발형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오동 3기는 각각 홍성 4기와 대응된다. 홍성유적과 회령 오동유적의 관련성은 주거지의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홍성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2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면적은 20~40m² 정도이다. 노지는 주로 토광식이며 주거지의 한쪽 단변 쪽에 위치한다. 돌대문토기를 조기로 설정하는 연구자들의 증가와 함께 돌대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문화단계는 정착이 되고 있다. 돌대문토기의 서북지역 기원설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주로 돌대문토기 주거지, 위석식 노지, 삼각만입축을 공반하는 조합 등을 든다(천선형, 2005). 서북한 기원설의 근거는 첫 번째로 돌대문토기가 서북한(청천강, 압록강중상류, 요동반도) 등에서 발견되며, 동북한지역은 공렬문토기의 기원지로 송평동유적의 반관통공렬문이 그 증거라는 점에서 근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북한 기원설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순수한 돌대문토기 단계의 문화유적이 명확하게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동기시대의 기원이 서북한 내지는

요동지방이 기원이라는 선협적인 전제하에서 전파 루트를 상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서쪽 루트가 지목되는 이유는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적 영향이 강하게 보이며 농경의 전파도 서북한 루트였을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하지만 돌대문토기의 주요 요소로 꼽히는 위석식 노지, 장방형 주거지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이다. 동북한 나진 초도에서도 장방형의 주거지에 위석식 노지가 발견되었다. 패총이라는 유적의 특성에 당시 발굴의 기술로 주거지의 윤곽은 제대로 잡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회령 오동에서 순수 돌대문토기 출토단계인 2기에 편년되는 8호 주거지, 3기의 1호 주거지도 위석식 노지를 사용했다. 또 4기인 4호에서는 부정형의 강돌로 만든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동북한지역은 청동기시대 중기로 넘어갈수록 위석식에서 토광식으로 바뀐다.¹⁷⁾ 또한 삼각형만입석촉 역시 동북한에서도 공히 나오는 유물이다. 따라서 개별요소의 유무로 전파 루트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서 연해주-연변-두만강하류역의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출현한 돌대문토기가 돌대문토기의 기원이었으며, 이 토기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과정 중 하나로 남한에 돌대문토기 관련 유적이 남겨진 것으로 본다.¹⁸⁾

반면에 延吉-연해주-두만강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청동기시대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대문토기가 존속한다. 또한 즐문토기와 무문토기의 이행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후한랭화에 따라서 기원전 15세기에 대형 옹과 심발형 토기를 주로 하는 토기 조합에 잡곡농경이 이루어졌다(강인욱·김재운, 2004; 김재운, 2003·2006; 강인욱, 2007). 신석기시대 말기(기

17) 남한에서는 김재운(2003)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18) 현재 청동기학계에서는 남한으로의 돌대문토기 확산과정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 부분은 별고로 고찰하겠다. 왜냐하면 필자가 위에서 밝힌바, 북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지역별 문화사적 편년체계가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성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을 간단히 밝힌다면, 현재 발견된 남한의 돌대문토기 관련 유적만으로는 순수한 돌대문토기라는 분기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은 두만강유역에서 전기-중기로 넘어가는 문화적 변동과 비슷한 시기에 남한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 1〉 청동기시대 전기 동북한지역 돌대문토기의 분포양상

원전 2500~1500년에 돌대문토기를 위주로 하는 빗살문토기(자이사노프카문화)는 주로 중국 목단강유역~러시아 한카호유역에서 발견된다.

〈표 3〉 두만강유역 일대의 돌대문토기의 분포범위

연대 (기원전)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한카~ 목단강	압인점열문 (자이사노프카초기)		즐문돌대문 (자이사노프카문화)		돌대문(마르 가리토프카 문화)	퇴화돌대문+ 외반구연호 (시니가이- 아누치노문화)	크로우 노프카
연변	압인점열문 (홍성1기)		빗살문 (홍성II-1)	홍성 II-2기	홍성3~5기	柳庭洞유형	단결-크로 우노프카
함경북도	서포항 2기	서포항3기	서포항 4기	오동2~4기	송평동 유형	안콥스키 시니가이	

* 짙은 회색-즐문돌대문, 중간회색-돌대문, 옅은 회색-퇴화된 돌대문토기

두만강유역은 신석기시대 말기~청동기시대의 양상이 뚜렷하게 보이며 문화적 계승성이 뚜렷하다. 和龍 興城이나 레티호프카유적에서 보듯이, 신석기시대 말기의 주민들은 돌대문토기를 쓰며 좀 더 집약적인 농경을 통해서 기원전 15세기 전후한 시기의 기후와 환경의 변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이 점은 한반도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에 널리 퍼진 원시농경이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기후의 악화 등을 이유로 다시 그 비중이 감소하는 데에 반해, 자이사노프카문화는 저장성의 강화, 무문토기의 공반, 농경의 강화라는 점과 다른 양상으로 무문토기의 진입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된다(강인욱, 2007).

남한의 돌대문토기와 유사한 특정한 유적·유물을 찾기보다는 심발형의 기형에 돌대문 문양이 시문되는 동북한지역이 그 형성지로 추정된다. 물론, 두만강유역에서 직접 남한의 돌대문토기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하지만 돌대문토기는 남한뿐 아니라 전반적인 무문토기문화권에서 널리 보이는바, 두만강유역에서 시작되어 기타 무문토기문화권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압록강하류지역은 신암리로 대표된다(도면 5). 주지하다시피 신암리는 대체로 3기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뇌문토기 및 신석기시대 후기의 토기가 공반하는 제1문화층, 馬城子문화와 유사한 호형토기가 주를 이루는 제2문화층, 그리고 미송리형토기가 공반하는 제1지점 2문화층으로 세분된다. 신암리 제1문화층의 경우 짧게 외반되는 구연부에 빗살문이 시문된 호형토기계와 점열문의 발형토기가 출토되는 이른 단계(전환기)와 호형무문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전기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즉 遼中이나 송화강유역과 달리 무문토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무문토기로의 전이과정이 한 단계 늦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암리와 연접한 丹東地區의 경우도 비슷한 전이과정을 보여준다. 즉 무문토기화가 진행되면서 호형토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신암리 계통의 유적은 구룡리와 丹東地區로 한정되는데, 이 또한 작은 지역군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압록강중상류지역의 경우 전기로 분명히 규정지을 수 있는 토기군은 불명확하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기가 되면서 馬城子문화

가 급격히 확산되어 공귀리 유형이 형성되었지만, 그 이전 시기의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가 존재했을 몇 가지 정황적인 증거는 포착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통화 万發撥子유적을 들 수 있다. 현재 약보고만 제시되어서 자세한 양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청동기시대층에서는 천공이 된 굽이 달린 토기와 삼족기(역)가 출토되었다고 한다(오강원, 2003). 삼족기의 출토만 본다면 망화 유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논문(王綿厚, 2001)에서는 万發撥子是 총 7기로 나누고 그중 2, 3, 4기 층을 각각 商周, 春秋, 戰國時期로 편년했다. 다소 애매하지만 대체로 삼족기가 출토하는 청동기시대 초기문화층과 馬城子문화의 영향을 받은 양이부호가 출현하는 후기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공귀리유적을 들 수 있다(김용간, 1959). 공귀리는 김용간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유적으로 발굴과정에서 비교적 소상히 서술되어 있다. 공귀리 발굴에서는 모두 6개의 주거지가 발견되었고 그 한 가운데로 구상유구가 지나간다. 발굴자는 교통호로 보았으나 넓이가 70~80cm에 불과해서 굳이 사람이 지나가는 교통로라기보다는 구상유구에 가깝다. 이 구상유구는 II, III호 주거지를 관통하여 지나가며 VI, V호 주거지와는 연결한다. 유구의 정황은 II, III호 주거지는 이른 시기이며 IV, V호 주거지는 구상유구와 동시기임을 보여준다. 또한 VI호의 경우 교통호와 주거지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거지의 규모나 형태로 볼 때 V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서벽 바깥으로 구상유구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출토된 토기의 경우 V호의 공반상황이 알려졌으며, 이른 시기의 경우 뚜렷하지 않다. 층위적으로 퇴적되었다는 양상을 감안할 때 공귀리에 이른 시기의 문화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문화의 경우 학자 간의 편년안이 다소 다르지만 신석기시대의 기형을 계승하여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이때부터 팽이형토기가 출현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도면 7>은 비교적 최근에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보고가 된 마산리와 반궁리유적의 보고서(김동일 외, 2003)에 제시된 분기를 도표화시킨 것인데, 잠정적으로 그 편년안을 따라서 보고자 한다.

요동반도지역 雙砮子 3기문화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바(王巍, 1992; 陳光, 1989; 宮本一夫, 1993) 于家村상층문화, 羊頭窪문화 등으로도 불리었다. 于家村상층, 砮頭적석묘, 羊頭窪, 雙砮子 등의 유적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상술하지는 않겠지만, 雙砮子 3기의 문화는 그 안에서도 세분될 가능성이 있다. 陳光(1989)은 羊頭窪유적과 砮頭 적석묘를 각각 전기와 후기로 세분했는데, 그 안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진광의 상대편년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지만(宮本一夫, 1991), 대체적으로 砮頭 적석묘의 미송리형토기와 유사한 토기는 미송리형토기의 기원이 아니라 미송리형토기문화가 요충지역에서 요동반도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출현한 것이다(강인욱, 1996). 하여튼 전체 편년의 틀에서 본다면 요동지방 전기는 雙砮子 3기의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기는 각 지역이 빠르게 무문토기화가 진행되며 비교적 작은

<표 4> 羊頭窪유형 早期와 晩期의 문화상 비교(陳光, 1989에 근거, 필자가 작성)

	조 기	만 기
구연부	말아서 처리한 것이 없음	이중구연이 많음
최대경	대체로 상반부	대체로 하반부
저부의 길이	비교적 작음(최대경대 비율이 1/3 정도)	길어짐(최대경대 비율이 2/5 정도)
굽에 문양처리	조그만 구멍이 많음	구멍이 뚫린 것이 없음
컵형토기	없음	있음(반면에 조기의 장경호는 보이지 않음)
문양	점열문, 획문이 위주이며 점토퍼는 많지 않음	점토퍼를 많이 사용
채도계 토기	채회도 토기가 존재함	채회도토기가 없음
석기	석착은 두께가 두꺼움 석도는 장주형 쌍공석도	석기의 수량이 감소 석도는 장방형 무공석도
청동기	청동편이 소수 발견	화살촉, 어구, 단추 등 증가함

지역으로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어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각 지역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도 극히 일부의 토기에 한정된다.

3_ 중기: 기원전 11~9세기, 馬城子문화와 석관묘의 확산

전반적으로 북한 전역에 두만강유역은 柳庭洞유형과 小營子로 대표되는 석관묘의 유입, 서북지방의 카라숙계 청동기와 모방석검의 유입 등으로 대표된다. 이 시기의 문화변동에 대해서 필자는 크게 단편적인 카라숙계 청동기와 모방석기, 채도와 석관묘의 파급(강인욱, 2003b)과 小營子석관묘의 유입(강인욱 외, 2009) 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전기의 소지역군으로 문화가 세분되었던 것이 통합되어 馬城子-미송리형문화권, 雙砬子-上馬石상층문화, 팽이형토기문화권, 柳庭洞유형의 확산 등으로 설명된다.

요동반도지역은 雙砬子 3기문화 이래 비교적 고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大嘴子, 羊頭窪 등 여러 유적은 기타 지역과 독자적인 문화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다만 砬頭 적석묘의 경우와 같이 미송리형토기의 요소가 일부 도입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적인 토기 전통을 따른다고 생각된다.

압록강중상류의 자료로 최근에 추가된 유적으로 五女山城과 통화 万發撥子 2기층이 있다. 五女山城유적에서는 고구려유적 이전에 신석기시대 후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제2기층의 문화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데, 동체부 중앙에 종상파부가 부착된 호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등이 공반되었다. 이 유적에 대해서 보고자는 석검이 출토된 것에 근거하여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시기와 동시기로 본다. 하지만 필자는 비슷한 석검이 연해주에서 출토된 것을 감안할 때 굳이 비파형동검문화에 고정시킬 이유는 없으며, 전기 청동기단계의 유경식석검의 전통이라고 생각한다.¹⁹⁾

19) 五女山城의 석검은 연해주와 흑룡강 동부 일대에서 발견되는 유경식 석검과 매우 흡사하다. 동검과 유사하다고 이를 단순하게 비파형동검의 영향으로 간주하기에는

이상 심귀리 1호, 2호, 토성리 1호 주거지, 五女山城 주거지 40호(제2기문화층) 등에서 층위적인 증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서열관계를 토기의 형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馬城子문화에서 출토되는 양이부 호형토기 계통이 주로 출토된다는 점이다. 특히 심귀리 1호에서는 경부가 좁아진 외반구연호의 견부에 돌대문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馬城子문화의 전기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귀리형토기가 반출되는 토기는 미송리형토기 성립 이전에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부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두만강유역의 경우 柳庭洞유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며, 그와 함께 小營子로 대표되는 석관묘가 등장한다. 이러한 청동기시대문화의 동진과정은 延吉지역뿐 아니라 동북한의 호곡 2~4기, 연해주의 시니가이문화 등에서도 간취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흐름이다(강인욱, 2007; 강인욱 외, 2009).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중기는 순수 돌대문토기 단계에서 柳庭洞유형과 송평동유형으로 변하는 시점이다. 특히 柳庭洞유형에서는 심발형의 기형에 구연부가 직립하고 표면이 수직으로 매끄럽게 마연되어 있는 토기가 대표적이어서 柳庭洞식 토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柳庭洞유형은 1973년에 주거지 1기가 발굴된 延吉 柳庭洞²⁰⁾의 유물에 의거하여 林濤이 설정하였다(林濤, 1985). 단결-크로우노프카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초기 철기시대의 유적과 차이는 파수부, 고배, 유상돌기 등이 없다는 데에 있다. 송평동유형을 대표하는 송평동식 토기는 구연부에 돌대문을 하고 구연 바로 밑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반관통공렬문, 죽관문, 점열문, 단사선문 등 공렬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순수한 공렬토기가 나타는 최북단은 원산만유역이다. 공렬토기의 기원으로 지목된 함경북도의 송평동에는 정작 순수한 공렬문이 없고 대신에 점열문에 가까운 것이 주를 이루며, 모두 구연에 돌대문이

다소 문제가 있다.

20) 延吉 柳庭洞은 현재 행정구역의 변화로 용정 石井鄉 龍泉유적으로 개명되었다.

부착된 것이다. 더욱이 연접한 연해주 남부와 延吉지역에서도 공렬문은 전혀 없다. 회령 오동과 무산 범의구석에서 송평동식의 반관통공렬문이 시문된 돌대문토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평동유적의 공렬문은 금야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지역이 순수한 돌대문토기가 존재하다가 공렬토기의 요소가 유입되었고, 그 요소가 돌대문의 장식적인 요소로 가미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송평동유형의 토기는 심발형돌대문토기의 전통이 해체되면서 금야유형으로 대표되는 공렬문계통의 토기 전통이 해안선을 따라서 유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평동유형이 필자의 편년대로 청동기시대 중기가 맞다면 송평동유형의 유적은 두만강유역에서 신석기시대 중기 보이스만문화 이후 처음 등장하는 패총이 된다. 바로 이 다음 단계에 패총으로 대표되는 안콕스키문화가 연해주와 함경북도 해안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연해주 철기시대 패총문화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요중지역은 비파형동검이 등장하기 이전의 석묘문화가 존재하는데, 크게 요동반도 남부의 적석묘, 요동남부 북부 및 요북지역의 개석개묘(석봉), 그리고 요중지역 태자하를 중심으로 하는 동혈묘·석관묘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華玉氷, 2009). 여기에서 주목되는 유적군은 태자하 馬城子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同穴유적이다. 태자하상류와 요북지역의 馬城子문화에는 동혈묘와 석곽묘가 사용되었으며 미송리형토기의 기원지로 상정된다. 이후 요동지역 전공자들이 증가하면서 요동지역 초기 청동기시대로 馬城子문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여서 미송리형토기와 석관묘의 기원이 馬城子문화에서 기원했음은 현재 대부분의 전공자가 동의하는 바이다(唐森, 2008; 華玉氷, 2008).

馬城子문화의 석관묘는 또한 송화강유역 서단산문화와 연변-연해주지역의 석묘문화 및 한반도 석관묘의 기원지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한반도와의 관련성은 요령성 무순시 신빈현의 東升村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채문토기(撫順市博物館 외, 200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승유적의 묘제와 채문토기는 한반도 남부의 석관묘와 아주 유사한데(강인욱, 2003a), 이 석관묘의 남한지역 파급을 인정한다면 그는 곧 비파형동검 이전에 요동지역과 한반도 남

부의 문화적 교류의 증거로 인정된다. 동승유적의 절대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이전 단계로 기원전 12세기 또는 13~11세기대로 지목된다. 이는 馬城子 洞穴유적의 탄소연대의 하한이 대체로 기원전 12세기대에 걸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趙寶福, 2007). 이러한 편년은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 편년으로는 대체로 雙砬子 3기에 해당하며 비파형동검이 이전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한다.

두만강유역의 경우 이 시기에 延吉과 연해주지역으로 태자하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석묘가 유입되는 현상이 간취된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9). 특히 연변지역의 석묘 유적 중에서 小營子是 두만강유역의 기타 석관묘들과 달리 석관들이 서로 이어 있는 집단묘의 전통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馬城子 유적의 다인장 석곽, 요동지방 砬頭 적석묘 등 초기 청동기시대에 주로 보이는 현상이다. 또한 小營子の 공반유물(토기 및 석기, 골각기)에서 흑요석의 비중이 높은 현상 등 전반적인 유물의 양상을 보아도 두만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 석관묘라고 생각된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세한 석관묘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압록강 중상류지역 및 길림 동남부지역 석관묘문화의 편년과 문화적인 비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석관묘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틀로 바라본다면 小營子로 대표되는 두만강유역 석관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기원전 12세기 전후로 한 시기의 석관묘의 확산과 연동해서 해석할 수 있다.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중기는 무산 범의구석이 대표적이다. 범의구석은 필자가 재편년한바, 청동기시대 초기 돌대문토기문화군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기부터 시작되는 유적이다. 호곡의 중심연대는 연변지역에서는 柳庭洞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의구석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²¹⁾ 범의구석유형은 범의구석 2~4기에 해당하는데, 연변지구의 柳庭洞유형과 거의 같은 문화상을 보인다. 단, 범의구석의 2~3기는 단각고배가 거의 없으며 심발형토기의 경우도

21) 한편 북한의 해안가인 나진 초도에는 연해주 시니가이문화 계통이기 때문에 ‘초도-시니가이유형’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나진 초도는 층위가 없이 출토된 것이어서 북한 해안가의 유형설정의 표지유적으로 삼기에는 다소 곤란한바, 일단은 가능성만 제시하기로 하겠다.

동체는 약간 배가 부르며 외반구연보가 주류를 이루어서 柳庭洞유형의 전기단계에 해당하며, 호곡 4기는 고배가 출현하고 동체부에 유상돌기가 부착되는 등 柳庭洞유형의 후기 단계에 가깝다.

한편, 같은 시기에 함경북도의 해안가에서는 송평동을 표지로 하는 돌대문에 반관통공렬문이 결합된 유적군이 분포한다. 돌대문토기에 다양한 반관통공렬문 장식을 베푼 토기는 ‘송평동식 토기’라고 제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송평동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함경북도 해안지역 이외에는 그 출토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토기를 제외한 문화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패총을 영위하고 문화층이 두껍게 발달한 것으로 보아 바닷가에서 독특한 문화를 발달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송평동유적으로 대표되는 나진, 웅기지역의 문화는 송평동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범의구석유형과 같은 시기 연해주 한카호 이남지역은 시니가이문화가 분포하는데, 퇴화된 돌대문²²⁾과 호형토기를 대표로 한다.

4_ 후기(기원전 9~5세기): 비파형동검문화의 확산

이 시기 서북한과 그 주변지역은 크게 요동지방의 신성자문화와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문화, 그리고 요동반도의 강상과 누상으로 대표되는 적석묘문화로 대표된다. 요동지역의 경우 마성자문화의 전통을 이어서 미송리형토기+비파형동검이 공반되는 단계의 요북지역에 新城子文化로 이어졌다(華玉氷, 2009). 또한 송화강중류지역에서도 석관묘와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서단산문화가 널리 분포하는데, 이 역시 馬城子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된다(이종수, 2008). 신성자문화는 1980년대까지 북한 학자들이 고조선의 유력한 증거로 보았던 ‘석관묘+미송리형토기+비파형동검’의 조합을 문화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것이다. 반면 팽이형토기의 대동강유역은 기존의 문화를 계속 유지

22) 한반도와 두만강유역의 즐문돌대문토기는 띠를 부착하여 돌대를 부착한다. 이에 반해서 小鬘子, 신흥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돌대문토기는 구연부 끝을 약간 보강해서 각목을 한 것으로 돌대문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가깝다. 여기서는 퇴화돌대문으로 부르겠다.

하는 가운데에 일부 미송리형토기의 영향을 받은 토기들이 일부 발견된다. 이 시기의 전반적인 상황은 요동과 한반도 북부가 비파형동검문화와 석관묘로 재편된다. 또한 남한도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송국리문화가 성립되는 등, 좀 더 계층화가 뚜렷한 복합사회로의 발달이 간추된다. 서북한지역의 팽이형토기문화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남한 학계에서 비교적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한영희, 1983; 최종모 외, 2006), 함경남도 원산만 일대는 워낙 자료가 소략해서 전기와 구분지를 만한 분명한 증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권으로 재편되는 대표적인 지역인 압록강하류와 환동해문화권의 일부인 두만강유역으로 크게 대별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압록강하류**의 경우 신암리 제1기층 2문화층과 미송리동굴유적 등으로 대표된다. 미송리유적의 경우 동혈묘의 일종으로 태자하상류의 동혈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단독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압록강중상류지역에서 미송리형토기는 토성리의 8구 남쪽 시굴구에서 전형적인 형태가 출토된 바 있다(정찬영, 1963). 토성리 출토 이외에는 미송리형 특유의 횡조문이나 다른 속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미송리형토기는 이 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동지방의 砮頭 적석묘와 쌍방 6호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강인옥, 1996)(도면 8). 이를 다시 정리하면 砮頭 적석묘의 유사 미송리형토기는 비파형동검 이전시기 馬城子문화와 요동반도의 雙砮子 3기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쌍방 대석개묘의 미송리형토기는 석관묘문화가 요동반도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석관묘의 영향은 매우 커서 雙砮子 석관묘에서 보듯이 요동반도지역이 지속적으로 적석묘를 만드는 시기에 이 지역의 토착문화와 공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만강유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후기는 내륙과 연해지역으로 대별된다. 연해지역은 연해주와 함경북도 바닷가의 안콥스키문화계통(초도 4기)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초도 및 해안가의 비슷한 유적들은²³⁾ 안콥스키문화에

23) 일제시대 八木將三郎과 鳥居龍藏이 조사한 유적들 몇 예가 알려져 있다.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다.

한편 내륙지역은 나라마다 문화의 설정과 범위가 다소 다르다. 연해주 남부지역은 아누치노문화로 명명되었으며(안쉬나·클류예프, 2005), 연변지역의 경우 유정동 후기(강인욱, 2007) 등으로 명명되었다. 함경북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는 가야모토 도진[樞本杜仁, 1980]이 보고한 중성 행영면 地境洞 수혈주거지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 유적은 1940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과 가야모토 도진이 수혈 주거지 1기와 구덩이 1기를 조사하였으며,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1953]와 최근 배진성(2007)이 출토유물의 도면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한 바 있다. 출토된 토기들은 전면마연된 갈색토기들로서 단각 고배, 발형, 심발형 등의 기형이 있으며 동체부에 유상돌기와 퇴화돌대문이 부착된 것이 특징이다. 일제시대 조사된 유적으로 드물게 공반관계가 명확하며 그 양상은 온성 강안리 제2, 3문화층과 같은 시기이며, 延吉지역에서도 후기 柳庭洞유형(延吉 新光, 汪青 安田, 水北 上層, 西崴子 등)에서도 비슷한 토기 유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만강유역 내륙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는 柳庭洞 후기유형, 안콥스키문화와 동시기로 ‘지경동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지경동유형, 유정동 후기, 아누치노문화 등은 국가별로 세분된 문화유형으로 향후 연구의 심화에 따라서 하나의 문화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북한 청동기시대의 변천을 토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거시적인 북한 청동기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북한 청동기시대 자료가 남한과는 다른 배경에서 형성된 고고학적 연구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된 단편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북한 청동기시대를 연구해야 할 방법으로 문화

보다 광의의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주장하고 '무문토기문화권'을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북한 청동기시대의 시공적 편년관계를 조망했다. 또한 북한을 5개의 지역과 4기의 단계로 세분하여 무문토기문화권의 형성과 확산을 역동적으로 복원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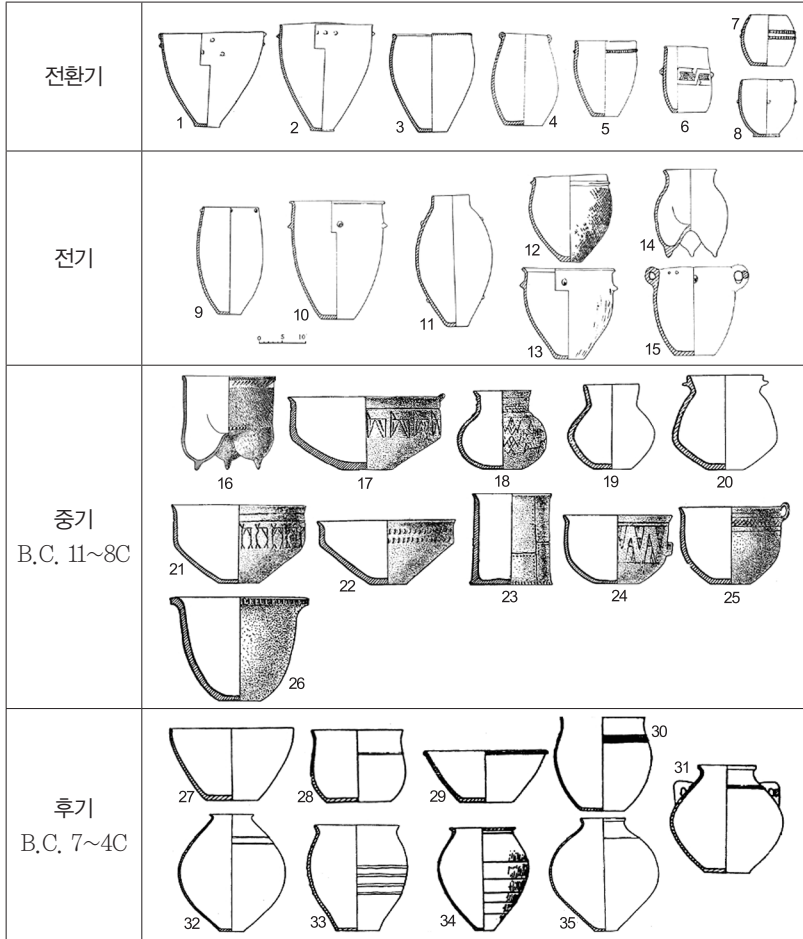
그 결과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되는 신석기시대 문화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무문토기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로 바뀌고, 이후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동북아시아 무문토기문화권이라는 틀 속에서 연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남한 청동기시대의 연구에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형성과정을 단절적이며 대량의 이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중국 동북지방의 자료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자료에서 계통을 찾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별 유적과 유물에서 계통을 찾는 연구를 지양하고, 무문토기문화권의 형성과 그 전개를 검토한 결과 무문토기는 점차로 남하해서 각 지역이 다양하게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자료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북한의 자료는 1960년대 수준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선사시대 형성과정에 대한 간과로 이어질 경우 거시적인 안목으로 고대사회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만주와 한국을 포함하는 광의의 관점으로 문화를 해석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 한국의 괴리는 비단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정치한 편년체계를 강조하며 문화의 기본적인 전파 흐름을 북쪽에서 찾고 있는 남한 고고학계가 정작 북한의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정보를 접한다는 점은 남한 고고학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좀 더 발전적인 북한 고고학 연구를 위하여 남한 고고학계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틀을 마련할 고민을 할 때가 왔다. 통일이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외국보다도 더 먼 외국의 고고학이 되어버린 북한 고고학이 한국 고고학에 빨리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이 된 이후에 고민하기에는 남한 고고학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표 5〉 북한과 그 주변지역의 청동기시대 획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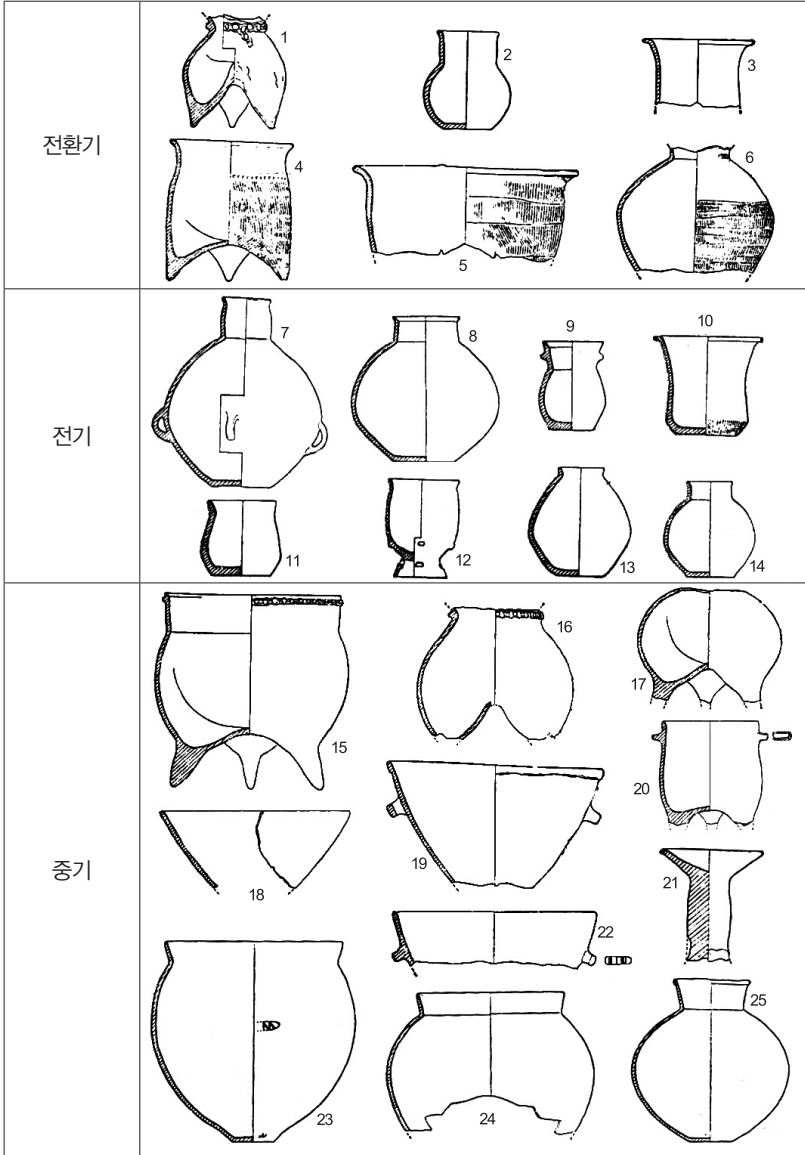
기원전 20~15세기: (전환기)	무문토기문화권의 형성시기 북한 및 남한에서는 무문토기의 독자적인 문화는 보이지 않음. 하가점하층문화의 형성
기원전 15~11세기: (전기)	高臺山문화(요중), 흥성유형의 성립, 신암리 제1지점 지역별로 무문토기문화가 급격히 진행됨. 요동지역은 초기 청동기문화가 소규모 권역으로 확산 (望花유형, 順山屯유형, 馬城子문화) 요동반도는 약간 늦게(기원전 13세기) 雙砬子 3기 출현 요중지역은 동혈묘, 요동지역은 砬頭 적석묘 등 집단묘 출현
기원전 11~9세기: (중기)	카라숙청동기의 확산 요중~요북의 馬城子-미송리문화로 재편 (신암리유형, 공귀리유형, 석관묘의 확산) 요동지역은 雙砬子 3기문화-上馬石상층의 확산 고인돌축조의 확산 두만강유역은 柳庭洞유형의 확산
기원전 9~5세기: (후기)	비파형동검문화의 확산에 따른 미송리형토기문화의 확산 팽이형토기문화 요동 및 송화강유역에 석관묘의 확산 연해주~함북 일대는 내륙 및 연해유형으로 세분 (연해지역의 안콥스키문화는 철기시대로 편년)
기원전 5~3세기:	토광묘 및 세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초기 철기문화 확산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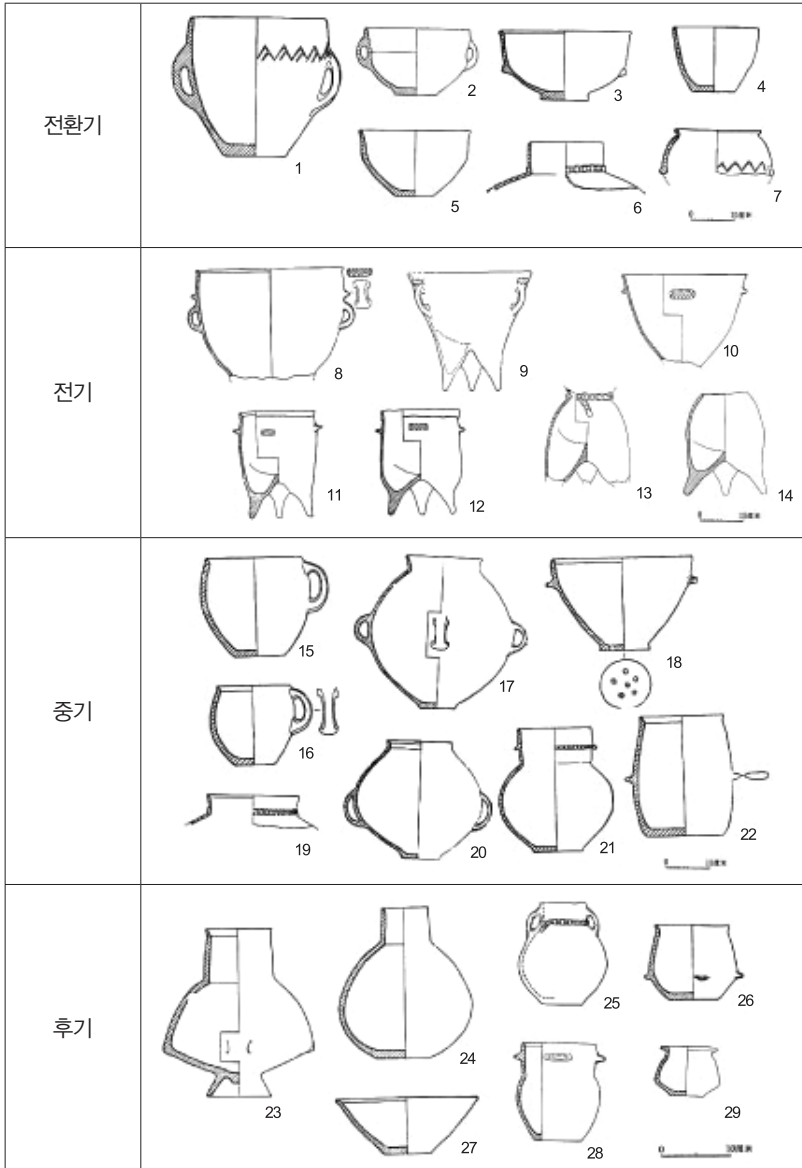
〈도면 1〉 송화강중류의 토기변천도

1~8: 小拉哈 출토; 1,2(T121③,H3063), 3,5(H2025, H1005), 4(H2005), 6(H2027), 7(H3004), 8(F2001)(이상 小拉哈유적), 9(F3032), 10(F3012), 11(F3028), 12(H3296), 13(F3047), 14(F3028), 15. 雙耳罐(F3015)(이상 白金寶 2차발굴), 16(F1), 17~18, 20~26(H1), 19(T1)(이상 小拉哈 1차발굴), 27~31(의란현 교남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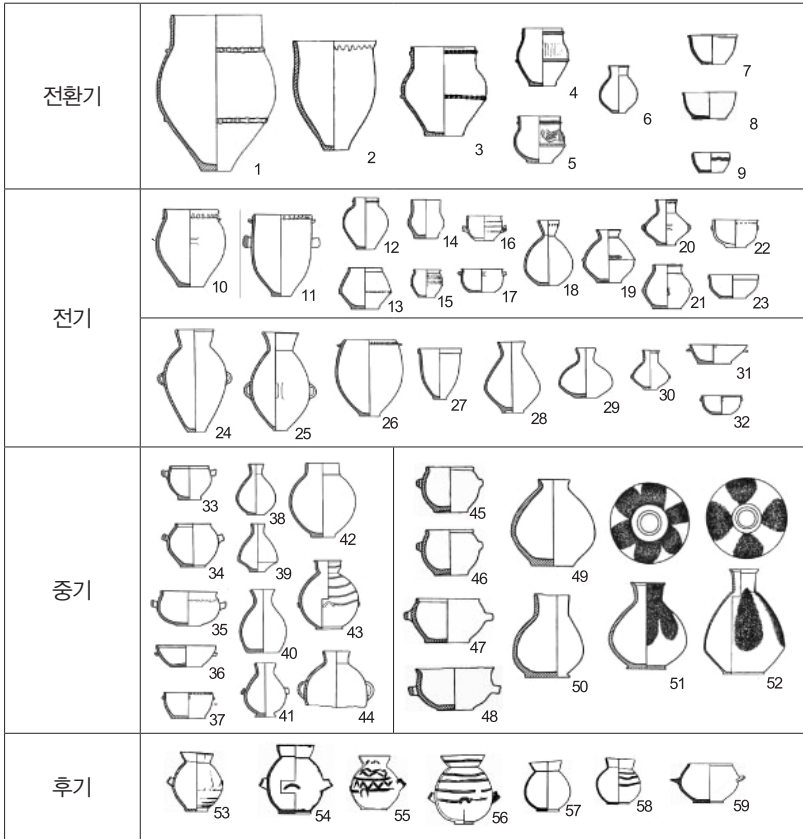
〈도면 2〉 부신 平頂山유적

1(H114) 2,3(M109) 4(H115) 5(F101) 6(M109) 7(M102) 8(M107) 9(M106) 10(M107) 11(M106)
 12(M102) 13(M108) 14(M102) 15,16(88H201) 17(88H203) 18(88H302) 19(88H201) 20(88H302)
 21(88T203) 22(88H201) 23(H307) 24(88H302) 25(H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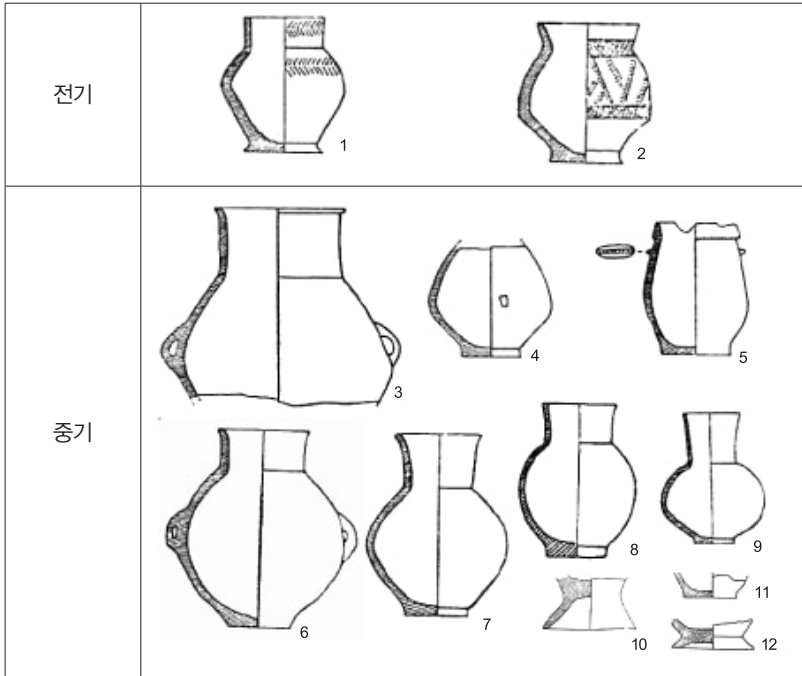
〈도면 3〉 平安堡유적 편년도[1,6(H1032) 2,3,5(H1031) 4(H1060) 7(H1067)]

8(H1007) 9,10(H3094) 11(T103) 12,14(H1012) 13(H3053) 15(G1003) 16(H1003) 17(M1003)
 18(H3058) 19(H3053) 20(H1002) 21(H3057) 22(H3074) 23,26(M3012) 24(M3011) 25(M3010)
 27(M3013) 28(M3005) 29(M3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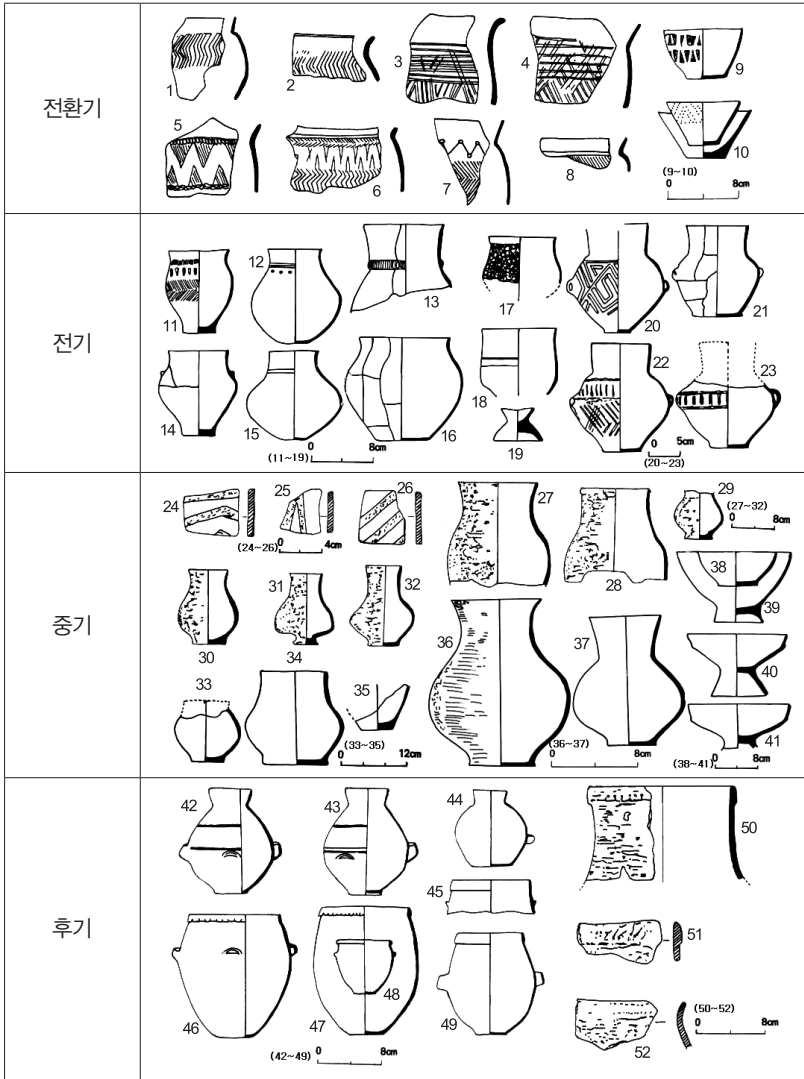
〈도면 4〉 華玉氷(2009)의 편년에 근거한 태자하유역 마성자문화토기 편년안(후기는 신성자문화) 1,7(MBM4) 2(MBM9) 3(MBM5) 4,5,6(MBM13) 8(MBM11) 9(SBT2)

10(MAM18) 11(ZAB50) 12,13(ZAM47) 14(ZAM50) 15,20(SBM1) 16,17(ZAM45) 18(ZAM41) 19(SBM8) 21(SBM3) 22(ZAM52) 23(SBM4) 24,27(ZAM31) 25(SCM7) 26(ZAM36) 28,31(ZAM20) 29,32,40(ZAM30) 30(ZAM25) 33,41,42(ZAM2) 34(MSM5) 35,36(ZAM9) 37(SCM9) 38(MCM2) 39(MCM6) 43(SCM2) 44(MCM10) 1~44(馬城子유적) 45~52(신빈 동승유적) 53~59(신성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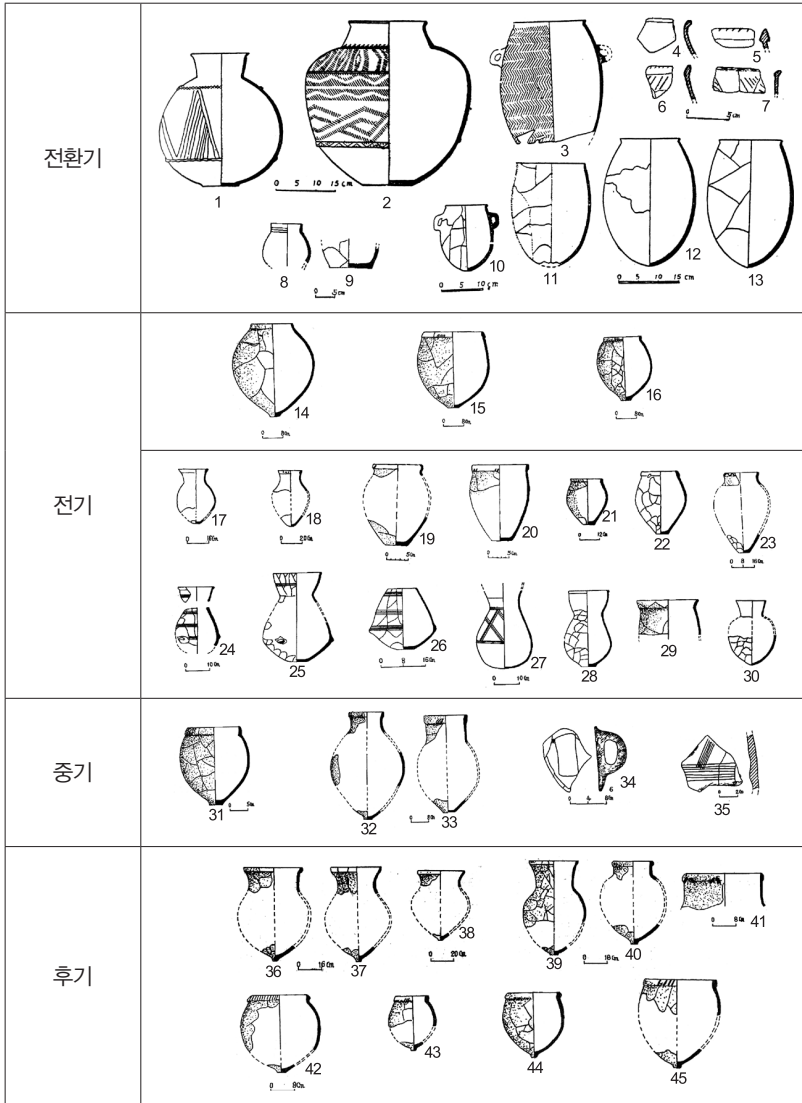
〈도면 5〉 단동지역 전기~중기의 토기상

1,2(蚊子山) 3,9(西潘) 4(石灰窑) 5(后灰窑) 6,7(后狼洞) 8(馬家店) 10(大頂山) 11,12(廟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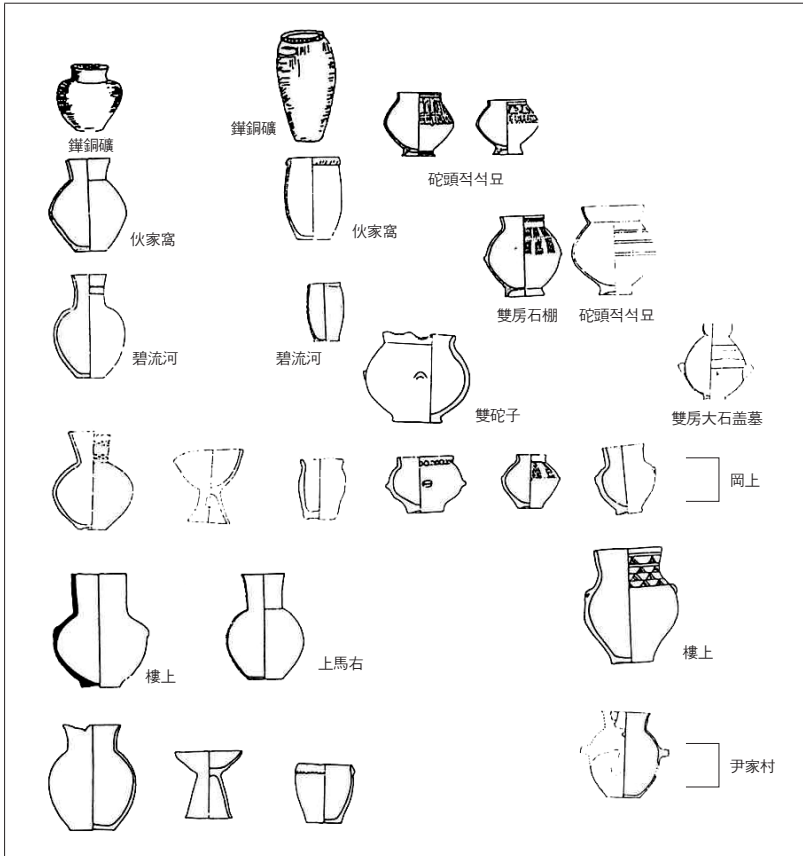
〈도면 6〉 압록강상류 토기변천(신암리)

1~23(제1문화층) 24~32, 36, 37(제3지점 제2문화층) 33~35(제1문화층) 38~41(제3지점 제1문화층) 42~49(제2문화층) 50~52(모래산유적 제2문화층)



〈도면 7〉

1. 덧무늬그릇(31호) 2. 번개무늬그릇(37호) 3,10. 손잡이달린 단지(31호) 11~13. 단지(31호)(이상 남경유적), 4~45: 표대유적: 14,15(32호), 17(23호), 18,23(3호), 26,27(11호), 29,30(23호), 42(54호)(발굴보고서의 분기에 의거하여 필자가 재분류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유구미상)



〈도면 8〉 요동반도 중기~후기의 토기상

(강인욱, 1996을 일부 수정, 가운데 선을 경계로 중기와 후기로 나누어짐)

참고문헌

- 강성윤, 2007, 「북한의 학문분류체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 강인옥, 1996, 「遼寧地域琵琶形銅劍에 대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제21호, 한국상고사학회
- 강인옥, 2003a, 「요령지방 태자하상류지역 신발견 채문토기에 대하여」, 『고고학』 2-2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강인옥, 2003b, 「연해주 청동기의 일고찰」, 『박물관기요』 17, 단국대학교박물관
- 강인옥, 2005, 「구계유형론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제56호
- 강인옥,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62
- 강인옥, 2009a, 「환동해선사문화권의 설정과 분기」, 『동북아문화연구』 제1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강인옥, 2009b, 「러시아 연해주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강인옥, 2009c,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동진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제1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강인옥 외, 2009, 『박물관소장 두만강 유역 선사시대 유물 연구-연길소룡유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16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1, 「도유호 동지에게 박사 학위수여」, 『문화유산』 3호
- 김광명, 2003, 「고연리유적 팽이그릇시집자리들의 선후관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광철, 1999, 「평양지방 미송리형단지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광혁, 2005, 「금야유적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동일·서국태·지화산·김종혁, 2003,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 발굴보고』
- 김미경, 2006, 「미송리형토기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집
- 김미경, 2009,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토기문화권 설정에 관한 재검토-양천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제1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영준·안영간, 1986, 「함경남도, 량강도 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청동기시대 유물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호

- 김용간, 1959,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6집, 사회과학출판사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 문화」, 『고고민속』 67-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조선원시고고학개요』, 평양
- 김재운, 2004, 「韓半島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한국상고사학보』 46
- 김재운, 2005, 「동북아시아에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연구」, 『북방 사논총』 8
- 김재운, 2007, 「한반도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변천과정」, 『文化財』 40
- 김재운, 2008, 「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 『고고학으로 본 옥저 문화』
- 김재운, 2009, 「서포항 유적의 신석기시대 편년 재고」, 『한국고고학보』 71집
- 김재운 외, 2006, 「동북한 신석기만기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양상」, 『석헌정징원 기념퇴임논총』,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김중혁, 1991, 「석불산유적의 유물갯춤새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4호
- 김중혁, 2001, 「표대유적 제1지점 팽이그릇집자리 발굴 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도유호, 1960, 『조선원시고고학』
- 리순진·장주협, 1973, 『고조선문제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리장섭, 1958, 「원산시 중평리 원시유적」, 『문화유산』 6호
- 박순발, 2003,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제9집
- 박진욱, 1992, 「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연구』, 교육도서출판사
- 배진성,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 배진성, 2007, 「豆滿江 無文土器의 實狀」, 『嶺南考古學報』 42
- 북기대, 2005, 「馬城子문화(馬城子文化)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선사와 고대』 22집
사회과학연구소, 1979, 『조선전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9,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고조선연구논문집』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 서국태, 2003, 「평양지방에서 알려진 비파형단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서국태, 2006, 「거북등형의 뚜껑돌을 가진 고인돌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서국태·김광철, 1998, 「새로 발견된 남양형단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석광준, 1999, 「대동강유역은 청동기시대문화의 발원지이며 중심지」,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석광준, 2001, 「료동지방 고인돌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석광준, 2002, 「강안리유적발굴보고」, 『강안리 고연리 구룡강 유적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석광준·리선일, 2003, 「구빈리고인돌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석광준·차달만, 1997, 「구룡강 유적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손준호, 2006,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
- 송호정, 2007, 「미송리형토기문화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5호
- 안재호, 2009,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오강원, 2003, 「万發撥子를 통하여 본 통화지역 선원사문화의 전개와 초기 고구려문화의 형성과정」, 『북방사논총』 창간호, 고구려연구재단
- 王綿厚, 2001, 「통화 万發撥子 유지에 관한 고고학적 관찰」, 『고구려연구』 21집
- 이광린, 1989, 「북한의 고고학」, 『동아연구』 제20호
- 이중수, 2008,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 석관묘(石棺墓)의 특징(特徵)과 기원(起源)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28호
- 이중수, 2009, 「송눈평원지역 청동기문화의 보고 백금보」, 『한국청동기학보』 5집, 한국청동기학회
- 장호수, 2009, 「북한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정찬영, 1983, 「토성리유적」, 『유적발굴보고』 13
- 지화산·차달만, 2005, 「팽이그릇 관계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

- 제],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차달만, 1992, 「당산조개무지 유적 발굴 보고」,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차달만, 1993, 「청천강 유역 청동기 시대 유적들의 연대」,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57
- 천선행, 2010, 「고대산문화의 시공간 검토」, 『영남고고학』 52호
- 최몽룡·이헌중·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 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 「각형토기문화유형의 연구」, 『야외고고학』 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한창균, 1994, 「도유호와 북한의 고고학」, 도유호 저, 『조선 원시고고학』, 백산자료원
- 華玉冰, 2009,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고고학문화연구」, 『중국고고학II』, 울산문화재단
구원 제14회 초청강연회, 울산문화재단연구원
- 황기덕, 1970,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 『고고민속론문집』 2
-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황기덕, 1989, 「비파형단검문화와 미송리유형」, 『조선고고연구』 89-3, 4
- 황기덕, 1990, 「고조선국가의 기원」, 『고고민속론문집』 12
-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1』
- 唐森, 2008, 「關於馬城子文化內涵認知的述評」, 『東北史地』 6期
- 董新林, 2000,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 2000-1
- 撫順市博物館 新賓滿族自治縣文物管理所, 2002, 「遼寧新賓滿族自治縣東升洞穴古文化 遺存 發掘整理報告」, 『北方文物』 第1期
- 蕭景全·周向永, 2008, 「遼吉兩省相隣地區早期鐵器時代的發現與研究」, 徐光輝 編, 『東北古代文化論叢』, 北九州中國書店
- 瀋陽市文物管理弁公室, 1974, 「瀋陽新樂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8-4
- 王巍, 1992, 「論先秦時期朝鮮西北部和遼東半島考古學文化的相關關係」, 『中國考古學論叢』, 考古學專刊 甲種第二十二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92, 「遼寧阜新平頂山石城址發掘報告」, 『考古』 5期
- 李新全 外, 2004, 『五女山城』,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文物出版社
- 李硯鐵 外, 2000, 「黑龍江省依蘭顯橋南遺址發掘及相關問題」, 『北方文物』 1期
- 林雲,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 張忠培 主編, 2009, 『肇源白金寶—嫩江下流一處青銅時代遺址的揭示』, 科學出版社
- 趙賓福, 2007, 「馬城子文化新論」, 『邊疆考古研究』第6集, 科學出版社
- 陳光, 1989, 「羊頭注類型研究」, 『고고학문화논집』 2, 문물출판사
- 華玉冰, 2008,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吉林大學博士論文
-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0, 「黑龍江肇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4期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86, 「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1986年發掘簡報」, 『北方文物』 4期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98, 「黑龍江肇源縣小拉哈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期
- 宮本一夫, 1993, 「遼東半島周代併行土器の變遷」, 『考古學雜誌』 76-4
- 大貫靜夫, 1999,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同成社
- 庄田慎矢, 2009, 「朝鮮半島南部青銅器時代の編年」, 『考古學雜誌』 93-1
- 鄭漢德, 1990, 「美松里形土器の生成」,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韓國考古學報』 68, 韓國考古學會
- 後藤直, 1971, 「西朝鮮の無文土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7(4)
- Андреев, Г. И., 1960,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культур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III-I тысячелетий до н.э. (안드레예프, 1960, 기원전 3~1천년기 남연해주의 고대문화에 대한 몇 가지 문제)
- Ashmore, W. A. & Sharer, R. J., 2000, *Discovering Our Past*,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Окладников, А. П., 1958, Дале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오클라드니코프, 1958, 연해주의 먼 과거)
- Яншина, О. В., Клюев, Н. А., 2005, Поздний неолит и ранний палеолит Приморья: Критерии выделения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2005, -Владивосток(안쉬나, 클류예프, 2005, 후기신석기-초기 금속기시대의 연해주)

[ABSTRACT]

Reexamination of bronze Age in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Coarse plain pottery cultural area in North–eastern Asia

Kang, Inuk

In this study, author tries to reexamine bronze age of North Korea in two new methodological suggestions. First, author suggest to reassess the level of archaeological sources from North Korea. Most of artefacts concerned bronze age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 were acquired by japanese archaeologist during Colonial period, subsequently most of them has poorly documented in the context of archaeology. Secondly, most of archaeological publication made by North Korean archaeologist were reported under.

Like this, archaeological materials from North Korea were gathered and reported in thoroughly different manners, accordingly, plain cross–dating of North Korean materials with South Korean materials could be regarded carelessly.

So, Author tries to build a macro–viewed chronological sequence of North Korean bronze age with according to recently excavated material from neighboured regions as the *Yanbian* area of *Jilin* Province of China and the Southern *Primorie* of Russia.

As the result, author divides the bronze culture of North Korea into 5 phases. 1) transition period from neolithic to bronze ages(20th~15th centuries B.C.) 2) the early phase(15~12th centuries B.C.) represented by the appearance of dolmen and cairn in Liaodong and western area of

North Korea, and *xingcheng* culture in easter part of North Korea, 3) the middle phase(11~8th centuries B.C.) could be regarded as usage of stone cist tombs in North Korea. For example, *Machengzi-Misongni* culture in the North-western part and Acorn-shaped pottery culture in *Daedong* river basin belong to this stone cist tome zones. Besides,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belongs to *Liutingdong* type in Tumen river basin,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coarse bowl with straight rim and croissant shaped stone knives.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e practice of stone cist tombs were spread over from Liaodong to South Korea and *Yanbian* area. This kind of long-distanced interaction could be explained by the wide introduction of intensive cereal agriculture. 4) the late period of bronze age(8~5th B.C. century), well-known lute shaped dagger culture were spread over Liaodong and western part of North Korea. Besid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were divided into continental agricultural type(the late *Liutingong* type) and maritime type with shell midden(*Yankovski* Culture) on the coastal area. Finally, around 4th century B.C. bronze age were ended by the expansion of dynasty *Yan* and introduction of iron tools, simultaneously *Duanjie-Krounovka* culture firmed in the north-easter part of North Korea and neighboured regions.

keywords

North Korea, Bronze, Bronze age, Manchuria, Cultural sphere of Mumun pottery, Gaotaishan, Shangtuozi, Xingcheng culture, Acorn-pottery culture, Misongni type pottey, Double-rimmed pottery, Lute-shaped dagger

발해의 종족적 연원

김기홍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발해의 종족적 연원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와 견해 표명이 있어 왔다. 최근 한 국학계에서는, 발해의 시조 대조영을 ‘속말말갈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¹⁾ 그를 순수 고구려인으로 적극 말하지 않는 실정이다.

※ 투고일: 2011년 7월 7일, 심사일: 2011년 8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일

- 1)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45쪽. 한편 韓圭哲은 대조영을 속말말갈로 보되 속말말갈을 송화강 부근에 살던 고구려지방민으로 보아(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90~92쪽) 다른 의미의 ‘속말말갈계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李基白·李基東, 1986, 『한국사강좌』 고대편, 일조각, 304쪽에서는 대조영을 ‘부여계 고구려인’으로, 盧泰敦, 1985, 『渤海國의 주민구성과 발해인의 族源』, 역사학회 편,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282쪽에서는 ‘속말수 유역에 거주하던 변경의 고구려인’으로 보았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허목·이익·안정복·유득공 등은 이미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고구려별종설과 『신당서』 발해전의 속말말갈설을 단순 절충 조합하여 보는 경향이 있었다. 『미수기언』 外篇 東事 靺鞨에서는 “靺鞨 本粟末靺鞨 高句麗別種 有野勃 三世孫乞乞仲象 與其徒渡遼河 保太白山 東 仲象死 子祚榮嗣”라고 하였다. 『성호사설』 經史門 渤海에서는 “許眉叟 作渤海列傳 頗欠詳 渤海本粟末靺鞨 高句麗別種”이라 하였다. 『동사강목』 제4하 庚子 효소

대조영 ‘속말말갈계 고구려인’설은, 양 『당서』 발해(말갈)전의 발해 출자에 관한 서로 다른 내용을 말갈인의 고구려화나 고구려변경민이 곧 말갈이라는 현대 고구려사 및 말갈사 연구에서 얻은 가설을 원용하여 보완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그런데 당에 인접하여 두 세기에 걸쳐 외교적 교류가 활발했던 해동성국 발해의 종족적 출자에 대한 唐人들의 인식이 현대적 연구 결과까지 동원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일단 의문이다. 더불어 양 사서 편찬자들이나 그 일방이 어떤 의도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여 적었는지도 모를 두 기사の内容을, 조선시대 학자들의 단순한 절충적 해석을 추수하고 현대적 가설을 과도하게 대입하여 관념적 허상을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발해 簡王의 비인 順穆皇后 墓誌를 포함한 길림성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유물 등을 통하여 발해국 지배층이 말갈 문화가 아닌 고구려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면서도, 위와 같은 가설에 묶여 그들이 종족적으로 고구려계인지 말갈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유보적 해석이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²⁾ 발해사의 기본이 되는 종족적 출자에 대한 이해가 모호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많은 발해 관련 성과물이 축적되면서 오는 뿌듯함으로도 여전히 그 미진함의 음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면이 있다. 본고는 기존 주요 견해들이 가진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유의하여 이미 수차 정리되기도 한 연구사적 검토를 지양하고, 발해 출자 관련 기본 자료에 대하여 사학사적 관점을

왕9년조에서는 “初 契丹之亂 有乞乞仲象者 與高句麗別種靺鞨粟末部落乞四比羽及高句麗餘種 東走渡遼水”라고 하였다. 유득공도 『발해고』 序에서는 “夫大氏者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라고 하였는데, 동서의 君考 震國公 조에서는 “震國公 姓大氏也 名乞乞仲象 粟末靺鞨人也 粟末靺鞨者臣於高句麗者也”라고 하였다. 고구려 별종과 ‘본속말말갈’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당에서 말갈을 고구려와는 별도의 종족으로 인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선 후기 학자들의 견해는 전문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양 『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의식하여 절충적으로 이해한 수준으로 크게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 이들의 인식과 경향은 위의 현대 발해사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송기호,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8, 147쪽

포함한 다면적 견지에서 원론적인 검토를 시도하여 기초의 재확인을 통한 연구 진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구당서』의 ‘고려별종’

『구당서』 발해말갈전은 대조영이 본래 ‘고려별종’이라고 하며 출발한다.³⁾ 이에 비해 『신당서』 발해전은 그 서두에 대조영을 적시하지 않았다.⁴⁾

‘고려별종’은 ‘고구려의 별종’이다. 종족적 계통을 나타내는 ‘별종’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사전에 따라서는 他種을 말한다고 보기도 하였지만⁵⁾ ‘타종’은 종족 관계 규정에는 부적합하다. 특정 종족의 타종은 허다하므로 해당 종족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타종이라면 굳이 그것을 기준으로 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사서들에는 ‘별종’이란 용어가 다수 보인다. 여기서는 발해나 대조영의 종족적 연원을 두고 문제가 된 양 『당서』와, 이들 사서 편찬에 이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당의 재상 두우가 지은 『通典』의 용례를 검토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 1은 필자가 『통전』 제185권~200권, 『구당서』 제194상권~199상권 그리고 『신당서』 제215상권~222하권까지 중국 변방 제 종족의 典과 列傳을 통독하여 만들었다. ‘별종’에 주목하였으며 ‘별부’도 참고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타에는 종족 관계 분석에 참고할 만한 여타 내용의 일부를 적시하였다.

3) 『舊唐書』 권199下 北狄 渤海靺鞨傳,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高麗既滅 祚榮率家屬 徙居營州.”

4) 『新唐書』 권219 北狄 渤海傳, “渤海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也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5) 『大漢和辭典』 권2, 1984, 大修館書店, 239쪽

각항 모두 나타난 순서에 준해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에는 상호 간 약간의 이견이 보이기도 하며,⁶⁾ 더구나 발췌 과정에 일부 기록의 누락 가능성이 있으나 수집된 사례만으로도 비교 분석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표 1〉 別種의 용례

	『통전』	『구당서』	『신당서』
별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謝 南蠻別種 • 西趙 竝南蠻別種 • 獠 蓋蠻之別種 • 赤土 扶南之別種 • 氐 西戎之別種 • 鄧至 羌之別種也 • 黨項 漢西羌之別種 • 白蘭 羌之別種 • 滑國 車師之別種 • 嘸嗟 或云高車之別種 或云大月氏之種類 • 波斯 大月氏之別種 • 稽胡……蓋晉時匈奴別種 劉元海五部之苗裔也 • 突厥之先 平涼雜胡也 蓋匈奴之別種 • 突騎施烏質勒者 西突厥之別種也 • 蘇祿者 突騎施別種也 • 都波者 鐵勒別種 • 庫莫奚……其先 東部鮮卑 宇文之別種也 • 靺 匈奴之別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突騎施 烏質勒者 西突厥之別種也 • 蘇祿者 突騎施別種也 • 東女國西羌別種 • 南詔蠻本烏蠻之別種也 姓蒙氏 • 黨項羌……漢西羌之別種也 • 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 • 百濟國 本亦扶餘之別種 • 日本國者 倭國之別種也 • 鐵勒 本匈奴別種 • 奚國 蓋匈奴之別種也 •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 靺 匈奴之別種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突騎施別種 車鼻施 啜蘇祿者 衰拾餘衆 自爲可汗 • 室韋 契丹別種 • 高麗 本扶餘別種也 • 百濟 扶餘別種也 • 黨項 漢西羌別種 • 東女……羌別種也 • 南詔……本哀牢夷後 烏蠻別種也

6) 현대적 연구결과로 보면 여기에 보이는 종족 간 인식에 사실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표 1에 보이는 내용들은 일단 당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분석 자료로는 충분한 면이 있다.

<p>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充州 牂軻別部 • 慕容氏 亦東胡之後 別部 鮮卑也 • 拓跋氏 亦東胡之後 別部 鮮卑也 • 突厥別部車鼻可汗 亦阿史那氏族也 代爲小可汗 • 薛延陀 鐵勒之別部也 • 僕骨 鐵勒之別部 • 同羅 鐵勒之別部也 • 拔野古者 亦鐵勒之別部也 • 斛薛 亦鐵勒之別部 • 阿跌 亦鐵勒之別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貞觀中 突厥別部有車鼻者 亦阿史那之族也 代爲小可汗 • 又契丹有別部酋帥孫敖曹 初仕隋爲金紫光祿大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突騎施烏質勒 西突厥別部也 • 沙陀 西突厥別部 處月種也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羅國 其先本辰韓種也 • 高句麗 云本出於夫餘 • 羌無弋……不知爰劍何戎之別也 • 湟中月氏胡 其先大月氏之別也 • 鮮卑亦東胡之支也 • 鐵勒之先 匈奴之苗裔也 種類最多 • 契丹之先與庫莫奚 異種而同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西突厥本與北突厥同祖 • 廻紇 其先匈奴之裔也 在後魏時 號鐵勒部落 • 新羅國 本弁韓之苗裔也 • 室韋者 契丹之別類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突厥阿史那氏蓋古匈奴北部也 • 契丹 本東胡種 其先爲匈奴所破 保鮮卑山 • 奚亦東胡種 爲匈奴所破 保烏丸山……元魏時自號庫莫奚 •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 日本 古倭奴也 • 新羅 弁韓苗裔也 • 羣蠻種類 多不可記 有黑齒金齒銀齒三種

위의 용례를 볼 때 당·송대에는 종족을 포괄적으로는 ‘種類’로 말했으며(‘鐵勒之先 匈奴之苗裔也 種類最多’, ‘羣蠻種類 多不可記’), 일반적으로는 ‘種’을 사용하여 ‘모모 종’이라 하였는데 드물게는 ‘類’를 ‘種’과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室韋者 契丹之別類也’, ‘室韋 契丹別種’). 대체로 ‘종’과 ‘류’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종’이 기본이 되고 ‘류’는 현상적인 것으로 사용된 듯하다. 이것은 『통전』에 나타나 있는 ‘異種而同類’⁷⁾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7) 『通典』 권200 邊防16 北狄7 契丹; 1988, 北京, 中華書局, 5485쪽

거란과 고막해는 유사한 장례 풍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⁸⁾ 『통전』은 거란의 선조가 고막해와 다른 종족이나 유사한 생활 문화를 보이는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보다 더 진전되어 종족 간에 융합이 일어난 사례로는 설총과 연타종이 잡거하다가 한 종족처럼 불리어진 薛延陀의 경우를⁹⁾ 말할 수 있을 듯하다.

‘異種而同類’가 실제함에서 ‘同種而異類’ 곧 ‘同種而別類’의 실제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별류’가 ‘별종’임은 이미 표 1의 室韋 경우에서 볼 수 있다.¹⁰⁾ 실위와 거란은 唐대에 북적으로서 같은 종이지만 별도의 정치 문화적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同種而別類’의 예는 『삼국지』와 『후한서』 동이전 고구려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수맥과 별종인 소수맥이 있었다.¹¹⁾ 같은 맥종이지만 오랫동안 별리하여 살다가 중국인들조차 ‘별종’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일단 ‘별종’은 동시기에 존재하는 같은 종족 집단으로서 조직, 지리 등 현상적으로 구별이 되는 ‘동종이별류’로서 규정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표 1에서도 다수 보인다.¹²⁾

표 1의 ‘별부’도 바로 병존한 ‘동종이별류’인 ‘별종’으로 볼 수 있다(突騎施烏質勒 西突厥別部也; 突騎施烏質勒者 西突厥之別種也). ‘별부’는 주도적인 ‘부’가 있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 소규모의 다른 별도의 부가 존재할 때 그것을 일컫는다. 다만 ‘부’는 사회 조직 단위로서 당해 사회나 국가에 분립 존재한 데 비하여 ‘동종이별류’ 중에는 그 세력이 미약하여 ‘부’로서 존립하지 못하고 다른 기존 부에 예속하거나 혼재하여 사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표 1에 보이는 ‘별종’ 사례에는 기존 종족과 동시기에 병존하는 존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중에는 先後와 宗支로 구분되는 관계들이 있다.

8) 위의 책, 5484·5485쪽에 보면 시신을 나무에 두었다고 한다.

9) 위의 『通典』 권199 邊防15 北狄6, 5465쪽, “前燕慕容儁時 匈奴單于賀刺頭率部三萬五千來降 延陀蓋其後 與薛部雜居 因號薛延陀.”

10) 표 1의 『구당서』 기타 항 및 『신당서』 별종 항

11) 『삼국지』 권30 동이전 고구려,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후한서』 권85 동이전 고구려, “有別種 依小水爲居 因名曰小水貊.”

12) ‘突騎施 烏質勒者 西突厥之別種也’, ‘蘇祿者 突騎施別種也’, ‘突騎施別種 車鼻施 啜蘇祿者 衰拾餘衆 自爲可汗’, ‘室韋 契丹別種’, ‘室韋者 契丹之別類也’.

이 같은 ‘별종’의 의미는 『양서』 제이전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진다. 고구려의 조상은 동명에서 나왔는데 동명은 부여 왕이 되었으며 뒤에 갈래가 나뉘어져서 구려 종이 되었다고 하였다.¹³⁾ ‘뒤에 가지가 나뉘어 된 종(後支別爲種)’이 ‘別種’일 것이다. 즉 어떤 기준이 된 宗派로부터 뒤에 갈라져 나온 일파는 ‘별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종파에 비해 이러한 ‘별종’은 支派라 볼 수 있다.¹⁴⁾ 표 1에서 많은 경우를 찾을 수 있는데, 시대성이 뚜렷하거나 옛 왕조 명 등을 수식한 종족들의 경우가 그에 해당될 것이다.¹⁵⁾

정리하면 ‘고려별종’의 ‘별종’의 의미는 양자가 공존할 시에는 ‘同種 別類’일 것이며, 선후와 종지가 구분될 수 있다면 ‘支派’로 볼 수 있다.¹⁶⁾ 표 1에서 이것들을 벗어난 관계를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편 표 1의 별종 항을 통해 사서 편찬자들의 서술 상의 특성을 일부 볼 수 있다. 『구당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신당서』 열전의 찬자 宋祁는 세평대로 간략함을 우선하였다. ‘出自’나 ‘本’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앞 두 사서가 ‘별종’ 앞에 흔히 사용하는 ‘之’도 배제하였다. 아울러 송기는 단순한 윤문을 넘어 前代 사서가 제시한 종족의 연원을 바꾸어 말한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구당서』는奚을 흉노의 별종으로 추정한 데 비하여(奚國 蓋匈奴之別種也), 『신당서』는 거란과 해를 모두 동호종으로 말했다(契丹 本東胡種; 奚亦東胡種 爲匈奴所破).奚의 경우 『구당서』를 신뢰하지 않고 『통전』의 견해를(庫莫奚……其先 東部鮮卑 宇文之別種也) 취한 셈인데, 『통전』에서 거란이 고막해와 ‘이종이동류’라고(契丹之先與庫莫奚 異種而同類) 한 것에서

13) 『梁書』 권54 諸夷傳 高句驪, “高句驪者 其先出自東明 東明本北夷橐離王之子 離王出行 其侍兒於後任娠 …… 東明乘之得渡 至夫餘而王焉 其後支別爲句驪種也.”

14) 노태돈, 1981, 「고구려 유민사 연구-요동, 당내지 및 돌궐방면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98쪽 주 73)에서 別種은 支派라고 보았다.

15) ‘鐵勒 本匈奴別種’, ‘奚國 蓋匈奴之別種也’, ‘百濟 扶餘別種也’, ‘日本國者 倭國之別種也’ 등 다수.

16) 물론 단순 논리상으로는 ‘지파’도 ‘동종 별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種을 동호계통 내의 우문선비종과 다른 종족으로 보아 모두 동호종으로 말한 듯하다.¹⁷⁾ 이같이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종족 연원을 고쳐 말한 송기의 성향은 ‘고려별종’과 ‘속말말갈부고려자’를 같은 존재로만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면이 있다. 한편, 표 1에 보이는 사례들을 통하여 보면 위 사서들에 사용된 ‘본’은 ‘출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⁸⁾

대조영은 청년 초까지는 고구려에서 살았다. 따라서 그가 고구려와 동시기의 ‘동중 별류’에 해당되는지 뒤에 나온 ‘지파’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발해말갈’이 전제된 대조영에게 ‘고려별종’이 가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발해말갈’은 당·송의 조정이나 식자들이 발해에 대해 인식해 온 다소 관념적인 명칭이다. 따라서 ‘발해말갈’이란 명칭에 구애될 것 없이 대조영이 고구려와 어떤 종족적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은 발해말갈이라고 하지도 않았다.

‘발해말갈 대조영’과 ‘고구려’가 병존하였던 ‘동중 별류’일 수 있을까? 『구당서』 발해말갈전이 말하는 자는 고구려 청년 대조영이 아니라 ‘발해(말갈)의 시조 대조영’이라는 역사적 존재임에 유의해야 한다. 발해와 고구려가 소수맥과 대수맥처럼 병존 관계가 아님은 자명하다. ‘고려별종’의 중간에 ‘-’를 넣고 ‘본’

- 17) 양 『당서』가 달리 전한 종족 연원 관련 사항은, 『신당서』(1060)가 『구당서』(945)에 비해 100여 년 뒤에 나왔으나 송초의 안정된 분위기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합하여 편찬되었으므로 더 타당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위 표 1의 新羅 출자 내용 등을 보면 그렇게 일괄 단정할 일도 아니다. 『삼국지』 동이전 이래 신라의 종족 연원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으나 『梁書』 권54 諸夷전에 신라가 ‘本辰韓種’이라 하였고 『통전』 역시 ‘本辰韓種’이라 하였는데 『신당서』는 『구당서』를 답습하여 ‘弁韓苗裔’라고 하였다. 나·당 관계는 긴밀하였던 만큼 신라의 종족 연원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터인데 이 정도에 그친 면모를 볼 수 있다. 또한 신라를 ‘弁韓’의 묘예라 하고서, 같은 책 권219 渤海전에서는 “乃建國 自號震國王 ……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海北諸國”이라 하여 발해가 ‘弁韓’까지 통합한 것처럼 타 사서에 보이지 않는 영토기사를 自斷하여 넣어 다시 誤謬를 범하기도 하였다.
- 18) 표 1에 보이는 『구당서』 내의 ‘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와 ‘百濟國 本亦扶餘之別種’에서는 물론 『신당서』의 ‘高麗 本扶餘別種也’, ‘百濟 扶餘別種也’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 『통전』의 ‘新羅國 其先本辰韓種也’, ‘高句麗 云本出於夫餘’의 용례를 참조해 보면 좋다.

을 ‘출자’로 해석해 보면, 발해말갈의 시조 대조영은 고구려에서 출자한 고구려의 지파에 속한 자라는 내용이 된다.

『구당서』 발해말갈전은 대조영의 인생행로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개인사를 전한다. 이진충난의 중심지였던 영주지역 관아에서 대조영과 걸사비우 관련 동분 사건의 전말을 적은 것이나 이해고 등 당군의 진압작전 전말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자료에 의해 만들어진 實錄이나 다시 실록 등을 자료로 하여 당 조정에서 편찬한 唐의 『國史』 등을¹⁹⁾ 통하여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 『唐武后實錄』이나 당의 柳芳 등이 증보한 唐의 『國史』인 『唐書』 등에는²⁰⁾ 동분 사건의 한 지도자인 대조영이 ‘본고려인’이며 고구려 멸망 후 영주로 천사된 자임을 적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대조영을 ‘말갈계 고구려인’으로 본다 하여도 그는 결국 고구려인 이기도 한 만큼 본고의 ‘고려별종’의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고구려 내 말갈인이 당과의 전쟁에 동참한 경우가 적지 않고 보장왕과의 고구려 부흥 모의에 적극 나선 것을 보면 상당수 말갈인의 고구려인 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당서』 편찬자가 대조영이 말갈출신인 것을 알았는데도 그가 고구려의 지파 즉 ‘고려별종’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당서』 발해말갈전은 의도적인 개서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데,²¹⁾ 그가 본래 모종

19) 李宗侗 저·조성을 역, 2009, 『중국사학사』, 혜안, 146~156쪽. 당의 『國史』는 기전체 사서로, 정부의 주관으로 책임자를 두어 태종 초 姚思廉이 담당한 제1차 편찬을 시작으로 숙종시 柳芳이 완성한(130권) 경우까지 모두 8차의 찬술이 있었다. 618~762년까지 당의 전반부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한다. 당에서는 起居注와 時政記를 자료로 著作郎이 日曆을 만들어 두면 다음 왕대에 사관은 일력을 가지고 實錄을 편찬하였다. 그 뒤 『國史』를 편찬할 때는 실록을 이용하면서 日曆을 참조하여 본기를 지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劉節 저·辛太甲 역, 2000, 『중국사학사 강의』, 신서원, 214~224쪽에도 연관된 내용이 보인다.

20) 발해 건국사가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당 정부에서 찬한 사서 자료로는 『신당서』 권58 예문지2에는 『唐書』 100권과 130권, 『國史』 106권과 113권 그리고 『則天皇后實錄』 20권 등이 보인다. 『宋史』 권203 예문지2에는 柳芳 『唐書』 130권과 『唐武后實錄』 20권이 보인다. 『宋史』에 보인 자료들은 『구당서』와 『신당서』 편찬에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1) 이종동 저·조성을 역, 2009, 앞의 책, 172~174쪽에서는 『구당서』에는 당에서 편

의 말갈로 표기되어 있었다면 그대로를 전하거나 ‘발해말갈 대조영자 본 모모 말갈야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표 1 작성에 이용된 사서의 찬자들을 포함한 당·송의 식자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말갈을 별도의 종족으로 보았다. 수나라로 투항한 속말말갈의 추장인 돌지계의 후예 이근행을 보면, 당에서 출세하여 燕國公에 봉해질(676) 정도의 당나라 신민이 되었지만 그의 열전은 그가 말갈임을 여전히 밝혀 적고 있기도 하다.²²⁾

한편, 대조영을 고구려계로 볼 때, 걸걸중상이라는 대조영의 부친 이름이 의식된다. 걸사비우란 이름과 동류라 여겨질 만하다. 그런데 현재 알 수 있는 고구려나 부여계 인물들의 이름이 많지 않은 상태라서 그 이름이 말갈식 이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조영 일가는 말갈이나 거란이 선주하여 강한 세력을 부식하고 있던 영주에 뒤늦게 피정복민으로서 천사되어 붙어 사는 입장이었다.²³⁾ 그리고 걸사비우의 속말말갈 부종과 생명을 걸고 동주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대조영 집단은 영주지역에 기미되어 거주한 말갈족과 인접하여 살거나 더러는 잡거하며 상호 동화된 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말갈인 이근행이나 거란인 이진충·손만영 등이 중국식 이름을 가진 것처럼, 걸걸중상은 고구려식 이름 외에 현지의 주도 세력의 하나인 말갈식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과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은 것

찬된 『국사』나 실록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긴 흔적이 적지 않음이 널리 인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전』의 변방전 내용이 글자 한 자가 다르지 않게 『구당서』의 열전에 옮겨 전해진 사실 등을 볼 때 방증되는 면이 있다. 이 같은 점은 본고 주 27)과 표 2 ‘家屬 용례 기사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22) 『신당서』 권110 諸夷蕃將 李謹行傳, “靺鞨人 父突地稽 部酋長也 隋末 率其屬千餘內附 居營州 授金紫光祿大夫 遼西太守.”
- 23) 王承禮 저, 宋基豪 역,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출판부, 52쪽에 보면,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에 신속했던 백산말갈과, 속말말갈의 일부가 영주로 옮겨 살게 되며 영주에 일시 많은 말갈인이 모이게 되어 말갈인 중에는 노복을 수천 명이나 거느린 대귀족이 나타나게 되고 일부 무리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보았다. 그 대귀족의 사례로 수와 당에 귀부하여 충성한 속말말갈 추장 突地稽의 아들이자 營州都督을 지낸 燕國公 李謹行(682년 사망)이 수천의 家僮을 거느리고 막대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음이 그의 묘지명에 보임을 들어 말하였다. 종전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고구려 유민의 삶도 유사한 처지에 있었을 듯도 하다.

이다. 그리고 추정이지만, 걸걸증상은 발해 시조 대조영의 건국설화에서 드러난 그의 부친명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⁴⁾ 이 경우 말갈 문화에 익숙한 고구려계는 물론 말갈인까지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이 같은 이름으로 말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Ⅲ. 「사불허북국거상표」의 ‘속말소번’

발해의 존속시기인 9세기 말에 작성되어, 언급된 발해 관련 사실의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신라 최치원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발해의 源流가 속말말갈이며 대조영도 말갈계로 볼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 보인다. 번역한 글을 아래에 인용하되 단락에 따라서 임의로 부호를 부여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의도상 제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단락별로 일부 생략하겠으며, 각주의 한문 자료는 지면관계상 발해의 연원을 언급한 ㉔부분만 제시하도록 한다.

신 모는 아뢰나이다.

㉔ 신이 당번(當番) 숙위원(宿衛院)의 장보(狀報)를 보니, 지난 건녕(乾

24) 걸걸증상은 『구당서』 발해말갈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오대회요』 발해전에 나온 후 그것을 『신당서』 발해전이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 『오대회요』 발해전은 발해인들의 전언을 중심으로 지어진 장건장의 『발해국기』를 이용한 것이라는 연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걸걸증상은 발해인들이 말했을 가능성이 큰 대조영 건국설화 등에서 처음 말해졌을 개연성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古畑 徹, 1984,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中國側史料の基礎的檢討」, 『朝鮮學報』 113, 天理, 朝鮮學會, 24 쪽 및 38~40쪽에서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은 발해건국기 제 문제에 대해 唐朝史料, 『오대회요』 발해전은 주로 『발해국기』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당서』 발해전은 『발해국기』를 중심으로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여타의 신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계통이 다른 사료들을 정합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료를 개변하기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寧) 4년(897) 7월 중에 발해 하정왕자(賀正王子) 대봉예(大封齋)가 장(狀)을 올려, 발해가 신라 위에 거함을 허락해 주시길 청하였었는데 그에 대한 칙지를 엮드려 보니, “국명의 先後는 원래 강약에 인하여 일컬은 것이 아니다. 조제(朝制)의 등위를 어찌 성쇠로써 고치랴. 마땅히 舊例대로 할 것이니 이에 宣示하노라.” 하였나이다. ㉠ (……)

㉡ 신이 삼가 살피건대, 渤海의 源流는 高句麗가 망하기 전엔 본시 사마귀만한 部落으로 양갈(鞅鞞)의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변영하여 무리가 이뤄지자 이에 속말소번(粟末小蕃)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일찍이 고구려를 따라 중국으로 옮겨더니[內徙], 그 수령 乞四羽 및 大祚榮 등이 武后 임조(臨朝) 때에 이르러, 營州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하여 문득 皇구를 점거하여 비로소 진국(振國)이라 일컬었나이다. 그때 고구려의 남은 자들과 勿吉 잡류가 있었는데 효음(梟音)에 白山에 모여들고, 치의(鴟義)에 黑水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처음은 거란과 행악하고, 이어 돌궐과 통모하여 만리 벌판에 곡식을 경작하면서 여러 번 遼水を 건너는 수레에 항거했으며, 10년이나 오디를 먹다가 늦게야 漢나라에 항복의 기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자 와서 인접(隣接)을 청하기에 그 酋長 대조영에게 비로소 신번(臣蕃)의 제5품 벼슬인 대아찬(大阿餐)을 주었더니, 뒤에 先天 2년에 이르러 바야흐로 대조(大朝)의 총명을 받아 渤海郡王으로 봉해졌나이다. ㉢ (……) ·

㉣ (……)

㉤ 한편으로 또한 名位가 같지 않음에 등급이 엄연히 있습니다. 신의 나라는 秦官의 극품(極品)을 받았사오나 저 번국(蕃國)은 周禮의 하경(夏卿)을 빌렸을 뿐인데, 요즘 先朝에 이르러 갑자기 우대의 은총에 젖었으니, 용적(戎狄)은 만족시킴이 불가하므로 요·순도 오히려 골치를 앓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등(滕) 나라의 다툼을 틈타 스스로 갈왕(葛王)의 꾸지람을 취하였으니, 만일 황제폐하께서 영금(英襟)으로 독단(獨斷)하시고 神筆로 쪽 그어 비답하시지 않았던들 근화향(槿花鄉)의 염치와 예양이 스스로 침몰하고 호시국(楛矢國)의 독기가 더욱 성할 뻔하였습니다. ㉥ (……)

신이 엮드려 해우(海隅)에 통용(統戎)하기에 구애되어 천조에 달려가 보지 못하나이다.²⁵⁾

25) 최치원, 「謝不許北國居上表」; 『동문선』 권33,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

글의 ㉠은 소위 쟁장사건의 전말이다. 결국 구례대로 신라를 상식으로 하기로 하여 매듭이 지어졌다. 이에 당 측에 감사의 글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최치원은 기울어가는 신라의 위상으로 인하여 노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발해보다 문명국이며 발해는 야만의 말갈이며 나당 연합의 공동의 적인 고구려의 소변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거란과 돌궐과 손을 잡고 당에 도전한 사례 등을 상기시키고 있다. 대조영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와 제5품에 불과한 대아찬의 관등을 준 사실을 전하면서 발해가 상식을 탐함은 분수를 모르는 행위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발해는 靺鞨國으로 속신의 후예임도 말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치원은 당 측에 보낸 다른 글에서는 발해가 옛 고구려이며 고구려 잔얼들이 백두산 기슭에 모여 이룬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²⁶⁾ 실로 고구려의 후신으로 본 것으로 앞에서 본 대조영 고구려별종설과 부합하는 인식이다.

결국 그는 발해가 고구려의 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속말말 갈에서 연원한 말갈국으로 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형식상 신라왕이 당의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적 표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당과 발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양국 간에 공인 공지하고 있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필요에 따라 어느 부분을 강조하거나 윤색하여 말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신라 측에서 당 측에 상기시키고 싶은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or.kr '간행도서), "……臣謹按渤海之源流也 句驪未滅之時 本爲疣贅部落鞅鞞之屬 寔繁有徒 是名栗末小蕃 嘗逐句驪內徙 其首領乞四羽及大祚榮等 至武后臨朝之際 自營州作孽而逃 輒據荒丘 始稱振國 時有句驪遺燼勿吉雜流 梟音則嘯聚白山 鴟義則喧張黑水 始與契丹濟惡旋於突厥通謀 萬里擣苗 累拒渡遼之轍 十年食甚 晚陳降漢之旗 初建邑居 來憑隣援 其酋長大祚榮始授臣蕃第五品大阿餐之秩 後至先天二年 方受大朝寵命 封爲渤海郡王 ……” 본고 본문에 인용한 번역문도 위와 같은 곳에서 옮겨 왔으나 일부 내용은 필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26) 『삼국사기』 권46 열전 최치원, “上大師侍中狀云 …… 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隴右 高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 및 『동문선』 권47 與禮部裴尙書瓚狀 崔致遠, “句麗旣息狂飈 劣收遺燼 別謀邑聚 遽竊國名 則知昔之句麗 則今之渤海.”

㉔을 보면 발해의 원류가 고구려에 붙어 살던 속말말갈의 작은 부용세력이라 하였다. 이들은 고구려가 망하자 고구려를 따라서 당의 영토로 옮겨졌다. 그런데 그 수령인 걸사우와 대조영 등이 측천무후가 정치할 때에 영주에서 죄를 짓고 도망하여 황량한 구릉에 거하여 振國을 세웠다고 하였다.

앞 장에서 이미 본 ‘고려별중’인 대조영이 속말소변 곧 속말말갈의 수령 걸사우와 함께 나타난다. 원문은 “其首領乞四羽及大祚榮等”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은 걸사우와 대조영 등이 모두 ‘其’ 곧 ‘속말소변’의 수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及’의 의미 강도에 따라서 ‘기수령걸사우’ 및 ‘대조영 등’으로 분리하여 볼 수도 있다. 사서에 보이는 예로는 후자가 더 일반적인 듯하나 단정할 수는 없다. 동질의 실체를 함께 나타내고자 할 때 한문에서는 흔히 단순 나열로 한다. 질적 차이가 있는 전후의 실체를 연결하거나 다른 출처의 자료나 사실을 결합할 때에 ‘及’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²⁷⁾ 걸사우와 대조영이 본래 속말소변의 수령이었다면 ‘其首領乞四羽大祚榮等’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양 『당서』와 『오대회요』 발해전 등을 참조하여 보면, 걸걸중상 대조영 측과 말갈추장 걸사비우 측은 출신이나 소속 집단이 서로 다르며 결국 걸사비우가 죽임을 당한 후 대조영이 양 집단을 통합하여 지휘한 것으로 일치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대조영 등까지 속말소변 수령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할 듯하다. 최치원은 사실의 일단을 말하면서도, 당 조정이 알

27) 『通典』과 양 『唐書』를 읽다가 보게 된 연관된 몇 사례를 들어 보겠다. 병열된 두 인명 중 구별이 여의치 않은 경우 앞 사람을 밑줄을 그어 구분하겠다. 앞의 『通典』 권198, 突厥 中, 5439쪽, “俄而降戶阿悉爛跌跌思太等 復自河曲叛歸”와 같은 책, 권199, 돌궐 下, 5463쪽, “有大首領莫賀達干都摩度兩部落 最爲強盛”이라 하여 동질의 존재를 단순 나열 명치한 예이다. 『通典』 권198, 突厥 中, 5438쪽, “開元二年 遣其子移涅可汗及同俄特勤妹婿火拔詰利發石阿失畢率精騎圍逼北庭”(개원 2년 그 아들인 移涅可汗 及 同俄特勤, 매제 火拔詰利發인 石阿失畢을 보내어 정예 기병으로 북정을 에워싸 핏박하였다) 이라 하였고, 같은 책 5439쪽, “骨咄祿之子闕特勤鳩合舊部 殺默啜子小可汗及其諸弟并親信略盡”이라 하였는데 다소 이질적 존재를 ‘及’을 통해 연결한 예이다. 마지막 인용문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를 ‘及’ 그리고 ‘并’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연결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인용한 『통전』 기사는 모두 『구당서』 권194상과 194하에 완전 同文으로 나오며, 『신당서』 권215상과 215하에서는 개서하여 실려 있다.

고 있을 대조영 ‘고려별종’설을 의식하며, 속말말갈 추장 걸사우와 출자를 밝히지 않은 대조영을 ‘及’이란 한 글자를 써서 연결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피하며 발해 말갈설을 절묘하게 구사한 것으로 볼 만하다. 최치원의 이 글은 그의 다른 글과는 다르게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 몰아붙인다. 걸사우를 의도적으로 앞에 내세웠을 가능성이 추정되기도 하였다.²⁸⁾

양 『당서』는 물론 『오대회요』에도 하나같이 ‘말갈’임을 명기하고 있는 걸사비우는 위 글 ㉔부분의 내용대로 속말말갈 수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에서는 ‘靺鞨 걸사비우’로 『오대회요』 발해전에는 ‘靺鞨反人 걸사비우’ 그리고 『신당서』 발해전에는 ‘靺鞨酋 걸사비우’로 나온다.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오대회요』 발해전에서 ‘고려별종’으로 말해지며 『신당서』 발해전의 경우 종족 표시가 없는 걸걸중상이나 그의 아들인 대조영은, 걸사비우가 말갈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 말갈출신도 아니고 물론 그 수령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속말말갈이 확실시되는 걸사비우가 거느린 말갈무리가 있고 다른 편에 고구려인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지휘한 자가 걸걸중상이나 대조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²⁹⁾

대조영은 걸사비우가 당군에게 죽임을 당한 후 고구려 무리와 말갈 무리를 합쳐 그 지도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가 본래 속말말갈 수령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최치원이 그를 말갈수령 걸사비우와 연결 병기하였다면 발해국의 말갈국가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서술방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조영은 걸사비우 사후 양측을 통합하여 새롭게 수령이 되었을 개연성이 매

28) 盧泰敦, 1985, 「渤海國의 주민구성과 발해인의 族源」, 역사학회 편,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295쪽. 최치원은 글의 의도상 말갈족이 확실한 걸사비우를 일부러 먼저 내세워 강조하였으며, 이 점은 그가 대조영의 출자가 고구려인이라는 다른 전승도 알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보았다.

29) 만약 대조영이 말갈출신으로 ‘고려지중’과 직접적인 종족상의 연관 관계가 없었다면, 걸사비우가 당군에 죽임을 당하는 대패를 겪은 상태에서 ‘고려지중’은 당군에 투항하거나 분산 도주하고 말았을 것이다.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려지중’이 대조영의 지휘 하에 천문령 전투를 필사적으로 치름은 실로 이들 간의 관계가 본원적인 동족적 결합이었던 데서 가능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 높는데 순차에 따른 수령 역할을 적어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조영이 본래 속말말갈 추장이었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 지배 하에서부터 걸걸중상이나 대조영이 속말말갈 수령이었을 가능성이 말해지고 있다.³⁰⁾ 위의 최치원 글의 수령 관련 언급이 주요 근거가 되었고, 『삼국유사』 말갈발해전에 보이는 『통전』 관련 기사³¹⁾ 방증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구당서』 발해말갈전에 보이는 대조영이 거느리고 영주로 옮겨간 ‘家屬’은 가족뿐 아니라 그가 거느렸던 말갈 ‘部衆’까지 포함하였을 것으로 보기까지 하였다.³²⁾

위에서 최치원의 글을 검토하며, 대조영을 속말말갈 수령으로 단정하여 볼 수 없음을 보았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통전』 관련 자료도 그 신빙성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우의 『통전』에는 발해라는 국명은 단 1회밖에 보이지 않으며³³⁾ 발해는 변방전에 별도로 설정되지도 않았고 해당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이 기사는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는 것을 축약한 듯도 하나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³⁴⁾ 『신당서』 발해전의 기사를 중심으로 일부 타 사서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통전』의 기사로 잘못 전해진 내용을 一然이 그리 알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조영이 거느린 ‘家屬’의 실체도 더욱 논증할 여지가 있다. 대조영 가족 관련 기사와 견주어 볼 만한 내용은 『통전』과 양 『당서』에 보인다. 대조영이 살

30) 한규철, 1994, 앞의 책, 91쪽; 송기호, 1995, 앞의 책, 26~34쪽

31) 『삼국유사』 권1 기이편 靺鞨 [一作 勿吉] 渤海, “通典云 渤海本粟末靺鞨 至其酋祚榮立國自號震旦 先天中 [玄宗 壬子] 始去靺鞨號 專稱渤海 開元七年 己未 祚榮死 諡爲高王 世子襲立 明皇賜典冊襲王 私改年號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後唐天成初 契丹攻破之 其後爲丹所制.”

32) 송기호, 1995, 앞의 책, 26쪽; 정병준, 2007, 「營州의 대조영 집단과 발해국의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6, 동북아역사재단, 12쪽에서 송기호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33) 渤海는 『通典』 권180 州郡7 安東府, 앞의 책, 4667쪽, “安東府 東至越喜部落二千五百里 南至柳城郡界九十里 西至契丹界八十里 北至渤海一千九百五十里”에 보인다. 이 사실은 박시형, 1962,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력사과학』 1962-1, 과학원출판사, 14쪽에 제시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았다.

34) 이 『삼국유사』에 보이는 국호인 震旦은 『신당서』 발해전에는 震國으로 나온다.

왔던 7세기에 당의 변경에서 부락생활을 하였던 西突厥의 역사에서 ‘가속’이 보이는 기사들이 나온다.

표 2의 기사는 당 태종 시 서돌궐의 가한이었던 阿史那彌射와 뒤에 가한을 지낸 그의 족형(族兄) 步眞 간에 벌어진 대립상을 당 측에서 적은 것이다.

좌측 모든 기사에 보이는 ‘族兄’은 三從兄이나 또는 원친 중 동향렬 연장자

〈표 2〉 家屬 응례 기사

『통전』 (권199, 北狄6, 突厥 하)	阿史那彌射者 室點密可汗五代孫也 初 室點密從單于統領十大首領 有兵十萬衆 往平西域諸胡國 自立爲可汗 號十姓部落 世統其衆 彌射在本蕃爲莫賀咄葉護 與族兄步眞有隙 以貞觀十三年(639) 率所部處月處密等入朝 授右監門大將軍 其後步眞遂自立爲咄陸葉護 其部落多不服 委之遁去 步眞復携家屬入朝 授左屯衛大將軍	
『구당서』 (권194하, 突厥 하)	阿史那彌射者 室點密可汗五代孫也 初 室點密從單于統領十大首領 有兵十萬衆 往平西域諸胡國 自立爲可汗 號十姓部落 世統其衆 彌射在本蕃爲莫賀咄葉護 貞觀六年(632) 詔遣鴻臚少卿劉先因就蕃立爲奚利邲咄陸可汗 賜以鼓纛 綵帛萬段 其族兄步眞欲自立爲可汗 遂謀殺彌射弟姪二十餘人 彌射旣與步眞有隙 以貞觀十三年(639) 率所部處月處密入朝 授右監門大將軍 其後步眞遂自立爲咄陸葉護 其部落多不服 委之遁去 步眞復携家屬入朝 授左屯衛大將軍	
『신당서』 (권215하, 突厥 하/ 권218, 沙陀)	阿史那彌射 亦室點密可汗五世孫 世爲莫賀咄葉護 貞觀中 遣使者持節立彌射爲奚利邲咄陸可汗 賜鼓纛 族兄步眞謀殺彌射 欲自立 彌射不能國 卽舉所部處月處蜜等入朝 拜右監門衛大將軍 以步眞遂自爲咄陸葉護 衆不厭 去之 亦與族人來朝 拜左屯衛大將軍 彌射從帝征高麗有功 封平壤縣伯 遷右武衛大將軍 及平賀魯 乃與步眞爲可汗	沙陀西突厥別部處月種也 始突厥東西部分治烏孫故地 與處月處蜜雜居 貞觀七年 太宗以鼓纛立利邲咄陸可汗 以族人步眞歆望 謀并其弟彌射乃自立 彌射懼 率處月等入朝 以步眞勢窮亦歸國 其留者 咄陸以射匱特勒劫越之子賀魯統之

의 통칭이다.³⁵⁾ ‘族人’은 먼 친척인 同宗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니³⁶⁾ 표 2의 『신당서』 기사를 믿을 수 있다면 ‘족형’은 遠親의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대립상을 보면 이것이 타당할 듯도 하나 권력문제이기엔 속단할 수 없다. 다시 좌측 세 기사를 보면 아사나미사가 보진을 두려워하여 당에 들어간 후 보진이 주도권을 잡아 咄陸葉護가 되었으나, 『통전』과 『구당서』 기사로 보면 민심을 얻지 못한 듯 ‘部落’들이 복종하지 않아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 당으로 들어와 버렸다. 『신당서』는 ‘부락’을 ‘衆’으로 개찬하여 실상을 매우 모호하게 한 면이 있다.

당에 들어갈 때 보진은 ‘携家屬’ 하였다고 하였다. 『신당서』는 ‘與族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의 ‘족인’은 원친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부락들을 떠나 숨어 달아난 이가 근친이 아닌 원친들과 함께 당에 귀부할 리는 없다. 이 경우 ‘족인’은 역시 『통전』이나 『구당서』 기사에서와 같이 ‘가속’ 곧 ‘가족’ 정도로 볼 수 있다. 표 2의 『신당서』 우측 기사까지를 보면 송기는 ‘족형’도 ‘족인’이란 말로 바꾸어 사실관계가 더욱 모호하게 되어 곤혹스럽기도 하다.

‘가속’은 가족과 같은 말이기도 한데³⁷⁾ 보진이 데리고 들어온 ‘가속’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이다. 우선 ‘부락’들이 반발하여 그들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한데서, 운명을 같이하는 최소한의 근친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극히 일부 신복이 동반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예외적이라 할 것이다.

표 2 『구당서』 기사를 보면, 정관 6년에 당이 아사나미사를 奚利邲咄陸可汗으로 세우고 고도(鼓纛, 大旗)와 비단 만단을 내렸는데, 이때에 보진이 가한 이 되고자 모의하여 ‘彌射의 弟姪 20여인’을 죽였다고 하였다. 미사와 보진의 정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할진대, 보진이 미사를 구축하기 위해 모의하여 살해한 미사의 동생과 조카 등 20여 명이야말로 미사의 ‘가속’을 이루는 이들일 것이며 보진의 가속의 범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35) 앞의 『大漢和辭典』 권5, 702쪽, ‘族兄’ 및 ‘族兄弟’

36) 위의 책, 702쪽, ‘族人’

37) 위의 책, 권3, 1027쪽, ‘家族’ 및 ‘家屬’

참고가 될 만한 사실이 더 있다. 돌궐의 가한 默啜이 拔曳固의 잔병에게 살해된(716) 후 毗伽可汗이 옹립되는 과정에서 보인다. 闕特勤이 옛 부[舊部]를 수습하여 모으고 목철의 아들인 소가한과 그의 동생들 및 목철의 측근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좌현왕이었던 형 목자련을 가한으로 세웠다.³⁸⁾ 앞서 목철이 친형인 가한 骨咄祿이 죽었을 때 조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한을 빼앗아 차지했던 것인데 그의 조카들을 좌현왕 등에 보하여 가족적 연대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목철이 죽자 골돌록의 아들들이 나서서 중형제와 목철의 측근을 제거하고 가한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적어도 사촌 이내 가족의 결속력이 보였는데 가한 위를 두고 문득 친형제 집단별로 결속하여 상호 대결이 펼쳐진 셈이다. 돌궐의 최고 지배층의 결속력이 부 단위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근친 가족 단위로도 확고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돌궐 가한가의 가족 단위의 결합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당 측에서 보진이 데리고 온 근친을 ‘가속’이라는 당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속’에 일반 ‘부중’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락’들이 불복하여 이 사태가 벌어진 점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

같은 『구당서』의 열전들에 보이는, 보진의 ‘携家屬’과 대조영의 ‘率家屬’은 거의 같은 구문으로 같은 내용을 전한다고 여겨진다.³⁹⁾ 대조영에게는 부친 걸걸중상과 동생 대야발이 있었으니 부모·형제·자녀·조카 등으로 이루어진 3대 가속 정도, 곧 가족이 영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볼 만하다. 걸걸중상이나 대조영이 말갈 수령이었고 部 단위의 천사가 행해졌다면, 대조영은 ‘家屬及部衆’ 혹은 ‘部落’, ‘部衆’, ‘部’ 등을 거느리고[率] 갔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수령이나 추장의 용례는 중국 사서류에서 四夷의 우두머리뿐 아니라, 중화주의적 인식에서 영역 국가의 귀족이나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상투적이고 관념성이 개재된 용례인지 실제 부락이나 부족을 지

38) 앞의 주 27) 『통전』 5439쪽 기사

39) 『신당서』 권110 諸夷蕃將 李謹行전에는 “靺鞨人 父突地稽 部酋長也 隋末 率其屬 千餘內附 居營州”라고 하였다. 돌지계가 부의 추장인데 ‘其屬’을 데리고 내부하였다고 하였다. 이 경우 ‘가속’은 ‘部衆’이 될 것이다.

배하는 수령이나 추장인지를 가리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백제 부흥운동에 흑치상지와 동참한 백제 귀족들이나 고구려 멸망 후의 지배층도 추장이나 추호로 나오며 발해 왕도 추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⁴⁰⁾ 대조영이 본래 부중을 지배한 속말말갈 추장이었다는 확신할 만한 사료적 근거가 없음을 다시 환기한다.

IV. 『신당서』의 ‘속말말갈부고려자’

『신당서』 발해전은 발해가 고구려에 귀부한 속말말갈로부터 연원했다(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고 하였다. 앞에서 본 표 1을 참조해서 種과 類를 들어 말한다면 발해는 속말말갈種 중에 고구려에 귀부한 類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이다.⁴¹⁾ ‘고려별종’이 아니고 ‘속말말갈별종’이라 말한 셈이다. 본래의 속말말갈이 있음은 물론, 돌지계 부락 등과 같이 수·당에 귀부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서 나온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속말말갈부고려자’를 곧 ‘고려별종’으로 보기도 하였는데⁴²⁾ 위의 논리로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고구려에 귀부하여 한 세기도 경과하지 않은 동안, 고구려인과 달리 부락 공동생활을 해왔을 속말말갈인들이 얼마나 고구려화하여 고구려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

40) 『신당서』 권110 諸夷蕃將 黑齒常之傳, “以定方囚老王 縱兵大掠 常之懼 與左右酋長十餘人遁居.” 『신당서』 권220 동이전 고려, “(乾封)三年十二月 復置安東都護府 擢酋豪有功者授都督 刺史 令 與華官參治.” 『冊府元龜』 권962 官號, “渤海國……其俗號其王爲可毒夫(……)長子曰副王 諸子曰王子 世以大氏爲酋長.” 『冊府元龜』의 내용은 『오대회요』 권30 발해전에도 거의 같이 나오는데 ‘代以大氏爲酋長’이라 하였다.

41) 『隋書』 권81 東夷傳 靺鞨, “靺鞨 在高麗之北 邑落俱有酋長 不相總一 凡有七種 其一號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이라고 하여 속말부가 말갈 7種의 하나임을 말하였다.

42) 송기호, 1995, 앞의 책, 40쪽

지도 잘 알 수 없다.⁴³⁾ 설혹 일부가 고구려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하여 그들이 곧 고구려 종족은 아니다. 종족은 본인의 귀속의식과 무관한 자타 공히 인지할 수 있는 혈통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나름의 역사와 문화 등을 영유한 구별 가능한 인간집단이다. 송기도 전통적 관점에서 모종의 사료에 근거하여 그들을 속말말갈 종으로 파악하였을 것이다.

대조영을 속말말갈로 보되 송화강 부근 출신 고구려 변방 지방민으로 보는 견해도 본고의 논리와는 거리가 있다. 고구려의 중앙세력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이 고구려 말까지도 지방민으로 '반독립적 상태'를 유지하여⁴⁴⁾ 중앙세력에 '附'한 자로 일괄 '말갈'로 불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농경국가의 성격을 가졌고 지방제도 발전이 적지 않았던 고구려사의 전개를 생각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⁴⁵⁾ 더구나 양 『당서』에 보이는 발해의 종족 출자 내용은 그 찬자들이 '고구려'와 '말갈'은 별개의 종족이라는 전통적인 중국인들의 인식 위에서 전해온 기왕의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⁴⁶⁾ 두 세기에 걸친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43) 설혹 양자가 크게 동화되었다고 하여도 불과 한 세기 이내에 고구려인과 속말말갈 歸附者들은 '異種而同類'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異種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종족의 구분은 현대사회에서도 사회 문화적 동화 등으로 쉽게 소멸될 수 없는 본원적이고 생물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나 제일 한국인 동포, 재중 조선족 동포 등의 경우를 참조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44) 한규철, 1994, 앞의 책, 81쪽

45) 두 사서의 서로 다른 발해 종족 연원 관련 내용을 부합시켜 설명하려다가 고구려의 국가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이해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도 유의할 일이다.

46) 한규철, 1994, 앞의 책, 89쪽에서는 『신당서』가 왕조 중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고려와 우호적이었던 송대에 쓰여져, 고려와 송에 적대적이었던 거란의 송화강유역 주민들의 조상을 굳이 '고려별종'으로 쓸 이유가 없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려와 송이 우호적인 관계를 대체로 유지한 편이나 국익에 따라 변화가 적지 않았고, 『신당서』가 작성되던 시기(1044~1060)에 고려와 송은 공식 외교관계도 두절되어 있었다. 양국의 외교관계가 재개된(1071) 시기에 송의 사마광이 편찬한(1065~1084) 『자치통감』에도 대조영을 고려별종으로 말하였다(권210, 唐紀26, 현종 개원원년 이월, "初 高麗既亡 其別種大祚榮徙居營州"). 宋에서 唐의 역사를 편찬하며 발해를 말하는데 왕씨의 고려를 의식하여 '고려별종'을 피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의 추이는 전해중, 1984, 「대송외교의 성격」,

통해 당나라 사람들이 알게 된 발해인의 종족 연원을 말한 것인데 괴리가 있는 두 내용이 각각 기술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말갈 諸部の 종족적 연원이 어떠한 것인지는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인 것이며 양 『당서』 찬자의 관심이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뒤에서 宋祁의 종족 관련 내용의 변개 이유 등을 살펴 다 보면 ‘속말말갈부고려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신당서』 발해전의 출자가 포함된 초두의 기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高麗既滅 祚榮率家屬 徙居營州.⁴⁷⁾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也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⁴⁸⁾

전자는 고려별종인 발해시조 대조영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후자는 대조영을 말하지 않고 발해 전체의 종족적 연원을 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구성은 대조영 중심의 건국사와 이후의 대당 교섭사가 전부이다. 이에 비해 『신당서』 발해전은 대조영의 역할 비중을 낮춘 건국사를 전하고 이어 대당교섭사와 지방제도·언어·관제·물산 등을 비교적 균형 있게 편성하여 열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바로 이런 구성상의 특성에서, 『신당서』 발해전은 대조영 개인이 아닌 발해 일반의 출자를 적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발해본속말말갈부고려자’의 바로 뒤에 ‘성대씨야’를 기록하여 발해의 왕성이 대씨임을 말하고 있다. ‘발해본속말말갈부고려자’가 전체 종족적 내용을 말하고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대조영가 까지 포함한 종족적 연원을 속말말갈계로 바꾸어 보는 것인지 모호한 면이 있다.

그런데 『신당서』 발해전이 『구당서』의 ‘고려별종’을 단순히 표현만을 달리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331~341쪽 참조.

47) 『舊唐書』 권199下 北狄 渤海靺鞨傳

48) 『新唐書』 권219 北狄 渤海傳

하여 ‘속말말갈부고려자’로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은 발해전 자체에서 찾아지는 면이 있다. 아래에 인용한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는 기사에는 『구당서』와 『오대회요』에 보이던 ‘高麗別種’은 사라진 대신 전대 사서에 보이지 않던 마치 제3의 존재 같은 ‘高麗餘種’이 문득 등장한다.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乞比羽 及高麗餘種東走 度遼水 保太
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

『구당서』 발해말갈전이 ‘고려별종’인 대조영과 말갈걸사비우,⁴⁹⁾ 『오대회요』 발해전이 ‘고려별종’인 대사리 걸걸중상과 말갈반인 걸사비우를⁵⁰⁾ 동주사건의 주동자로 거명하고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사리걸걸중상이란 자가 있어 말갈 추걸사비우 및 고려여종과 더불어 동주하였다’고 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高麗餘種’은 ‘高麗別種’과 같은 언어 구조로서 그중 ‘餘種’은 대사전의 표제어로도 나오지 않을 만큼 생경하여 송기의 造語일 가능성도 있다. 그는 『신당서』 열전을 편찬하며 古文을 숭앙하여 ‘개찬(改竄)’이 과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의도적 개서가 심했던 것이 익히 지적되고 있다.⁵¹⁾

‘고려여종’은 부득불 해석한다면 ‘고구려의 남은 종’으로 ‘고구려의 남은 무리’ 정도의 의미를 염두에 두었을 듯하다. 전대 사서들이 명기한 ‘고려별종’을 대조영 부자로부터 떼어내고 그들도 속말말갈 종족인 것처럼 보이게 적는 일

49) 『舊唐書』 권199下 北狄 渤海靺鞨傳, “萬歲通天年 契丹李盡忠反叛 祚榮與靺鞨乞乞比羽各領亡命東奔.”

50) 『五代會要』 권30 발해전, “至萬歲通天中 契丹李萬榮反 攻陷營府 有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與靺鞨反人乞乞比羽走保遼東.”

51) ‘餘種’은 『大漢和辭典』 권12, 1986, 大修館書店, 405~411쪽 및 『中文大辭典』 권10, 1980, 中國文化學院出版部, 206~214쪽의 ‘餘’항의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두 사전에서 ‘餘’로 시작되는 ‘남은 무리’를 나타내는 표제어로는 ‘餘裔’, ‘餘衆’, ‘餘黨’, ‘餘類’ 등이 보인다. 송기는 열전을 찬하며 古文만을 옹다 여겨 『구당서』의 각 열전에 대해 字句를 고치지 않음이 없고[對舊書各傳 無不改竄 惟古是求], 四六문 자료를 고문으로 개작함에 代作 수준에 이른 것도 있으며 ‘造語用字 尤多新奇難解’하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新唐書述要』, 楊家駱 主編, 1980, 『二十五史識語』, 鼎文書局, 343쪽; 景仁文化社 편, 『標點校勘 新唐書』 上, 8쪽).

은, 述而不作을 기본정신으로 한 전통시대 중국의 사가로서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송기는 이처럼 고구려계를 보완적 존재로 설정해 두어 사실 왜곡이란 비난에 대비하며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⁵²⁾ 대조영이 지휘하여 이해고의 당군과 싸운 무리가 결국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니, 대조영이 갑자기 솟아나 양측의 지휘권을 통합 장악할 일이 아닌 이상 그가 말갈추 걸사비우가 인솔했던 말갈이 아닌 여타의 고구려인들을 부친 걸걸중상에 이어 지휘했을 것은 자명하다.⁵³⁾

대조영 부자에게서 ‘고려별종’을 떼어냄으로써 송기는 『신당서』(1060) 보다 한 세기 앞서 편찬된 『구당서』(945)와 『오대회요』(961)에서 보여진 발해 건국 과정에서 주도적이며 대표적이던 고구려계의 활약을 조연처럼 대거 감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고구려계는 걸걸중상이나 걸사비우가 거느린 집단에 부수된 제3세력 같은 ‘고려여종’으로 그리고 건국에 뒤늦게 호응한 ‘고려포잔’으로⁵⁴⁾ 수동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가 발해를 말갈 국가로 보려 한 의도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이 말한 ‘고려별종’을 없애고, ‘계루고지’를 『오대회요』 발해전에 보이는 ‘읍루’로 고쳤으며⁵⁵⁾ ‘계루군왕’을 명기하지 않음에서⁵⁶⁾ 더욱 확실하게 드

52) 연구자들은 송기의 성향과 의도에 유념하지 않아 그의 改竄의 산물일 ‘고려여종’에 특별한 사실성이 있는 듯 주목한 면조차 없지 않다. 앞 장에서 제시한 서둘러 관련 표 2 기사에서 『통전』이나 『구당서』가 인멸되어 『신당서』만 전해졌다고 가정해 보면, ‘族人’에서 ‘家屬’을 ‘衆’에서 ‘部落’을 추론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송기의 개찬이 사실 파악에 문제가 크다고 한 중국 선학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53) 古畑 徹, 1984, 앞의 글, 41쪽

54) 『新唐書』 권219 北狄 渤海傳, “渤海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也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 築城郭以居 高麗遺殘稍歸之.”

55) 김기흥, 2011, 「발해 건국집단의 역사적 정체성」, 『歷史學報』 210, 역사학회, 35·36쪽에서 「泉男生 墓誌銘」(679)의 ‘桂婁盛業’ 등의 글귀 근거 등을 들어 ‘계루고지’의 ‘계루’가 ‘고구려’임을 밝혀 발해 건국시에는 당 조정에서 고구려를 ‘계루’로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계루고지’의 사실성이 ‘읍루’보다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읍루고지는 당·송 식자들의 발해 곧 말갈 인식이 뒤에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같은 글 40·41쪽에서는 東牟山의 ‘東牟’가 東明 都牟 鄒牟 등과 같은 동음 동어의 借字의 하나로 동모산은 ‘동명의 산’이라고 보아 『신당서』 발해전의 ‘읍루의 동모산’ 보다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계루고지의 동모산’이 더 어울린다고 보았다.

러나는데, 이들 일련의 산삭 개찬의 대상들은 모두 ‘고구려’와 직결된 것들이다. 여타의 개찬이 적지 않음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⁵⁷⁾

‘본속말말갈부고려자’에 보다 부합하는 실체는 누구일까. 걸사비우와 그가 거느린 말갈무리가 주목된다. 걸사비우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에는 ‘말갈 걸사비우’, 『오대회요』 발해전에는 ‘말갈반인 걸사비우’,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말갈추 걸사비우’로 그리고 「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속말소변의 ‘기수령 걸사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 네 주요 자료를 통해 걸사비우가 동주한 말갈집단의 지휘자이고 당이 허국공으로 책봉하려 한 점까지 참작해 보면 그는 속말말갈의 추장으로 보인다. ‘고려별종’ 및 ‘高麗之衆’과 생사를 같이하며 東奔한 그는 친고구려적 인물이다. 생사를 같이하여야 할 반란의 공조는 범상한 관계에서 나올 수 없다. ‘고려지중’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와 그의 말갈 부중은 확실히 할 만한 친고구려적 존재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당에 대해 매우 강경한 저항의식을 보여 축천의 용서나 허국공 책봉을 먼저 거절하고 대항하였다.⁵⁸⁾ 그는 과거 고구려에 귀부했던 속말말갈 출신 추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⁵⁹⁾

56) 계루군왕에 관하여 『舊唐書』 권199下 北狄 渤海靺鞨傳, “開元七年 祚榮死 玄宗遣使弔祭 乃册立其嫡子桂婁郡王大武藝襲父位左驍衛大將軍 渤海郡王”이라고 하였는데, 『新唐書』 권219 北狄 渤海傳, “玄宗開元七年 祚榮死 其國私諡爲高王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라고 하여 탈락시켰다.

57) 박시형, 1962, 앞의 글, 22쪽

58) 친고구려적 성향에서 온 것은 물론, 당의 변방 기미정책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에 미봉적 용서나 책봉을 거부했을 것이다. 기미주 하의 경험에서 당의 이종족 지배정책의 기만성을 알았을 것이다.

59) 노태돈, 1985, 앞의 글, 278쪽 및 281쪽. 걸사비우집단은 속말말갈 내의 제 집단 중 가장 고구려화가 진전된 무리로 반당적인 색채가 강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李龍範, 1973, 「발해왕국의 형성과 高句麗遺族(하)」, 『동국대학교논문집』 11, 103쪽에서는 걸사비우를 隋에 귀부하여 唐에 충성한 돌지계 집단의 후예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정황상 설득력이 거의 없다. 돌지계 후예가 반란에 동참하였다면 당이 받은 충격은 심대했을 것이며, 고인이 된 이근행 등에게도 모종의 조치 등이 뒤따라 그의 열전에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전혀 그런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인들이 수·당에 충성했던 속말말갈인들을 신뢰하여 생사를 같이하는 반란 동주의 길에 함께 나섰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다. 최치원의 「謝不許北國居上表」

그런데 이들 주요 사서의 발해전을 보면 대조영이나 걸걸중상이 먼저 등장하고 말갈추장 걸사비우가 동반하여 나온다. 이러한 역할 관계는 사실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사서의 체제상, 열전의 내용상 주인공이 되기 마련인 발해 왕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변용된 결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이진충 반란 가담 및 동주사건의 초기 주도자가 대조영 부자가 아니라 ‘靺鞨反人’으로 나오는 걸사비우일 가능성을 점검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전하는 위의 주요 자료들을 보면 대조영 부자가 앞서 나오지만, 측천이 봉책을 하려할 때는 먼저 걸사비우를 허국공에 그리고 이어 걸걸중상을 진국공에 봉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열전 자체의 인물 구성의 비중과 순서와는 다른데, 자료에 보이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있었으나 본래 자료의 인물 순서를 무심히 전하게 되어 남게 된 자료의 혼적일 가능성이 높다. 측천이 용서하고 봉책을 하려 할 때 걸사비우가 먼저 이를 거부하였고, 당군이 걸사비우를 선제공격하여 처단한 것을 보아도 누가 동주 초기 단계의 상대적 주도자인가를 잘 알 수 있다.⁶⁰⁾

당군이 볼 때도, 전통적 부락조직인 걸사비우가 이끄는 속말말갈인들은 복합적 주민들로 구성되었을 대조영 등이 지휘하는 고려지중에 비해 더욱 강력하리라 여겨져 선제집중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갈 무리를 먼저 공격하여 걸사비우를 참했던 것이다. 걸사비우 집단을 분쇄하면 대조영의 고려지중은 상대적으로 쉽게 토벌할 수 있다고 여겼을 만하다.

이 같은 비교적 명확한 사실들에 의하여 ‘속말소변’의 수령이었던 걸사비우는 동주사건의 주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部衆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전형적 ‘附高麗者’인 것이다. 걸사비우가 대패를 당하고 죽은 후에 크게 약세화된 남은 말갈 무리는 대조영에 의해 수습되었다. 대조영은 고구려

에 보이는 속말소변이 고구려(멸망과) 더불어 內徙되었다는 기록을 도외시킨 채 나온 이 같은 추정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60)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72~80쪽에서 걸사비우의 이 같은 행위와 당군의 대응에 주목하여 그가 거느린 말갈족이 건국과정의 초기에 주도적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았다.

말갈 연합군을 거느리고 천문령에서 대승을 쟁취했다.⁶¹⁾ 이 전투로부터 대조영은 고구려 말갈 연합의 지휘자로서 수령이 되었을 것이다.⁶²⁾ 남겨진 걸사비우 휘하 무리들은 발해 건국에 참여하여 군사 사회상 나름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⁶³⁾ 발해가 애초에 속말말갈 고지 가까이에 가게 된 것도 바로 걸사비우 휘하의 남은 무리들이 영주로 천사하기 이전 돈화 인근에 살았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듯하다. 다만 건국 후 이들의 사회 국가적 역할은 지도자 걸사비우의 부재와 문화적 소양의 한계, 고구려계의 적극적 진출 등에 의하여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은 물론 그보다 상세한 『오대회요』 발해전에 전해진 건국투쟁사에 비하여 몇 가지 다른 듯 보이는 내용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세히 대비해 보면 결국 『구당서』 발해말갈전에 더하여 『오대회요』 발해전의 주 자료가 되었다는 『발해국기』 등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측천이 이해고뿐만 아니라 중랑장 색구라는 이에 계도 걸사비우를 죽이도록 명한 점은 앞의 두 사서들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宋祁가 『구당서』 찬자들이 보지 못한 신자료를 얻어 이용한 결과라고 보기도 하였다.⁶⁴⁾ 그런데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신당서』 발해전의 出自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건국투쟁사건의 진행과정이나 기본 구조가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중랑장 색구’의 유무도,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찬자도 자료에서 그를 보았으나 상급 지휘관인 이해고를 언급하는 선에서 그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신당서』 발해전이 더

61) 이 전투의 대승은 고구려인의 인원이나 무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입증하는 면이 있다.

62) 전시라는 특수상황은 물론 본래 고구려 주민으로서의 공동운명체 의식과 영주에서 인접하여 살았거나 잡거하여 양 종족 무리 간에 친밀감이 형성된 것 등이 대조영의 지휘권 확보에 우호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걸사비우의 죽음과 함께 말갈 지층이 큰 타격을 입어 쇠잔하여져서, 오히려 대조영이 살아남아 지휘한 고구려 무리들의 전력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합세력의 지휘권이 걸사비우 휘하 지휘관들이 아니고 대조영에게 돌아온 면이 있었을 현실적 이유 등에도 유의할 일이다.

63) 李龍範, 1973, 앞의 글, 100쪽

64) 古畑 徹, 1984, 앞의 글, 38~40쪽

다른 지방제도, 언어, 관제, 특산물 등의 내용도 한 세기 전 『오대회요』 발해전을 지으며 활용한 『渤海國記』에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송기가 적극 발굴한 신 자료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⁶⁵⁾ 양 『당서』의 발해전은 『발해국기』 이용 여부를 제외하고 보면 『唐武后實錄』이나 柳芳의 『唐書』 등 거의 같은 기본 자료에 근거한 편찬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⁶⁾ 그런데도 ‘고려별종’이 사라지고 ‘속말 말갈부고려자’가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양 『당서』 발해전 찬자들이 공통으로 보았을 위의 기본 자료들에는 동주사건의 대응 처리와 발해의 건국과정 및 교섭사가 나왔을 것이다. 주도자와 집단의 출신이나 대강의 인원수 등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추장 걸사비우와 그가 이끈 강력하게 여겨졌을 말갈무리가 주목되고 그들이 속말말갈이며 ‘부고려자’였던 점이 말해졌을 것이다. 고려지중과 합세하여 고구려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세력집단의 출신성분은 의당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주목되었을 것이다. 걸걸중상이나 대조영 그리고 그들이 이끈 세력은 ‘본고려인’ 정도로 말해지고 걸걸중상에게는 이진춘난과 관련하여 사리라는 거란의 관명이 칭해져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異種族이 혼재하여 살던 국제도시 營州 일대에 거란추장 이진충의 독립 깃발이 날린 바 있고 돌궐의 가한 목철조차 북방의 패자를 노리고 있는 중에 발생한 이 동주사건은, 과거 동북방 최대의 적국 고구려 잔여 세력의 국

-
- 65) 『신당서』 발해전의 대외관계사 관련기사를 보면 당의 함통연간(860~873)에 朝獻이 3회 있음을 기록하고 끝냈다. 실록 등을 통해 손쉽게 찾아진 내용을 적었던 것이다. 혼란한 시기이나 그 후 당 멸망(907) 시까지의 교류사를 적극 찾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여타 내용들에서도 835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발해국기』의 내용을 이용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다른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한 흔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 66) 『宋史』 권203, 예문지2에는 唐대에 찬술된 史類 중에 柳芳 『唐書』 130권과 『唐武后實錄』 20권이 보이는데, 양 『당서』의 발해전을 찬술함에 참조되었을 것이다. 물론 『구당서』의 찬자는 오대의 혼란기에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급하게 편찬을 서두르다가 柳芳 등이 증보한 『國史』로도 말해지는 『唐書』를 주로 이용하고 실록 등을 참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對발해 관련사는 정치적 이해를 크게 달리 할 만한 사안도 아닌 만큼, 『당무후실록』이나 그것을 주요 자료로 이용했을 唐의 國史이기도 한 柳芳 『당서』의 발해 건국 관련 내용이 서로 모순될 만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의 정황은 이종동 저·조성을 역, 2009, 앞의 책, 146~156쪽과 169~178쪽 참조.

가 재건 가능성이 주목되며 당 조정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동주세력을 달래기 위하여 반란 가담의 죄를 용서하고 지도자를 국공으로 봉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당의 기미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미봉책을 거부하였다. 이에 군사적 토벌이 따른 것이다. 결국 말갈추장 걸사비우를 처단하여 승리를 장담했겠지만, 고려별종 대조영이 걸사비우의 남은 무리를 합하여 지휘하며 천문령에서 이해고군을 참패시켜 당군은 이해고가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대패 상황을 보고하였던 것이다.⁶⁷⁾

새로운 『당서』의 발해 열전을 편찬하기 위해 이런 정황이 적혀 있는 그 서책 자료를 당연히 宋 宋祁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자료도 다른 인식을 가진 이가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송기는 현대 연구자의 일부도 인식하듯이 발해 건국과정사가 애초에는 속말말갈인들이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점이 있음을 보았을 듯도 하다. 그리고 고려별종인 대조영은 중간에 걸사비우의 남은 무리를 취합하게 됨으로써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고려별종’의 나라를 ‘속말말갈부고려자’의 나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를 보면 4세기 말(398) 기사에 호태왕이 복속시킨 세력 중에 숙신이 있다.⁶⁸⁾ 3세기 후반 중국에서 편찬된 『삼국지』 동이전에 등장했던 挹婁에 대한 인식이 고구려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는 738년에 읍루가 입전되어 있는 『삼국지』를 당에서 필사하여 왔다.⁶⁹⁾ 이렇게 보면 발해에서도 자국이 읍루와 직접 관련을 가졌다는 인식이 생성되어 숙성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 대한 인식은 기억할 만하고 승

67) 당군의 패전 상황을 『구당서』 발해말갈전은 “王師大敗 楷固脫身而還”이라 하여 대 패배임을 사실감 있게 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당서』 발해전은 당의 체신을 배려한 듯 “楷固敗還”이라 개찬하여 패전의 실체가 당군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패전의 정도도 알 수 없게 하였다.

68) 「광개토대왕릉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8쪽 참조.

69) 『唐會要』 권36 蕃夷請經史, “開元二十六年 六月二十七日 渤海遣使求寫唐禮及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 許之.”

모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자라고 꽃피는 것인데, 읍루라는 미개 집단이 발해인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연유도 없는 것이다.

한편 당은 발해를 결코 고구려로 인정할 수 없었다. 고구려 정복은 당 왕조 최대 업적의 하나라서 고구려 재건을 인정함은 당 왕조의 위업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왕은 8세기 전반기에도 당의 ‘內臣之蕃’으로 당의 조정에 있었다.⁷⁰⁾ 고려별종인 대조영이 시조가 되었으나, 속말말갈의 연고지에 수도를 두고 고구려계와 말갈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발해를 고구려의 후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 당은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 부를 수밖에 없는 명분상의 사정과 현실이 있었던 것이다.⁷¹⁾

신라의 경우도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공인할 수 없는 유사한 사정과 현실이 있었다. 문무왕과 신문왕대를 통해 안승의 고구려국을 두게 하고 보덕국으로 바꾸었다가 드디어 이를 흡수 통합하여 명분 있고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 결국 일통삼한을 이루었다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당 양국에는 발해 말갈연원설이 일설로서 자리할 호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대무예가 당의 등주를 침략하게 되면서 나·당은 ‘발해말갈’을 물리치고자 다시 힘을 합했다.⁷²⁾ 책봉을 받고도 당에 도전한 발해의 행위는 야만적이란 인상을 주었을 것인데 발해 곧 말갈이라는 인식을 더욱 깊게 하였을 것이다. 당의 국력의 실체를 실감하였던 고구려의 후예 발해는 당에 대하여 고구려 후신임을 공인해 줄 것을 강창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에 대하여는 고구려국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8세기 당의 대발해 인식은 영성한 면이 있었다. 대조영을 일개 ‘郡王’으로 임명하였는데 돌궐 가한 默啜의 군대가 40만 명이라 한 것을 보면, 그는 그저 북적전에 빈출하는 ‘모모군왕’으로 임명된 변방의 흔한 대추장에 불과하였던

70) 『구당서』 권23 禮儀志3 開元13년 11월 壬辰

71) 노태돈, 1985, 앞의 글, 288·289쪽 참조.

72) 『삼국사기』 권8 성덕왕본기, “三十二年 秋七月 唐玄宗 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大僕員外卿金思蘭歸國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구당서』 권8 玄宗本紀 上, “開元二十年 九月 乙巳 渤海靺鞨寇登州 殺刺史韋俊 命左領軍將軍蓋福順發兵討之.”

것이다.⁷³⁾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당 조정의 재상을 지낸 두우가 지은 『통전』의 변방 전에는 190여 종족 및 국가가 邊防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발해는 드러나지 않고 그저 말갈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겨우 알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여기에는 의도성이 개재되었을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해동성국 이후라야 그 존재가 당의 식자 일반에게도 강하게 인지되었던 듯하다.

834년에 발해 상경에 도착하여 이듬해에 당으로 돌아온 유주절도사 휘하의 관리였던 장건장의 묘지명에는 발해를 흘한주 곧 읍루고지라고 말하였다.⁷⁴⁾ 읍루고지는 『신당서』 발해전이 전하는 지방제도 관련 내용에도 보인다. 이들 내용은 발해인의 인식이 반영된 장건장의 『발해국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⁵⁾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읍루고지’는 ‘우루고지’의 잘못임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⁷⁶⁾ 따라서 이 자료도 발해 자체에서 읍루를 계승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물론 숙신고지가 있고 ‘숙신고성’도 있어 숙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나 이것은 고구려 이래의 것이었고 숙신은 중국의 고전에도 널리 나오는 존재로서 읍루와 등치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묘지명에 보이는 발해가 읍루고지라는 인식은 발해인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명문을 지은 장규와 같은 9세기 당의 식자들의 것이었다고 보인다.

발해 자체의 경우와 달리 당 측은 발해를 말갈 그리고 읍루, 숙신과 연결하여 보는 말갈 국가관을 유지하였다.⁷⁷⁾ 사라진 대국 고구려에 대한 기억은 퇴색

73) 『通典』의 邊防典에는 돌궐의 默啜이나 거란 李盡忠 등과 관련된 사실이 자세히 전하는 데 비해 대조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목철은 전성시에 궁수가 40만이라고 나오나(앞의 책, 5438쪽) 양 『당서』 발해전에는 건국시 발해 정병이 수만이라고 하였다. 양 『당서』 발해전에 전하는 무왕의 동생 대문예의 말대로 고구려의 강병이 30만이라고 하여도 발해가 고구려를 재건한 것이라고 강변하기에는 국력이 크게 미흡하였다.

74) 「張建章 墓誌」,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발해사 자료집 하』, 879쪽, “達忽汗州州卽挹婁故地 彝震重禮留之 歲換而返.”

75) 和田 清, 1954, 「渤海國地理考」, 『東洋學報』 36-4, 동경: 동양학술협회, 428쪽; 古畑 徹, 1984, 앞의 글, 4쪽 및 18쪽

76) 金毓黻 편저, 발해사연구회 옮김, 2008, 『신편 발해국지장편』 중 地理考 第一, 신서원, 306쪽; 송기호, 1995, 앞의 책, 89쪽

77) 唐대에 숙신·읍루·말갈의 연계관계를 간명하게 보인 것으로는, 9세기 초에 초고

해 가고 발해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말갈부족이 많아지면서 발해는 말갈국가로 비쳐질 소지를 더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遼나라에 망하여 그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말갈계 주민의 女眞화가 나타나며⁷⁸⁾ 오대나 송의 식자들에게 발해는 더욱 말갈국가로 인식될 소지가 깊어갔다고 보인다. 이러한 중에 춘추필법을 내세우고 ‘古文’을 숭양하여 改竄을 마지않은 『신당서』의 편찬에서 당대 이래의 발해 말갈연원설은 반영될 계기를 만났던 것으로 여겨진다.

宋祁는 『唐武后實錄』이나 柳芳의 『唐書』 등을 보면서 걸사비우가 거느린 속말말갈이 동주사건의 초기 주도세력인 점을 알게 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최치원의 글을 검토하며 본 바와 같이, 발해의 원류가 속말말갈이라는 일설이 신라나 당에 유전되고 있었다. 발해 곧 말갈국이라는 인식이 통용되던 시대에 살았던 송기가 자료적 근거를 재인식하게 되고 당대 이래의 ‘속말말갈원류설’까지도 알았다면⁷⁹⁾ 『구당서』나 『발해국기』가 전한 발해 고려별종설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듯도 하다. 더구나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말갈국가라 말할 여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⁸⁰⁾ 결과적으로 그는 종족적 연원을 고쳐 적었다. 그 과정에서 사가로서 ‘술이부작’의 기본 정신에 저촉될 가능성에 유의했던 듯 『신당서』 발해전 초두 기사에는 조어한 듯한 ‘고려여종’이 돌연 등장하는 등 문장 내용이나 구조상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없지 않게 되었다.⁸¹⁾

가 완성된 당의 재상 杜佑(734~812)의 앞의 『通典』 권186 邊防 二 東夷 下 勿吉 又曰靺鞨, 5023쪽에 “詳考轉記 挹婁 勿吉 靺鞨俱肅慎之後裔”라는 기사 등을 볼 수 있다.

78) 노태돈, 1985, 앞의 글, 264쪽

79) 인지과정은 역순이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80) 말갈인이 발해 주민 구성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인데, 절반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일단 인식 주체의 느낌이나 판단, 심지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갈국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81) 『신당서』 편찬에서 보인 오류에 대하여는 동 시기에 吳縝이 찬한 『新唐書糾謬』에서 자세히 비판하였다. 모두 20門으로 나누어 오류를 규명하였는데 ‘以無爲有’, ‘似實以虛’를 필두로 하여 ‘事有可疑’, ‘字書是非’로 끝난다. 모든 사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히 그 오류가 저서로 나오고 상당 부분이 아직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

송기가 발해를 말갈 국가처럼 고쳐 쓰게 된 보다 직접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당서』가 새로 편찬된 것은, 쇠란한 오대시기에 『구당서』가 급히 편찬되어 唐의 면모를 갖춰 기술하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송대에 다시 부흥한, 당의 韓愈로부터 비롯된 송유적인 ‘고문운동’과⁸²⁾ 더불어 새롭게 『당서』를 짓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일면 중화주의를 내재하기도 한 古文운동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는 결과적으로 수를 망하게 하고 중국의 대영웅 당 태종에게 패배를 안겨준 중화의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준 무도한 夷狄일 것이다. 당은 그러한 고구려를 고종시에 멸망시켰다. 그런데 발해가 고구려를 재건한 후신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당의 이 위대한 업적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정벌의 미완성 나아가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약간의 자료적 근거를 얻은 송기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고려별종’, ‘계루고지’, ‘계루군왕’ 등을 일괄 산삭 개찬하여 발해의 고구려 계승국가의 이미지를 탈색시킨 것으로 보인다. 발해가 고구려를 재건한 후신이 아니라 말갈의 국가인 점을 말하려고 한 것이

『신당서』 편찬은 ‘道’를 중시하는 의도가 강한 편인 고문가들에 의해 변려문이 유행한 시대의 역사를 ‘고문’으로 바꾸어 기술하게 되어 더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것이다. 『四庫全書薈要』 子部 제17冊, 1997, 길림인민출판사, 263쪽~412쪽에 있는 『新唐書糾謬』를 일별한 결과 발해의 출자 관련 사항은 없었다. 異邦의 일이라 지식을 갖기 쉽지 않았음은 물론 발해 건국과정은 양 『당서』 본기에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듯도 하다. 송기가 『신당서』 열전을 찬하며 보인 문제점은 『新唐書述要』, 楊家駱 主編, 1980, 『二十五史識語』, 臺北: 鼎文書局, 343쪽 및 국내 유행본인 景仁文化社 편, 『標點校勘 新唐書』上, 8쪽에 동일 내용이 보이며, 이종동 저·조성을 역, 2009, 앞의 책, 176쪽 및 218~225쪽의 내용이 참고된다. 古文으로의 개작이 과하였고 簡雅를 지나치게 추구하며 개찬하여 오히려 글자의 뜻이 모호하게 되어 불통하게 된 경우가 심히 많고 문장을 위주로 하다가 고증에 부실한 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 82) 錢冬父 지음·이주해 옮김, 2009, 『唐宋古文運動』, 學古房, 96~123쪽. 당의 고문운동을 이어 다시 일어난 송의 신고문운동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되[道文並重] 전자를 우선하였다[道先後文]. 이때의 道는 儒家 성인의 도와 더불어 사회적 功用이라는 차원을 내포하였다고 한다. 文은 자연스럽고 평이하되 독창성을 추구하였다. 송대 신고문운동의 영수는, 宋祁와 더불어 『신당서』의 편찬자로서 紀志 表를 책임 편수한 歐陽修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 그는 발해 ‘속말말갈부고려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고구려계의 역할을 조연 이하로 낮추었다. 전대 사서와 자료들이 전한 사실을 일관성 있고 치밀하게 개찬 재구성함으로써, 본 얼굴을 알 수 없는 후대로 하여금 더욱 실상으로 여길 만도 한 역사상을 그려냈던 것이다.

송기는 그의 열전을 통해 보면, 遼의 침략에 대비하여 河北을 중시하는 구체적 방어책을 진언한 일이 있으며 「禦戎論」 7편을 진상한 바도 있다.⁸³⁾ 북적 거란(요)의 침략을 심각하게 여긴 이 같은 행적을 보면, 발해의 종족적 연원 등에 관한 다소 지나칠 만큼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연히 나온 일이 아니었던 듯하다.

송기가 살던 시점에 송의 가장 두려운 적인 요가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있었으나 발해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요의 통치하에서도 대규모 반란을 마지않는 등 여전히 주목되는 존재였다.⁸⁴⁾ 더구나 발해는 당의 최대 적국 고구려의 후예로 볼 수 있어서 당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송대의 고문가들에게는 신경이 쓰일 만한 존재였다.

V. 맺음말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오대회요』 발해전이 전하는 대조영 고려별종설은 사서의 용례를 통하여 볼 때 대조영이 본래 고구려의 일파임을 말한 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의 ‘속말말갈부고려자’는, 宋祁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속말말갈

83) 『宋史』 권284, 열전 宋庠 弟祁

84) 송기가 살았던 때보다는 앞이지만 태평흥국6년(981)에 송은 발해의 잔여세력을 對 遼 군사작전의 연대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宋史』 권491, 열전 외국7 발해국 참조. 여기에 나오는 송 태종의 조서에 보면 “(太平興國)六年 賜烏舍城浮渝府渤海琰府王 詔曰 朕纂紹丕構 奄有四海 …… 當靈旗破敵之際 是隣邦雪憤之日 所宜盡出 族帳 佐予兵鋒 俟其翦滅 沛然封賞 幽薊土宇 復歸中原 朔漠之外 悉以相與 曷乃 協力 朕不食言”이라 하였다. 또한 요 치하의 발해인 大延琳은 1029년 興遼國 건국을 선포하고 저항하기도 하였다.

중에 고구려에 귀부했던 부류를 발해의 종족적 연원으로 본 것이다.

발해 속말말갈연원설은 고려별종설과 더불어 신라와 당에 일설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唐에서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 또는 말갈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전자를 공인할 수 없는 명분 및 현실상 제약 요인이 있었다. 당은 고구려왕을 내신지번으로 조정에 두고 있었고, 고구려 정복은 수 양제나 당 태종의 親征으로도 이루지 못한 당 왕조 최대 업적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구려는 이미 사라진 실체이고 발해는 말갈족을 널리 통합해 가던 현실이 전개된 이상, 발해 곧 말갈 인식은 점차 증대될 만한 여건이기도 하였다. 해동성국 발해가 망하여 遼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 말갈계 주민의 여진화가 진행되면서 오대를 지나 송 초에 이르면서 이 인식은 비중이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중에 宋祁는 『신당서』 발해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唐武后實錄』이나 당조에서 『國史』로 편찬했던 『唐書』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가, 발해 건국 운동의 초기 東走사건에서 주장 결사비우가 이끈 과거 ‘부고려자’였던 속말말갈이 상대적으로 주력이 되었던 점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일설로 전해 오던 고구려에 귀부했던 속말말갈이 발해 전체의 연원인 것처럼 명기하게 되었던 듯하다. 그가 이같이 과감한 개찬을 단행한 것은, 일부 자료적 뒷받침은 물론 동북아의 강대국 고구려를 정복한 당의 위업을 적극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는 대조영 고려별종설을 통하여 발해가 곧 고구려 후신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당의 위업을 훼손하고 있음을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崇儒적이며 그만큼 중화주의적 성향을 띤 고문운동에 동참하여 고문 위주로 『신당서』 열전의 문장을 썼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尊唐의 의도가 강력한 것이었음은, 『신당서』 발해전이 앞의 사서들에 비해 건국과정에서 ‘고려별종’을 배제하는 등 고구려계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켜 수동적인 존재로 기술하였고, 계루를 읍루로 고치며 계루 군왕을 산삭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는 ‘述而不作’을 신념으로 여겨온 전통시대 중국의 사가로서 개찬에 따른 심적 부담을 느껴서인지 ‘고려별종’을 배제하면서 새롭게 造語한 듯한 ‘高麗餘種’을 제3세력처럼 설정하여 오히려 후대 연구자들을 곤혹케 한 면조차 있다.

발해는 주지하다시피 고구려계와 속말말갈계가 합세하여 건국하였다. 그런데 이들 두 계통 주민들은 고구려 이래 그리고 영주에서의 수십 년간의居留 생활을 통하여 상호 간에 어느 정도 동화가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제3자들이 이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두 이종족 간 단순 주민 복합 구성에서 오는 것 이상의 난해함을 줄 가능성을 내재하였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속적이었던 신라나 당은 발해를 고구려의 後身으로 정식 인정할 수 없는 명분과 현실이 있었으며, 발해는 점점 말갈 제 부를 통합해 가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점들로 인하여 발해에 대한 인식은 판단 주체의 입장이나 국제관계의 상황에 의하여 어느 측면이 더욱 浮彫되기도 하여, 복합적이면서도 이중적이거나 유동적인 혼란한 양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기왕의 연구들은 관련 자료의 편찬 여건이나 사서 편찬자의 의식이나 성향, 그리고 발해에 대한 주변국 식자들의 인식의 변화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당서』 기록을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비교 분석하여 일방의 신빙성만을 강변하거나 현대적 이해체계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양설을 결과적으로 절충하여 해석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에서 먼 결론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생뚱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이 원론적인 작업이, 철저한 고증을 전제로 한 사료 비판이 갖는 의의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고 문제점이 적지 않은 기존 관련 연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⁸⁵⁾

85) 본고는, 본래 최근 발표된 김기홍, 2011, 「발해 건국집단의 역사적 정체성」, 『歷史學報』 210, 역사학회, 29~57쪽의 일부분으로 작성되었다가, 내용상 비중이 매우 크고 분량도 과도하여 별도 논문으로 재작업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상기 논문을 참고하면 본고의 이해에 더욱 유용한 면이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박시형, 1979, 『발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박시형, 1989, 『발해사』, 이론과 실천
-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 宋基豪, 1999, 『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 임상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 韓圭哲,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 金毓黻 편저·발해사연구회 옮김, 2008, 『신편 발해국지장편』, 신서원
- 楊家駱 主編, 1980 『二十五史識語』, 臺北: 鼎文書局
- 吳縝, 『新唐書糾謬』; 1997, 『四庫全書薈要』 子部 제17冊, 吉林: 길림인민출판사
- 王承禮 著·宋基豪 譯,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출판부
- 劉節 著·辛太甲 譯, 2000, 『중국사학사 강의』, 신서원
- 李宗侗 著·조성을 譯, 2009, 『중국사학사』, 혜안
- 錢冬父 著·이주해 譯, 2009, 『唐宋古文運動』, 學古房
- 김기홍, 2011, 「발해 건국집단의 역사적 정체성」, 『歷史學報』 210, 역사학회
- 盧泰敦, 1981, 「고구려 유민사 연구-요동, 당내지 및 돌궐방면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盧泰敦, 1985, 「渤海國의 주민구성과 발해인의 族源」,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 盧泰敦, 2003,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고려별종’과 ‘발해족’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2, 한국사연구회
- 박시형, 1962,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역사과학』 1962-1, 평양: 과학원출판사
- 송기호,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8, 고구려발해학회
- 李龍範, 1973, 「발해왕국의 형성과 高句麗遺族(하)」, 『동국대학교논문집』 11, 동국대학교
- 정병준, 2007, 「영주의 대조영집단과 발해국의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6, 동북아역사재단
- 古畑 徹, 1984,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中國側史料の基礎的檢討」, 『朝鮮學報』 113, 天理: 朝鮮學會
- 和田 清, 1954, 「渤海國地理考」, 『東洋學報』 36-4, 동경: 동양학술협회

[ABSTRACT]

The Tribal Origin of the Balhae People

Kim, Kiheung

While the “Balhae/Malgal” chapter of the Chinese historical text 『Gu-Dang’seo(History of Dang, Former version)』, published in the mid-10th century, dictates that Dae Jo-yeong, the founder of Balhae, was from a Goguryeo descent, the “Balhae” chapter of the Chinese text 『Shin-Dang’seo(History of Dang, Later version)』, which was published a hundred years later, dictates that the Balhae people were composed of the Sog’mal Mal’gal tribes which succumbed to the protection of Goguryeo. The latter book did not specify about Dae Jo-yeong’s descent.

Scholars have been agreeing with either references and have tried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mix of the two rather conflicting references. Yet the scholars did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both references might be referring to different situations and are indeed true at the same time, and the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both historical texts were created by different people living in different ages and with different agendas.

By the examination attempted in this study, it seems that both historical texts are delivering their own truths. Dae Jo-yeong was originally from Goguryeo, so in 『Gu-Dang’seo』 he was described as a man from a Goguryeo descent. He gathered together not only the Goguryeo people under his command but also the pro-Goguryeo Sog’mal Mal’gal tribes who were living in adjacent regions, and then

founded Balhae. Then, during the exodus from Dang, which enabled the Balhae foundation in the first place, the Sog'mal Mal'gal tribes played an instrumental role. So the author of 『Shin-Dang'seo』, who believed that Balhae was a dynasty with the Mal'gal people, recorded that Balhae was of the Sog'mal Mal'gal tribes. In the end, we can say that Balhae had a dual descent, from both Goguryeo and Sog'mal Mal'gal.

Recently some Korean scholars have been suggesting the possibility that Dae Jo-yeong might have been a Sog'mal Mal'gal entity in his blood, yet culturally transformed by the Goguryeo influence. This is simply not right. The authors of both texts that are mentioned above were not interested in elaborating upon bloodlines or the Balhae people's level of transformation. They were only interested in the Balhae people's origins. Academic approaches to such issue should be reviewed in the future.

keywords

Balhae(渤海), Goguryeo(高句麗), Sog'mal Mal'gal(粟末靺鞨), Dae Jo-yeong(大祚榮), Gu-Dang'seo(舊唐書), Shin-Dang'seo(新唐書)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3호(2011. 9)

초판 1쇄 인쇄 2011년 9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9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